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2025. 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JEONBUK STATE COUNCIL

제 출 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리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01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 민 석

연 구 진

연구책임

이 국 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연구책임

참여연구진

김 공 수,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목 차

제1절 배경 및 목적 ····· 3
1. 배경 및 필요성 ····· 3
2. 목적 ····· 4

제2절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5
1. 범위 ····· 5
2. 주요 연구내용 ····· 6

제3절 연구수행방법 ····· 7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청년과 청년인구 이동 ····· 11
1. 청년의 개념 ····· 11
2. 인구의 사회적 이동 ····· 14
3. 청년인구의 사회적 이동 ····· 19

제2절 인구와 청년인구의 변화 ····· 44
1. 인구구조의 변화 ····· 44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 ····· 48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이동 ····· 84
1. 청년인구의 유출현황 ····· 84
2. 청년인구의 유출지역 ····· 87
3. 청년인구의 전출사유 분석 ····· 102

제4절 청년인구 이동원인 : 일자리 분석 ····· 133
1. 일자리 미스매치 ····· 133
2. 지역별 청년일자리 분석 ····· 147
3. 일자리 미스매치(양적 관점) 지역간 차이분석 ····· 175
4. 일자리 미스매치(질적 관점) 지역간 차이분석 ····· 237

제3장 청년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청년정책 현황 ····· 287
1. 중앙정부 청년정책 ····· 287
2.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322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 336
4. 전북특별자치도 RISE사업 ····· 351

제2절 청년정책 국외사례 ····· 356
1. 유럽의 청년정책 ····· 356
2. 일본의 청년정책 ····· 369

제3절 청년정책 국내사례 ····· 373
1. 일자리 분야 정책사례 ····· 373
2. 주거분야 정책사례 ····· 381
3. 청년공간분야 정책사례 ····· 386

제4장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안

제1절 청년인구 유출 대응방향 ····· 401

제2절 단기적 대응방안 ····· 441
1. 제도적 개선방안 ····· 442
2. 재정적 지원방안 ····· 463
3. 행정적 지원방안 ····· 469

제3절 중장기 대응방향 ····· 477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83

제2절 한계점 ····· 486

제3절 정책적 제언 ····· 488

참고문헌 ····· 491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3절 연구수행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18세~39세 기준)의 인구 비중은 2014년 30.87%에서 2024년 26.29%로 약 4.58%p 감소하고 있음

○ 최근 10년(2014년 대비 2024년)간 약 236만 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지역 인구로 빗대어 생각해보면, 매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시 또는 군단위 지역이 하나씩 소멸하는 정도로 매우 빠르게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저출생의 영향과 같은 자연적인 인구감소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지역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청년층 인구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개인의 인적자본 형성이나 일자리 미스매치에 상응하는 직업 탐색 과정, 삶의 만족도 증대 등으로 인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청년인구 유출현상은 지방소멸의 가속화 및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결국 고령층 인구 부양비 증가, 지역산업 붕괴 등 지역의 생존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는 1,738,690명으로 이중 청년인구의 비율(18세~39세 기준)은 22.17%로 전국 평균 26.29%보다 낮은 수준이고 17개 광역지자체중 14위로 2014년 청년인구 비율 27.24%에 비해 급속하게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014년 대비 약 5.07%p 감소함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인구 유출 현상에 실효적으로 대응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내 인구는 지난 2018년 2월 185만명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인구의 타지자체로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유출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한 타지역으로의 청년층 인구유출이 심화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역내 청년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려는 노력을 추진중임

○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인구 지원정책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인구의 타지자체 유출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역내 청년층 인구유출과 일자리 미스매치와의 관련성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 전북특별자치도내 청년층 인구의 타지자체로의 사회적 이동의 주요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이며, 지역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 인구유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역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내 대규모 기업투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내 미래 일자리 수요와 공급간의 GAP 최소화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내 청년층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른 실효성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제2절 범위 및 방법

1.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기초지자체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이후

▮ 내용적 범위

○ 청년층 인구의 사회적 이동 현황

○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분석

○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청년정책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대응방안

2. 주요 연구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유출 현황

▌ 청년정책 분석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현황

○ 청년관련 법령 및 조례

▌ 선행연구 분석

○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관련 선행연구

○ 청년일자리 및 일자리미스매치 관련 선행연구

○ 청년정책 지원방안 관련 선행연구

▌ 국내외 사례조사

○ 우수 지자체별 청년정책

○ 청년유입 및 청년유출 억제를 위한 지원사업

▌ 전문가 자문

○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청년인구 유출 원인 및 유출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청년인구유출 대응방안의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대응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일자리 지원방안의 도출

제3절 연구수행방법

▌ 본 연구는 총 5단계로 진행할 예정

○ 제 1단계 : 수행준비 및 자료 수집

○ 제 2단계 : 현황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현황 분석
  - 경제·문화 환경
  - 인구 변화
- 정책현황 분석
  - 중앙정부 청년정책
  - 지자체 청년층 지원 정책

○ 제 3단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유출 현황 및 원인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유출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사회적 이동 지자체 및 이동원인 분석
- 각 광역지자체별 일자리 여건 GAP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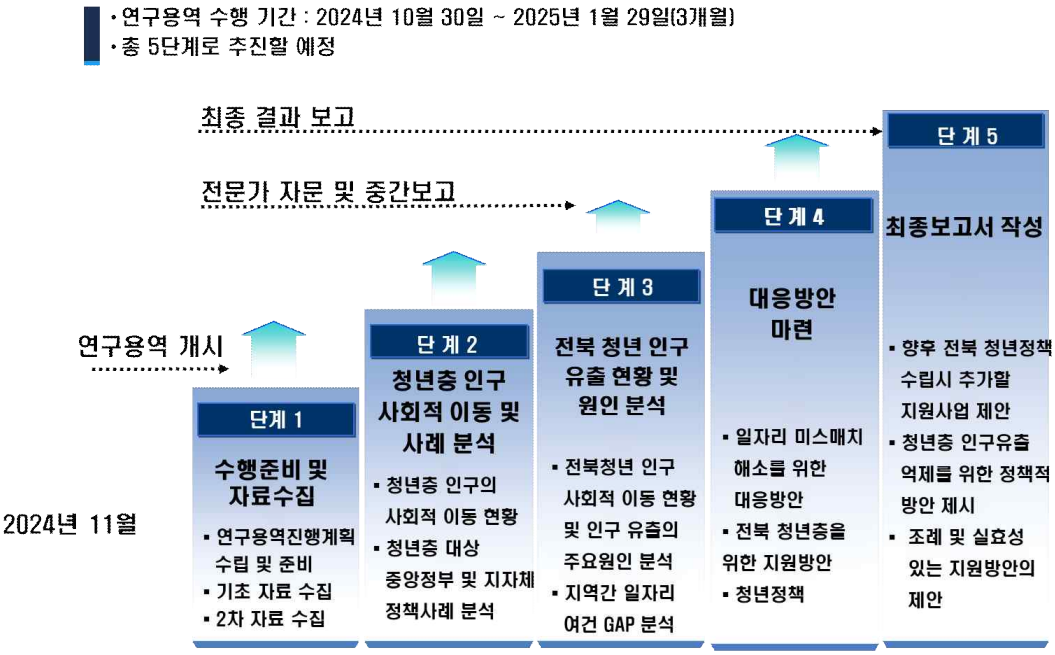
○ 제 4단계 : 청년정책 관련 타지역 우수사례

-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 및 유인을 위한 지원사례
- 청년정책 및 청년층 인구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제 5단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 대응방안 마련

- 청년층 대상 지원방안
-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 청년인구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그림 1-1> 연구용역 추진단계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청년과 청년인구 이동

제2절 인구와 청년인구의 변화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이동

제4절 청년인구 이동 원인 : 일자리 분석

제2장 현황 및 여건분석

제1절 청년과 청년인구 이동

1. 청년의 개념

▮ 청년은 시대적, 언어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까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의 주체로 인식되어 왔음(박순철과 도수관, 2023)

○ 청년은 점차 주변인으로 또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등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송동욱과 이기형, 2017).

▮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적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기준을 15세 이상 ~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연령대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청년 연령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법률상 기준을 종합하여 청년을 19세~39세까지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표 2-1> 청년 연령의 범위

구분	청년의 범위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이상 29세 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고용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국제기구(ILO, OECD, EU)	15세 이상 24세 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18세이상 39세 이하

<표 2-2> 광역지자체별 청년 연령의 범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년의 범위	19세~39세	18세~39세	18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18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구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특별 자치도	전북 특별 자치도	제주 특별 자치도	
청년의 범위	19세~39세	19세~39세	18세~45세	19세~39세	19세~39세	18세~45세	18세~39세	19세~39세	

▮ 오늘날 청년들의 특징(박순철과 도수관, 2023)

○ 기성사회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에 저항하고 미래지향적 성격과 가치관, 취향, 태도를 지니고는 있으나 경제활동에서의 소외와 시민사회에서의 배제 및 단절로 인한 전반적 삶의 질 저하 그리고 결혼 등과 같은 삶의 주요 과정의 유예, 사회참여 활동의 위축,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높은 심리적 불안감 등을 청년들이 지니고 있음(이윤형 외, 2020).

○ 경쟁, 노력, 성장, 효율 대신에 개성, 다양성, 창의성, 연대와 관계를 추구하게 됨

○ 삶에 대한 가치관도 경제적 성취보다는 삶의 질을, 소유보다는 경험을,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경쟁보다는 연대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음(조성철 외, 2019)

○ 오늘날의 청년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미래의 보상을 쫓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낮은 소속감을 지님과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경험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세대의 시기별 분류에서 보면 오늘날의 청년은 밀레니얼 (Y)세대 또는 MZ세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표 2-3> 우리나라 세대의 시기 및 특징 구분

구분	출생시기	주요특징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을 내면화
386 세대	1960년대	민주화 시기를 경험하며 정치적 이념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를 내면화
X 세대	1970~80년대 초반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의 시초, 자기표현가치 경험, 그러나 여전히 조직문화에는 순응하는 낀 세대
밀레니얼 세대 (Y세대)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저성장 시기 청년기를 보내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만족을 지향하고 조직 밖에서 자아실현 추구
MZ세대	1980년~1994년까지의 밀레니얼(M) 세대와 1995년~2000년 출생자(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

자료원 :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32의 <표 2-2>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함

2. 인구의 사회적 이동

▮ **일반적인 인구이동 : 사람들간 지역간의 움직임(송용찬과 김민곤, 2020)**

○ 공간적 이동 : 직장과 주거공간 간의 반복적인 이동, 같은 지역 내 이동, 타지역으로의 지역 간 이동, 국외로의 이동으로 구분(임태경, 2003a)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넘어 이주하는 것(이민관·이주형, 2010)

○ 인구이동을 통계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지역으로의 유입과 유출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상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를 전출로 정의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를 전입으로 정의하고, 동시에 이동의 총합과 차이를 기준으로 총이동과 순이동으로 분류하기도 함

▮ **인구이동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최조순 외, 2023)**

○ 인구이동은 행정구역상 이동 범위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

- ① 동일 시·도 내 동일 시·군·구 간 이동,
- ②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 간 이동
- ③ 타 시·도간 순이동
- ④ 전체 순이동

<그림 2-1> 인구학 관점에서 지역인구이동의 결과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30의 <그림 2-7>

▌**이러한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Todaro Model, Tiebout Model, 중력모형, 압출-흡입모형, 선형모형 등이 있음**

○ Harris-Todaro Model

- 노동시장과 편익에 의한 인구이동을 대표하는 모형
- 근로환경, 임금수준, 장래기대 임금수준 등 상이한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인으로 하여금 지역간 이동을 추동한다고 보고 있음

○ Todaro 모형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고전적 인구이동 이론에서는 지역 간 서로 다른 노동시장에 주목
- 인구이동이 결국, 경제적 편익(예를 들어, 임금)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
- 이후 논의는 개인을 넘어 가족의 범위로 확장하였는데, 상이한 노동시장 간 나타나는 일자리, 임금, 기대임금 등 격차에 기인하여 더 나은 경제적 기회와 소득을 획득하고자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
- 기대소득 개념을 활용하여, 장래 예측되는 두 지역 간 기대소득의 차이가 이동

○ Tiebout Model

-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이 발생한다고 주장
- 개인은 최소비용으로 최대 한계에 이르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임
-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에 의해서 인구 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최소비용으로 가장 많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결정한다고 설명

○ 분단노동시장 이론

- 인구 이동은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
- 성별·학력·연령·인종 등과 같은 개인과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동에 대한 편익과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선별적 이동(selective migration)이 나타난다고 설명

○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perspectives theory)

-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형태, 즉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로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
- 투자적 개념하에 미래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 인구압출-흡입모형(Push and Pull Model)

- 전출지와 전입지 간의 사회·경제등 편익의 수준과 개인의 특성이 결합하여 인구이동이 결정되는 모형
- 인구이동을 전출지와 목적지 간의 사회·경제·문화적 성격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설명
- 전출지역과 전입지역의 배출요인과 흡입요인 간의 우열 수준과 개인의 욕구가 결합하여 개인의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주장
- 현재 거주 지역의 인구 배출요인(pushing factor)과 다른 지역의 인구 흡인요인(pulling factor)간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인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은 고정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인구학에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원인을 압출 및 흡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압출요인(pushing factors)은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을 의미하고, 역으로 흡인요인(pulling factors)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을 의미함**

○ 인구이동의 네 가지 주요요인으로 유출지와 관련한 부정적 요인, 유입지와 관련한 매력적 요인, 유출지와 유입지간 지리적 거리 및 제도적 차이 등의 장애 요인, 개인의 의사결정요인 등이 있음

○ 압출흡인모형은 단지 인구이동이 이주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장애 요인이 적을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모델로, 각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림 2-2>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압출 및 흡입요인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25의 <그림 2-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이동통계는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보고통계로서, 전입신고상의 전출 또는 전입사유는 1가지로 구분됨**

○ 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의 7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입 시군구와 전출 시군구를 각각 작성하게 하고 있어, 전출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전출하는 사유, 즉 유출원인을 개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표 2-4> 전입신고상의 전입(전출)사유

전입(전출)사유	상세내용
직업	-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 직장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가족	-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
교육	-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주거환경	-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문화·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등
자연환경	-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등
기타	-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청년인구의 사회적 이동

▮ 최근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방도시 청년세대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비수도권 도시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그간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경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층이라 할 수 있음

가. 박진경과 김도형(2020)

▮ 2019년을 기준으로 청년인구를 20대 초반(20~24세), 20대 후반(25~29세), 30대 초반(30~34세), 30대 후반(35~39세)으로 구분하여 유출원인을 분석함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20~30대 젊은 인구는 주택 때문에 유출되는 비율이 36.7%로 가장 높음

○ 대부분 20대의 경우에는 직업 때문에 유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30대의 경우에는 주택 때문에 유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20대 초반 : 교육 때문에 유출되는 경향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세대주만 보면 19.7%로 지역에서 유출되고 있음
  - 20대 초반의 유출원인 : 1순위(직업, 43.4%), 2순위(주택, 20.2%), 3순위(교육, 19.7%), 그 다음순위는 가족, 주거환경, 기타 등이 비슷한 수준
  - 20대 후반 : 1순위(직업, 44.8%), 2순위(주택, 29.7%), 3순위(가족, 11.7%)
  - 30대 초반 : 1순위(주택, 41.4%), 2순위(직업, 30.0%), 3순위(가족, 16.2%)
  - 30대 후반 : 1순위(주택, 50.0%), 2순위(직업, 23.6%), 3순위(가족, 12.3%)

▮ 지역별 청년인구(20대와 30대) 유출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유출원인에 차이가 있음

○ 비수도권일수록, 직업으로 인한 유출이 더 놓게 나타나며 도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일수록 직업 때문에 더 많은 유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교육 때문에 유출되는 비율이 타 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수도권 : 1순위(주택, 39.7%), 2순위(직업, 30.8%), 3순위(교육, 13.6%)
- 비수도권 : 1순위(직업, 39.4%), 2순위(주택, 33.5%), 3순위(교육, 10.7%)

- 도시지역(시 및 구 지역)
  - 시 지역 : 1순위(주택, 36.5%), 2순위(직업, 35.6%), 3순위(가족, 11.9%)
  - 구 지역 : 1순위(주택, 38.2%), 2순위(직업, 32.6%), 3순위(가족, 12.9%)
- 군 지역 : 1순위(직업, 46.4%), 2순위(주택, 27.9%), 3순위(가족, 9.5%)

<표 2-5> 시도별 청년인구 유출원인(세대주만, 2019년 기준)(단위 :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 환경	자연 환경	기타	1순위	2순위
전국	35.0	12.2	**36.7**	5.2	5.2	0.5	5.3	주택	직업
서울	29.0	13.8	**40.8**	4.0	6.4	0.5	5.6	주택	직업
부산	**37.9**	12.5	33.5	5.5	5.6	0.4	4.5	직업	주택
대구	**39.9**	11.6	32.2	5.8	4.6	0.5	5.3	직업	주택
인천	31.6	13.0	**40.5**	4.0	5.0	0.4	5.6	주택	직업
광주	35.0	11.3	**35.8**	5.7	4.8	0.6	6.7	주택	직업
대전	**36.1**	10.9	**36.1**	5.6	5.5	0.5	5.3	직업 = 주택	
울산	**36.4**	12.5	34.9	6.7	4.2	0.5	4.9	직업	주택
세종	32.7	9.4	**42.1**	5.5	4.4	0.3	5.5	주택	직업
경기	32.1	13.6	**38.7**	4.3	5.2	0.4	5.6	주택	직업
강원	**43.6**	9.3	32.8	6.5	4.0	0.4	3.4	직업	주택
충북	**40.5**	10.9	33.1	5.6	4.4	0.4	5.1	직업	주택
충남	**41.0**	9.8	34.2	5.6	4.5	0.4	4.5	직업	주택
전북	**41.3**	9.9	30.8	6.8	4.3	0.5	6.4	직업	주택
전남	**42.0**	9.4	31.5	7.1	3.8	0.6	5.6	직업	주택
경북	**42.8**	9.3	30.2	7.0	4.6	0.5	5.6	직업	주택
경남	**39.4**	10.4	33.8	7.6	4.2	0.4	4.2	직업	주택
제주	34.9	10.4	**37.2**	6.1	4.7	0.7	6.0	주택	직업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자체별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함**

○ 인구감소대응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전략

- 지역특성과 청년 선호도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전략마련
  - 정책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지역특성과 도시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정착단계별 전략수립
- 청년일자리·주거·교통 복합사업 우선추진
- 지역뉴딜일자리 및 온라인기반 창업 활성화
  - 지역뉴딜 청년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 온라인 기반 창업 활성화
- MaaS, On-demand 교통서비스 제공
- 청년혁신복합공간 조성
- 비빌언덕 조성 및 기존 주민과의 갈등관리

▌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방안 4가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방안 3가지를 제시함**

○ 중앙정부의 제도개선방안

- (1) (가칭)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2) 리빙랩 기반 청년이주 통합 플랫폼 구축
  - 청년일자리 지원모듈
  - 청년 정주여건 지원모듈
  -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모듈
  - 청년이주 거버넌스 체계
  - 플랫폼 구성방안
- (3) 도시-지역 간 교류체계 구축
- (4) 지역주도형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전환·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방안

- (1)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제정

<표 2-6> (가칭)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의 구성(안)

장	상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제11조(연구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제8조(주민의견 수집 및 청취)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장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	제12조(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지방행정 참여) 제18조(청년문화 여건의 조성) 제20조(청년복지 및 여가시설의 설치) 제22조(출산장려) 제24조(청년의 국제교류 확대) 제13조(청년 고용 촉진) 제15조(청년 주거지원)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9조(청년단체의 지원) 제2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23조(청년의 도농간 교류 확대) 제25조(청년공동체의 결성 및 운영 지원)
제 4장 재원의 확보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재원의 안정적 조달)
재 5장 보칙	제28조(시범사업) 제30조(행정협의체의 설치 운영) 제29조(포상)
부칙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367의 표 7-8

- (2) 협력·연대·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

- (3)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기반 시책 발굴·추진

나. 박순철과 도수관(2023)

▮ **지역청년유출을 청년들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본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역의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호나 특징을 고려하여 직장(직업),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울산지역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함**

▮ **첫째, 지역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요 요인으로 직장 또는 직업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함**

○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자리나 직업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서의 고용 기회가 더 많다면 중장년층보다 거주이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서울·경기권으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어 온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일자리나 직업을 찾기 위함일 수도 있음
- 높은 임금수준은 청년들의 타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

○ 아울러 직장이나 직업 관련 요인 중에는 임금이나 복리후생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직업안정성, 전문직, 직장 내 업무 자율성,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측면도 함께 고려

-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층의 직업관과 가치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직업안정성이 높은 공공부문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 기업이나 자유로운 분위기 또는 수평적 기업문화를 가진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가 점차 늘고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직장생활보다는 좀 더 거주지역이 자유로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들의 직장이나 직업 관련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직의도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청년들의 현 직장에서의 이직의도에는 급여수준, 기업의 인지도, 근무환경, 복리

후생제도, 업무의 자율성, 일자리만족도, 이직 시 기대 연봉과 이직 성공 가능성, 이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구직활동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될 것

- 청년들이 이직의도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하고 적합한 타 지역으로의 이주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지역 청년유출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면에,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직자(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 단계에서 인지한 취업정보 수준이나 구직활동 기간 등이 그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거주지역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해 타 지역으로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청년 구직자들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취·창업한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취업 시 기대 연봉, 대기업이나 직업안정성이 높은 취업처 희망, 선호하는 취업 분야, 직업에 대한 가치관(워라밸 추구나 직장에서의 성취감 등 다양한 요인들) 등이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지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둘째, 정주여건이 지역의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의 정주환경 또는 지역이 지니고 있는 어메니티 수준이 높은 곳으로 청년들이 이동해 가는 경향이 있음

- 청년들은 지역의 문화나 여가, 주거, 교통 등과 같은 정주여건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곳에 거주하고 싶은 경향이 두드러짐
- 저렴한 주거시설, 편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 보장, 지역공동체와의 정서적 공감 같은 정주여건은 청년의 주거 장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셋째, 교육환경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에 영향을 주게 됨

○ 교육환경은 고등교육 기관인 지역 내 대학(종합대학, 전문대학)의 존재 여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의 기회가 보장되는 다양한 전공(학과)의 개설 유무와 초·중·고등학교가 시민들이나 청년들을 만족시킬만큼 양적이나 질적으로 충분한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음

- 교육환경을 정주여건의 하나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지역 청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타 지역으로의 유출과 취·창업을 위한 2차 유출 그리고 결혼 이후 보육이나 자녀 교육을 염두에 둔 거주 장소 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별도의 요인으로 분류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가 있으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거주지 선택이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 권순성과 김소연(2023)

▮ 제주지역의 청년인구 순유출 원인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함

○ 제주지역 청년층 이동은 2012년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2017년까지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2018년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2022년에는 순유출 전환

- 2018년 이후 청년층 전출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입은 상당폭 감소한 데 기인
- 청년 인구수도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비중도 하락세가 가속화

○ 제주지역 청년층 유출 상황은 다른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지만, 2018년 이후 순유입률 추세가 타지역은 완만하게 반등하는 반면 제주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년이동이 전입 감소 혹은 전출 증가 중 하나의 현상만 나타난 반면 제주는 두 가지 측면이 결합되며 순유입 감소 가속화

- (연령대별) 2018년 이후 세부 연령대별로 유출입 양상이 차별화되며, 19~28세는 전출 증가, 29~39세는 전입 감소가 두드러짐
- (성별) 최근 5년간 남성과 여성 모두 전입 감소·전출 증가로 순유입이 급감한 가운데 전입 감소는 남성, 전출 증가는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
  - 특히 여성 전출이 큰 폭 증가한 것은 제주 여성의 학력 등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구직 시 눈높이가 높아진 반면, 임금 등 근로 여건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진함에 따라 타 지역 취업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지역별)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전입 감소·전출 증가로 인해 순유입이 감소한 가운데 제주시는 주로 전출 증가, 서귀포시는 전입 감소의 영향이 컸으며 결과적인 순유입 감소폭은 제주시가 더 크게 나타남
  - 타 시·도와의 전출입을 살펴보면 과거 급증기(13~17년)에 비해 최근 둔화기

(18~22년)에 모든 지역에서의 순유입이 축소된 가운데, 특히 수도권 감소폭이 컸음

- (사유별) 순유입 급증기(13~17년)에 비해 최근 둔화기(18~22년)에 직업·가족·교육 목적 순유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연환경 목적의 순유입은 오히려 증가함
  - 모든 연령대에서 직업 목적 순유입이 크게 감소(전입감소·전출증가)한 가운데 19~28세는 교육(전출 증가), 29~39세는 가족 목적(전입감소) 감소가 컸음
- (산업별)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 유출입 비중이 높았으며, 최근 5년간의 순유입 감소도 동 산업과 보건업, 건설업 등에서 크게 나타남
- (세대구성별) 전입과 전출 모두 1인 가구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전입 90.4, 전출 91.0%)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1인 가구 전입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인 가구 전출은 19~28세 청년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2인 이상 가구의 순유입 둔화는 29~39세 청년 중심으로 전입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

▮ 「2022년 제주도민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통해 제주도 청년인구 순유입 둔화요인을 분석함

○ (실태조사 결과) 설문 결과 제주 청년층의 주요 애로사항은 ①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근로환경 ② 높은 생활물가와 주거비용 ③ 문화·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조사됨

- 제주지역에서 계속 거주해 온 청년은 취업 및 고용 관련, 타지 전입 청년은 주거비, 생활물가 등 경제적 부담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음

○ (결정요인 실증분석) 제주지역 청년인구 유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타지역의 고용률 및 임금 수준이 제주보다 높을수록 유출이 증가하고, 주거비 및 물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유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타지역 고용률 및 임금이 제주보다 10% 상승시 청년유출이 각각 5.8%, 8.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거비 및 소비자물가 등 정주비용 부담은 제주지역 상승률이 낮을수록 인구유출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청년 유출입 요인을 ① 양적, 질적 측면의 근로여건 ② 자영업 업황 ③ 주거비용 및 생활 물가 ④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여건변화 점검

▮ 최근 제주지역 청년의 전출입 양상이 주요 연령대·성별·지역·이동 사유 등에 차

이를 보임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 시 유출 완화, 유입 촉진 두 가지 측면에서 세부 특성별로 그룹화하여 접근할 필요

○ (청년 유출 완화) 최근 19~28세·여성·제주시·직업 및 교육 목적·1인 가구를 중심으로 유출되고 있으므로 대학 진학 또는 대졸 후 첫 취직 시기에 있는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되, 특히 고학력 미혼 여성에 관심

- 도에서 진행 중인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대학과 기업 간 산학 연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도내 취업을 유도
- 또한 계속 거주 청년들의 문화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 문화·공연 시설 규모와 질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 선호도를 고려한 양질의 뮤지컬, 콘서트 등의 유치에도 관심

○ (타지 청년 유입 촉진) 최근 청년유입 감소는 29~39세·직업 및 가족 목적·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결혼 및 양육기에 있는 청년의 제주 전입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

- 타지 전입 청년의 경우 높은 생활물가 및 주거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추진 중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을 정착 비용이 큰 전입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고려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환경 개선 추진
- 또한 전입 청년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높은 만큼, 향후 15분 도시 사업 추진 시 전입 청년의 거주 비중이 높은 구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

○ (통합적 정책 추진 및 관리) 이와 같이 청년 유출에는 정주비용, 문화·교육·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통합적·유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의 관리와 평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필요

라. 김민석 · 강민규(2023)

▌**201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청년세대 유출의 개인적 영향요인을 살피는 한편, 시군구 단위의 도시특성 변수 구축을 통해 지역적 영향요인을 동시에 분석**

○ 개인 수준에서는 4년제 대학, 특목고, 대학성적 등의 변수가 수도권 유출에 있어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 부모 학력은 수도권 유출에 양(+)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고학력의 부모일수록 자녀교육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대학 전공의 경우 교육계열은 유출에 음(−)의 영향을, 예체능의 경우 유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고교와 대학이 동일 시·도일 경우 수도권 유출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청년들이 선호하는 임금이 높고, 정규직 비율이 높고, 규모가 큰 양질의 직장이 대부분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과 높은 보수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 지역수준 변수 중 사업체수는 수도권 유출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이는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자 고용여건을 의미하는 사업체 수가 청년유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 1인당 공원면적의 경우 역시 수도권 유출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고용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주여건 역시 청년유출 정책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임을 확인

▌**영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 위치할 수 있는 정책적 사시점을 제시**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 지역에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토, 산업 등 각부문별 정책이 필요함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제공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세제혜택 등 보조금 지원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
- 그간의 정부 정책이 민간 기업들의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

증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청년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고교와 대학이 동일 시·도일 경우 수도권으로의 유출 확률이 낮아지고 지역에 잔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타 지역 대학이 아닌 원래 살던 지역의 대학에 진학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단기적 정책으로는 지역가산점 제도 등을 통해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 정책으로는 지방대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거나, 대학이 중심이 되어 기업, 연구기관, 시민단체 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음

○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함

- 지역의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을수록 해당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녹지공간과 같은 도시계획적 요소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중요하다는 점임

바. 정민수 외(2023)

▮ 최근 20여년간의 인구트렌드를 분석, 양적으로는 저출산, 질적으로는 고령화, 지역구조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특징을 분석함

○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며, 출산감소로 인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모습을 띄고 있음

○ 첨단제조업, 정보통신, 연구개발, 문화·의료·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지식파급(knowledge spillover) 효과 등으로 기업과 산업의 집적으로 얻는 이익이 커졌고, 활발한 도심 재개발 등으로 대도시 기능은 한층 고도화된 데 기인

▮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팽창, 다른 대도시권은 쇠퇴하는 현상을 보임

○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 강원권에 비해 동남, 호남, 대경권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지

는 상황

○ 수도권으로의 일방적인 청년 유출로 비수도권은 노동공급 부족 및 미스매치, 인적자본 둔화, 출산 감소 등으로 산업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지난 20년간 청년 유출에 따른 호남권의 2021년 출산손실은 출생아수의 49.7%나 되었고 대경, 동남권은 31.6%, 21.9% 수준

○ 청년층 노동공급 감소는 미스매치 확대로 지역 고용을 악화시켰고 기업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유출이 증가하면서 인적자본이 둔화됨에 따라 중장기 성장추세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함

- 이러한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오랜기간 추진해왔고, 낙후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에 기여

-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청년층의 이동 증가는 기대소득 등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

-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규모차이가 큰 지역들이 서울과 맞먹는 소득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기는 어려움

-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하여 전체 권역의 산업경쟁력과 집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함

▮ 주요국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서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청년고용 개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청년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

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여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인구 총량이 축소되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

○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수도권의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주장함

- 최근 거점도시들은 주변으로부터 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청년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주변지역 청년인구 유입 등 위상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사. 임태경(2023b)

▌**17개 특·광역시도를 분석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년간의 시계열데이터를 토대로 패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역으로 청년층이 순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비수도권 지역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생일 확률이 높은 20대의 청년층은 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이미 취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의 청년층일 경우에는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는 환경보다는 1인당 급여액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 직장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을 확률이 높은 30대 청년층에게는 지역의 문화환경과 보육환경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취업전이나 취업단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20대 청년층에게는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수준보다 일자리기회가 풍부한 환경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 비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급여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급여수준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층이 정착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일자리환경과 문화인프라조성이 적절히 융합될 수 있게 재정지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아. 민보경(2024)

▮ **청년들의 현재 지역에서의 거주의향과 지역에서의 정주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한 정주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청년들의 지역거주 의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위해 2023년 국회미래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조사 중 20-39세 청년들의 응답을 추출하여 삶의 만족도와 지역거주의향을 분석함**

○ 5년후 현재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동의수준은 생활수준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 지역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남

- 생활수준 만족도, 동네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5년 후 계속 거주의향이 높게 나타남
- 지역생활에서의 운동(산책, 조깅) 적합성, 지역생활에 있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동네 안전, 친밀감이 높을수록 지역거주 의향이 높은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연령별 차이 발견

○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로 구분한 지역유형에 따라 청년들의 거주의향, 삶의 만족도, 지역생활의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

- 5년 후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은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계속거주의향이 높은 반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계속거주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음
- 생활수준 만족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년이 비도시지역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동네환경 만족도는 비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을 확인
-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운동적합성, 장보기 용이성, 공공시설 접근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비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친밀감, 도움 등 이웃과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비도시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을 보여줌

▮ **지역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지역에서의 공공시설, 동네 안전, 친밀감 등은 현재 거주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계속 거주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일자리 등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지역에서 양질의 생활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비도시지역에서의 운동적합성, 장보기, 공공시설 등의 생활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동네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응답하여 청년의 지역에서의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동네 수준에서 생활 편의성과 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자. 안준기과 김은영(2024)

▮ 지역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인구 유출 현황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 2014년~2023년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청년층 인구 유출 및 유출원인에 대하여 분석함

○ 군 단위 지역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일자리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 수준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음

○ 지역 노동시장의 높은 기대임금은 지역 청년층 증가에 긍정적이며, 그 효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 지역의 청년층을 유입시키는 지역 정책보다는 최소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군 단위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특성은 20대 초반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현실적으로 지역 내 우수 대학을 설립하거나 대규모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앞서 언급한 지역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업 등의 이유로 유출된 지역 청년을 다시 회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제조업 가운데서도 사양 산업의 경우엔 저탄소·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빠른 산업전환을 통해 해당 일자리 종사자들의 고용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

<표 2-7>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성

구분	지역의 인구대비 청년 유출비중이 큰 지역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큰 지역
지역적 특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군지역	광역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
인구 유출 주도층	20대 초반 > 20대 후반 > 30대	20대 후반 > 그 외 연령대
고용특성	전국수준과 유사하거나 상회	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
제조업 특성	전국수준과 유사하가나 상회	전국수준에 하회하거나 감소
청년인구 유출 요인	상급학교 진학 일자리의 질 낙후 지역인프라 부족	(상급학교 진학) 일자리 감소(제조업)

자료원 : 안준기, 김은영(2024),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지역산업과 고용 : 통계프리즘, p. 111의 <표 8>

차. 유나영과 마강래(2024)

▮ **우리나라 비수도권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청년인구의 순이동 패턴과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 수행**

▮ **비수도권 광역시와 전국 간 청년인구 순이동 흐름의 변화 추이는 광역시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지속’과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보임**

○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비수도권 광역시로의 청년인구 순유입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최근 시점부터 발생하고 있음

○ 주목할 점은 최근 ‘동일 광역권 내 도 지역’으로부터 청년인구가 순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 우리나라 비수도권 광역시의 청년인구는 지난 23년간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지속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순유출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음
- 비수도권 광역시의 청년인구가 충청권으로도 꾸준히 순유출되고 있는 상황은 수도권의 영향력이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
-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인근 도 지역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순유입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
- 이러한 인구이동 패턴의 등장은 최근 IT, BT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기업들이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차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음

- 비수도권의 광역시가 주변 도시지역으로부터 청년인구를 빨아들이는 최근의 경향은 최근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카. 임태경(2024)

▮ **청년세대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아 구직 중일 가능성이 높은 20대와 이미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30세 간의 지역을 선택하는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청년층이 비수도권지역으로 순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권역별·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세분화하여 분석**

○ 20대 청년층 :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일지리도 상대적으로 일자리기회가 많은 환경이 이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

○ 30대 청년층 : 제조업분야를 포함한 많은 일자리 기회가 있는 산업·일자리 환경뿐만 아니라 높은 1인당 월급여액 수준이 존재하는 특성이 30대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

○ 20대의 청년층의 경우 경상권역, 호남권역, 충청권역, 강원권역 순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에서 순유입의 정도가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면에 30대 청년층의 경우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권역이라 할지라도 충청권역과 강원권역에는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비수도권내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30대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1인당 급여액 수준 및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집중시키고, 거점도시 집중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동시에 음악과 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과 같은 일상적인 여가시설 환경은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환경과 문화·여가 인프라환경이 집약되어 조성될수 있게 재정지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타. 전희진과 전아람(2024)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을 분석하고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유입 및 정주확대방안을 제시함**

○ 전입/전출 사유 비중을 비교해보면, 직업에 의한 전출 비중은 과반인 54.1%인데 반해 직업으로 인한 전입은 38.5%에 불과하여 차이가 나타남

○ 타 시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전입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38.5%로 가장 높았고, 가족 33.8%, 교육 12.2%, 주택 6.6% 순으로 전입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입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입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42.4%로 가장 높았고, 가족 29.5%, 교육 12.2%, 주택 6.9% 순으로 비중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가족의 비중이 39.6%로 가장 높았고, 직업 33.3%, 교육 12.1%,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 1인가구의 전출사유를 확인한 결과 직업 사유가 54.1%로 과반 이상이었고, 가족 19.0%, 교육 13.3%, 주택 6.3% 순으로 전출사유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대보다 교육으로 인한 전출 비중이 높았고, 30대가 20대에 비해 직업과 가족, 주택에 의한 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출사유 중 직업의 비중이 56.3%로 가장 높았고, 가족 16.5%, 교육 13.6%, 주택 6.4% 순으로 비중을 보였으며 여성 역시 직업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고, 가족 22.1%, 교육 13.0%, 주택 6.2%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여성 유입 및 정주 확대 방안으로 일자리분야, 정주여건 분야, 교육분야, 복지·문화분야, 청년공동체 분야 등으로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 (일자리 분야) 일자리의 경우 즉각적인 청년 여성인구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에 더하여 다른 가치 실현이나, 직장내에서의 관계와 소통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전북의 특성화 전략으로 세가지를 제안함

- (1) 창업·창직지원프로그램 확대

- (2) 직장문화 개선 사업
- (3) 청년 여성 워케이션 사업을 제안

○ (정주여건 분야) 정주여건 분야에서는 주거지원 사업이나 전북지역 내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전북 지역의 매력을 충분히 즐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두가지의 사업을 제안함

- (1) 도심내 공유자전거 사업
- (2) 아동대상 소아과 확대 사업

○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두가지 사업을 제안함

- (1)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방안 확대를 제안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으로 수도권 및 타지역으로의 유출이 이루어지고 졸업 후 취업 과정에서 다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 (2)청년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사업을 제안함
  -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취업 상태에서 혹은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선택지가 적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복지·문화 분야)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예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청되어 두가지를 제안함

- (1)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 (2) 청년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팝업스토어 실험 공간 마련 사업

○ (청년공동체 분야) 청년공동체 분야에서는 전주의 지향집 사례를 통해 보여주듯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 내 창업과 연결하고, 주변 거리의 상점 풍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두가지를 제안함

- (1) 청년 여성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 (2) 전북 브랜딩 발굴로 지역 정체성 강화 전략

파. 정용준(2024)

▌**강원도지역 청년인구 유출 원인으로 ①양질의 일자리 부족, ②미흡한 정주여건, ③열악한 교육 및 보육 여건 등 세가지로 분석**

○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강원지역 청년의 절반은 낮은 월급여 및 일·생활 균형 부족 등 직업을 사유로 수도권 등으로 이탈

- 낮은 임금 : 대기업 및 거점산업 부족 등으로 평균 월급여*가 광역시도 중 전국 13위를 기록
- 일·생활 균형 부족 :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청년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생활 균형 수준도 전국 최하위

○ [미흡한 정주여건] 높은 노후주택 비중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비싼 소득대비 물가도 청년의 역외이전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분석

- 강원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의 상당수가 주택(8.4%) 및 주거환경(2.7%)에 따라 이전
- 높은 노후주택 비중 : 높은 주택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준공 후 30년 이상 주택 비중이 높음
- 서비스 중심 높은 물가 : 소득대비 개인 및 공공 서비스 물가도 높은 수준(4위)을 기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강원지역 정착에 애로
  - 개인서비스 물가 중 이용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데다 목욕, 세탁료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 요금의 경우 전기가스(소매가), 시내버스(현금) 요금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 [열악한 교육 및 보육 여건] 대학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고, 보육시설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도 청년층의 수도권 전출 요인으로 일부 작용

- 도내 청년가구 중 수도권으로 전출한 가구의 약 35%가 보육 여건을 포함한 ”가족“ 및 ”교육“을 사유로 이전(통계청, ’22년 기준)
- 대학 경쟁력 부족 : 대학평가 대상 도내 대학 순위가 타 지역 대비 열위인데다 재학생 미달 인원도 전국 대비 높은 상황

- 보육시설 접근성 부족 : 면적대비 사설학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어린이집, 유치원 평균 접근거리도 전국에서 가장 길어 타지역 대비 양육 여건이 열악

▌강원도지역 청년인구 유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함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강원으로 도약] ①첨단산업단지 조성, ②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첨단산업단지 조성 : 춘천 기업혁신파크 및 인공태양(핵융합)분야 전문 연구기관 유치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 : 지차체의 일·생활 균형 관련 조례 제정 및 담당 조직 확충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지역내 장기근무를 지원
  - 각 시·군는 도내 기업내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보다 자유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을 상시 제공 및 홍보

○ [청년이 머물고 싶은 강원으로 발돋움] ①월세비 지원 및 주택 신축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②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

- 월세비 지원 및 주택 신설 : 도내 전입청년 월세비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을 낮추는 한편 군부대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 청년층 강원지역의 높은 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
  - 춘천시의 경우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급” 사업을 통해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있다가 시내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경과된 관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기별 10만원, 최대 8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

○ [청년이 공부·육아하고 싶은 강원으로 성장] ①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②민간참여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육여건을 개선

- 산업·대학 연계 강화 : 글로컬 대학 지원을 계기로 산학연계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생의 도내 유입을 도모

-

- 수소, 인공태양 등 다양한 첨단산업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긴밀한 산학연계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
-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캠퍼스별 지역·대학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교육부, 24.1.9일)하였으며 이에는 지역산업체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춘천시-푸드테크 대학원 설립후 산업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포함

- 민간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확대 : 지자체 외에 보육시설 운영에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 최근 원주시의 경우 보육시설 부족으로 돌봄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경동대와 연계한 돌봄교실(원주시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3월부터 초등학교 정규수업 후 경동대 산학협력단에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표 2-8> 청년인구의 사회적 이동관련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자료원	내용
류장수 (2015)	-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젊은 청년층에게 보육환경은 장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된다고 주장
김호철, 정석 (2016)	- 중소도시 청년층 인구이동의 주요원인으로 문화적요인보다 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이 있음 - 문화, 교육, 의료, 복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보다 일자리와 관련된 경제적 요인이 더 많은 유의성을 지님 - 문화생활여건이 유일하게 시도내 순이동 모형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으나, 음의 영향력을, 반면 경제적 요인의 모든 변수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모형에서 유의성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취업의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인 청년고용률이 모든 모형에서 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 순이동 모형 분석에서 일자리 다양성과 일자리 만족도가 중소도시 청년층 인구의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반면 일반적으로 좋은 근로여건이라고 생각되는 상용직 여부, 기업의 규모, 소득은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영향관계가 도출 - 적성에 맞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수요는 장거리 이동에서 발생 - 기존 생활권을 넘어서는 이동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
이찬영, 이흥후 (2016)	-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인구가 지역 간 이동을 하는 요인으로 높은 임금과 취업 여건이 이동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결과를 도출함 - 임금과 취업률과 함께, 결혼기회,거주비용이 낮은 곳으로 이동이 진행됨을 확인 -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에서는 전세 가격, 즉 주택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임금 및 취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수도권 거주비용의 증가 역시 이동의

자료원	내용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이찬영, 문제철 (2016)	- 광주·전남지역 분석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고용여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 청년층은 타 연령대보다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
이찬영 (2018)	- 200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16개 시도의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령대별로 유형화해서 분석해 본 결과 2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문화기반시설수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
김현우, 강명구 (2020)	-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특징을 분석 - 청년층 인구이동에서 일자리 특성과 함께, 복합적 문화공간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유현지, 이영성 (2020)	-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은 자녀가 있는 청년층을 유입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점을 강조
김동신 (2021)	-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데, 지역의 경제적 요인과 함께 사회문화적 요인(의료서비스·문화예술시설·복지시책 등)이 정주의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김유현 (2021)	- 16개 지역의 인구이동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수도권과 지방간 청년의 사회적 이동은 일자리의 질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 - 경제적 요인과 함께,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그리고 주거여건 등이 청년의 순유입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
김화연, 이대웅 (2022)	- 청년의 출생지와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구분하여 지방 정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 분석결과 출생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은 경제활동 및 일자리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 -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앞선 경제활동 및 인프라와 함께 지방의 청년 정책 만족도와 보건·의료 인프라가 지방에서의 정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민보경 (2022)	- 청년의 사회적이동 사유는 직업과 주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관련하여 청년들의 정주 환경을 형성할 때,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지역 배치와 주거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
도수관 (2023)	-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가 보장된 정주여건은 청년의 주거 장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박순철, 도수관 (2023)	- 울산지역에서 취·창업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기회가 되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이 낮아짐 - 월평균 본인소득이 증가하면 무조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확률은 낮아짐, 다만,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확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 - 취·창업한 청년들이 이직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가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높아짐 - 학생 또는 취·창업을 준비 중인 울산지역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 정보 인지 수준이 높으면 무조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자료원	내용
	확률이 증가 - 취업 시 기대 연봉이 높거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기회가 되면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확률이 증가 - 정주여건 중에서 울산지역 청년들이 인식하는 울산의 주거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 및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 주거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회가 있으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 - 울산지역 청년들이 인식하는 울산지역 교육 분야 만족도 수준이 울산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지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함
이대웅 (2023)	- 강원도 청년을 대상으로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청년의 사회적 이동의 주요 요인은 직업, 교육, 주거의 순 -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한 강원도의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결과적으로 청년세대의 연령 구간에 따른 차별적 인구정책·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정책·지방 거점 도시 및 연계 도시를 통한 상생형 인구정책·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확장형 인구정책의 수립이 필요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방안을 제시
임태경 (2023b)	- 비수도권지역일지라도 전반적으로 사업체수가 밀집되어 있어 일자리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20대의 청년층이 유입되 1인당 월금여액 수준이 높은 일자리환경은 20대와 30대 청년층 모두를 비수도권 유입에 매우 영향력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 -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 - 문화기반시설수와 공연수로 측정된 지역의 문화환경이 30대 청년층의 순유입에는 유의미한 동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0대 청년층에게는 유의미한 동기요인은 아니다는 점을 제시 - 상대적으로 직장을 잡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대의 청년층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존재하기에 20대의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이 같은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입을 선호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출산감소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지난 20년간 청년 유출에 따른 호남권의 2021년 출산손실은 출생아수의 49.7%나 되었고 대경, 동남권은 31.6%, 21.9% 수준 - 청년층 노동공급 감소는 미스매치 확대로 지역 고용을 악화시켰고 기업 유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 -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적 노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의 이동 증가는 기대소득 등 경제지표와 함께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진 데 주로 기인 -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하여 전체 권역의 산업경쟁력과 집

자료원	내용
	적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 주요국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서 거점도시로의 집중이 실제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 - 최근 거점도시들은 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청년고용 개선, 그에 따른 주변지역 청년유입 등 위상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비수도권지역에서는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여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차건환, 임수하 (2023)	- 비수도권 소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농업, 어업임업의 1차 산업과 부가가치를 더하는 첨단산업을 결합한 산업구조는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강조 - 청년층의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일자리나 직업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차지 못할 경우 타지역으로 유입하여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나 직업적인 환경은 청년층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주장
최조순, 박지영, 조해진 (2023)	- 경기도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의 실태 및 특성을 분석 - 분석 결과,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인구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교육, 직업과 관련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고, 수도권내에서는 결혼 등 가족구성, 주택구매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 이동이 발생함 - 경기도에서 전출한 청년인구는 취업, 이직 등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는 직업의 소재지보다 직업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년의 사회적 이동의 결과로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의 집중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내 청년인구의 사회적 이동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분석함
김세창, 이소영, 조대헌 (2024)	- 청년층 인구이동을 대학 진학관련 이동, 취업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 - 18-22세 연령층에서는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이 주요 이동의 목적 - 23-30세 연령층에서는 취업이 주요 이동 목적임을 확인 - 공간적 범위의 측면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이동은 동일 시도나 권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활발한 전입이 이루어지는 반면, 취업 이동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 - 청년층의 대학 및 취업을 위한 이동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였는데,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동이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 - 청년층이 직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주지역과 노동시장 간의 공간적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청년층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기존 거주지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함
장명준 (2024)	- 대구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청년이동과의 관계를 분석 -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참여)이 높을수록 지역이동가능성이 낮아짐 -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이동 이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일자리 지역적 분산과 산업유치 및 투자,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제2절 인구와 청년인구의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1) 전국 기준 청년인구 비중

▮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18세~39세)의 비중은 26.29%(전체 인구 51,217,221명중 13,463,272명)으로 지난 2014년 30.87%에 비해 최근 11년 동안 약 4.58%p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특별시(31.06%)가 가장 높았으며, 대전광역시(28.60%), 경기도(27.62%)의 순으로 분석됨

○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20.58%)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21.05%), 경상남도(21.94%)의 순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전체 청년인구 가운데 약 55.75%(7,505,459명)가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난 2014년도 52.42%(8,306,431명)에 비해 3.33%p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낮은 청년인구의 비중은 반대로 고령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024년 기준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고령자 비중이 27.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국평균 고령자 비중은 20.03%로 분석되었는데, 비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평균 이상의 고령자 비중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4년 1,738,690명중 청년층(18세~39세) 인구는 385,523명으로 청년인구 비중은 22.1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4위로 분석됨**

○ 고령자 비중(65세 이상)은 25.26%(439,263명)로 17개 광역지자체중 4위로 분석됨

▮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의 관계를 살펴본 안준기와 김은영(2024)의 연구에서 사용한 청년인구 변화속도와 고령화 속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의 청년인구 변화 속도는 -0.4588로 최근 11년간 18~3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연평균 0.46%p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광역시도별로 보면, 광역시 단위에서는 울산광역시가 -0.7206으로 가장 빠르게 청년인구가 감소하였으며, 부산광역시가 -0.5519로 그 다음순으로 분석됨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가 -0.7055로 가장 빠른 청년인구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0.6263, 전북특별자치도 -0.5065의 순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변화속도는 -0.5065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7번째로 분석됨

○ 반면에 고령화 속도의 경우 광역시도중 부산광역시가 0.99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광역시 0.8847, 대구광역시 0.8694의 순으로 분석됨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0.8793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 0.8738, 경상남도 0.8414의 순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령화 속도는 0.8026으로 17개 광역지자체중 7번째로 분석됨

<표 2-9> 전국기준 청년층 인구 특성

(단위: 명, %, %p)

구분	2024년						2014년						청년인구 변화속도	순위	고령화 속도	순위
	전체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 비중		고령자인구 비중		전체인구	청년인구	청년인구 비중		고령자 인구 비중					
			%	순위	%	순위			%	순위	%	순위				
전국	51,217,221	13,463,272	26.29%		20.03%		51,327,916	15,847,328	30.87%		12.70%		-0.4588		0.7322	
서울	9,331,828	2,898,611	31.06%	1	19.44%	10	10,103,233	3,423,103	33.88%	1	12.04%	12	-0.2820	17	0.7394	10
부산	3,266,598	796,889	24.40%	10	23.90%	5	3,519,401	1,052,813	29.91%	9	13.98%	7	-0.5519	4	0.9913	1
대구	2,363,629	591,898	25.04%	7	20.87%	9	2,517,434	750,801	30.11%	8	12.17%	11	-0.5071	6	0.8694	5
인천	3,021,010	824,956	27.31%	4	17.66%	13	2,902,608	939,954	32.38%	2	10.26%	15	-0.5076	5	0.7390	11
광주	1,408,422	384,129	27.27%	5	17.54%	14	1,475,884	472,928	32.04%	5	10.83%	13	-0.4770	10	0.6707	13
대전	1,439,157	411,638	28.60%	2	18.01%	12	1,531,809	493,243	32.20%	3	10.34%	14	-0.3597	16	0.7678	8
울산	1,098,049	273,186	24.88%	8	17.19%	15	1,166,377	374,239	32.09%	4	8.34%	17	-0.7206	1	0.8847	2
세종	390,685	104,281	26.69%	6	11.60%	17	156,125	48,371	30.98%	7	12.67%	10	-0.4290	15	-0.1072	17
경기	13,694,685	3,781,892	27.62%	3	16.57%	16	12,357,830	3,943,374	31.91%	6	10.15%	16	-0.4294	14	0.6422	14
강원	1,517,766	339,817	22.39%	13	25.36%	3	1,544,442	417,727	27.05%	16	16.57%	4	-0.4658	11	0.8793	3
충북	1,591,177	390,242	24.53%	9	21.95%	7	1,578,933	458,668	29.05%	10	14.50%	6	-0.4524	13	0.7448	9
충남	2,136,574	510,476	23.89%	12	22.26%	6	2,062,273	595,818	28.89%	12	16.04%	5	-0.4999	8	0.6221	15
전북	**1,738,690**	**385,523**	**22.17%**	**14**	**25.26%**	**4**	**1,871,560**	**509,776**	**27.24%**	**15**	**17.24%**	**3**	**-0.5065**	**7**	**0.8026**	**7**
전남	1,788,819	368,072	20.58%	17	27.20%	1	1,905,780	484,072	25.40%	17	20.14%	1	-0.4824	9	0.7057	12
경북	2,531,384	532,841	21.05%	16	26.04%	2	2,700,794	737,651	27.31%	14	17.30%	2	-0.6263	3	0.8738	4
경남	3,228,380	708,453	21.94%	15	21.82%	8	3,350,257	971,549	29.00%	11	13.40%	9	-0.7055	2	0.8414	6
제주	670,368	160,368	23.92%	11	18.94%	11	607,346	173,241	28.52%	13	13.57%	8	-0.4602	12	0.53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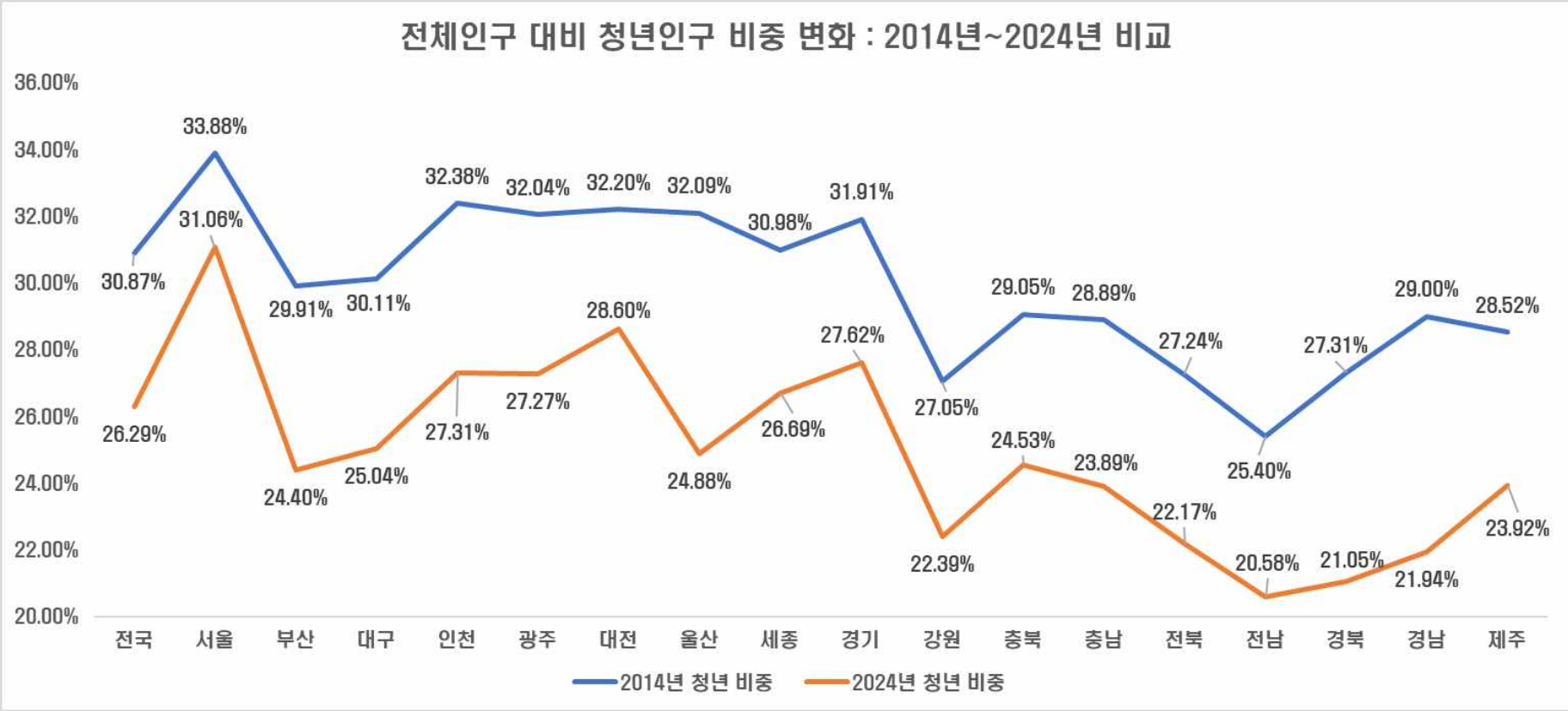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2024,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활용,

주 : 1) 군위군은 2023년 7월에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비교 분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2014년 수치 산출 시 대구광역시와 통합하여 산출

2) 청년의 기준은 18~39세, 고령자의 기준은 65세 이상

3) 청년인구 변화 속도 및 고령화 속도는 (2024년 해당 인구 비율-2014년 해당인구 비율)/10년으로 산출함

<그림 2-3> 전국기준 청년층 인구 특성 : 2014년과 2024년 비교



2.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및 청년인구 변화

1)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 분석

가. 인구

▮ 전국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2014년 51,327,916명에서 2024년 51,217,22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001% 감소함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2014년 1,871,560명에서 2024년 1,738,690명으로 연평균 0.71% 감소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4년 3.65%에서 2024년 11월 기준 3.39%로 0.26%p 감소하고 있음

<표 2-10>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추이 : 2014년~2024년

(단위 : 명)

연도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합계 비중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2014	51,327,916	25,669,296	25,658,620	1,871,560	931,536	940,024	3.65%
2015	51,529,338	25,758,186	25,771,152	1,869,711	930,255	939,456	3.63%
2016	51,696,216	25,827,594	25,868,622	1,864,791	927,505	937,286	3.61%
2017	51,778,544	25,855,919	25,922,625	1,854,607	922,307	932,300	3.58%
2018	51,826,059	25,866,129	25,959,930	1,836,832	913,297	923,535	3.54%
2019	51,849,861	25,864,816	25,985,045	1,818,917	904,110	914,807	3.51%
2020	51,829,023	25,841,029	25,987,994	1,804,104	896,874	907,230	3.48%
2021	51,638,809	25,746,684	25,892,125	1,786,855	888,994	897,861	3.46%
2022	51,439,038	25,636,951	25,802,087	1,769,607	880,592	889,015	3.44%
2023	51,325,329	25,565,736	25,759,593	1,754,757	873,419	881,338	3.42%
2024	51,217,221	25,498,324	25,718,897	1,738,690	866,030	872,660	3.39%

자료원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별)

나.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가 36.56%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 15.41%, 군산시 14.84%로 전주, 군산,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인구 중 약 66.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1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단위 : 명, 세대, %)

행정구역	인구수				성비 (남여 비중)	세대수	세대당 인구
	비중(%)	계	남	여			
합 계	100.00%	1,738,690	866,030	872,660	49.81%	864,608	2.01
전주시	36.56%	635,651	312,053	323,598	49.09%	296,931	2.14
군산시	14.84%	258,047	130,936	127,111	50.74%	125,189	2.06
익산시	15.41%	268,001	133,433	134,568	49.79%	131,084	2.04
정읍시	5.87%	102,127	50,997	51,130	49.93%	54,514	1.87
남원시	4.35%	75,647	37,120	38,527	49.07%	39,901	1.90
김제시	4.64%	80,635	40,360	40,275	50.05%	43,768	1.84
완주군	5.71%	99,279	50,965	48,314	51.34%	49,553	2.00
진안군	1.39%	24,161	12,352	11,809	51.12%	13,681	1.77
무주군	1.32%	23,032	11,572	11,460	50.24%	13,018	1.77
장수군	1.19%	20,663	10,372	10,291	50.20%	11,510	1.80
임실군	1.47%	25,577	13,202	12,375	51.62%	14,909	1.72
순창군	1.54%	26,822	13,217	13,605	49.28%	14,516	1.85
고창군	2.93%	50,982	25,441	25,541	49.90%	28,600	1.78
부안군	2.76%	48,066	24,010	24,056	49.95%	27,434	1.75

자료원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24년 12월 기준)

나. 경제 현황

▮ **지역내 총생산(GRDP)은 광역 자치단체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

○ 2022년 기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GRDP는 51.6조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나, 전국의 증가 추세(2.55%)에 비하면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전북 지역내 총생산은 1985년(4.38%) → 1990년(3.55%) → 2005년(2.975) → 2015년(2.8%) → 2022년(2.62%)로 매년 감소 추세

▮ **1인당 GRDP는 34,299천원으로 전국 평균(42,563천원)보다 낮은 수치임**

다. 소비자물가지수

▮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비자물가(총지수 기준)는 2024년 114.24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9위에 분석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

○ 2001년 66.394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6위, 전국 평균 64.719

○ 2015년 95.205로 8위, 전국 평균 94.981

○ 2024년 114.24로 9위, 전국 평균 114.18

▮ **소비자물가지수를 품목성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비자물가중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17.1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1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64.803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10위
- 2015년 97.000로 8위
- 2024년 117.15로 11위

○ 소비자물가중 상품(농축수산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23.4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5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47.284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14위
- 2015년 82.994로 13위
- 2024년 123.47로 5위

○ 소비자물가중 상품(공업제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13.94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9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69.512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1위
- 2015년 98.804로 9위
- 2024년 113.94로 9위

○ 소비자물가중 상품(전기/가스/수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34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5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15년 115로 6위
- 2024년 134로 15위

○ 소비자물가중 서비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11.04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5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67.851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6위
- 2015년 93.457로 8위
- 2024년 111.04로 15위

○ 소비자물가중 서비스(집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01.51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6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83.395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3위
- 2015년 98.861로 7위
- 2024년 101.51로 16위

○ 소비자물가중 서비스(공공서비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04.08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3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01년 79.716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14위
- 2015년 99.751로 10위
- 2024년 104.08로 1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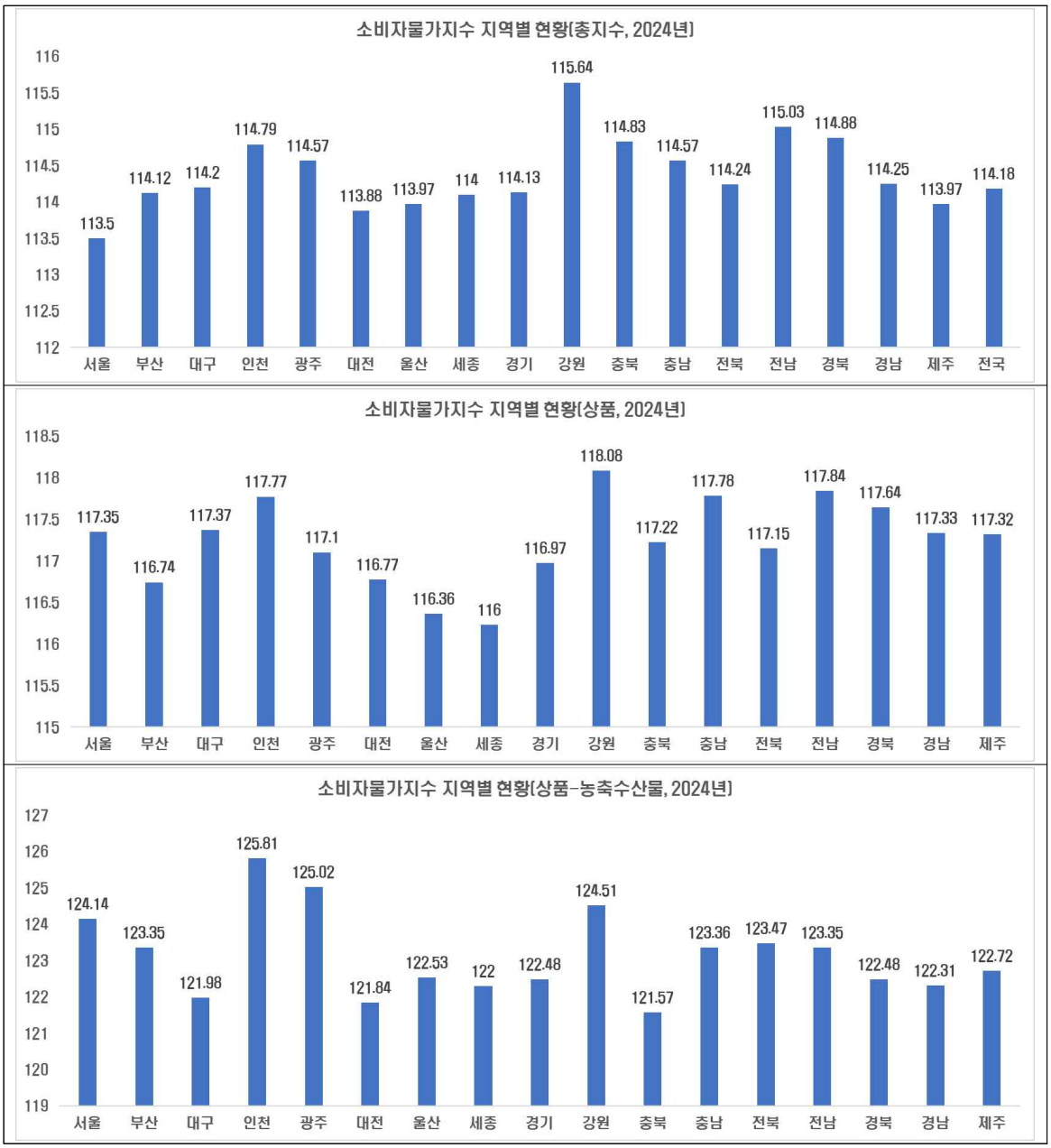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중 서비스(개인서비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115.9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2위에 해당되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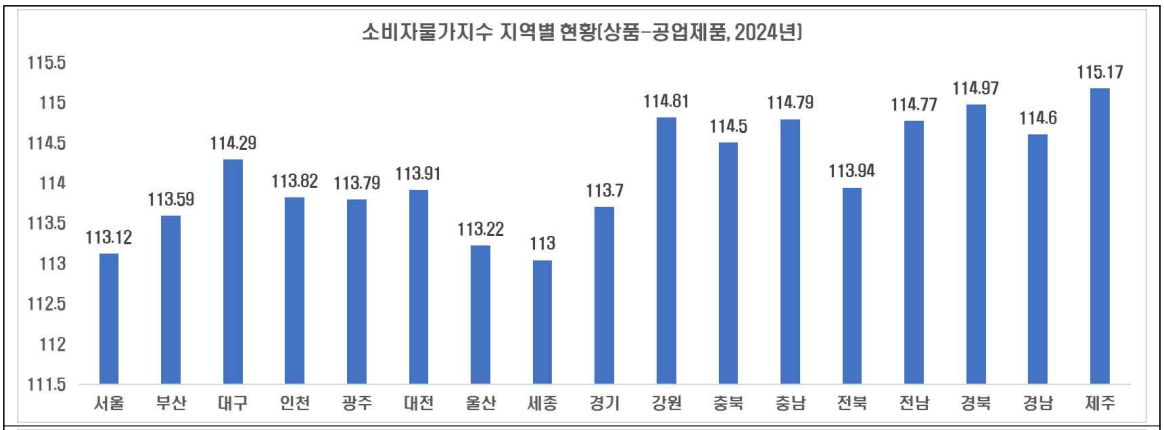
- 2001년 59.779로 16개 광역지자체(세종 제외)중 8위
- 2015년 89.935로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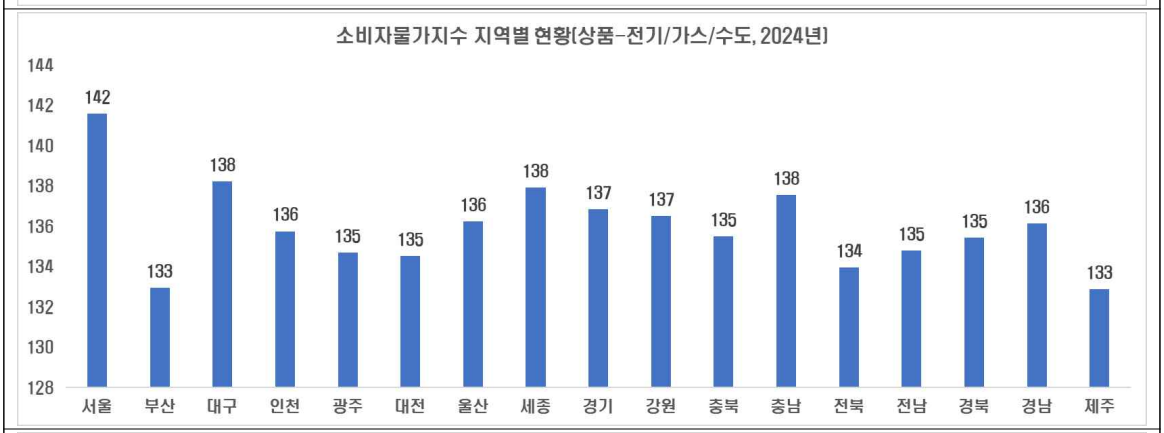
- 2024년 115.95로 1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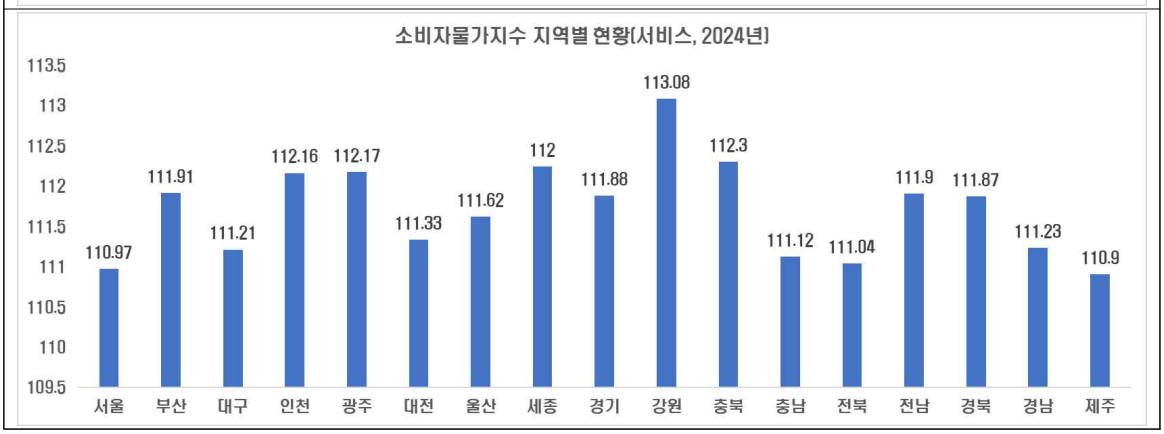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목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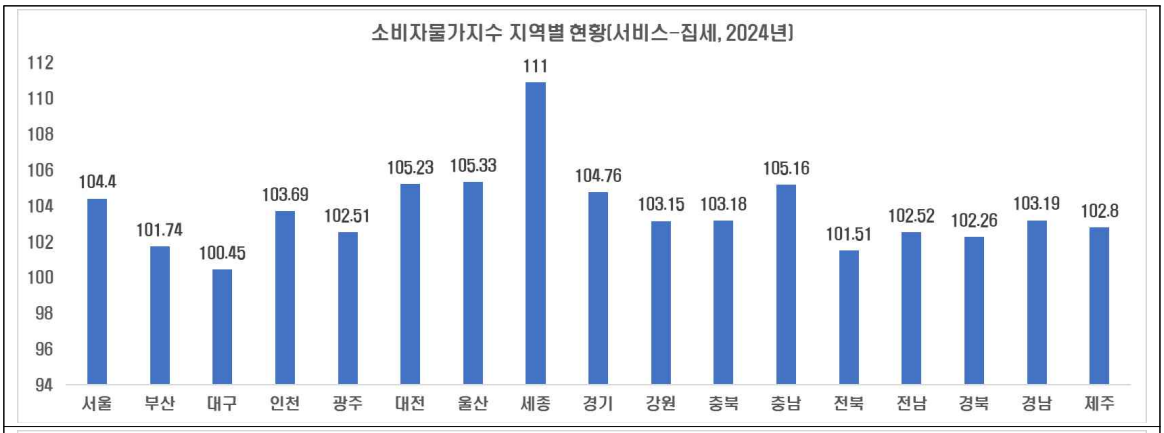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 123.26(5위) > 전국 평균 122.87
- 주류 및 담배 : 102.77(11위) < 전국 평균 104.56
- 의류 및 신발 : 114.5(5위) > 전국 평균 114.34
-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 116.62(8위) > 전국 평균 114.5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113.65(16위) < 전국 평균 114.82
- 보건 : 104.23(11위) < 전국 평균 104.34
- 교통 : 113.56(12위) < 전국 평균 114.25
- 통신 : 100.95(17위) < 전국 평균 101.3
- 오락 및 문화 : 108.93(5위) > 전국 평균 108.58
- 교육 : 104.44(10위) < 전국 평균 106.01
- 음식 및 숙박 : 120.36(10위) < 전국평균 120.77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117.46(16위) < 전국 평균 1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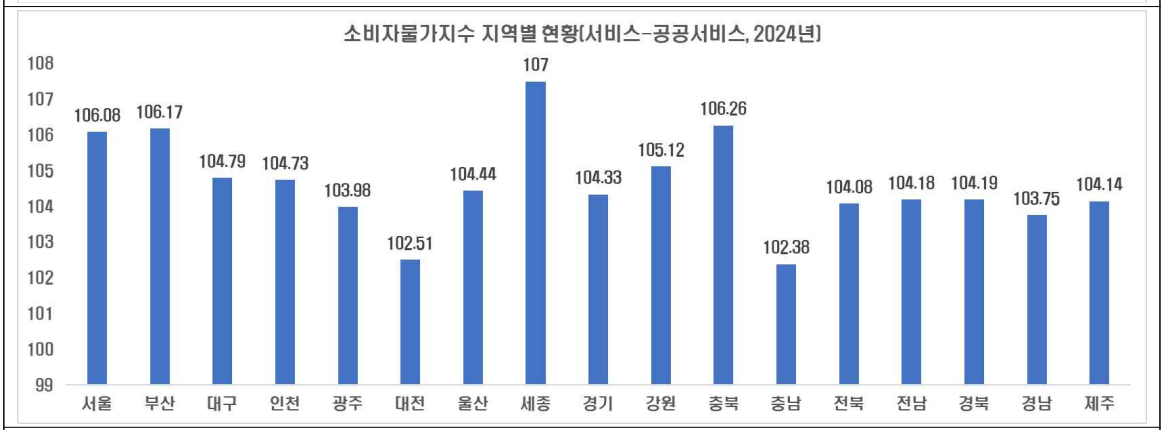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총지수, 2024년)
116
115.5
115
114.5
114
113.5
113
112.5
112
113.5
114.12
114.2
114.79
114.57
113.88
113.97
114
114.13
115.64
114.83
114.57
114.24
115.03
114.88
114.25
113.97
114.1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상품, 2024년)
118.5
118
117.5
117
116.5
116
115.5
115
117.35
116.74
117.37
117.77
117.1
116.77
116.36
116
116.97
118.08
117.22
117.78
117.15
117.84
117.64
117.33
117.3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상품-농축수산물, 2024년)
127
126
125
124
123
122
121
120
119
124.14
123.35
121.98
125.81
125.02
121.84
122.53
122
122.48
124.51
121.57
123.36
123.47
123.35
122.48
122.31
122.7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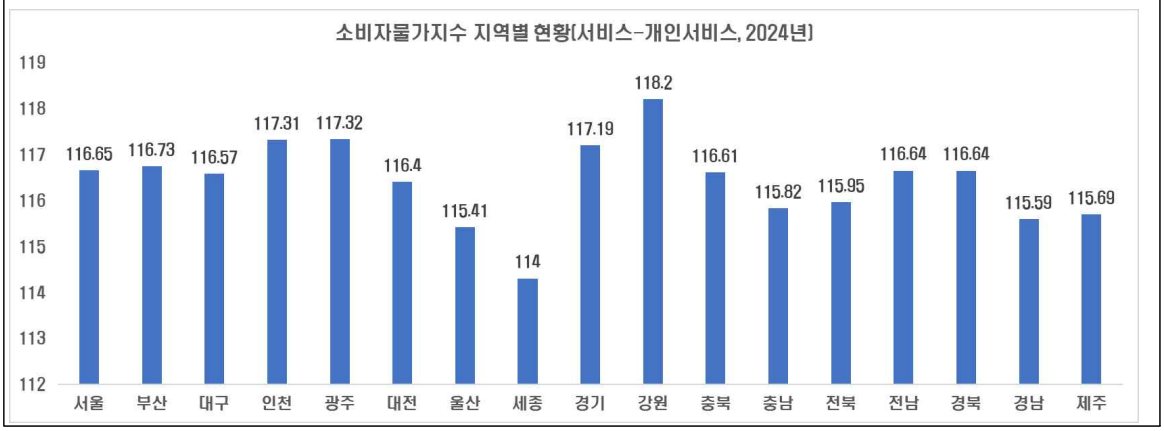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상품-공업제품, 2024년)
115.5
115
114.5
114
113.5
113
112.5
112
111.5
113.12
113.59
114.29
113.82
113.79
113.91
113.22
113
113.7
114.81
114.5
114.79
113.94
114.77
114.97
114.6
115.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상품-전기/가스/수도, 2024년)
144
142
140
138
136
134
132
130
128
142
133
138
136
135
135
136
138
137
137
135
138
134
135
135
136
13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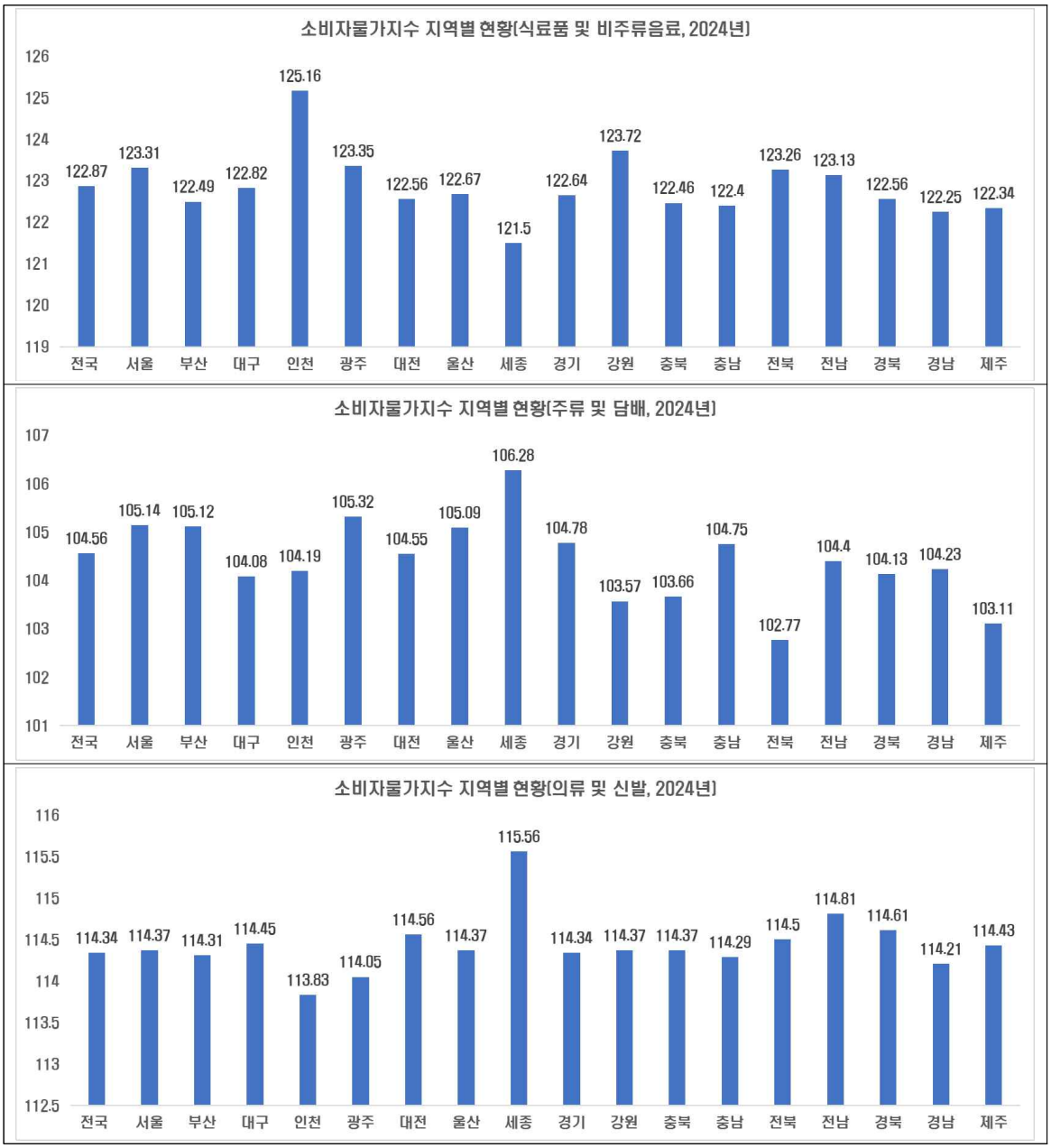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서비스, 2024년)
113.5
113
112.5
112
111.5
111
110.5
110
109.5
110.97
111.91
111.21
112.16
112.17
111.33
111.62
112
111.88
113.08
112.3
111.12
111.04
111.9
111.87
111.23
110.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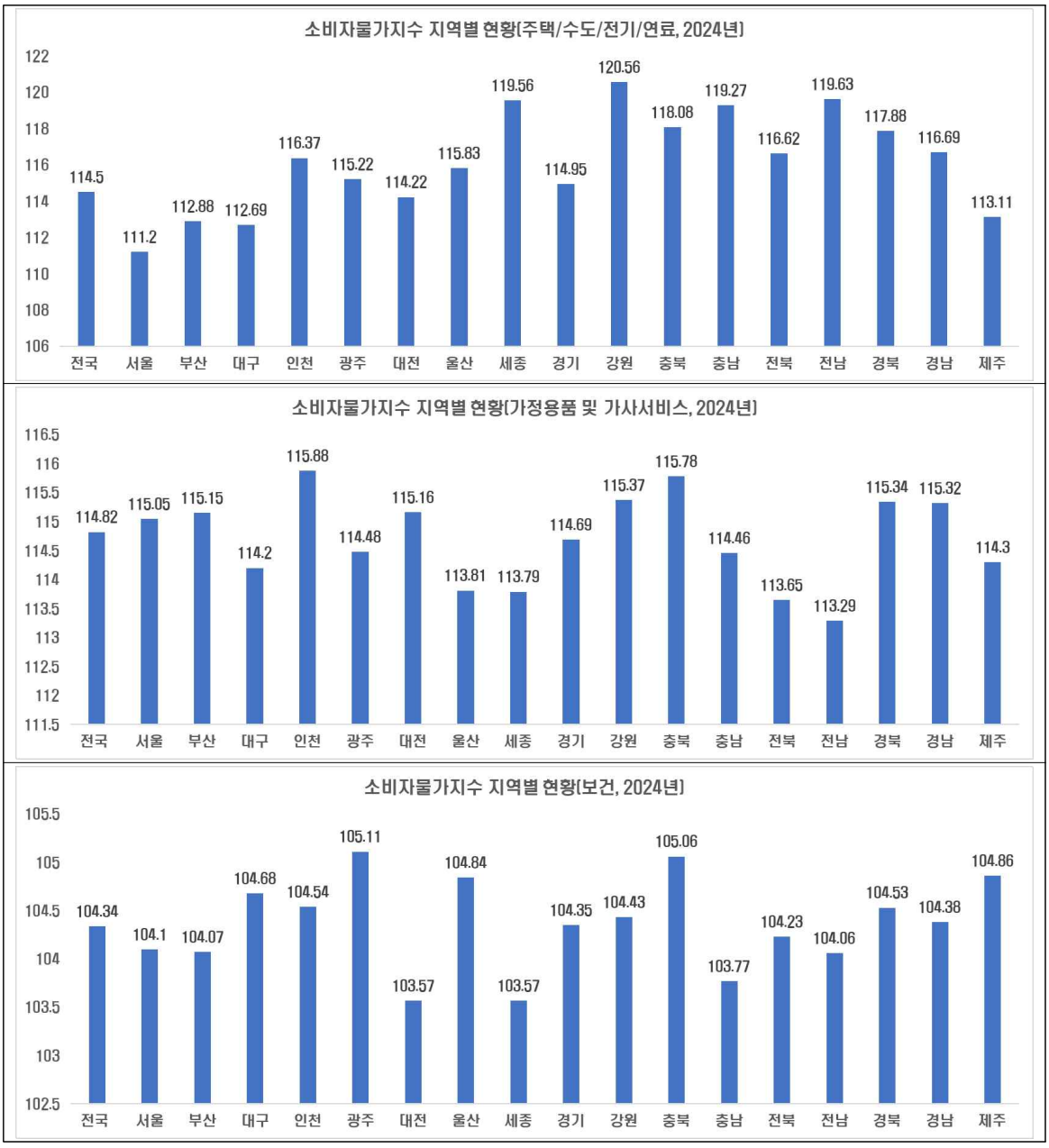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서비스-집세, 2024년)
112
110
108
106
104
102
100
98
96
94
104.4
101.74
100.45
103.69
102.51
105.23
105.33
111
104.76
103.15
103.18
105.16
101.51
102.52
102.26
103.19
102.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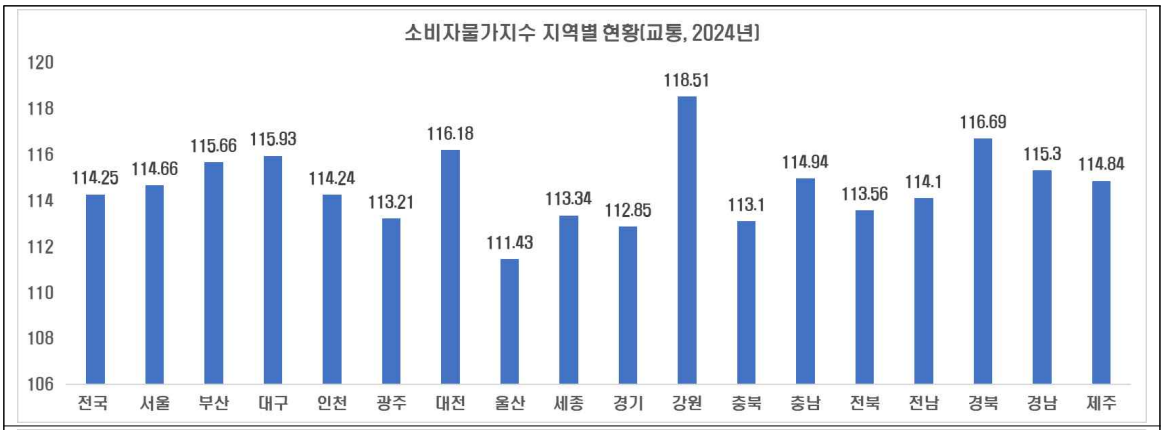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서비스-공공서비스, 2024년)
108
107
106
105
104
103
102
101
100
99
106.08
106.17
104.79
104.73
103.98
102.51
104.44
107
104.33
105.12
106.26
102.38
104.08
104.18
104.19
103.75
104.14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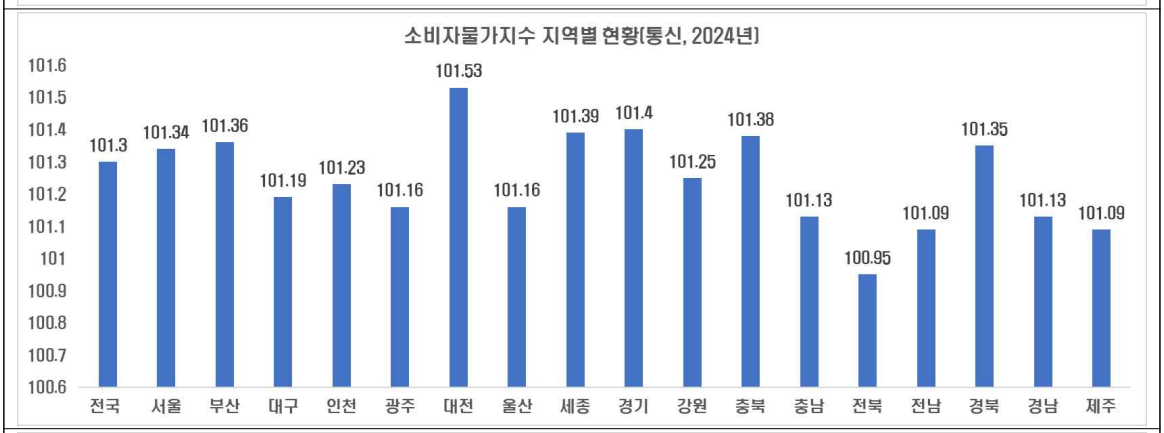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서비스-개인서비스, 2024년)
119
118
117
116
115
114
113
112
116.65
116.73
116.57
117.31
117.32
116.4
115.41
114
117.19
118.2
116.61
115.82
115.95
116.64
116.64
115.59
115.6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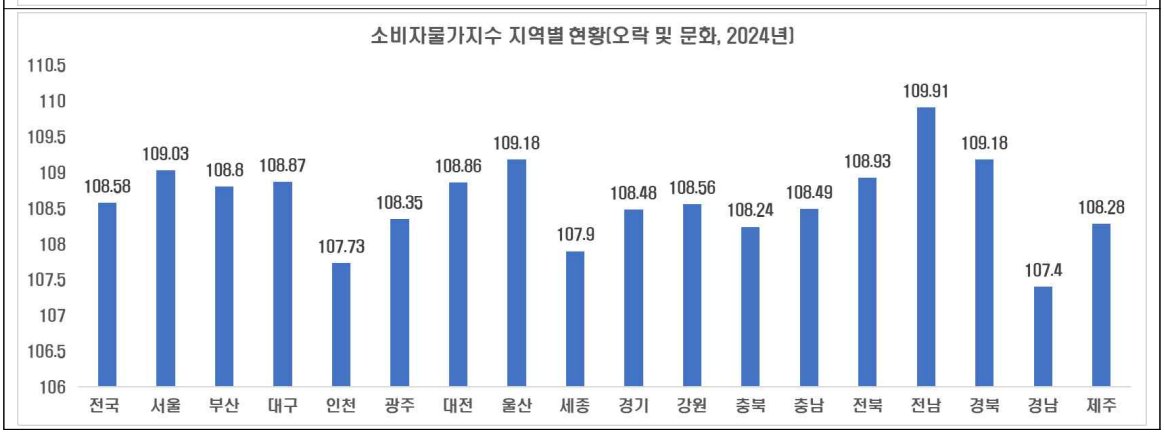
<그림 2-4>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2024년, 지출목적별 분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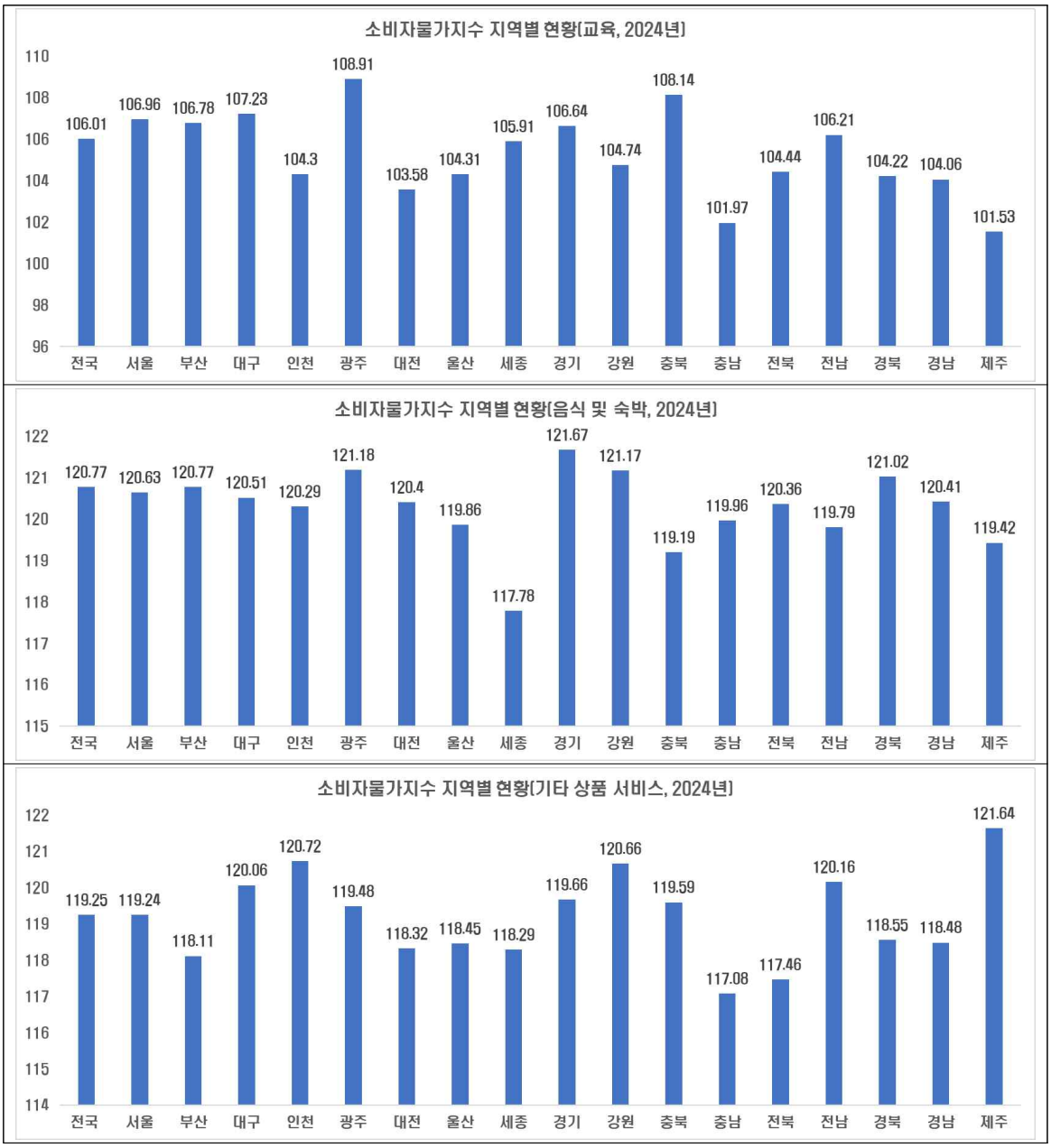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주택/수도/전기/연료, 2024년)
122
120
118
116
114
112
110
108
106
114.5
111.2
112.88
112.69
116.37
115.22
114.22
115.83
119.56
114.95
120.56
118.08
119.27
116.62
119.63
117.88
116.69
113.11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2024년)
116.5
116
115.5
115
114.5
114
113.5
113
112.5
112
111.5
114.82
115.05
115.15
114.2
115.88
114.48
115.16
113.81
113.79
114.69
115.37
115.78
114.46
113.65
113.29
115.34
115.32
114.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보건, 2024년)
105.5
105
104.5
104
103.5
103
102.5
104.34
104.1
104.07
104.68
104.54
105.11
103.57
104.84
103.57
104.35
104.43
105.06
103.77
104.23
104.06
104.53
104.38
104.86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교통, 2024년)
120
118
116
114
112
110
108
106
114.25
114.66
115.66
115.93
114.24
113.21
116.18
111.43
113.34
112.85
118.51
113.1
114.94
113.56
114.1
116.69
115.3
114.84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통신, 2024년)
101.6
101.5
101.4
101.3
101.2
101.1
101
100.9
100.8
100.7
100.6
101.3
101.34
101.36
101.19
101.23
101.16
101.53
101.16
101.39
101.4
101.25
101.38
101.13
100.95
101.09
101.35
101.13
101.09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오락 및 문화, 2024년)
110.5
110
109.5
109
108.5
108
107.5
107
106.5
106
108.58
109.03
108.8
108.87
107.73
108.35
108.86
109.18
107.9
108.48
108.56
108.24
108.49
108.93
109.91
109.18
107.4
108.28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교육, 2024년)
110
108
106
104
102
100
98
96
106.01
106.96
106.78
107.23
104.3
108.91
103.58
104.31
105.91
106.64
104.74
108.14
101.97
104.44
106.21
104.22
104.06
101.53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음식 및 숙박, 2024년)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20.77
120.63
120.77
120.51
120.29
121.18
120.4
119.86
117.78
121.67
121.17
119.19
119.96
120.36
119.79
121.02
120.41
119.42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기타 상품 서비스, 2024년)
122
121
120
119
118
117
116
115
114
119.25
119.24
118.11
120.06
120.72
119.48
118.32
118.45
118.29
119.66
120.66
119.59
117.08
117.46
120.16
118.55
118.48
121.64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2-12>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2001년, 품목성질별 기준)

구분	2001년, 품목성질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상품		상품-농축 수산물		상품-공업 제품		상품-전기/ 가스/수도		서비스		서비스 -집세		서비스 -공공서비스		서비스 -개인서비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64.512	16	63.954	14	50.297	10	66.995	15	-	-	64.811	16	62.378	16	79.655	15	59.853	7
부산	65.291	15	63.418	15	51.42	3	66.441	16	-	-	66.772	13	75.444	11	82.04	9	58.907	14
대구	66.061	12	65.223	6	51.582	2	68.077	13	-	-	66.605	14	75.97	10	82.079	8	58.753	15
인천	66.356	8	65.579	2	55.262	1	67.093	14	-	-	66.945	12	71.249	14	81.356	11	59.767	9
광주	66.312	10	64.756	11	50.575	8	68.087	12	-	-	67.516	8	76.675	9	82.446	7	59.407	12
대전	67.198	2	65.168	8	50.75	6	68.45	9	-	-	68.88	3	75.29	12	83.374	3	61.41	2
울산	65.917	13	64.117	13	47.015	15	68.647	6	-	-	67.477	9	78.656	7	82.986	4	59.725	10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65.528	14	65.388	3	51.345	4	68.413	10	-	-	65.443	15	67.144	15	77.46	16	59.963	5
강원	66.519	5	65.617	1	50.817	5	69.018	4	-	-	66.954	11	79.747	6	81.733	10	58.307	16
충북	66.776	3	65.333	5	49.432	11	68.858	5	-	-	67.883	5	84.201	2	80.864	12	59.402	13
충남	66.39	7	65.385	4	50.531	9	68.647	6	-	-	67.107	10	74.161	13	82.5	6	59.621	11
전북	**66.394**	**6**	**64.803**	**10**	**47.284**	**14**	**69.512**	**1**	**-**	**-**	**67.851**	**6**	**83.395**	**3**	**79.716**	**14**	**59.779**	**8**
전남	66.65	4	64.637	12	48.701	13	69.091	3	-	-	68.351	4	77.257	8	82.946	5	60.254	4
경북	68.04	1	65.209	7	49.09	12	69.211	2	-	-	70.562	1	90.875	1	83.586	2	62.23	1
경남	66.331	9	64.823	9	50.645	7	68.538	8	-	-	67.627	7	80.564	4	80.605	13	59.914	6
제주	66.288	11	63.146	16	45.595	16	68.088	11	-	-	69.204	2	80.465	5	84.868	1	61.316	3

<표 2-13>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2015년, 품목성질별 기준)

구분	2015년, 품목성질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상품		상품-농축수산물		상품-공업제품		상품-전기/가스/수도		서비스		서비스-집세		서비스-공공서비스		서비스-개인서비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94.47	14	96.714	12	83.425	11	97.842	17	116	1	93.077	12	93.574	17	99.893	9	89.69	11
부산	94.81	10	96.686	14	86.15	2	98.01	15	112	16	93.322	9	98.12	9	100.991	3	89.327	14
대구	94.46	15	96.678	15	84.536	6	97.875	15	115	5	92.653	15	97.941	11	99.582	11	88.791	16
인천	94.76	11	97.008	7	83.999	9	98.075	13	116	2	92.924	14	94.264	16	100.78	5	89.286	15
광주	95.31	7	97.197	3	86.332	1	98.037	13	114	7	93.517	7	97.513	12	100.44	6	90.033	6
대전	95.65	3	96.798	10	82.784	15	98.248	10	114	7	94.684	2	98.559	8	102.762	1	90.471	5
울산	96.25	1	97.598	1	85.504	4	98.782	4	116	3	95.04	1	103.861	1	100.902	4	91.285	1
세종	95.63	4	97.243	2	86	3	98	11	113	14	94	5	99	6	99	12	91	4
경기	94.73	12	97.047	5	84.023	8	98.185	13	115	4	92.991	13	95.367	15	98.684	17	89.937	8
강원	94.37	16	96.714	12	83.734	10	98.263	12	112	15	92.09	17	98.04	10	98.919	14	88.442	17
충북	95.07	9	97.029	6	83.268	12	98.53	9	114	9	93.274	10	100.332	5	98.989	13	89.631	13
충남	95.52	6	96.996	9	82.854	14	98.718	9	113	13	94.098	6	101.667	4	101.966	2	89.674	12
전북	**95.21**	**8**	**97.000**	**8**	**82.994**	**13**	**98.804**	**9**	**115**	**6**	**93.457**	**8**	**98.861**	**7**	**99.751**	**10**	**89.935**	**9**
전남	94.60	13	95.888	17	82.107	17	98.188	13	114	10	93.243	11	97.125	13	99.98	8	89.966	7
경북	95.80	2	97.083	4	84.822	5	98.476	13	114	12	94.515	3	102.929	3	100.38	7	91.041	2
경남	95.52	5	96.763	11	84.132	7	98.485	13	114	11	94.406	4	103.852	2	98.747	16	91.017	3
제주	94.15	17	95.952	16	82.651	16	98.529	13	109	17	92.53	16	95.558	14	98.904	15	89.766	10

<표 2-14>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2024년, 품목성질별 기준)

구분	2024년, 품목성질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상품		상품-농축수산물		상품-공업제품		상품-전기/가스/수도		서비스		서비스-집세		서비스-공공서비스		서비스-개인서비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서울	113.5	17	117.35	7	124.14	4	113.12	16	142	1	110.97	16	104.4	6	106.08	4	116.65	6
부산	114.12	12	116.74	15	123.35	7	113.59	14	133	16	111.91	6	101.74	15	106.17	3	116.73	5
대구	114.2	10	117.37	6	121.98	15	114.29	8	138	2	111.21	13	100.45	17	104.79	6	116.57	10
인천	114.79	5	117.77	4	125.81	1	113.82	11	136	9	112.16	5	103.69	7	104.73	7	117.31	3
광주	114.57	6	117.1	12	125.02	2	113.79	12	135	13	112.17	4	102.51	13	103.98	14	117.32	2
대전	113.88	16	116.77	14	121.84	16	113.91	10	135	14	111.33	11	105.23	3	102.51	16	116.4	11
울산	113.97	14	116.36	16	122.53	10	113.22	15	136	7	111.62	10	105.33	2	104.44	8	115.41	16
세종	114	13	116	17	122	14	113	17	138	3	112	3	111	1	107	1	114	17
경기	114.13	11	116.97	13	122.48	11	113.7	13	137	5	111.88	8	104.76	5	104.33	9	117.19	4
강원	115.64	1	118.08	1	124.51	3	114.81	3	137	6	113.08	1	103.15	10	105.12	5	118.2	1
충북	114.83	4	117.22	10	121.57	17	114.5	7	135	10	112.3	2	103.18	9	106.26	2	116.61	9
충남	114.57	6	117.78	3	123.36	6	114.79	4	138	4	111.12	14	105.16	4	102.38	17	115.82	13
전북	**114.24**	**9**	**117.15**	**11**	**123.47**	**5**	**113.94**	**9**	**134**	**15**	**111.04**	**15**	**101.51**	**16**	**104.08**	**13**	**115.95**	**12**
전남	115.03	2	117.84	2	123.35	7	114.77	5	135	12	111.9	7	102.52	12	104.18	11	116.64	7
경북	114.88	3	117.64	5	122.48	11	114.97	2	135	11	111.87	9	102.26	14	104.19	10	116.64	7
경남	114.25	8	117.33	8	122.31	13	114.6	6	136	8	111.23	12	103.19	8	103.75	15	115.59	15
제주	113.97	14	117.32	9	122.72	9	115.17	1	133	17	110.9	17	102.8	11	104.14	12	115.69	14

<표 2-15>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현황(2024년, 지출목적별 기준)

구분	2024년, 지출목적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2 주류 및 담배		03 의류 및 신발		04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6 보건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전국	114.18		122.87		104.56		114.34		114.5		114.82		104.34	
서울	113.5	17	123.31	4	105.14	3	114.37	8	111.2	17	115.05	8	104.1	12
부산	114.12	12	122.49	12	105.12	4	114.31	13	112.88	15	115.15	7	104.07	13
대구	114.2	10	122.82	7	104.08	13	114.45	6	112.69	16	114.2	13	104.68	5
인천	114.79	5	125.16	1	104.19	11	113.83	17	116.37	9	115.88	1	104.54	6
광주	114.57	6	123.35	3	105.32	2	114.05	16	115.22	11	114.48	10	105.11	1
대전	113.88	16	122.56	10	104.55	8	114.56	4	114.22	13	115.16	6	103.57	16
울산	113.97	14	122.67	8	105.09	5	114.37	8	115.83	10	113.81	14	104.84	4
세종	114	13	121.5	17	106.28	1	115.56	1	119.56	3	113.79	15	103.57	16
경기	114.13	11	122.64	9	104.78	6	114.34	12	114.95	12	114.69	9	104.35	10
강원	115.64	1	123.72	2	103.57	15	114.37	8	120.56	1	115.37	3	104.43	8
충북	114.83	4	122.46	13	103.66	14	114.37	8	118.08	5	115.78	2	105.06	2
충남	114.57	6	122.4	14	104.75	7	114.29	14	119.27	4	114.46	11	103.77	15
전북	**114.24**	**9**	**123.26**	**5**	**102.77**	**17**	**114.5**	**5**	**116.62**	**8**	**113.65**	**16**	**104.23**	**11**
전남	115.03	2	123.13	6	104.4	9	114.81	2	119.63	2	113.29	17	104.06	14
경북	114.88	3	122.56	10	104.13	12	114.61	3	117.88	6	115.34	4	104.53	7
경남	114.25	8	122.25	16	104.23	10	114.21	15	116.69	7	115.32	5	104.38	9
제주	113.97	14	122.34	15	103.11	16	114.43	7	113.11	14	114.3	12	104.86	3

구분	2024년, 지출목적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07 교통		08 통신		09 오락 및 문화		10 교육		11 음식 및 숙박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순위
전국	114.25		101.3		108.58		106.01		120.77		119.25	
서울	114.66	9	101.34	7	109.03	4	106.96	4	120.63	6	119.24	9
부산	115.66	5	101.36	5	108.8	8	106.78	5	120.77	5	118.11	15
대구	115.93	4	101.19	10	108.87	6	107.23	3	120.51	7	120.06	5
인천	114.24	10	101.23	9	107.73	16	104.3	12	120.29	11	120.72	2
광주	113.21	14	101.16	11	108.35	12	108.91	1	121.18	2	119.48	8
대전	116.18	3	101.53	1	108.86	7	103.58	15	120.4	9	118.32	13
울산	111.43	17	101.16	11	109.18	2	104.31	11	119.86	13	118.45	12
세종	113.34	13	101.39	3	107.9	15	105.91	8	117.78	17	118.29	14
경기	112.85	16	101.4	2	108.48	11	106.64	6	121.67	1	119.66	6
강원	118.51	1	101.25	8	108.56	9	104.74	9	121.17	3	120.66	3
충북	113.1	15	101.38	4	108.24	14	108.14	2	119.19	16	119.59	7
충남	114.94	7	101.13	13	108.49	10	101.97	16	119.96	12	117.08	17
전북	**113.56**	**12**	**100.95**	**17**	**108.93**	**5**	**104.44**	**10**	**120.36**	**10**	**117.46**	**16**
전남	114.1	11	101.09	15	109.91	1	106.21	7	119.79	14	120.16	4
경북	116.69	2	101.35	6	109.18	2	104.22	13	121.02	4	118.55	10
경남	115.3	6	101.13	13	107.4	17	104.06	14	120.41	8	118.48	11
제주	114.84	8	101.09	15	108.28	13	101.53	17	119.42	15	121.64	1

라. 문화여건

▮ **전라북도의 문화여건을 살펴보면 2023년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발표한 문화향수실태조사 통계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문학행사, 미술전시, 전통예술, 뮤지컬, 영화, 인기음악의 경우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람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행사에 대한 관람수는 타광역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관람객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문화향수는 높지만 질적인 관점에서의 문화향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24년 기준으로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시문화시설은 총 504개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8위에 해당하며 인구 천명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0.29개로 전국 5위에 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20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기반시설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됨**

○ 도서관 : 66개(6위), 인구 만명당 기준 0.38개로 전국 4위

○ 박물관 : 44개(9위), 인구 만명당 기준 0.25개로 전국 7위

○ 미술관 : 20개(5위), 인구 10만명당 기준 1.15개로 전국 4위

○ 생활문화센터 : 17개(4위), 인구 10만명당 기준 0.98개로 전국 4위

○ 문예회관 : 17개(8위), 인구 10만명당 기준 0.98개로 전국 4위

○ 문화의집 : 2개(11위), 인구 10만명당 기준 0.12개로 전국 9위

○ 문학관 : 7개(3위), 인구 10만명당 기준 0.40개로 전국 3위

▮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향수실태 및 문화관련 시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내 문화여건은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2-16> 2023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점, 위)

구분	문학행사				미술전시				해외음악				전통예술				연극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서울	2.13	6	5.47	12	2.08	8	5.77	7	2.63	3	6.13	5	1.58	10	5.67	10	1.75	6	5.87	7
부산	2.16	5	6.01	2	1.71	13	5.91	4	1.66	13	5.66	13	2.49	3	6.11	4	2.03	3	5.92	5
대구	2.08	9	5.59	10	2.22	6	5.76	9	1.26	16	6.04	7	-	-	-	-	1.73	8	5.28	14
인천	1.41	14	5.93	5	1.83	11	5.69	13	2.59	4	5.62	14	1.46	11	5.85	6	1.98	4	5.6	12
광주	1.7	13	5.24	13	1.75	12	5.35	14	1.52	15	5.5	15	1.26	12	5.7	9	1.06	16	5.09	15
대전	1	16	6	3	1.64	15	5.76	9	2.47	5	5.79	10	4.27	1	6.16	3	1.57	12	5.7	11
울산	1.75	12	6.46	1	2.1	7	5.93	3	2.32	7	6.2	3	2.17	4	5.72	8	1.03	17	6.44	1
세종	2.04	10	5.5	11	1.45	17	6.22	1	1.89	10	5.4	16	1.78	7	5.66	11	1.47	13	4.79	17
경기	1.85	11	5.71	7	2.42	4	5.74	11	1.76	11	6.03	8	1.2	13	5.75	7	1.8	5	5.71	10
강원	2.54	3	4.96	17	2.67	1	5.29	16	3.08	1	5.73	11	1.63	9	5.52	13	2.07	2	5.77	8
충북	1	16	6	3	1.67	14	6.05	2	1.14	17	6.15	4	1.18	15	5.65	12	1.62	10	5.98	4
충남	2.12	7	5.2	14	1.98	9	5.31	15	1.53	14	5.84	9	1.19	14	5.9	5	1.25	14	5.75	9
전북	**3.23**	**2**	**5.1**	**16**	**2.43**	**3**	**5.29**	**16**	**1.68**	**12**	**4.94**	**17**	**2.56**	**2**	**5.46**	**14**	**1.75**	**6**	**4.93**	**16**
전남	2.11	8	5.6	9	2.31	5	5.78	6	2.06	8	6.48	2	2.11	5	6.36	1	2.67	1	6.25	2
경북	1.41	14	5.14	15	1.59	16	5.8	5	1.95	9	5.72	12	1.18	15	4.81	15	1.59	11	5.5	13
경남	2.18	4	5.71	7	1.89	10	5.77	7	2.33	6	6.11	6	1.99	6	6.35	2	1.23	15	5.89	6
제주	5.91	1	5.87	6	2.65	2	5.71	12	2.8	2	6.87	1	1.69	8	4.63	16	1.73	8	6.06	3

구분	뮤지컬				무용				영화				인기음악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관람수	순위	만족도	만족도 순위
서울	1.81	6	5.99	13	10.26	1	5.7	9	3.22	12	5.72	14	1.41	15	6.03	14
부산	1.81	6	6.17	7	1.47	7	6.05	5	3.49	10	6	4	1.81	2	6.15	9
대구	1.65	9	6.01	12	4	2	5	13	4.03	6	5.8	11	1.64	7	6.5	2
인천	1.83	4	6.07	10	1.68	6	5.32	11	3.08	15	5.54	17	1.67	6	6.06	13
광주	1.78	8	5.65	15	-	-	-	-	3.19	13	5.88	9	1.39	16	6.29	5
대전	1.56	12	6.08	8	1	11	6.59	3	3.7	7	5.95	7	2	1	6.09	12
울산	1.38	15	6.24	5	1	11	6.68	2	3.19	13	6.09	1	1.21	17	6.51	1
세종	1.58	11	6.66	1	3	3	7	1	4.41	2	5.83	10	1.56	11	6.27	6
경기	1.42	13	6.03	11	1	11	6	7	3.5	9	5.73	13	1.47	14	5.96	16
강원	1.37	16	5.95	14	1.3	9	5.13	12	4.2	4	6.09	1	1.6	9	6.13	11
충북	1.83	4	6.18	6	1	11	6.27	4	4.4	3	5.68	15	1.56	11	6	15
충남	1.89	1	5.58	16	-	-	-	-	3.7	7	5.78	12	1.54	13	6.16	8
전북	**1.89**	**1**	**5.44**	**17**	**1.31**	**8**	**5.38**	**10**	**5.19**	**1**	**5.68**	**15**	**1.76**	**4**	**5.66**	**17**
전남	1.84	3	6.34	2	1.91	5	5.88	8	4.14	5	5.99	5	1.71	5	6.4	3
경북	1.63	10	6.25	4	1.28	10	2.65	14	3.49	10	5.96	6	1.59	10	6.21	7
경남	1.42	13	6.08	8	1.97	4	6.01	6	3	16	5.91	8	1.8	3	6.15	9
제주	1.19	17	6.330	3	-	-	-	-	2.51	17	6.01	3	1.62	8	6.36	4

<표 2-17> 전시관련 문화시설 현황

(단위 : 개, %, 위)

구분	전시관련 문화시설 현황			2024년 인구	인구 천명당 기준	
	문화시설수	비중	순위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수	순위
서울특별시	3,152	28.17%	1	9,331,828	0.337769	3
부산광역시	590	5.27%	5	3,266,598	0.180616	11
인천광역시	317	2.83%	13	2,363,629	0.134116	15
대구광역시	440	3.93%	10	3,021,010	0.145647	13
광주광역시	272	2.43%	14	1,408,422	0.193124	10
대전광역시	216	1.93%	15	1,439,157	0.150088	12
울산광역시	159	1.42%	16	1,098,049	0.144802	14
세종특별자치시	44	0.39%	17	390,685	0.112623	17
경기도	1822	16.29%	2	13,694,685	0.133044	16
충청북도	397	3.55%	11	1,591,177	0.249501	7
충청남도	472	4.22%	9	2,136,574	0.220914	8
전북특별자치도	**504**	**4.50%**	**8**	**1,738,690**	**0.289873**	**5**
전라남도	589	5.26%	7	1,788,819	0.329268	4
경상북도	642	5.74%	4	2,531,384	0.253616	6
경상남도	653	5.84%	3	3,228,380	0.2202269	9
강원특별자치도	590	5.27%	5	1,517,766	0.388729	2
제주특별자치도	329	2.94%	12	670,368	0.490775	1
전체	11,188	100.00%		51,217,221	0.218442	

<표 2-18> 전국 문화기반시설 현황(2024년)

구분	2024년 인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수	순위	인구만명 기준	순위	수	순위	인구만명 기준	순위	수	순위	인구10만명 기준	순위
서울특별시	9,331,828	210	2	0.225036	11	136	1	0.145738	10	49	2	0.525085	7
부산광역시	3,266,598	52	11	0.159187	17	33	11	0.101023	13	9	12	0.275516	13
인천광역시	2,363,629	46	12	0.194616	14	19	13	0.080385	17	4	15	0.169231	15
대구광역시	3,021,010	60	9	0.198609	13	31	12	0.102615	12	7	13	0.231711	14
광주광역시	1,408,422	30	13	0.213004	12	12	15	0.085202	16	14	7	0.99402	5
대전광역시	1,439,157	26	14	0.180661	16	15	14	0.104228	11	5	14	0.347426	11
울산광역시	1,098,049	21	16	0.191248	15	10	16	0.091071	15	1	16	0.091071	16
세종특별자치시	390,685	16	17	0.409537	3	6	17	0.153576	9	0	17	0	17
경기도	13,694,685	320	1	0.233667	10	129	2	0.094197	14	59	1	0.430824	10
강원특별자치도	1,517,766	65	7	0.428261	1	100	3	0.658863	2	20	5	1.317726	3
충청북도	1,591,177	55	10	0.345656	5	41	10	0.257671	6	12	8	0.754159	6
충청남도	2,136,574	62	8	0.290184	7	64	6	0.299545	4	10	10	0.468039	9
전북특별자치도	**1,738,690**	**66**	**6**	**0.379596**	**4**	**44**	**9**	**0.253064**	**7**	**20**	**5**	**1.150291**	**4**
전라남도	1,788,819	74	4	0.413681	2	64	6	0.357778	3	41	3	2.292015	2
경상북도	2,531,384	71	5	0.280479	8	74	5	0.29233	5	12	8	0.474049	8
경상남도	3,228,380	79	3	0.244705	9	77	4	0.23851	8	10	10	0.309753	12
제주특별자치도	670,368	22	15	0.328178	6	61	8	0.909948	1	21	4	3.132608	1
전체	51,217,221	1,275				916				294			

구분	2024년 인구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의집			
		수	순위	인구 10만명 기준	순위	수	순위	인구 10만명 기준	순위	수	순위	인구 10만명 기준	순위	수	순위	인구 10만명 기준	순위
서울특별시	9,331,828	21	2	0.225036	15	29	2	0.310764	16	5	3	0.05358	11	0	12	0	12
부산광역시	3,266,598	20	3	0.612258	7	12	9	0.367355	13	0	13	0	13	3	5	0.091839	6
인천광역시	2,363,629	12	9	0.507694	9	12	9	0.507694	10	0	13	0	13	0	12	0	12
대구광역시	3,021,010	11	11	0.364117	14	12	9	0.397218	12	0	13	0	13	1	8	0.033102	10
광주광역시	1,408,422	14	7	0.99402	3	9	13	0.639013	8	3	7	0.213004	3	0	12	0	12
대전광역시	1,439,157	2	16	0.13897	17	5	15	0.347426	15	3	7	0.208455	4	1	8	0.069485	8
울산광역시	1,098,049	7	13	0.637494	6	6	14	0.546424	9	0	13	0	13	0	12	0	12
세종특별자치시	390,685	2	16	0.511921	8	1	17	0.255961	17	0	13	0	13	0	12	0	12
경기도	13,694,685	26	1	0.189855	16	49	1	0.357803	14	6	1	0.043813	12	2	6	0.014604	11
강원특별자치도	1,517,766	17	4	1.120067	2	23	4	1.515385	1	3	7	0.197659	5	1	8	0.065886	9
충청북도	1,591,177	7	13	0.439926	11	12	9	0.754159	6	5	3	0.314233	2	0	12	0	12
충청남도	2,136,574	15	6	0.702059	5	18	7	0.84247	5	3	7	0.140412	7	11	1	0.514843	1
전북특별자치도	**1,738,690**	**17**	**4**	**0.977748**	**4**	**17**	**8**	**0.977748**	**4**	**2**	**11**	**0.115029**	**9**	**7**	**3**	**0.402602**	**3**
전라남도	1,788,819	7	13	0.39132	13	23	4	1.285765	2	1	12	0.055903	10	9	2	0.503125	2
경상북도	2,531,384	12	9	0.474049	10	27	3	1.06661	3	4	5	0.158016	6	2	6	0.079008	7
경상남도	3,228,380	14	7	0.433654	12	22	6	0.681456	7	4	5	0.123901	8	6	4	0.185852	4
제주특별자치도	670,368	10	12	1.491718	1	3	16	0.447515	11	6	1	0.895031	1	1	8	0.149172	5
전체	51,217,221	214				280				45				44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청년인구는 총 385,523명(남 205,366명, 여자 180,157명)으로 전체인구의 22.17%로 지난 2014년 27.24%에 대비하여 약 5.07%p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 청년인구는 509,776명, 전체인구 1,871,560명 대비 27.24%
- 2024년 : 청년인구 386,523명, 전체인구의 1,738,690명 대비 22.17%
- 2014년 대비 2024년 청년인구 비중이 약 5.07%p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14년에는 전주시 청년비중이 39.50%이었으나 2024년에는 44.12%로 그 비중이 약 5.62%p가 상승하였으며, 완주군 역시 동일기간 0.96%p가 상승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비중이 하락하였음

- 전주시 : 2014년 39.50% → 2024년 44.12%, 5.62%p 상승
- 군산시 : 2014년 15.60% → 2024년 14.56%, 1.04%p 하락
- 익산시 : 2014년 17.08% → 2024년 16.00%, 1.08%p 하락
- 정읍시 : 2014년 5.36% → 2024년 4.71%, 0.35%p 하락
- 남원시 : 2014년 3.77% → 2024년 3.33%, 0.46%p 하락
- 김제시 : 2014년 3.89% → 2024년 3.63%, 0.26%p 하락
- 완주군 : 2014년 4.64% → 2024년 5.62%, 0.98%p 상승
- 진안군 : 2014년 1.00% → 2024년 0.84%, 0.16%p 하락
- 무주군 : 2014년 1.00% → 2024년 0.85%, 0.15%p 하락
- 장수군 : 2014년 0.92% → 2024년 0.71%, 0.21%p 하락
- 임실군 : 2014년 1.22% → 2024년 0.91%, 0.31%p 하락
- 순창군 : 2014년 1.23% → 2024년 1.06%, 0.17%p 하락
- 고창군 : 2014년 2.42% → 2024년 1.86%, 0.56%p 하락
- 부안군 : 2014년 2.36% → 2024년 1.81%, 0.55%p 하락

<표 2-19>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별 청년인구 비교(2014년과 2024년)

(단위 : 명, %)

행정구역	2014년						2024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비율(%)
합 계	509,776	100.00%	268,048	100.00%	241,728	100.00%	385,523	100.00%	205,366	100.00%	180,157	100.00%
전주시	201,378	39.50%	102,686	38.31%	98,692	40.83%	170,097	44.12%	88,586	43.14%	81,511	45.24%
군산시	79,545	15.60%	42,570	15.88%	36,975	15.30%	56,117	14.56%	30,494	14.85%	25,623	14.22%
익산시	87,051	17.08%	46,151	17.22%	40,900	16.92%	61,666	16.00%	33,096	16.12%	28,570	15.86%
정읍시	27,324	5.36%	14,596	5,45%	12,728	5.27%	18,140	4.71%	9,971	4.86%	8,169	4.53%
남원시	19,216	3.77%	10,048	3.75%	9,168	3.79%	12,827	3.33%	6,869	3.34%	5,958	3.31%
김제시	19,831	3.89%	10,779	4.02%	9,052	3.74%	13,992	3.63%	7,643	3.72%	6,349	3.52%
완주군	23,654	4.64%	12,624	4.71%	11,030	4.56%	21,679	5.62%	11,610	5.65%	10,069	5.59%
진안군	5,107	1.00%	2,749	1.03%	2.358	0.98%	3,253	0.84%	1,743	0.85%	1,510	0.84%
무주군	5,113	1.00%	2,789	1.04%	2,324	0.96%	3,283	0.85%	1,816	0.88%	1,467	0.81%
장수군	4,675	0.92%	2,570	0.96%	2,105	0.87%	2,745	0.71%	1,512	0.74%	1,233	0.68%
임실군	6,208	1.22%	3,595	1.34%	2,613	1.08%	3,494	0.91%	1,963	0.96%	1,531	0.85%
순창군	6,274	1,23%	3,363	1.25%	2,911	1.20%	4,071	1.06%	2,165	1.05%	1,906	1.06%
고창군	12,362	2.42%	6,852	2.56%	5,510	2.28%	7,176	1.86%	3,982	1.94%	3,194	1.77%
부안군	12,038	2.36%	6,676	2.49%	5,362	2.22%	6,983	1.81%	3,916	1.91%	3,067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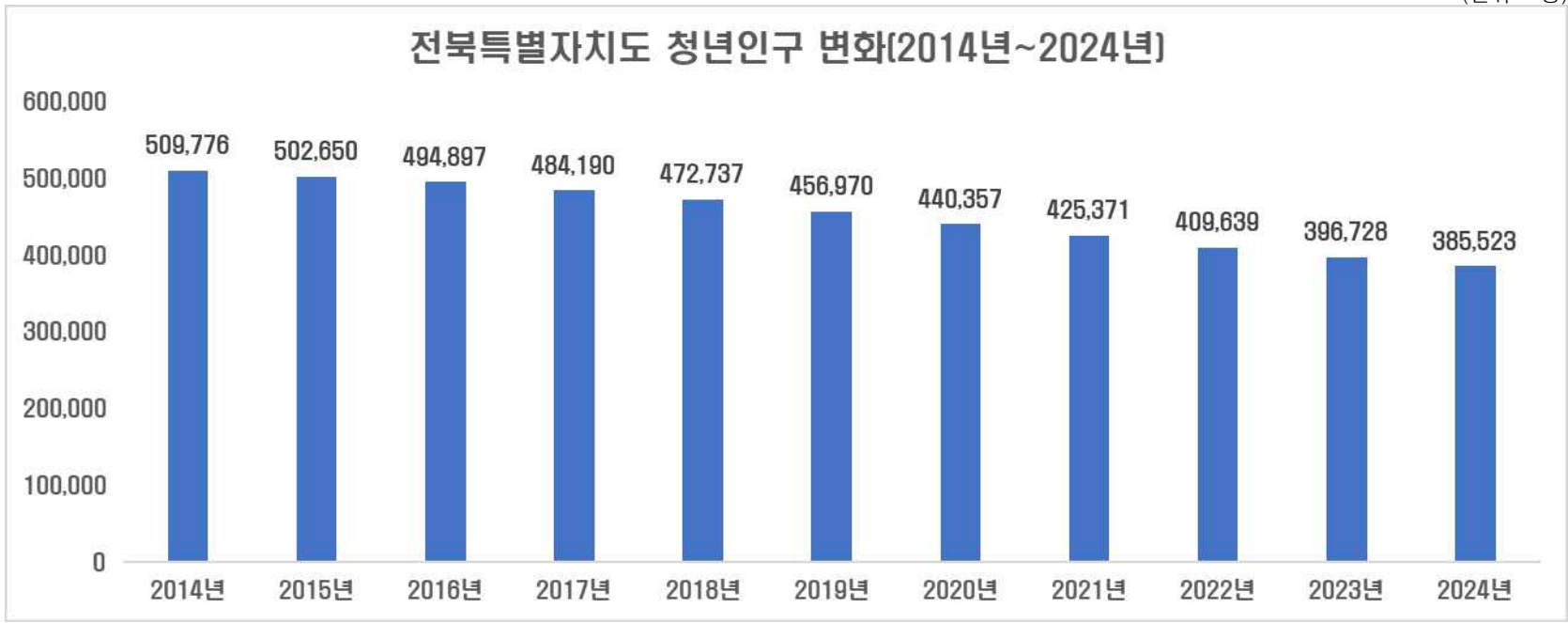
자료원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2014년, 2024년)에 기초하여 재산출함

<표 2-20>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청년인구(2014년~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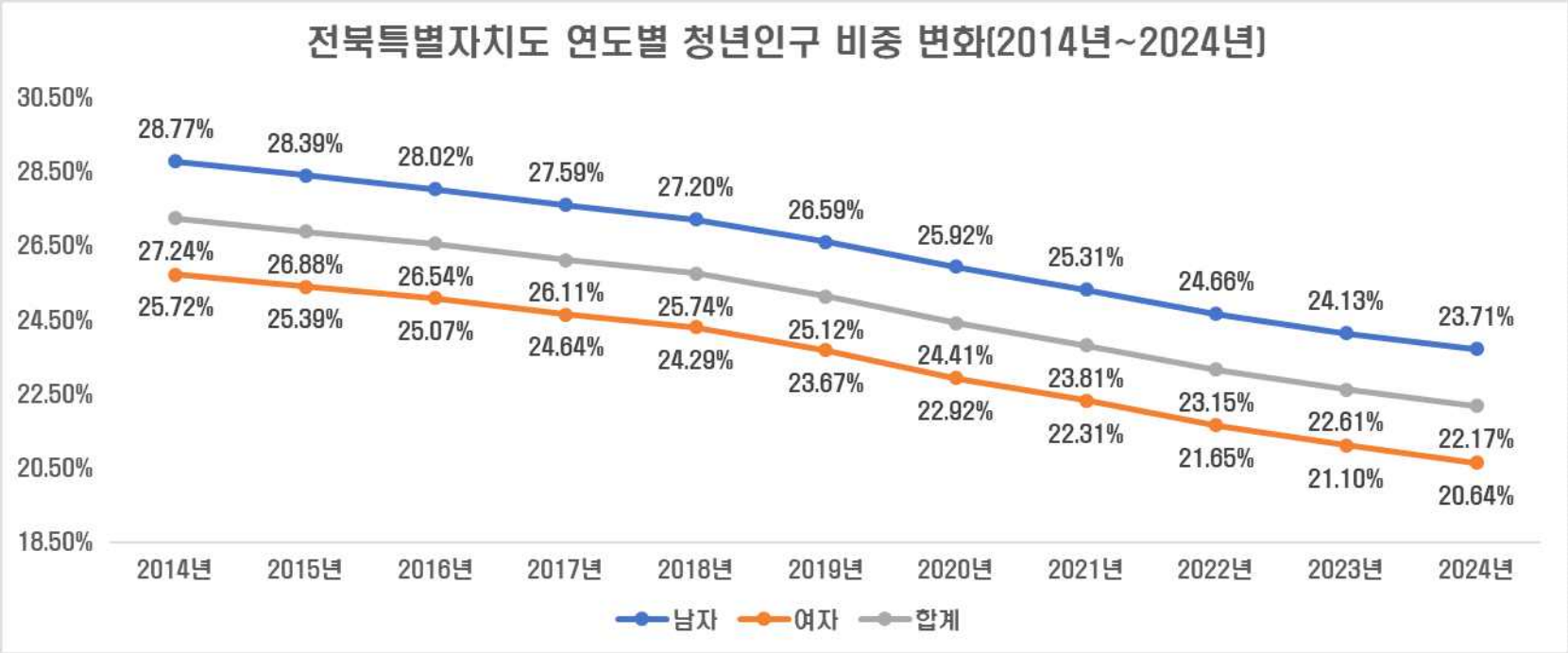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자	931,536	930,255	927,505	922,307	913,297	904,110	896,874	888,994	880,592	873,419	866,030
여자	940,024	939,456	937,286	932,300	923,535	914,807	907,230	897,861	889,015	881,338	872,660
합계	1,871,560	1,869,711	1,864,791	1,854,607	1,836,832	1,818,917	1,804,104	1,786,855	1,769,607	1,754,757	1,738,690
청년인구(남자)	268,048	264,090	259,909	254,460	248,415	240,402	232,454	225,042	217,160	210,768	205,366
청년인구(여자)	241,728	238,560	234,988	229,730	224,322	216,568	207,903	200,329	192,479	185,960	180,157
청년인구(합계)	509,776	502,650	494,897	484,190	472,737	456,970	440,357	425,371	409,639	396,728	385,523
남자	28.77%	28.39%	28.02%	27.59%	27.20%	26.59%	25.92%	25.31%	24.66%	24.13%	23.71%
여자	25.72%	25.39%	25.07%	24.64%	24.29%	23.67%	22.92%	22.31%	21.65%	21.10%	20.64%
합계	27.24%	26.88%	26.54%	26.11%	25.74%	25.12%	24.41%	23.81%	23.15%	22.61%	22.17%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청년인구 변화(2014년~2024년)

(단위 : 명)



<그림 2-6> 전북특별자치도 연도별 청년인구 비중 변화(2014년~2024년)



<표 2-21>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기초지자체별 인구 및 청년인구 현황(2014년~2024년)

(단위 :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주	남자	321,874	321,515	321,048	319,442	320,576	322,236	323,542	323,427	320,265	315,709	312,053
	여자	331,003	330,767	330,696	329,522	330,515	332,158	333,890	333,842	331,230	327,018	323,598
	합계	652,877	652,282	651,744	648,964	651,091	654,394	657,432	657,269	651,495	642,727	635,651
	청년인구 (남자)	102,686	102,059	101,173	99,807	99,932	99,550	98,510	97,377	94,469	91,135	88,586
	청년인구 (여자)	98,692	97,610	96,692	94,839	94,747	93,668	92,612	91,093	87,866	84,330	81,511
	청년인구 (합계)	201,378	199,669	197,865	194,646	194,679	193,218	191,122	188,470	182,335	175,465	170,097
	청년비중 (남자)	31.90%	31.74%	31.51%	31.24%	31.17%	30.89%	30.45%	30.11%	29.50%	28.87%	28.39%
	청년비중 (여자)	29.82%	29.51%	29.24%	28.78%	28.67%	28.20%	27.74%	27.29%	26.53%	25.79%	25.19%
	청년비중 (합계)	30.84%	30.61%	30.36%	29.99%	29.90%	29.53%	29.07%	28.67%	27.99%	27.30%	26.76%
군산	남자	141,252	141,328	140,793	139,246	137,897	136,421	135,332	134,290	132,887	131,719	130,936
	여자	136,846	137,070	136,758	135,751	134,748	133,710	132,527	131,014	129,580	128,261	127,111
	합계	278,098	278,398	277,551	274,997	272,645	270,131	267,859	265,304	262,467	259,980	258,047
	청년인구 (남자)	42,570	41,783	40,947	39,308	38,160	36,730	35,432	34,074	32,470	31,191	30,494
	청년인구 (여자)	36,975	36,356	35,753	34,560	33,637	32,448	30,901	29,417	27,779	26,544	25,623
	청년인구	79,545	78,139	76,700	73,868	71,797	69,178	66,333	63,491	60,249	57,735	56,117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익산	(합계)											
	청년비중(남자)	30.14%	29.56%	29.08%	28.23%	27.67%	26.92%	26.18%	25.37%	24.43%	23.68%	23.29%
	청년비중(여자)	27.02%	26.52%	26.14%	25.46%	24.96%	24.27%	23.32%	22.45%	21.44%	20.70%	20.16%
	청년비중(합계)	28.60%	28.07%	27.63%	26.86%	26.33%	25.61%	24.76%	23.93%	22.95%	22.21%	21.75%
	남자	151,864	150,621	149,740	149,587	146,494	143,392	140,573	138,427	136,330	134,381	133,433
	여자	152,253	151,440	150,739	150,600	147,568	144,379	141,703	139,686	137,367	135,655	134,568
	합계	304,117	302,061	300,479	300,187	294,062	287,771	282,276	278,113	273,697	270,036	268,001
	청년인구(남자)	46,151	44,933	43,963	43,987	42,231	40,181	38,010	36,464	35,001	33,913	33,096
	청년인구(여자)	40,900	40,208	39,302	38,997	37,309	35,334	33,225	32,058	30,651	29,411	28,570
	청년인구(합계)	87,051	85,141	83,265	82,984	79,540	75,515	71,235	68,522	65,652	63,324	61,666
	청년비중(남자)	30.39%	29.83%	29.36%	29.41%	28.83%	28.02%	27.04%	26.34%	25.67%	25.24%	24.80%
	청년비중(여자)	26.86%	26.55%	26.07%	25.89%	25.28%	24.47%	23.45%	22.95%	22.31%	21.68%	21.23%
	청년비중(합계)	28.62%	28.19%	27.71%	27.64%	27.05%	26.24%	25.24%	24.64%	23.99%	23.45%	23.01%
정읍	남자	57,922	57,335	57,008	56,365	55,529	54,736	53,791	52,892	52,272	51,624	50,997
	여자	59,261	58,642	58,165	57,411	56,640	55,805	54,717	53,595	52,809	51,996	51,130
	합계	117,183	115,977	115,173	113,776	112,169	110,541	108,508	106,487	105,081	103,620	102,127
	청년인구(남자)	14,596	14,049	13,880	13,362	12,898	12,328	11,822	11,309	10,831	10,285	9,97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인구 (여자)	12,728	12,270	12,083	11,666	11,237	10,600	9,981	9,409	8,968	8,596	8,169
	청년인구 (합계)	27,324	26,319	25,963	25,028	24,135	22,928	21,803	20,718	19,799	18,881	18,140
	청년비중 (남자)	25.20%	24.50%	24.35%	23.71%	23.23%	22.52%	21.98%	21.38%	20.72%	19.92%	19.55%
	청년비중 (여자)	21.48%	20.92%	20.77%	20.32%	19.84%	18.99%	18.24%	17.56%	16.98%	16.53%	15.98%
	청년비중 (합계)	23.32%	22.69%	22.54%	22.00%	21.52%	20.74%	20.09%	19.46%	18.84%	18.22%	17.76%
남원	남자	42,034	41,634	41,341	40,868	40,508	39,884	39,560	38,965	38,246	37,674	37,120
	여자	43,609	43,222	42,847	42,413	42,046	41,557	41,102	40,466	39,702	39,107	38,527
	합계	85,643	84,856	84,188	83,281	82,554	81,441	80,662	79,431	77,948	76,781	75,647
	청년인구 (남자)	10,048	9,778	9,597	9,349	9,112	8,680	8,407	7,984	7,529	7,167	6,869
	청년인구 (여자)	9,168	8,854	8,558	8,252	8,089	7,754	7,325	6,912	6,509	6,166	5,958
	청년인구 (합계)	19,216	18,632	18,155	17,601	17,201	16,434	15,732	14,896	14,038	13,333	12,827
	청년비중 (남자)	23.90%	23.49%	23.21%	22.88%	22.49%	21.76%	21.25%	20.49%	19.69%	19.02%	18.50%
	청년비중 (여자)	21.02%	20.48%	19.97%	19.46%	19.24%	18.66%	17.82%	17.08%	16.39%	15.77%	15.46%
	청년비중 (합계)	22.44%	21.96%	21.56%	21.13%	20.84%	20.18%	19.50%	18.75%	18.01%	17.36%	16.96%
김제	남자	44,657	43,957	43,527	43,110	42,357	41,624	40,844	40,193	40,476	40,631	40,360
	여자	45,451	44,764	44,255	43,816	42,974	42,271	41,606	40,720	40,979	40,799	40,275
	합계	90,108	88,721	87,782	86,926	85,331	83,895	82,450	80,913	81,455	81,430	80,635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인구(남자)	10,779	10,330	9,986	9,587	9,248	8,795	8,293	7,837	7,803	7,843	7,643
	청년인구(여자)	9,052	8,633	8,325	8,080	7,802	7,408	6,979	6,613	6,690	6,572	6,349
	청년인구(합계)	19,831	18,963	18,311	17,667	17,050	16,203	15,272	14,450	14,493	14,415	13,992
	청년비중(남자)	24.14%	23.50%	22.94%	22.24%	21.83%	21.13%	20.30%	19.50%	19.28%	19.30%	18.94%
	청년비중(여자)	19.92%	19.29%	18.81%	18.44%	18.16%	17.53%	16.77%	16.24%	16.33%	16.11%	15.76%
	청년비중(합계)	22.01%	21.37%	20.86%	20.32%	19.98%	19.31%	18.52%	17.86%	17.79%	17.70%	17.35%
완주	남자	46,425	48,889	48,950	49,282	48,457	47,290	47,077	46,845	47,529	50,192	50,965
	여자	43,952	46,414	46,530	46,693	45,987	44,930	44,532	44,297	44,893	47,635	48,314
	합계	90,377	95,303	95,480	95,975	94,444	92,220	91,609	91,142	92,422	97,827	99,279
	청년인구(남자)	12,624	13,327	13,035	12,728	12,122	11,197	10,738	10,314	10,461	11,433	11,610
	청년인구(여자)	11,030	11,736	11,493	11,225	10,683	9,935	9,319	8,804	8,936	9,832	10,069
	청년인구(합계)	23,654	25,063	24,528	23,953	22,805	21,132	20,057	19,118	19,397	21,265	21,679
	청년비중(남자)	27.19%	27.26%	26.63%	25.83%	25.02%	23.68%	22.81%	22.02%	22.01%	22.78%	22.78%
	청년비중(여자)	25.10%	25.29%	24.70%	24.04%	23.23%	22.11%	20.93%	19.87%	19.91%	20.64%	20.84%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청년비중(합계)	26.17%	26.30%	25.69%	24.96%	24.15%	22.91%	21.89%	20.98%	20.99%	21.74%	21.84%
진안	남자	13,286	13,116	13,037	13,149	13,030	12,966	12,832	12,667	12,496	12,497	12,352
	여자	13,188	13,087	13,032	13,122	12,933	12,731	12,562	12,320	12,054	11,968	11,809
	합계	26,474	26,203	26,069	26,271	25,963	25,697	25,394	24,987	24,550	24,465	24,161
	청년인구(남자)	2,749	2,588	2,494	2,450	2,365	2,288	2,138	1,970	1,851	1,801	1,743
	청년인구(여자)	2,358	2,294	2,249	2,217	2,136	2,026	1,865	1,711	1,578	1,548	1,510
	청년인구(합계)	5,107	4,882	4,743	4,667	4,501	4,314	4,003	3,681	3,429	3,349	3,253
	청년비중(남자)	20.69%	19.73%	19.13%	18.63%	18.15%	17.65%	16.66%	15.55%	14.81%	14.41%	14.11%
	청년비중(여자)	17.88%	17.53%	17.26%	16.90%	16.52%	15.91%	14.85%	13.89%	13.09%	12.93%	12.79%
	청년비중(합계)	19.29%	18.63%	18.19%	17.76%	17.34%	16.79%	15.76%	14.73%	13.97%	13.69%	13.46%
무주	남자	12,580	12,484	12,371	12,294	12,209	12,090	11,959	11,826	11,731	11,629	11,572
	여자	12,810	12,736	12,578	12,515	12,380	12,213	12,077	11,922	11,758	11,622	11,460
	합계	25,390	25,220	24,949	24,809	24,589	24,303	24,036	23,748	23,489	23,251	23,032
	청년인구(남자)	2,789	2,658	2,534	2,440	2,362	2,276	2,131	2,018	1,894	1,806	1,816
	청년인구(여자)	2,324	2,251	2,124	2,034	1,982	1,885	1,750	1,644	1,547	1,514	1,467
	청년인구(합계)	5,113	4,909	4,658	4,474	4,344	4,161	3,881	3,662	3,441	3,320	3,283
	청년비중	22.17%	21.29%	20.48%	19.85%	19.35%	18.83%	17.82%	17.06%	16.15%	15.53%	15.69%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남자)											
	청년비중 (여자)	18.14%	17.67%	16.89%	16.25%	16.01%	15.43%	14.49%	13.79%	13.16%	13.03%	12.80%
	청년비중 (합계)	20.14%	19.46%	18.67%	18.03%	17.67%	17.12%	16.15%	15.42%	14.65%	14.28%	14.25%
장수	남자	11,558	11,521	11,681	11,410	11,533	11,165	11,000	10,812	10,718	10,535	10,372
	여자	11,777	11,756	11,947	11,593	11,688	11,276	11,085	10,883	10,618	10,448	10,291
	합계	23,335	23,277	23,628	23,003	23,221	22,441	22,085	21,695	21,336	20,983	20,663
	청년인구 (남자)	2,570	2,480	2,541	2,326	2,374	2,088	1,937	1,756	1,704	1,572	1,512
	청년인구 (여자)	2,105	2,069	2,117	1,921	1,945	1,802	1,638	1,515	1,384	1,301	1,233
	청년인구 (합계)	4,675	4,549	4,658	4,247	4,319	3,890	3,575	3,271	3,088	2,873	2,745
	청년비중 (남자)	22.24%	21.53%	21.75%	20.39%	20.58%	18.70%	17.61%	16.24%	15.90%	14.92%	14.58%
	청년비중 (여자)	17.87%	17.60%	17.72%	16.57%	16.64%	15.98%	14.78%	13.92%	13.03%	12.45%	11.98%
	청년비중 (합계)	20.03%	19.54%	19.71%	18.46%	18.60%	17.33%	16.19%	15.08%	14.47%	13.69%	13.28%
임실	남자	15,197	15,368	15,387	15,391	15,288	14,659	13,966	13,692	13,586	13,354	13,202
	여자	14,769	14,903	14,810	14,771	14,784	14,243	13,348	13,038	12,922	12,602	12,375
	합계	29,966	30,271	30,197	30,162	30,072	28,902	27,314	26,730	26,508	25,956	25,577
	청년인구 (남자)	3,595	3,571	3,536	3,383	3,303	2,923	2,514	2,317	2,178	2,072	1,963
	청년인구 (여자)	2,613	2,655	2,599	2,585	2,561	2,333	1,911	1,732	1,698	1,600	1,531
	청년인구	6,208	6,226	6,135	5,968	5,864	5,256	4,425	4,049	3,876	3,672	3,494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청년비중 (남자)	23.66%	23.24%	22.98%	21.98%	21.61%	19.94%	18.00%	16.92%	16.03%	15.52%	14.87%
	청년비중 (여자)	17.69%	17.82%	17.55%	17.50%	17.32%	16.38%	14.32%	13.28%	13.14%	12.70%	12.37%
	청년비중 (합계)	20.72%	20.57%	20.32%	19.79%	19.50%	18.19%	16.20%	15.15%	14.62%	14.15%	13.66%
순창	남자	14,739	14,679	14,427	14,349	14,156	13,756	13,520	13,189	13,138	13,161	13,217
	여자	15,629	15,569	15,522	15,349	15,053	14,626	14,290	13,666	13,589	13,603	13,605
	합계	30,368	30,248	29,949	29,698	29,209	28,382	27,810	26,855	26,727	26,764	26,822
	청년인구 (남자)	3,363	3,288	3,005	2,875	2,745	2,544	2,364	2,198	2,159	2,175	2,165
	청년인구 (여자)	2,911	2,896	2,871	2,766	2,659	2,444	2,192	1,919	1,837	1,902	1,906
	청년인구 (합계)	6,274	6,184	5,876	5,641	5,404	4,988	4,556	4,117	3,996	4,077	4,071
	청년비중 (남자)	22.82%	22.40%	20.83%	20.04%	19.39%	18.49%	17.49%	16.67%	16.43%	16.53%	16.38%
	청년비중 (여자)	18.63%	18.60%	18.50%	18.02%	17.66%	16.71%	15.34%	14.04%	13.52%	13.98%	14.01%
	청년비중 (합계)	20.66%	20.44%	19.62%	18.99%	18.50%	17.57%	16.38%	15.33%	14.95%	15.23%	15.18%
고창	남자	29,658	29,672	29,927	29,934	28,215	27,418	26,964	26,507	26,005	25,817	25,441
	여자	30,432	30,374	30,670	30,538	28,826	28,086	27,565	26,879	26,333	25,933	25,541
	합계	60,090	60,046	60,597	60,472	57,041	55,504	54,529	53,386	52,338	51,750	50,982
	청년인구	6,852	6,787	6,834	6,746	5,860	5,414	5,077	4,752	4,398	4,221	3,982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안	(남자)											
	청년인구 (여자)	5,510	5,488	5,550	5,473	4,756	4,455	4,113	3,737	3,509	3,326	3,194
	청년인구 (합계)	12,362	12,275	12,384	12,219	10,616	9,869	9,190	8,489	7,907	7,547	7,176
	청년비중 (남자)	23.10%	22.87%	22.84%	22.54%	20.77%	19.75%	18.83%	17.93%	16.91%	16.35%	15.65%
	청년비중 (여자)	18.11%	18.07%	18.10%	17.92%	16.50%	15.86%	14.92%	13.90%	13.33%	12.83%	12.51%
	청년비중 (합계)	20.57%	20.44%	20.44%	20.21%	18.61%	17.78%	16.85%	15.90%	15.11%	14.58%	14.08%
	남자	28,490	28,136	28,268	27,880	27,048	26,473	25,914	25,262	24,913	24,496	24,010
	여자	29,044	28,712	28,737	28,206	27,393	26,822	26,226	25,533	25,181	24,691	24,056
	합계	57,534	56,848	57,005	56,086	54,441	53,295	52,140	50,795	50,094	49,187	48,066
	청년인구 (남자)	6,676	6,459	6,384	6,112	5,703	5,408	5,081	4,672	4,412	4,154	3,916
	청년인구 (여자)	5,362	5,240	5,272	5,115	4,779	4,476	4,092	3,765	3,527	3,318	3,067
	청년인구 (합계)	12,038	11,699	11,656	11,227	10,482	9,884	9,173	8,437	7,939	7,472	6,983
	청년비중 (남자)	23.43%	22.96%	22.58%	21.92%	21.08%	20.43%	19.61%	18.49%	17.71%	16.96%	16.31%
	청년비중 (여자)	18.46%	18.25%	18.35%	18.13%	17.45%	16.69%	15.60%	14.75%	14.01%	13.44%	12.75%
	청년비중 (합계)	20.92%	20.58%	20.45%	20.02%	19.25%	18.55%	17.59%	16.61%	15.85%	15.19%	14.53%

제3절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이동

1. 청년인구의 유출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18세~39세)의 사회적 이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1년~2023년까지의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순이동(총전입-총전출)기준 2001년 -11,365명에서 2023년 -7,741명으로 연평균 -11,449명으로 분석되었음**

○ 전체연령층 기준으로 2001년 순이동은 -1,911명, 2023년 -4,457명이지만, 청년층 인구의 순이동은 동일기간 -11,365명과 -7,741명으로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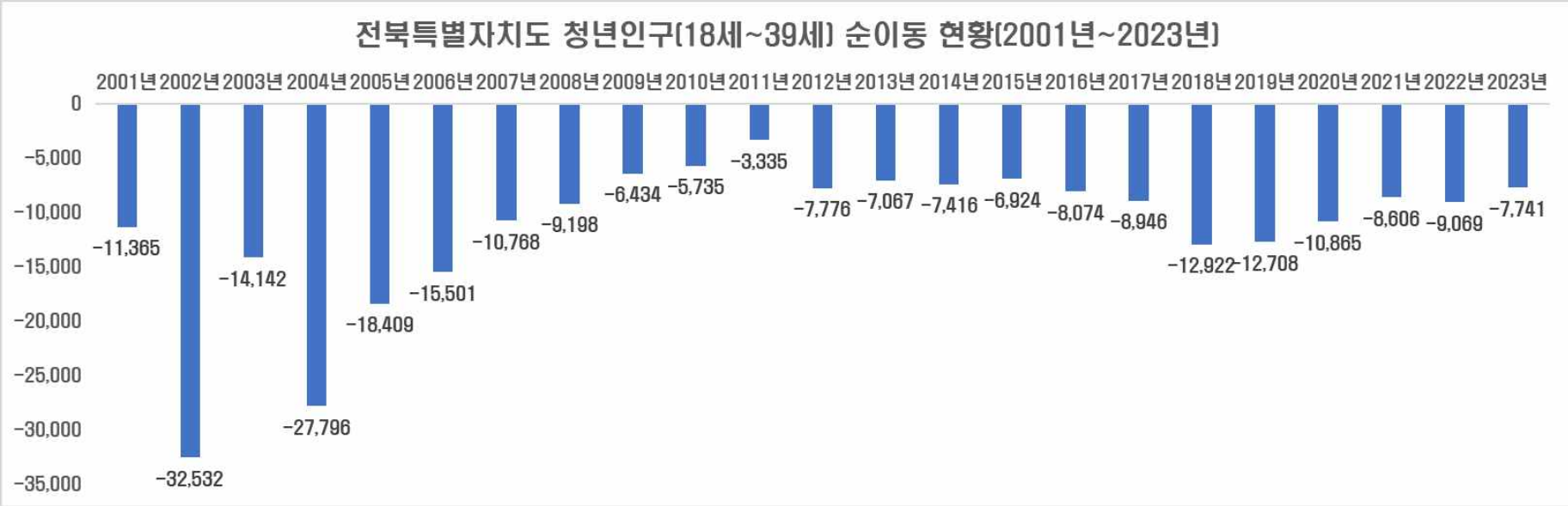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입된 청년인구를 제외하고 전출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2001년 기준 60,958명에서 2023년 33,723명으로 연평균 46,401명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는 것으로 분석됨**

<표 2-2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순이동과 전출 현황(2001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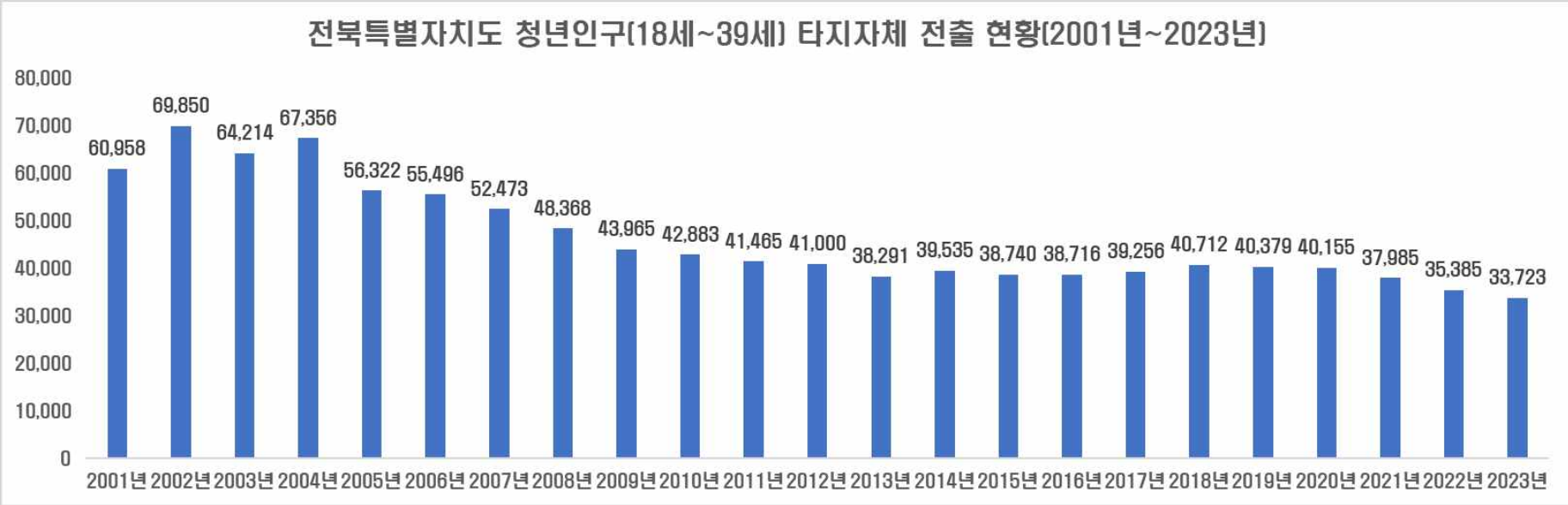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순이동인원	-11,365	-32,532	-14,142	-27,796	-18,409	-15,501	-10,768	-9,198	-6,434
전출인원	60,958	69,850	64,214	67,356	56,322	55,496	52,473	48,368	43,965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순이동인원	-5,735	-3,335	-7,776	-7,067	-7,416	-6,924	-8,074	-8,946	-12,922
전출인원	42,883	41,465	41,000	38,291	39,535	38,740	38,716	39,256	40,712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2001년 ~ 2023년) 평균		최근 10년(2014년 ~2023년 평균	
순이동인원	-12,708	-10,865	-8,606	-9,069	-7,741	-11.449		-3,327	
전출인원	40,379	40,155	37,985	35,385	33,723	46,401		38,459	

<그림 2-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순이동 현황(2001년~2023년)



<그림 2-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전출인원 현황(2001년~2023년)



2. 청년인구의 유출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유출지역을 살펴보면 연평균(2001년~2023년 기준) 기준 경기도로의 전출인원이 22,6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특별시로의 전출인원은 20,404명으로 분석됨**

○ 1순위 : 전북→경기, 연평균 22,650명(최근 10년 기준 17,083명)

○ 2순위 : 전북→서울, 연평균 20,404명(최근 10년 기준 14,497명)

○ 3순위 : 전북→충남, 연평균 6,621명(최근 10년 기준 6,087명)

○ 4순위 : 전북→광주, 연평균 6,464명(최근 10년 기준 5,674명)

○ 5순위 : 전북→전남, 연평균 5,932명(최근 10년 기준 5,27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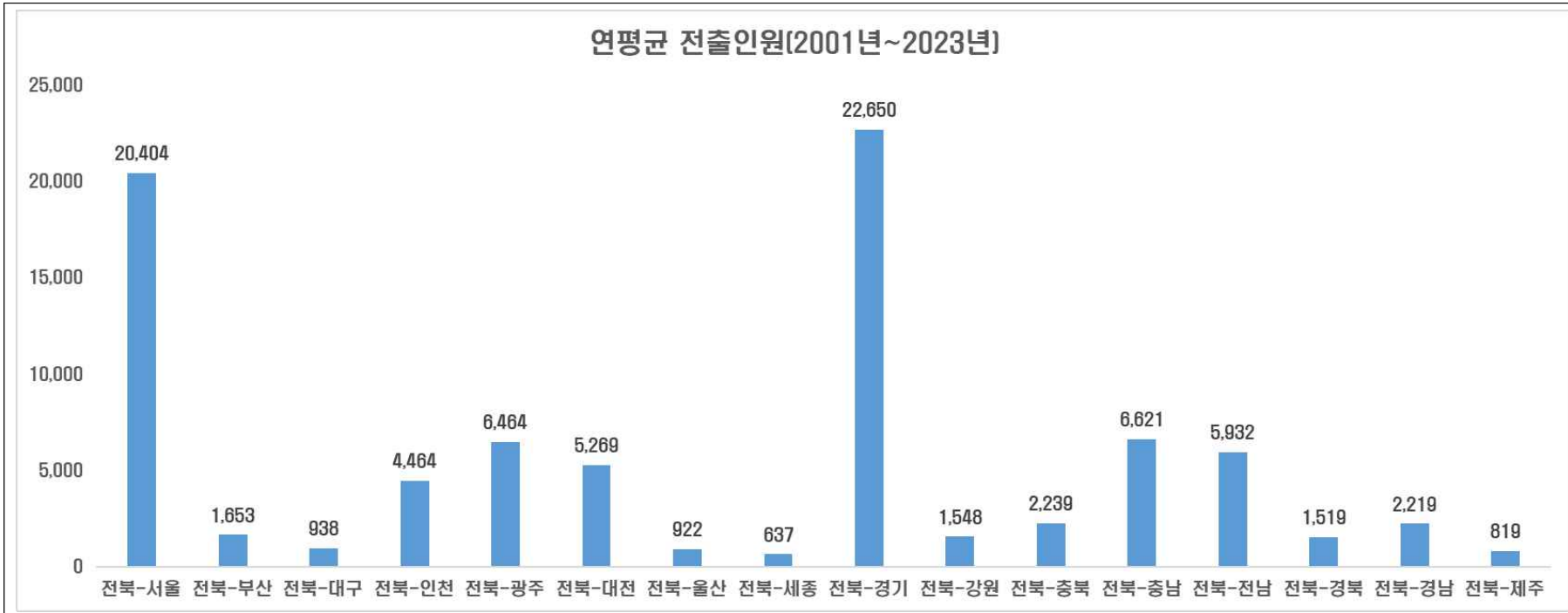
○ 6순위 : 전북→대전, 연평균 5,269명(최근 10년 기준 4,40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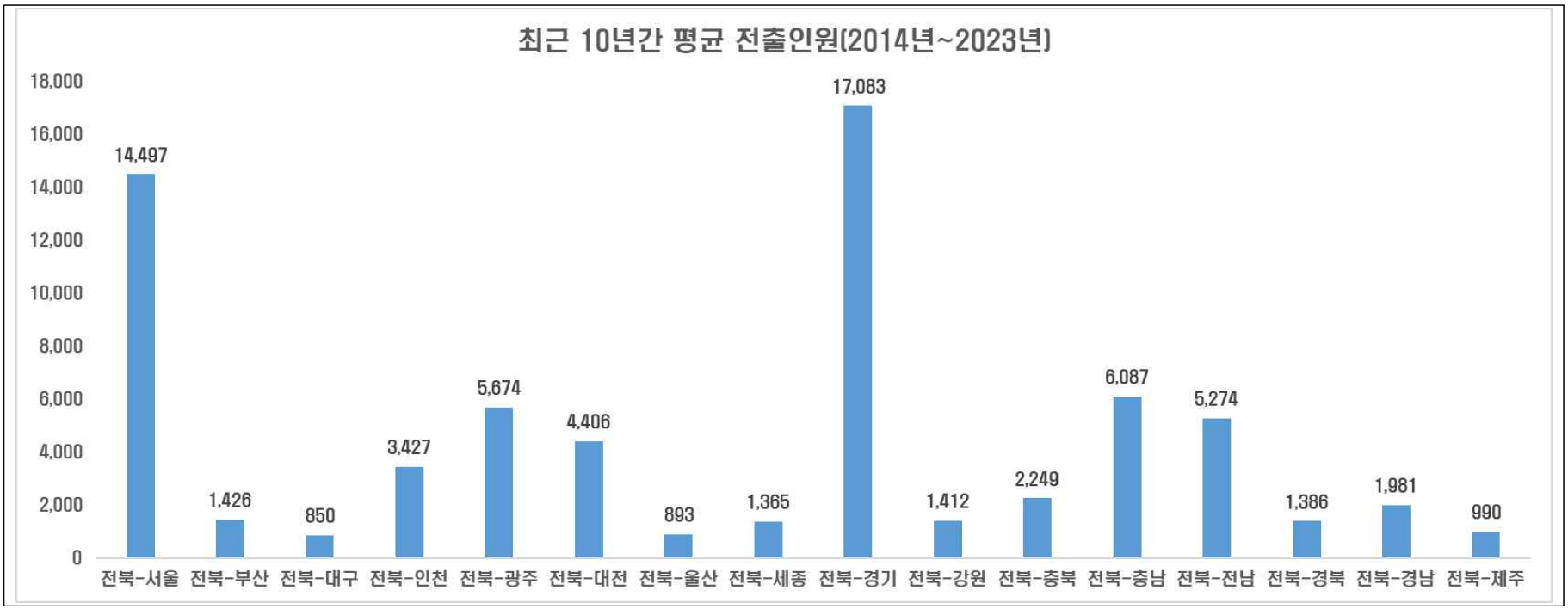
<표 2-2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유출지역

(단위 : 명)

구분		평균 (2001년~2023년)	최근 10년 평균 (2014년~2023년)	구분		평균 (2001년~2023년)	최근 10년 평균 (2014년~2023년)
전북-서울	남자	9,969	7,044	전북-경기	남자	11,563	9,106
	여자	10,435	7,453		여자	11,088	7,976
	합계	20,404	14,497		합계	22,650	17,083
전북-부산	남자	835	746	전북-강원	남자	852	796
	여자	818	680		여자	696	616
	합계	1,653	1,426		합계	1,548	1,412
전북-대구	남자	476	453	전북-충북	남자	1,174	1,236
	여자	462	397		여자	1,065	1,013
	합계	938	850		합계	2,239	2,249
전북-인천	남자	2,307	1,816	전북-충남	남자	3,424	3,327
	여자	2,157	1,612		여자	3,197	2,760
	합계	4,464	3,427		합계	6,621	6,087
전북-광주	남자	3,232	2,916	전북-전남	남자	3,093	2,903
	여자	3,232	2,758		여자	2,838	2,371
	합계	6,464	5,674		합계	5,932	5,274
전북-대전	남자	2,600	2,218	전북-경북	남자	803	774
	여자	2,669	2,188		여자	716	613
	합계	5,269	4,406		합계	1,519	1,386
전북-울산	남자	511	520	전북-경남	남자	1,173	1,097
	여자	411	373		여자	1,046	884
	합계	922	893		합계	2,219	1,981
전북-세종	남자	614	685	전북-제주	남자	440	527
	여자	607	680		여자	379	463
	합계	637	1,365		합계	819	990

<표 2-2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전출지역별 현황




최근 10년간 평균 전출인원(2014년~2023년)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14,497
1,426
850
3,427
5,674
4,406
893
1,365
17,083
1,412
2,249
6,087
5,274
1,386
1,981
990
전북-서울
전북-부산
전북-대구
전북-인천
전북-광주
전북-대전
전북-울산
전북-세종
전북-경기
전북-강원
전북-충북
전북-충남
전북-전남
전북-경북
전북-경남
전북-제주

<표 2-2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18세~39세) 타광역지자체 순이동(총전입-총전출) 현황

각세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전체 인구기준	-1,911	-56,735	-3,039	-50,969	-24,477	-19,162	-10,874	-10,550	-4,806	-2,448	1,721	-3,291	-2,197
18세	-350	-1,240	-367	-1,065	-666	-482	-399	-526	-386	-395	-236	-463	-408
19세	-89	-1,545	-184	-990	-457	-391	-381	-270	-237	-120	217	-273	-55
20세	-335	-1,694	-379	-1,304	-602	-575	-319	-444	-263	-280	85	-357	-89
21세	-576	-2,403	-641	-1,655	-862	-756	-603	-549	-531	-461	-196	-506	-395
22세	-1,276	-2,853	-1,530	-2,385	-1,785	-1,515	-1,129	-978	-786	-809	-497	-910	-696
23세	-1,662	-2,826	-1,933	-2,374	-2,121	-1,875	-1,368	-1,066	-933	-834	-555	-914	-928
24세	-1,540	-2,668	-1,830	-2,375	-1,841	-1,864	-1,224	-1,052	-747	-760	-742	-928	-807
25세	-1,766	-2,616	-1,997	-2,176	-1,968	-1,751	-1,332	-1,085	-869	-833	-668	-996	-985
26세	-1,785	-2,525	-1,838	-2,146	-1,877	-1,637	-1,217	-1,087	-843	-883	-690	-979	-847
27세	-1,352	-2,194	-1,570	-1,792	-1,442	-1,227	-980	-1,016	-655	-744	-528	-693	-706
28세	-828	-1,691	-1,077	-1,498	-1,111	-1,033	-575	-551	-449	-474	-478	-566	-550
29세	-472	-1,327	-701	-1,224	-644	-597	-435	-278	-194	-220	-215	-405	-423
30세	-235	-1,152	-483	-981	-587	-417	-292	-127	-160	-134	-157	-277	-308
31세	-122	-934	-199	-845	-472	-460	-134	-60	-104	-8	52	-203	-247
32세	71	-879	-34	-825	-431	-231	-255	-126	9	58	49	-101	-102
33세	84	-770	22	-724	-246	-167	-24	-117	24	67	101	48	-67
34세	109	-612	157	-679	-227	-183	61	-126	114	128	170	125	37
35세	149	-604	64	-629	-208	-162	-73	-16	81	159	213	58	69
36세	205	-563	153	-604	-196	-26	5	21	124	113	205	123	31
37세	141	-495	178	-524	-256	-90	-83	139	102	221	131	139	76
38세	119	-470	57	-521	-253	-55	-19	22	99	306	188	142	133
39세	145	-471	-10	-480	-157	-7	8	94	170	168	216	160	200
합계(18세~39세)	-11,365	-32,532	-14,142	-27,796	-18,409	-15,501	-10,768	-9,198	-6,434	-5,735	-3,335	-7,776	-7,067

각세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2001년~2023년)	최근 10년 평균(2014년~2023년)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순이동		
전체 인구기준	-2,563	-2,830	-4,419	-7,206	-13,773	-12,748	-8,494	-5,801	-5,115	-4,457	-11,137	-6,741
18세	-441	-382	-447	-257	-505	-512	-425	-369	-505	-484	-492	-433
19세	-176	-123	-211	-34	-410	-377	-272	-318	-437	-142	-316	-250
20세	-211	-79	-305	-97	-452	-485	-378	-347	-374	-279	-416	-301
21세	-584	-478	-424	-337	-621	-631	-713	-588	-677	-508	-682	-556
22세	-822	-882	-999	-874	-1,184	-1,277	-1,150	-1,078	-1,058	-1,034	-1,196	-1,036
23세	-841	-905	-881	-1,050	-1,391	-1,463	-1,325	-1,132	-1,149	-955	-1,325	-1,109
24세	-920	-798	-1,098	-1,055	-1,376	-1,516	-1,512	-1,223	-1,263	-1,074	-1,314	-1,184
25세	-917	-870	-986	-1,037	-1,384	-1,390	-1,195	-930	-941	-828	-1,283	-1,048
26세	-814	-788	-896	-887	-1,099	-1,045	-977	-654	-682	-671	-1,168	-851
27세	-767	-622	-509	-805	-777	-757	-665	-532	-673	-469	-934	-658
28세	-447	-458	-486	-471	-642	-641	-598	-553	-365	-354	-691	-502
29세	-410	-294	-366	-443	-544	-484	-359	-229	-336	-224	-471	-369
30세	-278	-250	-357	-339	-463	-353	-305	-150	-229	-221	-359	-295
31세	-217	-115	-201	-285	-406	-420	-323	-176	-199	-240	-275	-258
32세	-155	-134	-109	-221	-382	-305	-217	-126	-97	-101	-202	-185
33세	-119	-59	-54	-190	-285	-232	-211	-103	-91	-57	-138	-140
34세	0	-3	25	-216	-278	-155	-86	-80	-95	-39	-81	-93
35세	190	-19	1	-109	-118	-136	-95	-15	-7	14	-52	-29
36세	133	-33	76	-64	-264	-126	1	1	-42	-80	-35	-40
37세	164	125	10	-61	-76	-191	34	-8	86	56	-8	14
38세	68	123	71	-35	-175	-80	-50	-57	0	-45	-19	-18
39세	148	120	72	-79	-90	-132	-44	61	65	-6	7	12
합계(18세~39세)	-7,416	-6,924	-8,074	-8,946	-12,922	-12,708	-10,865	-8,606	-9,069	-7,741	-11,449	-9,327

<표 2-2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18세~39세) 타 광역지자체로 전출 현황

각세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인구 기준	107,289	128,842	112,929	128,262	98,942	98,188	96,181	90,674	84,158	79,356	77,454	75,872	70,730
18세	1,743	2,226	1,635	1,864	1,334	1,249	1,211	1,284	1,126	1,320	1,372	1,353	1,289
19세	2,045	2,785	1,811	2,013	1,412	1,412	1,444	1,222	1,165	1,132	1,296	1,429	1,197
20세	2,371	3,001	2,319	2,475	1,667	1,620	1,518	1,429	1,199	1,167	1,150	1,372	1,183
21세	2,555	3,953	2,850	3,007	2,102	1,928	1,850	1,634	1,515	1,474	1,527	1,531	1,508
22세	3,421	4,574	3,927	4,281	3,461	3,072	2,627	2,426	2,092	2,145	2,132	2,165	2,046
23세	4,144	4,817	4,599	4,528	4,253	3,981	3,372	2,804	2,447	2,328	2,224	2,295	2,244
24세	4,209	4,782	4,470	4,850	4,143	4,342	3,765	3,200	2,631	2,616	2,504	2,442	2,316
25세	4,445	4,994	4,869	4,695	4,528	4,459	4,214	3,753	3,093	2,762	2,665	2,629	2,497
26세	4,621	4,856	4,720	4,793	4,300	4,414	4,238	3,944	3,388	3,112	2,706	2,708	2,508
27세	4,483	4,634	4,347	4,229	3,812	3,842	3,889	3,643	3,290	3,219	2,792	2,523	2,368
28세	3,781	3,960	3,807	3,725	3,430	3,447	3,228	3,166	2,950	3,076	2,789	2,509	2,146
29세	3,232	3,435	3,559	3,489	2,792	2,891	2,852	2,664	2,629	2,583	2,619	2,551	2,083
30세	3,079	3,191	3,138	3,232	2,629	2,548	2,497	2,281	2,292	2,416	2,360	2,385	2,106
31세	2,605	2,846	2,707	2,918	2,494	2,421	2,275	2,034	2,039	1,977	2,085	2,131	2,063
32세	2,447	2,737	2,610	2,718	2,240	2,285	2,148	1,919	1,830	1,818	1,829	1,884	1,810
33세	2,174	2,326	2,331	2,574	2,011	2,064	1,957	1,847	1,659	1,638	1,590	1,538	1,744
34세	1,853	2,078	2,213	2,366	1,941	1,850	1,755	1,858	1,551	1,446	1,440	1,463	1,426
35세	1,857	1,941	1,965	2,269	1,764	1,852	1,739	1,596	1,565	1,456	1,295	1,330	1,297
36세	1,612	1,815	1,764	2,036	1,740	1,607	1,654	1,563	1,436	1,394	1,327	1,208	1,200
37세	1,400	1,669	1,616	1,805	1,508	1,616	1,488	1,395	1,423	1,302	1,361	1,228	1,116
38세	1,464	1,664	1,507	1,829	1,401	1,349	1,427	1,375	1,399	1,231	1,220	1,198	1,105
39세	1,417	1,566	1,450	1,660	1,360	1,247	1,325	1,331	1,246	1,271	1,182	1,128	1,039
합계(18세~39세)	**60,958**	**69,850**	**64,214**	**67,356**	**56,322**	**55,496**	**52,473**	**48,368**	**43,965**	**42,883**	**41,465**	**41,000**	**38,291**

각세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2001년~2023년)	최근 10년 평균(2014년~2023년)
전체 인구 기준	73,175	71,586	70,950	71,915	73,751	71,166	71,119	67,279	60,626	58,422	84,299	68,999
18세	1,329	1,203	1,206	1,244	1,325	1,305	1,033	940	1,067	1,006	1,333	1,166
19세	1,423	1,407	1,471	1,534	1,650	1,683	1,540	1,499	1,525	1,366	1,542	1,510
20세	1,283	1,205	1,398	1,381	1,477	1,500	1,603	1,569	1,403	1,297	1,591	1,412
21세	1,661	1,668	1,596	1,653	1,684	1,788	1,971	2,050	2,050	1,738	1,969	1,786
22세	2,233	2,422	2,463	2,482	2,606	2,700	2,788	2,749	2,773	2,748	2,797	2,596
23세	2,336	2,473	2,539	2,762	2,864	2,953	3,060	2,923	2,685	2,633	3,098	2,723
24세	2,472	2,581	2,849	2,870	3,079	3,242	3,254	3,151	2,974	2,793	3,284	2,927
25세	2,590	2,644	2,768	2,879	3,145	3,174	3,120	3,002	2,774	2,586	3,404	2,868
26세	2,472	2,524	2,573	2,576	2,910	2,945	2,848	2,605	2,501	2,459	3,336	2,641
27세	2,409	2,294	2,197	2,326	2,424	2,491	2,453	2,350	2,336	2,137	3,065	2,342
28세	2,092	2,107	1,996	2,006	2,051	2,108	2,162	2,209	1,981	1,879	2,722	2,059
29세	1,971	1,883	1,909	1,886	1,872	1,869	1,891	1,840	1,787	1,627	2,431	1,854
30세	2,031	1,722	1,755	1,692	1,733	1,600	1,639	1,570	1,490	1,516	2,213	1,675
31세	1,982	1,691	1,583	1,548	1,539	1,540	1,558	1,338	1,266	1,405	2,002	1,545
32세	1,987	1,768	1,560	1,431	1,497	1,329	1,368	1,232	1,068	1,072	1,852	1,431
33세	1,682	1,736	1,539	1,440	1,327	1,293	1,250	1,134	993	952	1,687	1,335
34세	1,611	1,531	1,492	1,478	1,398	1,130	1,155	1,036	920	855	1,559	1,261
35세	1,281	1,424	1,377	1,427	1,382	1,181	1,064	1,011	776	792	1,463	1,172
36세	1,292	1,235	1,237	1,297	1,380	1,179	1,066	893	824	747	1,370	1,115
37세	1,174	1,183	1,194	1,218	1,184	1,223	1,085	938	686	695	1,283	1,058
38세	1,140	1,065	1,019	1,058	1,194	1,086	1,161	1,008	747	703	1,233	1,018
39세	1,084	974	995	1,068	991	1,060	1,086	938	759	717	1,169	967
합계(18세~39세)	**39,535**	**38,740**	**38,716**	**39,256**	**40,712**	**40,379**	**40,155**	**37,985**	**35,385**	**33,723**	**46,401**	**38,459**

<표 2-27> 전북특별자치도-타광역지자체로의 이동 현황(전연령대)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북-서울	남자	16,325	18,409	14,843	16,647	12,291	12,742	12,082	11,136	10,328	9,326	8,665	8,444	7,610
	여자	16,265	19,557	15,228	18,227	12,698	13,020	12,728	11,876	10,860	9,451	8,935	8,736	7,885
	합계	32,590	37,966	30,071	34,874	24,989	25,762	24,810	23,012	21,188	18,777	17,600	17,180	15,495
전북-부산	남자	1,071	1,171	1,046	1,217	776	862	831	900	750	775	842	754	762
	여자	1,088	1,319	1,120	1,360	826	864	852	856	714	743	809	754	709
	합계	2,159	2,490	2,166	2,577	1,602	1,726	1,683	1,756	1,464	1,518	1,651	1,508	1,471
전북-대구	남자	553	566	511	550	398	466	464	452	444	493	459	542	516
	여자	600	667	612	645	446	473	466	438	454	431	440	491	502
	합계	1,153	1,233	1,123	1,195	844	939	930	890	898	924	899	1,033	1,018
전북-인천	남자	3,085	3,903	3,266	3,529	2,806	2,717	2,664	2,527	2,155	1,998	2,064	2,170	2,030
	여자	2,988	3,955	3,321	3,616	2,602	2,545	2,586	2,313	2,047	1,846	1,923	1,905	1,841
	합계	6,073	7,858	6,587	7,145	5,408	5,262	5,250	4,840	4,202	3,844	3,987	4,075	3,871
전북-광주	남자	3,639	4,325	3,378	4,340	3,387	3,372	3,455	3,457	3,269	3,289	3,220	3,056	2,989
	여자	4,052	4,948	3,753	4,806	3,456	3,588	3,495	3,556	3,375	3,066	3,085	2,840	2,737
	합계	7,691	9,273	7,131	9,146	6,843	6,960	6,950	7,013	6,644	6,355	6,305	5,896	5,726
전북-대전	남자	3,193	3,740	3,502	3,684	3,145	2,913	2,766	2,516	2,451	2,439	2,564	2,442	2,264
	여자	3,506	3,994	3,847	4,068	3,227	3,089	2,924	2,749	2,536	2,375	2,607	2,346	2,245
	합계	6,699	7,734	7,349	7,752	6,372	6,002	5,690	5,265	4,987	4,814	5,171	4,788	4,509
전북-울산	남자	469	506	542	533	415	431	421	591	439	417	515	614	663
	여자	444	573	498	592	421	414	371	394	332	326	431	467	454
	합계	913	1,079	1,040	1,125	836	845	792	985	771	743	946	1,081	1,117
전북-세종	남자	-	-	-	-	-	-	-	-	-	-	-	276	245
	여자	-	-	-	-	-	-	-	-	-	-	-	231	252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507	49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최근 10년 평균(2014-2023)
전북-서울	남자	7,987	7,340	7,434	7,237	7,468	7,221	7,153	6,535	6,202	5,860	9,969	7,044
	여자	7,915	7,490	7,559	7,693	8,196	8,046	8,000	7,201	6,433	6,001	10,435	7,453
	합계	15,902	14,830	14,993	14,930	15,664	15,267	15,153	13,736	12,635	11,861	20,404	14,497
전북-부산	남자	827	901	826	801	740	698	715	688	656	607	835	746
	여자	794	830	756	744	604	659	649	586	592	585	818	680
	합계	1,621	1,731	1,582	1,545	1,344	1,357	1,364	1,274	1,248	1,192	1,653	1,426
전북-대구	남자	482	462	468	432	447	428	481	453	424	455	476	453
	여자	398	399	425	384	416	368	419	399	368	393	462	397
	합계	880	861	893	816	863	796	900	852	792	848	938	850
전북-인천	남자	1,885	1,770	1,802	1,875	1,997	1,957	2,010	1,661	1,642	1,556	2,307	1,816
	여자	1,703	1,625	1,613	1,641	1,727	1,710	1,764	1,591	1,383	1,361	2,157	1,612
	합계	3,588	3,395	3,415	3,516	3,724	3,667	3,774	3,252	3,025	2,917	4,464	3,427
전북-광주	남자	3,258	2,896	2,958	2,943	3,185	3,044	2,907	2,862	2,624	2,480	3,232	2,916
	여자	2,963	2,764	2,775	2,733	3,001	2,893	2,890	2,827	2,482	2,255	3,232	2,758
	합계	6,221	5,660	5,733	5,676	6,186	5,937	5,797	5,689	5,106	4,735	6,464	5,674
전북-대전	남자	2,324	2,249	2,194	2,303	2,333	2,249	2,235	2,088	2,106	2,094	2,600	2,218
	여자	2,248	2,147	2,109	2,301	2,301	2,206	2,227	2,131	2,189	2,022	2,669	2,188
	합계	4,572	4,396	4,303	4,604	4,634	4,455	4,462	4,219	4,295	4,116	5,269	4,406
전북-울산	남자	665	797	480	747	626	497	467	322	294	306	511	520
	여자	434	594	352	541	473	348	316	253	209	208	411	373
	합계	1,099	1,391	832	1,288	1,099	845	783	575	503	514	922	893
전북-세종	남자	475	705	664	751	772	743	767	756	659	556	614	685
	여자	432	717	637	800	802	731	781	699	654	547	607	680
	합계	907	1,422	1,301	1,551	1,574	1,474	1,548	1,455	1,313	1,103	637	1,365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북-경기	남자	13,939	17,712	16,237	18,002	14,973	14,689	13,770	12,457	11,591	11,150	10,495	10,553	9,306
	여자	13,602	18,813	17,373	19,243	14,703	14,478	13,823	12,668	11,369	10,858	9,995	9,854	8,480
	합계	27,541	36,525	33,610	37,245	29,676	29,167	27,593	25,125	22,960	22,008	20,490	20,407	17,786
전북-강원	남자	847	960	1,003	1,027	830	820	939	1,004	847	859	846	850	814
	여자	846	1,012	912	953	743	691	763	751	721	621	579	588	663
	합계	1,693	1,972	1,915	1,980	1,573	1,511	1,702	1,755	1,568	1,480	1,425	1,438	1,477
전북-충북	남자	1,106	1,251	1,087	1,233	1,025	1,184	1,153	1,110	1,052	1,181	1,161	1,065	1,022
	여자	1,189	1,409	1,229	1,284	1,078	1,102	1,153	1,094	927	1,035	1,018	932	917
	합계	2,295	2,660	2,316	2,517	2,103	2,286	2,306	2,204	1,979	2,216	2,179	1,997	1,939
전북-충남	남자	2,936	3,182	3,475	4,595	3,612	3,629	3,725	3,811	3,395	3,335	3,445	3,168	3,182
	여자	3,095	3,772	3,860	5,114	3,929	3,355	3,702	3,537	3,415	3,179	3,244	2,982	2,749
	합계	6,031	6,954	7,335	9,709	7,541	6,984	7,427	7,348	6,810	6,514	6,689	6,150	5,931
전북-전남	남자	3,718	3,807	3,496	3,638	3,161	3,213	3,257	2,964	3,087	3,019	2,977	2,866	2,907
	여자	4,046	4,180	3,742	3,914	3,191	3,026	3,176	2,902	3,029	2,726	2,602	2,497	2,545
	합계	7,764	7,987	7,238	7,552	6,352	6,239	6,433	5,866	6,116	5,745	5,579	5,363	5,452
전북-경북	남자	761	850	798	912	870	771	760	775	881	847	826	855	828
	여자	827	967	892	907	868	759	766	713	710	722	757	743	717
	합계	1,588	1,817	1,690	1,819	1,738	1,530	1,526	1,488	1,591	1,569	1,583	1,598	1,545
전북-경남	남자	1,115	1,131	1,249	1,373	1,176	1,146	1,299	1,356	1,280	1,219	1,256	1,205	1,208
	여자	1,230	1,351	1,362	1,466	1,157	1,080	1,179	1,137	1,120	1,072	1,086	1,011	963
	합계	2,345	2,482	2,611	2,839	2,333	2,226	2,478	2,493	2,400	2,291	2,342	2,216	2,171
전북-제주	남자	376	430	406	390	390	399	320	364	344	318	341	365	410
	여자	378	382	341	397	342	350	291	270	236	240	267	270	315
	합계	754	812	747	787	732	749	611	634	580	558	608	635	72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최근 10년 평균(2014-2023)
전북-경기	남자	9,554	9,194	9,614	9,695	9,746	9,371	9,467	9,061	7,849	7,513	11,563	9,106
	여자	8,499	8,359	8,469	8,380	8,693	8,269	8,338	7,839	6,573	6,344	11,088	7,976
	합계	18,053	17,553	18,083	18,075	18,439	17,640	17,805	16,900	14,422	13,857	22,650	17,083
전북-강원	남자	918	971	828	882	746	764	753	776	674	644	852	796
	여자	682	645	693	661	580	684	566	613	520	517	696	616
	합계	1,600	1,616	1,521	1,543	1,326	1,448	1,319	1,389	1,194	1,161	1,548	1,412
전북-충북	남자	1,239	1,245	1,197	1,170	1,341	1,272	1,201	1,329	1,175	1,192	1,174	1,236
	여자	1,017	1,026	962	1,025	1,074	1,023	1,064	1,082	904	954	1,065	1,013
	합계	2,256	2,271	2,159	2,195	2,415	2,295	2,265	2,411	2,079	2,146	2,239	2,249
전북-충남	남자	3,264	3,432	3,216	3,410	3,459	3,281	3,582	3,420	3,097	3,104	3,424	3,327
	여자	2,803	2,827	2,880	2,746	2,851	2,737	2,958	2,736	2,458	2,606	3,197	2,760
	합계	6,067	6,259	6,096	6,156	6,310	6,018	6,540	6,156	5,555	5,710	6,621	6,087
전북-전남	남자	3,126	2,891	2,958	2,966	3,083	3,165	2,921	2,891	2,547	2,486	3,093	2,903
	여자	2,644	2,413	2,538	2,492	2,607	2,452	2,278	2,269	2,026	1,987	2,838	2,371
	합계	5,770	5,304	5,496	5,458	5,690	5,617	5,199	5,160	4,573	4,473	5,932	5,274
전북-경북	남자	807	833	786	719	772	796	695	849	731	748	803	774
	여자	692	675	595	620	580	606	611	623	564	562	716	613
	합계	1,499	1,508	1,381	1,339	1,352	1,402	1,306	1,472	1,295	1,310	1,519	1,386
전북-경남	남자	1,283	1,300	1,133	1,162	1,115	1,068	998	1,024	968	919	1,173	1,097
	여자	1,033	1,029	912	947	885	841	827	817	782	764	1,046	884
	합계	2,316	2,329	2,045	2,109	2,000	1,909	1,825	1,841	1,750	1,683	2,219	1,981
전북-제주	남자	460	559	623	642	600	516	544	435	463	427	440	527
	여자	364	501	494	472	531	523	535	463	378	369	379	463
	합계	824	1,060	1,117	1,114	1,131	1,039	1,079	898	841	796	819	990

<표 2-28> 전북특별자치도-타광역지자체로의 이동 현황(20세~39세)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북-서울	남자	9,941	10,461	8,982	8,863	7,270	7,516	7,145	6,504	5,867	5,488	4,997	4,994	4,489
	여자	8,730	9,623	8,180	8,813	6,574	6,623	6,198	5,744	5,163	4,720	4,532	4,620	4,230
	합계	18,671	20,084	17,162	17,676	13,844	14,139	13,343	12,248	11,030	10,208	9,529	9,614	8,719
전북-부산	남자	538	535	495	559	392	446	435	422	375	416	438	382	386
	여자	507	564	477	580	381	367	353	375	298	339	375	328	332
	합계	1,045	1,099	972	1,139	773	813	788	797	673	755	813	710	718
전북-대구	남자	286	262	238	272	212	239	237	242	234	240	236	295	285
	여자	297	318	290	301	221	222	224	196	214	192	193	242	243
	합계	583	580	528	573	433	461	461	438	448	432	429	537	528
전북-인천	남자	1,759	2,021	1,848	1,760	1,599	1,559	1,477	1,396	1,143	1,105	1,114	1,143	1,069
	여자	1,583	1,799	1,714	1,662	1,280	1,162	1,166	1,004	884	824	817	887	812
	합계	3,342	3,820	3,562	3,422	2,879	2,721	2,643	2,400	2,027	1,929	1,931	2,030	1,881
전북-광주	남자	1,859	2,206	1,767	2,070	1,754	1,840	1,834	1,718	1,644	1,718	1,687	1,557	1,558
	여자	2,059	2,491	1,932	2,283	1,736	1,781	1,633	1,620	1,516	1,449	1,417	1,362	1,315
	합계	3,918	4,697	3,699	4,353	3,490	3,621	3,467	3,338	3,160	3,167	3,104	2,919	2,873
전북-대전	남자	1,554	1,800	1,715	1,791	1,664	1,555	1,443	1,254	1,189	1,242	1,276	1,245	1,152
	여자	1,725	1,868	1,917	1,915	1,637	1,545	1,381	1,269	1,116	1,139	1,237	1,118	1,074
	합계	3,279	3,668	3,632	3,706	3,301	3,100	2,824	2,523	2,305	2,381	2,513	2,363	2,226
전북-울산	남자	257	252	303	252	236	236	253	405	268	234	287	309	383
	여자	210	265	230	256	185	179	154	172	141	119	164	191	188
	합계	467	517	533	508	421	415	407	577	409	353	451	500	571
전북-세종	남자	-	-	-	-	-	-	-	-	-	-	-	122	120
	여자	-	-	-	-	-	-	-	-	-	-	-	99	115
	합계	-	-	-	-	-	-	-	-	-	-	-	221	23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최근 10년 평균(2014-2023)
전북-서울	남자	4,750	4,375	4,524	4,418	4,505	4,552	4,496	4,131	4,111	3,778	5,920	4,364
	여자	4,323	4,159	4,358	4,521	4,907	5,039	5,029	4,488	4,056	3,803	5,584	4,468
	합계	9,073	8,534	8,882	8,939	9,412	9,591	9,525	8,619	8,167	7,581	11,504	8,832
전북-부산	남자	434	482	443	420	396	404	387	395	394	360	432	412
	여자	374	372	342	361	298	318	325	344	326	289	375	335
	합계	808	854	785	781	694	722	712	739	720	649	807	746
전북-대구	남자	284	252	257	242	240	244	262	242	256	249	252	253
	여자	175	174	199	197	196	194	232	198	199	183	222	195
	합계	459	426	456	439	436	438	494	440	455	432	474	448
전북-인천	남자	1,009	974	930	997	1,048	1,008	998	896	871	810	1,241	954
	여자	735	691	740	774	821	837	844	720	683	647	1,004	749
	합계	1,744	1,665	1,670	1,771	1,869	1,845	1,842	1,616	1,554	1,457	2,244	1,703
전북-광주	남자	1,679	1,466	1,601	1,524	1,647	1,613	1,642	1,648	1,529	1,495	1,698	1,584
	여자	1,361	1,329	1,319	1,314	1,471	1,494	1,663	1,611	1,404	1,310	1,603	1,428
	합계	3,040	2,795	2,920	2,838	3,118	3,107	3,305	3,259	2,933	2,805	3,301	3,012
전북-대전	남자	1,150	1,178	1,211	1,244	1,293	1,293	1,330	1,269	1,310	1,299	1,368	1,258
	여자	1,079	1,081	1,088	1,207	1,217	1,249	1,300	1,275	1,359	1,216	1,348	1,207
	합계	2,229	2,259	2,299	2,451	2,510	2,542	2,630	2,544	2,669	2,515	2,716	2,465
전북-울산	남자	400	436	263	411	303	284	244	172	143	172	283	283
	여자	186	248	158	250	212	136	131	110	93	100	177	162
	합계	586	684	421	661	515	420	375	282	236	272	460	445
전북-세종	남자	199	276	277	289	358	303	347	349	313	281	270	299
	여자	177	300	282	336	346	316	344	324	321	244	267	299
	합계	376	576	559	625	704	619	691	673	634	525	537	598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북-경기	남자	7,997	9,559	9,784	9,514	9,156	8,996	8,215	7,051	6,403	6,206	5,691	5,604	4,939
	여자	7,003	9,274	9,324	9,376	7,903	7,478	6,671	5,796	5,078	5,109	4,553	4,455	3,869
	합계	15,000	18,833	19,108	18,890	17,059	16,474	14,886	12,847	11,481	11,315	10,244	10,059	8,808
전북-강원	남자	477	502	610	577	509	515	544	626	453	514	496	492	489
	여자	418	534	496	451	371	321	341	343	304	250	251	255	284
	합계	895	1,036	1,106	1,028	880	836	885	969	757	764	747	747	773
전북-충북	남자	531	641	563	687	577	677	610	598	570	655	622	582	551
	여자	598	673	607	643	574	566	584	533	444	491	471	436	418
	합계	1,129	1,314	1,170	1,330	1,151	1,243	1,194	1,131	1,014	1,146	1,093	1,018	969
전북-충남	남자	1,501	1,498	1,777	2,479	1,942	1,997	2,012	2,038	1,818	1,772	1,814	1,641	1,750
	여자	1,516	1,675	1,756	2,401	1,886	1,652	1,712	1,642	1,505	1,462	1,479	1,380	1,341
	합계	3,017	3,173	3,533	4,880	3,828	3,649	3,724	3,680	3,323	3,234	3,293	3,021	3,091
전북-전남	남자	1,635	1,665	1,565	1,589	1,529	1,598	1,578	1,403	1,497	1,359	1,357	1,305	1,293
	여자	1,814	1,847	1,665	1,719	1,439	1,374	1,315	1,187	1,227	1,118	1,078	1,014	1,026
	합계	3,449	3,512	3,230	3,308	2,968	2,972	2,893	2,590	2,724	2,477	2,435	2,319	2,319
전북-경북	남자	413	457	441	505	506	468	445	434	493	506	462	450	423
	여자	420	474	429	434	451	411	350	326	325	359	346	348	317
	합계	833	931	870	939	957	879	795	760	818	865	808	798	740
전북-경남	남자	559	514	640	676	645	620	680	738	731	651	674	650	626
	여자	601	615	653	671	572	529	548	523	503	507	477	434	404
	합계	1,160	1,129	1,293	1,347	1,217	1,149	1,228	1,261	1,234	1,158	1,151	1,084	1,030
전북-제주	남자	199	244	187	193	201	202	154	172	168	148	155	162	186
	여자	183	202	183	187	174	161	126	131	103	99	101	116	138
	합계	382	446	370	380	375	363	280	303	271	247	256	278	324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최근 10년 평균(2014-2023)
전북-경기	남자	5,057	4,763	4,944	5,032	5,054	4,916	4,789	4,678	4,155	3,908	6,366	4,730
	여자	3,864	3,738	3,804	3,653	3,871	3,811	3,882	3,613	2,957	2,898	5,303	3,609
	합계	8,921	8,501	8,748	8,685	8,925	8,727	8,671	8,291	7,112	6,806	11,669	8,339
전북-강원	남자	540	612	418	489	394	390	415	428	345	358	487	439
	여자	289	290	289	255	234	302	274	253	227	241	316	265
	합계	829	902	707	744	628	692	689	681	572	599	803	704
전북-충북	남자	663	701	643	617	785	674	653	727	683	675	638	682
	여자	481	506	430	479	526	480	564	538	484	500	523	499
	합계	1,144	1,207	1,073	1,096	1,311	1,154	1,217	1,265	1,167	1,175	1,161	1,181
전북-충남	남자	1,684	1,802	1,709	1,795	1,812	1,688	1,848	1,712	1,603	1,597	1,795	1,725
	여자	1,317	1,307	1,346	1,297	1,381	1,260	1,413	1,247	1,195	1,248	1,496	1,301
	합계	3,001	3,109	3,055	3,092	3,193	2,948	3,261	2,959	2,798	2,845	3,292	3,026
전북-전남	남자	1,367	1,343	1,317	1,305	1,357	1,581	1,303	1,295	1,217	1,123	1,417	1,321
	여자	1,047	1,051	1,068	1,033	1,089	1,047	1,051	995	887	877	1,216	1,015
	합계	2,414	2,394	2,385	2,338	2,446	2,628	2,354	2,290	2,104	2,000	2,633	2,335
전북-경북	남자	424	406	403	368	402	416	354	459	367	364	433	396
	여자	311	299	297	300	256	284	276	292	236	249	339	280
	합계	735	705	700	668	658	700	630	751	603	613	772	676
전북-경남	남자	659	654	544	521	517	527	431	473	448	432	592	521
	여자	442	444	411	384	357	332	347	334	298	306	465	366
	합계	1,101	1,098	955	905	874	859	778	807	746	738	1,057	886
전북-제주	남자	176	238	247	263	244	218	214	161	181	192	196	213
	여자	147	183	177	182	200	181	194	169	142	147	158	172
	합계	323	421	424	445	444	399	408	330	323	339	354	386

3. 청년인구의 전출사유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 인구의 전출사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서에 작성하게 되는 전입사유(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 15호 서식,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 기입내용에 기초하여 분석하게 됨**

○ 전입신고서의 전입사유는 총 7가지임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 · 편의 시설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

▮ **최근 10년(2013년~2023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광역지자체로의 전출사유를 분석한 결과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의 순으로 분석됨 (2013년~2023년까지의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분석)**

○ 직업 : 28,796명 (41.64%)

○ 가족 : 18,382명(26.58%)

○ 주택 : 10,062명(14.55%)

○ 교육 : 5,733명(8.29%)

○ 주거환경 : 1,370명(1.98%)

○ 자연환경 : 728명(1.05%)

○ 기타 : 4,085명(5.91%)

○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입-전출사유를 분석한 결과 주택 > 가족 > 직업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등으로 분석됨(2013년~2023년까지의 연평균 인원 기준)

- 주택 : 71,189명
- 가족 : 44,970명
- 직업 : 26,237명

- 교육 : 8,347명
- 주거환경 : 6,485명
- 자연환경 : 2,610명
- 기타 : 14,398명

▮ **광역지자체별 청년인구(20대~30대)의 전입사유(광역지자체 내부 전입 포함)를 분석한 결과, 전국 기준으로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등으로 분석됨(2013년~2023년 연평균 기준)**

- 직업 : 663,833명(35.92%)
- 가족 : 559,354명(30.29%)
- 주택 : 349,788명(18.94%)
- 교육 : 87,245명(4.73%)
- 주거환경 : 68,375명(3.70%)
- 자연환경 : 8,274명(0.45%)
- 기타 : 109,557명(5.93%)

○ 광역지자체별로 청년인구의 전입사유를 살펴보면,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의 순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 > 직업의 순으로 분석됨

- 서울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부산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대구 :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인천 : 가족 > 직업 > 주택 > 주거환경 > 교육 > 자연환경
- 광주 :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대전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울산 : 가족 > 직업 > 주택 > 주거환경 > 교육 > 자연환경
- 세종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경기 : 직업 > 가족 > 주택 > 주거환경 > 교육 > 자연환경
- 강원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충북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충남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전북 :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전남 :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경북 : 직업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경남 : 가족 > 직업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 제주 : 직업 > 가족 > 주택 > 주거환경 > 교육 > 자연환경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청년인구(20대 + 30대)의 전입사유별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직업과 가족이 가장 큰 전입사유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20대와 30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 > 가족 또는 가족 > 직업의 순으로 분석된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역시 청년인구의 주택소유가 많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2-29> 전북특별자치도(전출지)에서 타광역지자체 전입사유별 현황(전연령대)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2013 ~2023)
전국	계	260,395	276,900	264,662	252,607	239,253	257,097	241,523	257,577	229,511	204,547	193,245	243,392
	직업	51,420	58,146	58,405	55,954	54,116	57,114	56,588	58,958	55,824	50,888	47,952	55,033
	가족	66,539	74,055	72,409	70,568	65,901	68,155	61,519	63,115	56,515	49,397	48,701	63,352
	주택	87,851	104,226	98,527	87,167	77,792	87,839	79,090	83,956	70,245	61,367	55,703	81,251
	교육	14,253	15,226	14,117	13,931	13,809	13,683	14,303	14,373	13,944	13,474	13,765	14,080
	주거환경	4,334	6,703	5,770	5,632	6,994	8,026	8,973	10,393	10,122	9,911	9,552	7,855
	자연환경	2,977	3,631	3,242	3,324	3,451	3,494	3,423	3,458	3,478	3,221	3,016	3,338
	기타	33,021	14,913	12,192	16,031	17,190	18,786	17,627	23,324	19,383	16,289	14,556	18,483
전국 (전북 제외)	계	70,730 (100.0%)	73,175 (100.0%)	71,586 (100.0%)	70,950 (100.0%)	71,915 (100.0%)	73,751 (100.0%)	71,166 (100.0%)	71,119 (100.0%)	67,279 (100.0%)	60,626 (100.0%)	58,422 (100.0%)	69,156 (100.0%)
	직업	26,361 (37.27%)	29,133 (39.81%)	29,670 (41.45%)	28,724 (40.48%)	29,402 (40.88%)	30,652 (41.56%)	30,655 (43.08%)	31,228 (43.91%)	28,888 (42.94%)	26,758 (44.14%)	25,286 (43.28%)	28,796 (41.64%)
	가족	19,774 (27.96%)	20,926 (28.60%)	20,281 (28.33%)	20,442 (28.81%)	20,150 (28.02%)	20,104 (27.26%)	18,457 (25.94%)	17,807 (25.04%)	16,432 (24.42%)	13,919 (22.96%)	13,908 (23.81%)	18,382 (26.58%)
	주택	11,312 (15.99%)	13,085 (17.88%)	11,838 (16.54%)	11,329 (15.97%)	11,248 (15.64%)	10,904 (14.78%)	9,642 (13.55%)	9,025 (12.69%)	8,731 (12.98%)	7,185 (11.85%)	6,386 (10.93%)	10,062 (14.55%)
	교육	4,819 (6.81%)	5,197 (7.10%)	4,788 (6.69%)	5,092 (7.18%)	5,290 (70.36%)	5,642 (7.65%)	6,009 (8.44%)	6,354 (8.93%)	6,377 (9.48%)	6,794 (11.21%)	6,703 (11.47%)	5,733 (8.29%)
	주거환경	795 (1.12%)	1,003 (1.37%)	947 (1.32%)	893 (1.26%)	1,225 (1.70%)	1,418 (1.92%)	1,695 (2.38%)	1,842 (2.59%)	1,850 (2.75%)	1,685 (2.78%)	1,718 (2.78%)	1,370 (1.98%)
	자연환경	767 (1.08%)	794 (1.09%)	653 (0.91%)	666 (0.94%)	775 (1.08%)	772 (1.05%)	748 (1.05%)	786 (1.11%)	745 (1.11%)	633 (1.04%)	666 (1.14%)	728 (1.05%)
	기타	6,902	3,037 (4.15%)	3,409 (4.76%)	3,804 (5.36%)	3,825 (5.32%)	4,259 (5.77%)	3,960 (5.56%)	4,077 (5.73%)	4,256 (6.33%)	3,652 (6.02%)	3,755 (6.43%)	4,085 (5.91%)

서울	계	15,495	15,902	14,830	14,993	14,930	15,664	15,267	15,153	13,736	12,635	11,861	14,588
	직업	5,380	6,129	6,004	6,044	6,018	6,528	6,777	6,745	5,973	5,716	5,385	6,064
	가족	4,290	4,275	3,985	3,911	3,814	3,659	3,464	3,225	2,823	2,320	2,335	3,464
	주택	2,644	3,082	2,380	2,323	2,181	2,162	1,759	1,548	1,486	1,193	959	1,974
	교육	1,484	1,699	1,568	1,681	1,736	1,930	1,943	2,197	1,980	2,205	1,998	1,856
	주거환경	217	255	233	215	268	319	384	434	455	362	369	319
	자연환경	105	82	54	82	77	92	63	56	48	39	46	68
	기타	1,375	380	606	737	836	974	877	948	971	800	769	843
부산	계	1,471	1,621	1,731	1,582	1,545	1,344	1,357	1,364	1,274	1,248	1,192	1,430
	직업	527	638	663	625	620	504	551	550	523	495	445	558
	가족	404	492	512	437	429	398	341	334	313	335	298	390
	주택	297	287	357	276	226	197	176	197	144	100	137	218
	교육	110	118	101	109	112	133	151	153	175	178	174	138
	주거환경	24	21	11	24	32	30	44	53	27	49	50	33
	자연환경	16	9	19	8	12	8	17	9	11	15	14	13
	기타	93	56	68	103	114	74	77	68	81	76	74	80
대구	계	1,018	880	861	893	816	863	796	900	852	792	848	865
	직업	416	374	356	317	313	383	348	432	338	346	372	363
	가족	254	235	252	269	230	228	229	213	223	150	199	226
	주택	168	190	173	196	165	128	81	100	111	98	100	137
	교육	26	34	37	42	43	42	58	68	91	119	82	58
	주거환경	6	12	6	10	7	14	18	23	26	27	32	16
	자연환경	3	8	2	7	2	6	3	6	2	4	5	4
	기타	145	27	35	52	56	62	59	58	61	48	58	60
인천	계	3,871	3,588	3,395	3,415	3,516	3,724	3,667	3,774	3,252	3,025	2,917	3,468
	직업	1,273	1,288	1,240	1,229	1,296	1,521	1,538	1,668	1,281	1,216	1,152	1,337
	가족	1,045	1,071	1,100	1,147	1,107	1,096	1,011	981	865	771	747	995
	주택	773	777	653	663	679	613	627	560	538	447	427	614
	교육	156	148	155	124	163	174	198	240	228	271	262	193

	주거환경	26	52	51	47	61	70	82	94	102	88	80	68
	자연환경	28	33	20	23	21	21	32	30	24	21	29	26
	기타	570	219	176	182	189	229	179	201	214	211	220	235
광주	계	5,726	6,221	5,660	5,733	5,676	6,186	5,937	5,797	5,689	5,106	4,735	5,679
	직업	1,516	1,828	1,711	1,872	1,764	2,058	2,111	2,174	2,097	1,881	1,648	1,878
	가족	1,786	1,947	1,881	1,944	1,940	1,945	1,746	1,552	1,612	1,352	1,295	1,727
	주택	1,200	1,496	1,195	991	1,089	1,102	978	806	726	701	597	989
	교육	307	368	312	361	349	508	497	638	628	676	721	488
	주거환경	49	92	98	86	119	146	147	208	191	194	158	135
	자연환경	21	35	19	36	23	33	34	25	19	20	27	27
	기타	847	455	444	443	392	394	424	394	416	282	289	435
대전	계	4,509	4,572	4,396	4,303	4,604	4,634	4,455	4,462	4,219	4,295	4,116	4,415
	직업	1,732	1,657	1,764	1,642	1,899	1,956	1,871	1,942	1,750	1,987	1,758	1,814
	가족	1,181	1,314	1,123	1,139	1,259	1,247	1,137	1,066	991	848	895	1,109
	주택	681	958	909	823	730	657	583	583	555	468	399	668
	교육	317	378	322	383	386	396	399	504	539	596	675	445
	주거환경	58	78	65	54	93	113	152	130	129	136	145	105
	자연환경	30	21	30	27	27	31	21	40	26	31	18	27
	기타	510	166	183	235	210	234	292	197	229	229	226	246
울산	계	1,117	1,099	1,391	832	1,288	1,099	845	783	575	503	514	913
	직업	656	620	816	419	769	587	427	408	277	240	270	499
	가족	243	231	291	268	287	307	214	179	164	120	122	221
	주택	144	190	204	80	177	157	94	93	50	55	41	117
	교육	34	30	34	25	17	21	36	34	29	44	32	31
	주거환경	9	10	7	7	10	5	9	12	4	5	10	8
	자연환경	12	5	15	6	2	5	4	2	5	2	9	6
	기타	19	13	24	27	26	17	61	55	46	37	30	32
세종	계	497	907	1,422	1,301	1,551	1,574	1,474	1,548	1,455	1,313	1,103	1,286
	직업	253	485	650	605	607	656	643	656	550	531	451	553

	가족	113	177	333	353	403	381	348	380	375	357	315	321
	주택	74	150	225	178	340	343	297	317	321	233	127	237
	교육	20	56	76	57	92	94	69	66	73	97	76	71
	주거환경	1	10	27	9	33	21	40	52	45	31	47	29
	자연환경	9	6	3	7	5	5	7	5	4	2	8	6
	기타	27	23	108	92	71	74	70	72	87	62	79	70
경기	계	17,786	18,053	17,553	18,083	18,075	18,439	17,640	17,805	16,900	14,422	13,857	17,147
	직업	6,600	7,036	6,912	7,221	7,286	7,512	7,444	7,598	7,375	6,482	6,079	7,050
	가족	5,131	5,507	5,316	5,536	5,418	5,429	4,872	4,978	4,358	3,528	3,661	4,885
	주택	2,811	3,161	3,077	2,931	2,766	2,740	2,463	2,400	2,290	1,703	1,518	2,533
	교육	1,170	1,230	1,143	1,196	1,179	1,150	1,333	1,257	1,324	1,274	1,103	1,214
	주거환경	178	192	175	191	254	325	386	412	372	354	386	293
	자연환경	164	161	126	106	174	163	158	155	118	118	135	143
	기타	1,732	766	804	902	998	1,120	984	1,005	1,063	963	975	1,028
강원	계	1,477	1,600	1,616	1,521	1,543	1,326	1,448	1,319	1,389	1,194	1,161	1,418
	직업	758	812	949	821	791	725	757	732	706	607	624	753
	가족	349	408	358	354	383	322	327	276	312	255	258	327
	주택	110	128	127	155	180	132	189	136	182	134	116	144
	교육	89	82	70	73	88	61	67	64	60	85	71	74
	주거환경	10	15	12	15	33	35	34	30	34	36	25	25
	자연환경	27	35	26	25	38	36	31	42	41	36	25	33
	기타	134	120	74	78	30	15	43	39	54	41	42	61
충북	계	1,939	2,256	2,271	2,159	2,195	2,415	2,295	2,265	2,411	2,079	2,146	2,221
	직업	816	1,064	1,182	987	1,038	1,308	1,224	1,143	1,224	1,095	1,052	1,103
	가족	485	581	541	544	511	511	478	510	494	430	430	501
	주택	260	297	273	302	249	258	256	216	294	196	266	261
	교육	116	114	99	139	142	140	174	167	172	189	190	149
	주거환경	29	34	26	22	43	35	50	57	59	38	71	42
	자연환경	28	50	35	28	34	35	29	51	37	27	31	35

	기타	205	116	115	137	178	128	84	121	131	104	106	130
충남	계	5,931	6,067	6,259	6,096	6,156	6,310	6,018	6,540	6,156	5,555	5,710	6,073
	직업	2,596	2,925	3,015	2,658	2,799	2,856	2,751	3,192	3,012	2,621	2,544	2,815
	가족	1,576	1,615	1,575	1,632	1,477	1,620	1,530	1,575	1,350	1,189	1,279	1,493
	주택	737	781	880	1,083	1,134	1,004	839	857	849	847	763	889
	교육	272	275	318	280	345	332	430	352	369	418	515	355
	주거환경	67	82	80	82	95	137	136	155	172	165	161	121
	자연환경	86	81	85	93	78	95	88	105	110	74	95	90
	기타	597	308	306	268	228	266	244	304	294	241	353	310
전북	계	189,665	203,725	193,076	181,657	167,338	183,346	170,357	186,458	162,232	143,921	134,823	174,236
	직업	25,059	29,013	28,735	27,230	24,714	26,462	25,933	27,730	26,936	24,130	22,666	26,237
	가족	46,765	53,129	52,128	50,126	45,751	48,051	43,062	45,308	40,083	35,478	34,793	44,970
	주택	76,539	91,141	86,689	75,838	66,544	76,935	69,448	74,931	61,514	54,182	49,317	71,189
	교육	9,434	10,029	9,329	8,839	8,519	8,041	8,294	8,019	7,567	6,680	7,062	8,347
	주거환경	3,539	5,700	4,823	4,739	5,769	6,608	7,278	8,551	8,272	8,226	7,834	6,485
	자연환경	2,210	2,837	2,589	2,658	2,676	2,722	2,675	2,672	2,733	2,588	2,350	2,610
	기타	26,119	11,876	8,783	12,227	13,365	14,527	13,667	19,247	15,127	12,637	10,801	14,398
전남	계	5,452	5,770	5,304	5,496	5,458	5,690	5,617	5,199	5,160	4,573	4,473	5,290
	직업	1,800	2,152	2,003	2,042	2,118	2,092	2,258	2,142	2,008	1,874	1,805	2,027
	가족	1,776	1,810	1,729	1,709	1,671	1,832	1,616	1,401	1,502	1,288	1,214	1,595
	주택	808	916	780	745	723	781	750	698	643	544	551	722
	교육	495	457	297	432	381	403	411	343	366	330	405	393
	주거환경	70	80	90	79	107	96	115	104	122	115	104	98
	자연환경	141	130	125	134	159	134	141	143	148	125	106	135
	기타	362	225	280	355	299	352	326	368	371	297	288	320
경북	계	1,545	1,499	1,508	1,381	1,339	1,352	1,402	1,306	1,472	1,295	1,310	1,401
	직업	711	692	728	712	614	614	635	599	642	571	607	648
	가족	391	441	393	350	358	321	327	306	340	302	255	344
	주택	180	172	162	144	147	169	160	170	170	125	99	154

	교육	75	75	89	79	105	101	114	103	150	126	182	109
	주거환경	29	17	18	12	29	29	45	35	37	27	35	28
	자연환경	28	27	31	8	23	27	29	13	38	39	35	27
	기타	131	75	87	76	63	91	92	80	95	105	97	90
경남	계	2,171	2,316	2,329	2,045	2,109	2,000	1,909	1,825	1,841	1,750	1,683	1,998
	직업	1,012	1,041	1,163	959	895	875	854	778	738	702	752	888
	가족	578	672	643	603	622	505	547	538	495	492	418	556
	주택	294	356	290	264	342	307	249	218	262	240	194	274
	교육	112	83	102	77	93	97	96	116	157	151	164	113
	주거환경	13	33	28	28	26	27	31	30	47	41	34	31
	자연환경	37	66	32	44	50	41	34	39	46	33	39	42
	기타	125	65	71	70	81	148	98	106	96	91	82	94
제주	계	725	824	1,060	1,117	1,114	1,131	1,039	1,079	898	841	796	966
	직업	315	392	514	571	575	477	466	469	394	394	342	446
	가족	172	150	249	246	241	303	270	293	215	182	187	228
	주택	131	144	153	175	120	154	141	126	110	101	92	132
	교육	36	50	65	34	59	60	33	52	36	35	53	47
	주거환경	9	20	20	12	15	16	22	13	28	17	11	17
	자연환경	32	45	31	32	50	40	57	65	68	47	44	46
	기타	30	23	28	47	54	81	50	61	47	65	67	50

<표 2-30> 행정구역(광역지자체)별 청년인구(20대~30대) 전입사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2013~2023)
전국	20대	계	800,086	828,709	872,152	892,928	925,855	1,005,012	1,091,221	1,229,775	1,271,085	1,180,306	1,127,965	1,020,463
		직업	278,137	310,812	340,721	350,349	359,650	404,282	439,700	489,282	521,133	482,565	448,211	402,258
		가족	268,653	281,613	286,865	281,524	272,893	279,768	298,962	324,352	316,605	288,196	282,895	289,302
		주택	118,669	130,915	131,925	134,470	137,867	148,638	169,210	187,884	187,422	160,071	148,867	150,540
		교육	49,176	55,716	57,582	62,535	69,995	71,690	84,290	97,790	105,585	121,980	121,509	81,623
		주거환경	13,781	17,050	17,666	19,262	29,418	36,544	45,202	59,959	63,375	58,988	63,682	38,630
		자연환경	2,407	2,639	2,841	2,832	3,486	3,521	3,787	4,851	4,824	3,819	3,433	3,495
		기타	69,263	29,964	34,552	41,956	52,546	60,569	50,070	65,657	72,141	64,687	59,368	54,616
	30대	계	818,571	840,889	836,033	809,489	794,108	809,234	814,780	894,064	873,043	785,346	810,037	825,963
		직업	236,162	264,307	269,667	258,143	244,722	253,891	256,018	286,420	287,669	261,573	258,745	261,574
		가족	278,005	292,074	287,905	276,177	262,077	260,775	273,083	281,012	258,149	244,021	257,287	270,051
		주택	198,788	217,732	209,369	202,035	195,869	194,914	194,576	210,223	208,636	175,497	184,090	199,248
		교육	5,598	5,747	5,311	5,130	5,500	5,612	5,670	6,631	6,013	5,284	5,356	5,623
		주거환경	15,137	18,672	16,994	16,877	24,508	28,235	33,263	43,287	43,981	39,782	46,464	29,745
		자연환경	4,312	4,733	4,391	3,965	4,861	4,933	4,834	5,862	5,661	4,662	4,362	4,780
		기타	80,569	37,624	42,396	47,162	56,571	60,874	47,336	60,629	62,934	54,527	53,733	54,941
	청년층	계	1,618,657	1,669,598	1,708,185	1,702,417	1,719,963	1,814,246	1,906,001	2,123,839	2,144,128	1,965,652	1,938,002	1,846,426

	합계 (20대+ 30대)	직업	514,299	575,119	610,388	608,492	604,372	658,173	695,718	775,702	808,802	744,138	706,956	663,833
		가족	546,658	573,687	574,770	557,701	534,970	540,543	572,045	605,364	574,754	532,217	540,182	559,354
		주택	317,457	348,647	341,294	336,505	333,736	343,552	363,786	398,107	396,058	335,568	332,957	349,788
		교육	54,774	61,463	62,893	67,665	75,495	77,302	89,960	104,421	111,598	127,264	126,865	87,245
		주거환경	28,918	35,722	34,660	36,139	53,926	64,779	78,465	103,246	107,356	98,770	110,146	68,375
		자연환경	6,719	7,372	7,232	6,797	8,347	8,454	8,621	10,713	10,485	8,481	7,795	8,274
		기타	149,832	67,588	76,948	89,118	109,117	121,443	97,406	126,286	135,075	119,214	113,101	109,557
서울	20대	계	194,094	201,651	206,345	216,952	230,685	256,848	278,808	309,060	306,311	294,336	279,883	252,270
		직업	71,680	81,512	86,855	93,082	95,922	109,816	120,797	129,650	134,140	130,342	120,964	106,796
		가족	48,338	50,343	48,893	47,015	46,331	48,022	51,836	56,884	52,120	47,726	46,043	49,414
		주택	35,167	38,321	36,972	37,562	39,449	42,581	48,886	52,447	49,709	43,535	41,011	42,331
		교육	17,660	20,516	20,757	23,191	25,408	27,001	29,897	34,986	34,354	39,383	38,110	28,297
		주거환경	4,844	5,676	5,475	6,414	9,737	12,411	14,551	18,616	18,750	18,014	19,950	12,222
		자연환경	275	281	255	262	353	395	375	516	397	369	384	351
		기타	16,130	5,002	7,138	9,426	13,485	16,622	12,466	15,961	16,841	14,967	13,421	12,860
	30대	계	188,460	193,240	190,485	186,831	186,811	190,644	192,595	215,391	199,598	182,704	192,615	192,670
		직업	50,260	56,743	57,548	56,574	53,658	57,986	59,045	66,922	64,618	60,659	62,656	58,788
		가족	61,511	64,862	62,882	59,794	58,438	57,717	62,283	64,663	55,361	53,677	57,283	59,861
		주택	52,533	57,298	53,742	51,902	49,959	47,516	47,688	53,153	49,368	41,317	43,095	49,779
		교육	1,550	1,673	1,546	1,618	1,658	1,827	1,818	2,218	1,960	1,771	1,834	1,770

		주거환경	4,885	5,640	5,031	5,329	7,953	9,039	10,186	13,213	12,920	11,960	14,478	9,149
		자연환경	476	464	417	381	502	571	430	540	436	436	445	463
		기타	17,245	6,560	9,319	11,233	14,643	15,988	11,145	14,682	14,935	12,884	12,824	12,860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382,554	394,891	396,830	403,783	417,496	447,492	471,403	524,451	505,909	477,040	472,498	444,941
		직업	121,940	138,255	144,403	149,656	149,580	167,802	179,842	196,572	198,758	191,001	183,620	165,584
		가족	109,849	115,205	111,775	106,809	104,769	105,739	114,119	121,547	107,481	101,403	103,326	109,275
		주택	87,700	95,619	90,714	89,464	89,408	90,097	96,574	105,600	99,077	84,852	84,106	92,110
		교육	19,210	22,189	22,303	24,809	27,066	28,828	31,715	37,204	36,314	41,154	39,944	30,067
		주거환경	9,729	11,316	10,506	11,743	17,690	21,450	24,737	31,829	31,670	29,974	34,428	21,370
		자연환경	751	745	672	643	855	966	805	1,056	833	805	829	815
		기타	33,375	11,562	16,457	20,659	28,128	32,610	23,611	30,643	31,776	27,851	26,245	25,720
부산	20대	계	47,989	51,261	54,537	56,172	60,372	61,394	67,414	78,069	82,698	76,866	72,350	64,466
		직업	14,276	16,568	18,836	20,742	22,539	23,915	25,859	28,980	31,281	29,701	26,723	23,584
		가족	17,740	18,255	18,392	17,712	16,883	16,622	17,450	19,733	19,773	17,688	16,834	17,917
		주택	8,197	8,755	9,109	8,830	9,526	8,992	10,324	11,885	12,436	9,743	9,461	9,751
		교육	4,369	5,054	5,022	5,259	5,789	5,915	7,683	8,906	9,657	10,851	10,622	7,193
		주거환경	910	1,197	1,161	1,302	2,255	2,528	3,414	4,401	4,961	4,818	4,980	2,902
		자연환경	109	127	103	104	171	154	152	188	211	200	178	154
		기타	2,388	1,305	1,914	2,223	3,209	3,268	2,532	3,976	4,379	3,865	3,552	2,965
	30대	계	51,687	53,838	52,969	50,477	50,537	46,049	47,083	54,372	54,106	49,111	48,288	50,774

		직업	12,552	15,097	14,917	15,002	14,832	13,684	14,053	16,305	16,743	15,506	14,530	14,838
		가족	20,656	21,028	20,149	18,781	17,507	16,419	17,351	18,380	17,281	16,274	16,026	18,168
		주택	14,034	14,109	14,083	12,519	12,148	10,516	10,695	12,523	12,688	10,853	10,838	12,273
		교육	296	340	275	293	358	313	326	392	381	352	336	333
		주거환경	1,010	1,200	932	987	1,688	1,683	2,168	2,819	3,021	2,771	3,228	1,955
		자연환경	185	232	181	172	258	220	195	265	244	196	198	213
		기타	2,954	1,832	2,432	2,723	3,746	3,214	2,295	3,688	3,748	3,159	3,132	2,993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99,676	105,099	107,506	106,649	110,909	107,443	114,497	132,441	136,804	125,977	120,638	115,240
		직업	26,828	31,665	33,753	35,744	37,371	37,599	39,912	45,285	48,024	45,207	41,253	38,422
		가족	38,396	39,283	38,541	36,493	34,390	33,041	34,801	38,113	37,054	33,962	32,860	36,085
		주택	22,231	22,864	23,192	21,349	21,674	19,508	21,019	24,408	25,124	20,596	20,299	22,024
		교육	4,665	5,394	5,297	5,552	6,147	6,228	8,009	9,298	10,038	11,203	10,958	7,526
		주거환경	1,920	2,397	2,093	2,289	3,943	4,211	5,582	7,220	7,982	7,589	8,208	4,858
		자연환경	294	359	284	276	429	374	347	453	455	396	376	368
		기타	5,342	3,137	4,346	4,946	6,955	6,482	4,827	7,664	8,127	7,024	6,684	5,958
대구	20대	계	30,768	32,214	35,497	35,884	37,865	41,275	43,759	53,337	51,482	49,840	47,679	41,782
		직업	7,981	9,880	11,603	11,855	13,073	15,044	16,414	19,782	19,401	17,849	16,626	14,501
		가족	12,597	13,319	13,644	13,303	12,281	12,684	13,479	15,490	14,529	13,218	13,497	13,458
		주택	5,434	5,636	6,334	6,116	6,322	6,312	6,424	7,585	6,939	6,168	6,703	6,361
		교육	1,369	1,766	1,878	2,228	2,546	2,617	3,169	4,575	4,652	7,138	5,154	3,372

		주거환경	478	635	710	791	1,208	1,617	2,039	2,858	3,016	2,768	3,078	1,745
		자연환경	62	60	55	68	107	99	91	155	130	96	92	92
		기타	2,847	918	1,273	1,523	2,328	2,902	2,143	2,892	2,815	2,603	2,529	2,252
	30대	계	36,337	36,465	36,178	34,832	34,073	34,010	32,613	37,139	35,193	31,894	35,765	34,954
		직업	8,238	9,629	9,620	9,049	8,796	9,458	9,393	10,912	10,560	9,540	9,433	9,512
		가족	13,453	14,222	13,463	12,982	11,795	11,772	11,856	12,616	11,408	10,943	12,018	12,412
		주택	10,086	10,191	10,396	9,925	9,571	8,242	7,486	8,510	8,308	7,259	9,606	9,053
		교육	216	207	194	192	238	254	260	294	250	235	246	235
		주거환경	566	747	671	676	959	1,180	1,375	1,852	1,991	1,719	2,095	1,257
		자연환경	111	167	171	135	144	165	147	192	179	120	115	150
		기타	3,667	1,302	1,663	1,873	2,570	2,939	2,096	2,763	2,497	2,078	2,252	2,336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67,105	68,679	71,675	70,716	71,938	75,285	76,372	90,476	86,675	81,734	83,444	76,736
		직업	16,219	19,509	21,223	20,904	21,869	24,502	25,807	30,694	29,961	27,389	26,059	24,012
		가족	26,050	27,541	27,107	26,285	24,076	24,456	25,335	28,106	25,937	24,161	25,515	25,870
		주택	15,520	15,827	16,730	16,041	15,893	14,554	13,910	16,095	15,247	13,427	16,309	15,414
		교육	1,585	1,973	2,072	2,420	2,784	2,871	3,429	4,869	4,902	7,373	5,400	3,607
		주거환경	1,044	1,382	1,381	1,467	2,167	2,797	3,414	4,710	5,007	4,487	5,173	3,003
		자연환경	173	227	226	203	251	264	238	347	309	216	207	242
		기타	6,514	2,220	2,936	3,396	4,898	5,841	4,239	5,655	5,312	4,681	4,781	4,588
인천	20대	계	39,791	39,873	41,643	43,599	45,237	50,622	56,400	62,718	65,876	59,767	58,472	51,273

		직업	11,186	12,753	14,259	15,070	16,079	18,966	21,152	22,598	23,968	21,996	21,525	18,141
		가족	14,171	15,100	15,574	15,575	15,078	15,746	16,921	18,272	18,298	16,935	16,851	16,229
		주택	6,733	7,704	7,684	8,148	8,293	9,162	10,733	11,661	12,570	10,320	9,329	9,303
		교육	1,232	1,191	1,213	1,436	1,736	1,724	2,677	3,262	3,252	3,842	3,936	2,318
		주거환경	578	646	831	916	1,265	1,660	2,178	3,113	3,355	2,893	3,297	1,885
		자연환경	100	100	81	92	117	151	126	180	181	153	128	128
		기타	5,791	2,379	2,001	2,362	2,669	3,213	2,613	3,632	4,252	3,628	3,406	3,268
	30대	계	47,375	46,550	46,707	45,325	43,667	45,409	45,905	49,397	51,187	47,829	52,162	47,410
		직업	11,468	12,631	13,036	12,360	11,638	12,370	12,710	14,255	14,518	13,499	13,705	12,926
		가족	14,890	15,552	16,026	15,645	14,754	14,823	15,435	15,667	15,198	14,912	16,960	15,442
		주택	12,038	13,719	13,628	13,244	12,340	12,778	12,915	13,083	14,623	13,115	14,668	13,286
		교육	206	240	187	154	159	184	197	228	204	174	186	193
		주거환경	705	891	936	870	1,193	1,416	1,822	2,266	2,468	2,380	2,922	1,624
		자연환경	181	179	150	114	188	196	177	241	234	186	189	185
		기타	7,887	3,338	2,744	2,938	3,395	3,642	2,649	3,657	3,942	3,563	3,532	3,753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87,166	86,423	88,350	88,924	88,904	96,031	102,305	112,115	117,063	107,596	110,634	98,683
		직업	22,654	25,384	27,295	27,430	27,717	31,336	33,862	36,853	38,486	35,495	35,230	31,067
		가족	29,061	30,652	31,600	31,220	29,832	30,569	32,356	33,939	33,496	31,847	33,811	31,671
		주택	18,771	21,423	21,312	21,392	20,633	21,940	23,648	24,744	27,193	23,435	23,997	22,590
		교육	1,438	1,431	1,400	1,590	1,895	1,908	2,874	3,490	3,456	4,016	4,122	2,511

		주거환경	1,283	1,537	1,767	1,786	2,458	3,076	4,000	5,379	5,823	5,273	6,219	3,509
		자연환경	281	279	231	206	305	347	303	421	415	339	317	313
		기타	13,678	5,717	4,745	5,300	6,064	6,855	5,262	7,289	8,194	7,191	6,938	7,021
광주	20대	계	24,900	26,207	26,444	26,429	26,984	30,597	34,520	38,813	40,347	36,517	34,048	31,437
		직업	6,261	7,717	7,891	8,382	8,284	10,100	11,341	13,141	14,125	12,305	11,283	10,075
		가족	8,920	9,453	9,654	9,412	9,263	9,620	10,587	10,840	10,836	9,635	9,556	9,798
		주택	4,975	5,331	5,052	4,371	4,849	5,272	6,320	6,644	6,504	6,023	4,918	5,478
		교육	965	1,254	1,213	1,412	1,537	1,958	2,253	2,987	3,326	3,623	3,635	2,197
		주거환경	420	671	790	731	958	1,293	1,602	2,202	2,430	2,356	2,313	1,433
		자연환경	47	58	42	71	56	99	93	123	117	81	72	78
		기타	3,312	1,723	1,802	2,050	2,037	2,255	2,324	2,876	3,009	2,494	2,271	2,378
	30대	계	26,230	28,477	26,448	24,811	23,708	24,265	24,670	25,821	25,728	22,733	21,109	24,909
		직업	5,514	7,257	6,867	6,445	5,875	6,239	6,194	6,873	7,097	6,205	5,664	6,385
		가족	8,881	9,874	9,197	8,780	8,199	8,058	8,482	8,379	7,864	7,047	7,069	8,348
		주택	7,246	8,203	7,239	6,705	6,602	6,693	6,761	6,658	6,741	6,055	5,123	6,730
		교육	214	252	222	213	207	236	221	271	289	252	203	235
		주거환경	431	674	660	536	748	854	981	1,260	1,383	1,292	1,315	921
		자연환경	79	90	68	75	81	99	91	89	109	73	82	85
		기타	3,865	2,127	2,195	2,057	1,996	2,086	1,940	2,291	2,245	1,809	1,653	2,206
	청년층	계	51,130	54,684	52,892	51,240	50,692	54,862	59,190	64,634	66,075	59,250	55,157	56,346

	합계 (20대+ 30대)	직업	11,775	14,974	14,758	14,827	14,159	16,339	17,535	20,014	21,222	18,510	16,947	16,460
		가족	17,801	19,327	18,851	18,192	17,462	17,678	19,069	19,219	18,700	16,682	16,625	18,146
		주택	12,221	13,534	12,291	11,076	11,451	11,965	13,081	13,302	13,245	12,078	10,041	12,208
		교육	1,179	1,506	1,435	1,625	1,744	2,194	2,474	3,258	3,615	3,875	3,838	2,431
		주거환경	851	1,345	1,450	1,267	1,706	2,147	2,583	3,462	3,813	3,648	3,628	2,355
		자연환경	126	148	110	146	137	198	184	212	226	154	154	163
		기타	7,177	3,850	3,997	4,107	4,033	4,341	4,264	5,167	5,254	4,303	3,924	4,583
대전	20대	계	28,049	29,095	30,810	33,379	34,688	37,874	42,006	47,903	49,519	48,266	45,412	38,818
		직업	9,245	11,001	11,743	12,846	13,665	15,128	16,538	18,675	19,389	19,045	17,795	15,006
		가족	8,832	9,611	9,579	9,361	9,110	9,457	10,173	10,849	10,484	9,953	9,421	9,712
		주택	3,814	4,270	4,749	5,669	5,312	5,465	6,710	7,672	7,736	6,834	5,702	5,812
		교육	2,422	2,659	2,818	3,217	3,547	3,995	4,490	5,666	6,560	6,988	7,522	4,535
		주거환경	447	605	641	728	1,116	1,469	1,966	2,562	2,657	2,586	2,689	1,588
		자연환경	61	58	64	65	78	100	86	109	113	94	67	81
		기타	3,228	891	1,216	1,493	1,860	2,260	2,043	2,370	2,580	2,766	2,216	2,084
	30대	계	25,444	25,583	24,944	25,316	24,600	24,355	24,911	27,423	26,372	25,660	24,240	25,350
		직업	7,314	8,124	8,072	8,147	8,056	8,187	8,046	9,102	9,086	8,744	8,356	8,294
		가족	8,416	9,172	8,719	8,466	7,914	7,686	7,992	8,081	7,374	7,457	7,433	8,065
		주택	5,701	6,411	6,124	6,447	5,842	5,406	5,832	6,507	6,415	5,992	5,087	5,979
		교육	213	206	210	218	270	228	214	264	255	229	239	231

		주거환경	445	578	512	567	814	853	1,203	1,528	1,413	1,306	1,472	972
		자연환경	89	81	87	95	107	102	98	109	86	90	85	94
		기타	3,266	1,011	1,220	1,376	1,597	1,893	1,526	1,832	1,743	1,842	1,568	1,716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53,493	54,678	55,754	58,695	59,288	62,229	66,917	75,326	75,891	73,926	69,652	64,168
		직업	16,559	19,125	19,815	20,993	21,721	23,315	24,584	27,777	28,475	27,789	26,151	23,300
		가족	17,248	18,783	18,298	17,827	17,024	17,143	18,165	18,930	17,858	17,410	16,854	17,776
		주택	9,515	10,681	10,873	12,116	11,154	10,871	12,542	14,179	14,151	12,826	10,789	11,791
		교육	2,635	2,865	3,028	3,435	3,817	4,223	4,704	5,930	6,815	7,217	7,761	4,766
		주거환경	892	1,183	1,153	1,295	1,930	2,322	3,169	4,090	4,070	3,892	4,161	2,560
		자연환경	150	139	151	160	185	202	184	218	199	184	152	175
		기타	6,494	1,902	2,436	2,869	3,457	4,153	3,569	4,202	4,323	4,608	3,784	3,800
울산	20대	계	18,705	20,106	21,450	20,113	18,234	18,330	20,358	22,381	23,953	22,288	21,514	20,676
		직업	7,228	7,833	8,719	7,743	6,460	6,567	7,351	7,904	8,615	8,479	8,483	7,762
		가족	7,927	8,067	8,360	8,176	7,589	7,563	7,871	8,366	8,182	7,343	7,273	7,883
		주택	2,631	3,087	3,088	2,667	2,427	2,365	2,852	2,941	3,495	2,693	2,449	2,790
		교육	381	472	476	526	586	630	750	921	1,158	1,577	1,189	788
		주거환경	168	247	266	285	419	435	610	826	919	862	912	541
		자연환경	26	36	55	38	41	45	54	66	68	56	58	49
		기타	344	364	486	678	712	725	870	1,357	1,516	1,278	1,150	862
	30대	계	18,788	20,083	19,961	17,406	15,854	15,070	15,866	16,437	15,902	14,186	15,544	16,827

		직업	6,867	7,333	7,594	6,144	5,145	4,990	4,814	5,145	4,901	4,645	4,894	5,679
		가족	6,499	6,868	6,485	6,314	5,643	5,298	5,648	5,761	5,183	4,829	5,325	5,805
		주택	4,546	4,950	4,852	3,871	3,753	3,488	3,902	3,481	3,702	2,880	3,508	3,903
		교육	66	75	65	61	69	50	64	84	66	67	64	66
		주거환경	256	336	266	246	421	404	517	606	613	574	653	445
		자연환경	71	69	81	62	63	59	87	121	85	78	62	76
		기타	483	452	618	708	760	781	834	1,239	1,352	1,113	1,038	853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37,493	40,189	41,411	37,519	34,088	33,400	36,224	38,818	39,855	36,474	37,058	37,503
		직업	14,095	15,166	16,313	13,887	11,605	11,557	12,165	13,049	13,516	13,124	13,377	13,441
		가족	14,426	14,935	14,845	14,490	13,232	12,861	13,519	14,127	13,365	12,172	12,598	13,688
		주택	7,177	8,037	7,940	6,538	6,180	5,853	6,754	6,422	7,197	5,573	5,957	6,693
		교육	447	547	541	587	655	680	814	1,005	1,224	1,644	1,253	854
		주거환경	424	583	532	531	840	839	1,127	1,432	1,532	1,436	1,565	986
		자연환경	97	105	136	100	104	104	141	187	153	134	120	126
		기타	827	816	1,104	1,386	1,472	1,506	1,704	2,596	2,868	2,391	2,188	1,714
세종	20대	계	2,564	4,162	5,950	6,751	7,422	8,834	9,061	10,062	10,739	9,684	8,977	7,655
		직업	1,217	2,037	2,853	3,226	3,123	3,498	3,675	4,158	4,584	3,969	3,577	3,265
		가족	703	1,068	1,722	1,826	2,068	2,434	2,587	2,747	2,753	2,582	2,418	2,083
		주택	166	409	551	653	951	1,368	1,532	1,635	1,757	1,481	1,376	1,080
		교육	241	312	313	410	452	751	562	584	594	736	729	517

		주거환경	33	77	69	112	162	223	324	343	389	379	392	228
		자연환경	23	16	19	32	40	26	29	51	42	35	20	30
		기타	181	243	423	492	626	534	352	544	620	502	465	453
	30대	계	2,429	4,861	7,144	6,964	8,101	8,826	9,260	8,910	9,188	8,150	7,796	7,421
		직업	1,247	2,466	3,080	2,973	2,785	2,910	3,078	3,041	3,080	2,736	2,626	2,729
		가족	665	1,209	2,030	2,088	2,420	2,756	2,907	2,644	2,526	2,354	2,333	2,176
		주택	255	813	1,312	1,179	1,881	2,194	2,377	2,197	2,588	2,097	1,830	1,702
		교육	33	45	56	61	62	60	61	50	49	32	49	51
		주거환경	20	83	106	128	197	245	329	350	335	362	414	234
		자연환경	27	31	34	32	44	47	35	54	45	28	31	37
		기타	182	214	526	503	712	614	473	574	565	541	513	492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4,993	9,023	13,094	13,715	15,523	17,660	18,321	18,972	19,927	17,834	16,773	15,076
		직업	2,464	4,503	5,933	6,199	5,908	6,408	6,753	7,199	7,664	6,705	6,203	5,994
		가족	1,368	2,277	3,752	3,914	4,488	5,190	5,494	5,391	5,279	4,936	4,751	4,258
		주택	421	1,222	1,863	1,832	2,832	3,562	3,909	3,832	4,345	3,578	3,206	2,782
		교육	274	357	369	471	514	811	623	634	643	768	778	567
		주거환경	53	160	175	240	359	468	653	693	724	741	806	461
		자연환경	50	47	53	64	84	73	64	105	87	63	51	67
		기타	363	457	949	995	1,338	1,148	825	1,118	1,185	1,043	978	945
경기	20대	계	172,361	175,430	187,515	195,880	204,339	227,972	250,393	287,451	303,555	267,478	255,001	229,761

		직업	61,791	66,352	72,543	77,220	80,168	93,181	98,992	114,325	127,081	112,030	102,856	91,504
		가족	58,884	62,360	65,267	64,784	64,366	67,111	75,761	83,748	81,562	72,603	72,714	69,924
		주택	25,493	27,706	29,014	30,443	30,956	34,913	41,122	45,286	45,985	37,276	34,279	34,770
		교육	7,146	8,228	8,559	9,476	9,950	10,125	11,842	14,467	16,232	17,495	16,719	11,840
		주거환경	2,700	3,196	3,571	3,678	5,897	7,627	9,806	13,287	13,651	12,138	13,685	8,112
		자연환경	389	409	465	491	595	622	718	1,009	1,033	730	682	649
		기타	15,958	7,179	8,096	9,788	12,407	14,393	12,152	15,329	18,011	15,206	14,066	12,962
	30대	계	195,955	197,297	198,050	196,825	193,327	208,500	212,559	234,893	238,746	207,311	217,310	209,161
		직업	56,526	60,673	61,958	61,540	58,424	63,741	63,434	72,880	75,861	66,607	65,676	64,302
		가족	63,800	67,505	67,810	66,378	63,417	65,860	71,584	74,736	71,684	66,979	72,387	68,376
		주택	49,084	53,195	52,464	51,952	50,195	53,750	54,516	58,726	60,765	48,324	51,176	53,104
		교육	1,042	973	838	810	877	927	966	1,125	905	689	754	901
		주거환경	3,359	4,179	3,929	3,729	5,375	6,968	8,263	11,042	11,057	9,649	11,810	7,215
		자연환경	823	955	787	777	988	1,077	1,124	1,379	1,377	995	1,025	1,028
		기타	21,321	9,817	10,264	11,639	14,051	16,177	12,672	15,005	17,097	14,068	14,482	14,236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368,316	372,727	385,565	392,705	397,666	436,472	462,952	522,344	542,301	474,789	472,311	438,923
		직업	118,317	127,025	134,501	138,760	138,592	156,922	162,426	187,205	202,942	178,637	168,532	155,805
		가족	122,684	129,865	133,077	131,162	127,783	132,971	147,345	158,484	153,246	139,582	145,101	138,300
		주택	74,577	80,901	81,478	82,395	81,151	88,663	95,638	104,012	106,750	85,600	85,455	87,875
		교육	8,188	9,201	9,397	10,286	10,827	11,052	12,808	15,592	17,137	18,184	17,473	12,740

		주거환경	6,059	7,375	7,500	7,407	11,272	14,595	18,069	24,329	24,708	21,787	25,495	15,327
		자연환경	1,212	1,364	1,252	1,268	1,583	1,699	1,842	2,388	2,410	1,725	1,707	1,677
		기타	37,279	16,996	18,360	21,427	26,458	30,570	24,824	30,334	35,108	29,274	28,548	27,198
강원	20대	계	26,688	27,592	30,988	28,920	30,088	29,141	31,449	34,298	36,348	33,867	32,764	31,104
		직업	10,625	11,559	14,362	12,163	13,056	11,942	13,282	15,151	16,042	14,150	13,309	13,240
		가족	8,817	9,236	9,561	9,564	9,476	9,163	9,255	9,565	9,927	8,968	8,742	9,298
		주택	2,279	2,400	2,470	2,653	2,862	3,411	3,568	4,062	4,284	3,980	3,637	3,237
		교육	3,077	3,111	3,100	3,006	3,319	2,983	3,556	2,966	3,215	4,264	4,477	3,370
		주거환경	348	391	398	548	623	717	841	1,347	1,491	1,254	1,256	838
		자연환경	104	118	132	189	265	198	213	247	265	192	180	191
		기타	1,438	777	965	797	487	727	734	960	1,124	1,059	1,163	930
	30대	계	20,776	20,935	21,209	21,446	20,572	20,380	20,234	21,402	21,751	19,614	19,082	20,673
		직업	7,537	7,680	8,204	8,340	8,030	7,314	7,515	8,039	8,497	7,593	7,386	7,830
		가족	7,103	7,347	7,215	7,248	7,000	6,773	6,527	6,542	6,500	6,072	5,790	6,738
		주택	3,832	4,156	3,850	4,050	3,904	4,534	4,445	4,535	4,340	3,930	3,842	4,129
		교육	218	184	185	180	209	192	181	187	190	175	166	188
		주거환경	344	412	394	454	564	566	639	940	935	788	799	621
		자연환경	257	282	250	268	341	302	265	366	377	300	256	297
		기타	1,485	874	1,111	906	524	699	662	793	912	756	843	870
	청년층	계	47,464	48,527	52,197	50,366	50,660	49,521	51,683	55,700	58,099	53,481	51,846	51,777

	합계 (20대+ 30대)	직업	18,162	19,239	22,566	20,503	21,086	19,256	20,797	23,190	24,539	21,743	20,695	21,071
		가족	15,920	16,583	16,776	16,812	16,476	15,936	15,782	16,107	16,427	15,040	14,532	16,036
		주택	6,111	6,556	6,320	6,703	6,766	7,945	8,013	8,597	8,624	7,910	7,479	7,366
		교육	3,295	3,295	3,285	3,186	3,528	3,175	3,737	3,153	3,405	4,439	4,643	3,558
		주거환경	692	803	792	1,002	1,187	1,283	1,480	2,287	2,426	2,042	2,055	1,459
		자연환경	361	400	382	457	606	500	478	613	642	492	436	488
		기타	2,923	1,651	2,076	1,703	1,011	1,426	1,396	1,753	2,036	1,815	2,006	1,800
충북	20대	계	25,674	27,277	28,514	28,538	29,320	32,466	34,386	40,304	41,952	40,139	38,422	33,363
		직업	8,956	10,477	11,709	11,183	11,656	14,746	15,603	17,607	18,759	17,455	15,771	13,993
		가족	8,703	9,278	9,363	9,341	9,135	9,195	9,480	11,044	10,613	10,093	9,912	9,651
		주택	2,873	3,326	3,345	3,540	3,227	3,433	3,962	5,185	5,200	4,464	4,526	3,916
		교육	1,992	2,439	2,361	2,363	2,604	2,180	2,806	2,710	3,245	4,300	4,658	2,878
		주거환경	336	487	457	427	684	750	1,009	1,480	1,635	1,520	1,659	949
		자연환경	112	121	112	108	148	158	160	233	217	160	137	151
		기타	2,702	1,149	1,167	1,576	1,866	2,004	1,366	2,045	2,283	2,147	1,759	1,824
	30대	계	22,904	23,133	23,276	21,907	21,205	22,522	22,370	25,225	24,762	22,864	23,700	23,079
		직업	7,808	8,579	8,783	7,993	7,802	8,711	8,784	9,609	9,770	9,317	8,790	8,722
		가족	7,408	7,491	7,695	7,339	6,884	6,903	6,948	7,601	6,776	6,355	6,914	7,119
		주택	4,289	4,844	4,708	4,358	4,036	4,347	4,370	5,055	5,019	4,345	5,332	4,609
		교육	196	211	198	168	163	145	166	192	197	174	179	181

		주거환경	377	483	405	348	456	500	649	914	1,019	930	937	638
		자연환경	183	211	162	146	162	201	207	245	227	195	159	191
		기타	2,643	1,314	1,325	1,555	1,702	1,715	1,246	1,609	1,754	1,548	1,389	1,618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48,578	50,410	51,790	50,445	50,525	54,988	56,756	65,529	66,714	63,003	62,122	56,442
		직업	16,764	19,056	20,492	19,176	19,458	23,457	24,387	27,216	28,529	26,772	24,561	22,715
		가족	16,111	16,769	17,058	16,680	16,019	16,098	16,428	18,645	17,389	16,448	16,826	16,770
		주택	7,162	8,170	8,053	7,898	7,263	7,780	8,332	10,240	10,219	8,809	9,858	8,526
		교육	2,188	2,650	2,559	2,531	2,767	2,325	2,972	2,902	3,442	4,474	4,837	3,059
		주거환경	713	970	862	775	1,140	1,250	1,658	2,394	2,654	2,450	2,596	1,587
		자연환경	295	332	274	254	310	359	367	478	444	355	296	342
		기타	5,345	2,463	2,492	3,131	3,568	3,719	2,612	3,654	4,037	3,695	3,148	3,442
충남	20대	계	37,221	38,656	40,169	40,456	40,871	44,095	44,606	50,281	52,186	49,837	48,426	44,255
		직업	15,750	17,575	17,745	17,643	18,260	19,629	19,970	22,843	24,032	21,856	20,384	19,608
		가족	11,767	12,307	12,412	12,630	11,905	12,447	12,512	13,468	13,470	12,525	12,395	12,531
		주택	3,550	4,355	5,231	5,446	5,161	5,998	5,830	6,477	6,243	6,335	5,728	5,487
		교육	1,537	1,701	2,203	2,258	2,815	2,777	3,092	3,112	3,474	4,689	5,310	2,997
		주거환경	459	635	662	719	956	1,179	1,381	1,882	2,247	2,026	2,128	1,298
		자연환경	158	157	166	157	194	194	218	293	271	212	197	202
		기타	4,000	1,926	1,750	1,603	1,580	1,871	1,603	2,206	2,449	2,194	2,284	2,133
	30대	계	32,426	33,485	32,656	32,570	32,201	32,909	31,165	34,401	33,658	30,988	32,445	32,628

		직업	12,602	14,424	13,778	13,249	13,068	12,862	12,706	14,177	14,311	12,732	12,791	13,336
		가족	10,068	10,131	9,941	9,760	9,511	9,722	9,634	9,663	8,907	8,328	8,870	9,503
		주택	5,260	6,139	6,414	7,201	6,908	7,462	6,110	6,818	6,629	6,535	7,147	6,602
		교육	221	213	205	174	184	183	170	201	185	197	182	192
		주거환경	466	558	541	546	725	851	875	1,307	1,442	1,264	1,410	908
		자연환경	269	232	206	225	274	204	244	294	330	270	242	254
		기타	3,540	1,788	1,571	1,415	1,531	1,625	1,426	1,941	1,854	1,662	1,803	1,832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69,647	72,141	72,825	73,026	73,072	77,004	75,771	84,682	85,844	80,825	80,871	76,883
		직업	28,352	31,999	31,523	30,892	31,328	32,491	32,676	37,020	38,343	34,588	33,175	32,944
		가족	21,835	22,438	22,353	22,390	21,416	22,169	22,146	23,131	22,377	20,853	21,265	22,034
		주택	8,810	10,494	11,645	12,647	12,069	13,460	11,940	13,295	12,872	12,870	12,875	12,089
		교육	1,758	1,914	2,408	2,432	2,999	2,960	3,262	3,313	3,659	4,886	5,492	3,189
		주거환경	925	1,193	1,203	1,265	1,681	2,030	2,256	3,189	3,689	3,290	3,538	2,205
		자연환경	427	389	372	382	468	398	462	587	601	482	439	455
		기타	7,540	3,714	3,321	3,018	3,111	3,496	3,029	4,147	4,303	3,856	4,087	3,966
전북	20대	계	26,408	26,923	27,894	28,442	29,166	29,396	31,180	36,015	38,543	35,286	33,973	31,202
		직업	6,959	7,795	8,698	8,657	8,145	9,480	10,596	12,200	13,456	12,134	11,358	9,953
		가족	10,522	11,480	11,781	11,637	10,781	10,995	10,871	11,486	11,765	10,549	10,425	11,117
		주택	3,615	3,838	3,818	3,816	3,619	3,646	3,976	4,713	4,863	4,488	4,123	4,047
		교육	1,168	1,335	1,553	1,507	3,001	2,106	2,464	2,996	3,564	3,624	3,882	2,473

		주거환경	434	556	530	573	844	919	1,092	1,550	1,813	1,717	1,660	1,063
		자연환경	172	223	217	294	288	232	211	222	292	245	207	237
		기타	3,538	1,696	1,297	1,958	2,488	2,018	1,970	2,848	2,790	2,529	2,318	2,314
	30대	계	27,321	28,286	26,744	25,333	23,358	23,645	23,097	25,441	24,434	21,918	21,485	24,642
		직업	7,092	7,974	7,877	7,305	6,402	6,762	6,930	7,759	7,832	6,879	6,615	7,221
		가족	9,902	10,854	10,436	9,825	8,792	8,744	8,367	8,464	7,831	7,069	7,211	8,863
		주택	5,604	6,408	5,928	5,300	4,692	4,997	4,806	5,208	4,860	4,577	4,540	5,175
		교육	257	260	250	221	244	204	201	257	237	191	205	230
		주거환경	441	646	483	473	670	694	750	964	1,135	1,081	1,026	760
		자연환경	245	308	265	292	297	259	276	280	301	261	232	274
		기타	3,780	1,836	1,505	1,917	2,261	1,985	1,767	2,509	2,238	1,860	1,656	2,119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53,729	55,209	54,638	53,775	52,524	53,041	54,277	61,456	62,977	57,204	55,458	55,844
		직업	14,051	15,769	16,575	15,962	14,547	16,242	17,526	19,959	21,288	19,013	17,973	17,173
		가족	20,424	22,334	22,217	21,462	19,573	19,739	19,238	19,950	19,596	17,618	17,636	19,981
		주택	9,219	10,246	9,746	9,116	8,311	8,643	8,782	9,921	9,723	9,065	8,663	9,221
		교육	1,425	1,595	1,803	1,728	3,245	2,310	2,665	3,253	3,801	3,815	4,087	2,702
		주거환경	875	1,202	1,013	1,046	1,514	1,613	1,842	2,514	2,948	2,798	2,686	1,823
		자연환경	417	531	482	586	585	491	487	502	593	506	439	511
		기타	7,318	3,532	2,802	3,875	4,749	4,003	3,737	5,357	5,028	4,389	3,974	4,433
전남	20대	계	25,924	27,424	28,217	27,674	28,168	30,017	33,318	35,466	35,599	32,610	30,766	30,471

		직업	7,879	9,240	10,085	9,852	10,289	11,281	13,513	13,818	13,739	12,983	11,884	11,324
		가족	11,636	12,087	11,859	11,472	10,981	11,379	11,702	12,144	11,915	10,814	10,108	11,463
		주택	2,844	3,102	2,837	2,675	3,026	3,031	3,314	3,998	4,212	3,375	3,291	3,246
		교육	1,236	1,164	1,158	1,331	1,345	1,427	1,586	1,622	1,682	1,836	2,022	1,492
		주거환경	336	463	439	422	630	740	941	1,266	1,379	1,162	1,184	815
		자연환경	206	308	414	269	326	352	402	451	402	316	276	338
		기타	1,787	1,060	1,425	1,653	1,571	1,807	1,860	2,167	2,270	2,124	2,001	1,793
	30대	계	25,939	27,383	27,526	25,221	24,781	24,111	24,423	25,928	23,827	20,894	20,841	24,625
		직업	8,129	9,329	9,697	8,645	8,658	8,255	8,733	9,296	8,538	7,744	7,510	8,594
		가족	10,195	10,330	10,332	9,585	8,978	8,621	8,550	8,442	7,381	6,649	6,802	8,715
		주택	4,771	5,437	4,847	4,386	4,434	4,399	4,366	4,678	4,621	3,743	3,708	4,490
		교육	217	223	212	198	201	203	177	217	195	156	155	196
		주거환경	395	494	402	372	515	604	688	916	885	716	768	614
		자연환경	324	382	484	323	376	374	386	432	370	302	285	367
		기타	1,908	1,188	1,552	1,712	1,619	1,655	1,523	1,947	1,837	1,584	1,613	1,649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51,863	54,807	55,743	52,895	52,949	54,128	57,741	61,394	59,426	53,504	51,607	55,096
		직업	16,008	18,569	19,782	18,497	18,947	19,536	22,246	23,114	22,277	20,727	19,394	19,918
		가족	21,831	22,417	22,191	21,057	19,959	20,000	20,252	20,586	19,296	17,463	16,910	20,178
		주택	7,615	8,539	7,684	7,061	7,460	7,430	7,680	8,676	8,833	7,118	6,999	7,736
		교육	1,453	1,387	1,370	1,529	1,546	1,630	1,763	1,839	1,877	1,992	2,177	1,688

		주거환경	731	957	841	794	1,145	1,344	1,629	2,182	2,264	1,878	1,952	1,429
		자연환경	530	690	898	592	702	726	788	883	772	618	561	705
		기타	3,695	2,248	2,977	3,365	3,190	3,462	3,383	4,114	4,107	3,708	3,614	3,442
경북	20대	계	43,496	43,249	45,336	43,076	42,283	44,120	47,453	51,086	56,712	52,201	52,069	47,371
		직업	17,480	17,267	18,731	17,167	16,611	17,809	19,411	20,573	23,674	21,290	20,539	19,141
		가족	15,746	15,795	16,141	15,444	14,329	14,614	14,855	15,024	15,525	14,091	13,985	15,050
		주택	4,242	4,985	4,832	4,592	4,618	4,533	5,016	6,033	5,989	4,997	4,555	4,945
		교육	2,301	2,382	2,712	2,692	2,863	2,940	3,928	3,985	5,639	6,215	7,547	3,928
		주거환경	596	673	815	742	1,275	1,231	1,433	1,740	1,911	1,859	1,850	1,284
		자연환경	252	249	295	257	253	303	352	412	475	344	316	319
		기타	2,879	1,898	1,810	2,182	2,334	2,690	2,458	3,319	3,499	3,405	3,277	2,705
	30대	계	38,109	40,061	39,686	35,673	34,493	33,979	34,596	36,372	35,751	31,092	30,991	35,528
		직업	13,709	14,883	15,426	13,154	12,207	12,145	12,463	12,963	13,584	12,089	12,052	13,152
		가족	13,444	13,914	13,651	12,471	11,359	11,083	11,354	11,328	10,387	9,293	9,315	11,600
		주택	6,789	7,715	7,163	6,667	6,969	6,629	6,577	7,085	6,855	5,139	5,363	6,632
		교육	291	300	321	269	284	308	313	311	291	283	279	295
		주거환경	561	701	715	639	976	955	1,097	1,340	1,317	1,120	1,182	964
		자연환경	391	448	436	351	380	411	449	449	463	431	372	416
		기타	2,924	2,100	1,974	2,122	2,318	2,448	2,343	2,896	2,854	2,737	2,428	2,468
	청년층	계	81,605	83,310	85,022	78,749	76,776	78,099	82,049	87,458	92,463	83,293	83,060	82,899

	합계 (20대+ 30대)	직업	31,189	32,150	34,157	30,321	28,818	29,954	31,874	33,536	37,258	33,379	32,591	32,293
		가족	29,190	29,709	29,792	27,915	25,688	25,697	26,209	26,352	25,912	23,384	23,300	26,650
		주택	11,031	12,700	11,995	11,259	11,587	11,162	11,593	13,118	12,844	10,136	9,918	11,577
		교육	2,592	2,682	3,033	2,961	3,147	3,248	4,241	4,296	5,930	6,498	7,826	4,223
		주거환경	1,157	1,374	1,530	1,381	2,251	2,186	2,530	3,080	3,228	2,979	3,032	2,248
		자연환경	643	697	731	608	633	714	801	861	938	775	688	735
		기타	5,803	3,998	3,784	4,304	4,652	5,138	4,801	6,215	6,353	6,142	5,705	5,172
경남	20대	계	47,645	48,871	51,392	50,277	48,368	49,702	53,276	58,369	61,411	57,825	55,589	52,975
		직업	16,876	17,850	20,169	18,999	16,799	17,671	19,715	21,670	22,919	21,444	20,348	19,496
		가족	20,365	20,637	21,098	20,637	19,705	19,170	19,844	20,509	20,911	19,695	19,147	20,156
		주택	5,488	6,251	5,619	5,950	5,763	6,524	6,712	7,737	7,599	6,300	5,566	6,319
		교육	1,858	1,889	1,992	1,935	2,203	2,255	3,154	3,615	4,475	4,916	5,533	3,075
		주거환경	570	760	689	697	1,112	1,376	1,563	1,867	2,142	2,076	2,058	1,355
		자연환경	238	237	269	241	323	246	314	379	353	326	286	292
		기타	2,250	1,247	1,556	1,818	2,463	2,460	1,974	2,592	3,012	3,068	2,651	2,281
	30대	계	48,910	51,069	51,002	46,911	44,785	42,835	42,410	44,072	41,947	38,212	36,955	44,464
		직업	16,406	17,943	18,935	16,809	14,575	13,743	14,007	14,774	14,642	13,451	12,731	15,274
		가족	18,045	18,585	18,428	17,128	16,101	15,347	15,018	14,802	13,528	12,932	12,822	15,703
		주택	10,243	11,435	10,269	9,646	9,884	9,558	9,369	9,679	8,830	7,233	7,054	9,382
		교육	283	268	256	226	232	227	258	271	259	225	208	247

		주거환경	694	830	771	731	977	1,085	1,315	1,497	1,589	1,417	1,510	1,129
		자연환경	397	404	365	303	400	357	369	454	433	364	363	383
		기타	2,842	1,604	1,978	2,068	2,616	2,518	2,074	2,595	2,666	2,590	2,267	2,347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96,555	99,940	102,394	97,188	93,153	92,537	95,686	102,441	103,358	96,037	92,544	97,439
		직업	33,282	35,793	39,104	35,808	31,374	31,414	33,722	36,444	37,561	34,895	33,079	34,771
		가족	38,410	39,222	39,526	37,765	35,806	34,517	34,862	35,311	34,439	32,627	31,969	35,859
		주택	15,731	17,686	15,888	15,596	15,647	16,082	16,081	17,416	16,429	13,533	12,620	15,701
		교육	2,141	2,157	2,248	2,161	2,435	2,482	3,412	3,886	4,734	5,141	5,741	3,322
		주거환경	1,264	1,590	1,460	1,428	2,089	2,461	2,878	3,364	3,731	3,493	3,568	2,484
		자연환경	635	641	634	544	723	603	683	833	786	690	649	675
		기타	5,092	2,851	3,534	3,886	5,079	4,978	4,048	5,187	5,678	5,658	4,918	4,628
제주	20대	계	7,809	8,718	9,451	10,386	11,765	12,329	12,834	14,162	13,854	13,499	12,620	11,584
		직업	2,747	3,396	3,920	4,519	5,521	5,509	5,491	6,207	5,928	5,537	4,786	4,869
		가족	2,985	3,217	3,565	3,635	3,612	3,546	3,778	4,183	3,942	3,778	3,574	3,620
		주택	1,168	1,439	1,220	1,339	1,506	1,632	1,929	1,923	1,901	2,059	2,213	1,666
		교육	222	243	254	288	294	306	381	430	506	503	464	354
		주거환경	124	135	162	177	277	369	452	619	629	560	591	372
		자연환경	73	81	97	94	131	147	193	217	257	210	153	150
		기타	490	207	233	334	424	820	610	583	691	852	839	553
	30대	계	9,481	10,143	11,048	11,641	12,035	11,725	11,023	11,440	10,893	10,186	9,709	10,848

		직업	2,893	3,542	4,275	4,414	4,771	4,534	4,113	4,368	4,031	3,627	3,330	3,991
		가족	3,069	3,130	3,446	3,593	3,365	3,193	3,147	3,243	2,960	2,851	2,729	3,157
		주택	2,477	2,709	2,350	2,683	2,751	2,405	2,361	2,327	2,284	2,103	2,173	2,420
		교육	79	77	91	74	85	71	77	69	100	82	71	80
		주거환경	182	220	240	246	277	338	406	473	458	453	445	340
		자연환경	204	198	247	214	256	289	254	352	365	337	221	267
		기타	577	267	399	417	530	895	665	608	695	733	740	593
	청년층 합계 (20대+ 30대)	계	17,290	18,861	20,499	22,027	23,800	24,054	23,857	25,602	24,747	23,685	22,329	22,432
		직업	5,640	6,938	8,195	8,933	10,292	10,043	9,604	10,575	9,959	9,164	8,116	8,860
		가족	6,054	6,347	7,011	7,228	6,977	6,739	6,925	7,426	6,902	6,629	6,303	6,776
		주택	3,645	4,148	3,570	4,022	4,257	4,037	4,290	4,250	4,185	4,162	4,386	4,087
		교육	301	320	345	362	379	377	458	499	606	585	535	433
		주거환경	306	355	402	423	554	707	858	1,092	1,087	1,013	1,036	712
		자연환경	277	279	344	308	387	436	447	569	622	547	374	417
		기타	1,067	474	632	751	954	1,715	1,275	1,191	1,386	1,585	1,579	1,146

제4절 청년인구의 이동원인 : 일자리 분석

1. 일자리 미스매치

▮ **일자리 미스매치의 개념은 국내에서는 수급불일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

○ 미스매치의 개념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구조적인 균형을 갖기 위한 미스매치의 측정이 강조되기 시작

○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 등으로 구분

▮ **대체적으로 기존 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미스매치 문제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나 구인 구직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고 미스매치의 구직자 특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있음**

○ 청년층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

1)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

▮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1)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2)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등 중소기업의 처우에 관한 문제, (3) 구인자와 구직자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선호직종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음**

▮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 학력의 차이, (2) 직업능력의 차이, (3) 가치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지역고용정책연구원, 2015)**

가. 학력(자격)의 차이

▮ **과잉 진학이 일자리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음**

○ 학력 또는 자격 불일치(Qualification mismatch)는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학력) 수준과 그 일이 요구하는 자격(학력) 수준간 격차

○ 일반적으로 대졸 구직자는 고졸 구직자에 비해 취업 전까지 더 많은 비용을 소모

했기 때문에 더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는 데에 기인

○ 일을 하려는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구직난 속에서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자격 차이는 구직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됨

나. 직업능력의 차이

○ 과잉자격 문제를 개인이 보유한 직업능력과 그 직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 간 격차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자격이라도 구직자에 성과가 다르고, 자격이 공식교육이나 공인된 훈련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자격에 포함된 일부 직업능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될 수 있음
- 대학 교과과정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지원하고 있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구직자보다 오히려 구인자 쪽에서 제기되는 문제

- 대졸자의 경우, 학력수준에 비해 그에 걸맞는 기술 또는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꺼리는 경우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간의 장기화 현상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학력 불일치가 아닌 능력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함

○ 교육훈련에 있어서 잘못된 투자, 재정의 비효율성,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능력 미스매치(skill mismatch)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직업능력 불일치에 대응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요구됨

-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학생이나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함

다. 가치의 차이

○ 경제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보수' 외에도 청년층의 경우, '시간적 여유'와 '쾌적한 근무환경'이 직업선택의 중요한 가치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 : '한국인의 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기성세대는 직업선택에 있어 '보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10대와 20대는 역시 '보수'를 중시하나 '시간적 여유'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중요가치로 여기고 있음

○ 사회적 관점은 청년들의 직업가치가 '사회적 명예', '사회기여' 등에 기반한다는 것에 기초

- 이지연(2006)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좋은 대인관계 구축 등의 외적 가치가 중요
- 한상철·김영한(2003) : 고교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사회적 인정과 안정된 사회생활을 경제적 보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2012) : 청년층 취업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중소기업 취업기피 사유로 낮은 평판(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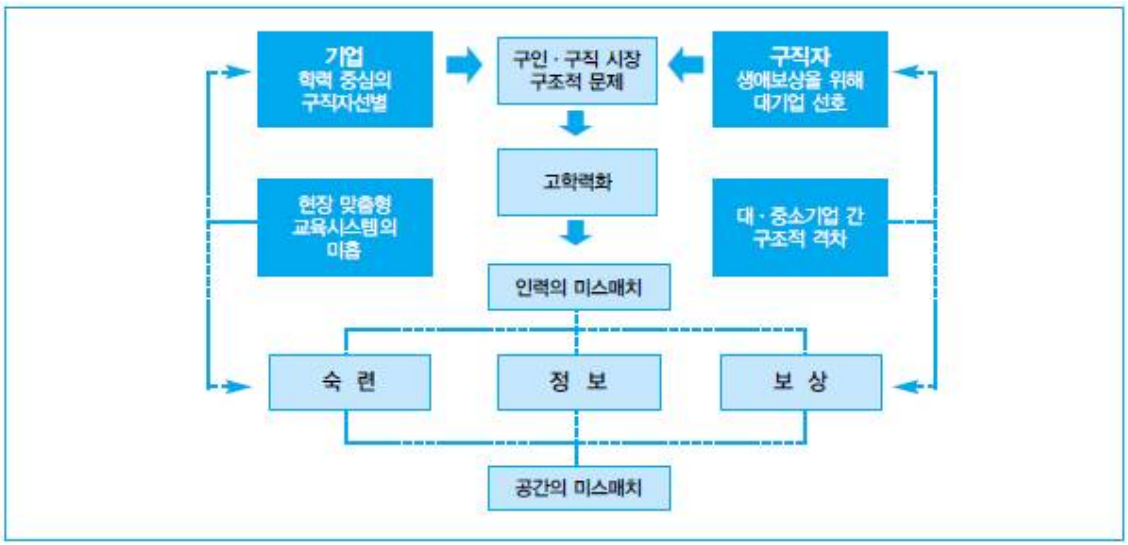
○ 창조적 관점에서 직업의 가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본인의 소질이나 적성 중시 등이 부각

- 능력을 중시하는 일자리, 소셜 벤처 창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오계택과 김영생(2013) :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도 중요하나 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지속발전가능성 등도 중요한 요인

2) 일자리 미스매치의 유형

▮ 일자리 미스매치를 보상, 숙력 그리고 정보의 미스매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그림 2-9> 고용의 미스매치 메커니즘



자료원 : 송병준, 오영석(2012), 「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 산업연구원, p. 11

가. 원인별 미스매치

○ 보상의 미스매치

- 구직자가 기대하는 보상과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보상 사이의 격차
- '눈높이의 차이'로 인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로 논의
- 구직자가 기대하는 임금수준과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수준 및 제공가능한 근무여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함
- 미스매치의 결과는 취업기피, 하향취업, 이직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숙련의 미스매치

-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도와 구직자의 숙련도의 차이
- 숙련도는 일을 수행하여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개인의 능력
-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숙련(general skill), 산업특수적 숙련(industry-specific

skill), 기업특수적 숙련(firm-specific skill)으로 구분

- 내용에 따라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 기술적숙련 그리고 협력적 숙련) 등으로 구분

○ 정보의 미스매치

- 정보획득·제공 경로의 미스매치와 정보수준의 미스매치로 구분
-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낮은 급여 수준 및 복리후생 수준 등의 요인
-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내세운 관련 정보 제공의 확대 등 고용지원 서비스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함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함을 지적
-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의 일자리 정보획득경로에 있어서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나. 부문별 미스매치

▮ 미스매치 크기는 모든 영역에서 같은 정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부문별 미스매치가 심각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음

▮ 미스매치의 유형을 직종별, 지역별, 학력별, 연령별, 임금별로 구분이 가능함(최창곤, 2010)

○ 직종별 미스매치

- 직종별 불일치의 발생원인은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직종별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일 것으로 추정

○ 지역별 미스매치

- 지역마다 일자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그 정도가 감소할 수 있음
- 지역별 수급불일치는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별 수급 불일치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인재가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학력별 미스매치

- 학력별 수급 불일치 정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고학력 실업자 층이 많아지면서 다른 부문에 비해 미스매치의 정도도 큰 편

○ 연령별 미스매치

- 학력별 미스매치 차이보다는 적은 값이지만,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연령별 수급 불일치는 한국고용문화에서의 연령차별과 정년퇴임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임금별 미스매치

- 임금대별 불일치 정도는 다른 형태의 불일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종별·학력별 미스매치와 상호 연관된 결과임
- 근로자들이 원하는 고임금 직종이 적을 수도 있고, 제시된 일자리에 대하여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요구 임금 사이에 격차가 큼을 의미

<표 2-31> 일자리 미스매치의 구분

구분	자료원	세부내용	비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	지역고용정책연구원(2015)	학력(자격)의 차이	학력 또는 자격의 불일치
		직업능력의 차이	과잉자격
		가치의 차이	보수와 안정성 vs 시간적 여유, 쾌적한 근무환경
미스매치의 분류	백필규(2014)	보상의 미스매치	구직자의 기대보상과 기업에서의 보상과의 차이
		정보의 미스매치	구직자와 구입기업간의 정보차이
		숙련의 미스매치	기업이 희망하는 숙련도의 미충족
	황광훈과 조용운(2023)	학력 미스매치	
		기술 미스매치	
		전공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의 구분	지역고용정책연구원(2015)	직종별 미스매치	
		지역별 미스매치	
		학력별 미스매치	
		연령별 미스매치	
		임금별 미스매치	
일자리 미스매치의 세분화	송부용 외(2011)	학력 미스매치	고학력일수록 고용되지 못함
		전공 미스매치	전공이 취업과 잘 연계되지 못함
		자격증 미스매치	자격증이 많아도 고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자격증을 다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숙련 미스매치	노동공급자의 숙련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
		성별 미스매치	업종별로 성별 선호도가 달라 발생
		인종 미스매치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맞지 않는 일자리에 의해 발생
		지역 미스매치	구직자들의 지역선호도가 다름
		산업 미스매치	1,2.3산업에 대한 선호도 차이
		기업 미스매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
		업종 미스매치	제조업보다는 사무직을 선호
		직종 미스매치	사무직과 기능직의 선호도가 다름
		임금 미스매치	사무직과 생산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용자와 공급자간 발생

3) 고용의 질

▌**고용의 질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청년 취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연구와 일자리 질을 지역별로 구분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음**

<표 2-32> 고용의 질과 관련한 선행연구

자료원	내용
이상은 (2005)	-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직업훈련이 취업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직업훈련은 대학재학 이상, 20~24세 청년들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로소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조장식 외(2015)	- Cox의 혼합모형을 이용한 대졸취업자의 재직기간을 분석한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평점, 대학유형, 전공계열, 정규직 여부, 기업규모 등이 탈출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취업 지역특성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이대웅 외(2015)	-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대졸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중 임금과 고용형태의 결정요인을 분석 -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여부, 대학의 재정·교육·연구수준이 임금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 개인의 취업목표가 분명하고 소속 대학이 연구역량이 확보되어 있다면, 임금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확임 - 고용형태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 측면에서, 서울4년제 및 지방 4년제 졸업여부는 부(-)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의 재정·교육·연구수준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신정우 외(2017)	-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경남지역 청년의 취업상태 결정요인을 분석 - 청년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들 개인특성과 가구배경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취업준비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최문석, 송일호 (2019)	- '청년패널'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전공 불일치가 임금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교육수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임금과 직장만족도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 - 교육일치도는 "자가발전"과 "장래성"에, 전공일치도의 경우 "업무내용"에 대한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
조윤서 (2021)	- 4년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행동이 취업 및 괜찮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을 중심으로 분석 - 직무 적성준비와 면접준비는 모든 취업 및 괜찮은 일자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행동 - 자격증, 외모관리, 취업서류작성교육은 부(-)의 영향 - 여러 취업준비행동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계열별로 차별화된 취업준비행동이 필요하고, 학교와 국가는 이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표 2-33> 일자리 질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

자료원	내용
김영민 (2014)	-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재해분석' 자료 등을 이용하여 국내 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 - 분석 결과 지역별 일자리 질 지수 현황은 서울, 대전,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울산, 강원도가 하위권 수준 - 지역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자리 질 재고를 위한 고용정책을 장·단기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
안은경, 이희연 (2015)	-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노동시장권역별 일자리 특성에 대하여 비교·분석 - 전국에서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약 80%가 상위 10%의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었으며, 일자리 질(고용안정성, 생산성, 임금) 또한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이 우위를 차지 -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는 광역 지역노동상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창출되었으며, 상용 일자리는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경향 - 지역구분(전체, 광역, 중소, 농어촌)에 따라 일자리 양·질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주장
정성배, 이지우 (2018)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대졸자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 요인을 지역별로 비교 - 수도권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학연수 경험, 가족경제지원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영남권은 성별(남성), 어학연수 경험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영향을 미침 - 호남권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확보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함
황광훈 (2022)	- 서울시 청년층 인구이동현상 분석 : 경기도 유입현상 - 남성이 여성보다 첫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 첫일자리 진입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이탈가능성이 높음 - 상용직이 임시/일용직보다 이탈가능성이 낮으며 가구주인 경우 이탈가능성이 낮음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서비스업의 이탈가능성이 낮음 - 전공불일치인 경우 이탈가능성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탈가능성이 매우 낮음 -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용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4)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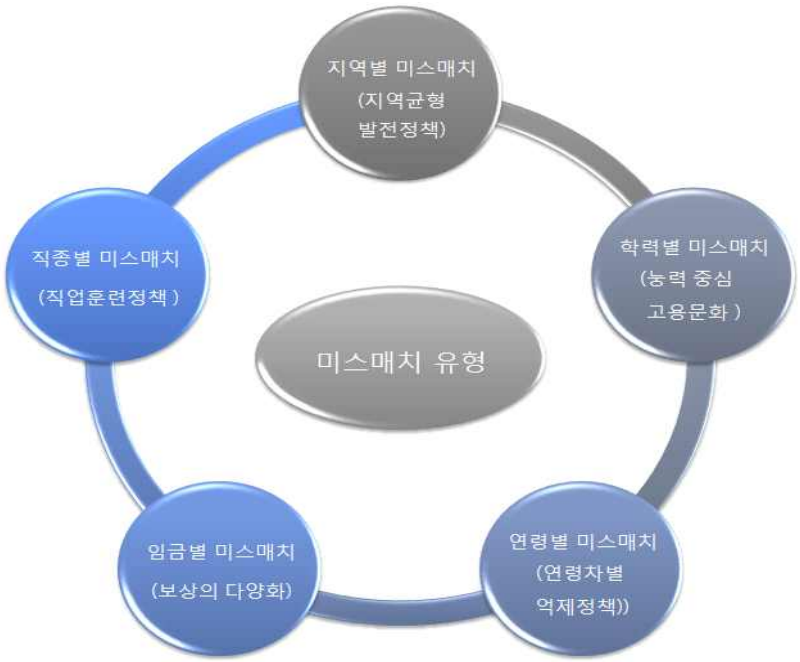
▮ 기존 선행연구중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형별로 해소방안을 제시한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2015)의 연구, 최창곤(2009)의 연구, 백필규(2014)의 연구 등이 있음

<그림 2-10> 유형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보상의 미스매치 해소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방향 전환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대상 구인 활동 • 구직자들 대상 눈높이 교육 • 비금전적인 보상 증대 - 시간적인 여유 등 청년층 직업가치에 부응하는 보상의 기회 증대	• 훈련교육 프로그램 의 내실화 -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 실무역량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정보제공 강화 • 직업훈련 시스템 개발·운영	• 기업에게 채용 응모자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 직업능력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우수 중소·중견 기업 알리기

자료원 :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2015), 광주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보고서, 2015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과제, p. 28의 <표 3-1>

<그림 2-11> 부문별 미스매치 유형에 따른 해결 방안(최창곤, 2009)



<표 2-34>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관련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백필규, 2014)

원인	정책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보상	고급연구인력 활용 지원	사중손실, 전치효과, 대체효과로 신규고용창출효과 미약	단기보상지원에서 창업마이스터와 같은 생애보상 지원으로 전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경직적 보상으로 기업부담 증가, 채용기피	고용우연성을 전제로 능력개발에 기초한 임금보상
숙련	현장실습 지원	기업의 현장실습지도 여력 및 인센티브 부족	현장실습전문위탁기업 및 인재육성의 인센티브가 충분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주도의 실습
	사업주훈련 지원	훈련투자 여력 부족 소기업과 비정규직은 특히 심각	사업주단체가 주도하는 독일형 듀얼훈련시스템 구축
정보	우수 중소기업 DB운영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의 양적 질적 부족	구직자 맞춤형 유망중소기업 DB 구축 및 학교-학생 공동의 발굴훈련
	스펙초월 멘토스쿨	스펙을 대신하는 구직자 정보제공 및 멘토확보 곤란	현장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NCS의 활용 및 채용이 필요한 정보 축적을 위한 현장실습 강화

5) 국외의 미스매치의 해소 정책 사례

가. 미국의 견습제(Registered Apprenticeship)

■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형태에 있어 고용성과의 차이가 있으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고용성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강력한 견습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와 낮은 규제적 노동시장을 가진 국가가 졸업 후 5년 동안 70% 이상이 취업상태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의 견습제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공적 자원이 지원

○ 견습제 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견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고용주, 노동조합, 관련기관이 사용하게 될 훈련 정책 및 실행 방안을 개발하고 수행함

○ 견습제 프로그램의 핵심 운영자는 스폰서로서 고용주, 고용주 연합체, 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있음

- 스폰서는 OJT(On-the-Job-Training)와 학력인정 교육을 산업계의 표준화된 기준 및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조직, 관리하며 재원을 마련하고, OJT, 수업 커리큘럼, 운영절차 등을 정하며, 견습제 자격증과 공동으로 제공되는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수백 개의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과 협력관계를 가짐
- 견습생은 사업주와 서면 계약을 통해 피고용자의 신분이 되며, 기술 수준향상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다. 견습 프로그램은 개별 사업주, 사업주 그룹, 또는 노동조합의 후원을 받으며 교실수업과 S-OJT(Structured-On-the-Job- Training)를 병행
  - 연간 최소 144시간의 관련 수업을 제공할 것을 권장하며, 그 외의 시간은 실질적인 업무 경험 및 OJT로 구성
  - 견습생들은 숙련된 직원, 수퍼바이저 등의 지도와 함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음

나. 일본의 헬로우 워크

▌ **일본에서 신규 졸업자와 기졸업자에 대한 취업 활동 지원은 공공직업안정소인 헬로우 워크가 담당.**

○ 광역적인 구인정보 제공 및 취직 지원 세미나·면접회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원의 구직상담도 포함

○ 신규졸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과 함께 설명회, 면접회를 개최하고 있음

○ 프리터족, 니트족을 위한 구직활동을 지원이 중요한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청년 취업지원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전문적 상담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음

- 취직 후에도 정착지원 및 블랙기업(혹사하고 해고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음
- 일부 중소기업들은 공동구인 활동을 통해 청년-중소기업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학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학교의 진로교육 및 학생들의 취업활동에 사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음

다. 호주의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VET은 학교와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형태로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 도제제도 등 직업교육훈련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학교-일이 연계된 형태의 VET이 운영 중인데, 호주의 경우 가장 체계적인 VET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호주의 VET은 인적자원의 직업세계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자원의 이동능력 제고,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 증대, 공공직업 훈련과 훈련비용의 가치 극대화와 같은 다섯 가지 핵심 목표를 내걸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음

○ 핵심의사결정기구인 MINCO가 고용, 교육, 직업훈련, 청년 문제 등 보다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의사결정을 내림

○ 주정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 부서와 교육부가 통합되는 경향이 있음

○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학생들에게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을 결합시켜 제공함

○ 첨단 산업에 맞추어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도 개발되어 있으며, 직무능력 중심의 훈련을 통해 산업계나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훈련참여를 위한 경로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유연하게 진행되며, 정부재원이 공공훈련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게도 배정되어 훈련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음

2. 지역별 청년일자리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느 정도나 타광역지자체로 이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 직업이동조사와 청년패널조사 자료(고용조사분석 시스템, https://survey.keis.or.kr/)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대졸자 직업이동조사의 경우 지난 2008년~2020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시점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유사) 설문항목을 사용한 2009년 대졸자와 2020년 대졸자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5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추적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1)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분석 결과

▮ **대졸자 직업이동조사에서 광역지자체 기준 출생지역-일자리 지역, 출신고등학교-일자리 지역, 대학소재지역-일자리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분석 결과

- 출생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생지역이 서울이고 일자리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44.0%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3.4%
  - 서울 : 64.4%
  - 부산 : 39.6%
  - 대구 : 44.5%
  - 대전 : 47.6%
  - 인천 : 39.2%
  - 광주 : 35.4%
  - 울산 : 46.3%
  - 경기 : 47.4%
  - 강원 : 42.9%
  - 충북 : 35.2%
  - 충남 : 32.8%

- 전북 : 44.0%
- 전남 : 36.8%
- 경북 : 36.1%
- 경남 : 46.7%
- 제주 : 55.1%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439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3.9%), 경기(13.7%), 대전(3.4%), 충남(2.9%), 전남(2.4%)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이 서울이고 일자리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72.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51.8%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9.3%
- 서울 : 72.0%
- 부산 : 47.9%
- 대구 : 48.3%
- 대전 : 49.7%
- 인천 : 42.6%
- 광주 : 41.2%
- 울산 : 53.8%
- 경기 : 47.7%
- 강원 : 51.4%
- 충북 : 42.2%
- 충남 : 39.5%
- 전북 : 51.8%
- 전남 : 47.0%
- 경북 : 43.3%
- 경남 : 48.8%
- 제주 : 62.0%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439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0.1%), 경기(11.5%), 충남(3.1%), 대전(2.8%), 전남(2.7%)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신 대학교가 제주이고 일자리 지역이 제주인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53.2%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8.9%
  - 서울 : 70.3%
  - 부산 : 54.6%
  - 대구 : 54.6%
  - 대전 : 46.2%
  - 인천 : 38.1%
  - 광주 : 43.5%
  - 울산 : 64.0%
  - 경기 : 37.4%
  - 강원 : 39.3%
  - 충북 : 33.5%
  - 충남 : 22.5%
  - 전북 : 53.2%
  - 전남 : 51.5%
  - 경북 : 35.4%
  - 경남 : 64.1%
  - 제주 : 74.3%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439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53.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7.6%), 경기(9.8%), 충남(4.1%), 대전(3.5%), 전남(2.6%)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소재지역을 전북특별자치도인 34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68.0%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2.8%), 경기(6.7%), 대전(2.9%), 충남(2.9%), 전남(1.8%)의 순으로 분석됨

<표 2-35>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출생지역과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재 일자리 지역																		
		모름/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생지역	무응답	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서울	0	2,314	23	19	51	151	21	17	717	37	37	92	**19**	17	42	29	9	3,595	64.4%
	부산	1	247	487	13	17	11	10	55	128	9	11	22	**5**	13	41	156	5	1,231	39.6%
	대구	0	145	18	330	8	10	2	13	57	5	6	8	**3**	2	96	35	3	741	44.5%
	대전	0	70	2	1	149	7	4	1	29	3	12	25	**6**	2	1	1	0	313	47.6%
	인천	1	155	1	1	9	192	0	2	85	7	6	18	**1**	2	4	5	1	490	39.2%
	광주	0	114	1	4	8	11	146	3	47	2	4	4	**8**	47	5	7	1	412	35.4%
	울산	0	64	18	5	7	2	2	158	27	2	5	3	**2**	3	21	20	2	341	46.3%
	경기	2	531	6	8	22	55	5	6	660	13	22	35	**5**	7	8	6	2	1,393	47.4%
	강원	1	156	6	4	13	19	3	5	78	243	5	7	**1**	4	13	8	1	567	42.9%
	충북	0	129	3	3	35	7	0	0	65	8	158	24	**1**	2	11	2	1	449	35.2%
	충남	0	165	2	1	69	24	3	0	93	6	14	202	**13**	6	8	7	2	615	32.8%
	전북	0	181	6	2	26	12	16	5	104	5	10	22	**333**	18	5	10	2	757	**44.0%**
	전남	0	177	7	4	14	27	135	4	116	3	11	18	**31**	334	10	12	4	907	36.8%
	경북	1	207	41	114	23	21	1	25	121	19	16	23	**4**	11	375	35	3	1,040	36.1%
	경남	0	201	95	20	11	12	6	22	95	6	8	10	**7**	14	41	484	4	1,036	46.7%
	제주	0	48	2	1	0	10	0	2	31	2	2	4	**0**	6	3	7	145	263	55.1%
전체		6	4,907	718	530	462	571	354	318	2,453	370	327	517	**439**	488	684	824	185	14,153	43.4%
전북지역	비율		23.9%	0.8%	0.3%	3.4%	1.6%	2.1%	0.7%	13.7%	0.7%	1.3%	2.9%	**44.0%**	2.4%	0.7%	1.3%	0.3%		
학생기준	순위		2	11	15	4	8	7	12	3	12	9	5	**1**	6	12	9	15		

<표 2-36>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출신고등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재 일자리 지역																	
		모름/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	무응답	0	7	0	0	0	1	0	0	2	0	0	0	**1**	2	0	0	0	13	
	서울	0	2,236	9	9	19	77	9	12	545	25	23	59	**15**	12	33	18	4	3,105	72.0%
	부산	1	186	546	13	7	4	2	47	90	6	7	15	**5**	5	43	156	6	1,139	47.9%
	대구	0	122	13	389	11	10	2	13	53	4	9	10	**2**	6	116	42	3	805	48.3%
	대전	0	86	0	1	223	9	4	1	42	4	12	50	**8**	2	2	4	1	449	49.7%
	인천	1	223	1	0	9	289	1	2	107	9	11	14	**3**	2	3	3	0	678	42.6%
	광주	0	127	1	2	7	10	233	3	52	3	7	5	**11**	87	6	9	2	565	41.2%
	울산	0	61	16	4	4	1	0	198	23	1	3	5	**0**	2	21	28	1	368	53.8%
	경기	2	850	3	6	23	78	2	2	1,002	17	24	53	**7**	7	15	8	3	2,102	47.7%
	강원	0	124	4	0	9	15	0	0	76	262	2	2	**0**	1	9	6	0	510	51.4%
	충북	0	111	3	1	34	7	0	0	41	8	183	26	**4**	4	7	2	3	434	42.2%
	충남	0	138	3	0	52	17	2	0	62	5	10	206	**7**	4	9	6	1	522	39.5%
	전북	0	136	3	1	19	7	12	5	78	4	7	21	**351**	18	5	8	2	677	**51.8%**
	전남	0	116	4	1	12	12	81	2	72	0	8	15	**18**	317	7	9	1	675	47.0%
	경북	2	146	24	85	19	14	1	16	92	15	11	19	**2**	8	367	26	1	848	43.3%
	경남	0	189	87	18	15	14	5	15	88	6	8	14	**5**	10	36	492	7	1,009	48.8%
	제주	0	38	1	1	0	6	1	2	24	2	2	3	**0**	1	5	6	150	242	62.0%
전체		6	4,896	718	531	463	571	355	318	2,449	371	327	517	**439**	488	684	823	185	14,141	49.3%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20.1%	0.4%	0.1%	2.8%	1.0%	1.8%	0.7%	11.5%	0.6%	1.0%	3.1%	**51.8%**	2.7%	0.7%	1.2%	0.3%		
	순위		2	14	16	5	9	7	11	3	13	9	4	**1**	6	11	8	15		

<표 2-37>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과 현재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재 일자리 지역																		
		모름/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0	1,967	14	9	29	101	9	17	489	15	13	49	**15**	10	29	29	5	2,800	70.3%
	부산	0	87	565	6	3	5	2	55	60	3	3	8	**2**	8	34	191	3	1,035	54.6%
	대구	0	48	3	248	2	4	0	9	24	2	5	7	**0**	4	80	16	2	454	54.6%
	대전	0	103	4	3	286	12	5	2	56	11	28	82	**4**	6	12	4	1	619	46.2%
	인천	0	128	1	0	2	164	0	2	102	4	4	11	**1**	3	6	2	1	431	38.1%
	광주	0	75	4	1	6	7	234	2	43	0	4	9	**11**	129	2	10	1	538	43.5%
	울산	0	14	10	0	1	0	0	114	8	1	0	4	**0**	1	5	20	0	178	64.0%
	경기	3	1,268	13	4	13	146	6	14	976	19	18	53	**9**	10	23	30	6	2,611	37.4%
	강원	0	239	1	0	4	26	1	1	116	266	6	2	**0**	3	8	4	0	677	39.3%
	충북	0	178	3	3	18	13	4	1	106	13	191	23	**6**	1	7	3	1	571	33.5%
	충남	1	352	4	6	48	41	3	3	216	4	15	209	**5**	3	10	6	2	928	22.5%
	전북	0	115	1	3	23	15	11	5	64	2	8	27	**348**	17	5	8	2	654	**53.2%**
	전남	1	61	3	0	5	11	74	2	41	2	5	9	**34**	277	1	10	2	538	51.5%
	경북	1	194	33	240	16	17	4	74	95	25	23	19	**1**	7	443	54	6	1252	35.4%
	경남	0	60	58	8	8	7	2	17	43	1	3	5	**2**	9	19	432	0	674	64.1%
	제주	0	24	1	1	0	2	0	0	15	3	1	0	**1**	0	0	5	153	206	74.3%
전체		6	4,913	718	532	464	571	355	318	2,454	371	327	517	**439**	488	684	824	185	14,166	48.9%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17.6%	0.2%	0.5%	3.5%	2.3%	1.7%	0.8%	9.8%	0.3%	1.2%	4.1%	**53.2%**	2.6%	0.8%	1.2%	0.3%		
	순위		2	16	13	5	7	8	11	3	14	9	4	**1**	6	11	9	14		

<표 2-38>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대학교 소재지역과 출신고등학교 지역의 관계

구분		출신 고등학교 지역																		
		모름/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4	1,792	116	70	61	173	72	43	646	61	65	90	**76**	73	103	127	24	3,596	49.8%
	부산	0	8	975	10	4	1	1	48	5	4	3	1	**2**	7	27	229	2	1,327	73.5%
	대구	0	4	11	420	0	0	1	13	6	1	2	1	**2**	2	88	20	1	572	73.4%
	대전	0	43	7	4	356	15	4	4	54	11	71	158	**11**	13	43	16	0	810	44.0%
	인천	1	106	5	1	2	228	4	3	110	13	7	10	**14**	16	14	8	3	545	41.8%
	광주	0	8	3	1	2	3	421	1	6	2	2	5	**23**	219	1	4	1	702	60.0%
	울산	0	1	27	2	0	0	0	171	1	0	0	2	**0**	0	5	5	2	216	79.2%
	경기	6	1,260	72	41	20	265	46	22	1,128	59	28	62	**56**	59	77	69	21	3,291	34.3%
	강원	1	191	9	5	4	32	2	2	132	433	15	7	**8**	6	20	14	4	885	48.9%
	충북	1	141	9	7	16	25	11	4	138	17	296	24	**12**	10	26	13	2	752	39.4%
	충남	0	273	9	9	73	79	10	8	324	19	35	224	**18**	23	36	35	5	1,180	19.0%
	전북	3	56	10	5	13	17	17	2	45	4	6	30	**571**	37	3	11	2	832	**68.6%**
	전남	3	29	4	4	5	11	128	2	18	4	6	11	**46**	363	6	17	2	659	55.1%
	경북	0	72	73	446	8	16	12	98	54	35	28	22	**11**	8	565	109	13	1,570	36.0%
	경남	0	7	135	19	2	6	3	25	12	4	2	3	**9**	9	30	570	2	838	68.0%
	제주	0	7	5	2	0	0	3	0	7	0	2	1	**4**	1	2	5	219	258	84.9%
전체		19	3,998	1,470	1,046	566	871	735	446	2,686	667	568	651	**863**	846	1,046	1252	303	18,033	54.7%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6.7%	1.2%	0.6%	1.6%	2.0%	2.0%	0.2%	5.4%	0.5%	0.7%	3.6%	**68.6%**	4.4%	0.4%	1.3%	0.2%		
	순위		2	10	12	8	6	6	15	3	13	11	5	**1**	4	14	9	15		

<표 2-39> 2009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전북지역 대학교 졸업생중 출신고등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재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소재지역	모름/무응답	2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3
	서울	19	0	1	2	0	1	0	8	0	0	3	**9**	1	0	0	0	44
	부산	1	1	0	0	0	0	0	1	0	1	0	**2**	1	0	0	0	7
	대구	0	0	1	0	0	0	0	1	0	1	0	**0**	0	1	0	0	4
	대전	2	0	0	4	0	1	0	1	0	0	1	**3**	0	0	0	0	12
	인천	3	0	0	0	7	0	0	1	0	1	0	**1**	0	0	0	0	13
	광주	3	0	0	0	0	1	0	1	1	0	0	**5**	0	0	1	0	12
	울산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경기	13	0	0	1	3	0	0	13	0	0	0	**5**	0	1	0	0	36
	강원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충북	2	0	0	0	0	0	0	0	0	1	0	**2**	0	0	0	0	5
	충남	5	0	0	1	3	0	0	3	1	0	10	**5**	0	0	0	0	28
	전북	57	0	1	13	2	5	4	30	0	4	13	**304**	8	2	4	0	447
	전남	6	0	0	1	0	3	0	3	0	0	0	**8**	6	1	0	0	28
	경북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경남	2	0	0	1	0	0	0	0	0	0	0	**3**	1	0	3	0	10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전체		115	1	3	23	15	11	5	64	2	8	27	**348**	17	5	8	2	654
전북지역	비율	12.8%	0.0%	0.2%	2.9%	0.4%	1.1%	0.9%	6.7%	0.0%	0.9%	2.9%	**68.0%**	1.8%	0.4%	0.9%	0.0%	
학생기준	순위	2	14	13	4	11	7	8	3	14	8	4	**1**	6	11	8	14	

○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분석 결과

- 출생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생지역이 서울이고 일자리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46.1%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1.5%
  - 서울 : 58.8%
  - 부산 : 41.4%
  - 대구 : 39.3%
  - 대전 : 41.1%
  - 인천 : 29.5%
  - 광주 : 43.9%
  - 울산 : 36.0%
  - 경기 : 44.4%
  - 강원 : 38.7%
  - 충북 : 41.9%
  - 충남 : 39.9%
  - 전북 : 46.1%
  - 전남 : 42.4%
  - 경북 : 34.9%
  - 경남 : 39.7%
  - 제주 : 49.1%
  - 세종 : 39.1%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326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20.6%), 경기(12.6%), 대전(4.5%), 광주(2.9%), 충남(2.9%), 전남(2.9%)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생지역이 서울이고 일자리 지역이 서울인 경우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49.6%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6.5%
  - 서울 : 68.4%
  - 부산 : 50.6%
  - 대구 : 45.0%
  - 대전 : 45.8%
  - 인천 : 37.9%
  - 광주 : 48.0%
  - 울산 : 42.8%
  - 경기 : 47.6%
  - 강원 : 45.3%
  - 충북 : 47.3%
  - 충남 : 40.8%
  - 전북 : 49.6%
  - 전남 : 47.1%
  - 경북 : 38.8%
  - 경남 : 43.4%
  - 제주 : 54.9%
  - 세종 : 36.8%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326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49.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9.5%), 경기(9.1%), 대전(5.0%), 광주(3.1%), 전남(2.9%), 충남(2.7%)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생지역이 제주이고 일자리 지역이 제주인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46.6%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42.3%
  - 서울 : 60.3%
  - 부산 : 47.8%
  - 대구 : 47.5%
  - 대전 : 40.8%
  - 인천 : 28.2%
  - 광주 : 51.0%
  - 울산 : 51.4%
  - 경기 : 39.8%
  - 강원 : 34.5%
  - 충북 : 32.4%
  - 충남 : 23.6%
  - 전북 : 46.6%
  - 전남 : 51.5%
  - 경북 : 31.7%
  - 경남 : 54.8%
  - 제주 : 71.1%
  - 세종 : 5.4%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326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5.1%), 경기(12.7%), 충남(5.9%), 전남(4.7%), 대전(3.7%)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소재지역을 전북특별자치도인 238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69.3%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1%), 경기(6.2%), 충남(2.8%), 대전(2.8%), 전남(1.7%)의 순으로 분석됨

<표 2-40>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출생지역과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생 지역	서울	1,454	27	14	34	108	12	12	538	53	44	61	**19**	22	34	19	8	15	2,474	58.8%
	부산	202	401	17	11	13	4	30	85	15	11	16	**3**	14	27	107	7	5	968	41.4%
	대구	154	16	311	13	21	2	9	73	9	7	22	**3**	8	129	10	0	5	792	39.3%
	대전	93	5	5	180	8	4	4	47	5	19	31	**6**	1	3	6	2	19	438	41.1%
	인천	201	1	5	12	178	1	3	129	16	14	19	**9**	2	2	4	2	6	604	29.5%
	광주	74	3	2	9	15	207	1	42	2	6	11	**18**	63	5	4	3	6	471	43.9%
	울산	70	26	16	4	3	1	127	37	4	5	10	**0**	3	23	19	3	2	353	36.0%
	경기	696	16	17	26	62	5	7	834	42	58	61	**12**	12	17	14	6	11	1896	44.0%
	강원	80	6	2	4	8	1	2	55	125	9	10	**2**	3	7	6	2	1	323	38.7%
	충북	99	4	2	34	9	2	1	55	3	186	23	**6**	4	8	4	0	4	444	41.9%
	충남	98	3	2	36	6	3	4	47	4	24	169	**6**	3	7	2	2	8	424	39.9%
	전북	100	4	4	22	6	14	1	61	3	9	14	**224**	14	2	3	0	5	486	46.1%
	전남	85	6	3	6	8	58	0	44	6	10	14	**13**	197	4	6	1	4	465	42.4%
	경북	127	34	109	19	12	4	8	52	9	23	22	**0**	3	241	24	2	2	691	34.9%
	경남	159	99	29	21	11	5	16	72	8	13	21	**5**	7	23	328	6	4	827	39.7%
	제주	25	7	1	0	3	1	1	12	0	1	1	**0**	0	2	2	54	0	110	49.1%
	세종	3	0	0	6	0	0	0	1	0	2	2	**0**	0	0	0	0	9	23	39.1%
전체		3720	658	539	437	471	324	226	2184	304	441	507	**326**	356	534	558	98	106	11789	41.5%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20.6%	0.8%	0.8%	4.5%	1.2%	2.9%	0.2%	12.6%	0.6%	1.9%	2.9%	**46.1%**	2.9%	0.4%	0.6%	0.0%	1.0%		
	순위	2	11	11	4	9	5	16	3	13	8	5	**1**	5	15	13	17	10		

<표 2-41>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출신고등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역	무응답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서울	1,394	12	5	19	65	9	5	363	35	29	29	11	13	23	6	9	10	2037	68.4%
	부산	119	402	6	10	9	3	31	71	8	8	17	2	11	15	73	7	3	795	50.6%
	대구	128	16	340	13	12	2	7	51	10	5	13	3	9	126	17	0	3	755	45.0%
	대전	110	3	7	216	4	4	4	28	4	15	39	6	2	3	6	2	19	472	45.8%
	인천	195	2	5	7	223	0	2	104	11	10	16	6	2	1	0	2	3	589	37.9%
	광주	62	2	2	6	13	209	0	31	3	5	6	13	70	5	3	2	3	435	48.0%
	울산	49	33	16	3	2	1	145	19	4	9	8	0	3	28	15	2	2	339	42.8%
	경기	898	12	11	20	82	5	5	1156	54	54	61	13	13	18	7	6	14	2,429	47.6%
	강원	84	3	3	5	6	2	0	44	145	6	8	3	2	4	2	2	1	320	45.3%
	충북	88	2	3	30	7	3	0	51	4	215	23	6	4	6	4	1	8	455	47.3%
	충남	111	3	1	46	9	1	1	68	4	30	212	7	1	6	2	2	15	519	40.8%
	전북	94	4	4	24	4	15	3	44	1	11	13	239	14	5	3	0	4	482	49.6%
	전남	65	3	4	5	5	60	0	28	4	8	14	10	196	4	4	1	5	416	47.1%
	경북	113	35	101	13	15	2	8	47	7	21	20	1	6	261	18	1	3	672	38.8%
	경남	168	121	28	18	8	7	14	60	8	13	20	5	9	27	397	5	6	914	43.4%
	제주	19	4	1	0	3	0	0	12	0	2	2	1	0	1	1	56	0	102	54.9%
	세종	3	0	0	3	0	0	0	2	0	1	3	0	0	0	0	0	7	19	36.8%
전체		3,700	657	537	438	467	324	225	2,179	302	442	504	326	355	533	558	98	106	11,751	46.5%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19.5%	0.8%	0.8%	5.0%	0.8%	3.1%	0.6%	9.1%	0.2%	2.3%	2.7%	49.6%	2.9%	1.0%	0.6%	0.0%	0.8%		
	순위	2	10	10	4	10	5	14	3	16	8	7	1	6	9	14	17	10		

<표 2-42>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대학교 소재지역과 현재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1,615	20	19	47	95	12	15	579	34	51	57	**16**	30	28	26	9	24	2,677	60.3%
	부산	124	479	15	11	8	7	57	78	11	12	24	**3**	13	27	123	7	4	1,003	47.8%
	대구	48	11	267	8	9	4	15	40	8	12	11	**1**	4	100	23	0	1	562	47.5%
	대전	118	5	10	245	9	3	0	61	12	32	55	**7**	1	9	12	0	22	601	40.8%
	인천	96	1	1	5	87	1	3	78	4	11	5	**3**	5	3	2	1	2	308	28.2%
	광주	27	2	0	2	5	207	0	34	6	7	6	**16**	83	1	3	3	4	406	51.0%
	울산	22	11	2	3	0	0	75	7	1	2	2	**1**	2	7	11	0	0	146	51.4%
	경기	802	7	6	13	115	11	4	712	27	28	21	**6**	8	12	8	4	5	1,789	39.8%
	강원	125	3	2	2	14	0	1	92	143	8	8	**1**	0	5	4	2	4	414	34.5%
	충북	150	8	2	19	25	8	2	116	14	203	34	**5**	3	18	7	2	10	626	32.4%
	충남	265	7	6	40	56	5	4	186	13	35	208	**15**	11	6	5	7	13	882	23.6%
	전북	77	5	0	19	6	10	4	65	6	8	30	**238**	24	7	6	0	6	511	**46.6%**
	전남	27	3	0	4	3	50	0	19	3	2	11	**9**	152	3	7	2	0	295	51.5%
	경북	129	23	203	11	26	2	26	82	16	19	20	**4**	8	277	20	2	5	873	31.7%
	경남	43	71	5	6	8	2	19	22	5	9	8	**1**	13	29	299	5	1	546	54.8%
	제주	10	0	0	1	2	0	0	5	2	2	0	**0**	0	0	0	54	0	76	71.1%
	세종	62	3	1	2	3	3	1	19	0	1	7	**0**	0	2	2	0	6	112	5.4%
전체		3740	659	539	438	471	325	226	2195	305	442	507	**326**	357	534	558	98	107	1,1827	42.3%
전북지역	비율	15.1%	1.0%	0.0%	3.7%	1.2%	2.0%	0.8%	12.7%	1.2%	1.6%	5.9%	**46.6%**	4.7%	1.4%	1.2%	0.0%	1.2%	100.0%	
학생기준	순위	2	14	16	6	10	7	15	3	10	8	4	**1**	5	9	10	16	10		

<표 2-43>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대학교 소재지역과 출신고등학교 지역의 관계

구분		출신 고등학교 지역																			
		모름/무응답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동일지역 비율
출신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0	1,594	98	96	88	202	78	50	1143	81	75	111	**85**	81	89	143	20	4	4038	39.5%
	부산	0	20	842	31	10	7	9	135	26	13	11	14	**10**	16	76	319	11	0	1550	54.3%
	대구	0	15	22	479	8	5	2	33	24	9	6	9	**7**	3	219	62	3	0	906	52.9%
	대전	0	46	16	17	396	18	8	6	75	23	86	138	**28**	13	33	21	1	11	936	42.3%
	인천	0	76	4	3	6	170	5	5	124	7	7	15	**8**	8	14	8	4	0	464	36.6%
	광주	0	17	6	1	5	5	408	0	24	5	5	7	**33**	141	4	13	2	0	676	60.4%
	울산	0	7	20	8	3	4	0	128	2	1	1	2	**1**	0	22	24	1	0	224	57.1%
	경기	2	738	28	22	29	260	18	10	1240	41	42	55	**26**	25	32	56	14	3	2641	47.0%
	강원	0	135	10	7	2	25	1	2	153	252	18	8	**1**	3	11	5	1	0	634	39.7%
	충북	0	104	11	13	32	37	13	6	209	28	341	64	**13**	6	32	19	7	12	947	36.0%
	충남	1	169	10	15	84	121	12	9	433	18	51	277	**20**	25	28	22	3	8	1306	21.2%
	전북	0	51	8	5	33	17	29	3	61	5	9	44	**479**	46	9	15	4	1	819	**58.5%**
	전남	0	21	6	2	6	8	94	1	22	2	5	9	**21**	232	4	21	0	1	455	51.0%
	경북	0	49	44	496	8	16	6	80	57	31	30	13	**7**	15	456	88	4	0	1400	32.6%
	경남	0	9	104	9	8	7	3	38	12	2	2	4	**6**	13	30	606	5	0	858	70.6%
	제주	0	6	2	0	1	2	1	1	8	1	1	3	**0**	0	0	2	105	0	133	78.9%
	세종	0	42	10	7	4	9	8	3	38	4	6	15	**4**	0	4	6	1	2	163	1.2%
전체		3	3,099	1241	1211	723	913	695	510	3651	523	696	788	**749**	627	1063	1430	186	42	18150	45.9%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6.2%	1.0%	0.6%	4.0%	2.1%	3.5%	0.4%	7.4%	0.6%	1.1%	5.4%	**58.5%**	5.6%	1.1%	1.8%	0.5%	0.1%		
	순위		3	12	13	6	8	7	16	2	13	10	5	**1**	4	10	9	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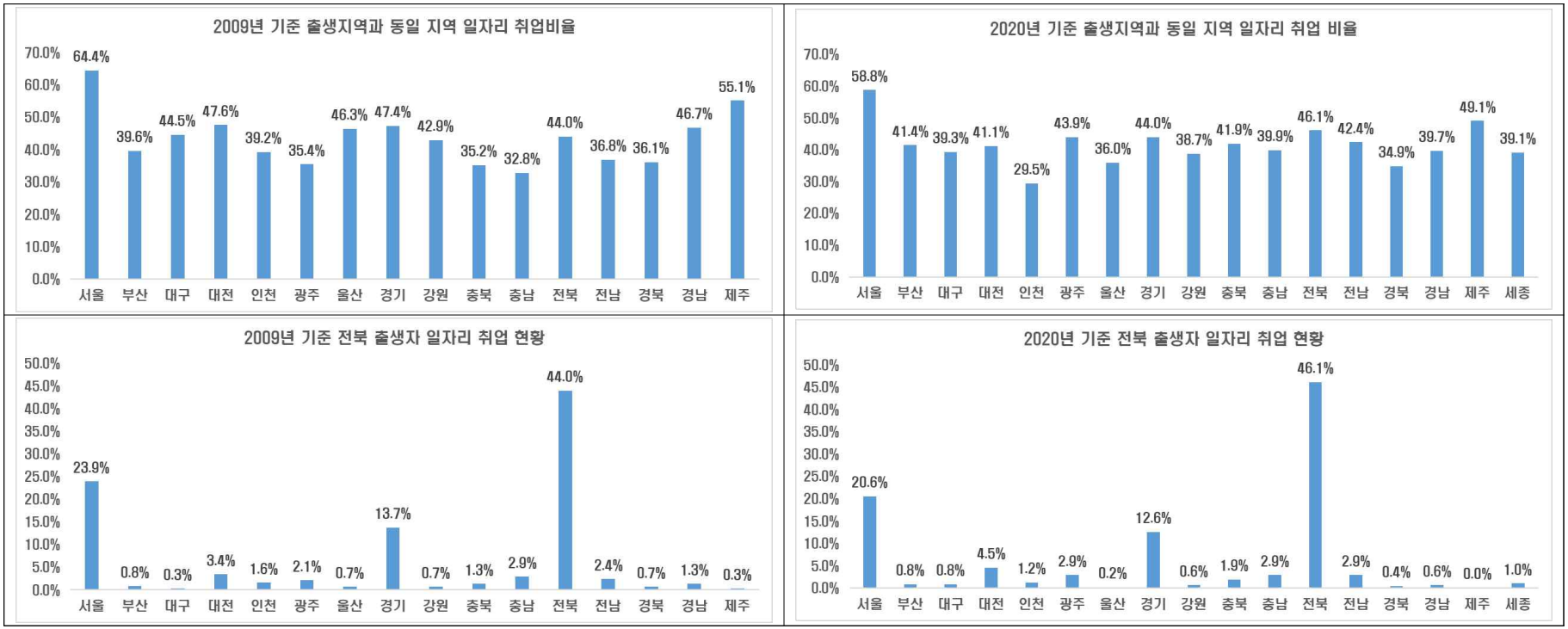
<표 2-44>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 전북지역 대학교 졸업생중 출신고등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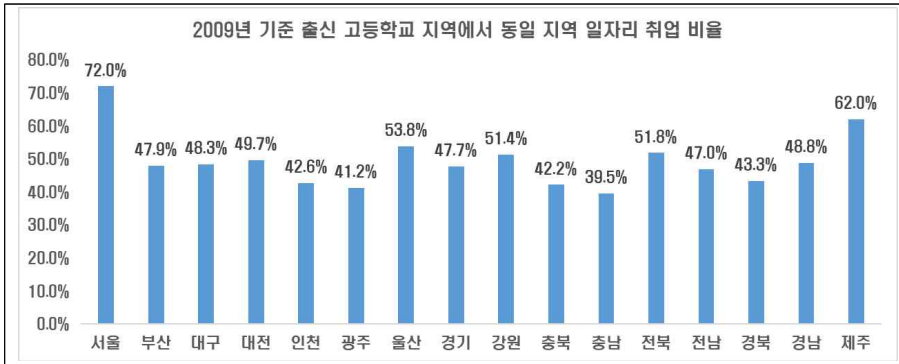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체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12	0	0	0	1	1	0	12	1	0	0	**4**	2	0	0	0	1	34
	부산	0	3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5
	대구	0	0	0	1	0	0	1	1	0	0	1	**0**	0	0	0	0	0	4
	대전	3	1	0	9	0	0	0	3	0	1	3	**3**	0	0	0	0	1	24
	인천	3	0	0	0	1	0	0	3	0	0	0	**1**	0	0	0	0	0	8
	광주	1	0	0	0	1	6	0	2	0	0	0	**6**	2	0	0	0	0	18
	울산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경기	9	1	0	0	1	0	0	20	2	1	1	**4**	2	0	0	0	0	41
	강원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2
	충북	2	0	0	0	0	0	0	1	0	0	1	**2**	0	0	0	0	0	6
	충남	3	0	0	1	0	0	0	3	1	2	10	**7**	0	0	0	0	3	30
	전북	38	0	0	8	2	3	0	18	1	3	8	**201**	5	2	0	0	1	290
	전남	3	0	0	0	0	0	0	2	1	1	3	**3**	13	0	0	0	0	26
	경북	0	0	0	0	0	0	1	0	0	0	1	**1**	0	5	0	0	0	8
	경남	2	0	0	0	0	0	0	0	0	0	1	**4**	0	0	4	0	0	11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세종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전체		77	5	0	19	6	10	4	65	6	8	30	**238**	24	7	6	0	6	511
전북지역 학생기준	비율	13.1%	0.0%	0.0%	2.8%	0.7%	1.0%	0.0%	6.2%	0.3%	1.0%	2.8%	**69.3%**	1.7%	0.7%	0.0%	0.0%	0.3%	
	순위	2	13	13	4	9	7	13	3	11	7	4	**1**	6	9	13	1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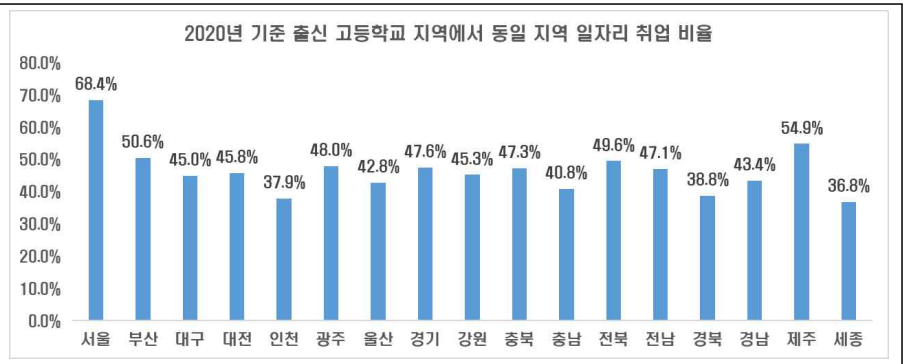
○ 2009년과 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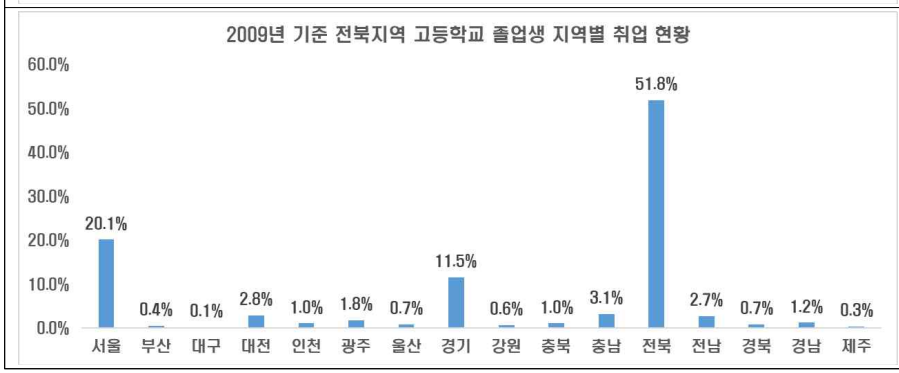
- 출생지역, 출생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자리 지역과의이 관계를 살펴본 결과, 출생지역보다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인 대졸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대졸자의 일자리 지역으로의 선택은 전북(44.0%~46.1%)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20.6%~20.6%), 경기(12.6%~ 13.7%), 대전(3.4%~4.5%), 충남(2.9%), 전남(2.4%~2.9%)의 순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의 일자리 지역으로의 선택은 전북(49.6%~51.8%)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9.5%~20.1%), 경기(9.1%~11.5%), 대전(2.8%~5.0%), 충남(2.7%~3.1%), 전남(2.7%~2.9%)의 순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의 일자리 지역으로의 선택은 전북(46.6%~53.2%)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5.1%~17.6%), 경기(9.8%~12.7%), 충남(4.1%~5.9%), 대전(3.5%~3.7%), 전남(2.6%~4.7%), 광주(1.7%~2.0%)의 순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의 일자리 지역으로의 선택은 전북(68.0%~69.3%)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2.8%~13.1%), 경기(6.2%~6.7%), 충남(2.8%~2.9%), 대전(2.8%~2.9%), 전남(1.7%~1.8%), 광주(1.0%~1.1%)의 순이라는 점을 확인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구직자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지역에서 고등학교-대학교를 모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계 마련과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일지역인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09년에는 68.6%이었던 비율이 2020년 58.5%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2009년 기준 제주가 84.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79.2%, 부산 7.35%, 대구 73.4%의 순이었음
  - 2020년 기준 제주가 78.9%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70.6%, 광주 60.4%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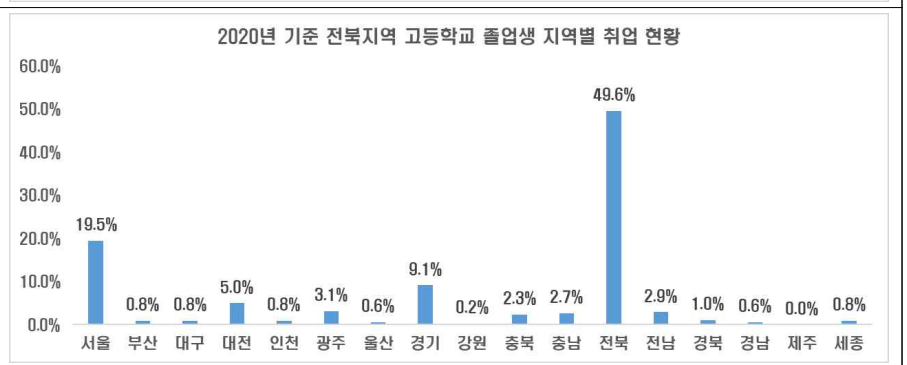
<그림 2-12> 2009년~2020년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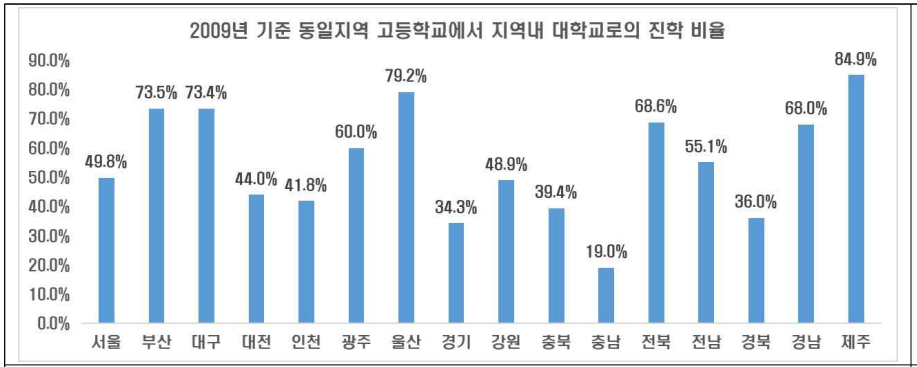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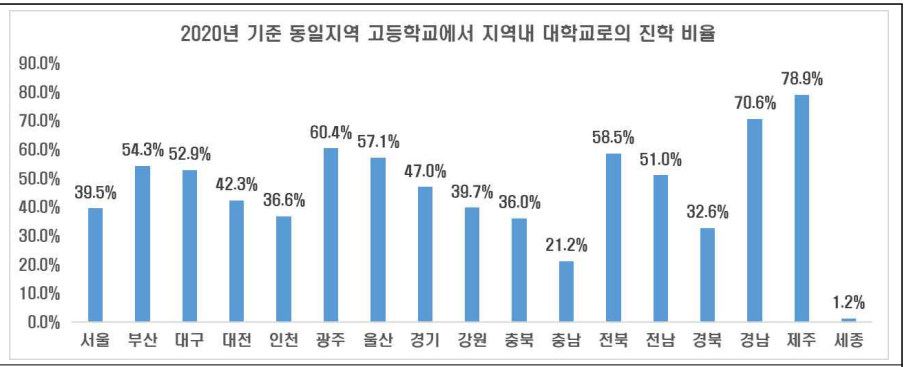

2009년 기준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서 동일 지역 일자리 취업 비율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2.0%
47.9%
48.3%
49.7%
42.6%
41.2%
53.8%
47.7%
51.4%
42.2%
39.5%
51.8%
47.0%
43.3%
48.8%
62.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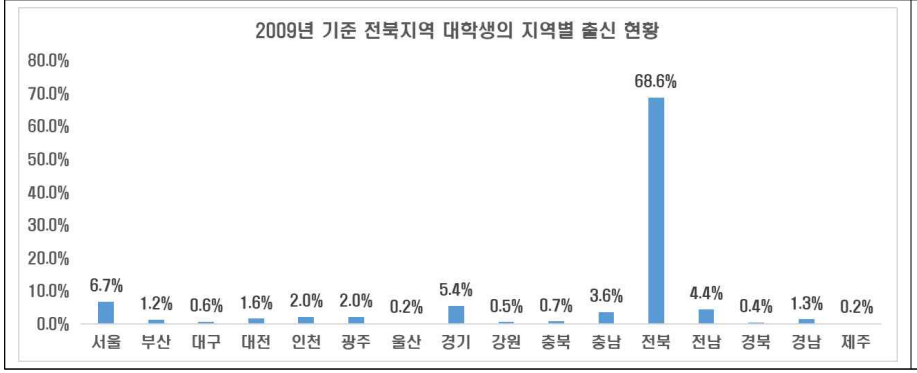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서 동일 지역 일자리 취업 비율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8.4%
50.6%
45.0%
45.8%
37.9%
48.0%
42.8%
47.6%
45.3%
47.3%
40.8%
49.6%
47.1%
38.8%
43.4%
54.9%
36.8%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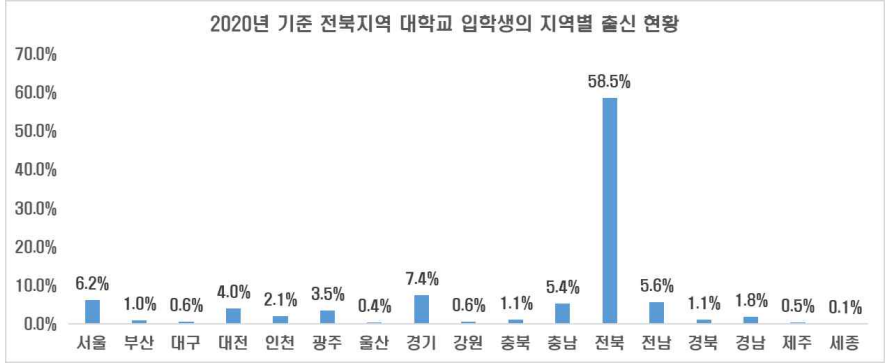

2009년 기준 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지역별 취업 현황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
0.4%
0.1%
2.8%
1.0%
1.8%
0.7%
11.5%
0.6%
1.0%
3.1%
51.8%
2.7%
0.7%
1.2%
0.3%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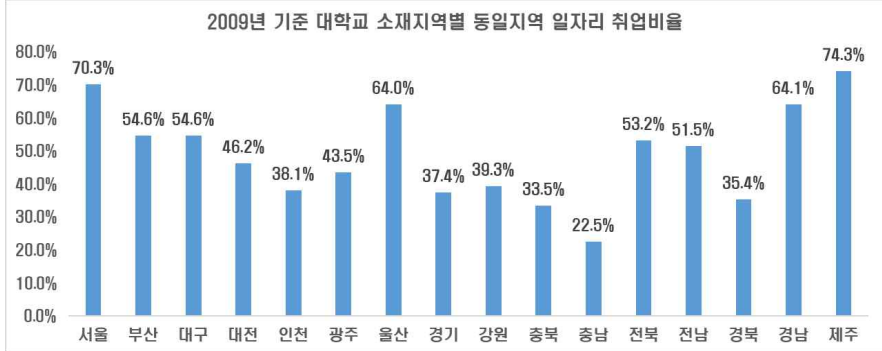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전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지역별 취업 현황
60.0%
50.0%
40.0%
30.0%
20.0%
10.0%
0.0%
19.5%
0.8%
0.8%
5.0%
0.8%
3.1%
0.6%
9.1%
0.2%
2.3%
2.7%
49.6%
2.9%
1.0%
0.6%
0.0%
0.8%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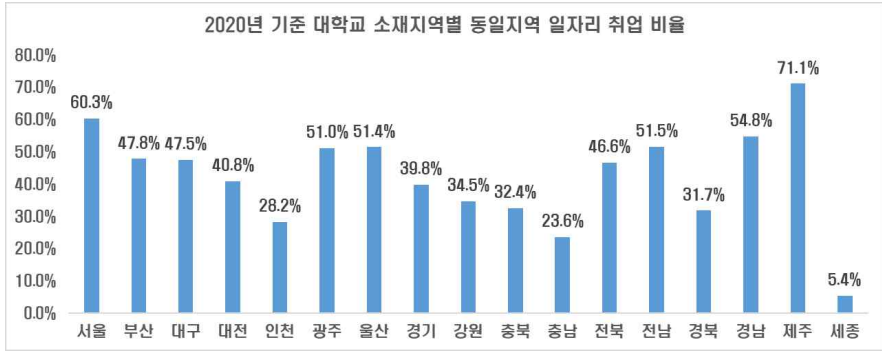

2009년 기준 동일지역 고등학교에서 지역내 대학교로의 진학 비율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49.8%
73.5%
73.4%
44.0%
41.8%
60.0%
79.2%
34.3%
48.9%
39.4%
19.0%
68.6%
55.1%
36.0%
68.0%
84.9%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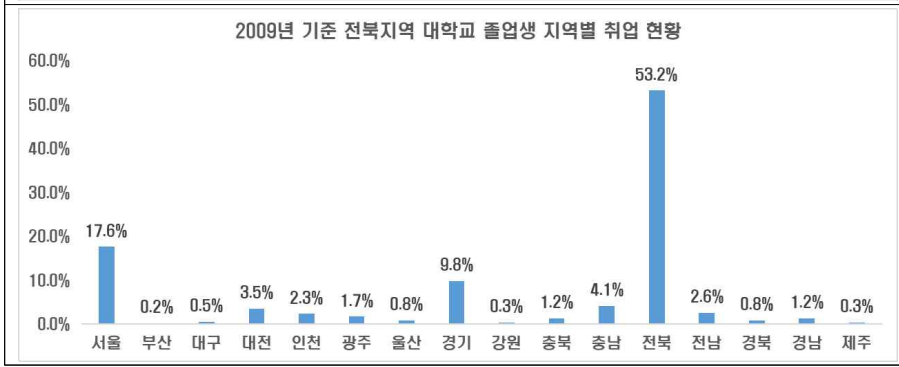

2020년 기준 동일지역 고등학교에서 지역내 대학교로의 진학 비율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39.5%
54.3%
52.9%
42.3%
36.6%
60.4%
57.1%
47.0%
39.7%
36.0%
21.2%
58.5%
51.0%
32.6%
70.6%
78.9%
1.2%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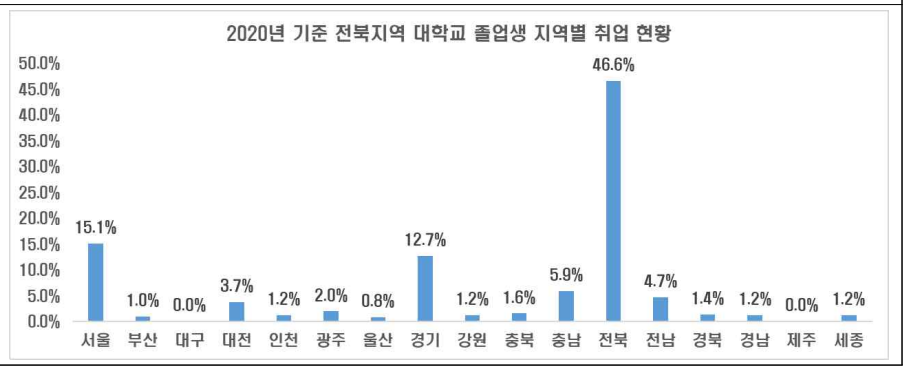

2009년 기준 전북지역 대학생의 지역별 출신 현황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7%
1.2%
0.6%
1.6%
2.0%
2.0%
0.2%
5.4%
0.5%
0.7%
3.6%
68.6%
4.4%
0.4%
1.3%
0.2%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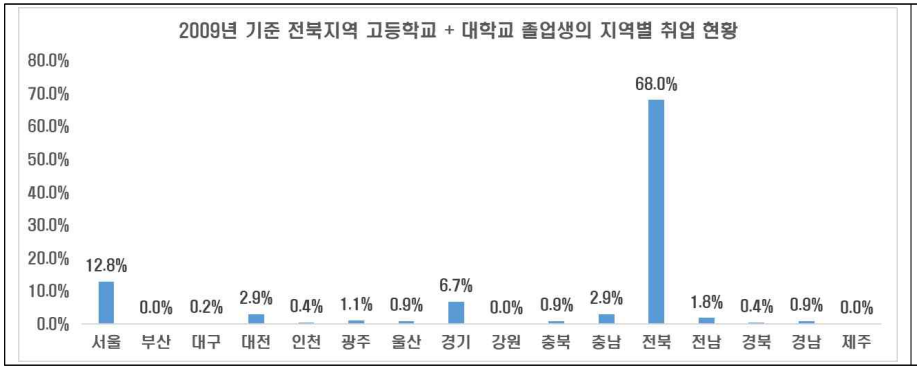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전북지역 대학교 입학생의 지역별 출신 현황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2%
1.0%
0.6%
4.0%
2.1%
3.5%
0.4%
7.4%
0.6%
1.1%
5.4%
58.5%
5.6%
1.1%
1.8%
0.5%
0.1%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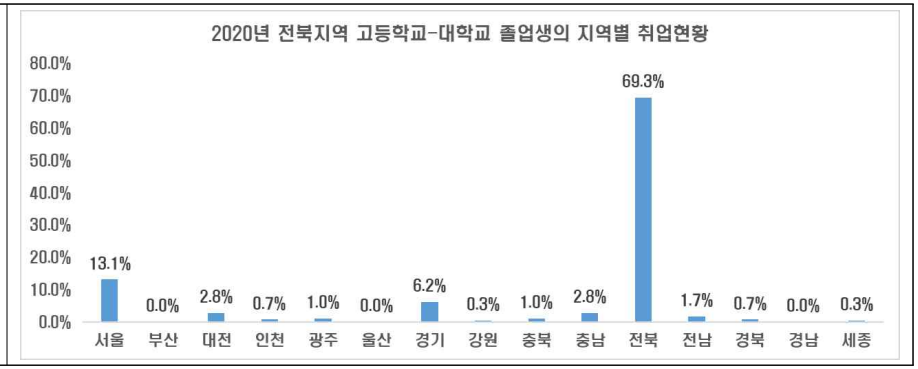

2009년 기준 대학교 소재지역별 동일지역 일자리 취업비율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70.3%
54.6%
54.6%
46.2%
38.1%
43.5%
64.0%
37.4%
39.3%
33.5%
22.5%
53.2%
51.5%
35.4%
64.1%
74.3%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년 기준 대학교 소재지역별 동일지역 일자리 취업 비율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0.3%
47.8%
47.5%
40.8%
28.2%
51.0%
51.4%
39.8%
34.5%
32.4%
23.6%
46.6%
51.5%
31.7%
54.8%
71.1%
5.4%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09년 기준 전북지역 대학교 졸업생 지역별 취업 현황
60.0%
50.0%
40.0%
30.0%
20.0%
10.0%
0.0%
17.6%
0.2%
0.5%
3.5%
2.3%
1.7%
0.8%
9.8%
0.3%
1.2%
4.1%
53.2%
2.6%
0.8%
1.2%
0.3%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년 기준 전북지역 대학교 졸업생 지역별 취업 현황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5.1%
1.0%
0.0%
3.7%
1.2%
2.0%
0.8%
12.7%
1.2%
1.6%
5.9%
46.6%
4.7%
1.4%
1.2%
0.0%
1.2%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09년 기준 전북지역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생의 지역별 취업 현황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2.8%
0.0%
0.2%
2.9%
0.4%
1.1%
0.9%
6.7%
0.0%
0.9%
2.9%
68.0%
1.8%
0.4%
0.9%
0.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20년 전북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생의 지역별 취업현황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13.1%
0.0%
2.8%
0.7%
1.0%
0.0%
6.2%
0.3%
1.0%
2.8%
69.3%
1.7%
0.7%
0.0%
0.3%
서울
부산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2) 2021년 청년패널 대졸자 조사 분석 결과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조사분석시스템, https://survey.keis.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청년패널 대졸자 조사 : 우리나라의 청년층을 대표하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1년 1회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조사

○ 2001년 만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패널 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7년 만 15~29세 청년층을 표본으로 구성(청년패널 2007)하여 2020년 14차 조사까지 이루어졌음

○ 2021년에는 기존 청년패널조사의 장기추적에 따른 연령 노후화를 해소하고자 20대를 확충하고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청년패널 2021 조사가 기획되었고 2021년 기준 만 19~28세 청년층 12,000여명의 표본을 구축하여 추적조사가 진행 중임

○ 2021년 청년패널조사에 대한 데이터중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재분석을 수행함

<표 2-45> 2021년 청년 패널조사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표본수(명)	2,501	776	622	727	413	423	307	105	3,038
비율(%)	20.5	6.4	5.1	6.0	3.4	3.5	2.5	0.9	24.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표본수(명)	338	420	480	410	344	494	625	190	12,213
비율(%)	2.8	3.4	3.9	3.4	2.8	4.0	5.1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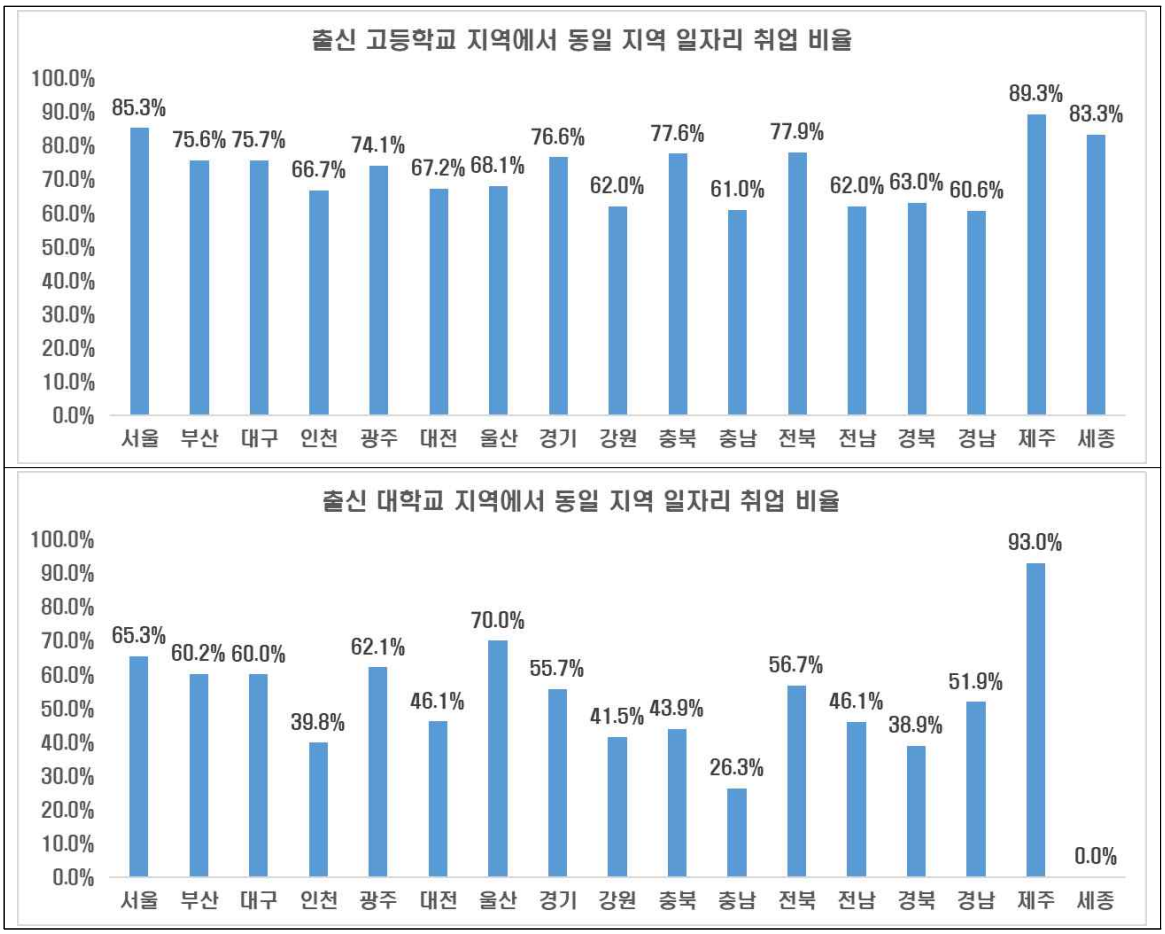
○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신고등학교 소재지역이 제주이고 일자리 지역이 제주인 경우가 89.3%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77.9%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72.1%
- 서울 : 85.3%
- 부산 : 75.6%
- 대구 : 75.7%
- 대전 : 66.7%
- 인천 : 74.1%
- 광주 : 67.2%
- 울산 : 68.1%
- 경기 : 76.6%
- 강원 : 62.0%
- 충북 : 77.6%
- 충남 : 61.0%
- 전북 : 77.9%
- 전남 : 62.0%
- 경북 : 63.0%
- 경남 : 60.6%
- 제주 : 89.63%
- 세종 : 83.3%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133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77.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7.1%), 경기(6.5%), 전남(2.6%), 인천(2.6%), 부산(1.3%)의 순으로 분석됨

- 출신대학교 소재지역과 일자리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출신대학교 소재지역이 제주이고 일자리 지역이 제주인 경우가 93.0%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56.7%로 분석됨
  - 전국 평균 : 53.6%
  - 서울 : 65.3%
  - 부산 : 60.2%
  - 대구 : 60.0%
  - 대전 : 39.8%
  - 인천 : 62.1%
  - 광주 : 46.1%
  - 울산 : 70.0%
  - 경기 : 55.7%
  - 강원 : 41.5%
  - 충북 : 43.9%
  - 충남 : 26.3%
  - 전북 : 56.7%
  - 전남 : 46.1%
  - 경북 : 38.9%
  - 경남 : 51.9%
  - 제주 : 93.0%
  - 세종 : 0.0%
- 전북특별자치도 응답인원 71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지역이 전북지역인 경우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6.5%), 서울(11.3%), 전남(6.2%), 대전(3.1%), 인천(2.1%), 세종(1.0%)의 순으로 분석됨

<그림 2-13> 2021년 청년패널조사 : 고등학교-대학교 출신 동일지역 일자리 취업비율



<표 2-46>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출신고등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그외 지역	응답 거절	전체	동일지역 비율
고등학교 소재지역	서울	931	2	1	13	2	0	1	125	6	1	2	1	1	4	1	0	0	0	1	1,092	85.3%
	부산	24	264	6	4	0	1	8	16	2	0	0	0	0	4	19	1	0	0	0	349	75.6%
	대구	11	0	230	1	0	0	1	9	0	1	2	0	1	44	2	1	1	0	0	304	75.7%
	대전	59	0	0	234	0	0	0	48	2	0	3	0	2	0	0	2	1	0	0	351	66.7%
	인천	12	0	1	1	109	0	0	4	0	0	0	2	17	1	0	0	0	0	0	147	74.1%
	광주	18	0	0	1	0	125	0	7	1	2	14	2	0	1	0	1	14	0	0	186	67.2%
	울산	11	15	1	2	0	0	96	7	0	0	1	0	1	6	0	0	1	0	0	141	68.1%
	경기	244	3	1	30	1	4	2	1,032	6	3	8	2	2	2	3	3	1	1	0	1,348	76.6%
	강원	14	1	1	2	1	1	0	8	49	1	0	0	0	1	0	0	0	0	0	79	62.0%
	충북	10	0	0	3	0	3	1	5	0	111	4	0	0	1	0	0	5	0	0	143	77.6%
	충남	28	0	0	2	0	6	0	24	0	6	111	1	0	1	1	0	2	0	0	182	61.0%
	전북	**11**	**2**	**0**	**1**	**4**	**1**	**0**	**10**	**0**	**0**	**0**	**120**	**4**	**0**	**0**	**0**	**1**	**0**	**0**	**154**	**77.9%**
	전남	16	0	0	0	24	0	1	18	1	2	1	2	116	1	4	1	0	0	0	187	62.0%
	경북	17	5	20	0	0	2	1	10	0	1	2	2	0	104	1	0	0	0	0	165	63.0%
	경남	25	47	5	3	0	0	4	12	0	2	0	1	1	6	166	2	0	0	0	274	60.6%
	제주	5	0	0	0	0	0	0	3	0	0	0	0	0	0	0	75	1	0	0	84	89.3%
	세종	1	0	0	0	0	0	0	0	0	2	0	0	0	1	0	0	20	0	0	24	83.3%
	그외 지역	16	0	0	0	0	0	0	3	1	0	0	0	0	0	0	1	0	1	0	22	0.0%
	응답 거절	10	1	0	1	0	1	0	11	0	2	0	0	0	1	0	0	0	0	0	27	
전체		1,463	340	266	298	141	144	115	1,352	68	134	148	133	145	178	197	87	47	2	1	5,259	
전북지역	비율	7.1%	1.3%	0.0%	0.6%	2.6%	0.6%	0.0%	6.5%	0.0%	0.0%	0.0%	77.9%	2.6%	0.0%	0.0%	0.0%	0.6%	0.0%	0.0%	100.0%	
학생기준	순위	2	6	10	7	4	7	10	3	10	10	10	1	4	10	10	10	7	10	10		

<표 2-47>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출신대학교와 현 일자리 지역의 관계

구분		현 일자리 지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그외 지역	응답 거절	전체	동일지역 비율
대학교 소재지역	서울	446	6	2	26	2	5	1	161	3	4	5	5	7	3	4	1	0	1	1	683	65.3%
	부산	24	162	4	3	0	1	22	7	2	0	0	0	0	6	37	1	0	0	0	269	60.2%
	대구	8	4	81	0	1	0	2	9	0	1	0	1	0	26	2	0	0	0	0	135	60.0%
	대전	28	0	0	37	1	0	0	22	1	0	0	0	2	0	1	1	0	0	0	93	39.8%
	인천	7	1	0	0	59	1	0	5	0	0	0	3	19	0	0	0	0	0	0	95	62.1%
	광주	8	0	1	0	0	71	0	16	2	7	28	1	0	0	1	0	19	0	0	154	46.1%
	울산	0	4	2	0	0	0	28	0	0	0	0	0	0	2	4	0	0	0	0	40	70.0%
	경기	210	3	0	44	3	5	1	362	5	2	3	0	4	4	3	1	0	0	0	650	55.7%
	강원	23	0	0	5	0	0	1	22	39	1	0	1	0	1	0	1	0	0	0	94	41.5%
	충북	17	0	0	6	0	2	0	21	1	43	3	0	0	1	2	0	2	0	0	98	43.9%
	충남	39	2	1	18	0	5	0	36	0	2	41	0	1	2	1	1	7	0	0	156	26.3%
	전북	**11**	**1**	**0**	**3**	**2**	**1**	**0**	**16**	**0**	**1**	**0**	**55**	**6**	**0**	**0**	**0**	**1**	**0**	**0**	**97**	**56.7%**
	전남	14	0	0	1	9	1	0	8	0	1	1	4	35	0	1	1	0	0	0	76	46.1%
	경북	10	4	40	1	0	0	7	10	0	0	0	0	1	49	1	0	3	0	0	126	38.9%
	경남	4	18	1	3	0	1	8	5	0	2	2	1	1	3	55	2	0	0	0	106	51.9%
	제주	0	0	0	0	0	0	0	2	0	0	0	0	1	0	0	40	0	0	0	43	93.0%
	세종	6	1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9	0.0%
	그외 지역	12	1	0	0	0	0	0	3	1	0	0	0	0	1	1	0	0	1	0	20	0.0%
	응답 거절	10	0	0	6	0	2	0	12	0	2	0	0	0	0	1	2	0	0	0	35	
전체		877	207	132	153	77	95	70	719	54	66	83	71	77	98	114	51	32	2	1	2,979	
전북지역	비율	11.3%	1.0%	0.0%	3.1%	2.1%	1.0%	0.0%	16.5%	0.0%	1.0%	0.0%	**56.7%**	6.2%	0.0%	0.0%	0.0%	1.0%	0.0%	0.0%	100.0%	
학생기준	순위	3	7	11	5	6	7	11	2	11	7	11	1	4	11	11	11	7	11	11		

3. 일자리 미스매치(양적 관점) 지역간 차이 분석

▌**일자리 미스매치(양적 관점)를 분석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통계자료(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를 이용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양적 관점)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의 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까지 총 7개 분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기별 평균 및 연도별 자료를 산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 2021년 상반기 ~ 2023년 하반기의 경우 반기별 자료를 합산하여 연도별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2024년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 2를 곱하여 연도별 자료를 생성한 이후, 연평균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 일자리(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충원률, 부족인원 그리고 부족률(부족인원/현원) 등을 광역지자체별 차이 분석, 직종별 차이분석 등을 수행함

1) 지역별 일자리 현황 분석(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직종에 구분없이 일자리 현황에 대하여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GAP)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일자리의 공급에서의 지역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연평균 일자리(구인인원)은 전국 기준 2,570,588명이며 이중 2.80%인 71,927명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의 평균 구인인원으로 분석됨

- 2021년 60,182명(2.73%)
- 2022년 67,487명(2.62%)
- 2023년 73,908명(2.82%)
- 2024년 상반기 43,066명(2.99%)
- 2021년에 비해 2024년 상반기 구인인원(일자리수) 비중이 점점 늘고 있음을 확인함

○ 지역별 평균 현원은 전국 17,738,519명이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는 492,507명으로 2.78%(11위)이며 구인인원(일자리수)은 2.77%로 14위에 해당

- 현원대비 구인인원(일자리수)는 7.10%로 11위에 해당됨

○ 연평균 채용인원은 전국기준 2,281,730명이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는 65,234명으로 전국대비 2.86%로 분석됨

- 2021년 54,093명(2.75%)
- 2022년 59,606명(2.70%)
- 2023년 67,384명(2.91%)
- 2024년 상반기 39,927명(3.03%)
- 2021년에 비해 2024년 상반기의 채용인원 비중이 점점 늘고 있음을 확인함

○ 연평균 미충원인원은 전국기준 288,858명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6.693명으로 전국대비 2.32%로 분석됨

○ 연평균 충원율 평균은 전국기준 88.28%이며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은 90.34%로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대구 92.12%, 광주 92.08%, 울산 91.78%, 인천 91.06% 세종 90.85%, 강원 90.44% 다음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8위에 해당함
-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충원율 평균이 비교적 우수한 수준임
- 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모두에서 전국 평균충원율을 상회하고 있음

○ 연평균 부족인원은 전국기준 1,101,282명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28,469명으로 전국대비 2.59%로 분석됨

○ 연평균 부족률(부족인원/현원인원)은 전국기준 3.12%이고 전북특별자치도는 2.87%로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울산 2.20%, 부산과 대구 2.41%, 광주 2.55%, 인천 2.87%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6위에 해당
-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부족률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
-

<표 2-48>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1년 상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6,755,398	1,047,240	945,474	101,766	90.28%	410,017	425,333	2.45%
서울	4,275,474	278,874	250,903	27,971	89.97%	99,974	102,434	2.34%
부산	1,035,466	66,700	59,626	7,074	89.39%	20,694	21,147	2.00%
대구	636,992	43,699	40,742	2,957	93.23%	11,822	13,125	1.86%
인천	807,540	42,468	39,955	2,513	94.08%	17,817	18,563	2.21%
광주	447,785	31,160	29,177	1,983	93.64%	8,648	8,725	1.93%
대전	462,218	29,129	27,152	1,977	93.21%	11,348	11,594	2.46%
울산	384,123	15,668	14,777	891	94.31%	3,426	3,575	0.89%
세종	82,135	5,346	4,854	492	90.80%	2,534	2,554	3.09%
경기	4,104,183	236,192	209,787	26,405	88.82%	125,125	125,487	3.05%
강원	414,055	28,477	26,565	1,912	93.29%	11,777	13,092	2.84%
충북	536,142	46,095	41,422	4,673	89.86%	14,839	19,803	2.77%
충남	710,814	51,060	47,478	3,582	92.98%	19,651	21,218	2.76%
전북	**475,816**	**28,553**	**25,896**	**2,657**	**90.69%**	**9,342**	**10,259**	**1.96%**
전남	516,575	24,921	22,379	2,542	89.80%	9,969	10,634	1.93%
경북	757,447	53,997	47,626	6,371	88.20%	20,576	21,264	2.72%
경남	935,028	53,960	47,703	6,257	88.40%	17,710	17,065	1.89%
제주	173,605	10,941	9,432	1,509	86.21%	4,766	4,796	2.75%

<표 2-49>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1년 하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7,292,568	1,157,444	1,020,325	137,119	88.15%	552,673	597,499	3.20%
서울	4,396,631	310,673	268,978	41,695	86.58%	144,759	148,167	3.29%
부산	1,058,713	64,979	57,716	7,263	88.82%	26,630	28,820	2.52%
대구	656,181	44,269	40,500	3,769	91.49%	14,635	18,912	2.23%
인천	838,734	49,215	45,268	3,947	91.98%	25,023	26,617	2.98%
광주	463,571	30,639	27,885	2,754	91.01%	12,874	13,568	2.78%
대전	467,917	34,026	30,389	3,637	89.31%	15,331	21,159	3.28%
울산	391,965	18,994	17,294	1,700	91.05%	6,669	8,265	1.70%
세종	86,969	6,006	5,239	767	87.23%	3,392	5,908	3.90%
경기	4,269,323	280,189	246,481	33,708	87.97%	156,011	158,531	3.65%
강원	427,735	30,167	26,422	3,745	87.59%	16,998	19,207	3.97%
충북	559,189	46,719	40,612	6,107	86.93%	19,158	22,287	3.43%
충남	736,853	50,057	43,964	6,093	87.83%	25,703	35,373	3.49%
전북	**485,626**	**31,629**	**28,197**	**3,432**	**89.15%**	**16,543**	**19,032**	**3.41%**
전남	528,191	35,088	32,178	2,910	91.71%	15,613	16,376	2.96%
경북	781,367	65,672	58,518	7,154	89.11%	21,621	22,960	2.77%
경남	964,212	49,615	42,635	6,980	85.93%	24,265	24,666	2.52%
제주	179,392	9,508	8,050	1,458	84.67%	7,448	7,651	4.15%

<표 2-50>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2년 상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7,611,126	1,314,167	1,135,842	178,325	86.43%	647,879	657,286	3.68%
서울	4,485,300	353,562	306,527	47,035	86.70%	156,152	158,345	3.48%
부산	1,069,103	75,360	67,733	7,627	89.88%	30,390	30,361	2.84%
대구	662,693	54,852	49,643	5,209	90.50%	19,050	21,227	2.87%
인천	848,413	59,226	54,155	5,071	91.44%	28,924	28,847	3.41%
광주	469,870	37,512	33,923	3,589	90.43%	14,336	13,875	3.05%
대전	476,332	38,412	34,106	4,306	88.79%	16,521	17,096	3.47%
울산	395,164	21,120	18,941	2,179	89.68%	8,936	9,294	2.26%
세종	89,832	7,288	6,500	788	89.19%	4,385	4,307	4.88%
경기	4,379,129	300,633	253,874	46,759	84.45%	192,256	193,727	4.39%
강원	430,936	39,138	34,110	5,028	87.15%	19,226	20,760	4.46%
충북	570,178	62,388	48,748	13,640	78.14%	26,673	29,082	4.68%
충남	748,915	58,361	51,002	7,359	87.39%	29,929	29,208	4.00%
전북	**489,924**	**34,949**	**31,147**	**3,802**	**89.12%**	**15,347**	**15,504**	**3.13%**
전남	539,553	35,420	30,699	4,721	86.67%	18,344	18,206	3.40%
경북	791,109	66,675	57,066	9,609	85.59%	28,004	28,615	3.54%
경남	982,463	54,677	45,365	9,312	82.97%	30,865	30,236	3.14%
제주	182,212	14,595	12,303	2,292	84.30%	8,543	8,594	4.69%

<표 2-51>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2년 하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7,943,460	1,263,248	1,070,914	192,334	84.77%	630,122	645,319	3.51%
서울	4,559,604	336,664	285,486	51,178	84.80%	149,329	151,656	3.28%
부산	1,084,109	66,118	57,193	8,925	86.50%	25,643	25,079	2.37%
대구	672,945	50,491	44,353	6,138	87.84%	19,927	21,706	2.96%
인천	859,931	48,789	42,472	6,317	87.05%	25,569	26,191	2.97%
광주	473,933	33,248	29,092	4,156	87.50%	14,894	15,064	3.14%
대전	491,657	41,603	37,075	4,528	89.12%	17,040	19,087	3.47%
울산	404,043	18,535	15,798	2,737	85.23%	9,954	10,072	2.46%
세종	93,200	8,701	7,760	941	89.19%	4,367	4,633	4.69%
경기	4,479,136	295,810	245,783	50,027	83.09%	185,270	186,036	4.14%
강원	445,099	47,639	42,591	5,048	89.40%	21,462	21,988	4.82%
충북	583,951	55,565	46,356	9,209	83.43%	26,361	30,317	4.51%
충남	760,022	56,681	47,210	9,471	83.29%	30,471	31,311	4.01%
전북	**498,220**	**32,538**	**28,459**	**4,079**	**87.46%**	**14,683**	**15,143**	**2.95%**
전남	552,047	37,577	31,742	5,835	84.47%	19,664	19,736	3.56%
경북	804,732	65,439	54,172	11,267	82.78%	27,160	29,373	3.38%
경남	995,602	54,991	44,852	10,139	81.56%	31,188	30,855	3.13%
제주	185,229	12,859	10,521	2,338	81.82%	7,138	7,072	3.85%

<표 2-52>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3년 상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8,075,171	1,392,275	1,225,326	166,949	88.01%	570,713	571,375	3.16%
서울	4,585,737	379,864	332,396	47,468	87.50%	145,071	143,148	3.16%
부산	1,096,696	75,397	68,115	7,282	90.34%	29,012	29,265	2.65%
대구	675,041	59,554	54,651	4,903	91.77%	16,515	17,600	2.45%
인천	879,980	61,606	54,912	6,694	89.13%	28,495	28,724	3.24%
광주	482,573	41,104	38,181	2,923	92.89%	11,797	11,848	2.44%
대전	507,689	49,252	45,550	3,702	92.48%	18,723	18,541	3.69%
울산	400,496	25,934	23,677	2,257	91.30%	10,931	11,230	2.73%
세종	95,405	8,516	7,757	759	91.09%	3,092	3,093	3.24%
경기	4,527,093	304,474	263,539	40,935	86.56%	153,235	151,802	3.38%
강원	438,932	47,559	42,910	4,649	90.22%	17,483	18,423	3.98%
충북	584,188	50,028	42,146	7,882	84.24%	19,479	20,320	3.33%
충남	770,895	62,738	55,823	6,915	88.98%	24,126	24,416	3.13%
전북	**495,692**	**40,912**	**37,713**	**3,199**	**92.18%**	**14,758**	**15,063**	**2.98%**
전남	550,055	39,921	35,174	4,747	88.11%	15,915	15,716	2.89%
경북	802,570	65,863	55,865	9,998	84.82%	24,420	25,352	3.04%
경남	998,091	63,831	54,408	9,423	85.24%	29,155	28,531	2.92%
제주	184,038	15,722	12,508	3,214	79.56%	8,505	8,304	4.62%

<표 2-53>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3년 하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8,239,198	1,229,974	1,089,671	140,303	88.59%	544,761	559,995	2.99%
서울	4,606,689	327,229	291,943	35,286	89.22%	138,875	138,792	3.01%
부산	1,092,409	60,059	53,540	6,519	89.15%	23,195	23,049	2.12%
대구	686,562	49,562	46,204	3,358	93.22%	15,056	16,474	2.19%
인천	889,761	51,046	46,209	4,837	90.52%	24,422	25,030	2.74%
광주	485,158	29,892	27,701	2,191	92.67%	11,711	12,911	2.41%
대전	511,963	45,564	42,438	3,126	93.14%	12,713	12,866	2.48%
울산	404,449	19,964	18,423	1,541	92.28%	10,793	11,175	2.67%
세종	100,336	11,678	10,981	697	94.03%	3,300	3,359	3.29%
경기	4,574,768	295,298	252,354	42,944	85.46%	157,089	157,718	3.43%
강원	444,169	38,915	35,482	3,433	91.18%	14,005	17,649	3.15%
충북	590,219	41,631	34,130	7,501	81.98%	20,906	22,108	3.54%
충남	782,130	72,963	66,982	5,981	91.80%	25,797	27,056	3.30%
전북	**500,556**	**32,996**	**29,671**	**3,325**	**89.92%**	**13,459**	**13,467**	**2.69%**
전남	566,723	34,717	31,338	3,379	90.27%	16,847	17,428	2.97%
경북	801,697	57,801	50,798	7,003	87.88%	23,964	26,247	2.99%
경남	1,014,894	47,121	39,413	7,708	83.64%	24,677	24,818	2.43%
제주	186,713	13,539	12,065	1,474	89.11%	7,952	9,846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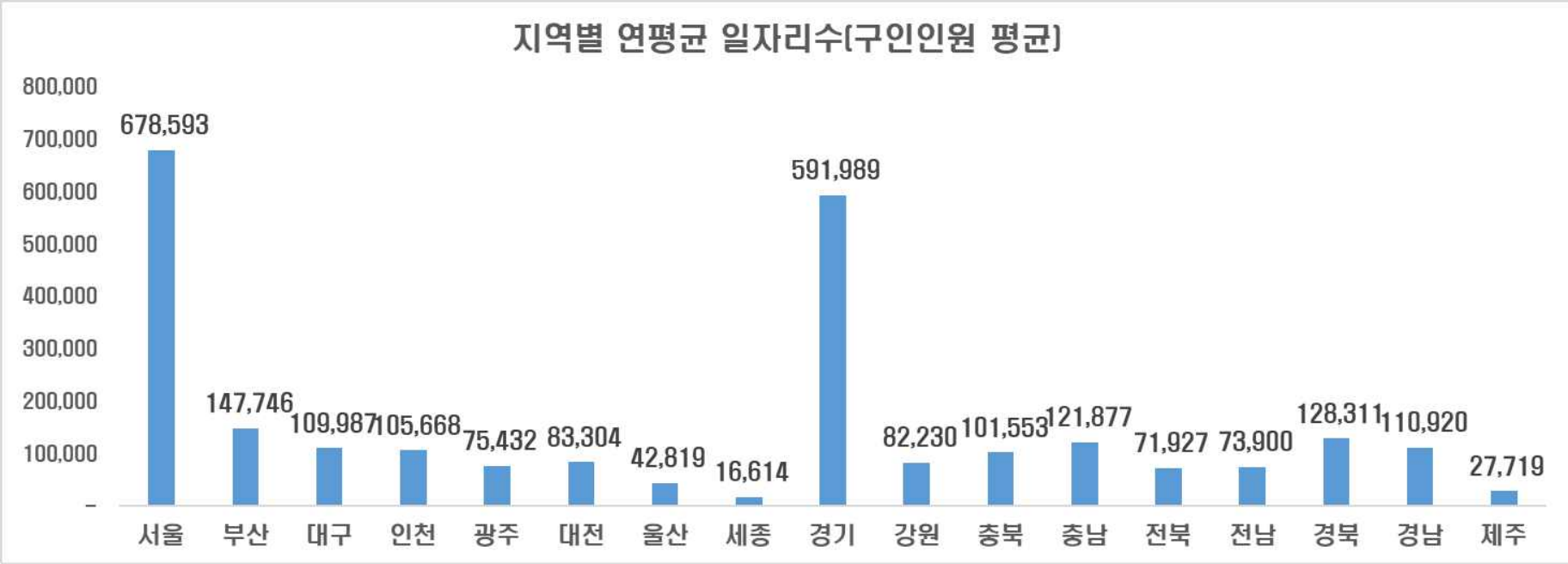
<표 2-54> 지자체별 일자리(구인-구직) 통계 : 2024년 상반기

구분	현원 (명)	구인인원 (명)	채용인원 (명)	미충원인원 (명)	충원율(채용/구인)	부족인원 (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18,252,711	1,439,001	1,319,684	119,317	91.71%	524,482	524,891	2.87%
서울	4,586,593	363,753	329,862	33,891	90.68%	138,248	137,937	3.01%
부산	1,087,249	91,186	85,304	5,882	93.55%	26,216	26,094	2.41%
대구	684,188	68,761	65,856	2,905	95.78%	15,614	17,021	2.28%
인천	886,720	55,160	51,685	3,475	93.70%	22,395	22,669	2.53%
광주	486,536	49,086	46,663	2,423	95.06%	10,261	10,102	2.11%
대전	511,666	47,615	45,412	2,203	95.37%	14,866	14,979	2.91%
울산	404,255	25,531	24,053	1,478	94.21%	10,952	10,732	2.71%
세종	100,160	9,460	8,689	771	91.85%	3,362	3,498	3.36%
경기	4,613,267	327,679	297,081	30,598	90.66%	135,368	132,282	2.93%
강원	441,730	48,513	45,532	2,981	93.86%	14,440	15,360	3.27%
충북	593,628	51,892	45,877	6,015	88.41%	23,860	24,205	4.02%
충남	785,477	67,824	61,802	6,022	91.12%	24,692	25,872	3.14%
전북	**501,712**	**43,066**	**39,927**	**3,139**	**92.71%**	**14,871**	**15,296**	**2.96%**
전남	561,624	43,978	39,571	4,407	89.98%	16,230	16,178	2.89%
경북	802,585	68,899	64,172	4,727	93.14%	21,722	22,650	2.71%
경남	1,021,030	59,743	52,788	6,955	88.36%	24,733	23,428	2.42%
제주	184,291	16,855	15,409	1,446	91.42%	6,653	6,589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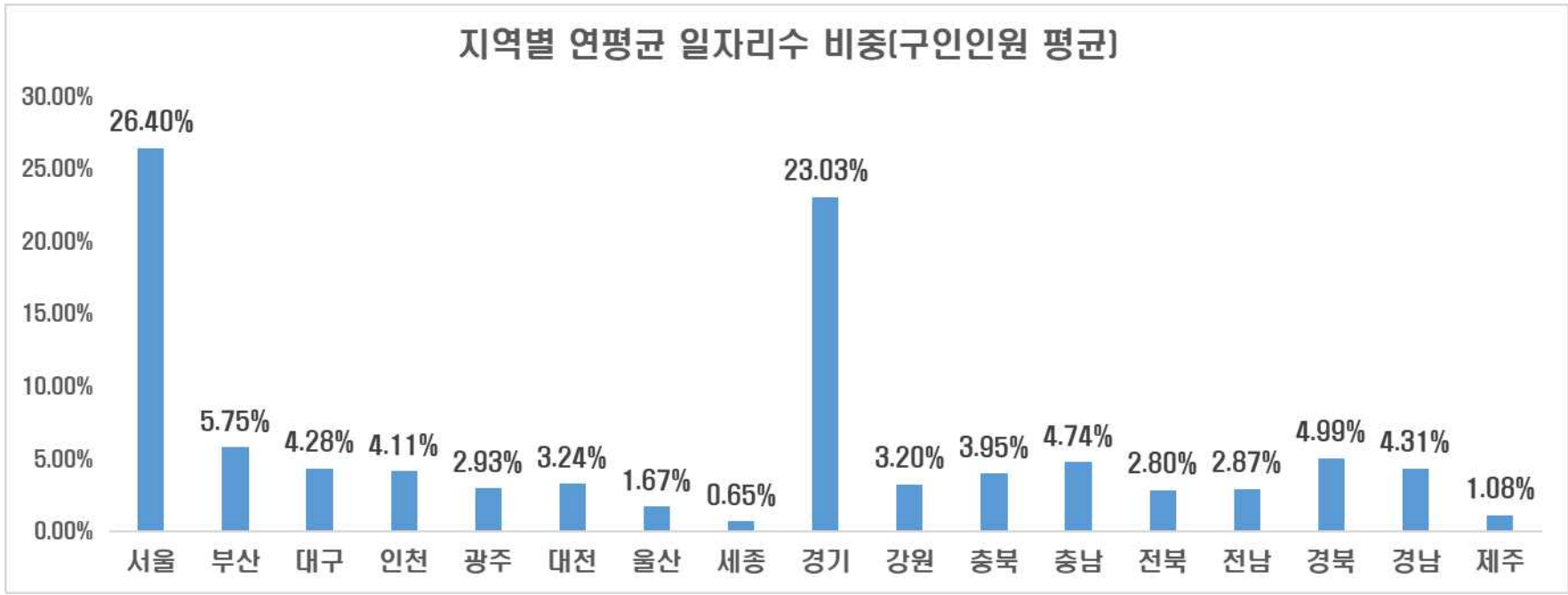
<표 2-55> 광역지자체별 일자리 : 평균구인인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연도별 일자리수 평균(추정)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전국	2,204,684		2,577,415		2,622,249		1,439,001		2,570,588	
서울	589,547	26.74%	690,226	26.78%	707,093	26.97%	363,753	25.28%	678,593	26.40%
부산	131,679	5.97%	141,478	5.49%	135,456	5.17%	91,186	6.34%	147,746	5.75%
대구	87,968	3.99%	105,343	4.09%	109,116	4.16%	68,761	4.78%	109,987	4.28%
인천	91,683	4.16%	108,015	4.19%	112,652	4.30%	55,160	3.83%	105,668	4.11%
광주	61,799	2.80%	70,760	2.75%	70,996	2.71%	49,086	3.41%	75,432	2.93%
대전	63,155	2.86%	80,015	3.10%	94,816	3.62%	47,615	3.31%	83,304	3.24%
울산	34,662	1.57%	39,655	1.54%	45,898	1.75%	25,531	1.77%	42,819	1.67%
세종	11,352	0.51%	15,989	0.62%	20,194	0.77%	9,460	0.66%	16,614	0.65%
경기	516,381	23.42%	596,443	23.14%	599,772	22.87%	327,679	22.77%	591,989	23.03%
강원	58,644	2.66%	86,777	3.37%	86,474	3.30%	48,513	3.37%	82,230	3.20%
충북	92,814	4.21%	117,953	4.58%	91,659	3.50%	51,892	3.61%	101,553	3.95%
충남	101,117	4.59%	115,042	4.46%	135,701	5.17%	67,824	4.71%	121,877	4.74%
전북	**60,182**	**2.73%**	**67,487**	**2.62%**	**73,908**	**2.82%**	**43,066**	**2.99%**	**71,927**	**2.80%**
전남	60,009	2.72%	72,997	2.83%	74,638	2.85%	43,978	3.06%	73,900	2.87%
경북	119,669	5.43%	132,114	5.13%	123,664	4.72%	68,899	4.79%	128,311	4.99%
경남	103,575	4.70%	109,668	4.25%	110,952	4.23%	59,743	4.15%	110,920	4.31%
제주	20,449	0.93%	27,454	1.07%	29,261	1.12%	16,855	1.17%	27,719	1.08%

<그림 2-14> 지자체별 일자리 수 : 연도별 구인인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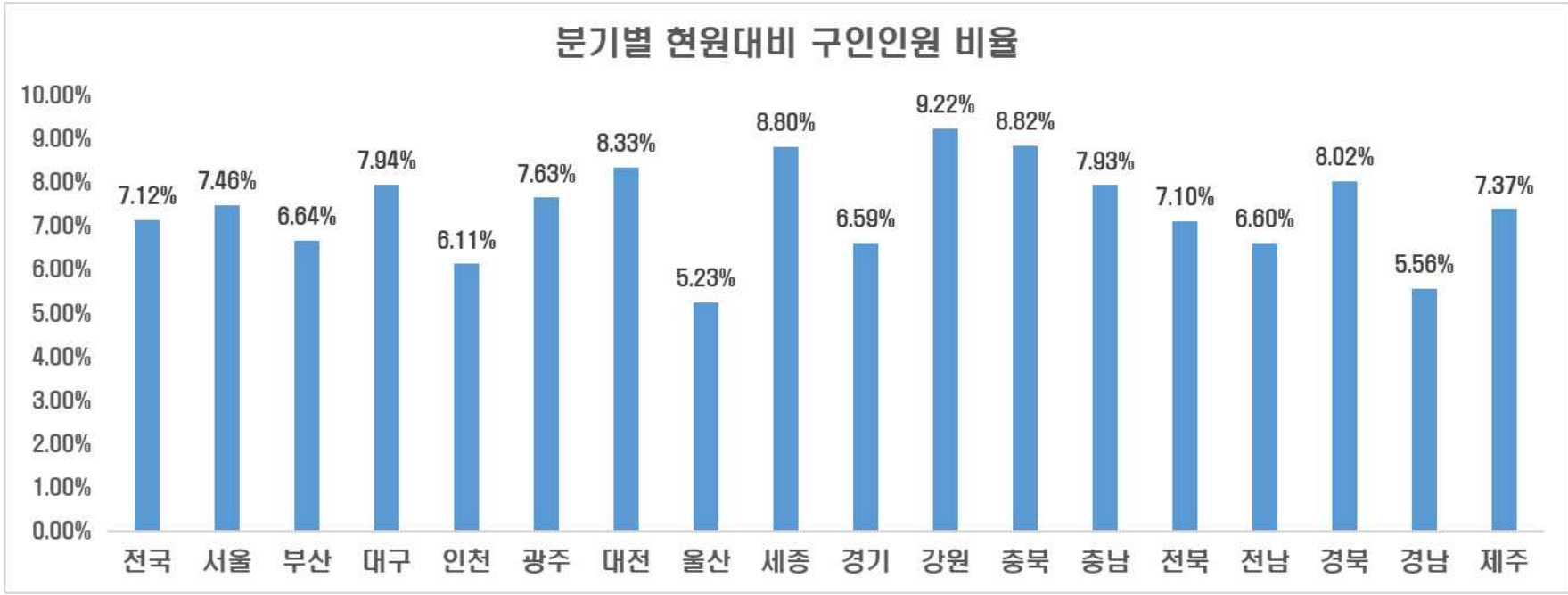
<그림 2-15> 지자체별 일자리 수 비중 : 연도별 구인인원 평균



<표 2-56> 지자체별 현원/구인인원/현원대비 구인인원 비중(분기별 기준)

구분	현원			구인인원(분기별 기준)			현원대비 구인인원 비율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지자체별 순위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지자체별 순위	전국대비 비중(%)	지자체별 순위
전국	17,738,519			1,263,336			7.12%	
서울	4,499,433	25.37%	1	335,803	26.58%	1	7.46%	9
부산	1,074,821	6.06%	3	71,400	5.65%	3	6.64%	12
대구	667,800	3.76%	8	53,027	4.20%	7	7.94%	6
인천	858,726	4.84%	5	52,501	4.16%	8	6.11%	15
광주	472,775	2.67%	13	36,092	2.86%	12	7.63%	8
대전	489,920	2.76%	12	40,800	3.23%	10	8.33%	4
울산	397,785	2.24%	15	20,821	1.65%	15	5.23%	17
세종	92,577	0.52%	17	8,142	0.64%	17	8.80%	3
경기	4,420,986	24.92%	2	291,468	23.07%	2	6.59%	14
강원	434,665	2.45%	14	40,058	3.17%	11	9.22%	1
충북	573,928	3.24%	9	50,617	4.01%	9	8.82%	2
충남	756,444	4.26%	7	59,955	4.75%	5	7.93%	7
전북	**492,507**	**2.78%**	**11**	**34,949**	**2.77%**	**14**	**7.10%**	**11**
전남	544,967	3.07%	10	35,946	2.85%	13	6.60%	13
경북	791,644	4.46%	6	63,478	5.02%	4	8.02%	5
경남	987,331	5.57%	4	54,848	4.34%	6	5.56%	16
제주	182,211	1.03%	16	13,431	1.06%	16	7.37%	10

<그림 2-16> 분기별 현원대비 구인인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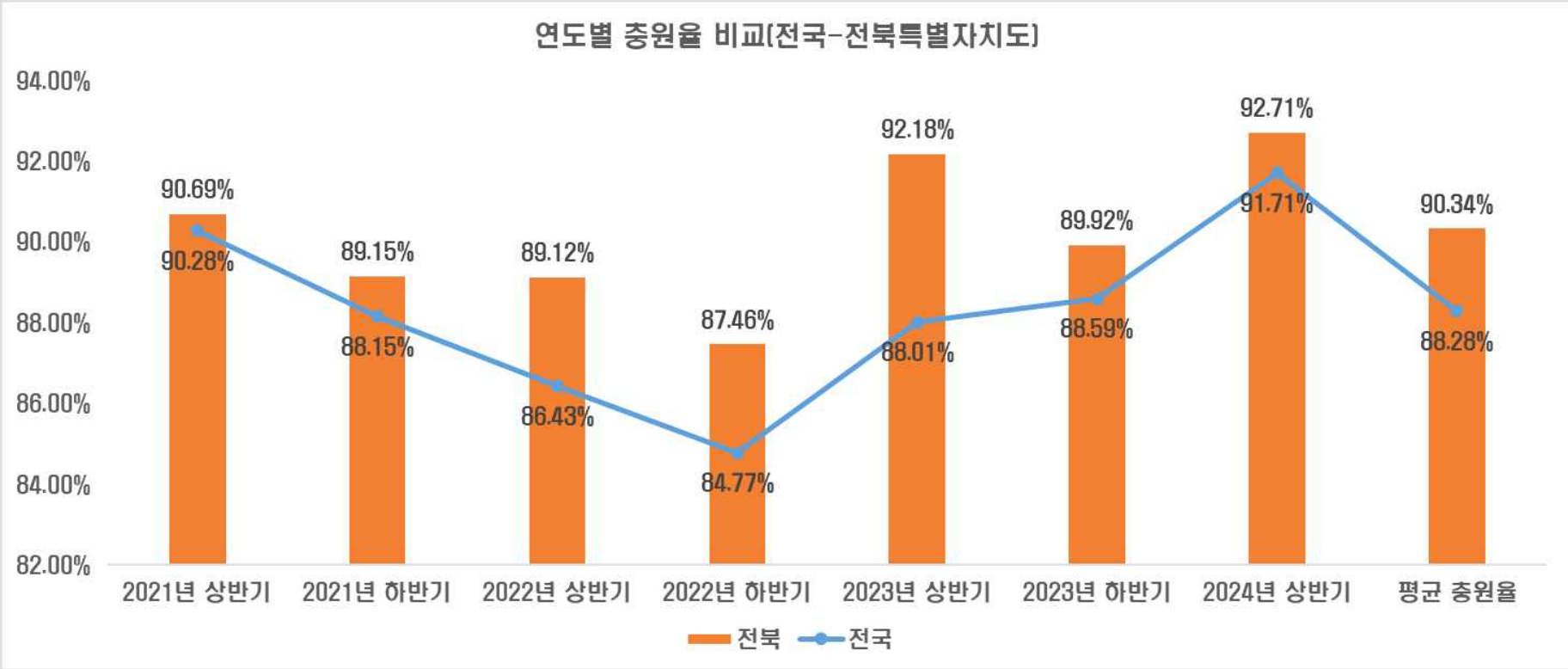
<표 2-57> 지자체별 일자리 : 평균채용인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추정) 채용인원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평균인원(명)	전국대비 비중(%)
전국	1,965,799		2,206,756		2,314,997		1,319,684		2,281,730	
서울	519,881	26.45%	592,013	26.83%	624,339	26.97%	329,862	25.00%	598,989	26.25%
부산	117,342	5.97%	124,926	5.66%	121,655	5.26%	85,304	6.46%	133,633	5.86%
대구	81,242	4.13%	93,996	4.26%	100,855	4.36%	65,856	4.99%	101,951	4.47%
인천	85,223	4.34%	96,627	4.38%	101,121	4.37%	51,685	3.92%	96,585	4.23%
광주	57,062	2.90%	63,015	2.86%	65,882	2.85%	46,663	3.54%	69,821	3.06%
대전	57,541	2.93%	71,181	3.23%	87,988	3.80%	45,412	3.44%	76,884	3.37%
울산	32,071	1.63%	34,739	1.57%	42,100	1.82%	24,053	1.82%	39,254	1.72%
세종	10,093	0.51%	14,260	0.65%	18,738	0.81%	8,689	0.66%	15,117	0.66%
경기	456,268	23.21%	499,657	22.64%	515,893	22.28%	297,081	22.51%	516,495	22.64%
강원	52,987	2.70%	76,701	3.48%	78,392	3.39%	45,532	3.45%	74,786	3.28%
충북	82,034	4.17%	95,104	4.31%	76,276	3.29%	45,877	3.48%	86,292	3.78%
충남	91,442	4.65%	98,212	4.45%	122,805	5.30%	61,802	4.68%	109,016	4.78%
전북	**54,093**	**2.75%**	**59,606**	**2.70%**	**67,384**	**2.91%**	**39,927**	**3.03%**	**65,234**	**2.86%**
전남	54,557	2.78%	62,441	2.83%	66,512	2.87%	39,571	3.00%	65,663	2.88%
경북	106,144	5.40%	111,238	5.04%	106,663	4.61%	64,172	4.86%	113,097	4.96%
경남	90,338	4.60%	90,217	4.09%	93,821	4.05%	52,788	4.00%	94,988	4.16%
제주	17,482	0.89%	22,824	1.03%	24,573	1.06%	15,409	1.17%	23,92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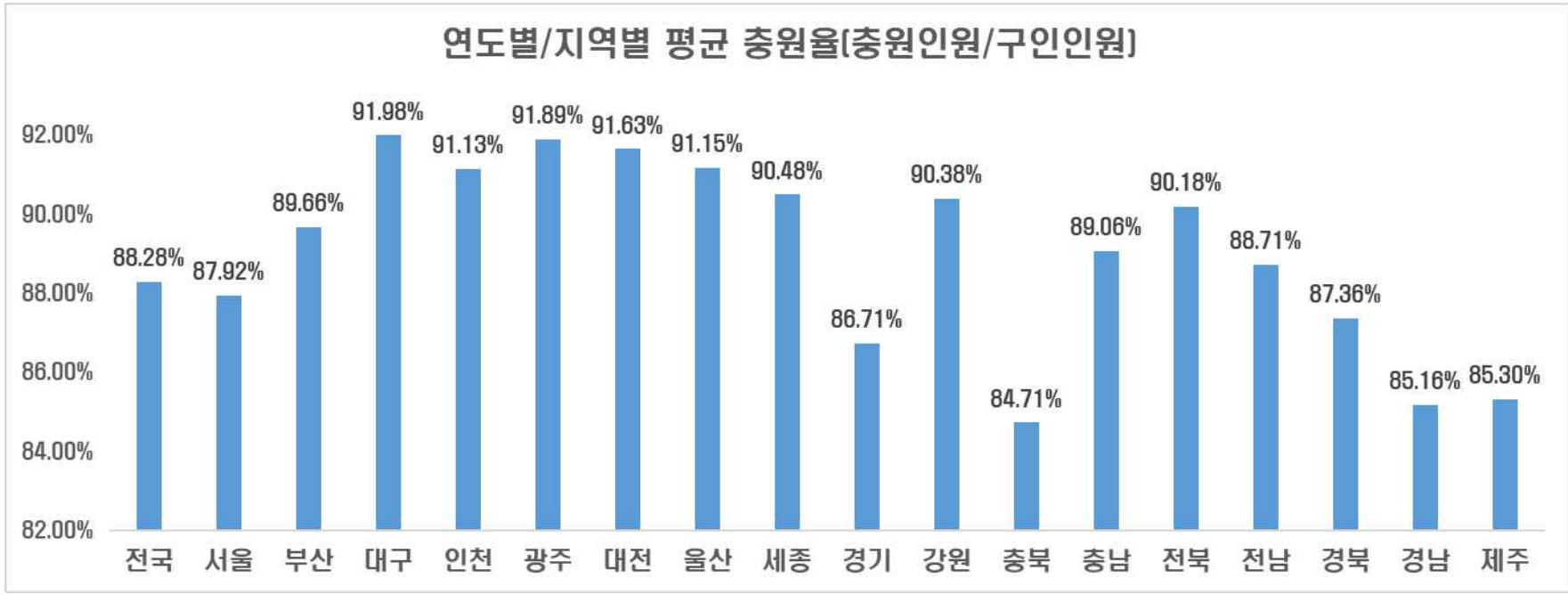
<표 2-58> 지자체별 일자리 : 충원율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충원율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연평균	지자체별 순위
전국	90.28%	88.15%	86.43%	84.77%	88.01%	88.59%	91.71%	88.28%	
서울	89.97%	86.58%	86.70%	84.80%	87.50%	89.22%	90.68%	87.90%	12
부산	89.39%	88.82%	89.88%	86.50%	90.34%	89.15%	93.55%	89.88%	9
대구	93.23%	91.49%	90.50%	87.84%	91.77%	93.22%	95.78%	92.12%	1
인천	94.08%	91.98%	91.44%	87.05%	89.13%	90.52%	93.70%	91.06%	4
광주	93.64%	91.01%	90.43%	87.50%	92.89%	92.67%	95.06%	92.08%	2
대전	93.21%	89.31%	88.79%	89.12%	92.48%	93.14%	95.37%	91.78%	3
울산	94.31%	91.05%	89.68%	85.23%	91.30%	92.28%	94.21%	91.23%	5
세종	90.80%	87.23%	89.19%	89.19%	91.09%	94.03%	91.85%	90.85%	6
경기	88.82%	87.97%	84.45%	83.09%	86.56%	85.46%	90.66%	86.70%	14
강원	93.29%	87.59%	87.15%	89.40%	90.22%	91.18%	93.86%	90.44%	7
충북	89.86%	86.93%	78.14%	83.43%	84.24%	81.98%	88.41%	84.47%	17
충남	92.98%	87.83%	87.39%	83.29%	88.98%	91.80%	91.12%	89.18%	10
전북	**90.69%**	**89.15%**	**89.12%**	**87.46%**	**92.18%**	**89.92%**	**92.71%**	**90.34%**	**8**
전남	89.80%	91.71%	86.67%	84.47%	88.11%	90.27%	89.98%	88.66%	11
경북	88.20%	89.11%	85.59%	82.78%	84.82%	87.88%	93.14%	87.37%	13
경남	88.40%	85.93%	82.97%	81.56%	85.24%	83.64%	88.36%	85.21%	16
제주	86.21%	84.67%	84.30%	81.82%	79.56%	89.11%	91.42%	85.40%	15

<그림 2-17> 지자체별 일자리 연도별 충원율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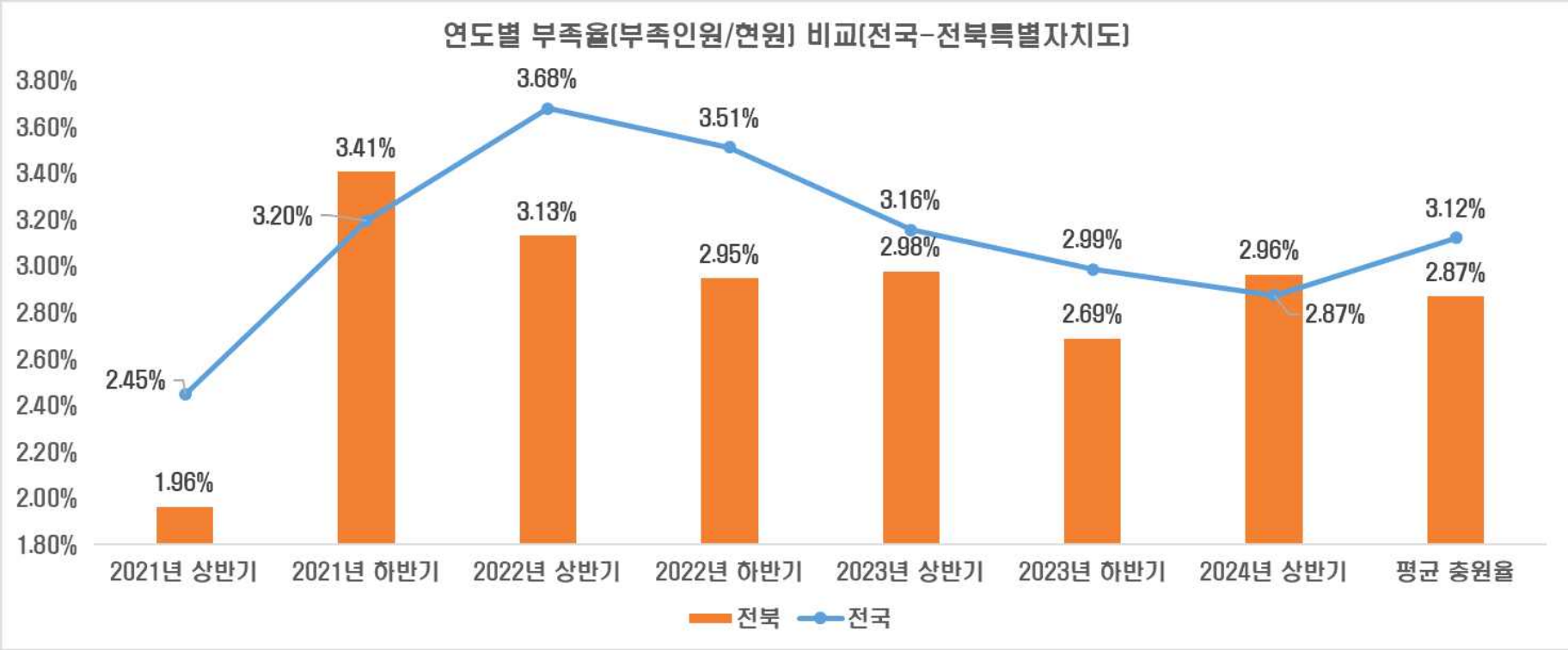
<그림 2-18> 지자체별 일자리 연도별/지역별 충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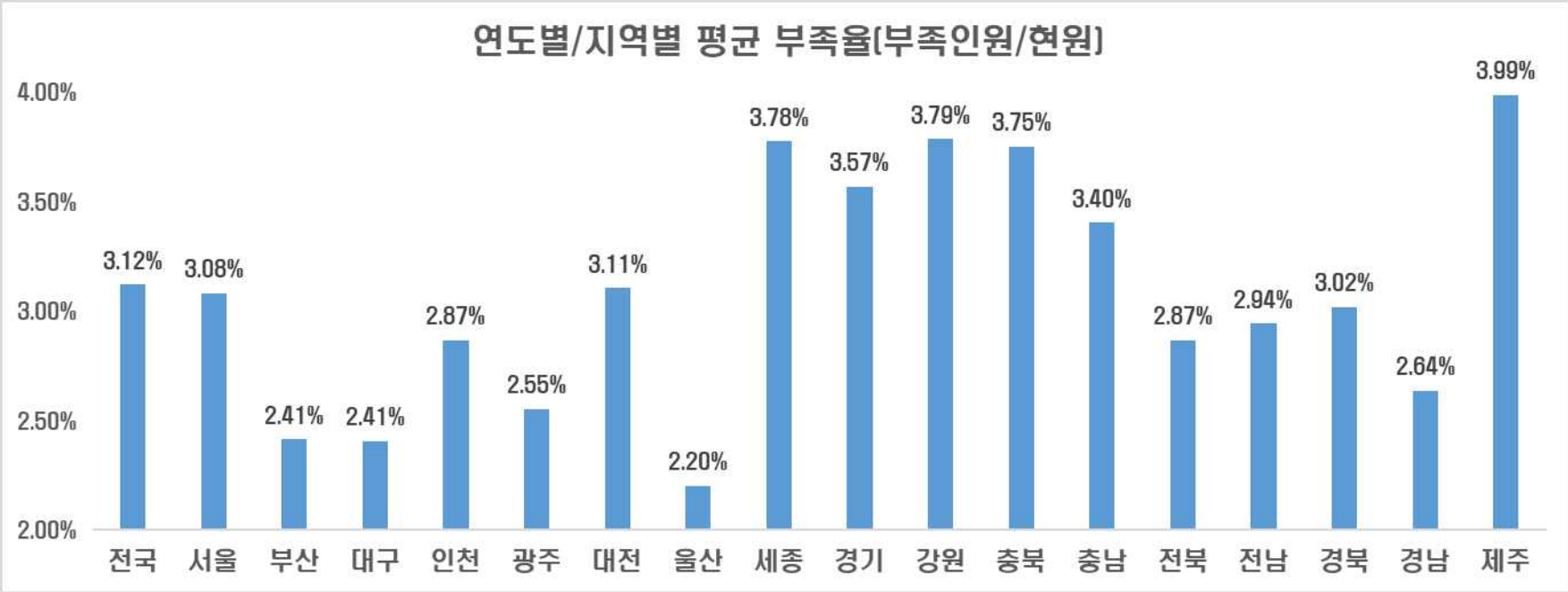
<표 2-59> 지자체별 일자리 부족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부족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연평균	순위
전국	2.45%	3.20%	3.68%	3.51%	3.16%	2.99%	2.87%	3.12%	
서울	2.34%	3.29%	3.48%	3.28%	3.16%	3.01%	3.01%	3.08%	10
부산	2.00%	2.52%	2.84%	2.37%	2.65%	2.12%	2.41%	2.41%	2
대구	1.86%	2.23%	2.87%	2.96%	2.45%	2.19%	2.28%	2.41%	2
인천	2.21%	2.98%	3.41%	2.97%	3.24%	2.74%	2.53%	2.87%	6
광주	1.93%	2.78%	3.05%	3.14%	2.44%	2.41%	2.11%	2.55%	4
대전	2.46%	3.28%	3.47%	3.47%	3.69%	2.48%	2.91%	3.11%	11
울산	0.89%	1.70%	2.26%	2.46%	2.73%	2.67%	2.71%	2.20%	1
세종	3.09%	3.90%	4.88%	4.69%	3.24%	3.29%	3.36%	3.78%	15
경기	3.05%	3.65%	4.39%	4.14%	3.38%	3.43%	2.93%	3.57%	13
강원	2.84%	3.97%	4.46%	4.82%	3.98%	3.15%	3.27%	3.79%	16
충북	2.77%	3.43%	4.68%	4.51%	3.33%	3.54%	4.02%	3.75%	14
충남	2.76%	3.49%	4.00%	4.01%	3.13%	3.30%	3.14%	3.40%	12
전북	**1.96%**	**3.41%**	**3.13%**	**2.95%**	**2.98%**	**2.69%**	**2.96%**	**2.87%**	**6**
전남	1.93%	2.96%	3.40%	3.56%	2.89%	2.97%	2.89%	2.94%	8
경북	2.72%	2.77%	3.54%	3.38%	3.04%	2.99%	2.71%	3.02%	9
경남	1.89%	2.52%	3.14%	3.13%	2.92%	2.43%	2.42%	2.64%	5
제주	2.75%	4.15%	4.69%	3.85%	4.62%	4.26%	3.61%	3.99%	17

<그림 2-19> 지자체별 일자리 연도별 부족률 비교(전북특별자치도-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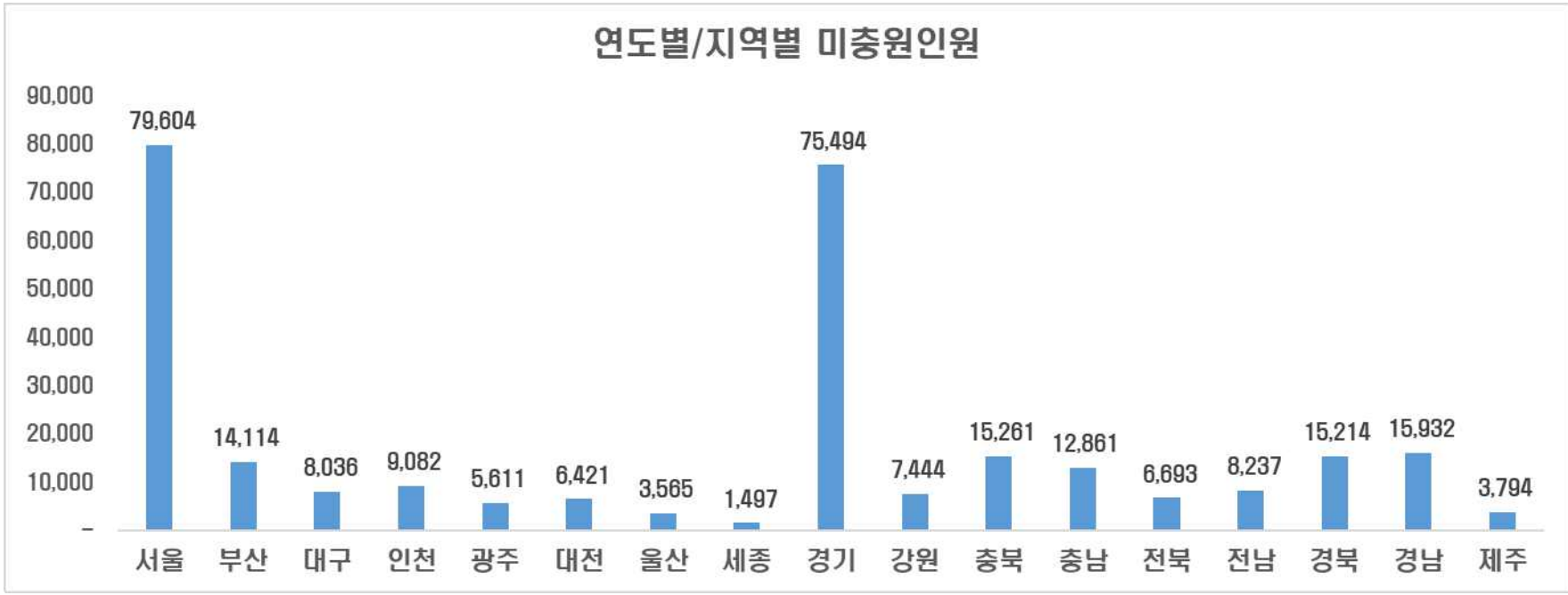
<그림 2-20> 지자체별 일자리 연도별/지역별 부족률(2021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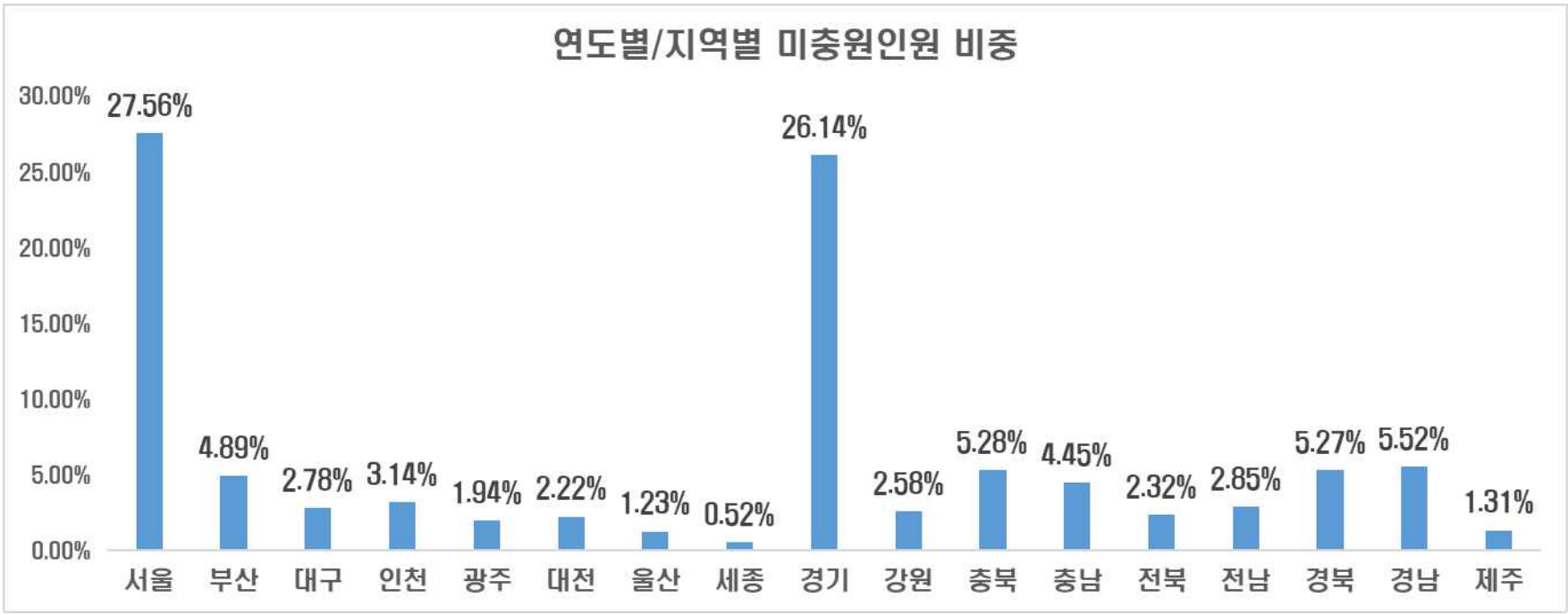
<표 2-60> 지자체별 일자리 : 평균미충원인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추정) 미충원인원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전국	238,885		370,659		307,252		119,317		288,858	
서울	69,666	29.16%	98,213	26.50%	82,754	26.93%	33,891	28.40%	79,604	27.56%
부산	14,337	6.00%	16,552	4.47%	13,801	4.49%	5,882	4.93%	14,114	4.89%
대구	6,726	2.82%	11,347	3.06%	8,261	2.69%	2,905	2.43%	8,036	2.78%
인천	6,460	2.70%	11,388	3.07%	11,531	3.75%	3,475	2.91%	9,082	3.14%
광주	4,737	1.98%	7,745	2.09%	5,114	1.66%	2,423	2.03%	5,611	1.94%
대전	5,614	2.35%	8,834	2.38%	6,828	2.22%	2,203	1.85%	6,421	2.22%
울산	2,591	1.08%	4,916	1.33%	3,798	1.24%	1,478	1.24%	3,565	1.23%
세종	1,259	0.53%	1,729	0.47%	1,456	0.47%	771	0.65%	1,497	0.52%
경기	60,113	25.16%	96,786	26.11%	83,879	27.30%	30,598	25.64%	75,494	26.14%
강원	5,657	2.37%	10,076	2.72%	8,082	2.63%	2,981	2.50%	7,444	2.58%
충북	10,780	4.51%	22,849	6.16%	15,383	5.01%	6,015	5.04%	15,261	5.28%
충남	9,675	4.05%	16,830	4.54%	12,896	4.20%	6,022	5.05%	12,861	4.45%
전북	**6,089**	**2.55%**	**7,881**	**2.13%**	**6,524**	**2.12%**	**3,139**	**2.63%**	**6,693**	**2.32%**
전남	5,452	2.28%	10,556	2.85%	8,126	2.64%	4,407	3.69%	8,237	2.85%
경북	13,525	5.66%	20,876	5.63%	17,001	5.53%	4,727	3.96%	15,214	5.27%
경남	13,237	5.54%	19,451	5.25%	17,131	5.58%	6,955	5.83%	15,932	5.52%
제주	2,967	1.24%	4,630	1.25%	4,688	1.53%	1,446	1.21%	3,794	1.31%

<그림 2-21> 연도별/지역별 미충원 인원(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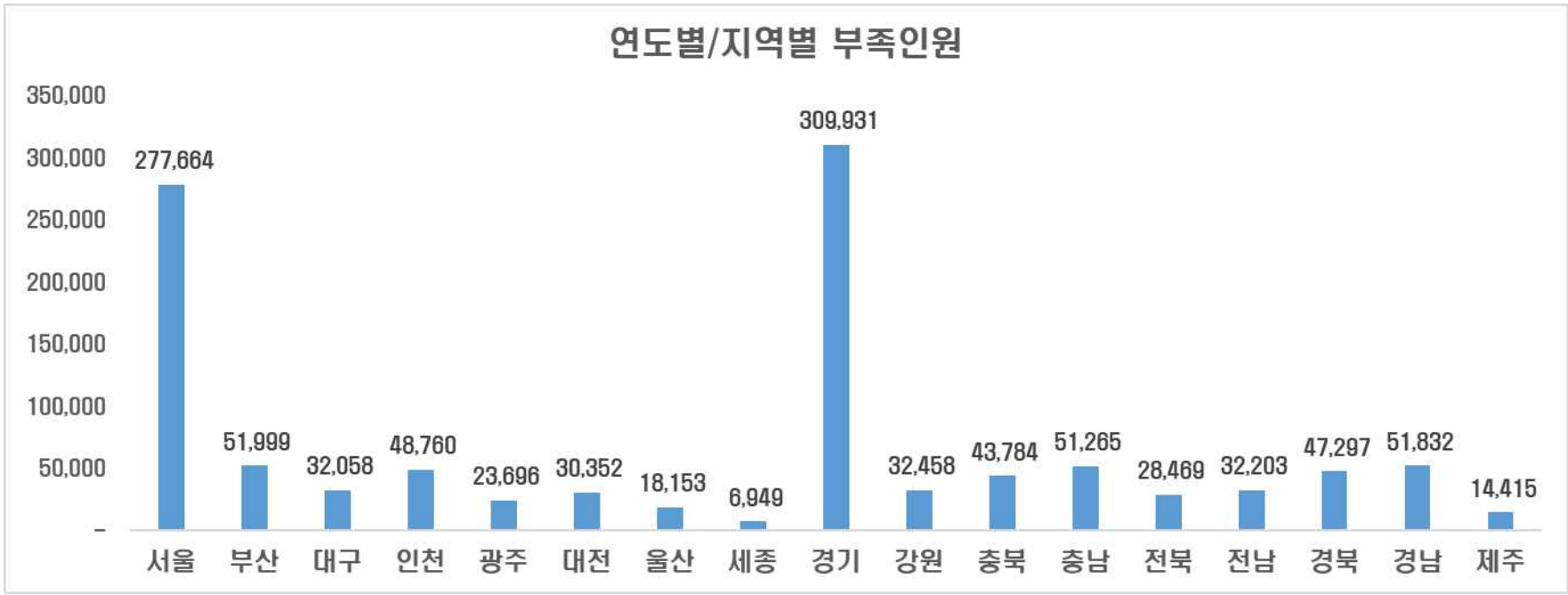
<그림 2-22> 연도별/지역별 미충원 인원 비중(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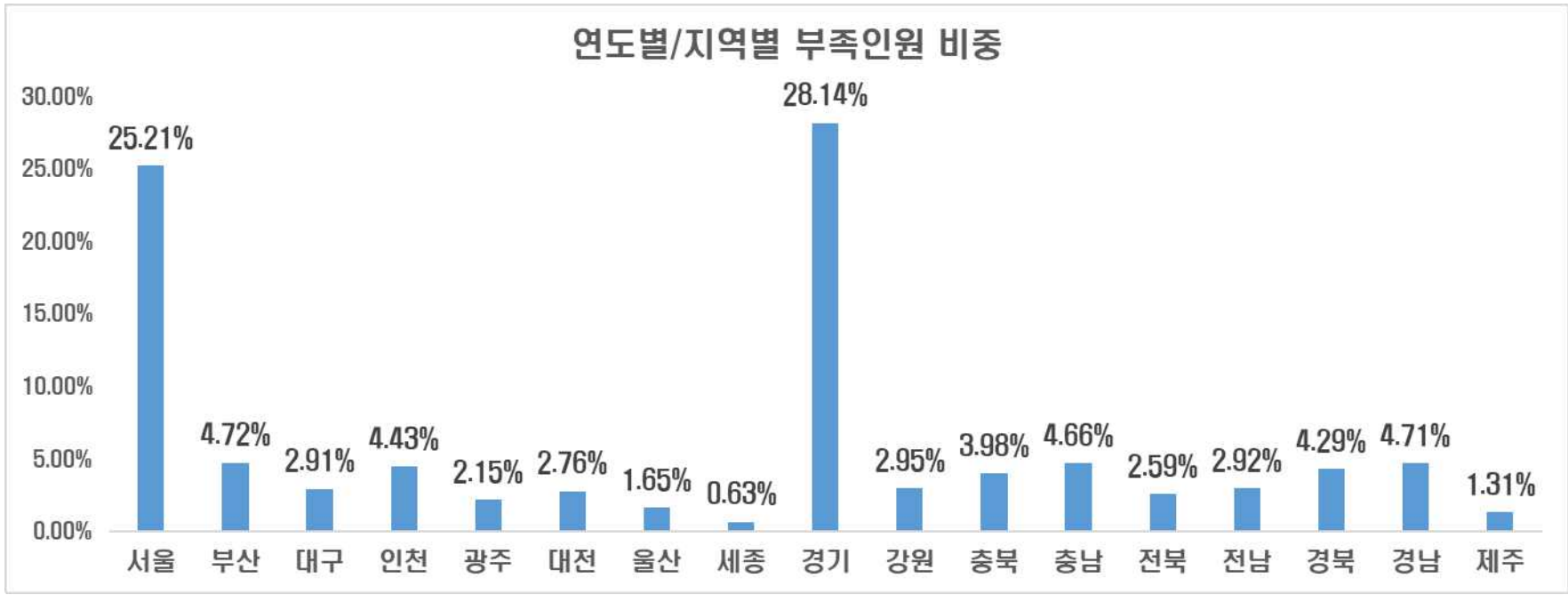
<표 2-61> 지자체별 일자리 : 평균부족인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추정) 부족인원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평균인원(명)	비중(%)
전국	962,690		1,278,001		1,115,474		524,482		1,101,282	
서울	244,733	25.42%	305,481	23.90%	283,946	25.46%	138,248	26.36%	277,664	25.21%
부산	47,324	4.92%	56,033	4.38%	52,207	4.68%	26,216	5.00%	51,999	4.72%
대구	26,457	2.75%	38,977	3.05%	31,571	2.83%	15,614	2.98%	32,058	2.91%
인천	42,840	4.45%	54,493	4.26%	52,917	4.74%	22,395	4.27%	48,760	4.43%
광주	21,522	2.24%	29,230	2.29%	23,508	2.11%	10,261	1.96%	23,696	2.15%
대전	26,679	2.77%	33,561	2.63%	31,436	2.82%	14,866	2.83%	30,352	2.76%
울산	10,095	1.05%	18,890	1.48%	21,724	1.95%	10,952	2.09%	18,153	1.65%
세종	5,926	0.62%	8,752	0.68%	6,392	0.57%	3,362	0.64%	6,949	0.63%
경기	281,136	29.20%	377,526	29.54%	310,324	27.82%	135,368	25.81%	309,931	28.14%
강원	28,775	2.99%	40,688	3.18%	31,488	2.82%	14,440	2.75%	32,458	2.95%
충북	33,997	3.53%	53,034	4.15%	40,385	3.62%	23,860	4.55%	43,784	3.98%
충남	45,354	4.71%	60,400	4.73%	49,923	4.48%	24,692	4.71%	51,265	4.66%
전북	**25,885**	**2.69%**	**30,030**	**2.35%**	**28,217**	**2.53%**	**14,871**	**2.84%**	**28,469**	**2.59%**
전남	25,582	2.66%	38,008	2.97%	32,762	2.94%	16,230	3.09%	32,203	2.92%
경북	42,197	4.38%	55,164	4.32%	48,384	4.34%	21,722	4.14%	47,297	4.29%
경남	41,975	4.36%	62,053	4.86%	53,832	4.83%	24,733	4.72%	51,832	4.71%
제주	12,214	1.27%	15,681	1.23%	16,457	1.48%	6,653	1.27%	14,415	1.31%

<그림 2-23> 연도별/지역별 부족인원(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기준)



<그림 2-24> 연도별/지역별 부족인원 비중(2021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연도별 평균기준)



2) 직종별 일자리 현황 분석(전국 기준)

▮ 전국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직종별로 구인인원(일자리수),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구인인원 기준으로는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8 설치・정비・생산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의 순이었으나, 채용인원 기준에서는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8 설치・정비・생산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등의 순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미충원 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 설치・정비・생산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등의 순이었으나, 부족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 설치・정비・생산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의 순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구인인원 기준

- 1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42.423명(21.47%)
- 2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384.709명(15.23%)
- 3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374,717명(14.83%)
- 4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50,167명(13.86%)
- 5순위 : [7 건설・채굴직], 252,941명(10.01%)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27,056명(8.99%)
- 7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86,473명(7.38%)
- 8순위 : [3 보건・의료직], 141,104명(5.58%)
- 9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2,437명(2.08%)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14,644명(0.58%)

○ 채용인원 기준

- 1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0,515명(22.89%)
- 2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10,775명(13.93%)
- 3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304,883명(13.67%)
- 4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303,762명(13.62%)
- 5순위 : [7 건설・채굴직], 247,980명(11.12%)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6,022명(9.68%)
- 7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52,581명(6.84%)
- 8순위 : [3 보건・의료직], 125,353명(5.62%)
- 9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4,741명(2.01%)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14,027명(0.63%)

○ 미충원인원 기준

- 1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79,825명(26.97%)
- 2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0,955명(23.97%)
- 3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9,392명(13.31%)
- 4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33,892명(11.45%)
- 5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31,908명(10.78%)
- 6순위 : [3 보건・의료직], 15,751명(5.32%)
- 7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1,034명(3.73%)
- 8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697명(2.60%)
- 9순위 : [7 건설・채굴직], 4,961명(1.68%)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618명(0.21%)

○ 부족인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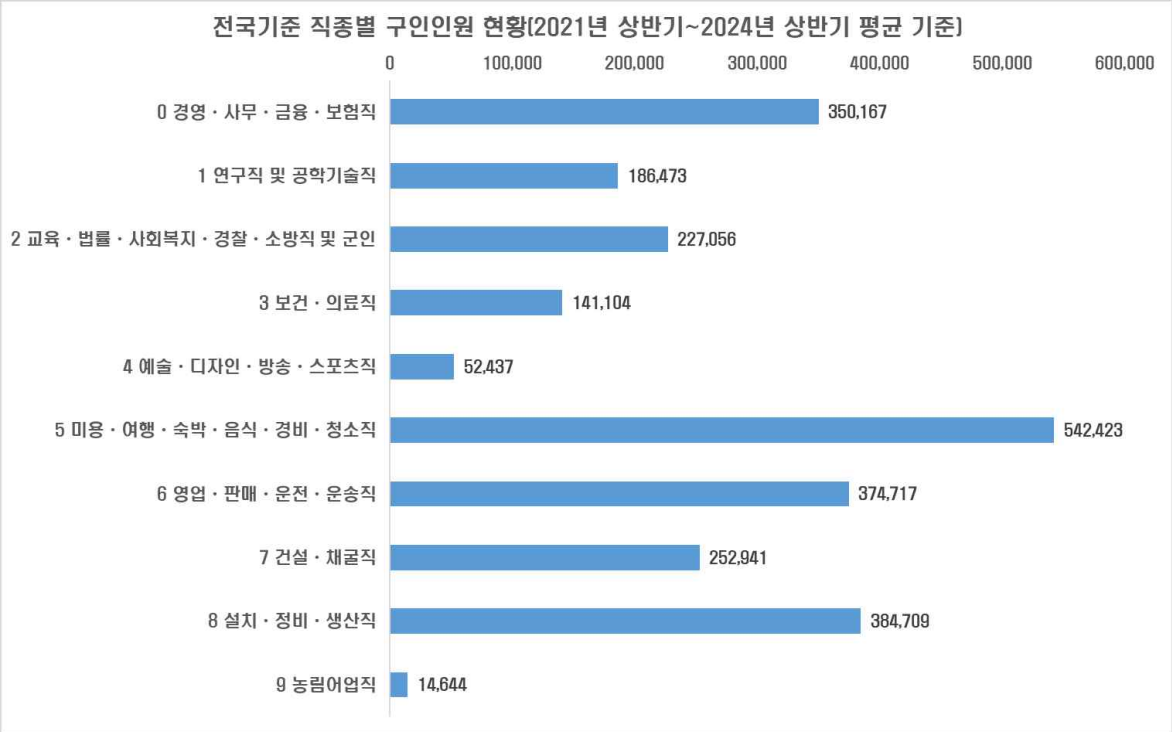
- 1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257,039명(23.18%)
- 2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16,806명(19.55%)
- 3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76,805명(15.95%)
- 4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63,077명(14.71%)
- 5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113,140명(10.20%)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60,381명(5.45%)
- 7순위 : [3 보건・의료직], 54,175명(4.89%)
- 8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2,442명(2.93%)
- 9순위 : [7 건설・채굴직], 31,764명(2.86%)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3,127명(0.28%)

- 일자리 충원현황 분석을 통해 구인인원과 채용인원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종은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이며 1순위~4순위가 약간의 순위차이를 제외하고 동일한 것을 확인함
- 미충원인원과 부족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8 설치・정비・생산직]이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등의 직종에서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확인함
- 이를 통해 전국기준으로 일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상대적으로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의 경우 미충원인원과 부족인원 역시 많은 직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구인 및 채용인원이 적은 직종의 경우 미충원과 부족인원 역시 적다는 점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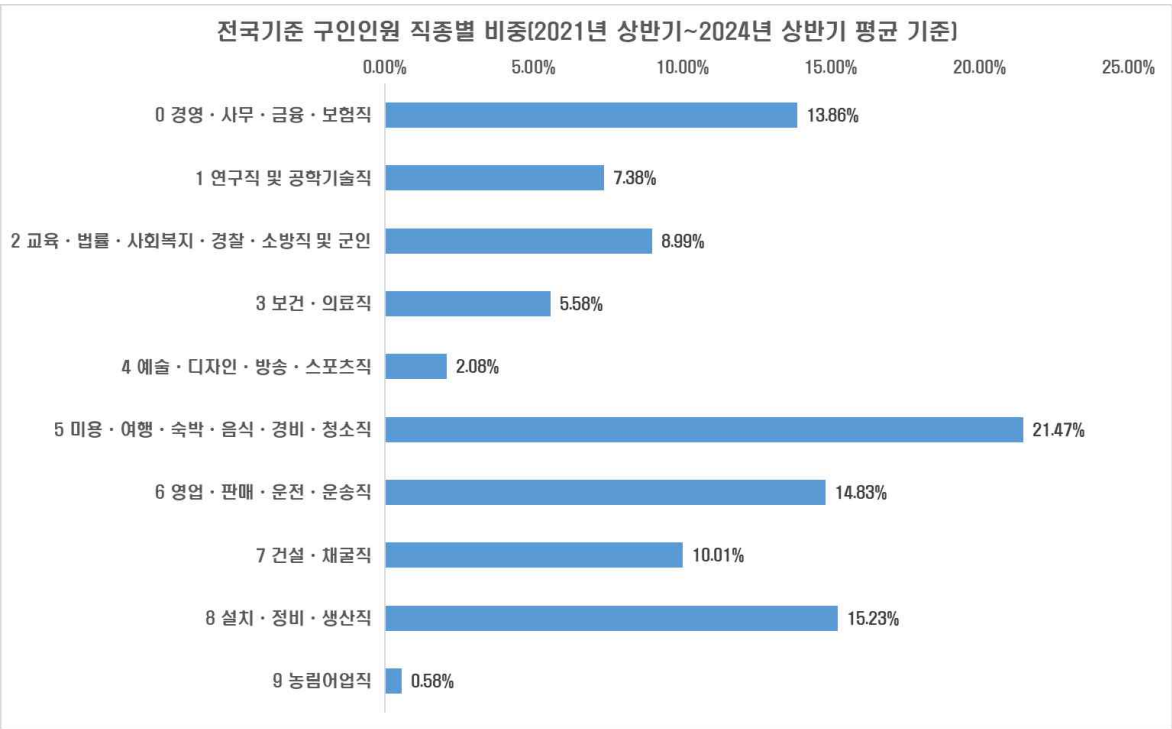
<표 2-62> 전국기준 직종별 일자리 비중 현황

구분	구인인원 기준			채용인원 기준			미충원인원 기준			부족인원 기준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전직종	2,526,671			2,230,639			296,032			1,108,756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50,167	13.86%	4	310,775	13.93%	2	39,392	13.31%	3	163,077	14.71%	4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86,473	7.38%	7	152,581	6.84%	7	33,892	11.45%	4	113,140	10.20%	5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27,056	8.99%	6	216,022	9.68%	6	11,034	3.73%	7	60,381	5.45%	6
3 보건・의료직	141,104	5.58%	8	125,353	5.62%	8	15,751	5.32%	6	54,175	4.89%	7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2,437	2.08%	9	44,741	2.01%	9	7,697	2.60%	8	32,442	2.93%	8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42,423	21.47%	1	510,515	22.89%	1	31,908	10.78%	5	176,805	15.95%	3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374,717	14.83%	3	303,762	13.62%	4	70,955	23.97%	2	216,806	19.55%	2
7 건설・채굴직	252,941	10.01%	5	247,980	11.12%	5	4,961	1.68%	9	31,764	2.86%	9
8 설치・정비・생산직	384,709	15.23%	2	304,883	13.67%	3	79,825	26.97%	1	257,039	23.18%	1
9 농림어업직	14,644	0.58%	10	14,027	0.63%	10	618	0.21%	10	3,127	0.2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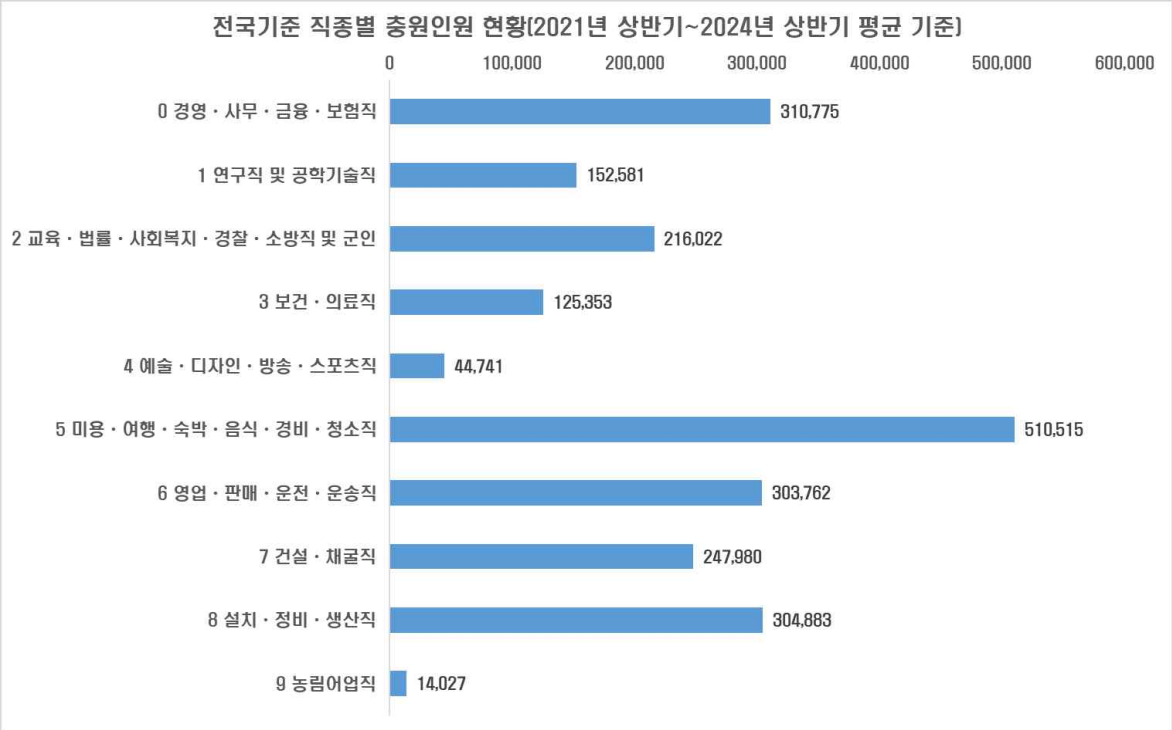
<그림 2-25> 전국기준 직종별 구인인원(일자리수)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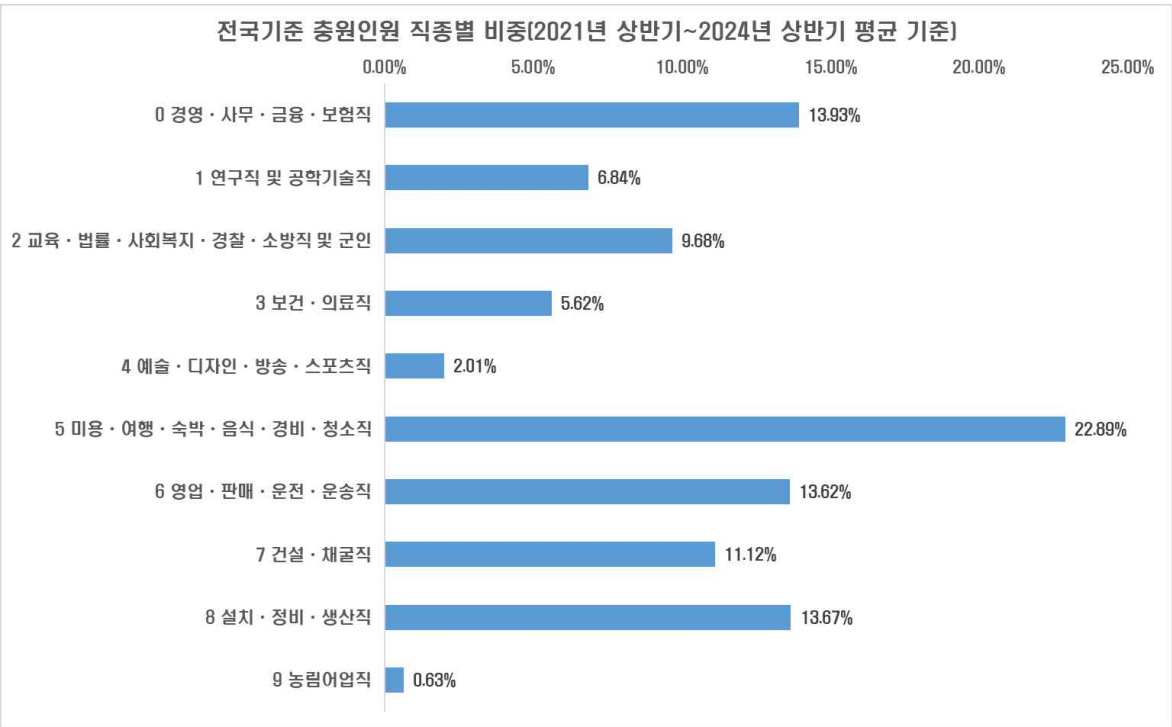
<그림 2-26> 전국기준 구인인원(일자리수)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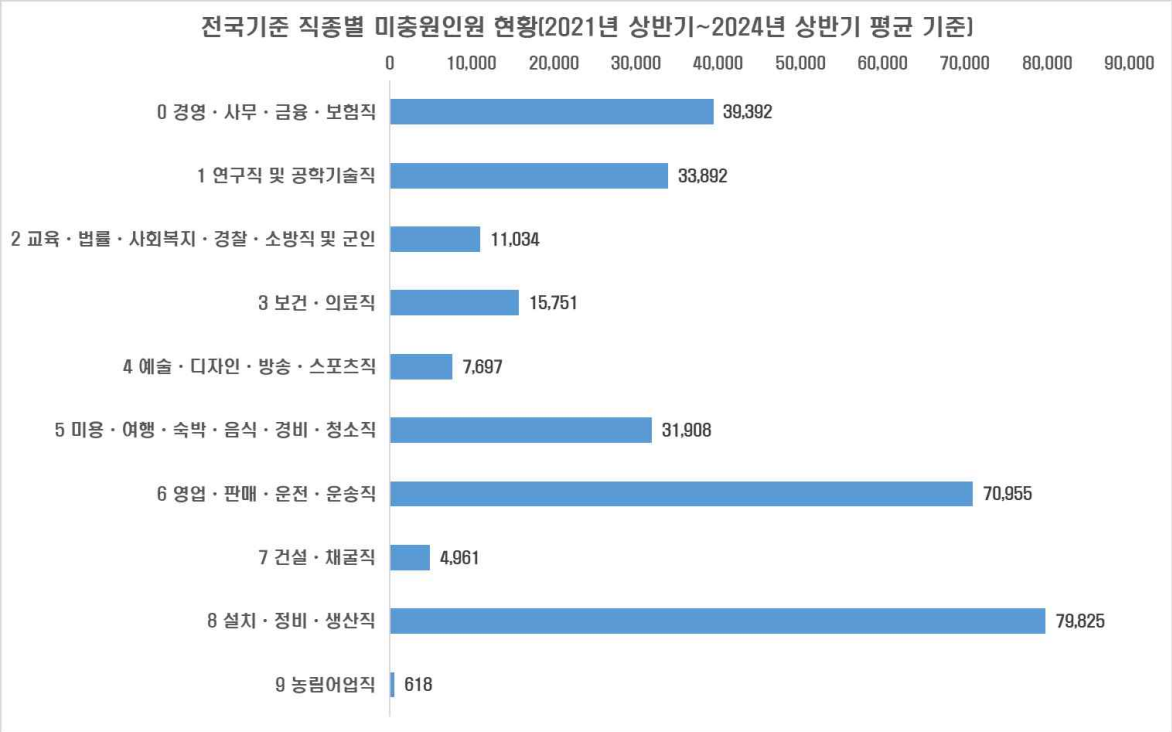
<그림 2-27> 전국기준 직종별 충원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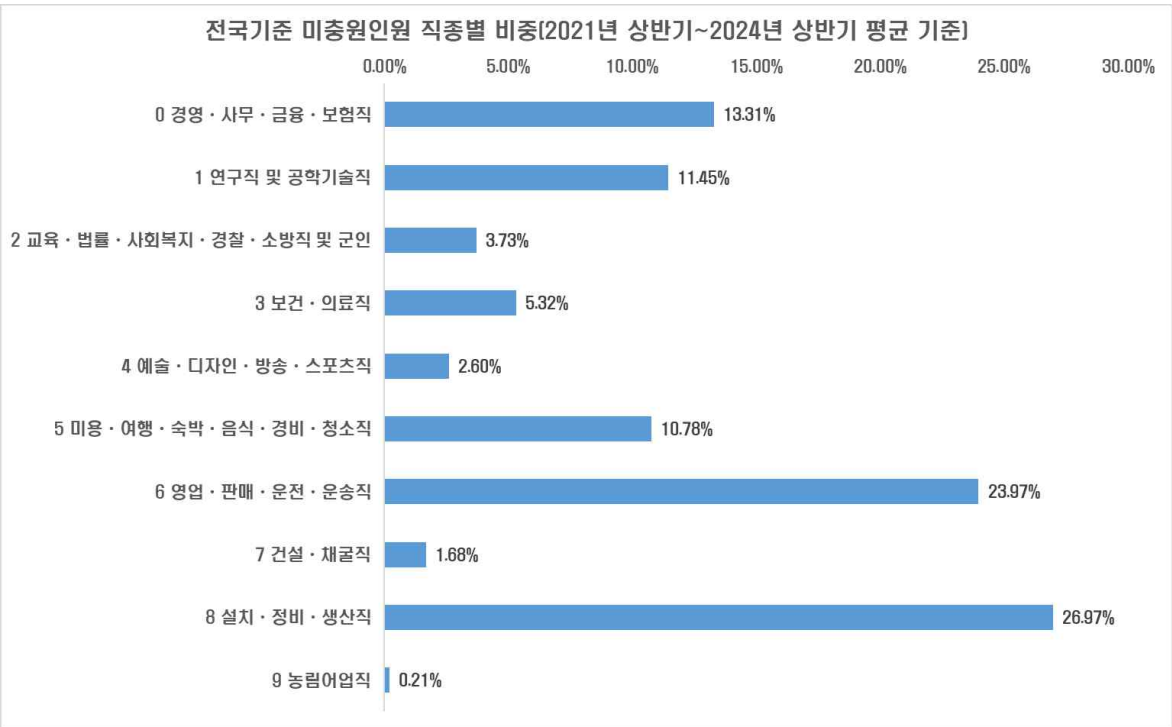
<그림 2-28> 전국기준 충원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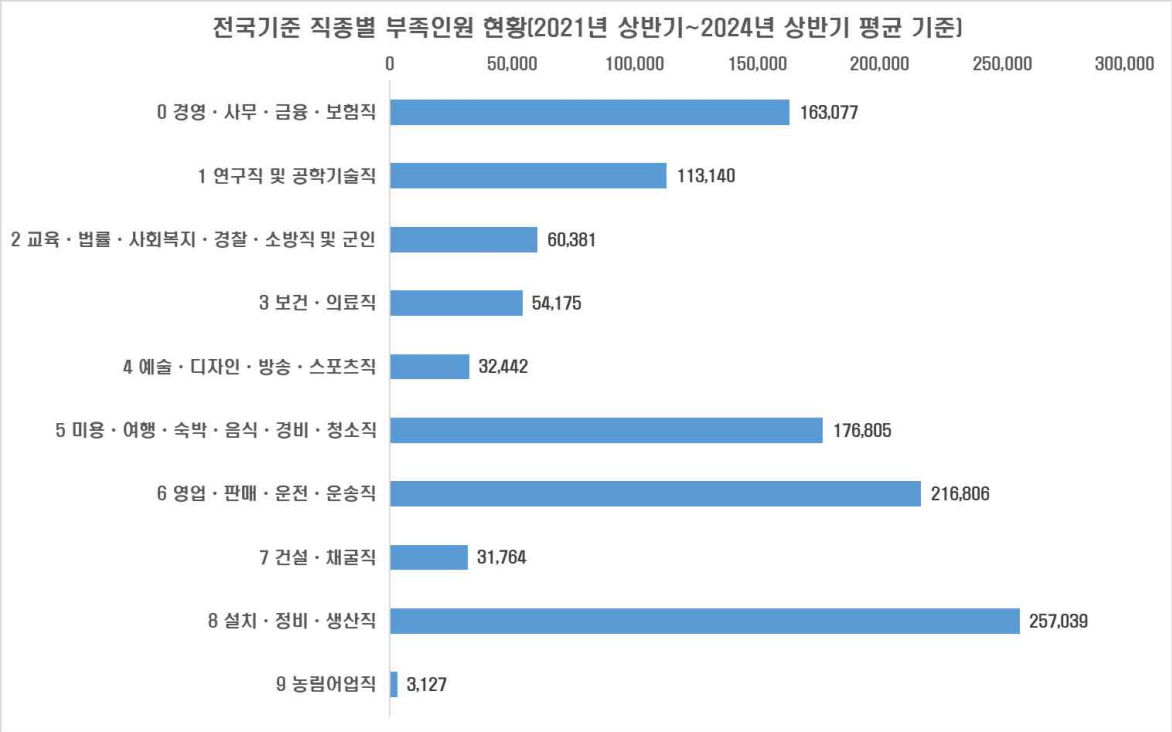
<그림 2-29> 전국기준 직종별 미충원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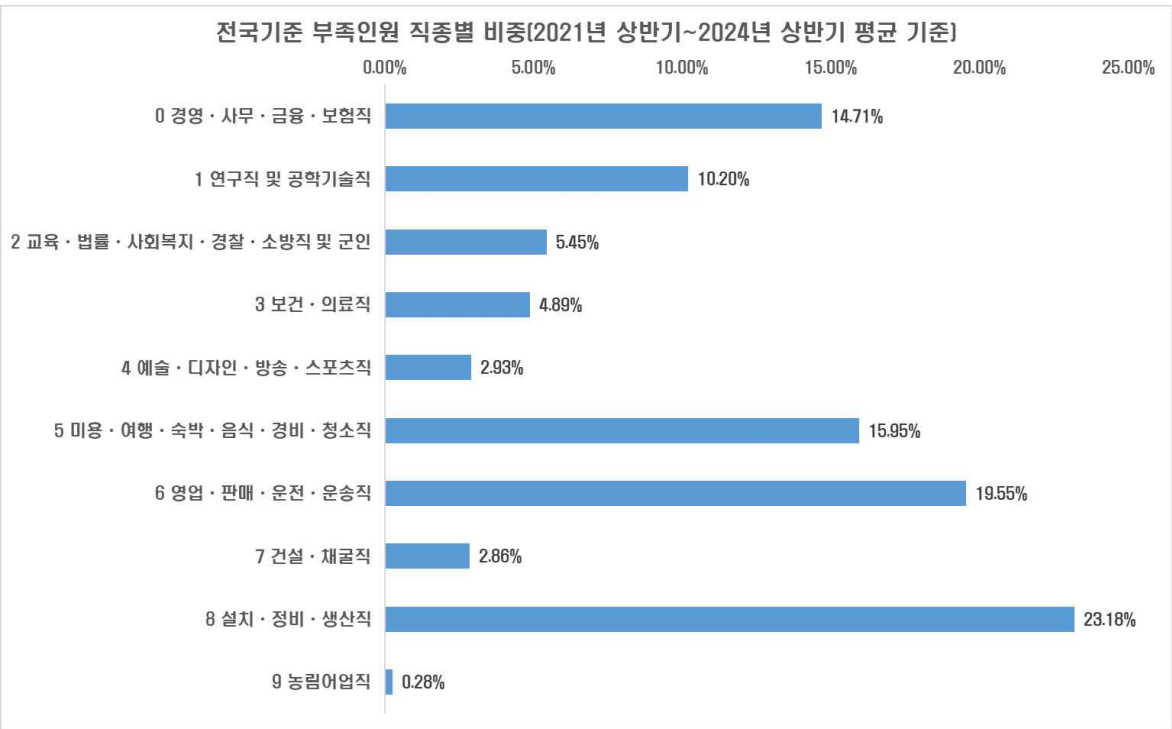
<그림 2-30> 전국기준 미충원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그림 2-31> 전국기준 직종별 부족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그림 2-32> 전국기준 부족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3) 직종별 일자리 현황 분석(전북특별자치도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직종별로 구인인원(일자리수),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구인인원 기준으로는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8 설치・정비・생산직] > [7 건설・채굴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의 순이었으나, 채용인원 기준에서는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7 건설・채굴직] > [8 설치・정비・생산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등의 순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미충원 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 설치・정비・생산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3 보건・의료직] 등의 순이었으나, 부족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 설치・정비・생산직]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7 건설・채굴직] 등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

○ 구인인원 기준

- 1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4,394명(20.59%)
- 2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11,513명(18.02%)
- 3순위 : [7 건설・채굴직], 12,595명(16.47%)
- 4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715명(11.04%)
- 5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7,404명(10.59%)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6,810명(9.74%)
- 7순위 : [3 보건・의료직], 4,491명(6.43%)
- 8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659명(5.23%)
- 9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명(1.05%)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581명(0.83%)

○ 채용인원 기준

- 1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3,669명(21,65%)
- 2순위 : [7 건설・채굴직], 11,367명(18.00%)
- 3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10,126명(16.04%)
- 4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6,777명(10.73%)

- 5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722명(10.65%)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6,461명(10.23%)
- 7순위 : [3 보건・의료직], 3,893명(6.17%)
- 8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070명(4.86%)
- 9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72명(0.91%)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488명(0.77%)

○ 미충원인원 기준

- 1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2,469명(36.56%)
- 2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993명(14.70%)
- 3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25명(10.73%)
- 4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627명(9.29%)
- 5순위 : [3 보건・의료직], 598명(8.86%)
- 6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589명(8.73%)
- 7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50명(5.18%)
- 8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64명(2.43%)
- 9순위 : [7 건설・채굴직], 145명(2.15%)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93명(1.38%)

○ 부족인원 기준

- 1순위 : [8 설치・정비・생산직], 7,738명(27.36%)
- 2순위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4,371명(15.45%)
- 3순위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4,288명(15.14%)
- 4순위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208명(11.34%)
- 5순위 : [7 건설・채굴직], 2,377명(8.40%)
- 6순위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944명(6.87%)
- 7순위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847명(6.53%)
- 8순위 : [3 보건・의료직], 1,751명(6.19%)
- 9순위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86명(2.07%)
- 10순위 : [9 농림어업직], 181명(0.64%)

▮ 전북특별자치도 기준 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상대적으로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많은 직종의 경우 미충원인원과 부족인원 역시 많은 직종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구인 및 채용인원이 적은 직종의 경우 미충원과 부족인원 역시 적다는 점을 확인함

▮ 다만, [7 건설·채굴직]의 경우 구인인원 기준 3순위, 채용인원 기준 2순위로 높은 비중이었으나, 미충원인원 기준 9순위, 부족인원 기준 5순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함

<표 2-63> 직종별 비중 비교 : 전국 v.s. 전북특별자치도

구분	구인인원 기준		채용인원 기준		미충원인원 기준		부족인원 기준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전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	5	2	4	3	4	4	4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7	8	7	8	4	6	5	7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6	6	6	6	7	7	6	6
3 보건·의료직	8	7	8	7	6	5	7	8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9	9	9	9	8	8	8	9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	1	1	1	5	3	3	2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3	4	4	5	2	2	2	3
7 건설·채굴직	5	3	5	2	9	9	9	5
8 설치·정비·생산직	2	2	3	3	1	1	1	1
9 농림어업직	10	10	10	10	10	10	10	10

▮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직종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직종별로 일자리의 양기준에서 큰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다만,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직종 및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서 미충원과 부족인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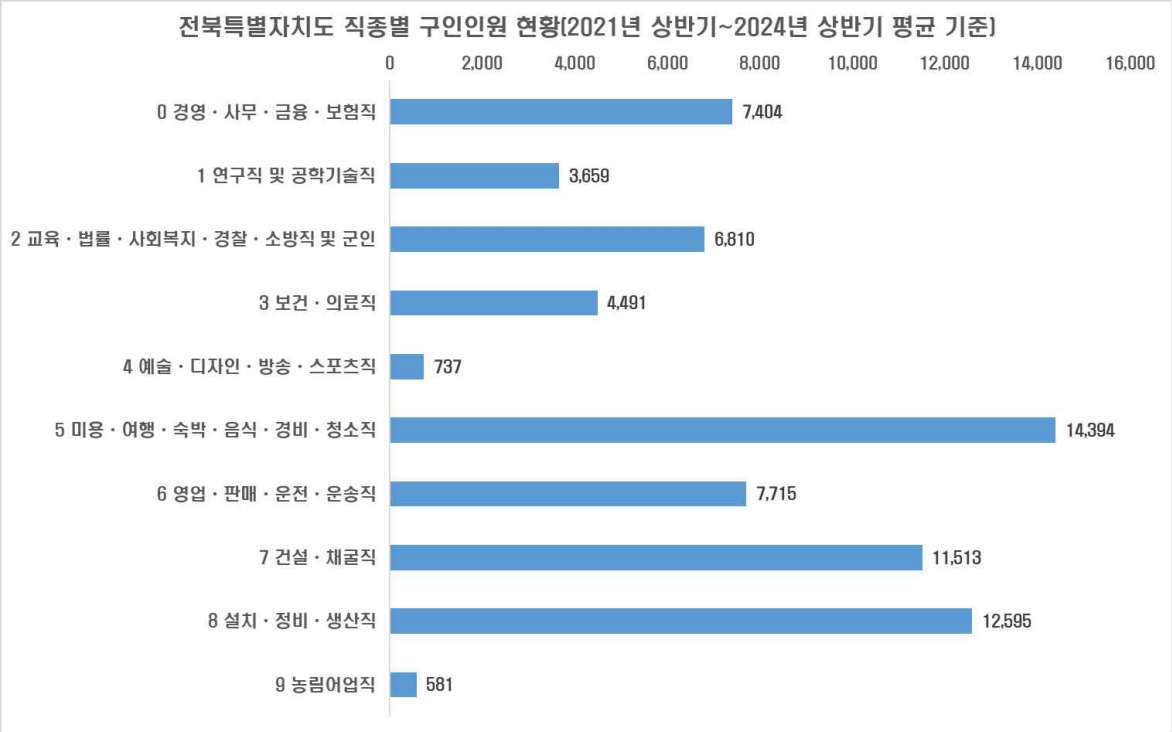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의 경우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이 적은 수준이지만, 미충원인원 및 부족인원 비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를 통해 구인기업 관점과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관점에서의 직종간 차이(GAP)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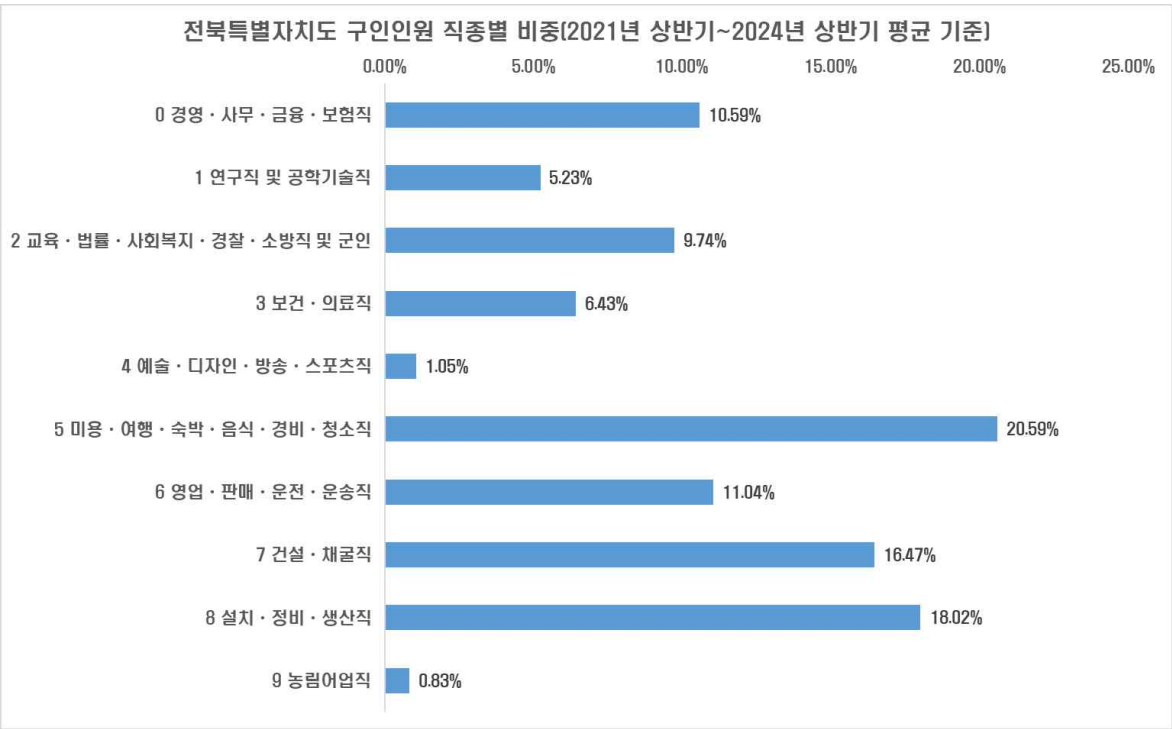
<표 2-64>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일자리 비중 현황

구분	구인인원 기준			채용인원 기준			미충원인원 기준			부족인원 기준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평균	비중(%)	순위
전직종	69,898			63,146			6,752			28,287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7,404	10.59%	5	6,777	10.73%	4	627	9.29%	4	3,208	11.34%	4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659	5.23%	8	3,070	4.86%	8	589	8.73%	6	1,847	6.53%	7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6,810	9.74%	6	6,461	10.23%	6	350	5.18%	7	1,944	6.87%	6
3 보건・의료직	4,491	6.43%	7	3,893	6.17%	7	598	8.86%	5	1,751	6.19%	8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37	1.05%	9	572	0.91%	9	164	2.43%	8	586	2.07%	9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4,394	20.59%	1	13,669	21.65%	1	725	10.73%	3	4,371	15.45%	2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715	11.04%	4	6,722	10.65%	5	993	14.70%	2	4,283	15.14%	3
7 건설・채굴직	11,513	16.47%	3	11,367	18.00%	2	145	2.15%	9	2,377	8.40%	5
8 설치・정비・생산직	12,595	18.02%	2	10,126	16.04%	3	2,469	36.56%	1	7,738	27.36%	1
9 농림어업직	581	0.83%	10	488	0.77%	10	93	1.38%	10	181	0.6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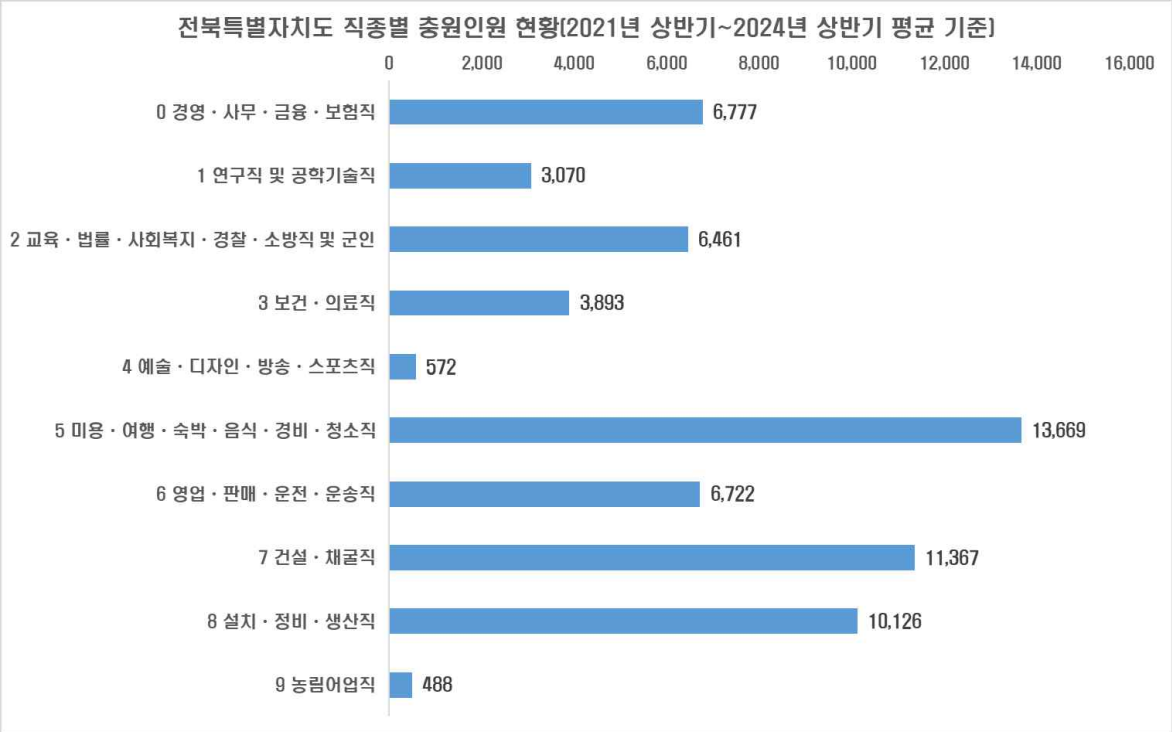
<그림 2-33>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구인인원(일자리수)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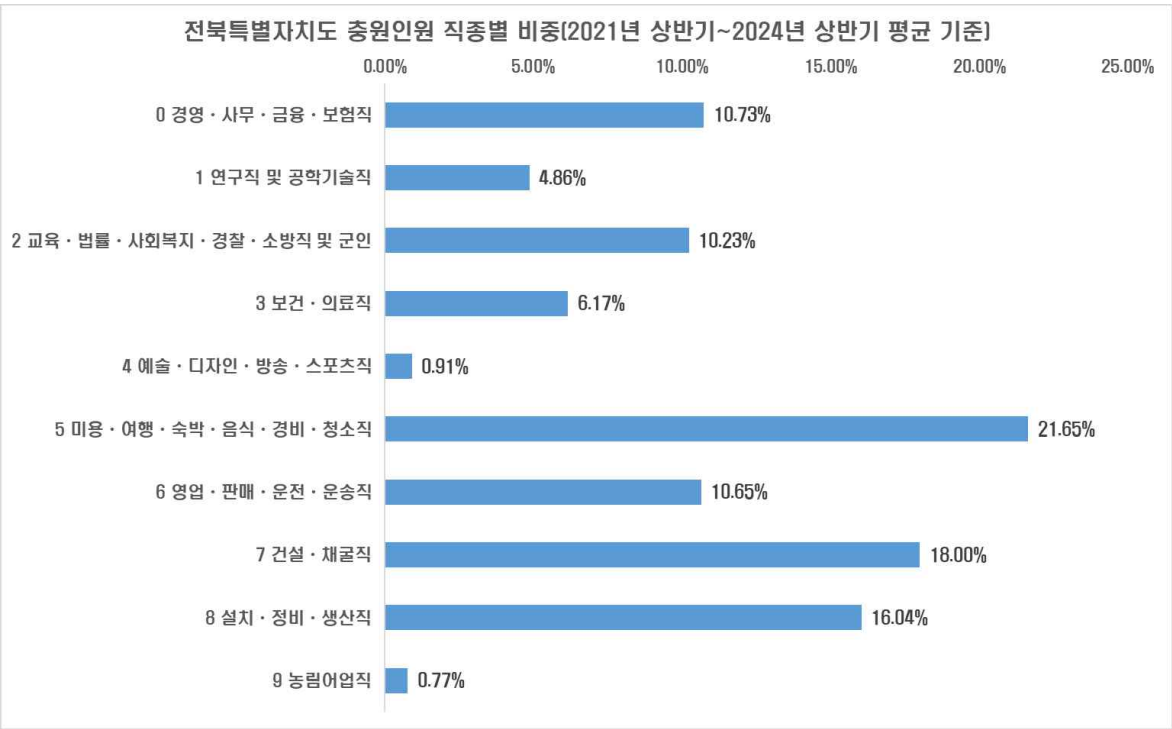
<그림 2-34> 전북특별자치도 구인인원(일자리수)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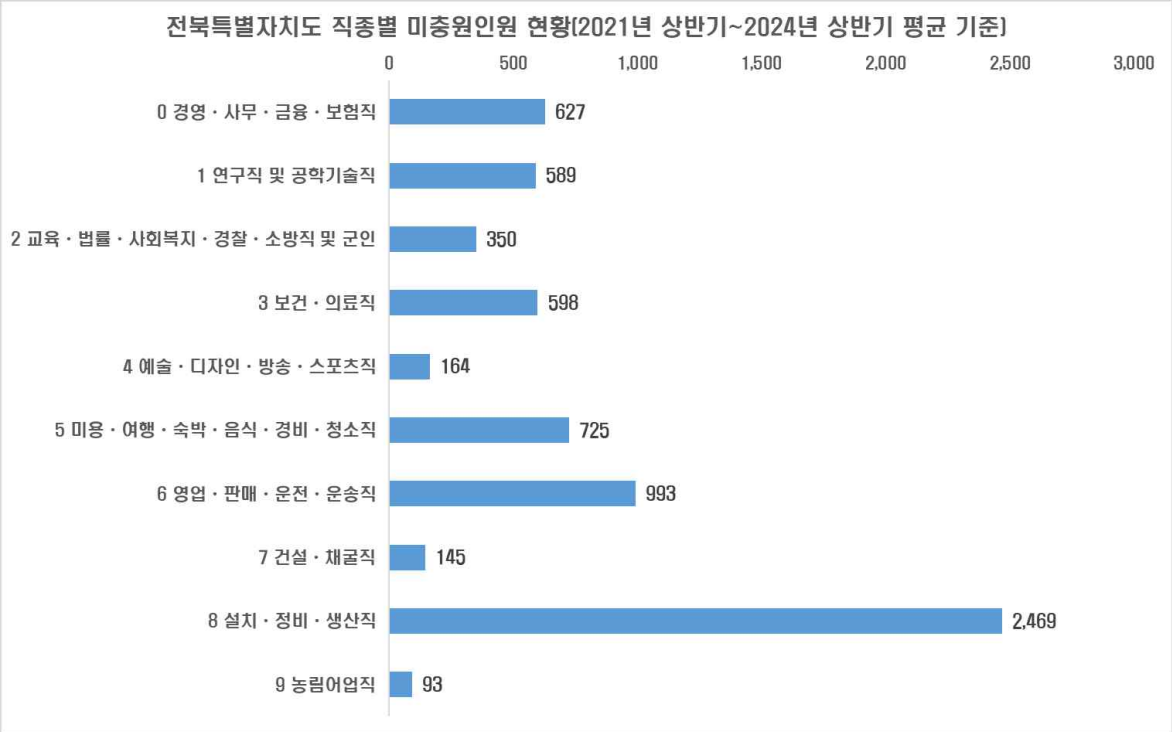
<그림 2-35>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충원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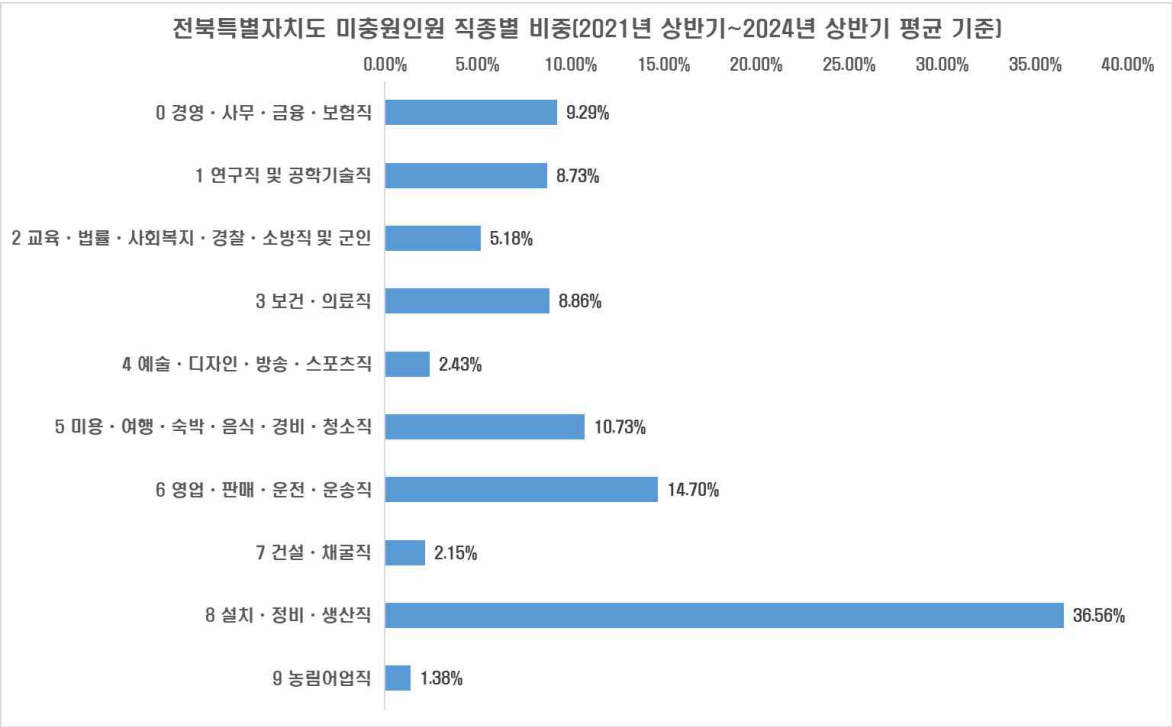
<그림 2-36> 전북특별자치도 충원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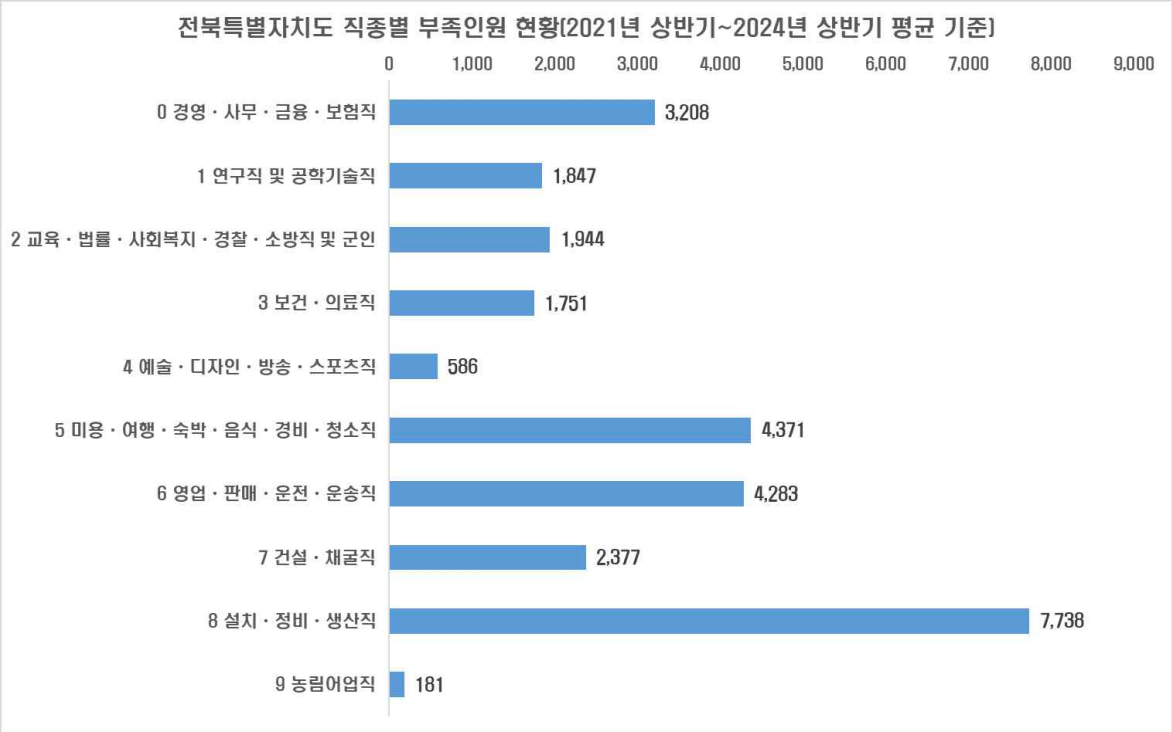
<그림 2-37>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미충원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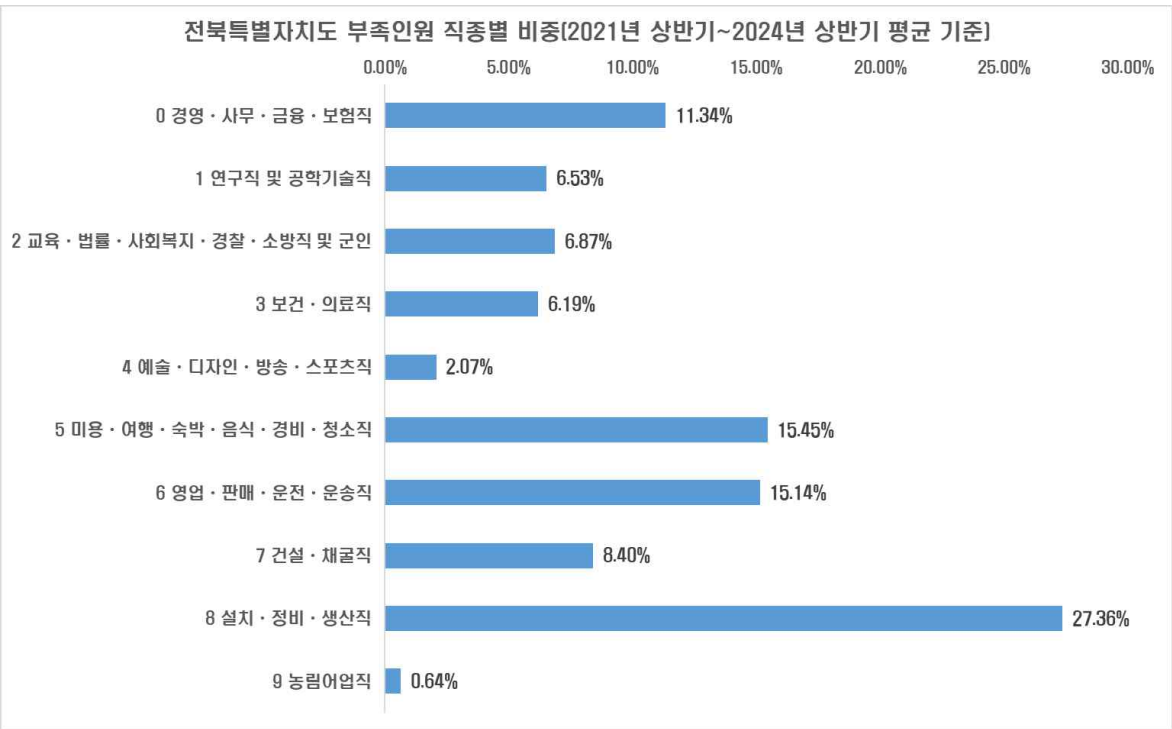
<그림 2-38> 전북특별자치도 미충원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그림 2-39>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부족인원 현황(연평균 기준)



<그림 2-40> 전북특별자치도 부족인원 직종별 비중(연평균 기준)



▌**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인인원(일자리수),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등을 살펴보면 직종별로 구인인원 비중과 채용인원 비중, 미충원인원 비중 그리고 부족인원 비중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구인인원(일자리수) 기준

- 전직종 : 2.77%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2.11%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1.96%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3.00%
- [3 보건·의료직] : 3.18%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1.40%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2.65%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2.06%
- [7 건설·채굴직] 4.55%
- [8 설치·정비·생산직] : 3.27%
- [9 농림어업직] 3.97%
- 전직종 구인인원(일자리수) 비중에 비해 [7 건설·채굴직], [9 농림어업직], [8 설치·정비·생산직], [3 보건·의료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반면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채용인원 기준

- 전직종 : 2.83%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2.18%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2.01%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2.99%
- [3 보건·의료직] : 3.11%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1.28%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2.68%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2.21%
- [7 건설・채굴직] 4.58%
- [8 설치・정비・생산직] : 3.32%
- [9 농림어업직] 3.48%
- 전직종 채용인원 비중에 비해 [7 건설・채굴직], [9 농림어업직], [8 설치・정비・생산직], [3 보건・의료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반면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등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미충원인원 기준

- 전직종 : 2.28%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1.59%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1.74%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3.17%
- [3 보건・의료직] : 3.80%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2.13%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2.27%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1.40%
- [7 건설・채굴직] 2.93%
- [8 설치・정비・생산직] : 3.09%
- [9 농림어업직] 15.03%
- 전직종 미충원인원 비중에 비해 [9 농림어업직], [8 설치・정비・생산직], [3 보건・의료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7 건설・채굴직]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반면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등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부족인원 기준

- 전직종 : 2.55%

-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 1.97%
-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 1.63%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3.22%
- [3 보건・의료직] : 3.23%
-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1.81%
-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 2.47%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1.98%
- [7 건설・채굴직] 7.48%
- [8 설치・정비・생산직] : 3.01%
- [9 농림어업직] 5.78%
- 전직종 부족인원 비중에 비해 [7 건설・채굴직], [9 농림어업직], [3 보건・의료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반면에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등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일자리 충원현황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직종 및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에서 미충원과 부족인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의 경우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미충원인원 및 부족인원 비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인기업 관점과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관점에서의 직종간 차이(GAP)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

4) 직종별 일자리 분석 : 전국 vs 전북특별자치도

▌ 직종별로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충원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 88.28%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90.34%로 분석됨

○ 전국기준 충원율이 높은 직종은 [7 건설·채굴직] 98.04%, [9 농림어업직] 95.78%,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95.14%,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4.12%, [3 보건·의료직] 88.84% 등의 순임

- 상대적으로 낮은 충원율을 보인 직종은 [8 설치·정비·생산직] 79.25%,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1.06%,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81.82% 의 순임

○ 전북특별자치도 기준 충원율이 높은 직종은 [7 건설·채굴직] 98.74%,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4.96%,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94.86%,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91.53%,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7.13%의 순임

- 낮은 충원율을 보인 직종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7.70%, [8 설치·정비·생산직] 80.4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83.90% 등의 순임

○ 직종별 충원율 비교를 통해 전국기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충원율이 낮은 직종에서 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직종별로 전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족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 3.13%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2.87%로 분석됨

○ 전국기준 부족률이 낮은 직종은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83%,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22%, [7 건설·채굴직] 2.26%, [3 보건·의료직] 2.85%,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35% 등의 순이었음

- 높은 부족률을 보인 직종은 [8 설치·정비·생산직] 4.37%, [9 농림어업직] 4.25%,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4.14%, [3 보건·의료직] 2.85% 등임

○ 전북특별자치도 기준 부족률이 낮은 직종은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33%,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7%, [3 보건·의료직] 2.55%,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2.67% 등의 순이었음

- 높은 부족률을 보인 직종은 [9 농림어업직] 7.70%, [7 건설·채굴직] 6.39%,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94%, [8 설치·정비·생산직] 4.38%임

○ 직종별 부족률 비교를 통해 전국기준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부족률이 높은 직종의 경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표 2-65>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1년 상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6,755,398	1,047,240	945,474	101,766	410,017	425,333	2.4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177,962	147,134	135,888	11,246	60,987	62,789	1.4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537,539	82,448	69,666	12,782	47,522	49,080	3.0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14,161	125,303	122,321	2,982	23,388	24,102	1.70
	3 보건·의료직	888,188	67,509	61,309	6,200	20,542	21,798	2.3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67,810	20,937	18,401	2,536	13,019	12,634	3.4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353,224	208,099	200,932	7,167	46,657	50,594	1.9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560,820	156,206	128,685	27,521	86,931	89,104	3.30
	7 건설·채굴직	631,775	66,690	65,111	1,579	7,824	8,546	1.20
	8 설치·정비·생산직	2,887,208	167,773	138,146	29,627	101,905	105,192	3.40
	9 농림어업직	36,711	5,140	5,016	124	1,240	1,493	3.3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75,816	28,553	25,896	2,657	9,342	10,259	1.9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15,712	3,094	2,902	192	1,091	1,224	0.9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1,842	1,813	1,601	212	647	662	2.0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5,261	3,749	3,657	92	740	783	1.60
	3 보건·의료직	33,314	1,921	1,727	194	559	568	1.7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541	280	179	101	212	212	3.7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3,301	4,835	4,670	165	978	1,104	1.3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4,423	3,441	2,884	557	1,723	1,951	2.60
	7 건설·채굴직	17,945	4,154	4,129	25	396	757	2.20
	8 설치·정비·생산직	87,629	5,158	4,072	1,086	2,970	2,972	3.30
	9 농림어업직	848	108	74	34	25	25	2.90

<표 2-66>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1년 하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7,292,568	1,157,444	1,020,325	137,119	552,673	597,499	3.1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322,960	165,064	147,812	17,252	75,578	78,329	1.7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612,690	91,837	76,237	15,600	56,043	58,788	3.4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59,365	84,338	78,364	5,974	31,784	46,308	2.30
	3 보건·의료직	911,703	56,417	48,443	7,974	29,685	32,608	3.2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81,111	23,149	19,925	3,224	16,885	16,679	4.2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437,192	203,310	191,855	11,455	83,661	95,056	3.3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640,721	172,103	137,092	35,011	111,943	115,653	4.10
	7 건설·채굴직	681,133	168,105	165,848	2,257	12,290	14,464	1.80
	8 설치·정비·생산직	2,910,524	188,644	150,664	37,980	133,524	137,724	4.40
	9 농림어업직	35,167	4,478	4,084	394	1,279	1,891	3.5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85,626	31,629	28,197	3,432	16,543	19,032	3.3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19,261	4,066	3,858	208	1,512	1,571	1.3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3,372	1,614	1,366	248	896	915	2.6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6,016	2,463	2,316	147	1,117	1,202	2.40
	3 보건·의료직	33,913	1,789	1,468	321	870	959	2.5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531	348	265	83	340	322	5.8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4,469	5,245	4,962	283	2,286	2,546	3.0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4,557	3,595	2,866	729	2,328	2,523	3.50
	7 건설·채굴직	19,058	5,862	5,673	189	1,600	2,982	7.70
	8 설치·정비·생산직	88,360	6,509	5,321	1,188	5,447	5,837	5.80
	9 농림어업직	1,089	136	101	35	147	176	11.90

<표 2-67>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2년 상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7,611,126	1,314,167	1,135,842	178,325	647,879	657,286	3.5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398,184	189,893	164,869	25,024	93,362	94,414	2.1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671,643	103,718	84,764	18,954	65,212	65,058	3.8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47,593	137,396	129,664	7,732	34,317	34,755	2.50
	3 보건·의료직	948,911	82,032	74,017	8,015	28,800	31,451	2.9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97,947	27,260	23,268	3,992	18,575	18,263	4.5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512,419	261,363	243,977	17,386	110,084	114,381	4.2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659,828	189,081	148,592	40,489	115,626	116,095	4.20
	7 건설·채굴직	737,053	115,356	111,969	3,387	18,391	19,690	2.40
	8 설치·정비·생산직	2,905,261	201,061	148,070	52,991	160,926	160,389	5.20
	9 농림어업직	32,289	7,006	6,651	355	2,585	2,791	7.4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89,924	34,949	31,147	3,802	15,347	15,504	3.0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19,993	3,481	3,083	398	1,749	1,741	1.4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4,461	1,841	1,434	407	1,101	1,086	3.1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3,427	4,211	3,925	286	1,118	1,286	2.50
	3 보건·의료직	34,341	2,077	1,838	239	999	996	2.8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575	357	314	43	178	195	3.1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4,769	5,508	5,223	285	1,793	1,798	2.3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6,212	3,391	3,035	356	2,031	2,015	3.00
	7 건설·채굴직	21,191	6,976	6,939	37	1,620	1,620	7.10
	8 설치·정비·생산직	88,902	6,735	4,991	1,744	4,661	4,670	5.00
	9 농림어업직	1,054	373	365	8	97	97	8.40

<표 2-68>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2년 하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7,943,460	1,263,248	1,070,914	192,334	630,122	645,319	3.4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443,284	181,215	156,511	24,704	90,280	91,915	2.0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714,449	96,617	76,518	20,099	61,467	62,077	3.5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78,619	82,352	76,096	6,256	31,337	33,559	2.20
	3 보건·의료직	957,425	63,886	54,331	9,555	33,014	36,530	3.3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04,979	26,440	20,809	5,631	17,070	17,210	4.0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617,603	259,045	236,090	22,955	102,398	104,724	3.8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687,866	195,371	147,609	47,762	127,930	129,584	4.50
	7 건설·채굴직	778,144	145,209	142,066	3,143	16,901	18,180	2.10
	8 설치·정비·생산직	2,926,706	207,532	155,725	51,807	148,178	149,817	4.80
	9 농림어업직	34,386	5,581	5,160	421	1,547	1,724	4.3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98,220	32,538	28,459	4,079	14,683	15,143	2.9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2,309	3,511	3,218	293	1,555	1,573	1.3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5,039	1,701	1,291	410	1,104	1,105	3.1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2,683	2,239	2,151	88	798	1,008	1.80
	3 보건·의료직	34,352	2,295	1,886	409	1,051	1,187	3.0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582	302	199	103	288	314	4.9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0,513	5,611	5,324	287	2,055	2,077	2.5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7,400	3,798	3,019	779	2,732	2,637	3.90
	7 건설·채굴직	19,359	6,019	5,860	159	1,338	1,292	6.50
	8 설치·정비·생산직	89,712	6,628	5,188	1,440	3,590	3,778	3.80
	9 농림어업직	1,272	433	323	110	172	172	11.90

<표 2-69>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3년 상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8,075,171	1,392,275	1,225,326	166,949	570,713	571,375	3.1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487,888	189,038	165,592	23,446	86,397	85,913	1.9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756,760	103,204	84,322	18,882	58,517	57,953	3.2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84,585	154,171	147,931	6,240	31,338	30,983	2.20
	3 보건·의료직	987,770	83,501	74,485	9,016	28,383	29,166	2.8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21,111	32,121	27,174	4,947	16,115	16,144	3.7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678,736	311,800	290,521	21,279	91,777	94,046	3.3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683,308	204,081	162,339	41,742	115,991	114,140	4.10
	7 건설·채굴직	716,019	117,825	114,688	3,137	17,907	18,114	2.40
	8 설치·정비·생산직	2,924,108	189,544	151,830	37,714	123,165	123,797	4.00
	9 농림어업직	34,887	6,989	6,443	546	1,123	1,119	3.1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95,692	40,912	37,713	3,199	14,758	15,063	2.9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1,462	4,487	4,064	423	1,710	1,709	1.4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5,043	1,953	1,658	295	942	875	2.6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4,894	4,455	4,261	194	926	1,061	2.00
	3 보건·의료직	35,372	2,882	2,567	315	852	966	2.4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290	511	396	115	363	346	5.5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9,267	8,842	8,437	405	2,112	2,096	2.6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6,966	3,569	3,068	501	2,486	2,489	3.60
	7 건설·채굴직	19,224	7,800	7,781	19	2,115	2,244	9.90
	8 설치·정비·생산직	85,825	5,938	5,128	810	3,113	3,139	3.50
	9 농림어업직	1,348	476	353	123	138	138	9.30

<표 2-70>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3년 하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8,239,198	1,229,974	1,089,671	140,303	544,761	559,995	2.9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672,712	164,156	145,387	18,769	79,068	78,259	1.7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742,711	85,961	67,320	18,641	57,717	56,333	3.2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81,107	72,041	67,482	4,559	29,165	33,724	2.10
	3 보건·의료직	976,076	59,765	52,803	6,962	24,881	25,577	2.5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8,027	23,235	19,635	3,600	16,708	17,222	3.8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719,378	285,921	268,971	16,950	91,149	98,824	3.2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551,118	178,460	149,620	28,840	100,860	101,288	3.80
	7 건설·채굴직	730,393	153,586	151,158	2,428	20,850	22,095	2.80
	8 설치·정비·생산직	3,009,743	199,796	160,408	39,388	123,649	125,608	3.90
	9 농림어업직	37,932	7,052	6,886	166	714	1,064	1.8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500,556	32,996	29,671	3,325	13,459	13,467	2.6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1,607	3,396	3,031	365	1,992	1,984	1.6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6,168	1,712	1,454	258	898	823	2.4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5,546	1,724	1,590	134	809	915	1.70
	3 보건·의료직	34,161	2,031	1,750	281	840	924	2.4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446	184	156	28	272	301	4.0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0,374	8,540	7,785	755	2,314	2,369	2.8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8,272	4,365	4,196	169	1,899	1,833	2.70
	7 건설·채굴직	17,264	4,819	4,746	73	739	676	4.10
	8 설치·정비·생산직	89,454	6,072	4,819	1,253	3,676	3,621	3.90
	9 농림어업직	1,265	153	144	9	21	23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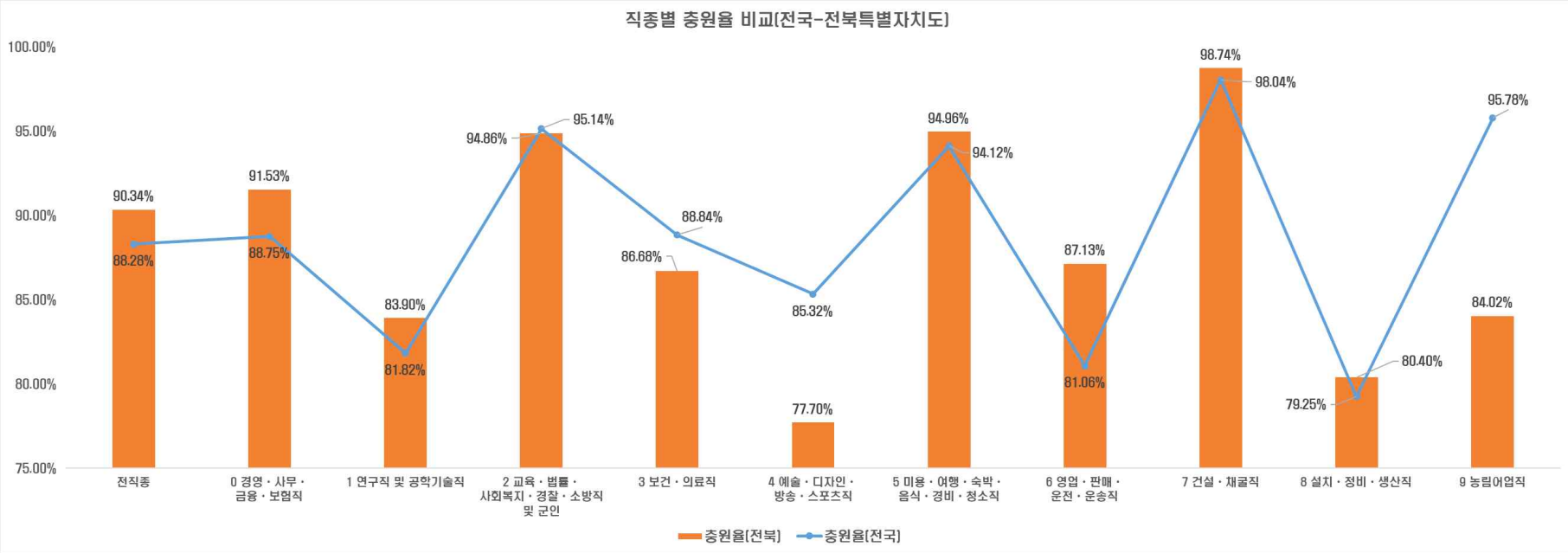
<표 2-71> 지자체별 일자리 직종별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 2024년 상반기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미충원 인원(명)	부족 인원(명)	채용계획인원 (명)	부족률(%) 부족/현원
전국	전직종	18,252,711	1,439,001	1,319,684	119,317	524,482	524,891	2.8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664,986	189,084	171,653	17,431	85,097	83,883	1.8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787,422	88,870	75,207	13,663	49,512	48,486	2.7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42,048	139,095	134,219	4,876	30,005	31,507	2.20
	3 보건·의료직	991,823	80,754	73,347	7,407	24,306	23,984	2.4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33,099	30,388	27,380	3,008	15,176	14,678	3.4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773,318	368,944	354,457	14,487	93,091	95,847	3.2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551,042	216,206	189,229	26,977	99,539	99,356	3.80
	7 건설·채굴직	653,885	118,522	117,090	1,432	17,011	17,580	2.50
	8 설치·정비·생산직	3,008,736	192,130	162,248	29,882	108,288	106,791	3.50
	9 농림어업직	46,352	15,009	14,853	156	2,457	2,779	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501,712	43,066	39,927	3,139	14,871	15,296	2.90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1,486	3,880	3,563	317	1,620	1,634	1.30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6,573	2,172	1,940	232	875	852	2.30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5,810	4,995	4,712	283	1,296	1,578	2.80
	3 보건·의료직	35,249	2,724	2,390	334	956	955	2.60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538	596	494	102	399	339	5.80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9,491	11,797	11,440	357	3,762	4,084	4.50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0,186	4,842	4,459	383	1,790	1,891	2.50
	7 건설·채굴직	16,188	4,664	4,658	6	513	512	3.10
	8 설치·정비·생산직	88,850	7,042	5,922	1,120	3,627	3,419	3.90
	9 농림어업직	1,341	355	349	6	33	33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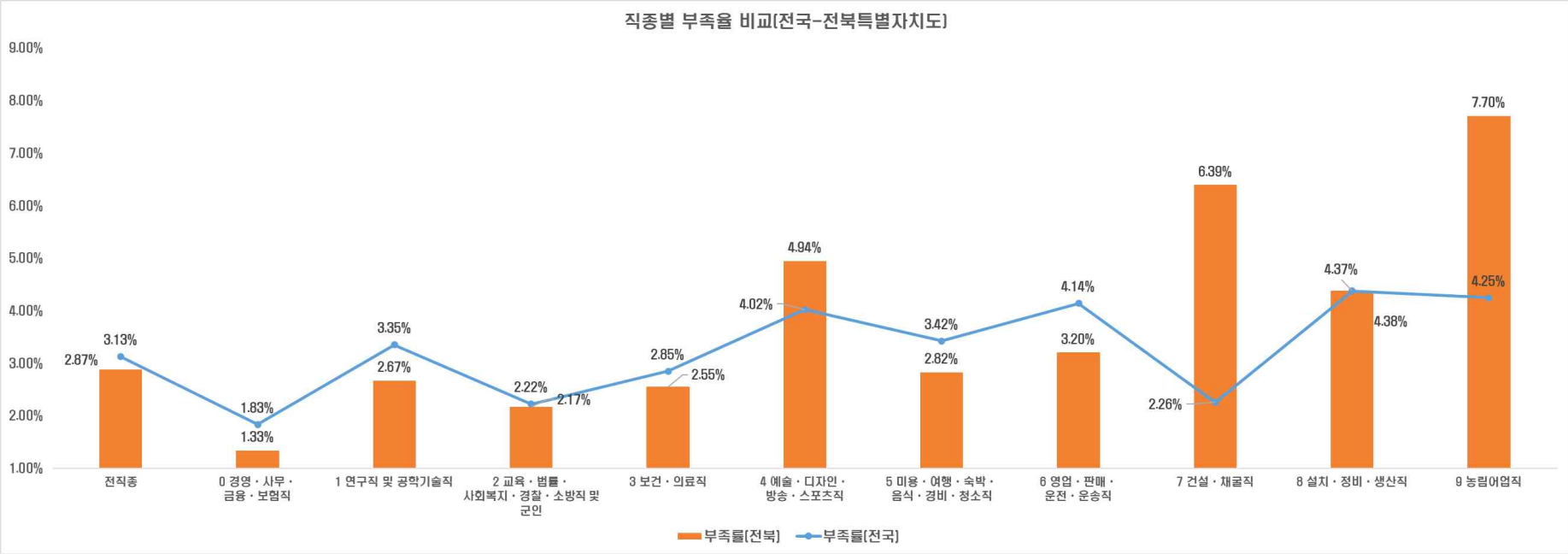
<표 2-72> 지자체별 직종별 구인/채용/미충원/부족인원 비교(전국-전북특별자치도, 연평균 기준)

구분		현원(명)	구인인원(명)	채용인원(명)	충원율(%)(채용인원/구인인원)		미충원인원(명)	부족인원(명)	부족률(%)(부족인원/현원)	
					평균 충원율	순위			평균 부족률	순위
전국	전직종	17,738,519	2,526,671	2,230,639	88.28%		296,032	1,108,756	3.13%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452,568	350,167	310,775	88.75%	6	39,392	163,077	1.83%	1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689,031	186,473	152,581	81.82%	8	33,892	113,140	3.35%	5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58,211	227,056	216,022	95.14%	3	11,034	60,381	2.22%	2
	3 보건・의료직	951,699	141,104	125,353	88.84%	5	15,751	54,175	2.85%	4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03,441	52,437	44,741	85.32%	7	7,697	32,442	4.02%	7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584,553	542,423	510,515	94.12%	4	31,908	176,805	3.42%	6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619,243	374,717	303,762	81.06%	9	70,955	216,806	4.14%	8
	7 건설・채굴직	704,057	252,941	247,980	98.04%	1	4,961	31,764	2.26%	3
	8 설치・정비・생산직	2,938,898	384,709	304,883	79.25%	10	79,825	257,039	4.37%	10
	9 농림어업직	36,818	14,644	14,027	95.78%	2	618	3,127	4.25%	9
전북특별자치도	전직종	492,507	69,898	63,146	90.34%		6,752	28,287	2.87%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20,261	7,404	6,777	91.53%	4	627	3,208	1.33%	1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34,643	3,659	3,070	83.90%	8	589	1,847	2.67%	4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4,805	6,810	6,461	94.86%	3	350	1,944	2.17%	2
	3 보건・의료직	34,386	4,491	3,893	86.68%	6	598	1,751	2.55%	3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5,929	737	572	77.70%	10	164	586	4.94%	8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7,455	14,394	13,669	94.96%	2	725	4,371	2.82%	5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6,859	7,715	6,722	87.13%	5	993	4,283	3.20%	6
	7 건설・채굴직	18,604	11,513	11,367	98.74%	1	145	2,377	6.39%	9
	8 설치・정비・생산직	88,390	12,595	10,126	80.40%	9	2,469	7,738	4.38%	7
	9 농림어업직	1,174	581	488	84.02%	7	93	181	7.70%	10

<그림 2-41> 직종별 일자리 충원율 비교(연평균 기준, 전국-전북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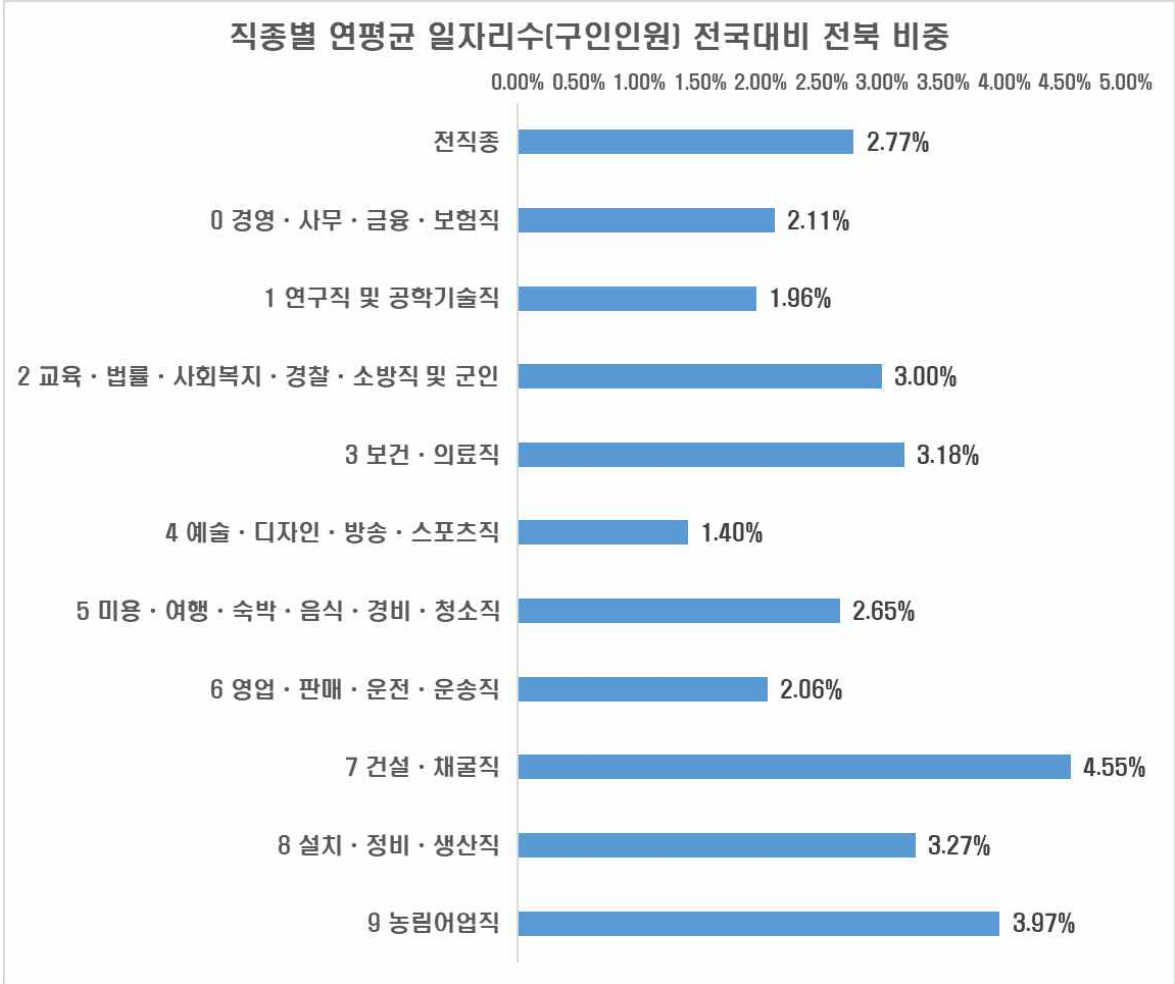
<그림 2-42> 직종별 일자리 부족률(부족인원/현원) 비교(연평균 기준, 전국-전북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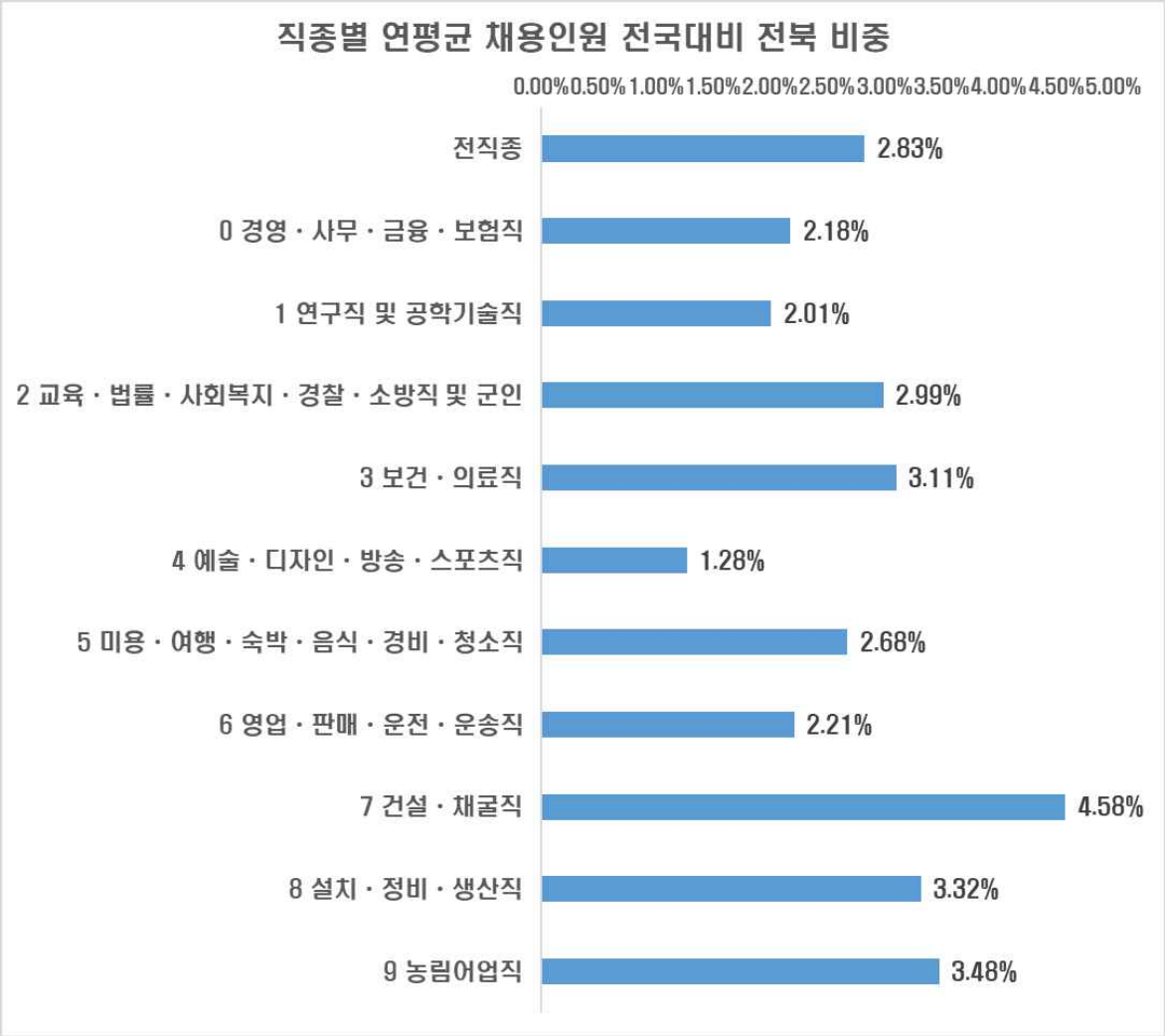
<표 2-73>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직종별 일자리 비중 현황

구분	구인인원 비중	채용인원 비중	미충원인원 비중	부족인원 비중
전직종	2.77%	2.83%	2.28%	2.55%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11%	2.18%	1.59%	1.97%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	1.96%	2.01%	1.74%	1.63%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3.00%	2.99%	3.17%	3.22%
3 보건・의료직	3.18%	3.11%	3.80%	3.23%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40%	1.28%	2.13%	1.81%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65%	2.68%	2.27%	2.47%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06%	2.21%	1.40%	1.98%
7 건설・채굴직	4.55%	4.58%	2.93%	7.48%
8 설치・정비・생산직	3.27%	3.32%	3.09%	3.01%
9 농림어업직	3.97%	3.48%	15.03%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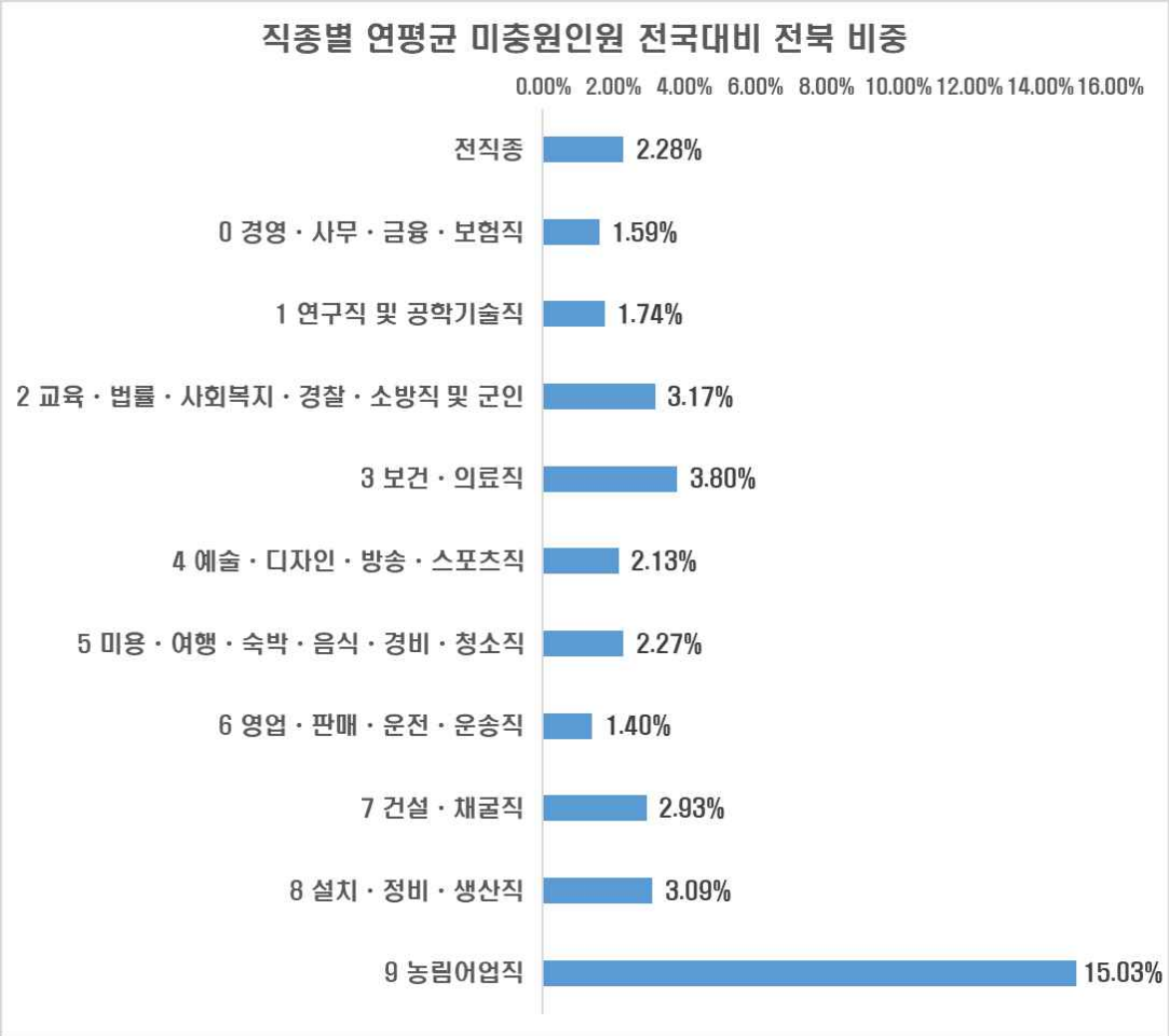
<그림 2-43> 직종별 연평균 구인인원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비중(연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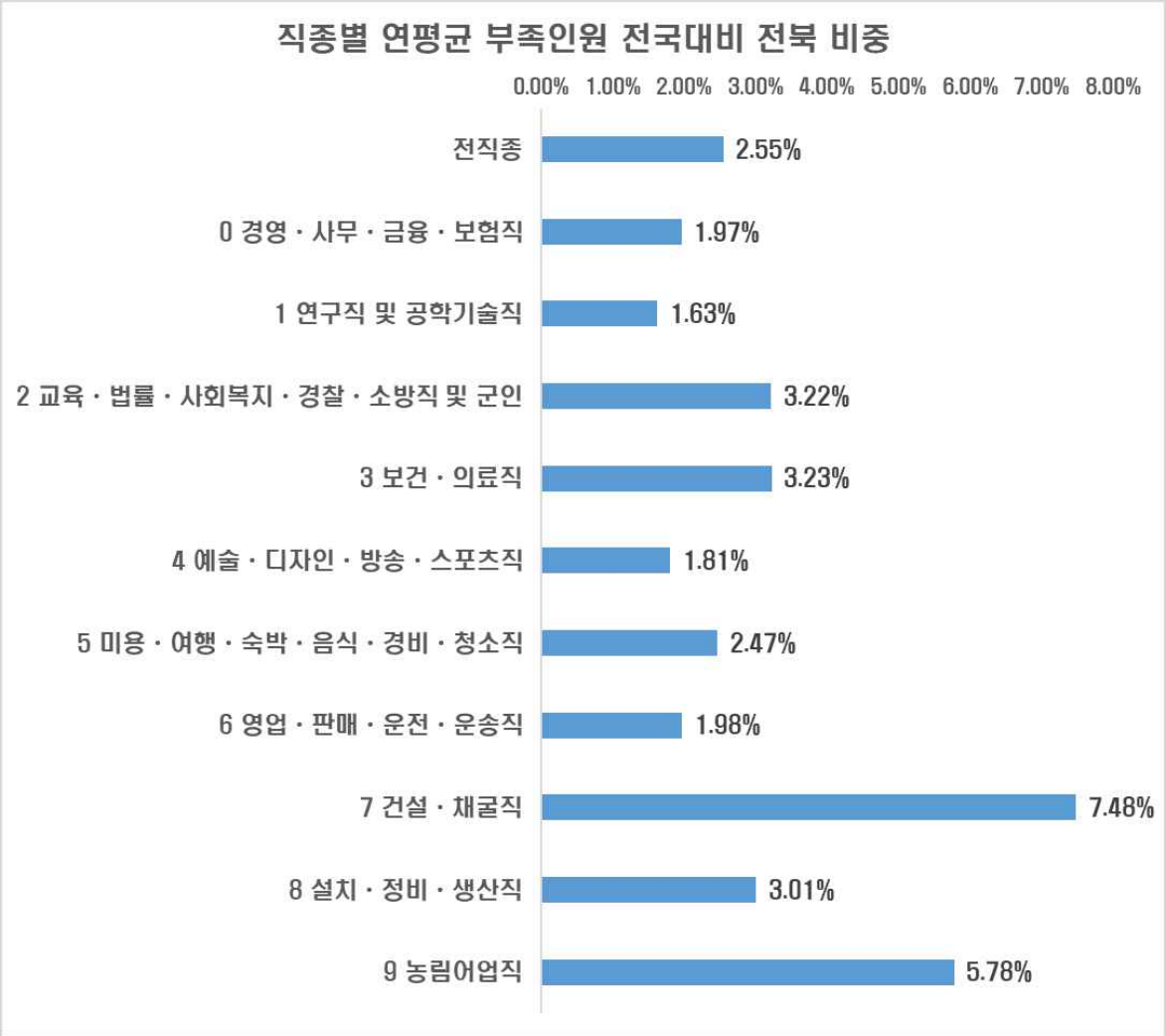
<그림 2-44> 직종별 연평균 채용인원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비중(연평균 기준)



<그림 2-45> 직종별 연평균 미충원인원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비중(연평균 기준)



<그림 2-46> 직종별 연평균 부족인원 전국대비 전북특별자치도 비중(연평균 비중)



4. 일자리 미스매치(질적 관점) 지역간 차이 분석

▌**일자리 미스매치(질적 관점)에서의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총 3가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2024년) 산업별/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통계자료

- 산업별 상용근로자 임금 차이 분석
- 지역별 상용근로자 임금차이 분석
- 지역별 산업별 상용근로자 임금차이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의 타광역지자체로의 일자리 선택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고용정보원(고용조사분석 시스템(https://survey.keis.or.kr/)에서 수행한 대졸자 직업이동조사를 이용하여 지역간 일자리 질(Quality)에 대한 차이(GAP) 분석을 수행함

- 설문항목의 비교를 위해 2011년 대졸자와 2020년 대졸자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간 일자리 질(Quality)에 대한 차이(GAP) 분석을 수행함

- 2001년부터 2021년까지 15세~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추적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1) 산업별 임금통계분석

▮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한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2024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분석을 수행함**

▮ **분석을 위한 기초 가정**

○ 2023년과 2024년의 근로시간과 월급여액 평균

○ 상용근로자 종사자 1인 이상사업체 기준

○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임금은 세금공제전 임금 기준

○ 상용월급여액 : 상용정액급여(원) + 상용초과급여(원)

(1) 지역별 근로시간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6시간으로 전국 평균 161.9시간보다 1.3시간 더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8시간으로 2023년보다 약 5.2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평균 167.7시간보다는 1.9시간 적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23년 월평균 근로시간

- 전국 평균 : 161.9시간
- 전북특별자치도 : 160.6시간
  - 17개 광역지자체중 10위

○ 2024년 월평균 근로시간

- 전국 평균 : 167.7시간
  - 2023년대비 약 5.8시간 증가함
- 전북특별자치도 : 165.8시간
  - 2023년대비 약 5.2시간 증가함
  - 17개 광역지자체중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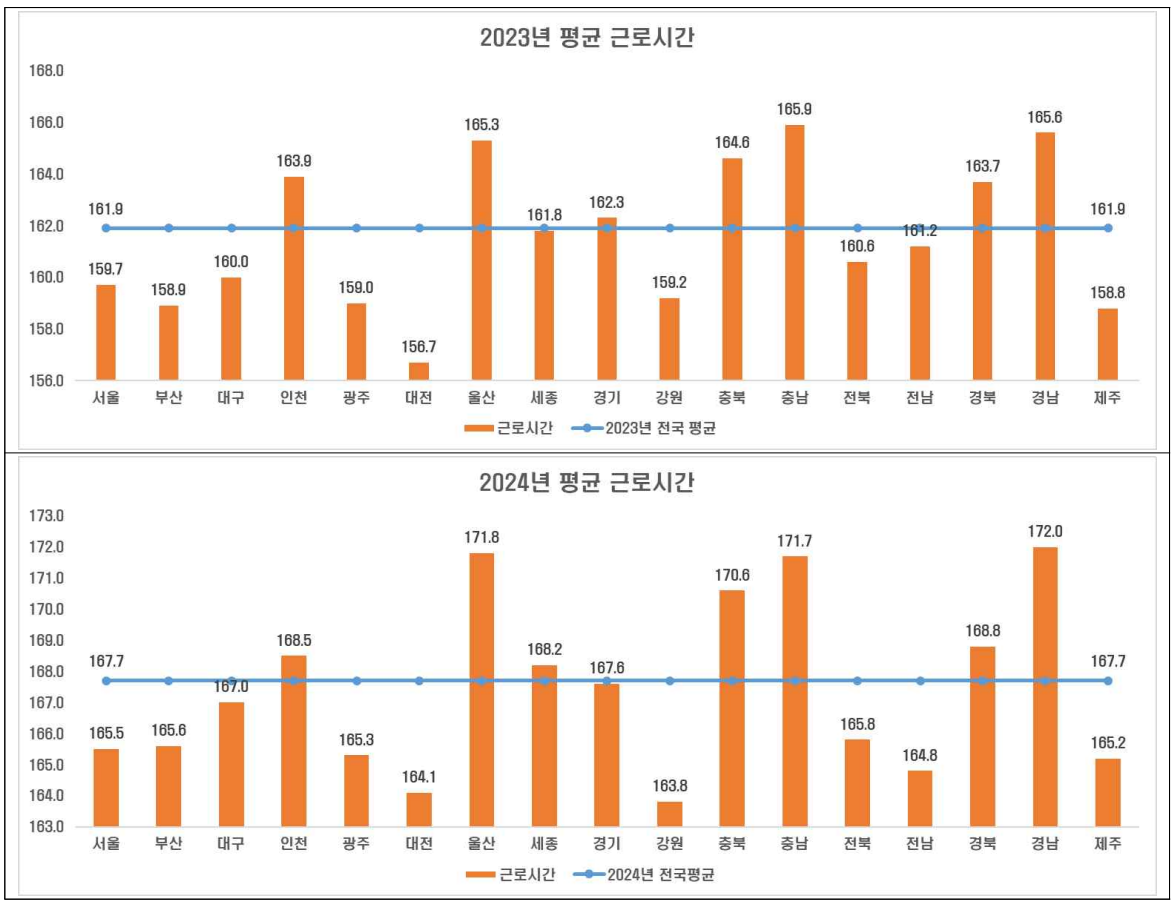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표 2-74> 지역별 근로시간 현황

(단위 : 시간)

구분	2023년		2024년	
	근로시간(월)	순위	근로시간(월)	순위
전국	161.9		167.7	
서울	159.7	12	165.5	12
부산	158.9	15	165.6	11
대구	160.0	11	167.0	9
인천	163.9	5	168.5	6
광주	159.0	14	165.3	13
대전	156.7	17	164.1	16
울산	165.3	3	171.8	2
세종	161.8	8	168.2	7
경기	162.3	7	167.6	8
강원	159.2	13	163.8	17
충북	164.6	4	170.6	4
충남	165.9	1	171.7	3
전북	160.6	10	165.8	10
전남	161.2	9	164.8	15
경북	163.7	6	168.8	5
경남	165.6	2	172.0	1
제주	158.8	16	165.2	14

<그림 2-47> 지역별 월평균 근로시간(2023년과 2024년)



(2) 지역별 월평균 급여액

▮ **2023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067,636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48,841원 더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은 3,175,127원으로 2023년보다 약 107,491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평균다는 581,614원 적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23년 월평균 급여액

- 전국 평균 : 3,616,477원
- 전북특별자치도 : 3,067,636원
  - 17개 광역지자체중 16위

○ 2024년 월평균 급여액

- 전국 평균 : 3,756,741원
  - 2023년대비 약 140,264원이 증가함
- 전북특별자치도 : 3,175,127원
  - 2023년대비 107,491원이 증가함
  - 17개 광역지자체중 1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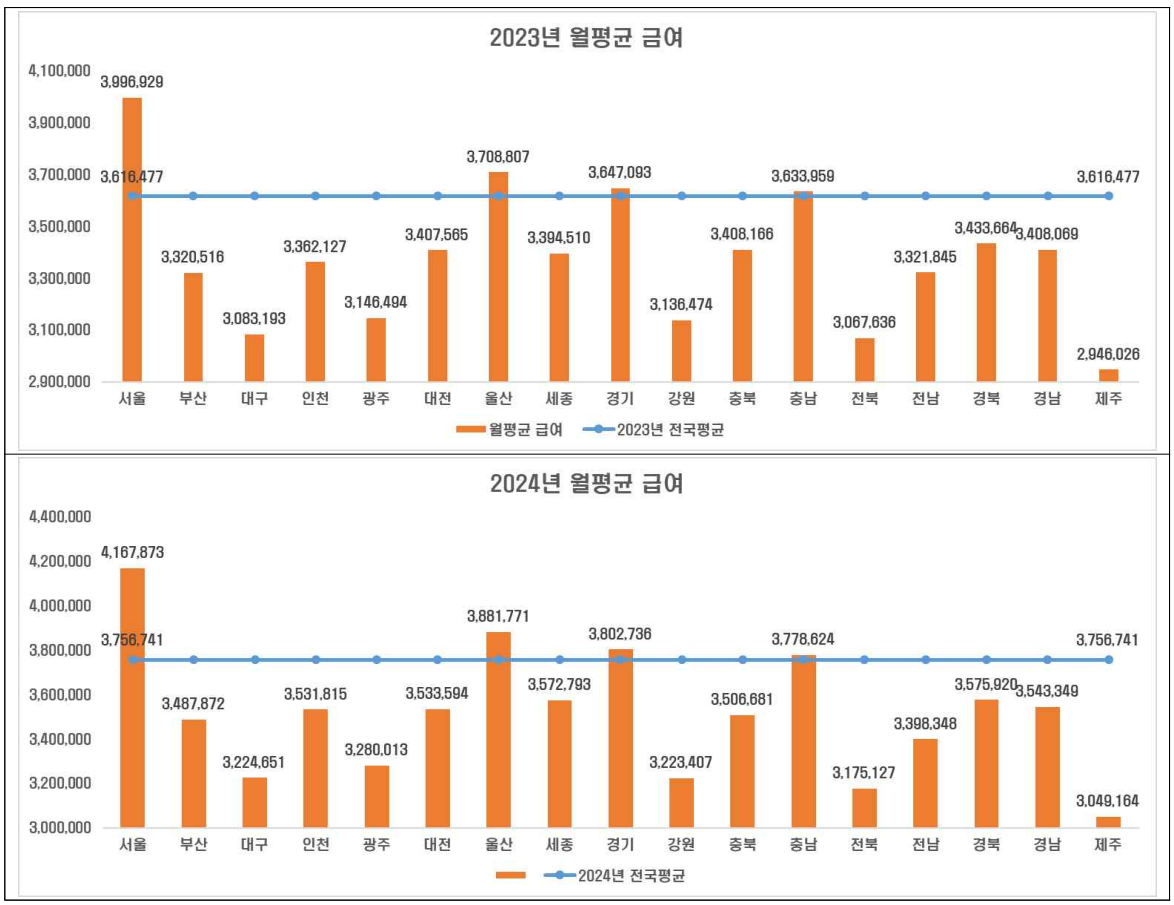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표 2-75> 지역별 월평균급여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2023년		2024년	
	급여액(월)	순위	급여액(월)	순위
전국	3,616,477		3,756,741	
서울	3,996,929	1	4,167,873	1
부산	3,320,516	12	3,487,872	11
대구	3,083,193	15	3,224,651	14
인천	3,362,127	10	3,531,815	9
광주	3,146,494	13	3,280,013	13
대전	3,407,565	8	3,533,594	8
울산	3,708,807	2	3,881,771	2
세종	3,394,510	9	3,572,793	6
경기	3,647,093	3	3,802,736	3
강원	3,136,474	14	3,223,407	15
충북	3,408,166	6	3,506,681	10
충남	3,633,959	4	3,778,624	4
전북	3,067,636	16	3,175,127	16
전남	3,321,845	11	3,398,348	12
경북	3,433,664	5	3,575,920	5
경남	3,408,069	7	3,543,349	7
제주	2,946,026	17	3,049,164	17

<그림 2-48> 지역별 월평균 급여액(2023년과 2024년)



(3) 산업별 전국평균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차이 분석

▮ **2024년 월평균 급여액 기준 전국평균과 전북특별자치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의 차이가 1,275,396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국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월평균 급여액의 차이

- 전체 기준 : 581,614원
- 광업 : 198,240원
- 제조업 : 412,348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850,704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169,243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국평균보다 더 높음)
- 건설업 : 814,105원
- 도매 및 소매업 : 932,963원
- 운수 및 창고업 : 481,707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299,863원
- 정보통신업 : 299,863원
- 금융 및 보험업 : 865,862원
- 부동산업 : 567,508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275,396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21,294원
- 교육 서비스업 : 55,399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93,803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72,026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02,697원

○ 전북특별자치도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제외하고 전국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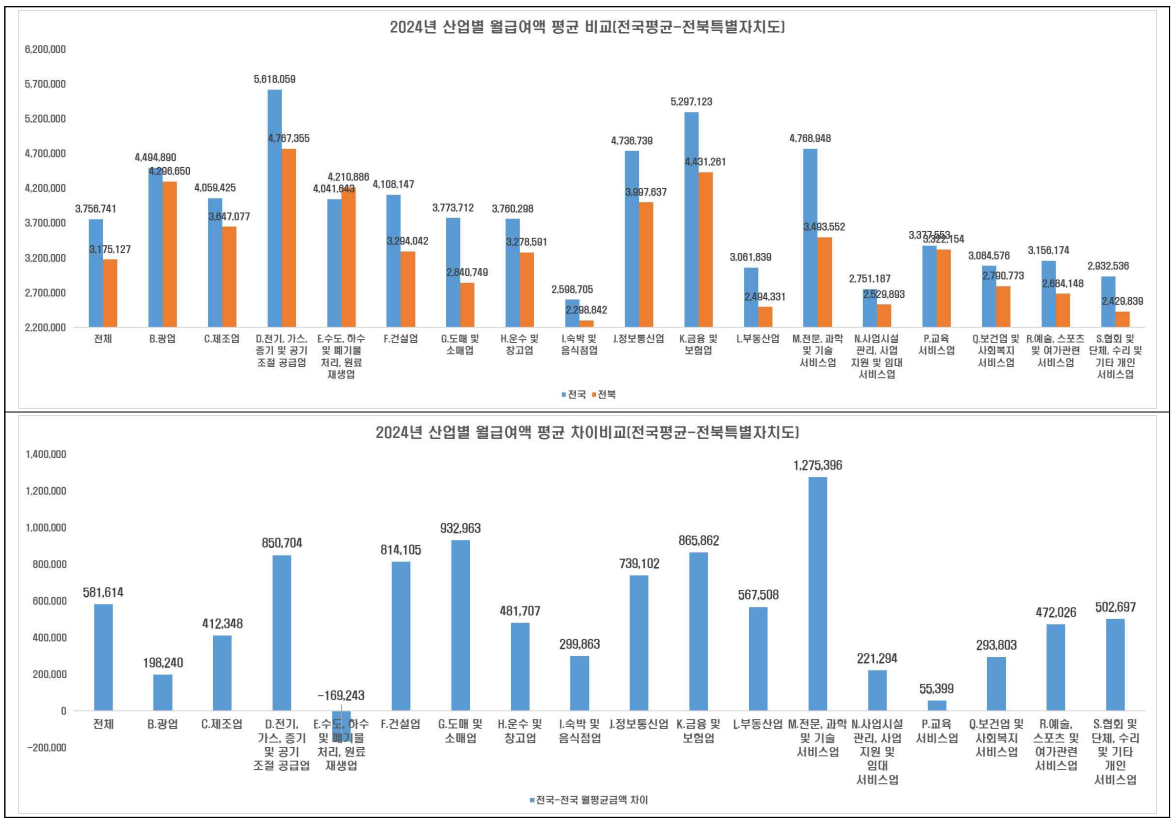
○ 교육서비스업의 차이가 가장 적었으며,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표 2-76> 전국-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별 월평균 급여액 차이(2024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전국	전북특별자치도	차이
전체	3,756,741	3,175,127	581,614
B.광업	4,494,890	4,296,650	198,240
C.제조업	4,059,425	3,647,077	412,348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618,059	4,767,355	850,704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041,643	4,210,886	-169,243
F.건설업	4,108,147	3,294,042	814,105
G.도매 및 소매업	3,773,712	2,840,749	932,963
H.운수 및 창고업	3,760,298	3,278,591	481,707
I.숙박 및 음식점업	2,598,705	2,298,842	299,863
J.정보통신업	4,736,739	3,997,637	739,102
K.금융 및 보험업	5,297,123	4,431,261	865,862
L.부동산업	3,061,839	2,494,331	567,508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68,948	3,493,552	1,275,396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751,187	2,529,893	221,294
P.교육 서비스업	3,377,553	3,322,154	55,399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84,576	2,790,773	293,803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56,174	2,684,148	472,026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32,536	2,429,839	502,697

<그림 2-49> 전국-전북특별자치도 산업별 월평균 급여액 차이(2024년 기준)



(4) 주요 지자체와의 차이 분석

▮ **2024년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청년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광역지자체인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충남, 전남 등과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와의 차이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992,746원
- 광업 : -107,785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서울평균보다 더 높음)
- 제조업 : 15,073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063,277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168,025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서울평균보다 더 높음)
- 건설업 : 2,135,426원
- 도매 및 소매업 : 1,513,553원
- 운수 및 창고업 : 1,026,152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549,423원
- 정보통신업 : 791,082원
- 금융 및 보험업 : 1,593,680원
- 부동산업 : 900,108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626,988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52,324원
- 교육 서비스업 : 205,292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535,031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38,963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59,191원

○ 경기도와의 차이 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627,609원
- 광업 : 638,226원
- 제조업 : 574,164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888,357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4,494원
- 건설업 : 871,419원
- 도매 및 소매업 : 707,998원
- 운수 및 창고업 : 160,861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463,005원
- 정보통신업 : 1,218,087원
- 금융 및 보험업 : 773,155원
- 부동산업 : 415,504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520,481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67,966원
- 교육 서비스업 : -217,890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경기평균보다 더 높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77,805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12,828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497,293원

○ 대전광역시와의 차이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358,467원
- 광업 : -247,911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대전평균보다 더 높음)
- 제조업 : 239,680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511,438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259,715원
- 건설업 : 416,667원
- 도매 및 소매업 : 108,914원
- 운수 및 창고업 : 451,299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59,776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대전평균보다 더 높음)
- 정보통신업 : 645,241원
- 금융 및 보험업 : 414,195원
- 부동산업 : 358,811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342,807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16,254원
- 교육 서비스업 : 160,670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73,167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70,195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83,492원

○ 광주광역시와의 차이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104,886원
- 광업 : 72,951원
- 제조업 : 122,608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00,973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874,398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광주평균보다 더 높음)
- 건설업 : 703,127원
- 도매 및 소매업 : 1,938원
- 운수 및 창고업 : -315,414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광주평균보다 더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 : -80,770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광주평균보다 더 높음)
- 정보통신업 : 608,428원
- 금융 및 보험업 : 393,476원
- 부동산업 : 79,988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3,842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140,370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광주평균보다 더 높음)
- 교육 서비스업 : 173,554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75,820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7,956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광주평균보다 더 높음)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76,874원

○ 충청남도와의 차이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603,497원
- 광업 : 376,891원
- 제조업 : 834,817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78,483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319,377원
- 건설업 : 29,456원
- 도매 및 소매업 : 10,714원
- 운수 및 창고업 : 278,037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158,527원
- 정보통신업 : 91,586원
- 금융 및 보험업 : -255,624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충남평균보다 더 높음)
- 부동산업 : 505,234원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16,446원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371,925원
- 교육 서비스업 : 263,094원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2,690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16,146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54,013원

○ 전라남도와의 차이분석 결과

- 전체 기준 : 223,221원
- 광업 : -331,797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제조업 : 353,601원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779,080원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290,219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건설업 : 197,777원
- 도매 및 소매업 : 96,522원

- 운수 및 창고업 : 723,117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130,011원
- 정보통신업 : -71,342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금융 및 보험업 : -122,525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부동산업 : -62,635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864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29,095원
- 교육 서비스업 : -145,016원(전북특별자치도 평균이 전남평균보다 더 높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61,854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86,084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6,213원

<표 2-77> 전북특별자치도와 6개 광역지자체간 월평균 급여액 비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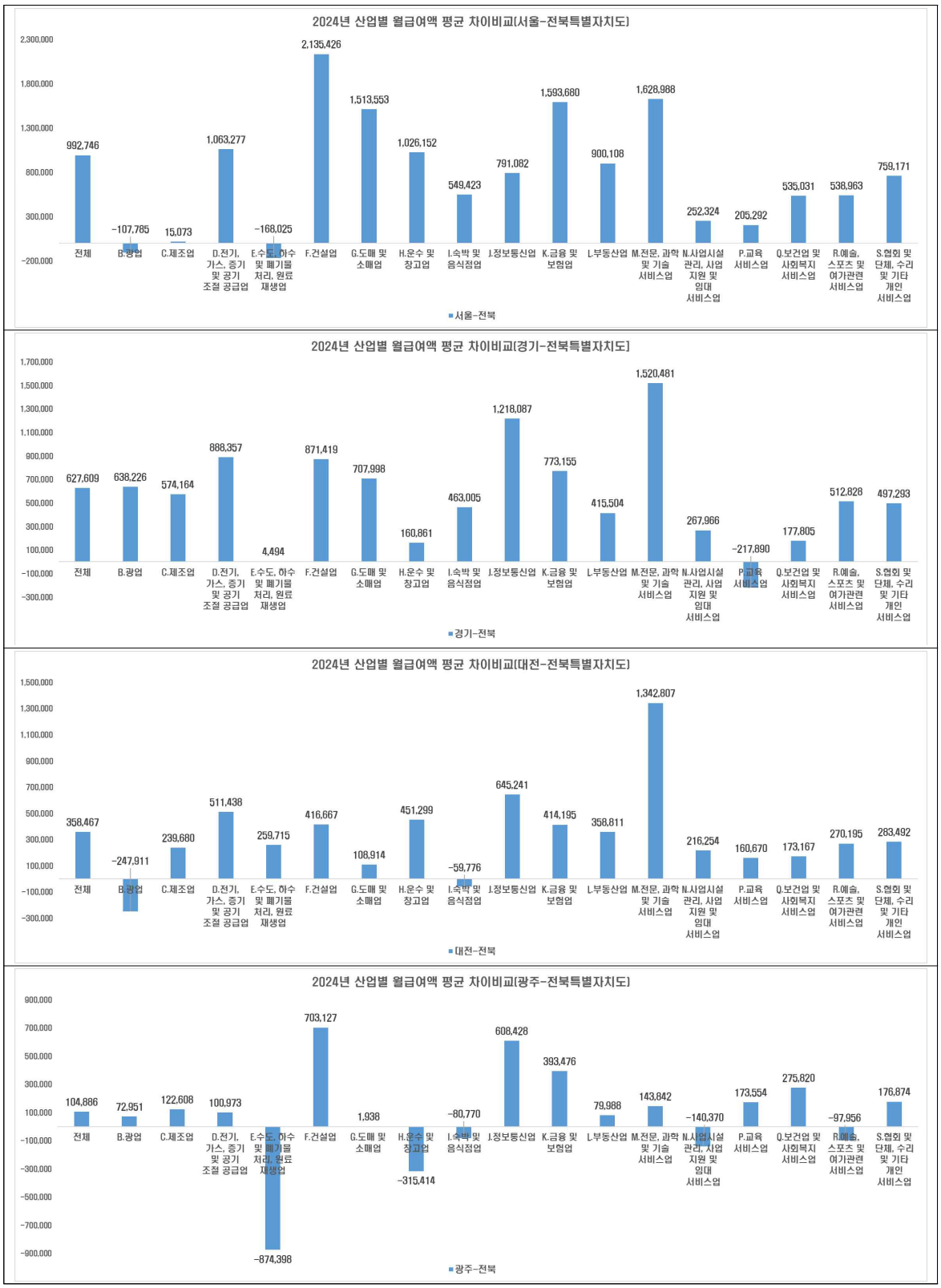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충남	전남
전체	3,175,127	4,167,873	3,802,736	3,533,594	3,280,013	3,778,624	3,398,348
B.광업	4,296,650	4,188,865	4,934,876	4,048,739	4,369,601	4,673,541	3,964,853
C.제조업	3,647,077	3,662,150	4,221,241	3,886,757	3,769,685	4,481,894	4,000,678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767,355	5,830,632	5,655,712	5,278,793	4,868,328	5,145,838	5,546,435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210,886	4,042,861	4,215,380	4,470,601	3,336,488	4,530,263	3,920,667
F.건설업	3,294,042	5,429,468	4,165,461	3,710,709	3,997,169	3,323,498	3,491,819
G.도매 및 소매업	2,840,749	4,354,302	3,548,747	2,949,663	2,842,687	2,851,463	2,937,271
H.운수 및 창고업	3,278,591	4,304,743	3,439,452	3,729,890	2,963,177	3,556,628	4,001,708
I.숙박 및 음식점업	2,298,842	2,848,265	2,761,847	2,239,066	2,218,072	2,457,369	2,428,853
J.정보통신업	3,997,637	4,788,719	5,215,724	4,642,878	4,606,065	4,089,223	3,926,295
K.금융 및 보험업	4,431,261	6,024,941	5,204,416	4,845,456	4,824,737	4,175,637	4,308,736
L.부동산업	2,494,331	3,394,439	2,909,835	2,853,142	2,574,319	2,999,565	2,431,696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93,552	5,122,540	5,014,033	4,836,359	3,637,394	4,009,998	3,485,688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29,893	2,782,217	2,797,859	2,746,147	2,389,523	2,901,818	2,758,988
P.교육 서비스업	3,322,154	3,527,446	3,104,264	3,482,824	3,495,708	3,585,248	3,177,138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90,773	3,325,804	2,968,578	2,963,940	3,066,593	2,993,463	2,952,627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148	3,223,111	3,196,976	2,954,343	2,586,192	3,000,294	2,870,232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29,839	3,189,010	2,927,132	2,713,331	2,606,713	2,583,852	2,536,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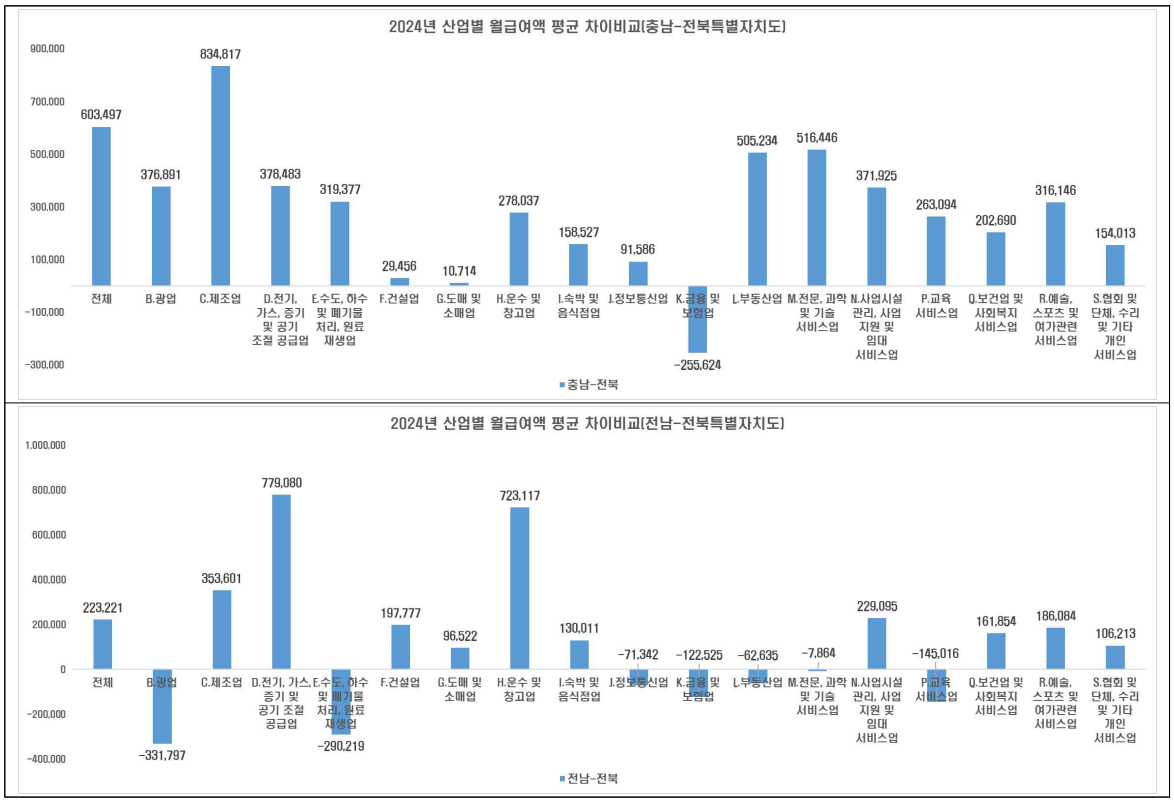
<표 2-78> 전북특별자치도와 6개 광역지자체간 월평균 급여액 차이

(단위 : 원)

구분	서울-전북	경기-전북	대전-전북	광주-전북	충남-전북	전남-전북
전체	992,746	627,609	358,467	104,886	603,497	223,221
B.광업	-107,785	638,226	-247,911	72,951	376,891	-331,797
C.제조업	15,073	574,164	239,680	122,608	834,817	353,601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63,277	888,357	511,438	100,973	378,483	779,080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68,025	4,494	259,715	-874,398	319,377	-290,219
F.건설업	2,135,426	871,419	416,667	703,127	29,456	197,777
G.도매 및 소매업	1,513,553	707,998	108,914	1,938	10,714	96,522
H.운수 및 창고업	1,026,152	160,861	451,299	-315,414	278,037	723,117
I.숙박 및 음식점업	549,423	463,005	-59,776	-80,770	158,527	130,011
J.정보통신업	791,082	1,218,087	645,241	608,428	91,586	-71,342
K.금융 및 보험업	1,593,680	773,155	414,195	393,476	-255,624	-122,525
L.부동산업	900,108	415,504	358,811	79,988	505,234	-62,635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28,988	1,520,481	1,342,807	143,842	516,446	-7,864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52,324	267,966	216,254	-140,370	371,925	229,095
P.교육 서비스업	205,292	-217,890	160,670	173,554	263,094	-145,016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35,031	177,805	173,167	275,820	202,690	161,854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38,963	512,828	270,195	-97,956	316,146	186,084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9,171	497,293	283,492	176,874	154,013	106,213

<그림 2-1> 전북특별자치도와 6개 광역지자체간 월평균 급여액 차이




2024년 산업별 월급여액 평균 차이비교(충남-전북특별자치도)
900,000
700,000
500,000
300,000
100,000
-100,000
-300,000
603,497
376,891
834,817
378,483
319,377
29,456
10,714
278,037
158,527
91,586
-255,624
505,234
516,446
371,925
263,094
202,690
316,146
154,013
전체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충남-전북
2024년 산업별 월급여액 평균 차이비교(전남-전북특별자치도)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200,000
-400,000
223,221
-331,797
353,601
779,080
-290,219
197,777
96,522
723,117
130,011
-71,342
-122,525
-62,635
-7,864
229,095
-145,016
161,854
186,084
106,213
전체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남-전북

2) 대졸자 직업조사(2011년과 2020년) 비교 결과

▌**지역별 주당 정규 근로일을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8위, 2020년에는 9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정규 근로일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에 비해 조금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79> 지역별 주당 정규 근로일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4.99	16	3,740	4.86	16
부산	1,022	5.17	12	659	4.93	9
대구	620	5.23	4	539	4.93	11
대전	700	5.12	14	438	4.95	7
인천	472	5.18	10	471	4.74	17
광주	509	5.23	5	325	4.92	12
울산	174	5.18	11	226	4.94	8
경기	2,501	5.11	15	2,195	4.89	14
강원	688	5.22	7	305	5.03	1
충북	565	5.23	6	442	4.96	4
충남	942	5.14	13	507	4.97	3
전북	**690**	**5.22**	**8**	**326**	**4.93**	**9**
전남	489	5.25	3	357	5.02	2
경북	1,231	5.21	9	534	4.96	5
경남	562	5.29	1	558	4.89	13
제주	247	5.28	2	98	4.96	5
세종				107	4.88	15
전체	14,426	5.14		11,827	4.90	

▮ **지역별 주당 정규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10위, 2020년에는 12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정규 근로시간이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대전, 전남, 충남 등에 비해 조금 적은 것으로 분석됨

<표 2-80> 지역별 주당 정규 근로시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9.27	16	3,740	38.78	13
부산	1,022	41.80	9	659	39.10	9
대구	620	42.39	4	539	38.12	16
대전	700	41.22	13	438	39.41	7
인천	472	41.04	14	471	38.20	15
광주	509	42.03	6	325	37.66	17
울산	174	41.90	8	226	38.92	11
경기	2,501	40.80	15	2,195	39.03	10
강원	688	42.24	5	305	40.51	1
충북	565	41.98	7	442	40.38	3
충남	942	41.37	11	507	40.46	2
전북	**690**	**41.70**	**10**	**326**	**38.81**	**12**
전남	489	41.25	12	357	39.52	4
경북	1,231	42.41	3	534	39.51	5
경남	562	42.80	2	558	39.12	8
제주	247	43.21	1	98	39.51	5
세종				107	38.32	14
전체	14,426	41.17		11,827	39.04	

▮ **지역별 주당 초과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16위, 2020년에는 13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초과 근로시간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표 2-81> 지역별 주당 초과근무시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5.67	1	3,740	3.01	7
부산	1,022	4.04	10	659	2.05	14
대구	620	4.32	8	539	2.02	15
대전	700	4.01	11	438	2.79	9
인천	472	5.34	2	471	2.42	11
광주	509	3.30	14	325	1.91	16
울산	174	5.10	3	226	2.61	10
경기	2,501	4.92	4	2,195	2.99	8
강원	688	3.73	12	305	3.76	2
충북	565	4.19	9	442	3.41	4
충남	942	4.44	5	507	3.38	5
전북	**690**	**2.80**	**16**	**326**	**2.15**	**13**
전남	489	2.99	15	357	1.80	17
경북	1,231	4.35	7	534	3.11	6
경남	562	4.40	6	558	2.34	12
제주	247	3.31	13	98	3.99	1
세종				107	3.74	
전체	14,426	4.52		11,827	2.81	

▮ **지역별 주당 월평균 휴일근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12위, 2020년에는 16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월평균 휴일근무 근로시간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표 2-82> 지역별 월평균 휴일근무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0.52	3	3,740	1.02	7
부산	1,022	0.45	9	659	0.70	17
대구	620	0.43	11	539	0.74	15
대전	700	0.49	7	438	0.97	10
인천	472	0.50	5	471	1.27	2
광주	509	0.47	8	325	0.95	11
울산	174	0.70	1	226	1.10	5
경기	2,501	0.49	6	2,195	1.10	5
강원	688	0.31	16	305	1.23	3
충북	565	0.35	13	442	0.95	11
충남	942	0.45	10	507	1.02	7
전북	**690**	**0.36**	**12**	**326**	**0.73**	**16**
전남	489	0.31	15	357	0.78	14
경북	1,231	0.50	4	534	1.15	4
경남	562	0.56	2	558	0.98	9
제주	247	0.34	14	98	2.18	1
세종				107	0.90	13
전체	14,426	0.46		11,827	1.01	

▌**지역별 주당 월평균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11위, 2020년에는 15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2011년 기준 서울 > 울산 > 인천 > 경남 > 대구 > 부산 > 광주 > 충남 > 충북 > 경북 > 전북 > 강원 > 경기 > 전남 > 대전 > 제주 등의 순이었음
- 2020년 기준 전남 > 충남 > 경기 > 충북 > 울산 > 세종 > 서울 > 경남 > 제주 > 경북 > 강원 > 인천 > 부산 > 대전 > 전북 > 광주 > 대구 등의 순이었음

○ 지역간 근로소득의 차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려 타 광역지자체로 인구유출이 일자리에 따른 근로소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표 2-83> 지역별 월평균 근로소득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219.22	1	3,740	225.94	7
부산	1,022	191.81	6	659	214.63	13
대구	620	192.92	5	539	204.78	17
대전	700	176.90	15	438	209.68	14
인천	472	198.60	3	471	218.30	12
광주	509	190.15	7	325	206.92	16
울산	174	200.20	2	226	231.56	5
경기	2,501	187.46	13	2,195	232.08	3
강원	688	188.39	12	305	220.92	11
충북	565	189.55	9	442	231.62	4
충남	942	189.73	8	507	234.78	2
전북	**690**	**188.59**	**11**	**326**	**209.67**	**15**
전남	489	187.35	14	357	242.44	1
경북	1,231	188.88	10	534	221.04	10
경남	562	198.36	4	558	225.65	8
제주	247	166.28	16	98	224.01	9
세종				107	229.63	6
전체	14,426	195.25		11,827	224.46	

▌**지역별 주당 초임 월평균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13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초임 월평균 근로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초임 임금수준으로 전남 > 충남 > 충북 > 세종 > 울산 > 경기 > 경남 > 서울 > 경북 > 인천 > 제주 > 부산 > 전북 > 광주 > 대전 > 강원 > 대구 등의 순이었음

○ 지역간 근로소득의 차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려 타 광역지자체로 인구유출이 일자리에 따른 초임 임금수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표 2-84> 지역별 초임 월평균 임금수준

구분	2011년 조사(조사하지 않음)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740	208.2	8
부산				659	199.01	12
대구				539	190.55	17
대전				438	194.13	15
인천				471	202.31	10
광주				325	196.06	14
울산				226	216.4	5
경기				2,195	214.13	6
강원				305	193.04	16
충북				442	218.57	3
충남				507	219.32	2
전북				**326**	**197.85**	**13**
전남				357	223.98	1
경북				534	204.43	9
경남				558	211.59	7
제주				98	201.65	11
세종				107	217.5	4
전체				11,827	207.73	

▮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12위, 2020년에는 3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함

○ 2011년 조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전남, 경남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85>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임금 또는 소득)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21	4	3,740	3.03	17
부산	1,022	3.16	10	659	3.09	15
대구	620	3.21	3	539	3.19	8
대전	700	3.19	7	438	3.17	11
인천	472	3.26	2	471	3.10	13
광주	509	3.20	5	325	3.19	8
울산	174	3.08	16	226	3.14	12
경기	2,501	3.14	13	2,195	3.10	13
강원	688	3.19	6	305	3.24	7
충북	565	3.13	14	442	3.25	6
충남	942	3.18	8	507	3.29	4
전북	**690**	**3.14**	**12**	**326**	**3.37**	**3**
전남	489	3.08	15	357	3.43	1
경북	1,231	3.15	11	534	3.19	8
경남	562	3.16	9	558	3.38	2
제주	247	3.43	1	98	3.08	16
세종				107	3.28	5
전체	14,426	3.18		11,827	3.14	

▮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고용안정성)를 분석한 결과, 2011년의 경우 전북은 8위, 2020년에는 5위로 분석되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2011년 조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이 일자리 지역으로 선호하는 서울, 충남 등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2-86>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고용안정성)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73	1	3,740	3.59	14
부산	1,022	3.58	9	659	3.53	15
대구	620	3.69	3	539	3.60	12
대전	700	3.53	13	438	3.68	9
인천	472	3.67	4	471	3.68	9
광주	509	3.52	15	325	3.48	17
울산	174	3.55	11	226	3.52	16
경기	2,501	3.58	10	2,195	3.71	7
강원	688	3.52	16	305	3.90	2
충북	565	3.64	6	442	3.60	12
충남	942	3.60	7	507	3.63	11
전북	**690**	**3.58**	**8**	**326**	**3.72**	**5**
전남	489	3.54	12	357	3.82	3
경북	1,231	3.52	14	534	3.72	5
경남	562	3.64	5	558	3.70	8
제주	247	3.73	2	98	3.81	4
세종				107	3.91	1
전체	14,426	3.61		11,827	3.65	

<표 2-87>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근무환경 : 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76	2	3,740	3.72	5
부산	1,022	3.66	6	659	3.52	17
대구	620	3.74	3	539	3.70	6
대전	700	3.59	15	438	3.76	3
인천	472	3.66	5	471	3.63	12
광주	509	3.62	8	325	3.62	13
울산	174	3.62	11	226	3.60	16
경기	2,501	3.62	12	2,195	3.66	9
강원	688	3.65	7	305	3.65	11
충북	565	3.61	13	442	3.61	15
충남	942	3.69	4	507	3.68	7
전북	**690**	**3.61**	**14**	**326**	**3.77**	**2**
전남	489	3.62	10	357	3.75	4
경북	1,231	3.57	16	534	3.68	7
경남	562	3.62	9	558	3.62	13
제주	247	3.79	1	98	3.66	9
세종				107	3.84	1
전체	14,426	3.66		11,827	3.68	

<표 2-88>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근로시간, 근무일수)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46	12	3,740	3.57	13
부산	1,022	3.55	3	659	3.53	17
대구	620	3.49	9	539	3.64	7
대전	700	3.47	10	438	3.64	7
인천	472	3.47	11	471	3.57	13
광주	509	3.45	13	325	3.63	9
울산	174	3.45	14	226	3.56	15
경기	2,501	3.43	16	2,195	3.60	12
강원	688	3.52	5	305	3.78	1
충북	565	3.51	6	442	3.55	16
충남	942	3.49	8	507	3.63	9
전북	**690**	**3.55**	**4**	**326**	**3.76**	**2**
전남	489	3.58	2	357	3.75	3
경북	1,231	3.43	15	534	3.67	6
경남	562	3.50	7	558	3.62	11
제주	247	3.66	1	98	3.69	4
세종				107	3.69	4
전체	14,426	3.48		11,827	3.61	

<표 2-89>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개인의 발전가능성)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48	4	3,740	3.38	13
부산	1,022	3.47	7	659	3.35	14
대구	620	3.39	14	539	3.40	10
대전	700	3.41	12	438	3.59	2
인천	472	3.47	8	471	3.34	16
광주	509	3.42	11	325	3.40	10
울산	174	3.47	6	226	3.42	8
경기	2,501	3.40	13	2,195	3.35	14
강원	688	3.44	10	305	3.49	5
충북	565	3.37	16	442	3.40	10
충남	942	3.47	5	507	3.43	7
전북	**690**	**3.49**	**3**	**326**	**3.57**	**3**
전남	489	3.49	2	357	3.56	4
경북	1,231	3.38	15	534	3.44	6
경남	562	3.47	9	558	3.42	8
제주	247	3.57	1	98	3.23	17
세종				107	3.66	1
전체	14,426	3.44		11,827	3.41	

<표 2-90>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인간관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83	4	3,740	3.64	6
부산	1,022	3.82	5	659	3.58	14
대구	620	3.78	13	539	3.66	3
대전	700	3.72	15	438	3.65	4
인천	472	3.79	10	471	3.56	16
광주	509	3.69	16	325	3.52	17
울산	174	3.79	11	226	3.64	6
경기	2,501	3.80	8	2,195	3.61	11
강원	688	3.83	3	305	3.74	1
충북	565	3.78	12	442	3.58	14
충남	942	3.80	9	507	3.59	12
전북	**690**	**3.76**	**14**	**326**	**3.65**	**4**
전남	489	3.81	7	357	3.71	2
경북	1,231	3.82	6	534	3.62	10
경남	562	3.85	2	558	3.64	6
제주	247	3.96	1	98	3.59	12
세종				107	3.64	6
전체	14,426	3.80		11,827	3.62	

<표 2-91>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복리후생제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26	7	3,740	3.31	15
부산	1,022	3.27	3	659	3.30	17
대구	620	3.27	4	539	3.36	13
대전	700	3.21	12	438	3.41	10
인천	472	3.26	5	471	3.38	12
광주	509	3.23	9	325	3.31	15
울산	174	3.20	13	226	3.35	14
경기	2,501	3.16	15	2,195	3.42	8
강원	688	3.26	6	305	3.64	2
충북	565	3.24	8	442	3.42	8
충남	942	3.23	11	507	3.48	7
전북	**690**	**3.23**	**10**	**326**	**3.50**	**6**
전남	489	3.19	14	357	3.58	3
경북	1,231	3.11	16	534	3.41	10
경남	562	3.30	2	558	3.51	5
제주	247	3.46	1	98	3.53	4
세종				107	3.68	1
전체	14,426	3.23		11,827	3.39	

<표 2-92>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인사체계 : 승진제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11	5	3,740	3.09	16
부산	1,022	3.13	3	659	3.11	14
대구	620	3.10	7	539	3.16	11
대전	700	3.09	10	438	3.26	5
인천	472	3.09	9	471	3.11	14
광주	509	3.07	11	325	3.14	12
울산	174	3.11	4	226	3.18	10
경기	2,501	3.01	15	2,195	3.12	13
강원	688	3.11	6	305	3.20	9
충북	565	3.07	12	442	3.21	8
충남	942	3.07	13	507	3.23	7
전북	**690**	**3.09**	**8**	**326**	**3.31**	**3**
전남	489	3.00	16	357	3.35	2
경북	1,231	3.01	14	534	3.25	6
경남	562	3.19	2	558	3.27	4
제주	247	3.33	1	98	3.09	16
세종				107	3.47	1
전체	14,426	3.08		11,827	3.16	

<표 2-93>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61	4	3,740	3.51	11
부산	1,022	3.56	10	659	3.45	15
대구	620	3.59	7	539	3.51	11
대전	700	3.53	14	438	3.63	4
인천	472	3.59	5	471	3.52	9
광주	509	3.57	9	325	3.43	17
울산	174	3.62	3	226	3.44	16
경기	2,501	3.48	16	2,195	3.50	13
강원	688	3.55	13	305	3.59	7
충북	565	3.56	11	442	3.48	14
충남	942	3.55	12	507	3.60	6
전북	**690**	**3.58**	**8**	**326**	**3.61**	**5**
전남	489	3.59	6	357	3.69	1
경북	1,231	3.49	15	534	3.55	8
경남	562	3.64	2	558	3.52	9
제주	247	3.79	1	98	3.69	1
세종				107	3.67	3
전체	14,426	3.56		11,827	3.52	

<표 2-94>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72	2	3,740	3.53	7
부산	1,022	3.64	6	659	3.45	17
대구	620	3.64	7	539	3.51	11
대전	700	3.61	14	438	3.64	3
인천	472	3.63	10	471	3.48	13
광주	509	3.59	16	325	3.46	16
울산	174	3.68	3	226	3.47	14
경기	2,501	3.63	8	2,195	3.50	12
강원	688	3.61	15	305	3.47	14
충북	565	3.63	9	442	3.52	9
충남	942	3.66	5	507	3.53	7
전북	**690**	**3.62**	**13**	**326**	**3.69**	**2**
전남	489	3.62	12	357	3.74	1
경북	1,231	3.62	11	534	3.54	5
경남	562	3.66	4	558	3.52	9
제주	247	3.81	1	98	3.59	4
세종				107	3.54	5
전체	14,426	3.65		11,827	3.53	

<표 2-95>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비교

구분	2011년 조사(조사하지 않음)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740	3.52	9
부산				659	3.42	16
대구				539	3.51	12
대전				438	3.64	4
인천				471	3.52	9
광주				325	3.44	15
울산				226	3.40	17
경기				2,195	3.51	12
강원				305	3.62	6
충북				442	3.55	7
충남				507	3.52	9
전북				**326**	**3.68**	**3**
전남				357	3.70	2
경북				534	3.55	7
경남				558	3.50	14
제주				98	3.78	1
세종				107	3.64	4
전체				11,827	3.53	

<표 2-96>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하는일과 자신의 적성, 흥미의 일치 비교)

구분	2011년 조사(조사하지 않음)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740	3.58	7
부산				659	3.44	16
대구				539	3.47	14
대전				438	3.64	3
인천				471	3.48	13
광주				325	3.53	10
울산				226	3.50	12
경기				2,195	3.52	11
강원				305	3.57	8
충북				442	3.60	5
충남				507	3.61	4
전북				**326**	**3.73**	**2**
전남				357	3.82	1
경북				534	3.55	9
경남				558	3.45	15
제주				98	3.42	17
세종				107	3.60	5
전체				11,827	3.55	

<표 2-97> 지역별 일자리 만족도(직무관련 교육 또는 훈련) 비교

구분	2011년 조사(조사하지 않음)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740	3.35	15
부산				659	3.33	17
대구				539	3.38	13
대전				438	3.49	6
인천				471	3.41	9
광주				325	3.35	15
울산				226	3.40	10
경기				2,195	3.36	14
강원				305	3.54	4
충북				442	3.50	5
충남				507	3.48	7
전북				**326**	**3.60**	**2**
전남				357	3.67	1
경북				534	3.40	10
경남				558	3.44	8
제주				98	3.40	10
세종				107	3.58	3
전체				11,827	3.40	

<표 2-98> 지역별 일자리(직장) 전반적 만족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57	2	3,740	3.46	16
부산	1,022	3.48	13	659	3.47	15
대구	620	3.53	7	539	3.53	9
대전	700	3.46	15	438	3.50	13
인천	472	3.51	10	471	3.51	12
광주	509	3.53	8	325	3.52	10
울산	174	3.52	9	226	3.50	13
경기	2,501	3.47	14	2,195	3.45	17
강원	688	3.55	4	305	3.61	4
충북	565	3.50	12	442	3.52	10
충남	942	3.50	11	507	3.57	7
전북	**690**	**3.55**	**5**	**326**	**3.68**	**2**
전남	489	3.56	3	357	3.75	1
경북	1,231	3.44	16	534	3.56	8
경남	562	3.55	6	558	3.59	5
제주	247	3.65	1	98	3.58	6
세종				107	3.62	3
전체	14,426	3.52		11,827	3.51	

<표 2-99> 지역별 주된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비교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61	3	3,740	3.54	10
부산	1,022	3.54	14	659	3.51	16
대구	620	3.57	7	539	3.54	10
대전	700	3.53	15	438	3.54	10
인천	472	3.60	4	471	3.54	10
광주	509	3.54	13	325	3.57	8
울산	174	3.57	10	226	3.54	10
경기	2,501	3.53	16	2,195	3.51	16
강원	688	3.57	8	305	3.58	7
충북	565	3.59	5	442	3.59	5
충남	942	3.57	9	507	3.60	3
전북	**690**	**3.58**	**6**	**326**	**3.72**	**2**
전남	489	3.61	2	357	3.76	1
경북	1,231	3.55	12	534	3.57	8
경남	562	3.57	11	558	3.59	5
제주	247	3.71	1	98	3.53	15
세종				107	3.60	3
전체	14,426	3.57		11,827	3.55	

<표 2-100> 일자리 미스매치 : 업무내용 vs 교육수준(5 : 일의 수준이 매우 높음)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2.87	7	3,740	2.93	8
부산	1,022	2.84	13	659	2.89	16
대구	620	2.91	3	539	2.93	8
대전	700	2.88	6	438	3.03	1
인천	472	2.91	2	471	2.93	8
광주	509	2.97	1	325	2.93	8
울산	174	2.87	9	226	3.01	2
경기	2,501	2.87	10	2,195	2.92	14
강원	688	2.82	15	305	3.00	3
충북	565	2.84	12	442	2.99	4
충남	942	2.88	5	507	2.98	5
전북	**690**	**2.85**	**11**	**326**	**2.98**	**5**
전남	489	2.88	4	357	2.94	7
경북	1,231	2.87	8	534	2.93	8
경남	562	2.83	14	558	2.89	16
제주	247	2.81	16	98	2.91	15
세종				107	2.93	8
전체	14,426	2.87		11,827	2.94	

<표 2-101> 일자리 미스매치 : 기술수준 vs 일의 기술수준(5 : 일의 기술수준이 매우 높음)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2.91	7	3,740	2.95	10
부산	1,022	2.86	14	659	2.92	14
대구	620	2.94	2	539	2.92	14
대전	700	2.91	5	438	3.05	1
인천	472	2.91	6	471	2.93	13
광주	509	3.01	1	325	2.95	10
울산	174	2.89	10	226	3.02	2
경기	2,501	2.89	9	2,195	2.96	9
강원	688	2.84	16	305	3.01	3
충북	565	2.88	11	442	3.01	3
충남	942	2.94	3	507	3.00	5
전북	**690**	**2.87**	**13**	**326**	**2.98**	**6**
전남	489	2.92	4	357	2.95	10
경북	1,231	2.90	8	534	2.97	8
경남	562	2.88	12	558	2.92	14
제주	247	2.84	15	98	2.87	17
세종				107	2.98	6
전체	14,426	2.90		11,827	2.96	

<표 2-102> 일자리 미스매치 : 업무내용 vs 자신의 전공(5 : 매우 잘 맞음)

구분	2011년 조사			2020년 조사		
	표본	평균	순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3,014	3.24	3	3,740	3.23	8
부산	1,022	3.15	10	659	3.21	10
대구	620	3.12	14	539	3.10	17
대전	700	3.24	2	438	3.31	5
인천	472	3.10	15	471	3.17	14
광주	509	3.31	1	325	3.35	3
울산	174	3.22	4	226	3.13	16
경기	2,501	3.14	13	2,195	3.22	9
강원	688	3.17	8	305	3.21	10
충북	565	3.14	11	442	3.29	6
충남	942	3.21	5	507	3.26	7
전북	**690**	**3.20**	**7**	**326**	**3.47**	**2**
전남	489	3.20	6	357	3.49	1
경북	1,231	3.15	9	534	3.19	13
경남	562	3.14	12	558	3.14	15
제주	247	3.06	16	98	3.20	12
세종				107	3.33	4
전체	14,426	3.18		11,827	3.23	

3) 2021년 청년패널조사 분석 결과

▮ 2021년 청년패널조사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 지역간 일자리 미스매치(질적 관점)를 확인하기 위해 주당근로시간, 주당 초과근무시간, 주당 근로일수, 전반적 직장만족도, 직장만족도(업무내용, 사회적 공헌, 자기발전, 임금/수입, 고용안정, 자율성, 통근거리, 장래성, 물리적 근로환경, 인간관계, 인사고과공정성, 복리후생), 업무내용-자기교육수준 비교, 업무내용-자기기술수준 비교, 현재 직무 기술수준, 업무내용-자기전공 일치도 등 20개 항목을 이용하여 17개 광역지자체별 차이를 분석하였음

▮ 각 항목별로 전국 평균 및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그리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당근로시간

- 전국 평균 : 37.62시간
- 전북 평균 : 38.56시간
- 최고 : 세종 40.43시간
- 최저 : 대구 36.47시간
- 17개 광역지자체중 5위

○ 주당 초과근무시간

- 전국 평균 : 0.88시간
- 전북 평균 : 0.47시간
- 최고 : 세종 1.47시간
- 최저 : 경남 0.18시간
- 17개 광역지자체중 13위

○ 주당 근로일수

- 전국 평균 : 4.85일
- 전북 평균 : 5.01일
- 최고 : 인천 5.12일
- 최저 : 경기 4.76일
- 17개 광역지자체중 5위

○ 전반적 직장만족도(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3점
- 전북 평균 : 3.61점
- 최고 : 충남 3.95점
- 최저 : 대전 3.48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2위

○ 직장만족도(업무내용)(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73점
- 전북 평균 : 3.62점
- 최고 : 울산 3.92점
- 최저 : 제주 3.42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5위

○ 직장만족도(사회적 공헌)(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48점
- 전북 평균 : 3.34점
- 최고 : 강원 3.88점
- 최저 : 제주 2.86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5위

○ 직장만족도(자기발전)(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1점
- 전북 평균 : 3.64점
- 최고 : 강원 3.88점
- 최저 : 제주 2.98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1위

○ 직장만족도(임금/수입)(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54점
- 전북 평균 : 3.41점
- 최고 : 세종 3.89점
- 최저 제주 3.33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3위

○ 직장만족도(고용안정)(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6점
- 전북 평균 : 3.52점
- 최고 : 세종 3.96점
- 최저 : 전북 3.52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7위

○ 직장만족도(자율성)(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7점
- 전북 평균 : 3.71점
- 최고 : 전남 3.88점
- 최저 : 제주 3.20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9위

○ 직장만족도(통근거리)(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74점
- 전북 평균 : 4.10점
- 최고 : 전북
- 최저 : 대구 3.61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위

○ 직장만족도(장래성)(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48점
- 전북 평균 : 3.44점
- 최고 : 울산 3.89점
- 최저 : 제주 2.85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3위

○ 직장만족도(물리적 근로환경)(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3점
- 전북 평균 : 3.63점

- 최고 : 울산 3.88점
- 최저 : 제주 3.29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2위

○ 직장만족도(인간관계)(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69점
- 전북 평균 : 3.70점
- 최고 : 충남 3.91점
- 최저 : 대전 3.49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0위

○ 직장만족도(인사고과 공정성)(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52점
- 전북 평균 : 3.37점
- 최고 : 울산 3.75점
- 최저 : 대전 3.25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6위

○ 직장만족도(복리후생)(5점 : 매우 만족)

- 전국 평균 : 3.38점
- 전북 평균 : 3.21점
- 최고 : 충남 3.76점
- 최저 : 대전 3.16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6위

○ 업무내용-자기교육수준 비교(5점 : 업무내용 수준이 아주 높음)

- 전국 평균 : 2.88점
- 전북 평균 : 2.70점
- 최고 : 세종 3.04점
- 최저 : 전북 2.70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7위

○ 업무내용-자기기술수준 비교(5점 : 업무내용 수준이 아주 높음)

- 전국 평균 : 2.85점
- 전북 평균 : 2.58점
- 최고 : 세종 : 2.98점
- 최저 : 전북 2.58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7위

○ 현재 직무 기술수준(1점 : 단순수준, 5점 : 고도수준)

- 전국 평균 : 2.98점
- 전북 평균 : 2.62점
- 최고 : 세종 3.38점
- 최저 : 전북 2.62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7위

○ 업무내용-자기전공 일치도(1점 : 전혀맞지 않다, 5점 : 아주 잘 맞다)

- 전국 평균 : 2.90점
- 전북 평균 : 2.62점
- 최고 : 충남 : 3.19점
- 최저 : 제주 2.51점
- 17개 광역지자체중 1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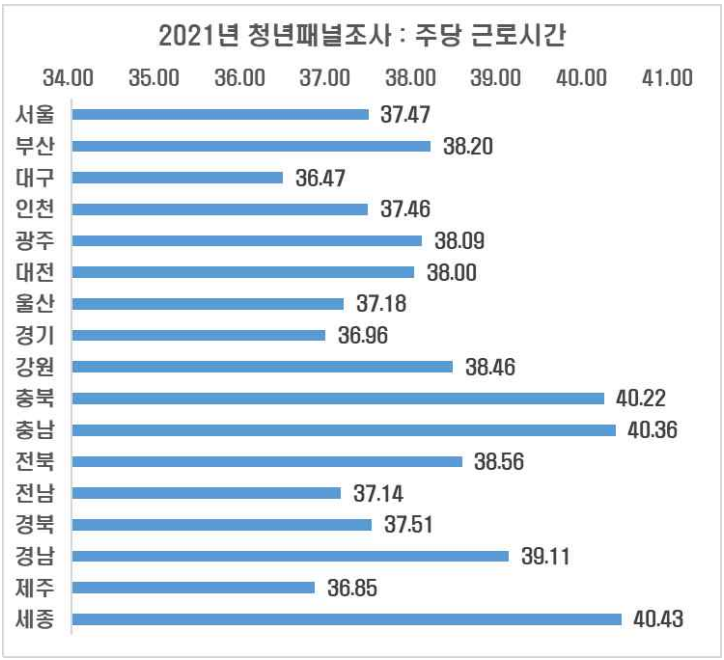
▮ 전북지역 청년근로자들이 근로여건(주당근로시간, 근로일수)는 많은 수준이고 직장만족도는 통근거리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전반적 만족도, 업무내용, 사회적 공헌, 자기발전, 임금/수입, 고용안정/자율성, 장래성, 물리적 근로환경, 인간관계, 인사고과 공정성, 복리후생 등에서 전국평균을 하회)이며, 업무내용과 본인의 역량(교육수준, 기술수준, 현재 직무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전공과의 일치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의 양은 많은 편이고 통근거리를 제외하고 임금/수입을 비롯한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본인의 업무내용 등이 역량대비 낮은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전공과의 일치도가 낮은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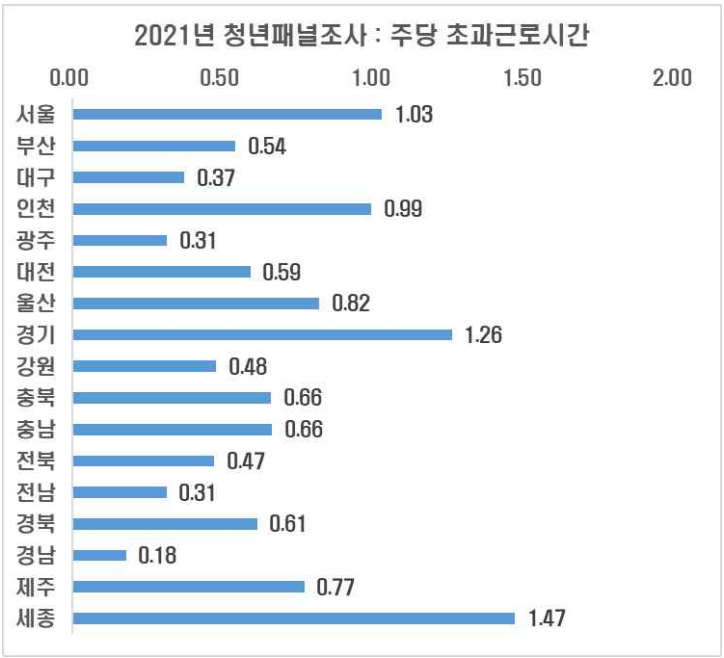
<표 2-103>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주당 근로시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7.47	11
부산	349	38.20	7
대구	269	36.47	17
대전	311	37.46	12
인천	143	38.09	8
광주	144	38.00	9
울산	116	37.18	13
경기	1,380	36.96	15
강원	68	38.46	6
충북	135	40.22	3
충남	148	40.36	2
전북	**140**	**38.56**	**5**
전남	147	37.14	14
경북	186	37.51	10
경남	202	39.11	4
제주	91	36.85	16
세종	47	40.43	1
그외지역	2	40.00	
응답거절	1	40.00	
전체	5,361	3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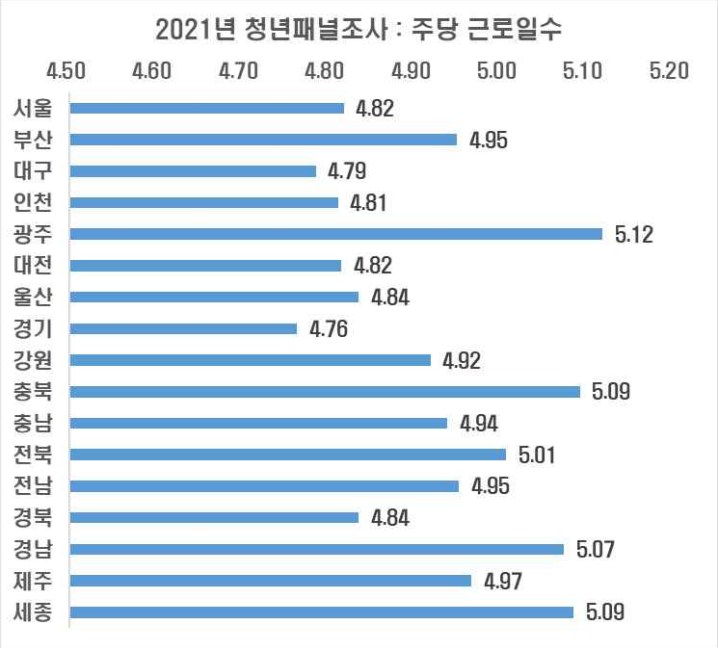
<표 2-104>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주당 초과 근로시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1.03	3
부산	349	0.54	11
대구	269	0.37	14
대전	311	0.99	4
인천	143	0.31	15
광주	144	0.59	10
울산	116	0.82	5
경기	1,380	1.26	2
강원	68	0.48	12
충북	135	0.66	8
충남	148	0.66	7
전북	**140**	**0.47**	**13**
전남	147	0.31	16
경북	186	0.61	9
경남	202	0.18	17
제주	91	0.77	6
세종	47	1.47	1
그외지역	2	0.00	
응답거절	1	0.00	
전체	5,361	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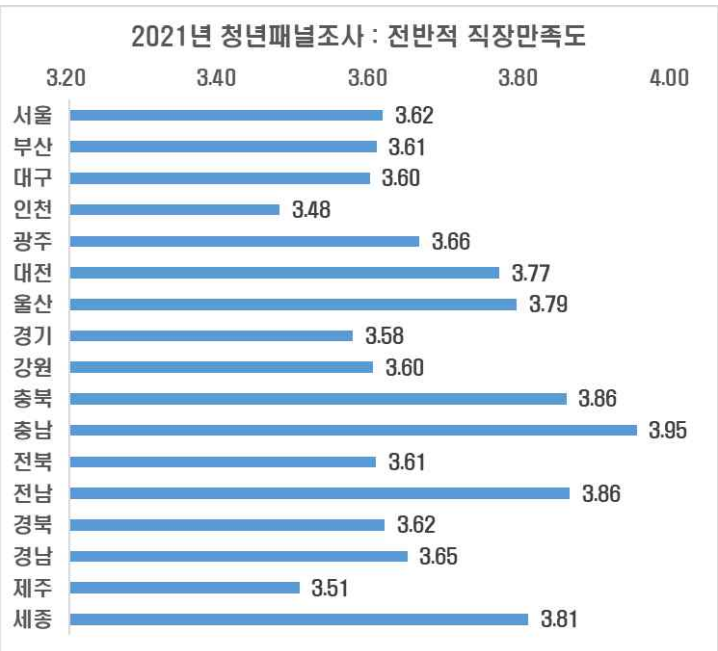
<표 2-105>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주당 근로일 수)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4.82	13
부산	349	4.95	8
대구	269	4.79	16
대전	311	4.81	15
인천	143	5.12	1
광주	144	4.82	14
울산	116	4.84	11
경기	1,380	4.76	17
강원	68	4.92	10
충북	135	5.09	2
충남	148	4.94	9
전북	**140**	**5.01**	**5**
전남	147	4.95	7
경북	186	4.84	12
경남	202	5.07	4
제주	91	4.97	6
세종	47	5.09	3
그외지역	2	5.00	
응답거절	1	5.00	
전체	5,361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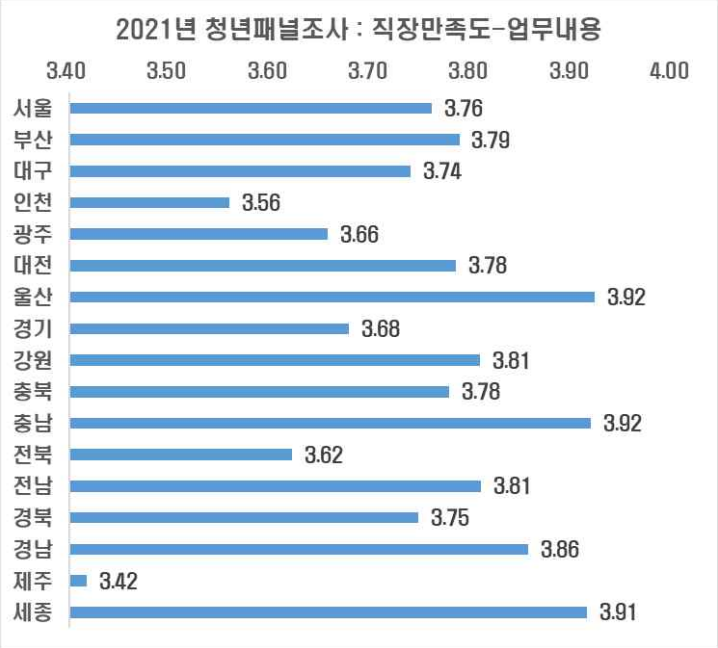
<표 2-106>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전반적 직장만족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2	10
부산	349	3.61	11
대구	269	3.60	14
대전	311	3.48	17
인천	143	3.66	7
광주	144	3.77	6
울산	116	3.79	5
경기	1,380	3.58	15
강원	68	3.60	13
충북	135	3.86	3
충남	148	3.95	1
전북	**140**	**3.61**	**12**
전남	147	3.86	2
경북	186	3.62	9
경남	202	3.65	8
제주	91	3.51	16
세종	47	3.81	4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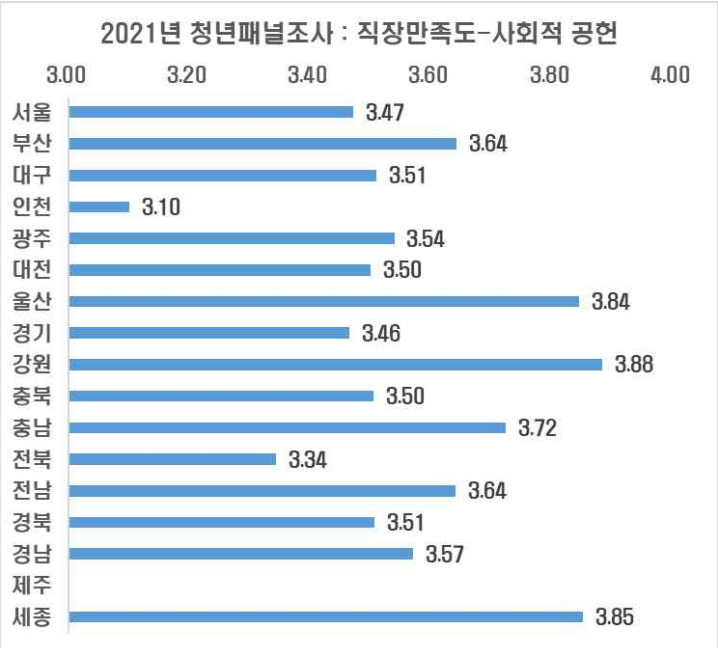
<표 2-107>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업무내용)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76	10
부산	349	3.79	7
대구	269	3.74	12
대전	311	3.56	16
인천	143	3.66	14
광주	144	3.78	8
울산	116	3.92	1
경기	1,380	3.68	13
강원	68	3.81	6
충북	135	3.78	9
충남	148	3.92	2
전북	**140**	**3.62**	**15**
전남	147	3.81	5
경북	186	3.75	11
경남	202	3.86	4
제주	91	3.42	17
세종	47	3.91	3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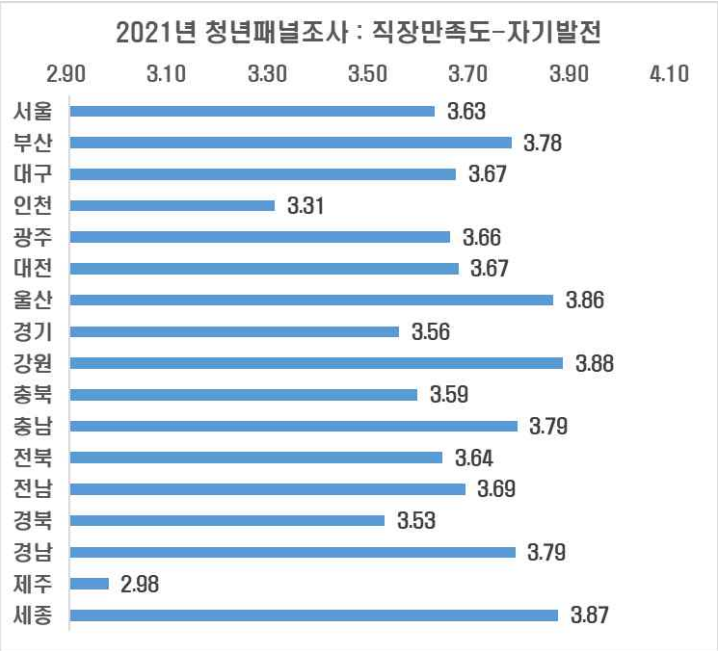
<표 2-108>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사회적 공헌)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47	13
부산	349	3.64	5
대구	269	3.51	9
대전	311	3.10	16
인천	143	3.54	8
광주	144	3.50	12
울산	116	3.84	3
경기	1,380	3.46	14
강원	68	3.88	1
충북	135	3.50	11
충남	148	3.72	4
전북	**140**	**3.34**	**15**
전남	147	3.64	6
경북	186	3.51	10
경남	202	3.57	7
제주	91	2.86	17
세종	47	3.85	2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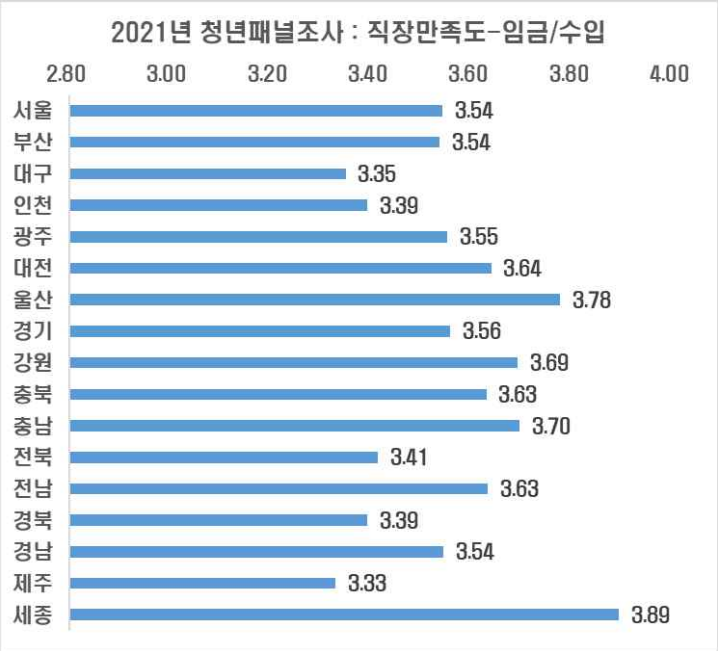
<표 2-109>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자기발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3	12
부산	349	3.78	6
대구	269	3.67	9
대전	311	3.31	16
인천	143	3.66	10
광주	144	3.67	8
울산	116	3.86	3
경기	1,380	3.56	14
강원	68	3.88	1
충북	135	3.59	13
충남	148	3.79	4
전북	**140**	**3.64**	**11**
전남	147	3.69	7
경북	186	3.53	15
경남	202	3.79	5
제주	91	2.98	17
세종	47	3.87	2
그외지역	2	5.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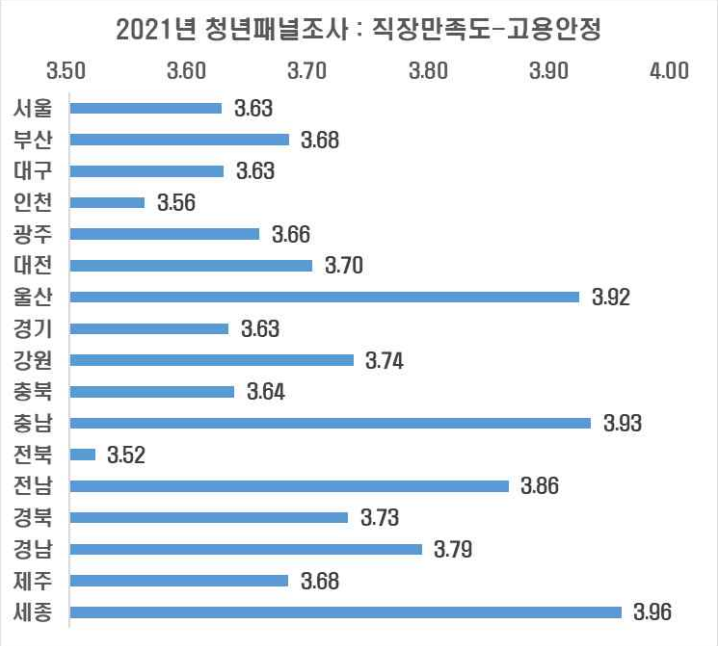
<표 2-110>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임금/수입)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54	11
부산	349	3.54	12
대구	269	3.35	16
대전	311	3.39	15
인천	143	3.55	9
광주	144	3.64	5
울산	116	3.78	2
경기	1,380	3.56	8
강원	68	3.69	4
충북	135	3.63	7
충남	148	3.70	3
전북	**140**	**3.41**	**13**
전남	147	3.63	6
경북	186	3.39	14
경남	202	3.54	10
제주	91	3.33	17
세종	47	3.89	1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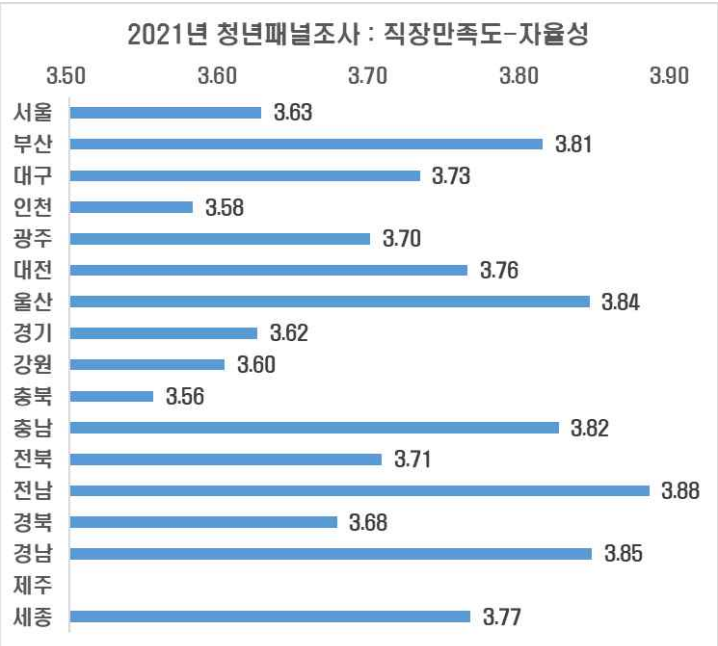
<표 2-111>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고용안정)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3	15
부산	349	3.68	9
대구	269	3.63	14
대전	311	3.56	16
인천	143	3.66	11
광주	144	3.70	8
울산	116	3.92	3
경기	1,380	3.63	13
강원	68	3.74	6
충북	135	3.64	12
충남	148	3.93	2
전북	**140**	**3.52**	**17**
전남	147	3.86	4
경북	186	3.73	7
경남	202	3.79	5
제주	91	3.68	10
세종	47	3.96	1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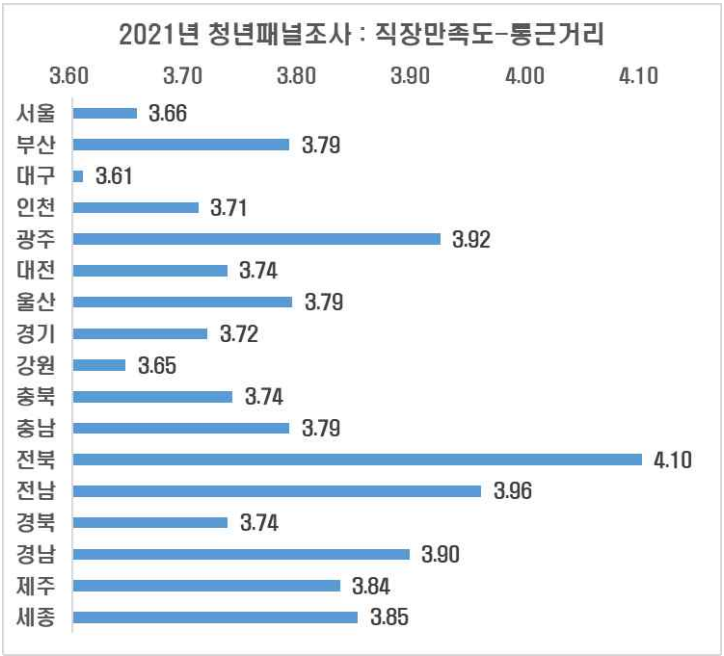
<표 2-112>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자율성)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3	12
부산	349	3.81	5
대구	269	3.73	8
대전	311	3.58	15
인천	143	3.70	10
광주	144	3.76	7
울산	116	3.84	3
경기	1,380	3.62	13
강원	68	3.60	14
충북	135	3.56	16
충남	148	3.82	4
전북	**140**	**3.71**	**9**
전남	147	3.88	1
경북	186	3.68	11
경남	202	3.85	2
제주	91	3.20	17
세종	47	3.77	6
그외지역	2	4.5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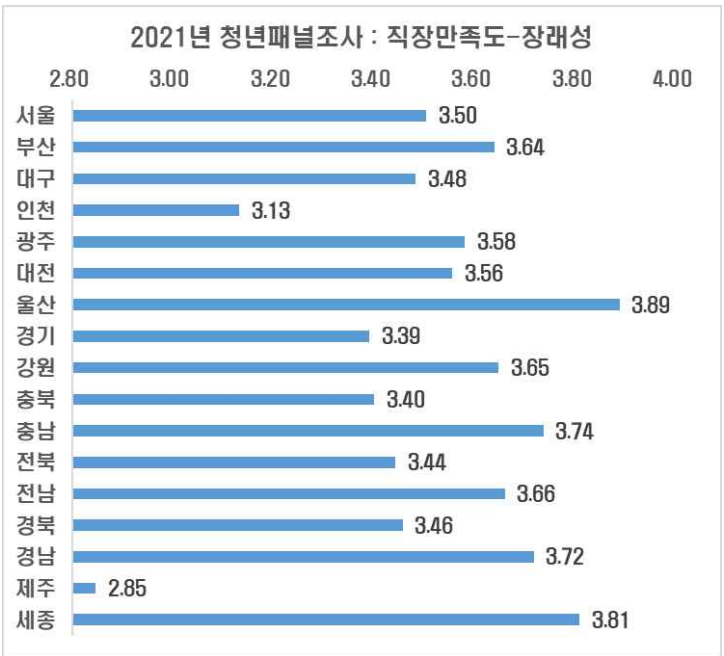
<표 2-113>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통근거리)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6	15
부산	349	3.79	8
대구	269	3.61	17
대전	311	3.71	14
인천	143	3.92	3
광주	144	3.74	12
울산	116	3.79	7
경기	1,380	3.72	13
강원	68	3.65	16
충북	135	3.74	10
충남	148	3.79	9
전북	**140**	**4.10**	**1**
전남	147	3.96	2
경북	186	3.74	11
경남	202	3.90	4
제주	91	3.84	6
세종	47	3.85	5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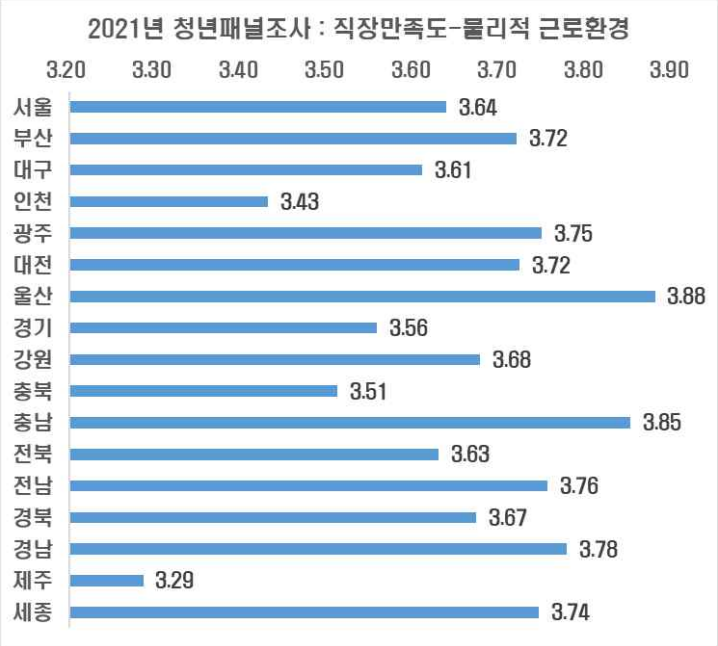
<표 2-114>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장래성)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50	10
부산	349	3.64	7
대구	269	3.48	11
대전	311	3.13	16
인천	143	3.58	8
광주	144	3.56	9
울산	116	3.89	1
경기	1,380	3.39	15
강원	68	3.65	6
충북	135	3.40	14
충남	148	3.74	3
전북	**140**	**3.44**	**13**
전남	147	3.66	5
경북	186	3.46	12
경남	202	3.72	4
제주	91	2.85	17
세종	47	3.81	2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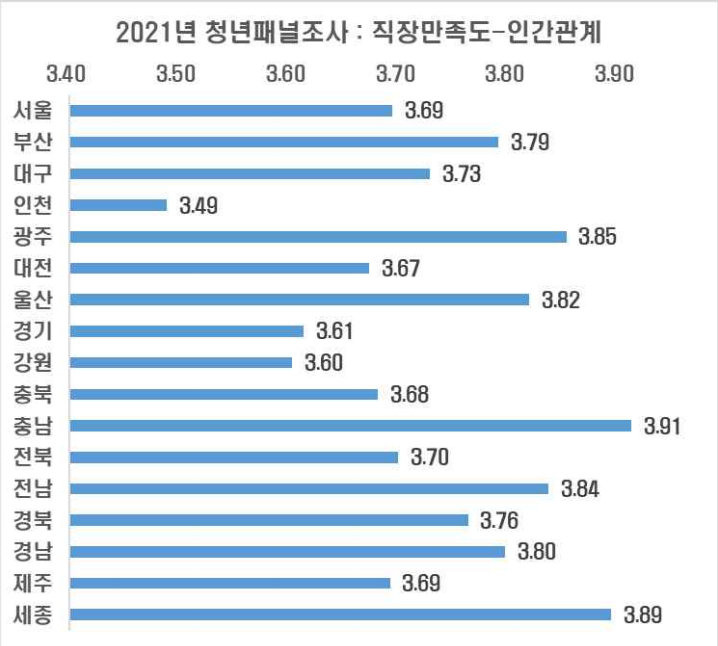
<표 2-115>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물리적 근로환경)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4	11
부산	349	3.72	8
대구	269	3.61	13
대전	311	3.43	16
인천	143	3.75	5
광주	144	3.72	7
울산	116	3.88	1
경기	1,380	3.56	14
강원	68	3.68	9
충북	135	3.51	15
충남	148	3.85	2
전북	**140**	**3.63**	**12**
전남	147	3.76	4
경북	186	3.67	10
경남	202	3.78	3
제주	91	3.29	17
세종	47	3.74	6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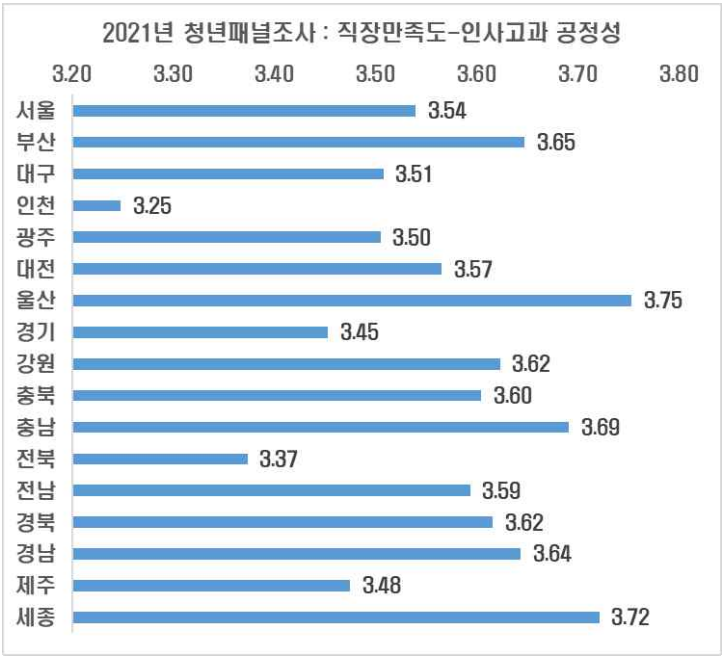
<표 2-116>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인간관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69	11
부산	349	3.79	7
대구	269	3.73	9
대전	311	3.49	17
인천	143	3.85	3
광주	144	3.67	14
울산	116	3.82	5
경기	1,380	3.61	15
강원	68	3.60	16
충북	135	3.68	13
충남	148	3.91	1
전북	**140**	**3.70**	**10**
전남	147	3.84	4
경북	186	3.76	8
경남	202	3.80	6
제주	91	3.69	12
세종	47	3.89	2
그외지역	2	4.5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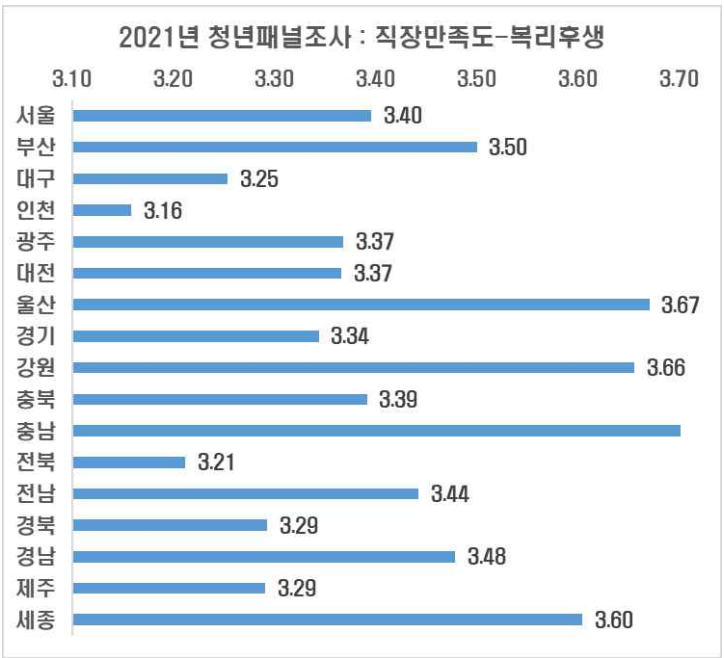
<표 2-117>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인사고과 공정성)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180	3.54	11
부산	238	3.65	4
대구	199	3.51	12
대전	254	3.25	17
인천	105	3.50	13
광주	115	3.57	10
울산	85	3.75	1
경기	1102	3.45	15
강원	61	3.62	6
충북	91	3.60	8
충남	123	3.69	3
전북	**67**	**3.37**	**16**
전남	123	3.59	9
경북	164	3.62	7
경남	143	3.64	5
제주	80	3.48	14
세종	43	3.72	2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4,176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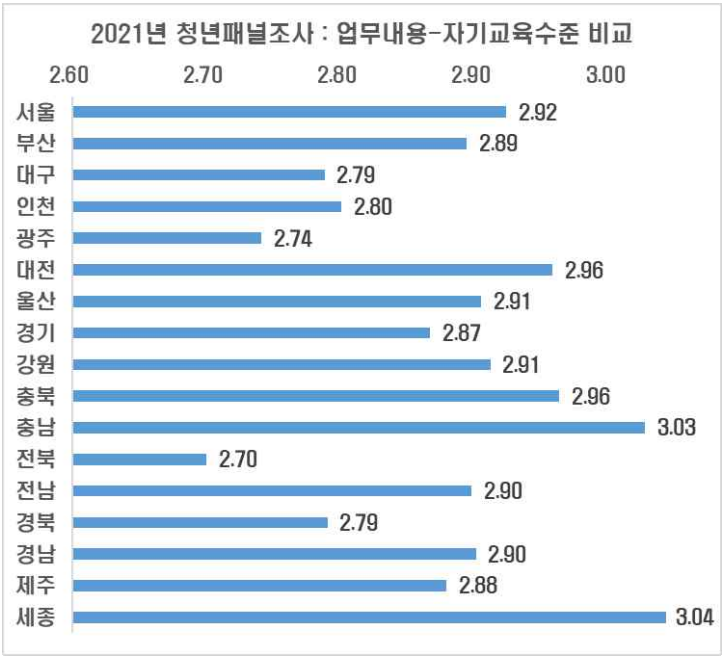
<표 2-118>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직장만족도 : 복리후생)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167	3.40	8
부산	240	3.50	5
대구	197	3.25	15
대전	259	3.16	17
인천	106	3.37	10
광주	112	3.37	11
울산	85	3.67	2
경기	1,100	3.34	12
강원	61	3.66	3
충북	92	3.39	9
충남	123	3.76	1
전북	**66**	**3.21**	**16**
전남	122	3.44	7
경북	164	3.29	13
경남	142	3.48	6
제주	79	3.29	14
세종	43	3.60	4
그외지역	2	4.00	
응답거절	1	3.00	
전체	4,161	3.38	



<표 2-119>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업무내용-자기교육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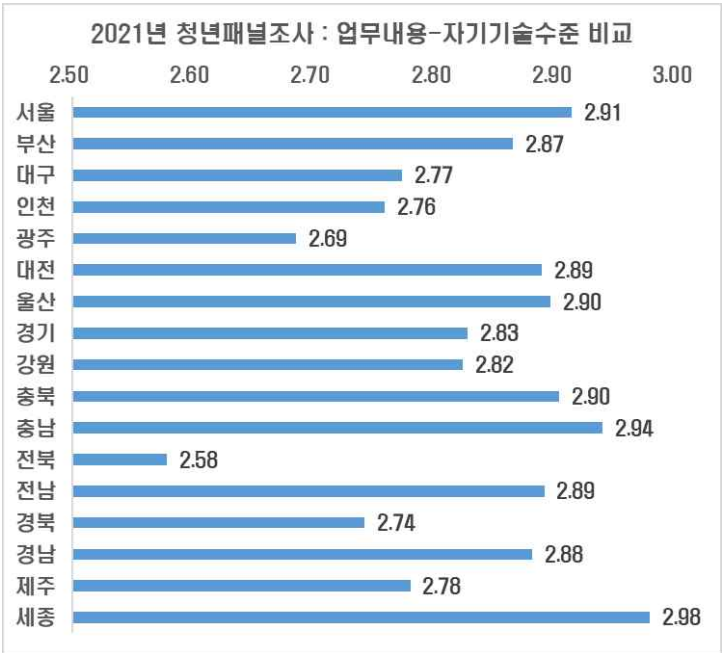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2.92	5
부산	349	2.89	10
대구	269	2.79	15
대전	311	2.80	13
인천	143	2.74	16
광주	144	2.96	4
울산	116	2.91	7
경기	1,380	2.87	12
강원	68	2.91	6
충북	135	2.96	3
충남	148	3.03	2
전북	**140**	**2.70**	**17**
전남	147	2.90	9
경북	186	2.79	14
경남	202	2.90	8
제주	91	2.88	11
세종	47	3.04	1
그외지역	2	3.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2.88	



설문내용 :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응답기준 : 1점 수준이 아주 낮다, 5점 : 수준이 아주 높다

<표 2-120>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업무내용-자기기술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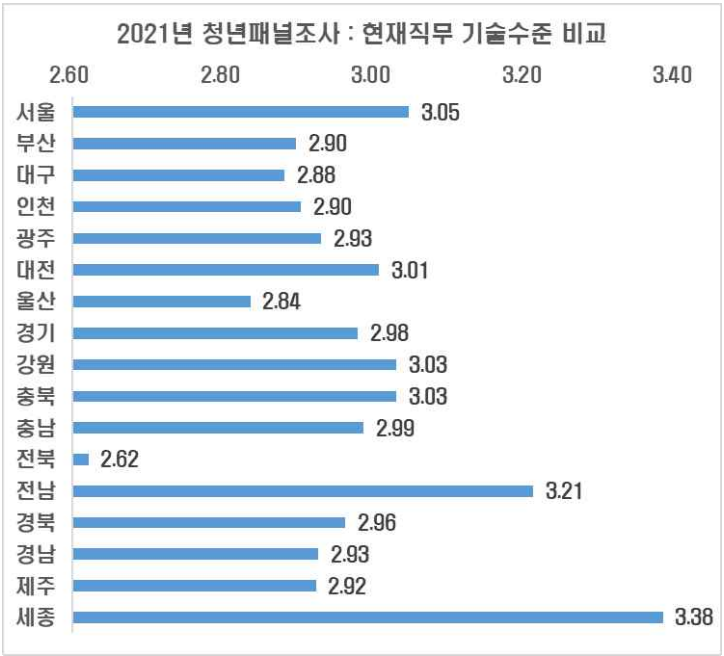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2.91	3
부산	349	2.87	9
대구	269	2.77	13
대전	311	2.76	14
인천	143	2.69	16
광주	144	2.89	7
울산	116	2.90	5
경기	1,380	2.83	10
강원	68	2.82	11
충북	135	2.90	4
충남	148	2.94	2
전북	**140**	**2.58**	**17**
전남	147	2.89	6
경북	186	2.74	15
경남	202	2.88	8
제주	91	2.78	12
세종	47	2.98	1
그외지역	2	3.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2.85	



설문내용 :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기술(기능)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응답기준 : 1점 수준이 아주 낮다, 5점 : 수준이 아주 높다

<표 2-121>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현재 직무 기술수준)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05	3
부산	349	2.90	14
대구	269	2.88	15
대전	311	2.90	13
인천	143	2.93	10
광주	144	3.01	6
울산	116	2.84	16
경기	1,380	2.98	8
강원	68	3.03	5
충북	135	3.03	4
충남	148	2.99	7
전북	**140**	**2.62**	**17**
전남	147	3.21	2
경북	186	2.96	9
경남	202	2.93	11
제주	91	2.92	12
세종	47	3.38	1
그외지역	2	3.00	
응답거절	1	3.00	
전체	5,361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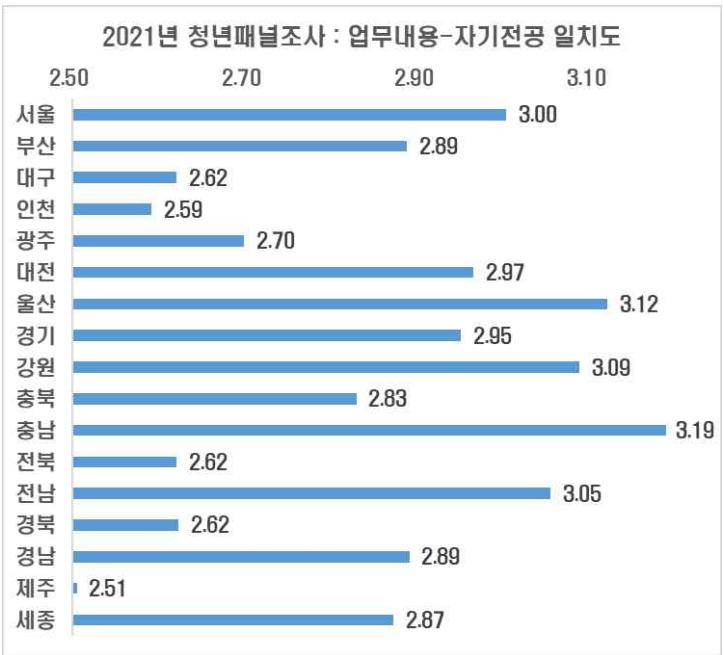


설문내용 :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기능)수준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기준 : (1) 단순 수준, (2) 저숙련수준, (3) 통상 수준, (4) 숙련수준, (5) 고도수준

<표 2-122> 2021년 청년패널조사 : 지역별 차이 분석(업무내용-자기전공 일치도)

구분	표본	평균	순위
서울	1,482	3.00	5
부산	349	2.89	9
대구	269	2.62	15
대전	311	2.59	16
인천	143	2.70	12
광주	144	2.97	6
울산	116	3.12	2
경기	1,380	2.95	7
강원	68	3.09	3
충북	135	2.83	11
충남	148	3.19	1
전북	**140**	**2.62**	**14**
전남	147	3.05	4
경북	186	2.62	13
경남	202	2.89	8
제주	91	2.51	17
세종	47	2.87	10
그외지역	2	3.50	
응답거절	1	4.00	
전체	5,361	2.90	



설문내용 :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응답기준 : 1점 전혀 맞지 않다 5점 : 아주 잘 맞다

제3장

청년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청년정책 현황

제2절 청년정책 국외사례

제3절 청년정책 국내사례

제3장 청년정책 및 사례분석

제1절 청년정책 현황

1. 중앙정부 청년정책

▌ 중앙정부에서는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정책의 주요 방향

○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이념(법 제2조) 구현을 위해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및 확정을 거쳐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청년기본법 제2조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청년정책의 핵심은 '고용'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를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중임

- 지금까지 청년 정책은 일자리 중심에서 탈피하여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부 한계가 드러남
-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고용촉진을 통해 실업 및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음
- 비정형, 비임금 노동 등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19 및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사회적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의 다양한 수요 및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이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사회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범위로 확대됨

- 지난 2020년 수립된 「제1차 청년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영역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 법·제도적 인프라 : 청년기본법

○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갖춤

- 청년기본법 제정 논의는 2018년 청년기본법(안)에 대한 합의안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추진을 설립하여 청년정책의 총괄 관리를 진행
-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 추진단은 정책정책 추진 사무국 역할을 수행

○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에 제정된 청년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조례가 부재한 지방정부에서는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추진됨

- 「청년기본법」 이후 지방정부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진행된 청년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긍정적임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함께 청년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의 주요 목적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②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③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④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표 3-1> 중앙정부의 인구감소대응 및 청년지원 관련 법률

구분	법률	내용	비고
인구감소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보건복지부)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 - 저출산대책: 적정 인구정책, 인구교육, 자녀출산 보육, 모자보건증진 등 - 고령사회정책: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등	- 국가인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저출산 시책 규정 - 국가차원의 정책 - 기본법 형식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부, 기재부)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 - 주요시책: 지역혁신체계 구축,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등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지원 규정 - 지역 인구감소, 인구격차 등을 대비한 규정은 미비 - 국가차원의 정책 - 특별법 형식
지방이주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부, 해수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어 초기 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 추진, 창업 주택구입 지원,낙후지역 귀농어업인 귀촌인 우대지원 등	- 농어촌 인구유입 초점 - 개인별 지원사항 위주, 농어업인 위주의 지원 규정
청년고용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직업능력개발, 취업기회보장,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	- 지방인구유입과 관련 없음 -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 직업지도 및 고용지원 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 - 고용확대, 직장체험기회제공,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운영·제공,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직업능력개발 등	
기본권보장	청년기본법 (국무조정실)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 지방인구유입과 관련 없음 - 청년의 기본권 보장, 존중, 사회경제적 지원 규정

자료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 98의 <표 3-8>

<표 3-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법 조항	세부 내용
청년의 정의 (제3조)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	-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8조)	-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 실태조사 (제11조)	-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2조)	-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제15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제16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청년 권익증진 주요 시책 (제4장, 제17조~24조)	-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지원, 청년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복지증진, 청년금융생활 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청년국제협력 지원

자료 : 청년기본법(2022.1.13. 시행, 법률 제17893호) 각조

▮ 법·제도적 인프라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지난 2004년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2008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으나, 청년실업 문제가 계속되어 2010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명칭 수정되어 2018년 말 종료예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쳐 2026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 목적 :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동법 제 3조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직업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
-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협조,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함을 의무로 규정
- 정부의 고용지원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의 소요 비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추가 고용할 경우의 소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 청년정책 기본계획(1차, 2021~2025)의 주요 내용

○ 제1차 청년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청년이 단순한 중간세대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주역이 되기 위한 선제적 사회투자 개념에서 시작하여 중장기 보편정책으로 추진

- 청년참여·주도 활성화 + 보편적 정책 확대로 안정적 이행지원 강화
  - (참여·주도) 청년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자율 활동의 토대 구축의 방향 설정
  - (보편성 확대) 이행 전주기에 걸쳐 모든 청년이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청년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 극복 + 중장기 투자」 정책 조합으로 시의성·지속성 확보
  - (비상대책) 청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노동시장 진입 3중고 직면 예상→ 단기

일자리 한시적 확대 등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 긴요

- (중장기) 청년이 미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전략적 집중

- 중장기 국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청년정책 균형발전 추진
  - (연계)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보장 계획 등에서 청년이 정책대상으로 부각 → 효율적 재원배분 위해 중장기 국정계획과 정합성·연계성 강화
  - (균형) 청년기본법 시행('20.8.5)으로 지역균형 청년정책이 공식 의제화 → 청년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청년정책 격차 축소 추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희망이 있는 청년이 살고 싶은 나라'라는 비전 하에 생활지원,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제1차 청년기본계획의 세부과제 특징은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보장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지원분야를 세분화하여 전 영역 촘촘한 지원체계와 전략 제시
- 다만, 전영역이 하나의 부서 및 조직단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실제 청년정책에 대한 효과 체감도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포괄적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필요
- 또한, 지방정부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들과의 연계, 정책 상승효과에 대한 세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

○ (1) 일자리 분야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재직자 지원강화
  - 취업역량 제고 지원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청년 노동권익 보장
-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2) 주거분야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고시원·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
  •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 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
  • 청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 (3) 교육 분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 미진학 청년 교육비 지원
  •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혁신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
  •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확대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지역인재 양성 직업교육 지원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
  -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 (4) 복지·문화 분야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청년건강 증진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보호종료청년 지원 강화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빈곤청년 근로인센티브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
  - 청년 문화 활동 기반 강화
  - 청년 예술가 및 청년창작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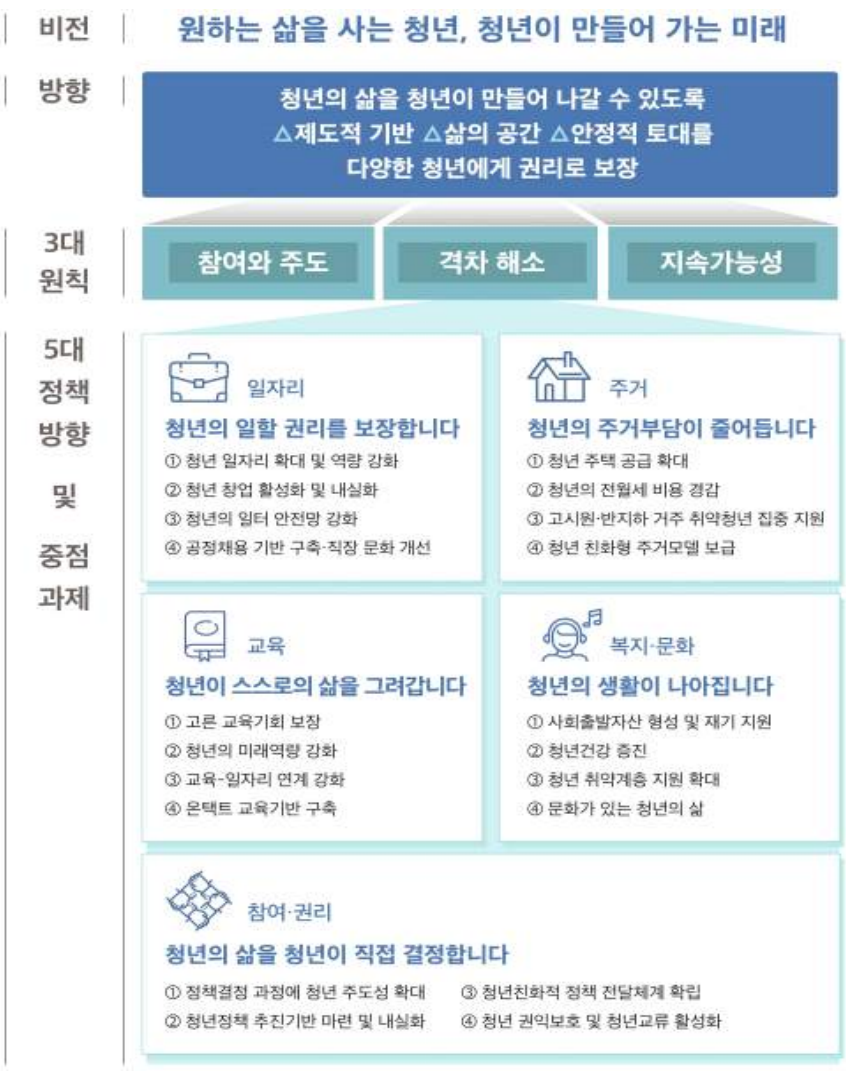
○ (5) 참여·권리 분야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
  - 청년이 열어가는 공론장과 거버넌스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 정부-민간 Two-Track으로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구축
  - 청년지표(Youth Life Index) 개발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하나로’(온라인), ‘청년마당’(오프라인) 구축·확대
-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그림 3-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p.7.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3.23)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마련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22.2.8)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2.2.14)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 ‘21.3.23)
- 2022년(20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 발표(국무조정실, ’22.6.30.)
-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마련 및 제출(‘23.1.31)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의결(’23.3.24)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수립(’23.3.29)
-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안) 마련 및 제출(’24.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3.11) 및 관계부처 설명(’23.12)
- 시행계획(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24.3.29)

○ 2023년 청년정책 추진평가

- ‘청년’을 정부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희망·공정·참여 기조 하에 청년들의 현실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
- 정부위원회 청년참여 의무화,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개정으로 정책추진 법적 기반 강화

○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역대정부 최고 청년고용률 및 최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취업, 자산형성, 일상 전반에 걸쳐 청년 삶 제약 요소 상존
  - (일자리) 기업은 경력·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가운데 체계적인 진로탐색·실무경험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직장 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 ’쉬었음‘ 청년 약 40만 명
  - 취업 준비 애로 사유 : 경력직 선호(26.3%), 실무경험 기회 부족(17.2%) (’23년, 한경협)

- (자산) 청년들의 자산형성 욕구는 높으나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 → 위험자산 투자 확대 및 생활고 차원의 부채 증가
-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15년) 16.8% → ('23년) 32.1% (전연령대 중 1위)
- (일상) 고물가·고금리로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청년 우울증, 번아웃 등 마음건강 악화

➡쉬었음 청년 최소화 및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빈틈없는 취업지원, 체계적인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주거·생활 걱정 해소 등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 청년 삶 개선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 추진

- (과제 제외) 코로나19 해소, 대체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 종료·통폐합*, 청년 삶 개선과 관련이 낮은 전 연령 대상 사업** 등 제외

  * 청년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희망적금 등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댐유지·관리 등
- (지원 확대) 일경험 기회 등 청년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연계 강화)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연계를 강화*해 효과성 증대

  * 군장병 및 가구소득 250%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연계 등

➡ '23년도 390개 사업에서 '24년도 356개 사업으로 개편하여 집중 지원

<표 3-3> 2024년 청년정책 과제 개수 및 예산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제(개)	308	376	390	356
예산(조원)	23.8	24.6	25.4	27.0

<표 3-4> 2024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추진목표

분야	기본계획 수정(~'25)	2023년 시행계획	2024년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청년 일경험 8.4만명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공 일경험 확대 ·「공정채용법」전면개정 추진	·청년 일경험 10만명 지원 ·15만명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주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청년 43.5만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주택 11.3만호 공급 * 분양 5.3 + 임대 6.0만호 ·청년 대상 초장기 모기지(최대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교육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 *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등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역할 강화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지역대학-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양성
복지·문화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취약청년 긴급자금 : '25년까지 1조원 지원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도약계좌 신설('23.6) 및 청년병사 목돈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체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건 완화 등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지
참여·권리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지정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대폭 확대(現 9개부처 → 장관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시스템 운영 ·청년지표 신규 개발 및 청년친화도시지정을 위한 방안·매뉴얼 마련	·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 ·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지정·운영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청년친화도시 지정(3~5개)

<표 3-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개) 및 청년예산

(단위 : 개, 억원)

분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합계	356	246,493	254,178	270,459	
Ⅰ. 일자리	124	77,496*	58,344	58,854	21.7
* 코로나19 한시사업 감소(17,374억) 및 내일채움공제 감소(6,696억) 제외시 53,425					
Ⅱ. 주거	28	88,380	104,201	115,911	42.9
Ⅲ. 교육	117	67,523	70,960	75,378	27.9
Ⅳ. 복지·문화	44	12,219	19,786	19,083	7.0
Ⅴ.참여·권리	43	874	888	1,223	0.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1) 일자리분야

○ 청년고용 지원제도 다각화 및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 지원

- 맞춤형 구직 지원 강화 및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공정 채용과 합리적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 예방

가. 청년 취업역량 강화

① 민관협업을 통한 취업역량 제고 지원

- 민간·공공분야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을 연간 10만명 이상 지원('23 8.4만명)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

- AI·반도체 등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산업·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주도의 청년 맞춤형 훈련 지원

②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직 청년에 대한 채용지원 및 청년채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급 강화
-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제고 위해 취업 인센티브(최대 100만원) 신설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도입 등으로 청년고용 촉진 유도 지속

나.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

① 청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등 신시장 진출

② 농림어업분야 창업지원 강화하고, 식품·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창업 지속 지원

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

①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정채용문화 확산

- 기업 대상 공정채용 1:1 상담창구 마련,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200개 기업) 및 공정채용 이해 제고를 위한 CEO 교육 신설(고용부)
- 채용절차법 위반 점검(1,200개소)하고, 불법적인 채용취소, 해고 등으로 피해받은 청년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70건 이상)(고용부)

- ○ 공공부문 채용절차 개선 및 비위 근절

-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24.2월~10월)(권익위)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신고 사건은 엄정조치하고, 공정채용 전문교육 및 사규 컨설팅 통해 채용비리 예방(권익위)

②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 청년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확산

- 청년 선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선택·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시행하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24년 427억원)(고용부)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500개소)하고 선정기업 관리 강화,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및 서포터즈 지원 확대(고용부)

- ○ 일·가정 양립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법개정 지속**(고용부)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제출('23.10.5.)

-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 청년세대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적응을 도모하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처우개선, 청년특화 국외훈련, 멘토링 등 진행(인사처)

라.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및 노동권익 보장

①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 방과후강사('24.1~), 관광통역안내원('23.7~) 등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직종을 확대하여 산업 재해로부터 청년을 촘촘하게 보호(고용부)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기존 표준계약서 실태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한 규정 등 개선 유도(고용부)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중소IT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청년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규모사업장(30인 미만) 대상으로 노동질서 확립 위한 현장 예방 활동(고용부)
  -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점검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고용부)
  - 청년층 다수 종사 기업(IT·제조업 등)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권리구제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청년 보호
  - 유튜브 쇼츠 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로 상호존중 직장문화 인식 확산 및 현장의 자율적 개선 유도
- ○ 청년들의 구직 단념 사전 예방 및 직장 적응 지원(고용부)
  - 직장 적응 및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4만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장 이탈 및 실업 장기화 예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및 신입직원(청년) 대상 직장 적응지원 교육 제공

  ** 미취업 청년 등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필요한 청년고용정책 연계
-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여가부)
  -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70회 이상), 교육 사각지대 청년 대상 홍보로 참여 유도

  *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고3 예비사회인, 취업준비생,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사회초년생 등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우선 지원

<표 3-6>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일자리 분야 주요사업

구분	주요사업(부처)	주요내용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고용부)	- 기업과 협업하여 실전형 프로젝트,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원 · ('23) 2.0만명 - ('24) 4.8만명
	중앙부처 청년인턴 확대 (국조실)	- 중앙부처 청년인턴 : ('23) 2천명 → ('24) 5천명 · 진로상담·역량 개발 등 취업서비스 연계 제공('24.3.5. 청년 민생토론회)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기재부)	- 공공기관 청년인턴 : ('23) 2만명 → ('24) 2.2만명
	부처별 특화 일경험 지원(5개 부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도시재생청년인턴십 등 ('23) 3.8만명→('24) 7.3만명
첨단·신산업분야	K-디지털트레이닝 (고용부)	-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인재 양성 · 확대 시행 ('23) 3.6만명 → ('24) 4.4만명
	K-디지털플랫폼 (고용부)	-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등에게 다양한 훈련 제공 및 시설 공유 · ('23) 35개소 → ('24) 55개소 운영
	에코 스타트업 창업 지원 (환경부)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성장 지원 ·('23) 155개 → ('24) 210개
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부)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인건비(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 9만명 → ('24) 12.5만명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고용부)	-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료 50% 지원 · ('24, 신규) 242억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부)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지급 · ('24, 신규) 24,800명
구직단념 청년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고용부)	-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원인원) ('23) 8천명 → ('24) 9천명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3) 최대 300만원 → ('24) 최대 350만원(취업인센티브 50만원 신설)
아이디어 발굴	창업경진대회 (10개부처) (도전! K-스타트업)	- 유망한 창업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경연 대회 · 후속 연계지원 대상 확대 ('23) 2팀 → ('24) 6팀 ·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중심대학 기반 클럽리그 강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과기부)	- ICT 분야 민·관·지역 합동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및 선정기업 후속지원(네트워킹 등) 강화 · 선정기업 규모 : ('23) 28개 → ('24) 30개

구분	주요사업(부처)	주요내용
교육·사업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중기부)	- 생애 최초 창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사업화 자금, 멘토강화 및 팀빌딩 등 지원 · ('23) 120명, 79억원 → ('24) 78명, 51억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 민간주도형 청창사 : ('23) 4개소 → ('24) 5개소 · 지역 주요 거점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기업(구글, 엔비디아 등) 간 협업프로그램 신설
	창업중심대학 (중기부)	-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 지정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3) 9개 대학, 750개사 → ('24) 9개 대학, 750개사 * 지원기업 중 40% 내외로 청년창업기업 지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자는 사업화자금 연계 지
	글로벌 창업 (중기부)	- 글로벌 수준 기술교육과 창업기획자 네트워킹 패키지 지원 · 사업화 지원한도 확대(0.5억원 → 1.5억원) 및 글로벌 VC 등을 활용한 현지보육 강화 ▸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현지 액셀러레이팅,현지 진출 지원금 등 지원 · ('23) 140개사, 99억원 → ('24) 140개사, 99억원
	팁스 TIPS (중기부)	-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 · 지원기업 확대 ('23) 720개사 → ('24) 900개사 * 청년을 포함한 TIPS 프로그램 전체 지원규모 ·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 받은 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팁스 시범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중기부)	- 제조 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의 장비·시설 활용 등 지원 · 기 선정된 스페이스 : ('23) 163개 → ('24) 109개 · 컨소시엄형 스페이스('23신설) : ('23) 5개 → ('24) 5개
자금·벤처투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중기부)	-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 융자(2억원) 지원 · ('23) 2,316개사 → ('24) 3,000개사
	청년창업펀드 (중기부)	- 청년창업기업 벤처투자 펀드 운영 규모 확대 · ('23) 967억원 조성 → ('24) 667억원 추가 조성
	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중기부)	-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 · 보증규모 확대 ('23) 5,000억원 → ('24) 6,000억원

구분	주요사업(부처)	주요내용
재창업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중기부)	-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 → 사업화자금 및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 ('23) 43명 → ('24) 113명
농림어업	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 (농식품·해수부)	-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 · 영농 : ('23) 4천명, 551억원 → ('24) 5천명, 957억원 · 영어 : ('23) 225명, 27억원 → ('24) 290명, 35.6억원
	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 농지 매입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매입 지원 · ('23) 20ha, 81.6억원 → ('24) 40ha, 171.2억원
	(신규) 산림산업 창업지원 (산림청)	-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 ('24) 850명, 17억원
식품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역량 증진 및 사업화 능력 제고 · ('23) 55팀, 11.2억원 → ('24) 55팀, 11.2억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 외식창업 희망 청년에게 실제 창업 전 사업장 운영기회 제공 · ('23) 7개소, 10.4억원 → ('24) 4개소, 7.6억원
문화 콘텐츠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 (과기부)	- 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 · ('23) 5개소, 300팀 → ('24) 5개소 300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문체부)	- 전통문화산업에 특화된 예비 및 초기창업 지원 · ('23) 115팀 → ('24) 95팀
	게임기획 지원 (문체부)	-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지원, 컨설팅 등 · ('23) 40개사 → ('24) 45개사

(2) 주거분야

○ 청년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택 구입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청년 공공임대·공공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 연합기숙사 확대, 기숙사비 카드결제 및 분할납부 본격 추진

가. 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①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23년 5.3만호→'24년 6.1만호)

-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공급하고, 나눔형·선택형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장 40년 만기의 저금리 전용 모기지 지원(국토부)

② 수도권, 교통 등 우수입지 중심으로 공공임대 공급('24년 5.1만호)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역세권·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국토부)

③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카드·분할 납부 확대

-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국립대 기숙사 확충(부산대·금오공대) 및 도심내 국·공유 부지 활용해 연합기숙사 건립(4건)(교육부)
- 기숙사비 카드 결제 및 현금 분할납부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 신설('25~)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교육부)

나. 전월세 비용 경감

- ① 부모와 별도거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7천 가구)(국토부)

  * 선정기준 확대(기준중위소득 '2347→'2448% 이하) 및 기준임대료 최대 1.1~2.7%(급지·가구원수 고려) 인상

② 청년 주거비용 부담 완화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확대한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24.2)하고 군장병도 가입 허용(국토부)

  * ① 소득요건 3.6 → 5천만원 ② 세대주 요건 폐지 ③ 우대금리 1.5%p→1.7%p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주택드림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지원('25)(국토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낮은 금리

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 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연장('24~'26)해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에게 월 20만원까지 월세 지원(13만명)(국토부)
- 보증부 월세대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중기청년 전세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 등 청년전용 전·월세 저리대출 지원(13만 가구)(국토부)

  * (요건) 보증금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35백만원 → 45백만원

  ** (현재)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 가산 → (개선) 연장 1회 시 미적용
-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게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대폭 강화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1명당 0.2%p)
- 주택을 원활히 임차할 수 있도록 청년전용 전·월세자금 보증(전세 2억, 월세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 정책모기지(40, 50년 만기) 지속 공급(금융위)

다. 주거 취약청년 지원

① 고시원·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

-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지속 확대(50개 이상 지자체)하고, 이사비 지원(40만원)(국토부)
-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2,000호 우선공급하고, 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 등 고려해 맞춤형 주거상담 서비스 지원(국토부)

② 취약 주거지 근본적 개선

- 불법 대수선(가구분할, 일명 '방쪼개기') 방지를 위해 현장조사 거부 시과태료 신설, 이행강제금 상향하도록 「건축법」개정 추진(국토부)

③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

- 원룸 등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주택의 부당한 관리비 표시 및 허위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공인중개사 규정 준수여부 단속·점검(국토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신청·접수부터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 구축(국토부)
  - * 다가구, 신탁사기, 근생빌라 임차인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제공 등

라.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 공유주택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청년·대학생 등 1인 가구 맞춤형 공유주택 공급 유도(40호)(국토부)
- 5개 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 및 지역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융합특구 기본·실시계획 수립 지속 지원(국토부)
- 청년층 등의 지역 이전 및 정착을 위해 주거·생활 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확대(10개 지자체 선정)(국토부)

<표 3-7>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주거분야(청년주택 공급 확대) 주요사업

유형			사업개요	목표 공급규모(단위 : 만호)
공공분양 뉴:홈				6.1
나눔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선택형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임대거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	
일반형			-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	
통합 공공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	1.2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	0.2
		청년특화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0.1
매입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	1.4
	특화주택	청년 역세권	-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 세부 유형별 공급물량은 공급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역세권 리모델링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	
전세임대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대상, 입주자부담 100~200만원	1.05
공공지원 민감임대			-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대상, 임대료 주변시세 약85% 주택 공급	0.9

<표 3-8>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주거분야(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중위 47%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 본인소득 중위 60% 이하
지원내용	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 중위 30% 이상은 자부담 有	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기수혜자도 가능

<표 3-9>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주거분야(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중기청년 전세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조건	대출한도 2억원 대출금리 1.8~2.7%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1.5%	보증금 4,500만원, 1.3% 월세 50만원, 0~1%

<표 3-10>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주거분야(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요건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5억 이하
금리/한도	1.6~3.3%/5억원	1.1~3.0%/3억원

(3) 교육분야

○ 미래 핵심역량 및 산업·지역 수요 중심 교육 강화

- 국가장학금 확대 등 모든 청년에게 고른 교육기회 보장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와 함께 경력개발·진로탐색까지 폭넓게 지원

가. 청년 미래역량 강화

① 국가 인재양성 기반 강화

-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정책목표, 규제 개선사항 등을 담은 '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시안)' 수립('24.上)(교육부)
- 기 설정한 5대 핵심분야* 중심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속 추진(관계부처)
  -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24연중), 바이오헬스('23.4.6.), 첨단부품·소재, 반도체('22.7.19.), 디지털('22.8.22.), 환경·에너지('23.5.26.)

②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확대

- 효율적인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타부처(8개)와 협업하여 16개 분야 대학 특성화 및 인재양성 지원(교육부)

  * (‘23년) 1,052억원, 7,560명 양성 → (‘24년) 1,188억원, 8,453명 양성(목표)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선도할 56개 분야 석·박사 혁신인재(4,226명목표) 양성 및 해외 연구기관 공동프로젝트(107명) 지원*(산업부)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3년) 135,658백만원 → (’24년) 157,479 백만원

- 이공계 및 ICT, SW 분야의 고급·전문인재 집중 양성을 위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3,000백만원) 및 해외 교육·인턴십* 확대(과기부)

  * ICT 고급인재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 인문사회, 예술체육, 이공계 등 분야별 우수인재 장학금 지속지원(교육부·과기부)

- 산업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 지속 추진(관계부처)

<표 3-11>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교육 분야 주요특화분야 전문인재양성사업

분야	인재양성사업(부처)	주요내용
디지털 신산업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3) 900명, 5.3억원 → (‘24) 900명, 5.3억원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중기부)	- 벤처·스타트업 취업연계 SW/콘텐츠 개발자 양성 · (‘23) 800명, 100억원 → (‘24) 800명, 100억원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기부)	-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3) 150명, 25억원 → (‘24) 150명, 35억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부)	-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 (’24 신규) 285명, 8.1억원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식약처)	- 제약 스마트공장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확대 · (’23) 16명, 0.65억원 → (‘24) 32명, 2억원
그린· 에너지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3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
	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 집중 · (’23) 1,540명, 464억 → (‘24) 1,807명, 542억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식품부)	-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3) 600명, 80억원 → (’24) 600명, 80억원
문화 콘텐츠· 지식재산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3) 3개 대학, 30명 → (’24) 7개 대학, 140명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문체부)	-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3) 5개 기관 → (’24) 7개 기
	지식재산 인재 양성	-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

분야	인재양성사업(부처)	주요내용
	(특허청)	문인력 양성 · ('23) 12,261명 → ('24) 14,150명

③ 인재 양성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희망자에게 첨단분야 교육과정 이수 지원(교육부)

  ※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3) 13개 분야 → ('24) 18개 분야(5개 분야 신규 선정)

- SW전공·융합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과제·인턴십 등 SW중심대학 운영 확대('23년 51교→'24년 58교)(과기부)

-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전문대학·지방대학 일반재정지원** 확대(교육부)

  * 국립대학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23년) 124억원 → ('24년) 154억원

  ** 1교당 평균 지원 규모 : ('23년) 대학 69억원/전문대학 54억원 → ('24년) 대학 76억원/전문대학 60억원

나. 고른 교육 기회 보장

①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대학생이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단가 대폭 인상교육부

  •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 추가 지원

  ※ '25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150만 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해 더 많은 대학생에게 근로경험을 제공하고, 근로단가 인상(교육부)

  * [지원 인원] 교외 6.5만명(전년대비 5천명↑), 교내 7.5만명(1.5만명↑)
  [근로 단가] 교외 12,220원(전년대비 1,070원↑), 교내 9,860원(240원↑)

  ※ '25년부터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를 약 20만 명까지 확대('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중소기업* 또는 영농·농식품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연계 맞춤형 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교육부·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②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 '24-1학기 1.7% 금리 동결하고, 대출 상환 개시 기준 소득 인상(154만원↑) 및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청년학업유지 지원(교육부)
-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대상과 면제 기간 확대(교육부)

  * (기존) 8구간 → (확대) 등록금대출은 9구간까지, 생활비대출은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③ 군 복무 청년 등의 학습 지원

- 군 복무 중 청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학강좌 수강 및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 기반을 확대*하고 자기개발비용 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3년 179교 → '24년 182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3년 82교 →'24년 88교

  ** 병 대상 연간 1인당 12만 원 지원(학습비용·시험응시료 등)
- 사회복무요원의 원격강좌 학점취득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율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자 확대 추진(병무청)

  * ('23년) 원리금의 71% 매칭지원 → 납입액의 100% 매칭지원

  **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자 → 1개월 이상자로 개선

④ 취약청년 지원 강화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3년 6만명→'24년 8만명)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기관 지속 발굴(교육부)
- 자립준비청년에게 디지털 창업교육, 미디어 창작 교육,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설계 신규 지원(75명)(과기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진로탐색, 자립 등 건강한 성장을 지속 지원(여가부)

다.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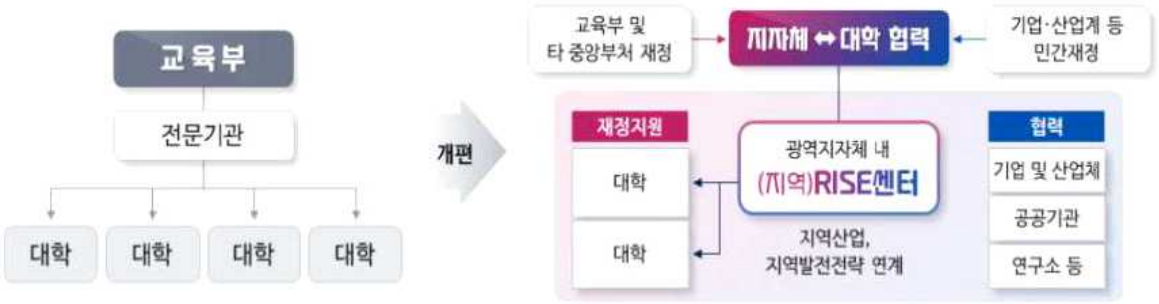
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산업 연계 지원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시도별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지원(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 (~'24년) RISE 추진체계(전담부서·전담기관) 구축 및 RISE 계획('25~'29) 수립→ ('25년) 전 지역 시행

<그림 3-2> RISE 추진체계



- 직업계고 중심으로 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 협업하여 지역 고졸인재 육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교육부)

  * ('23년) 12개 지구 → ('24년) 14개 지구(2개 지구 신규지정)

- 전문대학-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지역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50개) 지속 추진(교육부)

② 고졸 청년 취업 지원

- 신기술·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전공지식-신기술 융합 기반 마이크로 교육과정(신규 10개) 도입 지원*(교육부)

- 17개 거점학교 중심으로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진로상담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 도입(신규)(교육부)

- 고졸 청년인재의 실무역량 제고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 수당* 및 취업연계장려금** 지속 지원(교육부)

  * 월 60만원(최대 3개월)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

만원 지급

- 취업 희망 일반고 학생(3학년, 5,600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일반고 특화훈련, 월 최대 20만원)(고용부)

③ 산업계 수요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 협약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정을 통해 청년의 조기 취업 및 일·학업 병행을 지원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확대(교육부)

  * 일반대 : ('23) 11교, 171억원 → ('24) 15교, 258억원 / 전문대 : ('23) 8교, 96억원 → ('24) 8교, 96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채용예정자)의 직무역량 향상과 학위취득을 위해 맞춤형 중소기업 계약학과(88개) 운영(중기부)

- 대학-민간 협력 기반 첨단 산업분야의 단기 집중 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취업 희망 대학생 역량 강화 지원(교육부)

  * ('23년) 반도체분야 10교 시범운영(150억원) → ('24년) 분야 확대하여 42교 운영(630억원)

- 취업준비 청년(6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이 주도하여 집중 교육과정 운영 후 채용하는 '기업멤버십SW캠프' 추진(과기부)

라.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

① 온라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

- 국내·외 석학강좌, 신기술·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K-MOOC 강좌를 지속 개발하고, 학점인정·재직자 연수 등 이수증 활용 확대(교육부)

- 청년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정부·지자체 등의 다양한 학습컨텐츠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온국민 평생배움터*' 구축(~'25)(교육부)

  * 2023년 청년정책 공모전 제안내용 반영

- 기업-교육기관 협업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온·오프라인 산업 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業) 개발·제공 확대(교육부)

  * ('23년)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 → ('24년) 13개 분야 80개 이상 교육과정 제공

② 직장인 청년 경력개발 및 후학습 지원

- 고졸 후 재직 중인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학습 장학금 지속 지원('24년 10,820명 지원 예정)(교육부)

- 일학습병행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공동훈련센터(59개)를 유형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하고, 경력개발 고도화 지원기관 확대(경상·전라·충청권 추가)(고용부)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참여대상을 재학생·재직자에서 '청년 구직자'까지 확대하여 학습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지원(고용부)

  * ('23년) 2,992억원 → ('24년) 3,116억원

③ 청년 진로탐색 지원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고교생까지 지원 확대(20교, 62억원)(고용부)
- 디지털 분야 진로 탐색 중이거나 청년 SW개발자에게 선배청년 멘토를 매칭하여 진로설계 등 멘토링 지원 및 역량강화 유도(과기부)
- 체험형 창업교육 등으로 청소년의 창업 진로탐색 및 기업가정신 함양(중기부)

(4) 복지·문화분야

○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결혼·출산부담 경감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가.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① 자산형성지원제도 간 연계 및 지원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중도해지요건을 완화*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금융위)

  * 가구소득 중위 180%→250% 이하로 완화,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 '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6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국민 홍보 및 가입자 특성 분석 추진(복지부)
- 병 봉급인상과 더불어 청년병사의 사회복귀 시 목돈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 원금의 100%를 전역 시 추가 지원(국방부)

<표 3-12>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출계좌

주요사업 (부처)	소득구간	납입액(만기)	지원혜탠
청년도약계좌 (금융위)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월 납입한도 : 40~70만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부)	- 근로·사업소득 월 23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납입한도 : 10~50만원 (3년 만기)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 지원
	* 가입자 수 : ('22) 4.2만명→ ('23) 9만명→ ('24 목표) 12만명		

② 청년 부채 부담 경감

- 저소득 청년·대학생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저금리(3.6%~4.5%)로 대출 공급하는 햇살론유스 지속 지원(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 금융채무를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

-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교육부터 재무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금융위)

③ 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가 청약 등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개선(국조실·전부처)

-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시, 기업·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기재부)

나.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진출 시 겪는 경제 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자립수당 인상('23 40만원→'24 5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복지부)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은 청년

→ 18세 이전 타법상 보호시설 입소 등으로 조기 보호종료된 아동까지 지원 ('24.2월~)

-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복지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23년 180명→ '24년 230명/개인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23년 2,000명→'24년 2,750명

②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담기관 지정, 인력 채용 및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지급 등 발굴·지원체계 구축 추진(복지부)

  * 돌봄이 필요한 가족(중대수술, 노령, 장애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사회 재진입 지원 시범사업('24~'25 시범, 이후 본사업 추진 검토)을 실시하고,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복지부)

  * 온라인 등 원스톱 접수창구 개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등

③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 연장(3년→5년),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여가부)

- 경제·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 양육비* 지원 및 지원 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23년 60%→'24년63%)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월 5~10만원 지급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온가족보듬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확대*(여가부)

  * 전국 가족센터(244개소) 중 일부 센터에서 추진('23 36개소)해 왔으나, 180개소로 확대('24)

④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원)생 대상의 인적 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물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활동 지원 활성화(교육부)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교육으로 예술활동 참여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예술인(단체)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문체부)

다. 청년 건강 증진

①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 단축 및 검사항목 확대**(복지부)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 방문 안내

  ** 검진주기 단축(10년→2년), 검사항목 확대(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 추가) ('25년)

  ※ 검진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진료비 지원 검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및 취약청년 대상 본인부담금 경감 검토('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및 청년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중독관리사업 실시(복지부)

- 미래 세대 마약류 중독자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식약처)

  * ('23) 3개소(서울, 부산, 대전) → ('24) 전국 17개소로 확대

- 취업준비, 진로고민 등 스트레스가 심한 청년 대상 국립공원 시설 이용료 할인(30%)으로 정신적·심리적 건강 증진 도모(환경부)

②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청년 신체·정신건강 분야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복지부)

- 가족돌봄, 자립준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을 확대('25~)하기 위한 방안 검토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지원('24 신규 건립 5개소, 계속 사업 29개소 지원)(문체부)

  * 헬스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추진('24.3.5. 청년 민생토론회)

- 청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1천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 사업 지원 대폭 확대(농식품부)

라.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① 콘텐츠 분야 및 문화생활 참여 기반 강화

-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기반 신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국립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 향유형 콘텐츠 제작 지원(문체부)
- 성년기 진입 청년(19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토록 '문화예술패스*' 지원(문체부)

  * '05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
- 관광·통학 등 타지역에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생활인구 기반) 지역공공·문화시설,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25~)(행안부) ※ '24.3.5. 청년 민생토론회

②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 신진예술인 및 예술인이 경제적인 사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문체부)

  * (일반예술인) 3백만원, 20,000명 (신진예술인) 2백만원, 3,000명 대상 지원
- 신진작가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화랑 등) 지원을 통해 신진작가의 안정적 창작 환경 제공, 중소 화랑의 작가 발굴·육성 지원(문체부)

  * 전속작가 1인당 연간 창작활동비와 홍보비 15백만원 지원 등

(5) 참여·권리분야

○ 청년정책 지역확산 및 청년 국제교류 확대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공공·민간·국제기구 등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으로 청년이 원하는 국제교류 확대

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① 청년 참여기반 확대국조실

- 청년 참여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확대(국조실)
- 청년과 기관을 이어주는 청년DB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등의 청년DB 활용실적을 청년정책 평가에 반영(국조실)

②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 24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500명) 운영하며 제안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인센티브 지원(국조실)

- 일반 청년들이 직접 이슈 발굴 및 대안 마련하는 청년정책 공작소(5회)를 개최하고, 중앙-지자체 간 청년정책 담당자 교류회 실시(국조실)
- 탄소중립 서포터즈, 국토교통 온라인 패널, 2030 통일 토크 콘서트, 인사정책 토론회 등 분야별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환경부·국토부·통일부·인사처)

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 법령·통계 정비를 통한 청년정책 지원

- 청년 구직자의 취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및 반환 관련 법령 개정 추진(법제처)
- 2030 민원 분석을 통해 취약 청년, 주거·일자리 분야 등 청년정책 사각지대 개선점을 도출하고 각 부처 정책화 지원(권익위)
- 제2차 '청년 삶 실태조사' 실시해 주거, 건강, 교육·훈련 등 8개 부문에 걸쳐 청년 삶을 다각적으로 분석(국조실)
- 지자체 조례상 청년연령 등 고려해 청년통계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 확대(15~34세 → 15~39세)(통계청)

  * 우리나라 모든 청년에 대해 △지역, 성별, 연령 등 기본항목, △취업 청년의 임금소득, 창업·폐업 등 일자리, △부모와 동거 여부, 거처 형태 등의 정보 제공

② 청년 친화적 참여기반 조성(국조실)

- 3~5개 내외 청년친화도시 지정('24.下)해 지역 정책과 청년 친화적 지역 인프라 구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협의(분기별) 및 중앙-지방 청조위 민간 위원 간담회(상시) 등 청년정책 지역협력체계 강화
- 광역시·도 청년센터 중심으로 지역여건에 맞춰 설계한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24.上)

다.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①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국조실

-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마련
  -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체계적

청년정책 수집·제공

- 지역별로 편차 없는 통합적인 청년정책 제공을 통해 각 지역청년들이 접하는 청년정책 서비스의 질 제고

② 청년과 함께 커가는 공동체

- 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 등 청년의 지역사회 활동 지속 지원

<표 3-13>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참여·권리분야(지역사회 연계청년 활동참여)

사업명(부처)	주요내용
①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행안부)	-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 (24개소
② 청년두레 지원(문체부)	-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중기부)	-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62개사)
④ 청년 마을기업 운영 (행안부)	-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11개사)
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문화재청)	-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라.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분야별 청년권익 보호

- 부당처우 해소 및 근로권익 보호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원스톱 권리구제 지원 (고용부)
- 청년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 지원 및 청년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 지원(공정위·행안부)

②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적극 추진

- 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 등 청년 해외인턴 확대(5.7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표 3-14>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참여·권리분야(해외인턴 및 국제활동

참여유형	주요내용
해외인턴	▸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

-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정보 제공(외교부)

  * 해외안전 담당 영사 확대, 영사협력원 증원 등 해외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병행('24.3.5. 청년 민생토론회)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장학 지원 및 연수 프로그램 추진(교육부)

  * 한-미 대학생 연수(300명), ASEM DUO 장학(88명), CAMPUS Asia(1,400명)

- 한·미·일, EU 등 청년세대 장·단기 교류 활동 추진(교육부·산업부)

  * 풀브라이트 첨단분야 장학프로그램(한100명, 미100명), 한·미·일 청년 한국 첨단기업 탐방(한·미·일460명),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한300명), 한·미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2,023명)

  *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24.3.5. 청년 민생토론회)

2.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1) RISE의 개념

▮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시행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23.2.1,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 교육부는 타부처와의 협력, 시도에서는 전담부서 정비 및 지역 RISE센터 ·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성

<그림 3-3> RISE 사업의 개념



○ RISE 사업에는 매년 국비와 도비 1천억 원을 투입,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전북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과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대학의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정착형 인재 양성이란 특징을 갖고 있음

○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온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 대학의 평생교육 지원체제(LiFE), (4) 고등직업교육혁신지구(HiVE), (5) 지방대 활성화 등 다양한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한 제도

2) RISE 지원전략

▌RISE의 구성

○ ①중앙 및 지역 단위 RISE 추진체계 구축·운영, ②지역별 RISE 계획 수립, ③사업 운영, ④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의 4개 영역으로 구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지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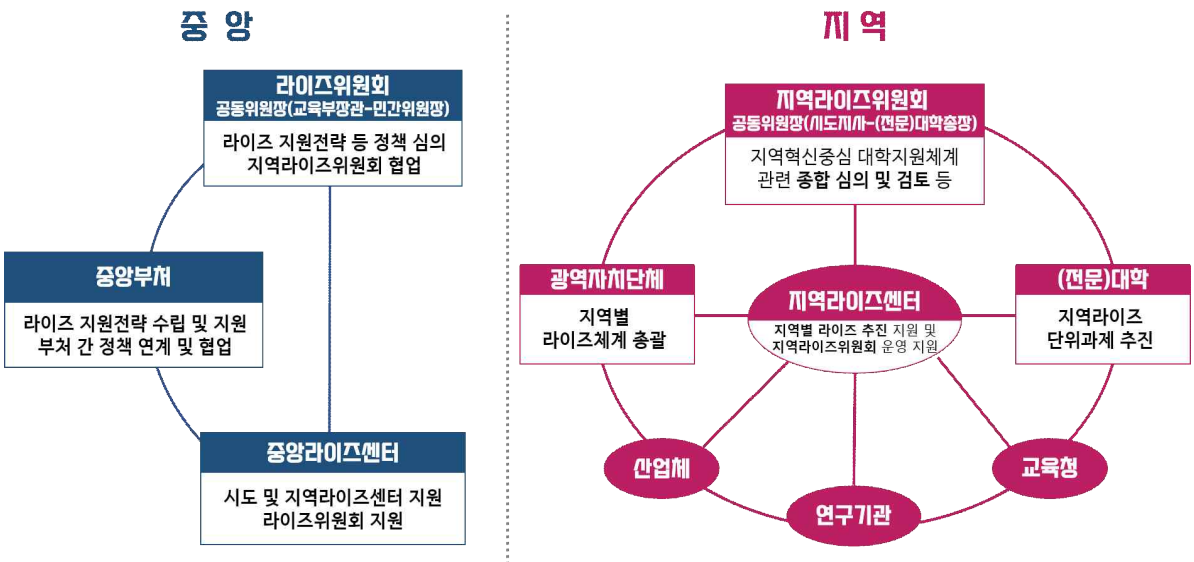
○ (지역)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고등교육법」 개정 및 「RISE훈령」 제정으로 지자체장-지역(전문)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체제, 지역대학 총장·산업계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마련

-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평가결과, 성과관리 등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 (중앙)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대교협·전문대교협·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RISE위원회를 구성·운영

<그림 3-4>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 (협력체계) ▲지역 주도 사업 기획·설계 ▲지역라이즈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지역 주체 간 수평적인 협의 체계 구축·운영 등에 중점

▌계획 수립 지원전략

○ (종류) 수립 주체별로 지역이 수립하는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과, 교육부 수립 RISE 지원전략(5개년)으로 구분

- ①기본계획은 지역RISE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제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중점사항) 각 시도는 대학과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

-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교육부 포함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의대 교육혁신 지원, 지역 협력 기반 늘봄 프로그램 지원 계획 및 '25년 일몰되는 사업들의 지역 협업방안을 각 지역별 계획에 반영

▌사업운영 지원전략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 ~ 2030년 2월 (5년)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 ②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③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 (예산 지원)「보조금법」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지원

▌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전략

○ (성과관리 목적) RISE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지역 간 협력적 성과관리 체제 구축

○ (추진 방향)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부는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지역은 자율성과지표를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중앙 및 지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학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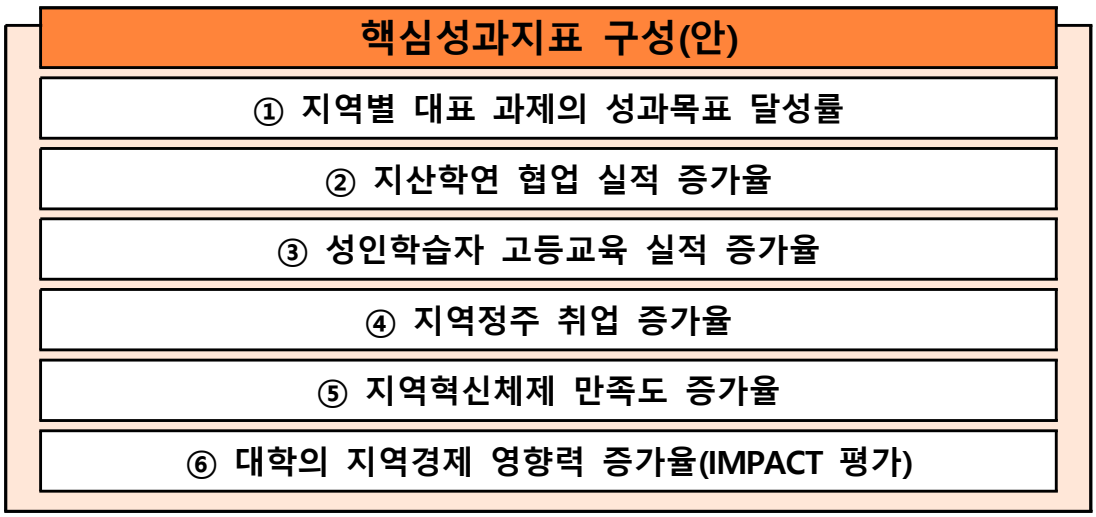
○ (성과관리 구조) 지역 주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자체평가(지자체→대학, 매년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 지역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단위과제별 목표와, 프로젝트별 목표의 달성도를 자체 점검하고 환류 실시
- 교육부는 연차점검을 통해 지역별 RISE 진행상황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중간(2년차) 및 종합평가(5년차)를 통해 지역별 핵심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여 예산배분 및 컨설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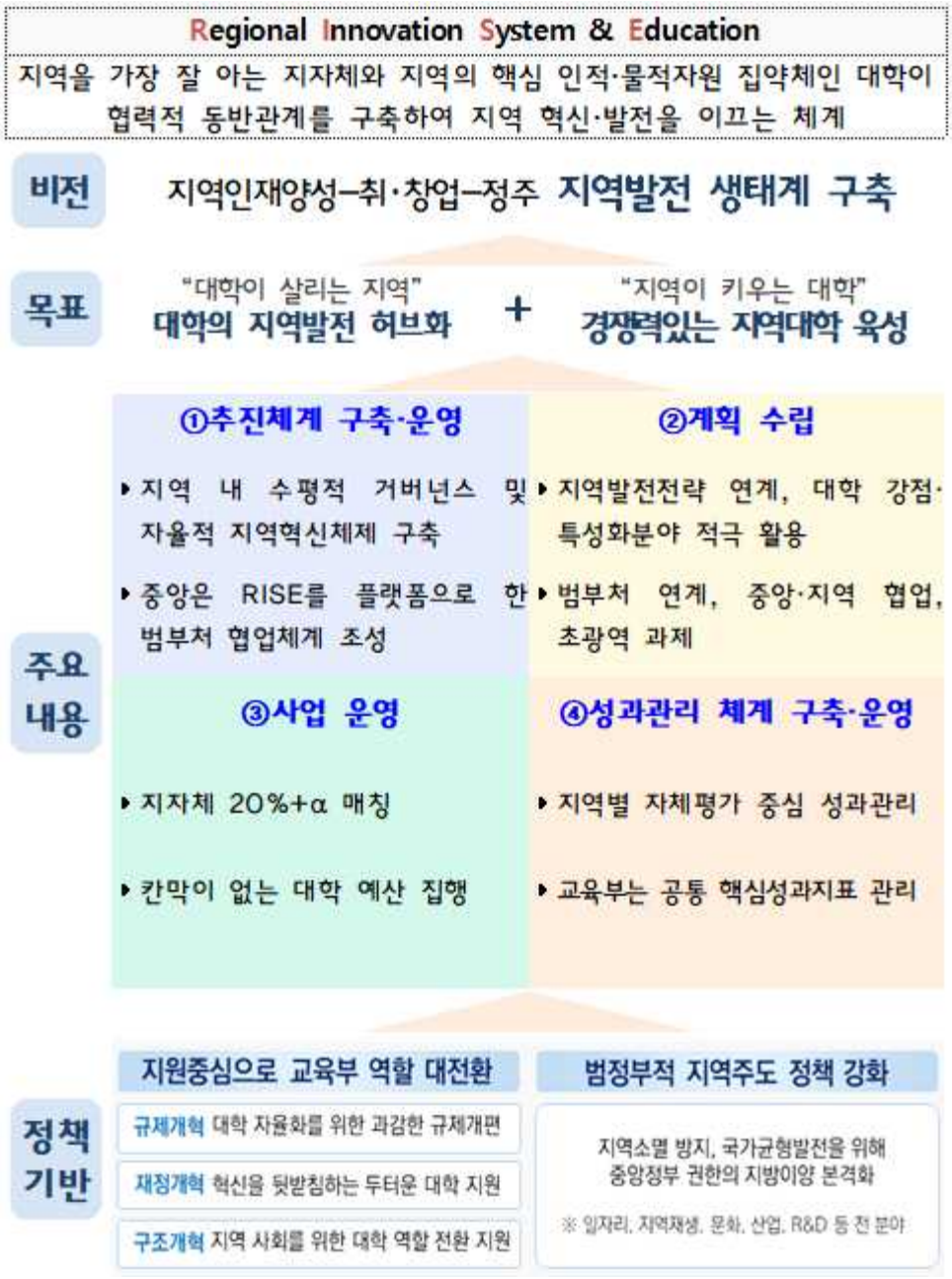
○ (성과지표 구성) 지역은 성과관리를 위한 자율성과지표를 설정

- 교육부는 지역별 RISE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지표로서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되, 중간·종합평가에서만 평가

<그림 3-5> RISE의 핵심성과지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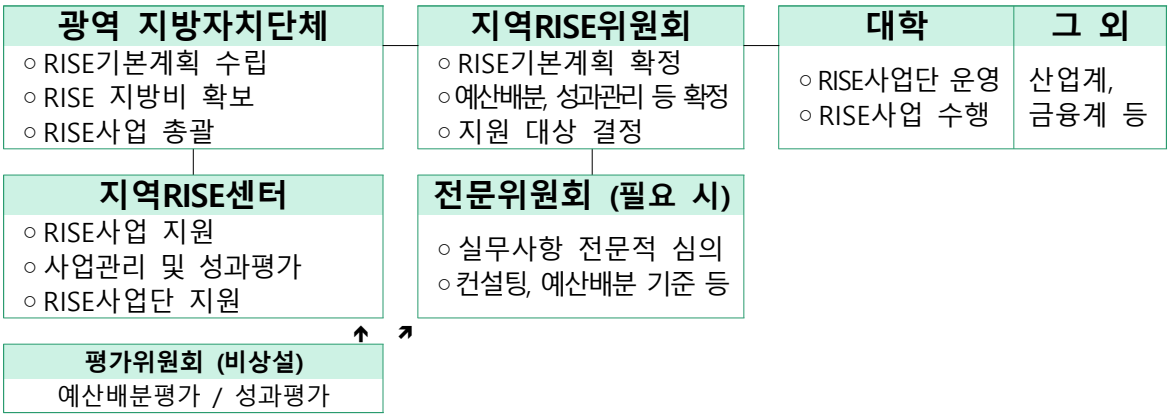
<그림 3-6> RISE 비전과 목표



▮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지역RISE센터·대학·산업계·교육청 등 지역혁신을 이끄는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그림 3-7> RISE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RISE위원회) 지역의 RISE 추진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지자체) 지자체 내 분산되어 있는 대학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통합·재배치하여 RISE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운영

- 시도별 조직·정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총괄부서는 최소 과 단위 이상 및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총괄부서와 동일한 실·국으로 편제할 것을 권장

○ (지역RISE센터) 지역 대학 및 산업체, 기업과의 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 또는 신설한 비영리법인

- 지역의 RISE 계획 수립 지원, 대학의 RISE 사업 수행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성과관리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

○ (대학) 총장의 리더십 하에 비전·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RISE 추진

- 대학 내에서의 분절적 사업운영 방지를 위해, 학교가 수주하는 단위과제 수와 무관하게 1교당 1개의 RISE 사업단을 구성

▮ 중앙 단위 추진체계

○ 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포함 중앙부처·중앙라이즈센터·지방시대委·대교협·전문대교협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RISE 추진 조정·지원

○ (RISE위원회) 중앙단위 RISE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중앙RISE센터) RISE의 전 지역 안착을 위한 운영 지원 및 중앙단위 각종 성과관리·모니터링·조사·연구·데이터관리 등을 수행

○ (중앙부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RISE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정책 연계 지원

▮ 지역별 계획의 종류

○ 각 지역별 RISE 관련 계획은 ①RISE 기본계획(5개년), ②연도별 시행계획(세부시행계획 포함)의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①RISE 기본계획은 지역발전전략, 지역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수립

-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대학의 혁신을 연계한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제안서

○ ②연도별 시행계획은 실제 '25년부터 RISE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 활용 ※ 지역RISE센터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기존	RISE 체계
· 중앙집중식, 하향식 · 분절적 사업수행으로 비효율 · 지역혁신과 연계성 저조	· 지방분권식, 상향식 ·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효율적 운영 · 지역혁신과 연계한 사업

▌ 중점사항

○ (원칙) 각 시도는 대학과의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각종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종전 중앙집중식·하향식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의 상황·발전전략·정책 수요 등을 적극 반영한 과제 마련
- 각 지역의 국·공·사립, 일반대·전문대 등 설립 유형과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대학의 규모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
- 중·장기 계획의 취지를 고려, 계획의 중간 변경은 신중해야 하나 환경 변화 등 발생 시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각 시도는 지역RISE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

○ (범부처 등 연계)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RISE를 플랫폼으로 삼아 범부처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연계

-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책무성 범위 확대

※ RISE 지방비 의무매칭(국비 대비 20%) 산정 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매칭비 포함

○ (중앙·지역 협업) ①글로컬대학, ②의대 교육혁신, ③늘봄 프로그램 개발, ④산학연협력 분야 '25년 RISE 이관사업(8개) 관련 사항 반영

- 동 사항들의 추진에는 현장의 수요와 지역발전전략, 전국적 동시 시행 필요성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여 RISE 체계에서 수행

<표 3-15> 중앙·지역 협업영역 과제 관련 주요 사항>

구분	주요 사항
글로컬대학	▸지역 내에서 혁신을 이끄는 우수모델 제시 및 전파
의대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선발, 교육과정 개선 등
늘봄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강사 연수 등
8개 이관사업	▸지산학연 협력 분야 사업들로 '25년 이행기를 거쳐 '26년 통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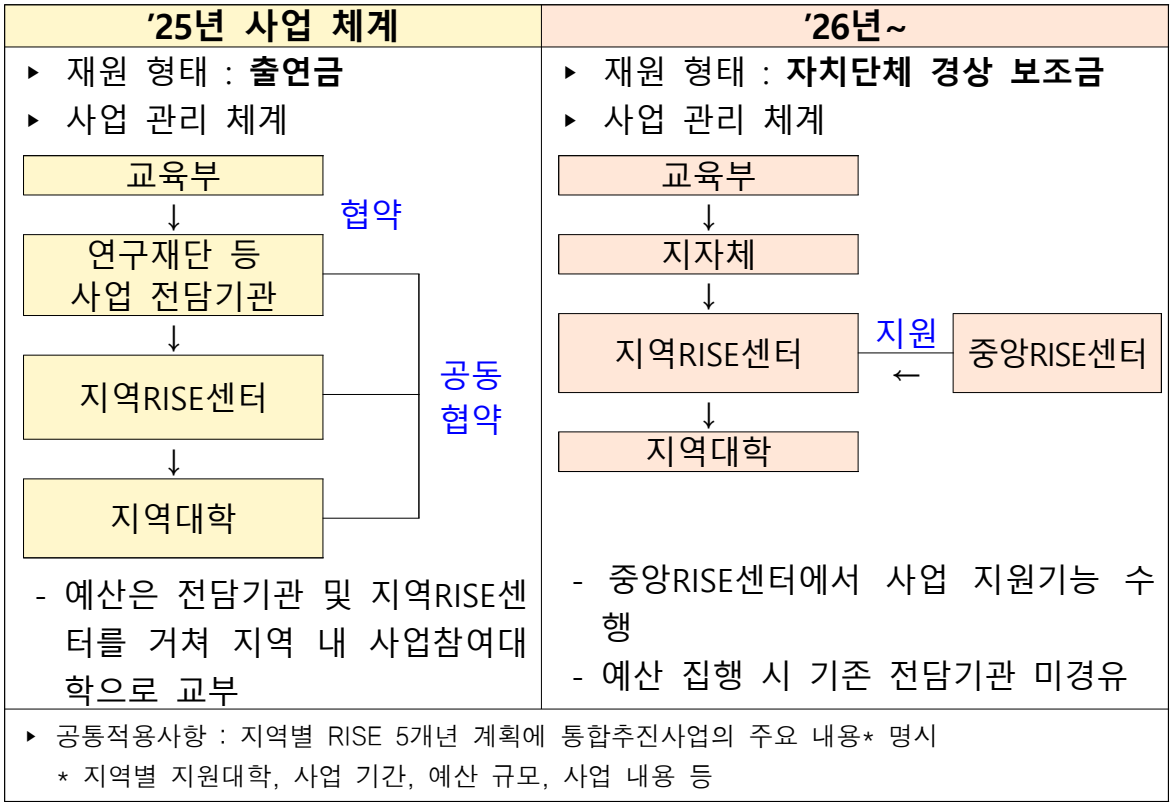
※ 의대 교육혁신지원, 늘봄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별도 안내

- ①각 지역별 라이즈 체계에서 글로컬대학의 혁신 전파 역할·방향,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상 시·도의 지원사항 등을 서술
- ②의대 교육혁신지원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 마련
  - 계획 우수성, 정원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인센티브 부여

- ③지역 협력기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은 지자체와 대학·교육청 간 협력으로 현장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공급 등 진행
  -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의 질 제고 및 지역 간 편차 감소를 위해 전 시도의 계획에 반영을 권장하고,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
- ④'25년은 사업체계에 지역RISE센터를 포함하고, 지역RISE센터는 각 지역별 예산집행·성과관리 수행, 중앙RISE센터는 중앙단위의 예산집행·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총괄 → '26년 RISE 완전 통합

※ 사업수행 관련 세부사항은 8개 사업별 '25년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이며, '26년 이후에도 RISE체계에서 지역자율영역 과제와 연계하여 당초 계획기간까지 지원

<그림 3-8> 8개 내역사업의 RISE 시행 이후 사업체계(안)



<표 3-16> 지역 RISE 계획 수정방향

<현행 목차>	<변경 목차(안)>
지역현황 및 진단 RISE 비전 및 목표 프로젝트 세부계획 - 지역이 자율로 구성하는 사업계획 재정투자 계획 성과관리 계획	Ⅰ장. 가칭 지역자율영역 (좌동) Ⅱ장. 가칭 중앙·지역 협업영역(신설) -예①) '글로컬대학'의 지역 내 혁신 전파 방향, 시도의 글로컬대학 지원사항 등 -예②)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지역 내 참여 대학, 해당 대학의 수행 내용, 지원 예산 등 명시

○ (초광역)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시 타 지역 대학·기업·혁신기관 등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초광역 과제 수립 권장

- 초광역 과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를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 간 협의회 구성 가능 (예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 (기존 사업 통합 방향) RISE로 통합되는 5대 재정지원사업(RIS, LINC, HiVE, LiFE, 지방대활성화)은 원칙적으로 폐지 및 재설계되나,

-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학생들의 학위 취득 등 지속 지원필요가 큰 사업 내용의 경우, 지역별 RISE 계획에도 반영할 것을 권고

▮ RISE사업의 운영

○ (운영주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 각 지역대학, 기업, 지역협의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

○ (사업기간) 2025년 3월~2030년 2월 (5년)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지역별 대학 선정·공모는 사전에 수행 가능

○ (지원대상) ①「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은 학교 및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일반대·전문대 기관평가인증,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 단,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은 사립대학에만 해당('25년부터 재정진단을 희망하는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각종학교 등은 재정진단 이후 단독지원 검토)

<그림 3-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안)」 별표 1 지원대상의 범위



- ② 기관평가인증 또는 재정진단의 미적용 대상(폴리텍·출연연 등) 이거나, 통과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도 지역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①의 대학과 협의체 구성 후 지역RISE위원회 결정 시 사업비 지원 가능

  ※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23.3.)의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은 RISE를 포함

- ③ 기업 등의 경우에도 ①의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직접 집행은 불가

○ (지원범위) 광역지자체 내 소재 대학 지원

- 대학 본교와 캠퍼스가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할 경우, 캠퍼스 소재지 시도가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교 소재지 시도 또한 캠퍼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역RISE계획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대학도 지원 가능

○ (초광역권)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 사업의 효과성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초광역 과제 수립 가능

○ (예산 지원) 「보조금법」 의거,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②~⑨ 내역은 출연금)

- 각 지자체는 시도별 국비 지원규모 대비 최소 20% 이상 의무매칭

- RIS 등 통합사업의 지역별·대학별 수주액 비율,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 배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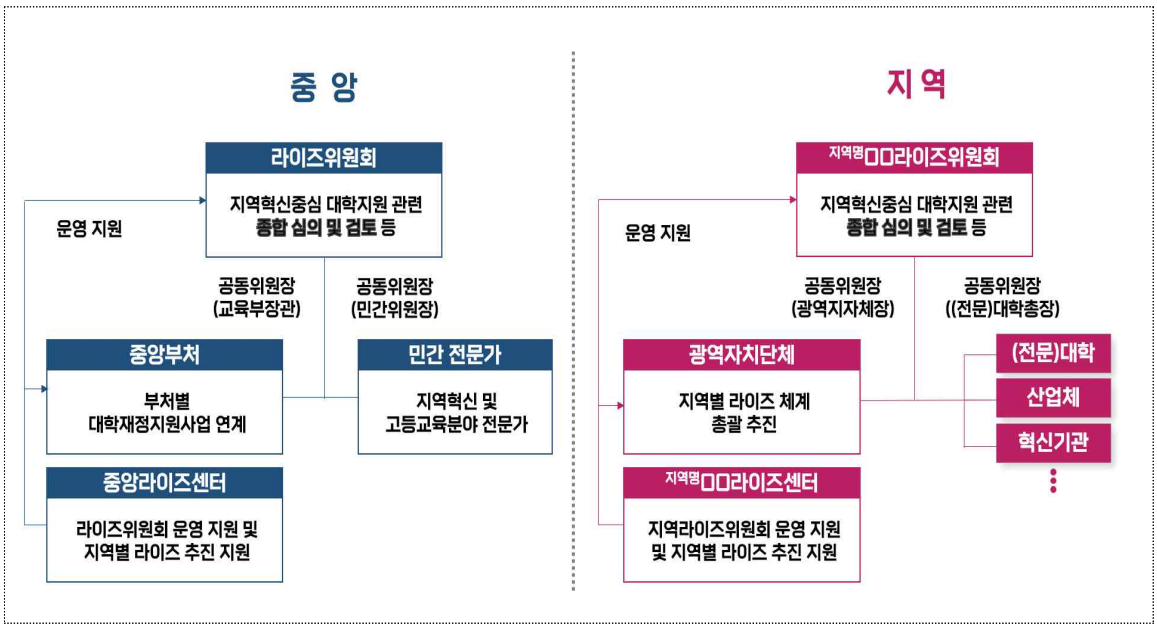
<표 3-17> 시도별 예산배분기준

① 대학역량 기반			②지역역량 기반
지출 재구조화 대상 사업 참여 대학 수주율	+	글로컬대학 지원액	▸의대·늘봄 지원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우수 지자체 ▸시도 매칭률 및 시범지역 성과

<표 3-18> 2025년 RISE 정부 예산 구성

사업명		예산 (억원, '24.)	정부안 예산(억원, '25.)
세부사업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20,010
내역 사업	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25	17,047
	②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2,010	2,010
	③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258	258
	④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96	96
	⑤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210	210
	⑥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	140
	⑦마이스터대 지원	151	47
	⑧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142	142
	⑨대학 창업 교육체제 구축	6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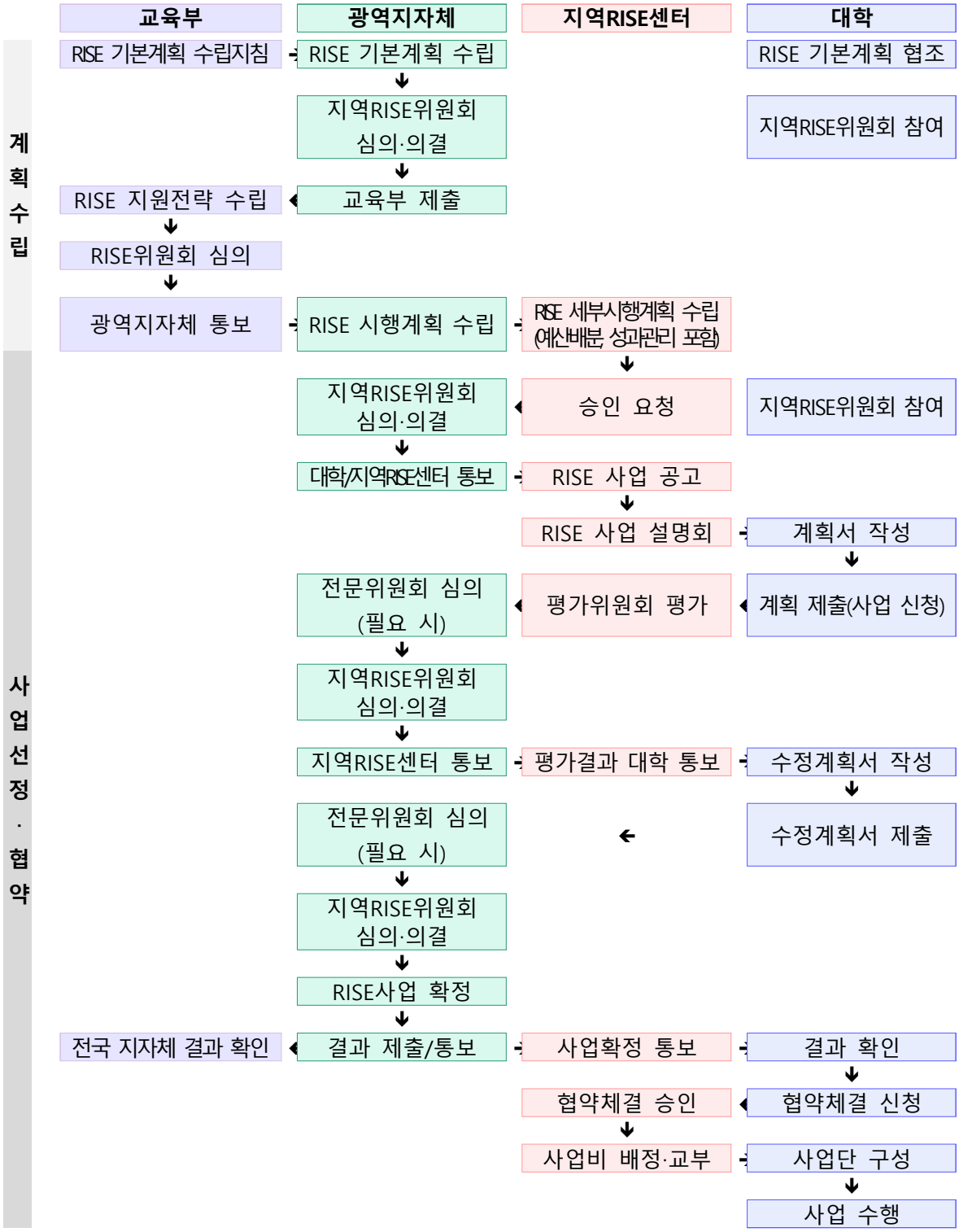
<그림 3-10> RISE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구성



<표 3-19> RISE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구성

구분	기관	기능 및 역할
지역	지역RISE위원회	· 지역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지역 RISE센터 지정 · 취소 심의 등
	광역지자체	· RISE 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단위과제 구성 · 지역RISE센터 운영 지원 및 제도 정비 · 지역RISE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 시도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성과관리 총괄
	지역 RISE센터	· 시도 RISE 계획 수립 지원 ·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관리(공모, 지정) · 대학에 국고보조금 예산 교부·집행 관리, 성과관리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지역RISE위원회 운영지원
	대학	·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제안 · RISE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수행 · 산업체, 혁신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중앙	RISE위원회	· 중앙단위 RISE 전반(체계·계획·사업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중앙 RISE센터 지정 · 취소 심의 등
	교육부	· RISE 지원전략 수립 ·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도별 예산배분 · 시도 성과관리 · 모니터링 등 총괄 · 규제특례 사항 검토
	중앙 RISE센터	· 광역지자체 및 지역 RISE센터 교육 · 시도 RISE 성과관리 및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 라이즈위원회 운영 지원

<그림 3-11> RISE 사업 수행절차 (순서도)



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 제 1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10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제 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함**

▌**제도적 인프라**

○ 2017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 청년지원에 관한 내용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음
- 청년 기본조례의 기본 이념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3-20> 「전북특별차지도 청년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

조례 조항	세부 내용
청년의 정의 (제2조)	-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도지사의 책무 (제3조)	-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5조)	-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7조)	-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	-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제9조)	-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청년정책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을 지정한다

조례 조항	세부 내용
청년정책포럼단 (제10조)	- 도지사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도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이하 “포럼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청년의 참여 확대 등 3(제11조)	-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청년 권익증진 주요 시책 (제12조 ~ 제24조)	-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의 창업 기반조성, 청년의 주거안정,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의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날,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청년센터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청년친화도시 (제27조)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구현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2024.5.31., 전라북도조례 제5132호)

1) 제1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대비 개선방향

▌ 정책 개선방향

○ 일자리 및 창업지원 중심에서 탈피

- 제1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처음으로 '청년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기존의 분야별 사업들 중에서 정책 대상자가 청년이 포함될 경우에도 청년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 왔으며,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 중심,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음
- 지난 5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책 대상에서 청년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고 청년정책포럼,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등 청년정책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게 되면서 지난 5년은 지역 단위에서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정착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기구축된 인프라 활용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

-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구축되어 온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 참여·권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 사업 구성은 사회 진입기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드맵 구성이 요구됨

▌ 사업 추진 체계의 변화

○ 하향식 사업발굴 → 상향식 사업발굴

- 사업 발굴 단계에서 기존 1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하향식 발굴이 우선되고, 청년들이 제안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발굴 성과는 하향식에 비해 낮은 편이었지만, 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상향식 발굴이 되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이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북청년허브센터 뿐만 아니라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연구 및 사업 기획에 대한 기능을 보강

○ 사업평가방식의 변화 : 정량지표 중심 → 정성지표 포함

- 사업 평가에 있어 과거에는 청년 일자리 수, 참여율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2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정책 수요자 대상의 조사 및 전북청년인재

DB를 활용하여 만족도 및 효율성에 대한 정성 지표를 추가하여 연차별로 정책의 성과들을 분석하여 개선 추진

○ 국가사업 중심 → 다양한 재원 활용

-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 국가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청년기금, 인구소멸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청년이 발굴한 제안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효과성 높은 사업들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그림 2-50> 1차와 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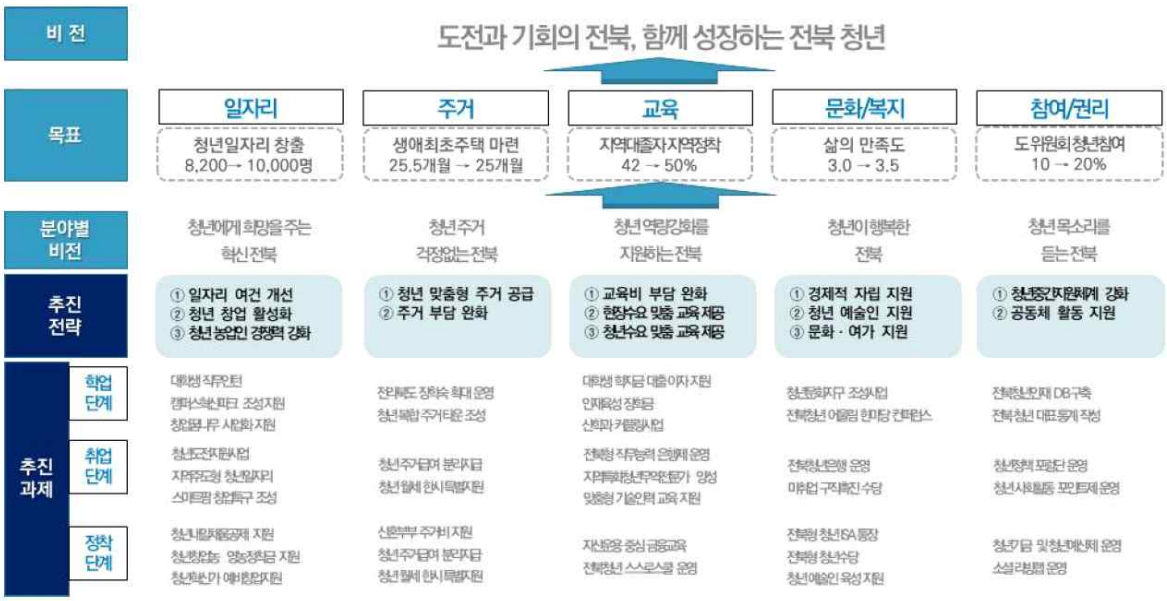
구분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단계	지역 단위 청년정책 시행 정착 단계	지역 단위 청년정책 시행 효과 제고 단계
핵심사업	일자리 · 창업 중심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 사업
성과 관리	청년 일자리 수 등 정량 지표 중심	청년 만족도 등 정성 지표 추가
사업 발굴 체계	기존의 보편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공약 사업 중심의 하향식 검토	청년정책 중간조직, 청년조직 등으로부터의 상향식 제안
정책 자원	통계청 승인 통계 중심 청년정책 지원조직 산재 청년정책 전담 연구조직 부재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성과 미미	승인통계와 행정통계 결합한 통계개발 전북청년허브센터 중심 인구청년 지원연구센터 설립(전담 연구인력 확보) 청년정책포럼단 구성 다양화 및 성과 내실화
재원 확보	국가 예산사업 및 공모사업 위주	청년기금, 인구소멸기금 등 다양한 재원

자료: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전라북도

2)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비전)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으로 제시하고, 5개 부문의 정책목표별로 기본전략을 제안
- (의미)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전북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역에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청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라북도가 청년 중심으로 상생 발전
- (기본방향) 청년정책의 기반을 다진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이어받아 청년정책의 효과가 전북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그림 3-12>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



자료: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전라북도

3)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3년 주요정책 평가에 기반하여 한계점 및 개선사항을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반영함

▌202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도전, 기회, 함께 성장

○ (기회와 성장)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정책 추진으로 생활안정, 유출방지

* 지역 청년의 기회와 성장을 위한 전북형 청년정책 추진

○ (맞춤형 지원) 청년 생애주기별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별 청년정책 수립

* 진로탐색 → 구직 → 재직(창업) → 정착

** 스마트팜 활용, 청년이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농도(農道)'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 (참여 활성화)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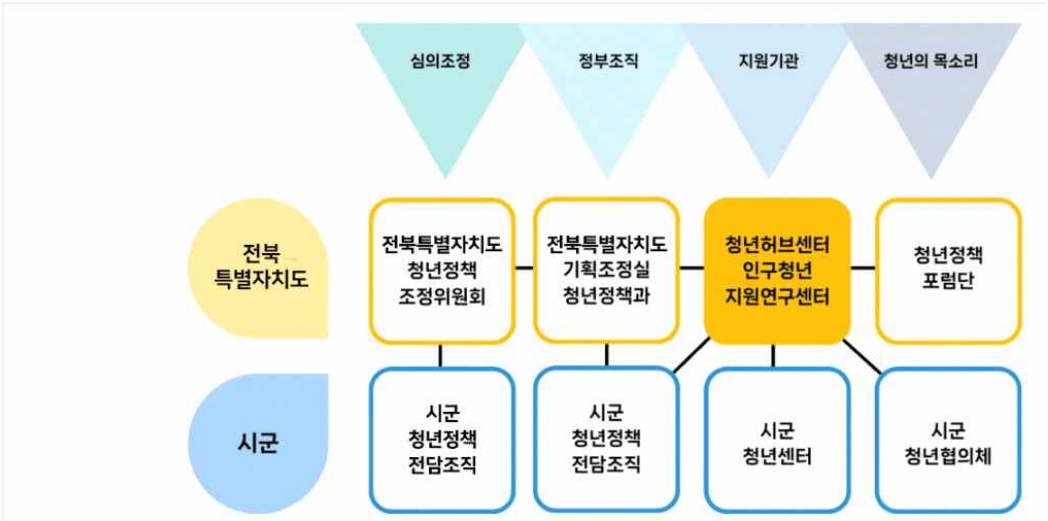
<그림 3-13>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과 핵심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1생애주기별 지원·청년농업 육성	일자리	① (확대) 대학생 직무인턴 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③ 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 창업지원 ④ (확대) (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⑤ (신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주거부담 완화로 주거 상향 지원	주 거	① 전북특별자치도 장학숙 운영 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③ (신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④ 공공임대 주택공급 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3교육기회 보장·미래 역량강화	교 육	① 맞춤형 기술 인력교육지원 ②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③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④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 양성 ⑤ (신규) 주력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
4생활안정기반·창작활동 지원	복지 · 문화	① (신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② (확대) 전북형 청년수당(지역정착 지원사업) ③ (신규)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⑤ (신규)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5참여 거버넌스·활동 생태계 조성	참여 · 권리	①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②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③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④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⑤ (신규) 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추진체계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홈페이지(https://jb2030.or.kr/policy/p1.html)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 5개 분야 85개 과제추진(2,740억원)

○ 신규사업 등 11건 129억원129억원(전북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 스마트팜 건립, 전북청년예술 주문배달서비스사업 등)

○ 확대사업 14건 1,263억원(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대상확대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등)

<표 3-21>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체사업

(단위 : 건, 억원)

구분	사업수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7	647	355	256	361

<표 3-22> 2024년 전라북도 청년정책 분야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수	예산액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합계	85	274,029	76,990	45,575	63,545	87,920	
1. 일자리	33	142,610	30,714	13,835	14,511	83,550	
2. 주거	7	46,511	8,264	8,486	29,758	0	
3. 교육	12	33,254	22,243	5,684	2,273	3,054	
4. 복지·문화	24	49,283	15,769	15,956	16,243	1,316	
5. 참여·권리	9	2,371	0	1,611	760	0	

자료원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02.29.), <특집> 청년인구 절벽 ...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이 답이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내용

○ 일자리

- (생애주기별 연계) 진로 탐색(구직)부터 자산 형성(재직)까지 사업 간 유기적 연계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탄탄한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
- (청년 창업 활성화) ①(예비)창업 교육, 시설, 자금지원 등 창업주기별 지원과 ②기술창업 지원으로 청년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특성*을 활용, 청년농업인 성장단계별 지원 및 스마트팜을 활용한 역량강화로 청년 중심'농도(農道)'전북특별자치도 조성

○ 주거

- 학업 → 취업 → 정착 단계별 맞춤형 정책을 통한 주거 부담완화
  - ① 장학숙, 임대주택 등 시설공급과 ② 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 생활 안정 및 주거 상향 발판 마련
-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이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탐색을 하는 동안 장·단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조성으로 지역정착 유도

○ 교육

- 인재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 대학생 및 미취업자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및 미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산업 인재 양성

○ □ 복지·문화

- (복지) 전북형 청년지원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 자립 및 청년 생활안정기반 조성

  * 전북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재직자 청년수당,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 (문화) 문화활동 확산을 위한 콘텐츠 창작활동 및 창업 지원

○ 참여·권리

- (참 여) 청년 목소리(정책수요) 반영 등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연중) 및 지역별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14개소)
  - 도내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제안·반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포럼단 운영(연중)
  - 청년이 구상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북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8건) 추진
- (활동지원)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도내 청년 대상 공동체 활동 지원
  -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제공 및 마을 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자원활용 우수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프로젝트

<표 3-23>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핵심과제(일자리)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내용</th></tr>
<tr><td>(공약/확대)
대학생 직무인턴
(4,530백만원 /
국 3,400, 도 1,130)</td><td>○(목 적) 대학생의 전공과 연계한 공공기관의 실무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 기회제공
○(사업대상) (1유형) 7주, 대학생, 300명, (2유형) 3개월, 18~34세, 570명
○(내 용) 대학생·미취업 청년의 전공 및 관심 분야를 우선으로 공공기관, 연구기관,우수중소기업 등 실무체험 제공(7주형·3개월형, 최저임금 지급)
* (1유형) 공공기관 인턴십 제공 및 인턴기간 1인당(만근시) 약 300만원 지급
* (2유형) 인턴십 제공 및 인턴기간 1인당(만근시) 약 600만원 지급</td></tr>
<tr><td>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714백만원 /
국11,610 도1,886
시군 9,599 기타
2,619)</td><td>○(목 적)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 지원
○(사업대상) 1,000명(도내 주소를 둔 대학교·전문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내 용) 청년 1인당 최대 1600만원 지원(직접일자리 지원) 등
<table><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tr><td>직접일자리 지원</td><td>(기업) 인건비 월 160만원(1인당, 2년)
· (청년) 전문직무 교육비 등 연간 300만원 2년 근속 시 1,000만원 인센티브</td></tr><tr><td>창업지원</td><td>(1년차) 창업 인큐베이팅 비용(창업준비·운영비·임차료 등) 연 1,500만원
· (2년차) 창업 성공비용(시제품제작 홍보비 등) 연 1,500만원
· (3년차) 신규채용 인건비 월 160만원(1인당, 1년)</td></tr><tr><td>일 경험 지원</td><td>· (기업) 인건비 월 170만원(1인당, 1년)
· (청년) 직무교육비 등 연간 200만원</td></tr></table></td></tr>
<tr><td>전북 미래산업
청년 기술창업지원
(500백만원 / 도비)</td><td>○(목 적) 미래산업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
○(사업대상) 유망 산업분야 기술 창업자 20팀(만19~39세)
○(내 용) 유망 산업분야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기술 파트너 지원단 구성,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보육공간 제공(미래기술혁신센터 등)
* 지속가능 경영(그린뉴딜), 디지털 전환(웹/app분야), 첨단 제조, 사회적 가치</td></tr>
<tr><td>(확대)
(전북형)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1,602백만원 /
국 7,556, 도 1,235,
시군 2811)</td><td>○(목 적) 영농창업에 관심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 지원,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table><tr><th>구분</th><th>정부지원사업</th><th>전북형 지원사업</th></tr><tr><td>사업대상</td><td>만18~39세 청년창업농
1,300명
(영농경력 3년미만
청년농업인)</td><td>만40~45세 미만 청년
창업농 112명
(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농업인)</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사업명</th><th>세부내용</th></tr>
<tr><td></td><td>
<table>
<tr><td></td><td></td><td>*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td></tr>
<tr><td>목적</td><td>영농정착지원금(월90~110만원)지원
- 농협직불카드 바우처 지원(최대3년)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지원
*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만원</td><td>영농정착지원금(80만원, 2년)
- 지역사랑상품권</td></tr>
</table>
</td></tr>
<tr><td>(신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8,800백만원 /
도 4,400, 시군
2,640,
기타 1,760)</td><td>○(목 적)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사업대상) 전북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자, 시군 우수 청년 농업인
○(내 용) 청년*(만18~45세)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20개소)
*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 (HW)기반조성, 온실신축, 재배시설 및 ICT기자재 설치, 냉난방시설
- (SW)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교육, 융화교육 등</td></tr>
</table>

<표 3-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핵심과제(주거)

사업명	세부내용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 (3,309백만원 / 도비)	○(목 적)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이끌어갈 향토 우수인재 육성 ○(사업대상) 수도권 소재 대학 및 전라북도 소재 대학 재학생 600명 ○(내 용)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식 등 제반 편의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900백만원 / 국 1,450 도 435, 시군 1,015)	○(목 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대상)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 청년 1,276명 ○(내 용) 주택임차료 최대 월 20만원 지원(20만원 × 12개월)
(공약/신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2,500백만원 / 도 5,000, 시군 7,500)	○(목 적)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사업대상) 혼인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625가구) ○(내 용)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원 지원
공공임대 주택공급 (28,260백만원 / 국 8,130, 기타 20,130)	○(목 적) 도내 젊은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비 부담완화 ○(사업대상) 청년, 신혼부부 ○(내 용)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638호) - (임대료) 인근 시세 대비 60~80% - (임대기간)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 (2,800백만원 / 도 1,400, 시군 1,400)	○(목 적) 젊은 귀농귀촌인이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제공하여 농촌지역에 가족단위 귀농귀촌 유입 확산 ○(사업대상) 시군 ○(내 용) 장기 거주시설 20호, 실습농장, 부대시설 등 조성

<표 3-25>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핵심과제(교육)

사업명	세부내용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1,667백만원 / 도 500, 시군 1,167)	○(목 적)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 맞춤형 기술교육과 취업지원 ○(사업대상) 도내 미취업자 350명 ○(내 용) 훈련비(훈련기관), 훈련수당(훈련생 매월 30만원×3~5개월) 지원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 (3,610백만원 / 도 3,008, 기타 602)	○(목 적) 현장중심의 융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양성 ○(사업대상) 도내 대학 25개 과정운영(910명) ○(내 용) 산학협력 과제를 기반으로 교수, 학생, 참여 기업 공동 연구(교과목개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5,150백만원 / 국 4,000 도 140, 시군 50, 기타 960	○(목 적) SW융합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 ○(사업대상) 도내 대학생 등 1,427명(원광대 1,350, 전북대 77) ○(내 용) 산업수요 중심의 SW융합 전공교육, 청소년 해커톤 대회, 진로캠프 등 운영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4,544백만원 / 도 3,060, 시군 540, 기타 944)	○(목 적)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대상) 도내 4개 대학 15개 과정 운영(250여명) ○(내 용) 과정운영비, 취업연계학생지원금 등 지원
(신규) 주력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250백만원 / 도비)	○(목 적)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사업대상) 전문·기능대 재학생(40명) ○(내 용) 주력산업분야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표 3-26>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핵심과제(복지·문화)

사업명	세부내용
(공약/신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6,050백만원 / 도 3,050, 시군 3,000)	○(목 적)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수당 지원 ○(사업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구직자 2,000명 ○(내 용)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구직역량강화 교육
(공약/확대) 전북형 청년수당 (10,800백만원 / 도 5,400, 시군 5,400)	○(목 적) 취업초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로 청년의 제정 자립 지원 및 청년활동 증대로 전북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대상) 3,000명*(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청년(만18~39세)) * 500명('19~20년) → 1000명('21년) → 2,500명('22년) ** 농·임·어업,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내 용) 매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공약/신규)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410백만원 / 도 230, 시군 180)	○(목 적) 청년 자산형성 및 체계적 금융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대상) 중위소득 140% 이하 도내 거주 근로 청년 300명 ○(내 용) 본인 납입금(최대 10만원) 적립 시 동일 금액 지방비 매칭(2년) 종합 금융상담,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및 컨설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9,990백만원 / 국 8,811, 시군 1,179)	○(목 적)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로 탈빈곤 촉진 ○(사업대상) 연소득 2,400만원(중위소득100%) 이하 청년(19~34세) 5,630명 ○(내 용) 본인적립금(월10만원) 대비 정부지원금 3년간 매칭* -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수급 - 본인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1080만원 * 차상위이하 본인적립금 대비 정부지원금 1:3, 차상위초과 1:1
(신규)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490백만원 / 도비)	○(목 적) 도내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청년 일자리탐색 지원 ○(사업대상) 관련 전공자, 5년이상 경력자, 미취업 청년 등 ○(내 용)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공연인력형 : 인건비 65만원 8개월 지원(자부담 35만원 이상 매칭) - 청년인턴형 : 5개월 인턴 고용비 전액 지원

<표 3-27>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핵심과제(참여·권리)

사업명	세부내용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514백만원 / 도비)	○(목 적) 청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력 활성화로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 및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센터4층)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맞춤형 지원정책 안내 등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 (300백만원 / 도 150, 시군 150)	○(목 적) 정책 수립 단계부터 청년이 정책을 기획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고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추진 ○(사업대상) 시군 청년 및 청년 협의체 등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 ○(사업내용) 시군별 청년 제안 특화사업 시행 등
청년정책포럼단 운영 (86백만원 / 도비)	○(목 적) 청년의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정책의 제안 및 의견수렴 ○(사업대상) 50명(18~39세) ○(사업내용) 정책발굴을 위한 권역별 회의 운영,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등 지원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400백만원 / 도 240, 시군 160)	○(목 적)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을 위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사업대상) 5개소(도내 5인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및 기업) ○(사업내용) 청년마을 프로그램 운영, 타 시도 청년마을 우수사례 견학, 네트워크(청년-지역주민 등) 지원 및 홍보 활동 등 지원
(신규) 전북청년 도약프로젝트 (200백만원 / 도 100, 시군 100)	○(목 적) 청년단체의 창의적인 아이템 및 지역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실험지원을 통해 소득창출 구조화 및 정착기반 마련 ○(사업대상) 6개소(시군), 개소당 33백만원 ○(사업내용) 청년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 우수 아이디어 개발 및 컨설팅 지원

4. 전북특별자치도 RISE사업

▌전북특별자치도 RISE는 4대 프로젝트 14개 단위과제로 구성됨

○ (비전 설정) 지역 혁신의 시작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Brand Up)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기술과 인재를 매칭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Grow Up)하며, 대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가치 증대(Value Up)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함

○ (핵심목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과 연구'를 지역·산업과 접목시킴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청년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도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함

<그림 3-14> 전북특별자치도 RISE 비전 및 목표

<table>
<tr><td colspan="2">비전</td><td colspan="4">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
[슬로건] 대학 Brand Up ▸ 산업 Grow Up ▸ 지역 Value Up</td></tr>
<tr><td rowspan="4">목표</td><td>정성</td><td colspan="4">일자리·삶의 질 제고를 선도하는 지역고등교육혁신체계
(대학 경쟁력 강화·산업구조 전환 ⇨ 정주청년 증가·도민행복 증진)</td></tr>
<tr><td rowspan="3">정량</td><td colspan="2">일자리 경쟁력 ↗</td><td colspan="2">삶의 질 ↗</td></tr>
<tr><td>산업구조 전환</td><td>인재수요 적시대응</td><td>정주환경 향상</td><td>도민행복 증진</td></tr>
<tr><td>[산업 성장률]
('24)1.14% → ('29)1.5%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4)0.59% → ('29)1%</td><td>[인력부족율]
('24)3.07% → ('29)2.5%</td><td>[정주취업율]
일반대 : 20.6% → 25%
전문대 : 44.6% → 50%</td><td>[주민활력지수]
('24)6.64 → ('29)7.2</td></tr>
<tr><td>추진 전략</td><td>지역산업 - 대학정책 상생연계</td><td>권역별 일자리·인재 혁신</td><td>지역균형 평생학습도시</td><td>공유·협업 문화 확산</td></tr>
<tr><td></td><td>지자체 산업정책과 대학의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고, 지산학 협력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지역산업진흥 실현</td><td>권역별 지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균형성장 실현</td><td>인구 구조 변화 및 지역산업 수요 맞춤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연령.공간 제약이 없는 학습자 친화형 교육환경 조성</td><td>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 강화로 상생 및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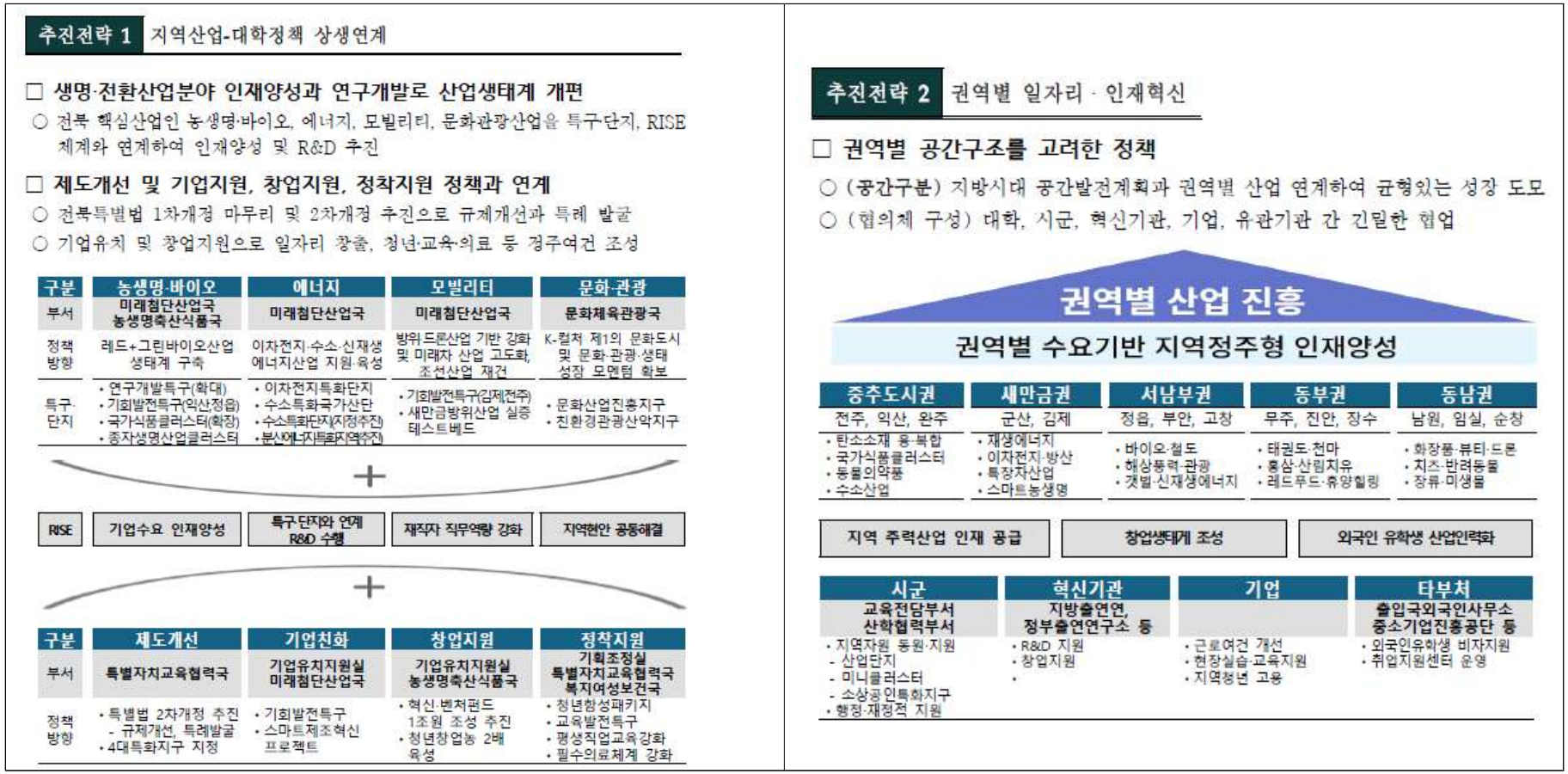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 단위과제명		다부처 여부	사업구분	
			공간범위	비고
1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광역	
	① 생명·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		일반대
	② 미래수요대응 JST 공유대학 육성	○		
	③ JB-RISE 연구클러스터 구축	○		
2	지역 주력산업 성장 (JB-ROOT)		권역	
	①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		전문대
	② JB-스타트업 캠퍼스 구축	○		
	③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3	평생교육 가치 확산 (JB-EverLearn)		권역, 기초	
	①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구축	○		
	② J-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		
	③ 지역산업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		전문대
4	동행협력 지역 발전 (JB-TEAM)		권역, 기초	
	①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		
	② 로코노미 거점 조성	○		
	③ 지역품은 대학-초·중·고교 이음 활성화	○		
	+1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	○		
	+2 지역자원 연계 늘봄학교 지원	○		

<그림 3-15> 교육부 핵심성과지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사업목표 연계

핵심성과지표
① 지역별 대표 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률
② 지산학연 협업실적 증가율
③ 성인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④ 지역 정주취업률 증가
⑤ 지역혁신체제 만족도 증가율
⑥ 대학의 지역경제 영향력 증가율 (IMPACT평가)

목표	프로젝트명	성과지표	단위과제명
특화산업 성장	① 생명·전환산업 혁신	지역 혁신역량 성장률	① 생명·전환산업 특성화 인재양성
			② 수요대응 JST 공유대학 육성
			③ 수요기반 지산학연 연구역량 강화
일자리 경쟁력 성장	② 지역 주력산업 성장	지역 정주 취업 증가율	① 주력산업 밀착형 인재양성
			② 창업·창직 경쟁력 강화
			③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인력부족 감소	③ 평생교육 가치 확산	성인학습자 교육기회 증가율	①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체계 구축
			② J-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③ 지역산업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거점 구축
지역 주민 삶의 질 증가	④ 동행협력 지역 발전	지역주민 만족도	① 지역현안 리빙랩 활성화
			② 로코노미 거점 조성
			③ 지역품은 대학-초·중·고교 이음 활성화
			④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
			⑤ 지역자원 연계 늘봄학교 지원

<그림 3-16> 전북특별자치도 RISE 추진전략



추진전략 3 지역균형 평생학습도시

□ 학습자 친화형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평생교육 가치 확산

○ (성인·학령기 구분 없는 평생교육체계 구축) 학령기 학생과 성인학습자가 융화되도록 설계하고, 연령 제한 없는 학위·비학위 평생교육 운영체계 구축

○ (대학-시군을 넘나드는 자원 공유) 대학과 시군 평생교육시설* 등을 공동 활용

* 모두배움터(모든 시군), 전북 시민대학(6개 캠퍼스)

○ (대학부재지역) 대학이 없거나 역할이 미미한 9개 시군은* 타 지역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커뮤니티 캠퍼스 구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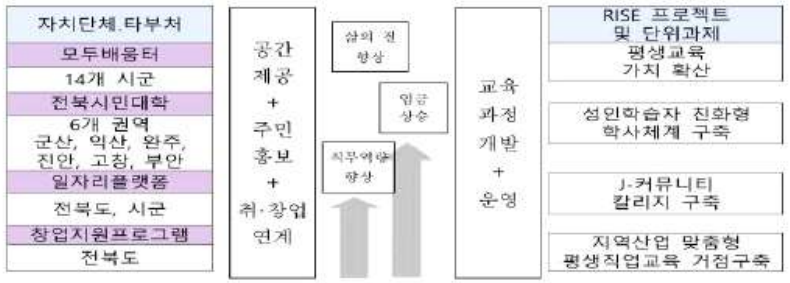
* 소재지내 대학(고등교육법상)이 없는 시군 :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 5대재정지원실적이 없는 대학만 소재 : 임실

□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체계 구축

○ (지역 산업 수요 반영) 시군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산업 분석을 통한 특화분야,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공급 분석 등을 반영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계획 수립

○ (취·창업 연계) 재직자, 구직자, 은퇴자 등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플랫폼과 전북도 기술창업지원·소자본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창업 지원



추진전략 4 공유 · 협업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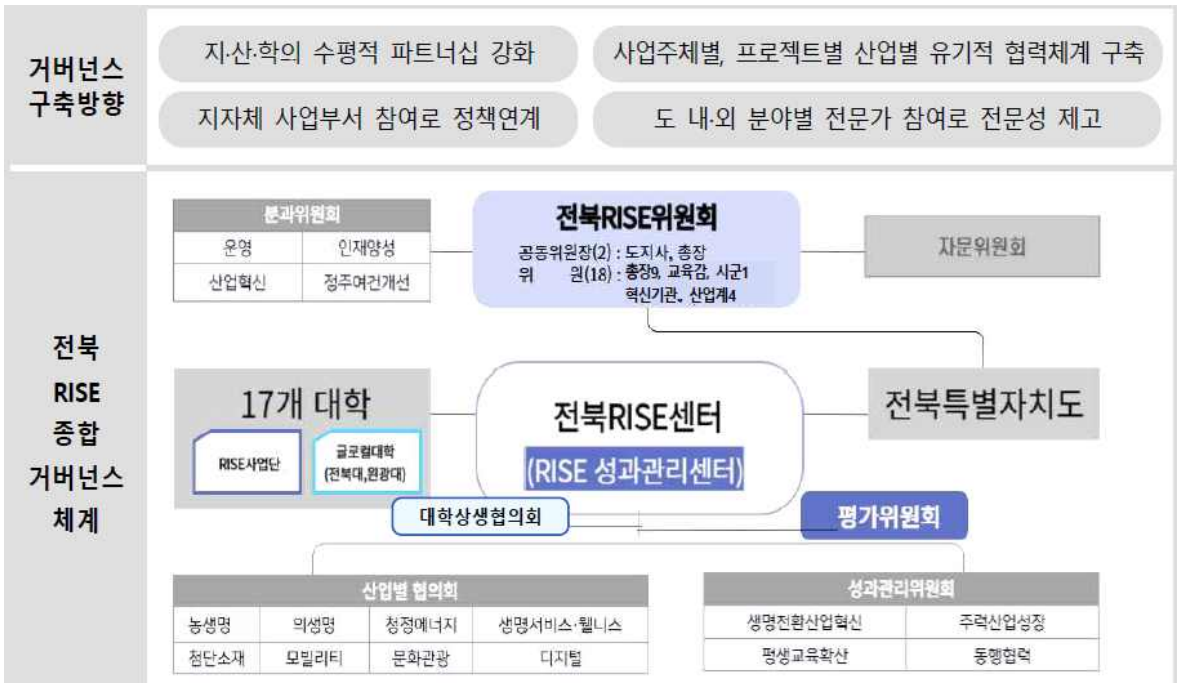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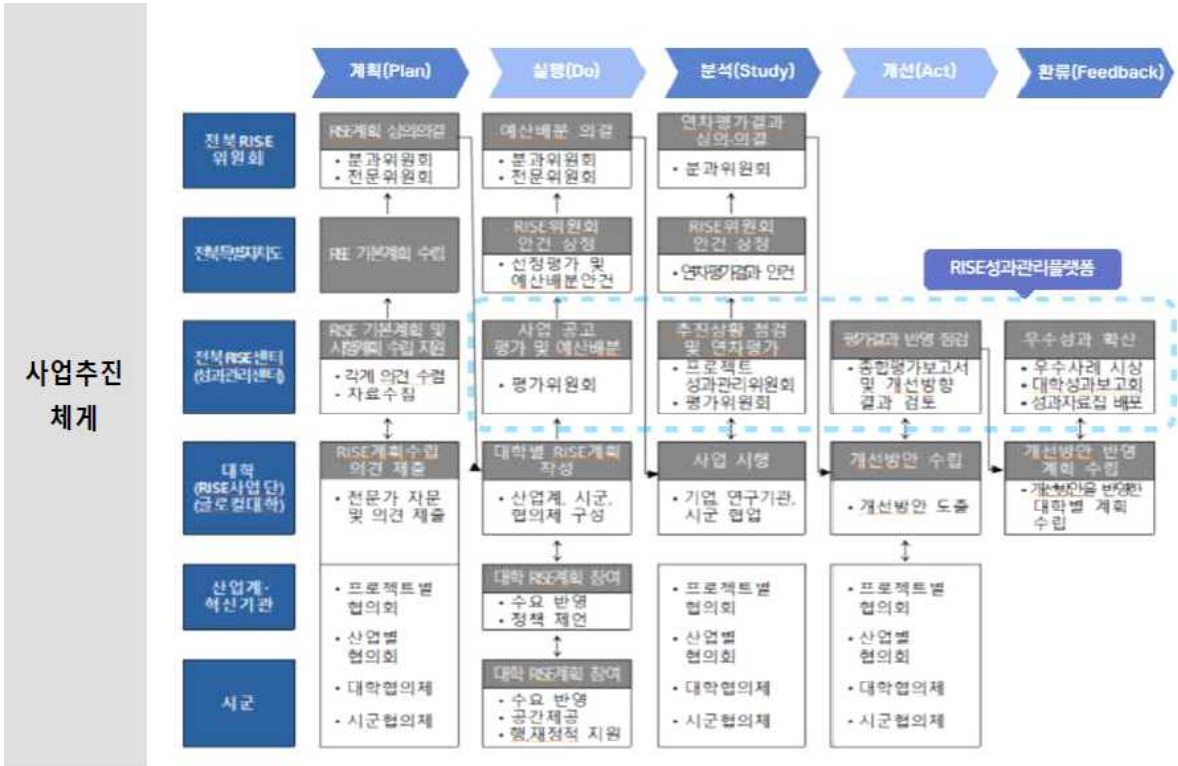
○ 전북도, 시군, 대학, 전문가, 혁신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 회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현안 분석을 통한 공동 목표 설정과 해결방안 도출

□ 대학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및 융합

자치단체	대학	혁신기관	유관기관
• 연계 허브 역할 • 정책화 및 예산 반영 • 시설 공유·개방 • 제도개선 • 재정적 지원	• 정책제안 • 교육지원 • 연구성과의 사업화 • 시설·장비 개방	• 정책제안 • 자문 및 컨설팅 • 연구개발 지원	• 제도개선 지원 •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그림 3-17> 전북특별자치도 RISE 추진체계





제2절 청년정책 국외사례

1. 유럽의 청년정책

1)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

▮ 개요

○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

○ 유럽연합은 2013년 유럽 내 10개국에서 시범적 청년보장 제도를 시작한 이후, 2017년 전 유럽연합 국가로 청년보장 제도를 확대

○ 지난 2020년 10월 EU 이사회는 회원국에서 청년보장제도 강화를 권고했고, 2022년을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함

○ 유럽 내 만15세-24세 청년의 실업률은 2008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부 지중해 연안국가에서 청년실업이 심각하였음

○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13년 EU 청년실업률이 24.4%에 달하자 EU이사회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발표. 이는 청년실업 해소와 장기실업 비활동인구로의 이탈 방지를 취지로 25세 미만 청년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교육, 견습·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

○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 주로 공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프로그램 및 예산

○ 유럽연합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임금보조 및 진로지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3년 유럽의회에서 결정한 청년보장의 주요 목표는 실직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25세 이하의 청년이 고용, 견습, 교육과 같은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여 4개월 내(4개월이 넘어가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업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고 있음

○ EU 기금인 청년고용기금(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

○ 2013년 시행 이후 7년간 2,4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였으며, 2020년 2월 청년실업률이 14.9%까지 낮아짐

○ 2020년 10월 기존 EU 청년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청년보장제도 강화권고'를 내놓았는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대상을 29세까지로 확대, ▲일경험, 성장산업 및 녹색·디지털 관련 기술 습득 등 포괄적 청년 일자리지원, ▲니트 등 취약집단에 대해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강조함

<표 3-28> 유럽국가들의 청년보장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매핑	- 니트의 다양성 이해, 지원 서비스(기술수요 예측포함) 계획 - 니트 위험군에 대한 조기 경고 및 추적 시스템 개발
선제적 접근	- 인식제고 활동 개발,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개발 - 취약계층 중점 전략 개발
준비	- 프로파일링 툴을 이용한 맞춤형 실행계획 수립 - 상담, 지도 및 멘토링 강화 - 디지털 기술 개발 지원, 기술 평가, 개선 및 인정
기회 제공	- 목표대상을 정해 정교하게 설계된 고용 인센티브 제공 - 고용의 질·형평성 보장 위해 현행 기준에 따른 기회 제공 - 배치 후 지원 및 피드백 제공
조력요소	- 모든 정부단위(시민사회 포함) 사이의 파트너십 강화 - 데이터 수집·모니터링체계 개선, 유럽기금의 적절한 활용

자료원 : Isabelle Le Mouilour,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21.12, p.21.

2) 프랑스

▌ 개요

○ 프랑스는 니트 및 일반 청년 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보조-고용지원-기업연계 정책을 추진함

○ 니트(청년수당-미씨옹 로칼-미래고용계약),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 등 이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기업과 연계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기업 지원정책에 초점을 둠

○ 청년보장은 제도가 아닌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전면화된 프랑스 청년보장은 수당, 동반 프로그램, 고용 우선 등의 3가지 요소를 강조

○ 알로까시옹(수당): 기존 25세 이상의 직업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 대상RSA(적극적 연대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알로까시옹은 이와 별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

○ 동반 프로그램: 개별적 상담과 동시에 집단프로그램(상담, 세미나) 진행

○ 고용 우선: '고용이 먼저다'라는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 미씨옹 로칼(Mission Locale)

○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센터로, 타 유럽연합 국가에는 없는 프랑스형 모델 16-25세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1년의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이 겪는 문제인 고용, 건강, 주거에 대한 권리 등 시민으로서 확보되어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

○ 활동의 핵심 개념은 '진입'으로, 단순히 해당 연령대 청년을 위한 일반복지 제공이 아닌, 교육시스템에서 나온 청년을 고용시스템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이 활동 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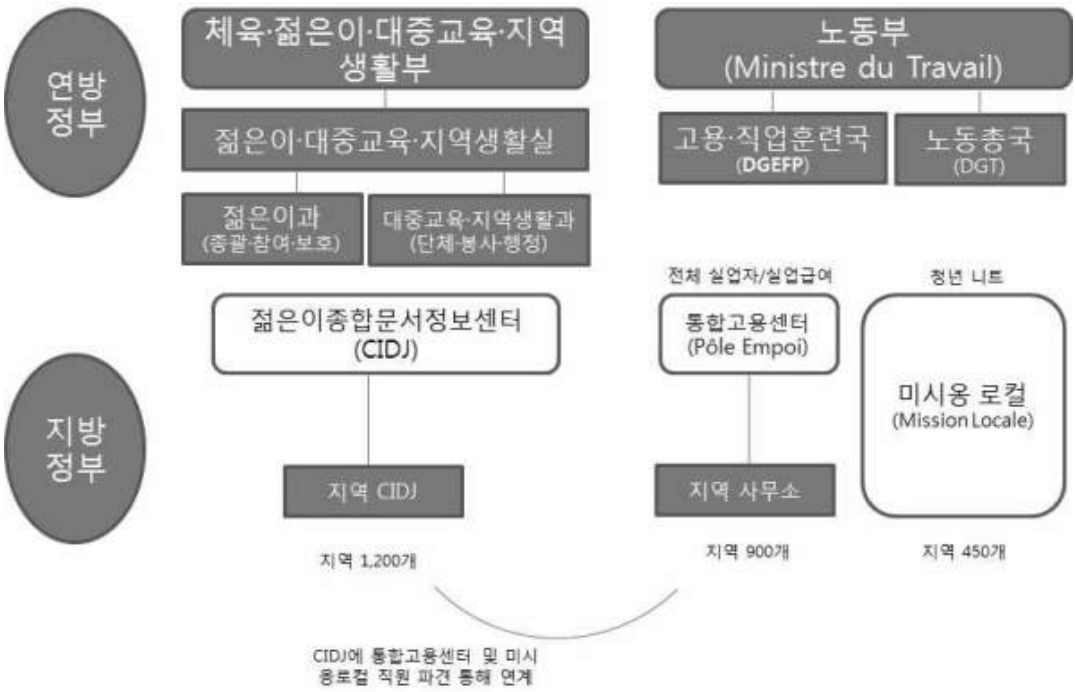
가. 고용

▌프랑스 고용분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으로 통합고용센터, 직업교육과 훈련, 미래고용계약, 견습생제도, 세대간 연대고용계약 등을 들 수 있음

○ 통합고용센터(Pole Empoi)

- 국가고용센터와 지역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던 상공업고용협회가 2009년 통합된 곳으로 주로 실업급여 등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업무 담당
- 전국에 약900여 개의 지점이 있으며 센터별로 40여명의 상담사와 15명 내외의 행정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전국적으로 50,000여명 근무
- 청년 집중지원프로그램을 추진,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취업관리 프로그램으로 개인 역량 및 역할에 대한 재평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업 일자리 연계 등을 추진

<그림 3-18> 프랑스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 직업교육과 훈련

- 자격증 취득 장려, 직업훈련의 질 향상 : 중앙부처, 초급직업 교육 및 훈련, 직업교육고교, 평생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장려

○ 미래고용계약

- 저학력, 저숙련 청년층의 노동시장 최초진입을 돕기 위한 고용 계약

- 고용자, 근로자, 사회적 파트너 등 3자 양해각서 계약을 체결, 경력 획득 유도

○ 견습생 제도

- 기업에 4~5%의 견습생 채용 제도
- 견습생 기업에 보조금, 상여금,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

○ 세대 간 연대고용계약

- 청년들의 무기근로계약 고용, 일자리 유지 또는 시니어 일자리 유지
- 노하우 및 능력의 이전의 3대 목적, 의무적으로 청년과 연장자를 한 팀으로 구성, 기업이 57세 이상 시니어의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26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 계약 1건당 일년에 4,000만 유로를 기업에 지원
- Pôle Emploi에 신청, 청년고용 3개월 후부터 수령 가능

나. 교육

▮ 프랑스 교육분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으로 정부장학금, 우수인재 지원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 긴급지원 국가기금, 학자금 대출 등을 들 수 있음

○ 장학금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장학금

- 학교 내에서 고용을 통한 지원 대부분이 28세 미만 학생들로 나이 제한→ 사회에서 경험이 적어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 제공
-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

○ 우수인재 지원(성적 우수)장학금

- 저소득층 장학금 수혜자들 대상 추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
- 총 지원 금액은 1년 1800유로, 단 학부 입학 시 바깔로레아 성적인 “매우 우수”인 학생에게 지급되며, 최대 3년간 지원
- 석사과정 입학 시 학부과정 최우수 성적이 조건이며, 최대 2년간 지원

○ 해외연수 장학금

- 교환학생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
- 최소 2개월에서 최대 9개월 지원, 월 400유로까지 지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이루어짐

○ 긴급지원 국가기금

- 갑작스러운 가족의 해체나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학 재학기간 동안 긴급지원 국가기금에서 지급
- 학생이 해당 학군의 대학 생활지원센터(CROUS)에 기금을 신청하면 CROUS 국장이 위원회의 의견과 학생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급

○ 학자금 대출

- 프랑스 정부가 보증하는 학생 대출 시스템은 프랑스의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28세 미만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 단 프랑스 국적자 혹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로서 지난 5년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증명할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음
- Societe generale, Credit Mutuel, CIC, Banques populaires, Caisses d'Epargne 등의 은행들이 지원하며, 학생들은 최대 15,000유로까지 대출. 대출 상환 방식은 분할상환, 일시 상환 중 학생이 선택 가능

다. 주거

▮ 프랑스 주거분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으로 차등적 주거수당과 사회주택수당을 들 수 있음

○ 차등적 주거수당

- 보조금 : 가구의 임차료 및 가구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가족수당기금 : 사회보장, 사회보험, 가족수당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 사회주택수당

- 가족주택수당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계층을 위해 도입
-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주거비용, 소유 주택의 개축과 중축시, 주택수당 지급

라. 의료

▮ 프랑스 의료분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으로 학생의료보험제도를 들 수 있음

○ 프랑스 교육부와 프랑스 사회보장기구 Sécurité Sociale과 정식으로 협약된 공인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생의료보험가입이 의무화, 학교등록비 외에 기본사회보장분담금을 납부한 학생들은 의료비용 일부 환급

○ 수혜대상은 만 28세 미만의 학생, 거주지 관할 사회보장기구 국민의료보험 사

무실로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함

<표 3-29> 프랑스 청년정책 현황

구 분		주요내용
교육 : 대학생 대상		• 장학금 : 저소득층, 28세 미만 학생 • 학자금 : 무이자, 정부가 대출금의 최대 70%까지 보증 • 긴급지원 국가기금 : 청년 구호 기금
공공부조 : 청년대상		• 알로카이옹(청년수당, 만 18~25세) : 니트 대상 매월 461.26유로지급 ('16) • 활동연대수당(RSA, '09) • 자산조사급여와 근로연계급여 결합 (취직 후 임금이 최저소득 미만 수혜 가능) •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 청년 대상 • 재정은 국민연대기금에서 지원(조세) • 저소득층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고용 지원	고용 알선	• 대학고용지원센터 無 • Mission Locale을 통한 청년취업지원 : 니트 고용지원 기관(1982) • Pole Empoli(통합고용센터, '09)를 통한 청년취업지원 : 청년 고용 및 실업부조 상담 • 직업교육 및 훈련
	기업 지원	• 미래고용계약('12) : 비영리부문 일자리 창출 • 세대간 연대고용계약 : 계약 기업에게 1인당 1년에 4,000유로 지원 • 수습직원(1,800유로), 직업훈련생(1,000유로), 인턴사원(3,000유로) 고용 시 기업지원('09) • 청년신서비스직종정책(NSEJ) : 공공서비스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그러나 낮은 임금과 정규직 고용 미흡에 대한 비판 제기
주거보조		• 차등적 주거수당(APL) : 임대료와 가족구성에 따라 임대로나 월세 지원 • 사회주택수당(ALS) : 시설에 따라 임대료나 월세 지원 • 가족수당기금(CAF)에서 지원 • 대안적 주거 활성화 : 청년과 독거노인 함께 거주
의료지원		• 국가와 기업주 부담의 국가의료보험과 개인 민간의료보험(보충보험) 운영 • 학생의료보험 가입 : 만 28세 미만까지 의무화

자료 :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3) 독일

▮ 독일은 고용, 교육, 주거 등으로 구분하여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가. 고용

▮ 독일의 청년고용정책의 특징으로 직업훈련, 이원적 직원교육제도, 대학 커리어서비스센터, 고용지원센터, 고용알선, 채용장려금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직업훈련

-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 기여와 청년들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도입
- 대상: 부모와 거주하지 않는 직업훈련생
- 직업훈련 : 사내 또는 사회의 시설에서 진행, 비용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
- 직업훈련수당: 개인 생계수요,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본인 및 부모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수요비와 교통비, 기타비용을 포함해 지급

○ 이원적 직업교육 제도(고졸 청년 대상)

- 교육공간이 직장과 직업학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데, 직장에서는 실습 및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직업학교는 이론적 교육 담당하게 됨
-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지난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에 근거하여 5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한 종류로,5) 직업학교와 기업에서 직업교육훈련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체계
- 주요 목적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서 숙련된 직업 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 지식 및 능력, 즉 직업 역량을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 중 '초기'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전기 중등학교 과정을 마친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년 중 후기 중등학교 과정을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청년고용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며,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 대학 커리어서비스센터(대학생 대상)

- 전국 160개 대학에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를 구축함
- 일반직업 준비 과정 운영 : 취업능력 제고, 취업지원 교과목으로 소통능력 향

상, 멘토링 능력, 직업관련 실습, 해외실습, 커뮤니케이션을 제공

○ 고용지원센터

-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한 것으로 고용지원센터가 급여 신청 및 관리 등의 업무 담당
- 고용알선: 생계보장 관련 급여 지급,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 지역사회지원프로그램 운영 : 마약, 알코올중독자, 파산자, 상담지원과 수급자 동반지원 프로그램 등

○ 직업교육법에 의한 사용주 지원

- 훈련비 지원금 : 기업이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생 대상으로 기초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고용청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 보험료: 훈련생의 총 사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을 지원받음
- 훈련보너스 : 기업이 직업교육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훈련보너스 제공

○ 채용장려금

- 장기실업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기업이 대상자를 채용하여 지급한 임금의 최고 50%내에서 채용장려금 지원
- 보험료 : 최대 12월간 기업부담 총 사회보험료를 지원

나. 교육

▮ 독일의 교육분야 청년지원제도의 특징으로 생활비 지원, 등록금과 장학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생활비 지원(바펙)

- 우수학생들의 학업중단과 청소년의 교육기회 균등, 국민경제 생산성 약화 방지를 목표로 1969년에 교육촉진법 제정
- 일반학교(30세까지 한정, 제2전공자 또는 아이를 양육하는 독신 여성학생의 경우 예외)와 마이스터 교육촉진 제도에 참가한 대상들에게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

○ 등록금과 장학제도

- 독일의 경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창기 재학생 또는 졸업 후 다른 전공을 목적으로 재 입학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는 소정의 등록금 부과

- 장학제도는 학과성적이 일정수준 이상의 우수한 학생이거나, 특정 학과 또는 특정 종교의 신자로 대상자를 제한

다. 주거

▮ 독일의 주거분야 청년지원제도의 특징으로 주거보조제도, 대학생 기숙사 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주거보조제도

- 주거 기회보장을 위해 도입되었고 주거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
- 신청자격은 융자형태의 바펙 수급자, 휴학 또는 바펙 지원 학기를 초과해 재학 중인 자로 개인별 실제 주거비에서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의 크기 등을 반영하여 지원

◈ 공동주거(Wohngemeinschaft)
☞ 공동주거는 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주거형태인데, 집에 딸린 침실의 개수가 집에 사는 사람의 수를 결정하며, 거실·주방과 같은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 비용이 적게 들어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편화

자료 : [요즘 트렌드]해외의 청년정책동향, 지방정부TVU, 2018. 08.27
박민규, 김세나, 박경숙, 박현정, 이재필, 조득환(2021),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구경북연구원, p. 12

○ 대학생 기숙사

- 1인형 규모의 소형아파트, 부부가족기숙사 등 다양하게 운영, 비용은 시중 가격에 비해 저렴

<표 3-30> 독일의 주요 청년 정책

구 분		주요내용
고용지원	고용알선	• 직업훈련 : 청년들의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도입 • 이원적 직업교육 제도 : 교육공간이 직장과 직업학교 이원화 • 대학 커리어서비스센터 •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	• 직업교육법에 의한 사용주 지원 • 채용장려금
교육 : 대학생 대상		• 생활비 지원(바펙), 등록금과 장학제도
주거보조		• 주거보조제도 : 주거비용의 일정부분 지원 • 대학생 기숙사 : 1인형 규모 소형아파트, 부부가족 기숙사 등 운영

자료 :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박민규, 김세나, 박경숙, 박현정, 이재필, 조득환(2021),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구경북연구원, p. 12

4) 영국

▌ 영국은 고용, 교육, 주거 등으로 구분하여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가. 고용

▌ 영국의 고용분야 청년지원정책은 견습제도, 잡센터플러스,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 학생들의 일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음

▌ 견습제도(Apprenticeship)

○ 실업률을 낮추고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청년을 흡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정을 통한 견습제도 실시

○ 24세 이하의 직업이 없고 경력이 거의 없으나 취업이나 6개월의 수습직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은 훈련제도를 시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 훈련과 현장실습 기회 제공

○ 2015-2019년까지 1,806,500개의 견습제 시행

○ 견습제도의 주요내용

- 훈련비용 : 소규모 기업들이 견습생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파운드씩 보조
- 과세 : 연간 임금 총액 300만 파운드가 넘는 기업 대상 임금 총액의 0.5%과세
- 바우처 사용 : 납부한 견습세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기업에게 지급하여 견습생 고용비로 사용

▌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

○ 고용연금부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700여개 존재

○ 잡센터플러스 직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12-18세 학생들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한 직업선택과 훈련기회(견습생이나 훈련생제도 등)에 대해 안내, 1:1상담도 포함 또는 학생들이 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

▌ 워크 프로그램(Work Program)

○ 워크 프로그램은 영국정부의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Welfare-to Work)'프로그램임

○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장기실업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해서 구직을 돕는 것이 목적

○ 2021년 시작, 구직자수당을 받은 실업자의 실업 상태가 12개월이 넘으면 잡센터는 대상자를 외부 워크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위탁

○ 대상자가 청년인 경우, 그 위탁시기가 앞당겨지고, 18~24세의 경우 9개월, 18세 NEET청년의 경우 3개월 후에 워크프로그램 시작

▌ 학생들의 일 경험(Work experience) 프로그램

○ 10학년(14세)이 되면 학생들은 일 경험이 가능한 사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출근해서 일을 함.

○ 16세 이상 학생들의 일 경험 프로그램은 좀 더 체계적임. 청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용주에게 스스로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를 주며, 작업장에서 필요한 태도와 행동을 익히게 함.

○ 16~19세의 모든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른 활동은 정부 교육기금이 보조하므로 학습계획에 포함된 일 경험은 교육기금의 보조를 받음.

나. 교육

▌ 영국은 학교졸업예정 대상 정책 및 서비스는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학교급에 따른 별도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음

○ 참여연령 상향(PPA: Raising the Participation Age)정책

- 청소년이 최소한 18세 생일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고 정규교육과정, 직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을 결합한 파트타임 교육, 또는 견습제나 훈련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

○ 16~19세 청소년을 위한 보상기금

- 2011년 교육유지수당을 대체한 정책으로 16-18세 청소년에게 16세 이후
- 필요한 교재비, 교통비, 기타 교육관련 제반 비용 제공

다. 주거

▮ 영국의 주거분야 청년지원정책의 특징으로 공유주택과 학생주거수당을 들 수 있음

▮ 공유주택(HMO,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 한 주거 형태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 비혈연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

○ 공유주택에는 부엌, 거실, 식당과 같은 공용공간을 공유하되,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 공유주택은 대개 단독가구 주택에 비해 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 학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행태로 주거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영국의 HMO는 최저주거기준과 최소 공용면적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방, 부엌, 세면시설 등의 기준에 대해 다양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둠

▮ 학생 주거수당

○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그만 둔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지원

○ 주거수당의 수혜조건

- 시간제 학생
- 한 부모(편부모)이거나 미혼모, 미혼부
- 수업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 구직수당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한 수당(ESA)
- 장애를 가진 학생(시각장애로 등록되어 있거나, 청각장애로 수당을 받는 학생 포함
- 아이가 있고 배우자가 전일제 학생인 경우
- 최대 21년 동안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21세까지 교육과정에 속하지 못한 사람)
- 20세 이하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학생
- 연금 크레딧을 받을 나이에 이른 학생(배우자가 연금 크레딧을 받거나)
- 이전에 지병 등으로 대학 재학 중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

○ 연령별 최저 임금 도입

○ 25세 미만은 주당 £ 56.25 구직자 수당 (25세 이상보다 적은 금액)

○ Job Seeker's Allowance : 단, 구직활동 노력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 보고하지 않을시, 수혜자격 박탈

2. 일본의 청년정책

▌ 일본의 청년정책의 특징

○ 일본은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프리터(정규직 이외의 취업 형태인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나라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 등 차별화된 정책을 제공함

○ 일본은 전 대상의 청년이 아닌, 니트·프리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

○ 일찌감치 청년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참고할 수 있음

▌ 지역 내 니트 청년에 대한 입체적 지원

○ 청년 니트족에 대한 주요 지원은 지역 서포트스테이션과 청년자립스쿨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실태조사와 분석에 근거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수립함

○ 지역사회의 제3섹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상호 거버넌스도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니트 청년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구직형/실업자형, 비구직형/무기력형, 비희망형/은둔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자원들을 연계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음

1) 고용 분야

▌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

○ 일반대학 재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자체기구

○ 진로상담 : 대학 1~4학년 졸업시점까지 재학생의 취업을 위한 개별 상담 및 세미나 등 실시

○ 인턴쉽 : 일정 학점을 인턴쉽 제도와 연계하여 기업경험, 기업정보획득 실시

○ 취업상담 : 이력서 작성, 면접 훈련 등 지원

▌ 잡카페

○ 경제버블 붕괴 후, 취업 빙하기 도래로 인해 '청년자립도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

○ 재정지원 : 각 지자체별 성과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년 취업지원

○ 고용알선 : 중소기업의 장점을 홍보하고 중소기업과 청년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재확보

▌ 잡카드제도(직업능력형성시스템)

○ 프리터족, 자녀 양육후의 여성, 모자가정의 모친을 대상으로 직업 향상 능력을 제공 및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도입

○ 유기실습형 교육 : 실습 및 기타 기업 정규직을 목표로 함

○ 실천형인재양성 시스템 : 현장핵심 인재 육성

▌ 듀얼 시스템

○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을 연계하여 추진

○ 문부과학성 모델 : 재학생 대상의 1주 인턴쉽

○ 후생노동성 모델

○ 교육훈련기관 주도형 : 훈련기관이 청년을 선발하여 실습기업과 훈련계획 설정

○ 기업주도형 : 기업이 청년을 훈련생으로 선발해 단기고용으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해 기업과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교육 실시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니트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 지역커뮤니티 단체에 위탁하여 전국에 160개소 설치, 전문적인 상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활동 추진

○ 종합상담, 개인별 면담을 통해 지원프로그램 계획 후 다른 취업지원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청년자립스쿨

○ 1년 이상 일이나 구직활동의 실적이 없고 학교교육,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40세 미만의 미혼인(니트)에 대한 취업지원

○ 합숙형태 공동생활 : 일부 본인부담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참가비용을 감면함

○ 3개월간 합숙생활을 하여 생활훈련, 직업체험프로그램 제공

▌ 트라이얼 고용지원 장려금

○ 안정적인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의 조기취업 실현과 고용기회 창출 도모

○ 고용장려금 지급 : 헬로워 워크 및 직업소개 사업자 등의 소개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청년고용촉진법 인증제도**

○ 청년친화적인 중소기업을 후생노동대신 인증하여 청년 고용촉진 추진

○ 기업홍보 : YOUNG 헬로우 워크나 신규졸업자 헬로우 워크, 후생노동성의 청년 채용 육성에 적극적인 기업등에 관한 포털사이트 등에서 인증기업 홍보

○ 면접회 참여 : 각 도도부현 노동국, 헬로우 워크가 개최하는 면접회 등에서 안내를 통해 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구직자와 접할 기회 제고

○ 인증마크 사용 : 인증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인증 마크 활용

▌ **청년응원선언 기업**

○ 35세 미만 채용 육성을 위한 구인 및 모집 시, 일반 채용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공표하는 중소기업을 '청년응원선언 기업'으로 선정

○ 기업홍보 : 후생노동성의 청년의 채용 육성에 적극적인 기업등에 관한 포털사이트에 기업정보 제시

▌ **채용정착 장려금**

○ 기 졸업자나 중퇴자의 취업지원 기회확대 및 채용과 정착 도모

○ 미취업 졸업생, 중퇴생 대상 신입 구인신청 또는 모집 촉진 및 채용 후 일정 기간 정착시킨 사업주 대상 장려금 지급

2) 교육분야

▌ **문부과학성 산하기관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학자금 대출제를 운영하며 무이자의 제1종 장학금과 무이자의 제2종 장학금, 2가지 운영 중임**

○ 현재의 소득에 무관하게 일정 금액 매달 상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연체자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 대학 진학자부터 대학졸업 후 소득과 연동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개선함

3) 주거분야

▌ **청년 이직자 대상의 주택수당**

○ 고용이 정지되고 사원주택 혹은 기숙사 등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주거를 상실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취로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6개

월간 집세 보조

○ 파견고용 계약 해지로 인해 일자리 및 주거를 상실한 청년대상 연립주택 제공

○ 프리터노조의 재원을 기반으로 연립주택 임대 및 수리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가능

○ 주변보다 저렴하게 월세 책정 및 보증금은 프리터 노조의 연대보증으로 면제

<표 3-31> 일본의 청년지원정책

구 분		주요내용
고용	고용 알선	• 대학 재학생 :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 → 진로상담, 인턴쉽, 취업상담 • 니트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청년자립스쿨
	기업 지원	• 프리터 : 잡카페를 통한 청년트라이얼사업 • 직업능력개발 : 듀얼시스템, 잡 카드(직업능력형성시스템) • 트라이얼 고용지원 장려금 • 프리터의 정규 고용확대를 위해 특별장려금을 프리터와 기업에게 지급
교육 : 대학생 대상		• 학자금 : 자산조사 기반 대출제 운영
주거		• 주택대부 : 해고, 장거리 이직 대상의 취업안전자금 융자기금 운영, 주택수당 긴급특별조치 • 니트 : 청년자립스쿨 • 프리터를 위한 자유와 생존의 집 : 프리터 노조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표 3-32>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지원 사업 개요

과제인식		사업	운영형태
은둔형	경험활동	청소년상담센터	요코하마 시 직영
의욕 부재형	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서포트 스테이션	국가가 운영비 지원/요코하마시가 인건비 부담 민간위탁 운영
		청년자립스쿨	국가와 요코하마시의 예산지원 민간위탁 운영
		지역 유스플라자	요코하마시가 예산지원 은둔형과 의욕부재형 동시 지원
실업자형	정보 및 교류, 지원		기업지원/NPO 운영 시와 공동프로그램 개발

제3절 청년정책 국내사례

▮ 국내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위원회 운영, 정책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규모와 역량에 따라 예산 등 시행 규모는 편차가 매우 큰 편임

▮ 일자리 분야, 주거분야, 청년공간분야 등으로 주요 지자체의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일자리 분야 정책사례

▮ 일자리 분야 광역지자체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경상북도의 청년애꿈 수당, 대구광역시의 대구청년수당과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제도, 청년보장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더큰내일센터, 경기도(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음

가. 서울특별시의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으로 1년 이상 서울시에서 사업을 운영해온 법인, 단체, 기업(영리·비영리 무관)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 사회적 자원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개척, 민간투자유치 등 지원함

▮ 양천구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타격
-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 증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소상공인-주민 간 상생 실현 방안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 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양천구민, 항공기소음피해지역거주

자, 디자인툴 사용가능자, 프로젝트 유경험자 우대) 20명

- 사업 예산 : 317,381천원(시비)
- 사업 내용 :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

○ 주요내용

- 24명의 청년을 '디지털 서포터즈'로 고용, 관내 소상공인 업체 86개소에 배달앱 이용, 온라인 스토어 입점 및 운영, SNS 마케팅 등의 디지털 전환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1대1 방문) : 배달환경 구축,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등
- 디지털 크리에이터 센터 운영 : 소상공인 홍보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디지털 전환 현황·인식 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 관내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사업 DB구축
- 민간기업 협업 추진 : 제로배달앱, 예약시스템, 온라인홍보 지원(허니비즈, 테이블매니저, (주)나인스)
- 양천구 디지털 특화거리 조성 등 프로젝트/홍보 콘텐츠 제작 및 라이브커머스 준비

○ 성과 및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실제 매출상승 연계로 소상공인 판로개척, 매출 60배 상승 효과
- 서포터즈 활동 블로그, SNS에 게시된 264건 게시물 누적 조회 수 2천회 기록
- 외부 업체 지원 없이 라이브 커머스 행사 개최/1시간 영상 송출을 통해 27건의 주문, 85만원 판매수익 달성
-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21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나. 경상북도의 청년애꿈 수당

▌경상북도의 일자리 분야 정책사업으로 경북 '청년애꿈 수당'을 들 수 있음

○ 경북 '청년애꿈 수당' : 면접, 취업 성공, 근속장려 수당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취업 활동 지원으로 근로 의욕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경상북도 청년들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창업·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의 창업인재 발굴 및 초기 창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생애 최초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20대 청년에게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 종료 후에는 상위 10% 이내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다음연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 평가 면제권을 부여함

<표 3-33>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 사항

구분	내용
면접수당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 지원내용: 면접 1회당 7만 원(최대 5회, 35만 원)
취업성공수당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19세~39세 취업 성공 청년 - 지원내용: 50만 원(1인당 1회 한정)
근속장려수당	-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19세~39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 - 지원내용: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1인 1회 한정)

자료원 : 경북청년애꿈수당 홈페이지 청년애꿈수당.kr

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분야 정책으로 대구청년수당과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제도, 를 들 수 있음

○ 대구청년수당(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니트(NEET)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사회 진입을 위한 상담, 진로 탐색, 일 경험을 지원함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대구에 주소를 둔 고등·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취업청년 1.5만 명에서 20만 원을 지원함

<표 3-34> 대구청년수당 주요내용

구분	내용
상담 연결형	-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미취업청년을 위한 1:1 맞춤상담과 설문조사 과정을 완료한 청년에게, 사회진입활동지원금(청년수당) 30만 원 지급 - 모집인원: 매월 200명 선착순(연간 2,000명)
진로탐색 지원형	- 지원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세~39세 청년 - 지원내용 : 진로와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과별 운영으로 재능개발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및 수당 지급 - 수당지급 : ① 프로그램(1~2개월) 수료 → ② 활동계획서 작성 → ③ 수당지급(대구시) → ④ 4개월간 지원금(150만원) 사용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모집인원 : 반기 100명(연간 200명)

자료원 : 경북청년애꿈수당 홈페이지 청년애꿈수당.kr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 '청년보장제'란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기 이내에 양질의 고용, 지속적 교육, 견습 또는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

○ 시민권 사상에 기초하여 일자리보장(Job Guarantee)을 청년층에 적용한 제도로서 국가가 모든 청년의 고용 및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함

○ 청년의 생애이행과정(교육기 → 사회진입기 → 직업기 → 안정기)별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소득·문화·주거 등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운영

○ 역점분야는 사회진입기에 있는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청년, 니트청년들의 사회진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임

<표 3-35> 대구시 청년보장제도 주요 내용

생애이행단계별 핵심계층	프로젝트	지원방향	지원정책
대학생 (교육기→ 사회진입기)	청년도전 프로젝트	- 대학생활 지원, 취업준비, 국내외 교류활동지원으로 대학생의 사회진입역량제고	- 글로벌인재양성 - 취/창업지원 - 대학생활지원
취준생·알바·니트 (사회진입기→ 직업기)	청년희망 프로젝트	- 졸업생, 구직포기자 등 장기 니트(NEET)화 되지 않도록 사회 진입활동 집중지원	- 대구형 청년수당 - 진로탐색/일경험 - 청년알바돌봄
취업·창업청년 (직업기→안정기)	청년행복 프로젝트	-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창직 등 다양한 사회진입경로 지원과 결혼, 주거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 자산형성 - 창업 및 창직 - 결혼 및 주거 - 예술가 지원
지역활동청년 (전주기)	청년자강 프로젝트	- 청년들에게 활동공간과 대구의 도시와 사회를 무대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 지원	- 공간조성 - 사회참여 - 지원기반강화 - 청년문화
출향청년 (전주기)	청년귀환 프로젝트	- 학습과 현장체험으로 대구청년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출향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홍보	- 대구청년 정체성찾기 - 청년유입지원

라.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더큰내일센터

○ 청년의 취업·창업 지원 및 혁신적 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9년 9월 센터 개관

○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체 재원 3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 150명 가량의 만 15~34세 도내외 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 지역최초 도외 청년 선발하여 프로그램 제공(총 선발 인원의 25%이내)

○ 6개월간 교육훈련(기본), 6개월 간 일경험(심화), 12개월 간 취창업(실행) 등 청년의 취·창업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센터 프로그램 참여기간인 최대 2년 동안 훈련 및 프로젝트 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포함해 동료 커뮤니티 형성, 멘토·기업·조직과의 커뮤니티 확장 등 지원

<그림 3-19> 제주더큰내일센터 지원내용



자료원 : 제주더큰내일센터 홈페이지(https://www.jdnc.or.kr/programInfo.do#a)

<그림 3-20>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훈련 프로세스



자료원 : 제주더큰내일센터 홈페이지(https://www.jdnc.or.kr/programInfo.do#a)

▮ 청년인재 육성정책

○ 전국 최초 '청년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제주청년에게 도전과 성장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인재의 체계적 육성 추진

○ 청년정책 수립 기초자료인 '제주청년통계' 개발 및 공표

○ 신기술·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ICT·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등 추진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2018년부터 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일하는 청년 제주로' 사업을 시작으로 '제주 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사업', '이주 청년 레벨업 지원사업',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제주형 청년인재 육성사업', '제주형창업청년 육성사업', '제주형 청년 R&D 인력 육성사업', '제주 산업단지 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추진

- 또한 '제주형 청년 R&D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매칭을 돕고 있으며, 인건비, 교육, 교통비, 행복포인트, 네트워킹 5가지 분야의 지원으로 월 180만 원의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마. 경기도(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

▮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3개 정책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 일하는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재직자가 장기근속하는 경우, 목돈(1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 재직(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7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중소제조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내 중소제조기업에 재직(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지원방법 : 참여자 납부액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매칭하여 지원(참여자 월별 납부액 10, 20, 30만 원 중 택1), 1인당 최대 3,600만 원 지원(참여자 월별 약정 납부액에 따라 차등지원)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지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250만 원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86,710원 이하)인,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수혜이력이 있는 자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해지자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동일사업장 근속기간별로 차등지원, 3개월마다 복지포인트 지급
- 지원금액 : 연 120만 포인트 /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2. 주거분야 분야 정책사례

가. 경기도 : 경기행복주택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주거비 경감을 목적으로 주택과 더불어 지역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임

○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8%(대학생 또는 소득이 없는 청년) 이상, 80%(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이하로 하여 임대료 할인방법에 의한 지원임

○ 경기행복주택 지원 대상자에 따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6년 이내, 신혼부부는 6년 이상 10년 이내,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 이내로 한정함

○ 임대조건

- 임대수준 : 입주대상별 6년 ~ 20년 거주(2년마다 재계약)
- 임대기간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수준

○ 자산기준

- 대학생 : 총자산기준 10,000만원 이하, 차량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기준 27,3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 등 : 총자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차량 3,708만원 이하
- * 출산자녀에 따른 가산 적용 기준은 모집공고문 참조
- 소득기준(2024년 월평균소득기준)

○ 신청방법

- 사업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청약센터 및 방문신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 GH 경기주택도시공사(https://apply.gh.or.kr)
  - LH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표 3-36> 경기행복주택 자산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없는 가구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자녀 1명 있는 경우(+10%p)		자녀가 2명이상 있는 경우(+20%p)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일반	맞벌이
1인	4,179,557원 이하	-	-	-	-	-
2인	5,957,284원 이하	7,040,426원 이하	6,498,854원 이하	-	-	-
3인	7,198,649원 이하	8,638,379원 이하	7,918,514원 이하	9,358,244원 이하	8,638,379원 이하	10,078,109원 이하
4인	8,248,467원 이하	9,898,161원 이하	9,073,314원 이하	10,723,007원 이하	9,898,160원 이하	11,547,854원 이하
5인	8,775,071원 이하	10,530,086원 이하	9,652,578원 이하	11,407,592원 이하	10,530,085원 이하	12,285,099원 이하
6인	9,563,282원 이하	11,475,940원 이하	10,519,610원 이하	12,432,267원 이하	11,475,938원 이하	13,388,595원 이하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하여 산정

<표 3-37> 경기행복주택 임주자격 및 선정 순위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본인은 80%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 부부	신혼 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나. 충청남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추진배경

-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
-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정책은 수도권에 집중, 수요 충족에도 한계
- 2017년 통계청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혼인 건수와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혼인계획 시 주거를 1순위로 고려하나 신혼부부의 주거는 취약함
- 또한, 신혼부부는 60㎡~85㎡ 규모를 제일 선호함
-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공급과 육아 맞춤형 설계로 결혼·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 공급유형 : 행복주택(국토교통부) 유형을 기반으로 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 공급계획 : 선도사업 1,000호 추진(건설형 900호, 매입형 100호)
  - 건설형 : 아산(600호), 당진(85호), 천안(40호), 예산(75호), 홍성(75호), 서천(25호)
  - 매입형 :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중심으로 매입·공급 추진
- 사업비 : 총 2,404억원(국비 338, 도비 1,067.5, 기금 451, 기타 547.5)

○ 주요내용

- ‘더’ 주거비 부담을 낮춤
  - 임대조건 :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최대 15만원
  - 거주기간 : 기본 6년,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
  - 입주자격 :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7년 이내), 청년, 저소득층 등
-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함
  -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6㎡형, 2인 가구는 전용면적 44㎡형 이상 제공
  - 층간, 세대 간 소음 저감 구조를 강화하여 입주민 간 분쟁 예방
  - (디자인 특화) 가구 구성원 변화 등에 맞는 가변형 구조 설계
- ‘더’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함
  -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 관리 효율성 증대
  - 냉난방, 전기 설비 등은 신자재(특허제품) 고효율 설비 적용, 에너지 절약

실천

- 단지 내 충분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시설 설치
-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부부교육 → 출산지원 → 안심육아)

다. 경상남도 반값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 추진배경

- 2020년 도내 청년인구(만 19~34세)는 2001년 85만명에서 2020년 59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도 27.3%에서 17.8%로 감소함.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출되는 도내 청년인구 발생으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 필요
-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하고 2026년까지 청년인구 유출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수립
- 청년가구 66%가 임차형식으로 주거 안정성 열악한 실정

○ 사업개요

- 사업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 중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645,147원) 이하인 자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취업준비생(대학생 제외)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청년계층(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및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사업 예산

- 거북이집 2호 200,000천원(기업 기부금 1억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 거북이집 3호 400,000천원(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 주요 내용

- 청년계층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와 주거비 절감을 위해 주거공간을 공유
  - 거북이집이란? 거북이는 집을 등에 이고 다닌다, 크고 호화로운 집은 아니지만, 누구나 1인 1주택으로 경남 청년들에게도 거북이처럼 1인 1주택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로 아직은 느릿느릿 앞으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토끼를 넘어설 거라는 희망을 주는 집

- 지어진 지 25년 이내 대학가·공단 등과 가까운 곳의 5가구 이상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민간기업이 1억원을 들여 선정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입주자에게 주변 시세의 50%의 임대료 부과하고, 거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소 1년,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성과 및 기대효과

- 창원에 1호, 김해에 2호, 고성읍에 3호 개소, 공공기관 혁신 사례 선정, 우수상 수상
- 2021 제4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년주거복지부문 대상 수상

3. 청년공간분야 정책사례

1) 청년센터 현황

▮ 전국에는 총 215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4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4개, 부산 18개 등의 순으로 조사됨(온통청년 홈페이지 기준,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 서울 : 34개
○ 부산 : 18개
○ 대구 : 13개
○ 인천 : 10개
○ 광주 : 12개
○ 대전 : 8개
○ 울산 : 7개
○ 경기 : 44개
○ 강원 : 5개
○ 충북 : 6개
○ 충남 : 8개
○ 전북 : 12개
○ 전남 : 12개
○ 경북 : 11개
○ 경남 : 9개
○ 제주 : 5개
○ 세종 : 1개

▮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12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중임

○ 전북특별자치도내 총 12개소(전주4,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2, 부안)
-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 전주시 청년이음전주, 전북청년허브센터
- 김제시 김제청년공간 E:DA(이다)

- 남원시 남원청년마루 청년센터·창업센터
- 부안군 부안청년UP센터
-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
- 익산시 익산청년시청
-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표 3-38> 전국 청년센터 현황

(단위 : 개, %)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청년센터(개)	34	18	10	13	12	8	7	1	44
구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
청년센터(개)	6	8	12	11	9	5	12	5	215

2) 경기도 : 청년공간 및 창업공간 조성사업

▮ 경기도 청년공간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정보교류로 실업극복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카페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취·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 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청년(18세이상 39세이하)의 취업준비, 창업준비, 휴식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임

○ 취업 및 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아카데미,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학자금, 생계비 등),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수원, 시흥, 하남, 고양, 광명, 안양, 여주시 등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공간, 세미나룸, 일자리카페 등 설치함

▮ 경기도는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가 설립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임

○ 센터에서는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등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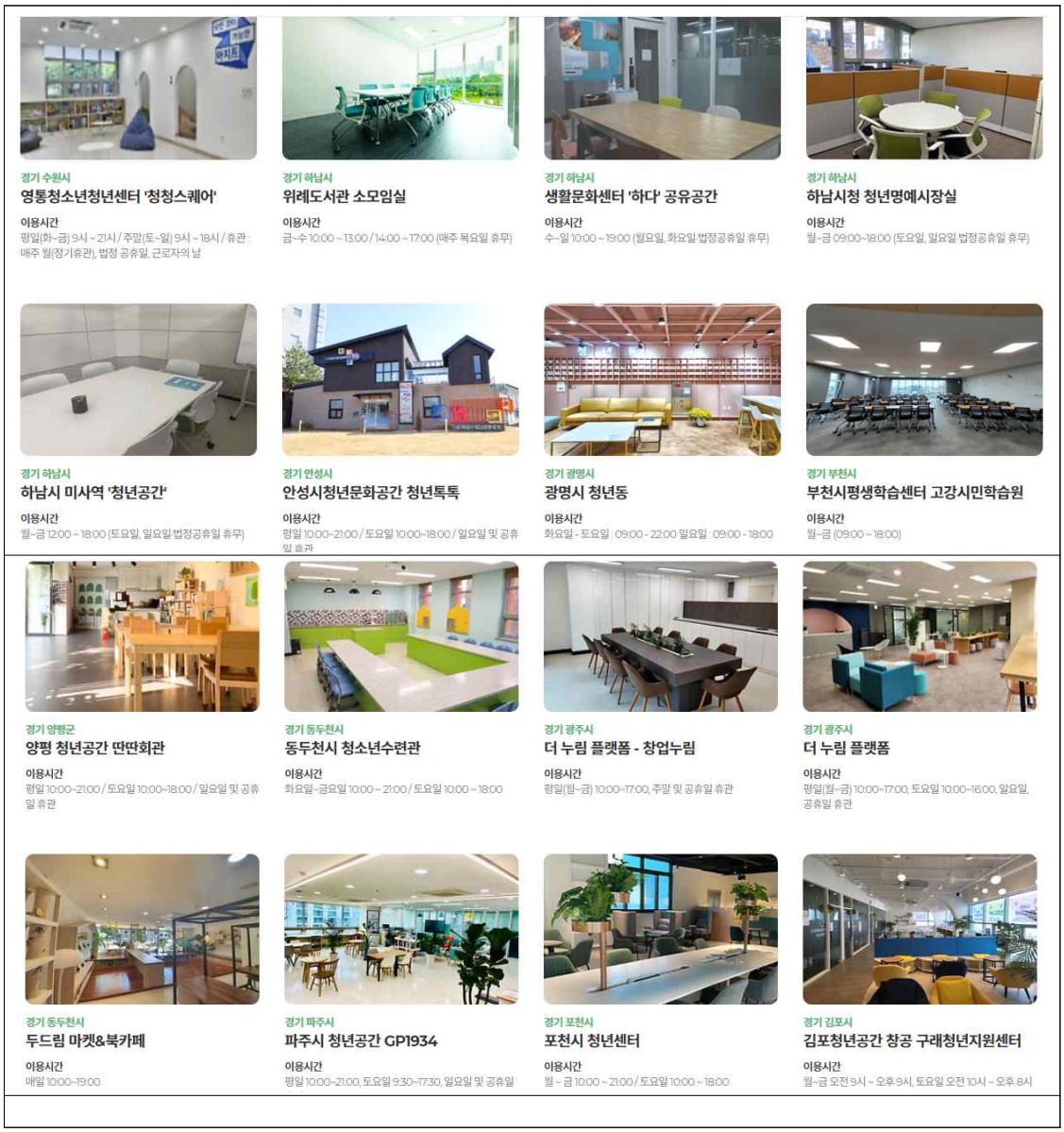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일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취업준비생, 대학생

○ 지원내용

- 경기 남부(판교, 광교)와 북부(의정부), 서부(시흥), 서북부(고양), 서남부(광명) 지역 6개 허브 운영
- 스타트업 육성, 공간지원, 창업자금 지원, 역량 강화 등

▮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은 총 80곳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에 설치되어 있음(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gg/index.do)

<그림 3-21> 경기도 청년공간 현황





경기 수원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이용시간
평일 09:00 ~21: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경기 의왕시
청년발전소 포일센터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 공휴일 휴관



경기 화성시
화성시 청년지원센터 HEY
이용시간
월, 금 09:00~18:00 / 화, 수, 목 09:00~21:00 / 토: 10: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성남시
성남일자리센터
이용시간
평일 9:00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경기 성남시
판교역 창업카페
이용시간
평일 9:00 ~21:00, 토,일 공휴일 휴무



경기 과천시
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이용시간
월화목금 10:00~21:00 / 수 10:00~18:00/ 토요일 10:00~16:00 /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휴관



경기 양평군
양평청년공간 오름
이용시간
화~금 10:00~21:00(토요일 10:00~17:00,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청년공감터
이용시간
평일 10:00~21:00 / 토요일 · 10:00~16: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경기 연천군
연천군 청년센터
이용시간
평일(월~금) 9:00~21:00, 주말 및 공휴일 휴관



경기 평택시
평택시청년지원센터 청년쉼,표
이용시간
평일 10:00~21:00 / 토요일 10:00~17: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양주시
양주시청년센터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토/공휴일 휴무)



경기 용인시
용인청년LAB 수지
이용시간
평일 10:00~22:00 / 토요일 10: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용인시
용인청년LAB 기흥
이용시간
평일 10:00~22:00 / 토·일요일 10:00~18:00 / 공휴일 휴관



경기 용인시
용인청년LAB 처인
이용시간
평일 10:00~22:00 / 토요일 10: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누리
이용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 ~ 18:00 (월,공휴일 휴무)



경기 포천시
경기가구창작스튜디오
이용시간
평일 9:00 ~ 18:00



경기 여주시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푸릇'
이용시간
평일(월~금) 10:00~21:00 토 09:00~17:00 일요일, 공휴일 휴관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시 일자리카페
이용시간
월-금 10: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경기 군포시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



경기 의왕시
의왕시 청소년수련관 - 꿈누리카페
이용시간
화 ~금 12:00~21:00 / 토, 일 10:00~18:00(매주 월, 공휴일, 둘째주 일요일 휴무)



경기 의왕시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이용시간
-



경기 김포시
김포청년공간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이용시간
월~금 : 오전 9시 ~ 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경기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
월~토요일 9:00~21:00



경기 고양시
28청춘 창업소(청년 창업공간)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경기 가평군
가평문화창작공간 얼쑤공장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이후 시간 담당자 협의)



경기 화성시
청청당당
이용시간
평일 10:00 ~ 19:00 평일야간 (수,금) 22:00



경기 구리시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이용시간
평일 09:30~21:00/ 토요일 09:30~18:00



경기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
이용시간
화-일 10:00-18:00(월요일, 공휴일 제외)



경기 수원시
수원청년센터 U room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경기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성장관)
이용시간
월~금(09:00 ~ 18:00)



경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창업관)
이용시간
월~금(09:00 ~ 18:00)



경기 수원시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바람지대
이용시간
평일 10:00~21:00 / 토요일 10: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부천시
부천IOT혁신센터[그라운드 21]
이용시간
주중(월~금) :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경기 부천시
원미청정구역
이용시간
평일 07:00~22:00 / 주말 07:00~22:00 /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부천시
고리울청소년센터
이용시간
화~금요일 10:00~21:00 / 토요일 10:00~20:00 / 일요일 10:00~18:00 /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부천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부천시민학습원
이용시간
월~금 (09:00 ~ 18:00)



경기 부천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송내시민학습원
이용시간
월~금 (09:00 ~ 18:00)



경기 부천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시간
-



경기 부천시
일드림센터 (위브)
이용시간
-



경기 부천시
일드림센터(부천테크노파크)
이용시간
-



경기 부천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이용시간
월~금 (09:00 ~ 18:00)



경기 부천시
부천청년리더#
이용시간
9:00~18:00 (주말 및 법정 공휴일 휴무)



경기 하남시
하남 일자리카페 'ILMAREN'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경기 용인시
드림1인창업지원센터
이용시간
월~금 : 09:00~21:00 주말, 공휴일 휴무



경기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청년, 문화 놀다'
이용시간
화~금 10:00~21:00, 토요일 10:00~17:00 (월/쌀 및 공휴일 휴무)



경기 양평군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이용시간
월~금 10:00~21:00(토요일 10:00~17:00, 일요일,공휴일 휴무)



경기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
월~토 06:00~22:00 / 일요일,공휴일 10:00~18:00



경기 안양시
만안 청년오피스
이용시간
평일 10:00 ~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경기 안양시
동안 청년오피스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10:00 ~ 21:00(공휴일 휴무)



경기 안양시
범계역 청년출구_성공을 도와주는 가게
이용시간
화~토요일 9:30 - 20:30 (휴게시간 12:00 - 13:00) / 일요일 11:00 ~ 17:00 (휴게시간 없음)



경기 안산시
청년큐브-디지털제조스튜디오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탄력적 운영)



경기 안산시
청년큐브-초지캠프
이용시간
운영사무실 : 평일 09:00~18:00 ※ 입주자는 이용시간 제한없음



경기 안산시
청년큐브-예대캠프
이용시간
운영사무실 : 평일 09:00~18:00 ※ 입주자는 이용시간 제한없음



경기 안산시
청년큐브-한양캠프
이용시간
운영사무실 : 평일 09:00~18:00 ※ 입주자는 이용시간 제한없음



경기 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 안산 '상상대로'
이용시간
평일 10:00~22:00 / 토요일 10:00~16:00



경기 성남시
청년job+마당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경기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봄'
이용시간
평일 10:00~21:00 / 토요일 11:00~15:00 ※ 일요일, 공휴일 휴관



경기 광명시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시간
월~목 09:00~20:00 / 토~일 09:00~17:00 / 금 휴관



경기 광명시
광명시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경기 광명시
광명시스마트인력개발센터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 주말, 공휴일 휴무



경기 오산시
오산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이루잡
이용시간
평일 09:00~22:00 / 주말 10:00~18:00 / 공휴일 휴관



경기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이용시간
월~금 10:00~22:00 / 토~일 10:00~18:00 / 공휴일 휴관



경기 시흥시
청년협업마을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9:00~22: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경기 시흥시
청년쌀롱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 (그 외 시간은 따로 협의 후 사용가능)

3) 서울특별시 : 청년활동공간

▮ 서울시는 청년활동공간을 총 25곳을 운영중임

<그림 3-22> 서울특별시의 청년행복 프로젝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공방인 지원 '엔젤공방거리', '엔젤공방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추진배경

- 강동구 내 성내동 통학로 주변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식의 변종업소가 밀집해 '기피 구역'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컸으며 이러한 인식과 주거환경을 개선함
- 창의적인 아이템과 열정을 가졌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사업가의 정착을 돕고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비 : 780백만원(구비)
- 사업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창업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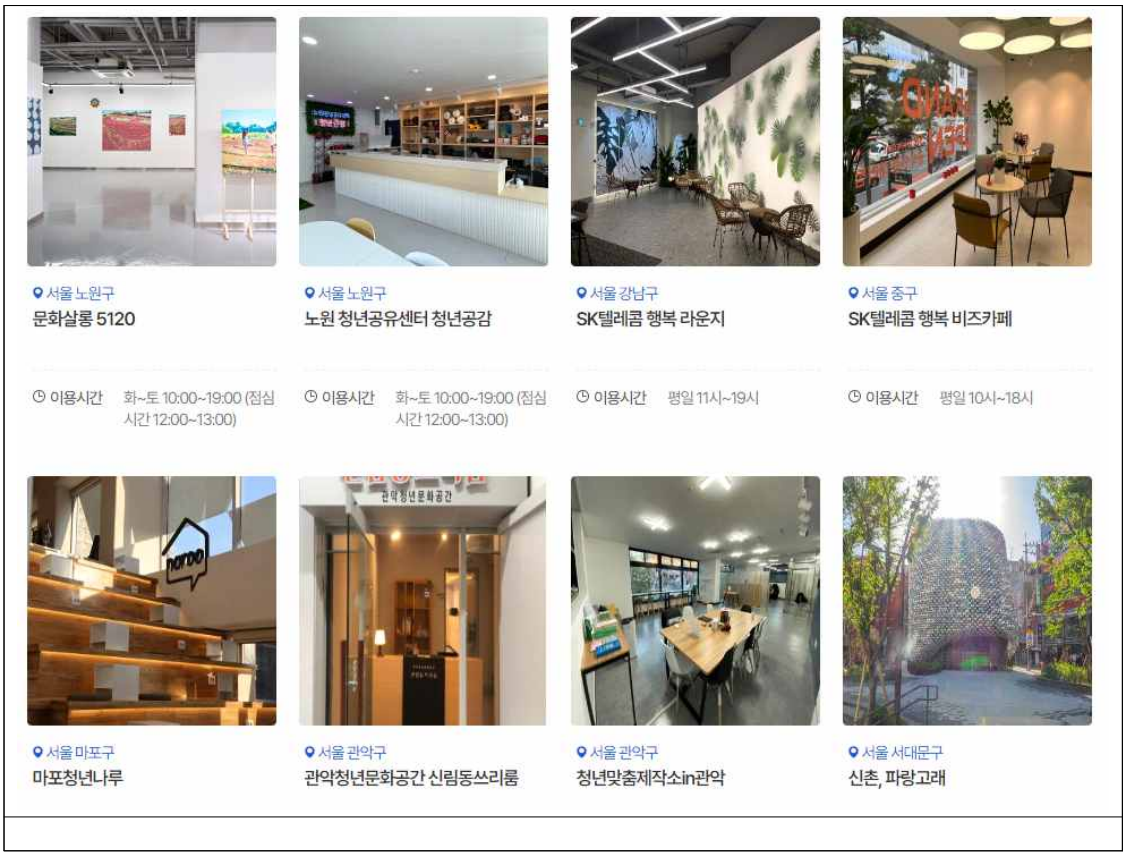
○ 주요내용

- 보증금, 임차료(입점 첫해에 한해 50% 지원), 기본 인테리어 시설 지원/수요자 중심의 사업지원체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홍보 및 사업지원
- 엔젤공방 허브센터 운영 : 청년일자리 창출과 엔젤공방 자립을 지원하고 주민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개방적인 복합문화공간 / 2020년 5월 개관하여 엔젤공방을 성장·발전시키는 허브 역할과 엔젤공방 거리를 사회적경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
- 공방 체험프로그램 및 공예주간행사, 프리마켓,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 추진

○ 성과 및 기대효과

- 관내 총 26개의 공방 입점(3D프린팅&포토, 디저트, 커피로스팅, 키즈 쿠킹클래스, 향기 디퓨져, 가죽 업사이클, 목공예, 금속공예, 애견의류, 전통주, 편백나무유아장난감 등)하여 문화특화거리 조성
- 청년 사회진입 용이 및 창업 초기비용 부담 감소
- 3년간 36개였던 불법변종업소는 11개로 줄었으며 어둡던 골목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창출로 강동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대에 기여

<그림 3-23>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현황





서울 서대문구
신촌문화발전소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서울 금천구
청춘빌딩

이용시간 월-금 10:00-22:00 토 10:00-19:00 일/공휴일 제외



서울 서대문구
청년창업꿈터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이용시간 (월-금) 09:00 - 18:00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이용시간 월-금 09:00-03:00(익일)



서울 구로구
천왕역 버들마을활력소

이용시간 월-금 10:00-18:00



서울 종로구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청년일자리 카페

이용시간 월,금 10:00-18:00 (무료 이용시간)



서울 종로구
P&T스퀘어

이용시간 월-토/공휴일 09:00-22:00 일 09:00-20:00



서울 성동구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이용시간 화-일 09:00-18:00 월/공휴일 제외



서울 중구
서울청년일자리센터

이용시간 월-금 09:00-21:00 토 10:00-18:00 (취업상담: 월-금 09:00-18:00)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이용시간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이용시간 월-금 09:00-21:00, 토, 일, 공휴일 09:00-18:00



서울 중구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



서울 성동구
소셜 캠퍼스 온(溫)서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한겨레교육문화센터 신촌



서울 마포구
KB청춘마루



서울 강남구
LH강남권마이홈센터

제4장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안

제1절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향

제2절 단기적 대응방안

제3절 중장기 대응방향

제1절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향

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유출관련 통계분석 결과

가. 청년층 인구유출 분석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타광역지자체로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음**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전북 청년층 인구(18세~39세)의 타광역지자체로의 유출을 최근 10년(2014년~2023년)간 분석한 결과, 연평균 46,401명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청년층 인구의 타광역지자제로의 유출이 동일기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청년층 인구 비중이 2014년 27.24% → 22.20%로 5.04%p 감소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이탈지역으로 경기도로 매년 17,083명이 전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울 14,497명, 충남 6,087명 등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전출하는 지역은 경기도(17,083명)이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14,497명), 충남(6,087명), 광주(5,674명), 전남 5,274명, 대전(4,406명) 등의 순으로 분석됨

■ 전북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일자리) 문제로 인한 유출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 연령대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광역지자체로의 전출사유 분석 결과 직업(약 42%)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 등의 사유로 분석됨(연평균 69,156명 기준)

○ 광역지자체별로 전입사유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20대+30대)의 전입사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직업(약 36%)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주택– 교육 등의 순서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의 타광역지자체로의 전출사유중 가능 큰 원인은 직업(일자리)이라는 점을 확인함

○ 또한 청년층 인구의 사회적 이동과 관련한 국내 30여편의 선행연구 검토결과 일자리(직업)가 가장 큰 청년층 인구이동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함

▌대졸자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출생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교와 현재 일자리 지역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일자리와 출생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약 46.1%로 분석된 반면, 출신 대학교 일치하는 경우는 46.6%, 출신고교와 일치하는 경우는 49.6%로 분석됨

○ 출신고교와 출신대학교가 전북특별자치도이고 현재 일자리지역이 전북특별자치도인 경우가 69.3%로 분석되어 향후 지역내 고교와 대학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지역청년의 지역내 잔존을 높이는 정책이라는 점을 확인함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타광역지자체의 양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결과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구인인원), 충원인원, 부족률인원 등은 전국 기준 2~3% 수준으로 지역내 일자리 현인원 대비해서 타 광역지자체에 비교하여 일자리의 양적 부족현상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 충원율은 90.34%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8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88.2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일자리 부족률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2.87%로 17개 광역지자체중 6위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 3.12%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를 통해 일자리에 대한 양적기준에서의 지역별 미스매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10개 직종별로 일자리 현황(현인원, 구인인원, 충원인원, 부족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양적 수치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으며 전국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 질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청년층 인구가 선호하는 직종의 일자리보다는 비선호 직종의 일자리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10개 직종별로 지역별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이외지역(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직종선호에 따른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지리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는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만족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함

▌ 특히 전직종별로 월평균 임금이 전국평균에 비해 581,614원이 적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직종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지도 청년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6개지역(경기, 서울, 대전, 광주, 충남, 전남 등)과의 비교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월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청년층 인구의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 직종인 전문/과학/기술 분야와 금융/보험, 도/소매 등에서의 격차가 심하다는 점을 확인함

○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근로자들의 숙련 미스매치를 확인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청년층 근로자들 대부분은 자신의 역량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도출하였음

○ 지역내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은 존재하는데, 양적인 관점에서의 지역간 미스매치의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임

○ 다만 질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종에 따른 지역별 일자리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의 선호직종 일자리에 따라서 청년 구직자들이 이동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별로 분석 결과 전직종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임금수준이 낮으며 이로 인해 지역내 청년의 타지역 유출이 심화될 수 있음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양적 관점보다는 질적인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단기적 대응방안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생-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그리고 일자리 정책은 연계하는 전주기적 일자리 순환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정책과 RISE정책 등을 연계하여 출생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상호 연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최소한 고등학교-대학교 그리고 지역내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통해 지역내 청년인구의 지역유출을 억제하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4-1> 전북청년층 인구 유출 원인분석 결과의 요약

1 청년인구 유출 규모	▪ 청년층 인구(18세~39세)중 연평균(최근 10년 평균) 46,401명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남 ▪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청년층 인구비중 2014년 27.24% → 2024년 22.20%)	·청년인구 유출의 주요 동인 확인 ·직업(일자리)로 인한 전북떠남이 가속화되고 있음
2 유출 지역	▪ 최근 10년 기준 1순위 경기(17,083명), 2순위 서울(14,497명), 3순위 충남(6,087명), 4순위 광주(5,674명), 5순위 전남(5,274명), 6순위 대전(4,406명)	
3 청년인구 유출 사유	▪ 전 연령대 기준 직업(약 42%) > 가족 > 주택 > 교육 > 주거환경 > 자연환경(연평균 69,156명) ▪ 타 광역지자체 청년층(20대+30대) 전입사유 : 직업(약 36%) > 가족 > 주택 > 교육 등의 순서	·양적 일자리 미스매치 (X) ·질적 일자리 미스매치 (O) ·지역간 임금수준 차이 매우 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탈 가속화 예상
4 지역별 청년 일자리	▪ 고교+대학+전북일자리 : 69.3%(2020년 기준) > 고교(49.6%) > 대학 (46.6%) > 출생지역(46.1%) ▪ 출생보다 전북특별자치도내 [고교+대학+일자리] 연계화 전략 모색 필요	
5 일자리 양적 미스매치	▪ 전북특별자치도내 일자리 양적 미스매치 거의 없음 ▪ 충원율 90.34%(8위) > 전국 88.28%, 부족율 2.87%(6위) < 전국 3.12%,	·일자리 질적 차이, 지역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고교-대학-일자리 연계방안
6 직종별 차이 지역별 차이	▪ 10개 직종별 분석 결과, 양적인 차이 없음, 전국 순위와 유사 ▪ 질적 관점에서 보면 청년층 인구가 비선호 일자리가 전북특별자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직종별/지역별 일자리 차이 존재 → 지역별 차이(GAP)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가능성 높음	
7 일자리 질적 미스매치 구인기업-구직자 GAP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평균 전후수준, 만족도는 높지 않는 수준 ▪ 월평균 급여액은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 ▪ 전직종 기준 월평균 581,614원 차이 확인 ▪ 청년층 인구 선호 일자리 분야별 급여액 차이가 더 큰 수준(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도/소매) ▪ 인근 6개 광역지자체와 비교시 전직종에서의 급여수준 차이 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들의은 자신의 역량대비 낮은 수준의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음	·일자리 질적 차이(GAP) 최소화 ·기업/청년층 인구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방안 마련

나. 국내외 청년정책 관련 주요사례 분석 결과

▮ 국내외 청년정책 관련 주요사례 분석 결과 일자리, 주거 및 공간분야에 대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 일자리 및 청년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등 주요 광역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와 주거분야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청년인구에 대한 직접지원이며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됨

-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유럽지역 그리고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년인구의 유출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청년인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사업을 시행중임
- 다만, 청년인구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보다는 최근에는 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전주기적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음

다. 전문가 자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대응방향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접근 방향 등을 도출하였음**

○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9시~12시

○ 대상 : 전북연구원 김수은 박사

○ 주요 자문내용

-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수도권과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등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임금 간접 지원, 근로복지 혜택 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 정주여건 및 생활여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거사다리 지원 확대(청년임대아파트, 신혼임대아파트), 문화시설 확대 등 필요
-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한데, 타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제고, 영재고유치(홍성-내포신도시 카이스트 영재학교 유치)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단기적 방안
  - 수도권과 임금격차 해소 : 근로복지혜택(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주거비 및 교통비 등)
  - 민간기업 청년채용시 지원 혜택 확대
  -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활용
- 일반적인 일자리 여건 → 좋은(괜찮은) 일자리 여건으로의 기존 전북지역내 기업의 고용의 질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 공공영역 : 공공기관 지역인채 채용 50% 의무화
  - 민간영역 : 좋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유치,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통한 지방이전 촉진 방안

2)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접근방향

▌ 전북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접근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대상(Who)

- 전북지역내 청년인구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청년인구(출생지역, 출신고, 출신대학) + 회귀희망 전북 출향청년 + 전북 이주 희망 타지역 청년 포함
- 전북지역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 내용(What)

- 원인분석에 기초한 지원방안 마련
- 대상별지원방안(기업, 지역청년)
- 내용별 지원방안(행정/제도, 재정적 지원)
- 단기/중기/장기적 지원방안
- 타 정책사업과의 연계(지방소멸대응기금, RISE 등)

○ 지역(Where)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기초지자체가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과의 연계 수행

○ 시점(When)

- 영유아 → 학생 → 청년 → 성인 → 노인에 이르는 인적자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계획

○ 방법(How)

- 전북특별자치도 출향 억제 정책 + 청년 유입정책의 병행
- 일자리정책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
- 일자리정책 + 복지/문화 + 정주여건 + 기존 정책 연계
- 일자리정책 : 일자리 MISMATCH 해소
  - 보상의 MISMATCH 해소
  - 정보의 MISMATCH 해소
  - 숙련의 MISMATCH 해소

<그림 4-2> 전북 청년층 인구 유출 대응방안 도출을 위한 5W1H접근법



▮ 전북지역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안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 대응방안 :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

- 정보의 미스매치
  -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 광역+기초 일자리 정책사업의 연계 강화
- 보상의 미스매치
  - 임금 격차 직접지원(직종 평균 약 58만원 수준)
  - 정주여건 개선 지원
- 숙련의 미스매치
  - RISE 활용(고교-대학-기업 연계형 사업)
  - 기업중심형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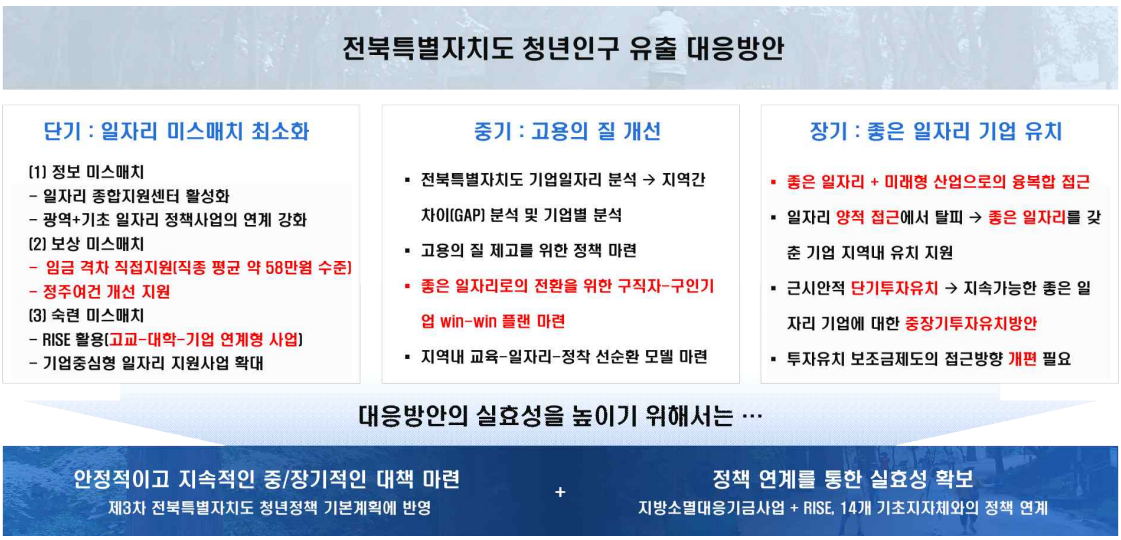
○ 중기적 대응방안 : 고용의 질 개선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일자리 분석을 통한 지역간 차이(GAP) 분석과 기업별 분석 수행
-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구직자-구인기업 win-win 플랜 마련
- 지역내 교육-일자리-정착 선순환 모델 마련

○ 장기적 대응방안 : 좋은 일자리 기업 유치

- 좋은 일자리 + 미래형 산업으로의 융복합 접근 필요
- 일자리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좋은 일자리를 갖춘 기업 지역내 유치 지원
- 근시안적 단기투자유치에서 탈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유치방안의 마련이 필요
- 투자유치 보조금제도의 접근방향 개편 필요 : 단기적 투자유치 보조금제도 → 중장기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의 마련 필요

<그림 4-3> 청년층 인구유출 대응방안의 접근방향



3)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가. 좋은 일자리의 개념

▮ 좋은 일자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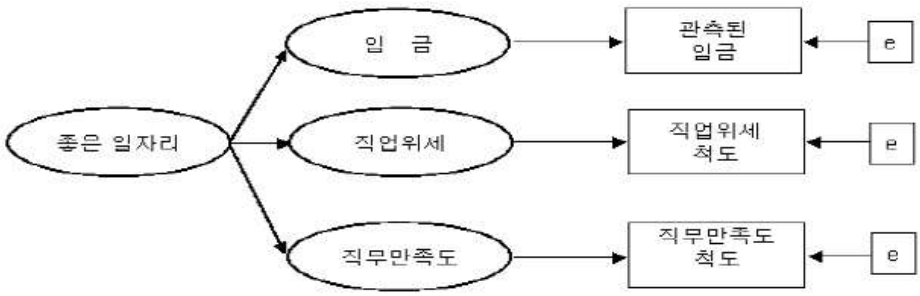
○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는 보상수준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위세가 높은 일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음(방하남과 이상호, 2006)

- 일자리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보상(경제적 측면)과 직업적 위세(사회적 측면) 그리고 근로자 자신이 그 일자리에 대해 갖게 되는 직무만족도(주관적-심리적 측면)가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따라서 좋은 일자리의 개념화와 측정도 위의 세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음
- 김범식과 김묵한(2014) : "괜찮은 일자리는 자유, 공평,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 하에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정의

○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Decent Work'개념은 (1) 공정한 소득을 가져다주는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2) 작업장에서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 (3) 개인의 능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망 및 사회적 보호, (4) 참여와 의사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회와 대우의 균등의 요소로 요약됨

○ 'Decent Work'개념이 근로자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하는 'Quality in Work'는 사용자와 피사용자의 관점을 모두 수용하여 일자리의 질에 대해 정의함

<그림 4-4> 좋은 일자리 개념의 구성요인



자료원 : 방하남, 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학 제 40집 1호, p. 100의 그림 1

<표 4-1> 국외 기관별 일자리 질 기준

구분	내용
ILO Decent Work	① 고용기회 ② 철폐되어야 할 노동 ③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④ 적절한(decent)노동시간 ⑤ 고용 안정성 ⑥ 일과 가정의 양립 ⑦ 고용 평등 ⑧ 안전한 작업환경 ⑨ 사회보장 ⑩ 사회적 대화 ⑪ 경제사회적 맥락
유럽진행위원회 Quality in Work	① 본질적인(내인적) 일자리의 질 ② 평생교육, 숙련, 경력개발 ③ 남녀평등 ④ 직장 보건과 안전 ⑤ 유연성과 안정성 ⑥ 노동시장 접근가능성과 통합 ⑦ 작업조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⑧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⑨ 다양성과 비차별 ⑩ 전반적 업무 성과 ①,② : 일자리특징 ③~⑩ : 일과 광의의 노동시장 상황
UNECE/ILO/Eurostat 고용의 질(Quality in Employment)	A. 고용의 안전성과 윤리성 ① 고용의 안전성 ② 연소자의 노동 ③ 고용의 형평성 B. 수입과 복지혜택 ① 임금(수입) ② 비임금 금전적 보상 C. 근로시간과 근로의 균형성 ① 근로시간 ② 근로시간조정 및 유연성 ③ 근로의 균형성 D. 고용보장과 사회적 보호 ① 고용보장 ② 사회적 보호 E. 노사관계 F.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G. 직장 내 관계와 직무동기

자료원 : 서옥순, 황영순, 장정재(2016),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p.7의 <표 Ⅱ-1>

○ 일자리의 질적 평가요인(최태림, 2014)

- 고용안정: 현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의 도입과 대규모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대로 인해, 근로자에게 있어 직장의 안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직장의 안정성은 일자리의 질을 논의할 때 근로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근로보상 : 일자리를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항목임.
- 근로시간 및 환경 :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오랜 시간 근무하는지 등을 포함하는 외적환경요인

- 능력개발 : 인적자원을 훈련하여 유지·개발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조직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직장, 지위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 직무/지위 :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와 사회적으로 인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부.
- 참여와 관계 : 기업차원에서는 노사 간의 문제에 대해 공정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조직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체계 등이 포함.
- 고용평등 : 성별, 연령, 장애, 인종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정도
- 일-가정의 양립 : 근로와 가정의 보육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
- 사회보장 : 사회보장은 개인수준의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의 영역에 포함된 연금, 보험 등의 요소는 근로생애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요소임.

<표 4-2> 거시지표를 이용한 지역경제 일자리 질 평가요소(최태림, 2014)

지표	세부항목
고용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럽률, 15-29세 실업률
고용안정성	- 고용계햑기간 1년 이하 근로자 비율, 임시 및 일용직 비율
능력개발	- 전문직종사자 비율,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
임금보상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 시간당 실질임금, 임금불편등(지니게수), 10/90분위
근로시간	- 52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주당 근로시간, 40-44시간 근로자 비율
작업장 안전	- 산업재해율, 산재사망률
고용평등	- 여성고용비율, 5급이상 여성고용비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 격차

자료원 : 최태림(2014), 인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p. 6의 <표 3>

<표 4-3> ILO의 'Decent work' 관련 지표

분야	세부지표
고용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 청년고용률 · 비농업부문 임금노동 비율
철폐되어야 할 노동	· 학교 다니지 않는 아동 비율 · 임금 노동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아동 비율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 저임금 고용 비율 · 주요 직종 평균 수입(earnings)
적절한 노동시간	· 장시간 노동 비율 · 시간 관련 과소고용 비율(time-related underemployment)
고용 안정성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노동자 비율 · 임시 임금노동자 비율(employees with temporary work)
일과 가정의 양립	·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아동을 가진 여성들의 취업률
고용 평등	· 성별 직종 분화 · 경영 행정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안전한 작업환경	· 치명적 부상 빈도 · 근로감독관 비율 ·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율
사회보장	· 공공사회보장 지출(GDP 대비) · 현금소득보전 지출(GDP 대비) · 현금소득보전 수혜자 비율 · 연금 수혜자 비율(65세 이상) · 연금 가입자 비율(경제활동인구 대비) · 평균 연금액(중간 또는 최소 수입 대비)
사회적 대화	· 노조가입률 · 단체임금협약 적용률 · 파업과 직장폐쇄 빈도
경제사회적 맥락	비공식 고용

자료원 : 서옥순, 황영순, 장정재(2016),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p.8의 <표 Ⅱ-2>

<표 4-4> 유럽연합(EU)의 'quality in work' 관련 지표

분야	세부지표
본질적인(내인적) 일자리의 질	· 1,2,3,4~10분위 소득 · 미취업자 5개 집단의 이행확률
숙련, 평생교육, 경력개발	· 경제활동인구 중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중
남녀평등	· 주당 15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중 · 여성 시간당 소득/남성 시간당 소득
직장보건과 안전	· 피고용자 10만 명당 재해발생자 수
유연성과 안정성	· 전체 피용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 전체 피용자 대비 계약직 근로자 비중
노동시장 접근가능성과 통합	· 고용·실업·비경활 각각의 집단의 1계 마크로프 이행확률
작업조직 및 일과 생활의 균형	· 자녀가 없는 개인의 고용률 대비 0-6세 아동을 가진 부모의 고용률과의 격차(20~50세 연령집단 중 성별 수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의 참여	·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 적용률을 맥락지표로 제시
다양성과 비차별	·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 차이, 전체 피용자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 차이 논의 중
전반적인 업무 성과	· 고용인구 1인당 GDP 수준 변화와 1인당 근로시간 증가율로 측정된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원 : 서옥순, 황영순, 장정재(2016),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p.10의 <표 Ⅱ-3>

○ 좋은 일자리의 임금 기준

- 임금은 일자리 질을 판단하는 기준들 중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한 임금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좋은 일자리 측정을 위한 임금수준은 주로 중위임금과 빈곤선을 기준으로 함
  - Ahlburg 외(1995) : 빈곤선 기준 200% 이상을 좋은 일자리, 빈곤선의 300% 이상을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제시
  - 송영남(2010, 2011) : 괜찮은 일자리를 빈곤선의 150%, 좋은 일자리는 빈곤선의 200%, 아주 좋은 일자리는 빈곤선의 300%로

제시함

- Anker(2003) : 중위임금의 1/2 이상을 제시하였으며, 최옥금(2006)은 중위임금의 1/2 이상과 2/3이상을 임금 기준으로 제시함
- Johnson Morissette(2005) : 시간당 임금을 좋은 일자리 측정을 위한 임금 기준으로 제안함
- 최옥금(2005, 2006) : 중위임금의 1/2이상, 중위임금의 2/3이상
- 김범식과 김묵한(2014) : 2013년 전국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 이상
- 서욱순 외(2016) :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포함하기 위해 중위임금 혹은 빈곤선을 좋은 일자리 측정 기준으로 제시함
- 김수은과 박세현(2024) :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150% 이상

○ 국내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터'로 나타남

<그림 4-5> 좋은 일자리 판단기준



자료원 : 이근하(2018.06.23.), "좋은 일자리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 59% K-공감 [보도자료]

나. 좋은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

▮ **좋은 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류해보면 (1) 좋은 일자리의 개념화 및 인식연구, (2) 좋은 일자리 지역간 비교분석, (3) 좋은 일자리(고용의 질) 영향요인 분석, (4) 좋은 일자리 선택요인 분석, (5) 좋은 일자리 정책방안 연구, (6) 지역내 좋은 일자리 분석 및 지역정책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좋은 일자리 개념화 및 인식연구

- 방하남, 이상호(2006)
- 배성숙과 장석인(2017)
- 성수현과 민현주(2020)
- 장옥희(2021)
- 곽미선과 김지연(2023)
- 강경동과 유영명(2024)
- 김정희 외(2024)
- 이재영과 백평구(2024)
- 최화영 외(2024)

○ 좋은 일자리 지역간 비교분석

- 송영남(2010)
- 심재헌 외(2014)
- 고영선(2024)

○ 좋은 일자리(고용의 질) 영향요인 분석

- 송영남(2011)
- 강은영(2017)

○ 좋은 일자리 선택요인 분석

- 송영남(2012)
- 임유진과 정영순(2015)
- 박성익 외(2020)
- 이한성 외(2022)

○ 좋은 일자리 정책방안 연구

- 권오성 외(2019)
- 김기현 외(2020)
- 김수진과 윤지영(2024)

○ 지역내 좋은 일자리 분석 및 지역정책 연구

- 최태림(2014)
- 박성익 외(2022)
- 김수은과 박세현(2024)
- 최지혜와 변장섭(2024)

▮ **초기의 좋은 일자리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우리나라 또는 지역별 좋은 일자리 현황 및 개념화, 구직자 인식도 등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으며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좋은 일자리 지역비교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음**

▮ **최근에 들어와서 지역간 좋은 일자리 비교분석 등을 통해 지역내 좋은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자리 현황 및 미스매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책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4-5> 좋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자료원	내용
방하남, 이상호 (2006)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성취를 가늠해주는 좋은 일자리'의 개념화와 측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임. -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경제적 보상으로서의 임금, 사회적 척도로서의 직업위세, 심리적 주관적 척도로서의 직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좋은 일자리'의 개념을 구성하였음. -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라 모든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에 이르는 4개의 서열범주로 분류한 후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범주에 속할 확률의 결정요인과 효과를 추정하였음. - 추정 결과 좋은 일자리의 성-학력-연령 계층별 불평등 분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근로생애의 연령단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며 그러한 생애패턴이 성별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노동시장 불평등과 분절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기존의 통상적인 지표들 즉 임금, 직업위세, 직무만족도 등 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자료원	내용
	의 종합적인 지표가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송영남 (2010)	- KLIPS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먼저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하여 연구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그 확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 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국내의 '좋은 일자리' 변화추세 및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 것임. - 분석결과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그리고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외환위기의 영향이 대구경북 등 비서울 지역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지역 간 지역의 일자리 질의 회복수준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지역 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커졌음을 파악하였음.
송영남 (2011)	- KLIPS 자료에 포함된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수와 전년도의 '일자리의 질'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대하여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임. -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성별중 남성이, 전문직 및 화이트칼라 직종 등 사회경제적 변수가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침. - 전년도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여성, 블루컬러, 소규모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번 '좋은 일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진입할 확률이 비교집단에 비해서 크게 낮으며 지역변수는 좋은 일자리의 '진입, 퇴출'에 유의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송영남 (2012)	- 특정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일자리 선택모형,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선택모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인인 '좋은 일자리' 특성의 가치를 추정하고 청년층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 일자리 안정성의 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기업 일자리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설문을 활용하였음 - 설문 대상자에게 '동일 지역에 위치한 두 일자리, 즉 대기업과 공기업 일자리의 생활환경, 장래비전, 사회적 평판 등은 동일하나 공기업은 일자리의 안정성이 아주 우월하다'고 설명한 뒤에 어느 일자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29.8%, 공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는 70.2%로 공기업을 선택한 응답자가 2/3를 넘었으며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80만원 이상의 추가 보상이 주어져야 하다는 비율이 59.3%인 것으로 나타남. 위의 모형에 의할 경우 일자리 안정성의 가치차이를 보상액수로 산정할 경우 50.3만원으로 추정하였음. - 생활환경의 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일자리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설문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대상자에게 '수도권 소재 대기업과 지방 소재 대기업의

자료원	내용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 일자리는 보수, 일자리 안정성, 장래의 비전, 사회적 평판, 근무환경 등에서 동일하지만, 수도권은 지방보다 교육 및 문화환경 등에서 좋은 생활환경(교육 및 문화환경)이 제공된다면 어느 일자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수도권을 선택한 4년제 대학생 응답자의 45.6%, 지방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54.4%여서 대기업의 일자리만 주어진다면 1/2 이상의 대학생이 지방을 선택할 수 있음이 조사되었음. - 또한 설문대상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더 지불한다면 지방의 일자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여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50만원 이하가 약 72.4%로 조사되었음.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수도권의 대기업 일자리 대신 지방의 대기업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0만원에서 49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의 선택의 가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대상자에게 '동일 지역에 위치한 두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생활환경은 동일하나 대기업은 일자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장래비전, 사회적 평판, 근무환경 등에 있어서 아주 우월하다'고 설명한 뒤 중소기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더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할 결과 4년제 대학생이 대기업 일자리 대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132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분석 결과, 각 '좋은 일자리' 특성이 일자리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상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근거하여 볼 때 일자리 안정성, 미래 비전, 근무환경, 사회적 평판, 그리고 생활환경 순으로 '좋은 일자리' 특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그리고 청년층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대기업과 유량 중소기업 유치), 생활환경의 개선(교육 및 문화환경) 등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임금보상제 도입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되었음.
심재헌,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노승철 (2014)	-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군 단위에서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일자리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일자리 변동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시군 일자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일자리 지수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고, 일자리 양 부문은 지역일자리의 창출량과 지역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 역량 등 두 항목으로 구성되고, 일자리 질 부문은 고용안정성과 근로임금으로 구성하였음. - 개발한 일자리 지수로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부문 모두 지역의 일자리 증감률, GRDP,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 일자리 현황을 보면 경기도 시군의 절반 이상이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시와 군은 차별화된 일자

자료원	내용
	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시는 첨단 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한 반면, 사업체 수가 적은 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일자리 양외에도 질적 성장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도시지역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예, 상용직 증가)을 추구해야 하고, 농촌에서는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예, 소득증가와 자기 발전)을 수립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무문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과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등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최태림 (2014)	- 인천시 일자리의 질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여, 인천시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펼쳐야하는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임. - 좋은 일자리 평가기준으로 기존연구에 근거해 근로보상, 근무시간, 근로안정성, 사회보장을 제안함. - 인천시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계층은 대졸이상 학력의 계층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갖는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중은 산업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정보통신,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인천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군의 발전이 취약한 점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저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는 저숙련 근로계층의 높은 비중, 고학력의 인적자원 축적의 미흡, 산업구조적인 한계 등이 인천경제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제약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육성, 지역임금제도, 인력개발, 기업지원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응방안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좋은 일자리 수준은 그 지역의 산업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군을 선정함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 제공 비중이 높은 산업군, 고부가가치 산업군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함. - 향후 저숙련, 저학력 계층에 대한 인력개발수요가 늘어나고 이들의 이행능력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인 인력개발 지원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서비스업 분야의 고도화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인천시에서 육성 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직종훈련 개발과 지원 그리고 창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국외 정책사례로서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와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등), . - 인천시의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점에 대응하여 생활임금제도를 활용한 근로빈곤계층의 소득증진 방안 모색.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도는 재정적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됨.(국내외 정책사례로 영국 런던의 생활임금제, 미국 볼티모어와 샌프란시스코의 생활임금제, 서울시, 경기도의 생활임금제 등)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제도를 세워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국내사례로 경기도의 일하기 좋

자료원	내용
	은 기업 인증지원 사업). - 인천시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의 일자리 사업을 세워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 전략산업육성계획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정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체제 구축.
임유진, 정영순 (2015)	- 고졸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추이와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남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 이행기간이 여성 27개월(중위수 3개월), 남성 46개월(중위수 53개월)로 남녀 간 이행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이행 추이 패턴도 달라, 남녀 모두 졸업 후 6개월 이전 시점에서 이행률은 매우 높았으나 6개월 이후 낮아진 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지속된 반면에 남성의 경우 4년 시점부터 오히려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띠었음. -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실업률, 지역, 부모학력이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음. - 그 외의 예측변인들은 남녀 간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의 경우 결혼, 직업체험, 전일제 일경험이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성격, 졸업 후 직업훈련 경험, 재학 시 일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음. -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성별에 따라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 전략시점이 달라져야 하며 이행전략 수립 시 공통적인 지원방안과 병행하여 남녀로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강은영 (2017)	- 2010년을 전후하여 개정된 국제기구의 고용의 질 지표와 국내 고용의 질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고용의 질 지표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적 수준에서 국내 고용의 질 지표체계안을 구축하고자 한 것임. - 국내외 선행연구 및 국제기구들(UNECE, ILO, OECD, EU, SDGs 등)에서 제안하는 지표들 중 공통되는 지표를 후보지표군으로 설정하여 국내 적용가능성, 자료활용성, 국내 노동시장 특성 반영 여부 등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체계안을 제안하고 있음. -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 근로환경 및 조건, 사회적 요소 3가지로 구분하였고, 경제 요소는 임금차원으로, 근로환경 및 조건은 근로시간, 산업안전, 고용안전, 고용차별,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5가지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요소는 사회안전망과 노사관계라는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음. - 그리고 임금차원은 시간당 임금과 저임금근로자 비율이라는 2가지 지표로 측정하도록 하였고, 근로시간은 장시간근로자비율, 연간근로시간,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비율, 산업안정은 산업재해율, 고용안정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고용차별은 관리직중 여성 비율, 성별 임금격차, 장애인 취업자 비율, 일과 생활의 균형은 육아휴직자 비율, 비취학 자녀의 부모 고용률, 통근시간, 사회안전망은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4대보험가입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노사관계는 노조조직률 지표로 측정하도록 함.

자료원	내용
	- 그리고 각 지표의 산식과 기준 그리고 자료원까지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이렇듯 강은영의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고용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체계에 해당되며, 취업자나 취업하고자 하는 개개인이 인식하는 일자리의 질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음.
배성숙, 장석인 (2017)	-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조직지원인식(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조직이 구성원의 공헌을 소중하게 여기며, 구성원의 복지 및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에 대한 구성원의 믿음)과 취업준비활동(학점, 어학연수, 자격증, 인턴십, 봉사활동 등과 같은 스펙을 관리하는 활동과 직업정보 탐색,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진로 및 취업교과목 수강,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등의 활동)이 좋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연구임. - 분석 결과, 조직지원인식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영향관계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준비활동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영향관계는 한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준비활동과 좋은 일자리 인식 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전공계열의 조절효과는 한국과 일본 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권오성, 유성재, 노상현, 박은정, 김진 (2019)	- 기술의 진보가 고용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와 직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일하는 방식 및 새로운 고용관계가 유발되게 되는데, 기존의 노동보호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에 새로운 노동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노동관련 법제도 측면이 논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기술혁신은 집중화와 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소득 격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안전망의 재구축이 논의되어야 하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늘리고 재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일자리 양의 증감과는 별개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취약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노동법의 범위 확대, 사회서비스의 확대, 근로자의 이익대표 체계의 개선 등을 다루었음.. - 노동법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오분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사회경제적 조건이 노동자와 유사하여 노동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함과 동시에 복지지출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저수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음. - 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창의적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 세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직업소개와 관련하여서는 고용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공공고용 서비스를 강화해 일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근로자의 이익대표와 관련하여서는 전통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그 안에서 의사결

자료원	내용
	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연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통적 노동법이나 제도 안에 편입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바, 비공식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명문화하고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명문화하는 방향의 노조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음. - 4차산업혁명으로 다가올 노동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김기헌, 차세영,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2020)	- 2019년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진단 및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임. - 총 18개 중앙부처 청년정책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각 영역별로 분석틀에 따라 실효성을 진단하였고, 사업 실효성 제고 방향과 추진체계의 실효성 제고방향, 그리고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와 신규과제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에서 청년정책 사업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라고 판단됨.. - 진단 대상 사업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NCS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일·학습병행제 운영, 청년 전·월세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운영,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임. - 청년 일자리 정책 사업 진단 ○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실효성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34세) 정규직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18-34세)에게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 하는, 졸업(중퇴 포함)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대상. - FGI 결과, 참여자들은 사업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고용관련 문제외에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생계에 보탬이 되었다고 응답함. 기업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청년 창업 지원 정책 실효성 진단 - 청년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 정책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재료비, 마케팅비 등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멘토링,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자료원	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지원 대상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등을 기업 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6년까지 2.0%의 고정금리로 대출해 줌. - FGI 결과, 참여자들은 자금 마련과 역량강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했으며, 지원을 통해서 신규 직원채용, 매출증대, 수출계약 등의 성과를 보였고, 창업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의 효과를 체감하였음. 사업 행정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더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의견과, 상환 능력이 있다면 상환시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일자리 환경개선 정책 실효성 진단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됨. 이사업은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고, 수혜자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참여자들의 만족도나 정책 인지도면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음. -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 및 공공·민간 블라인드 채용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이 채용과정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임. - FGI 참여자들은 이 정책들이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채용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학벌주의의 영향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더 중요하다는 의견, NCS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이 적절하게 측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 사업 진단 ○ 학자금 지원 정책 실효성 진단 - 대표적인 학자금 지원정책인 국가장학금 확대사업, 학자금 상환부담 완화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실효성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대상자 부합성(청년연령 부합성) 및 대상자포괄성(청년층 사업 수혜율)은 '상'으로 진단됨. 집행과정에서의 자원투입 충분성(사업예산,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은 '중하', 정책환류 충실성(모니터링단 구성 여부 및 청년 참여여부)은 '하'로 진단됨. 성과 달성 단계에서의 정책 효과성(청년층 정책만족도), 정책 인지도 (청년층 정책 인지율), 정책 효율성(사업예산,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 모두 '상'으로 진단됨. ○ 일·학습 병행제 실효성 진단 - 일학습병행제를 실효성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대상자 부합성(청년연령 부합성) 및 대상자포괄성(청년층 사업 수혜율)은 '상'으로 진단됨. 집행과정에서의 자원투입 충분성(사업예산,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은 '중상', 정책환류 충실성(모니터링단 구성 여부 및 청년 참여여부)은 '중'으로

자료원	내용
	진단됨. 성과 달성 단계에서의 정책 효과성(청년층 정책만족도)은 '상', 정책 인지도 (청년층 정책 인지율)는 '중상', 정책 효율성(사업예산, 수혜자 수 등을 고려한 정성 평가)은 '중하'로 진단됨. - 청년 주거 정책 사업 및 예산 진단 ○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실효성 진단결과 -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는 대상자 부합성에서만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대상자 포괄성, 자원 충분성, 자원 환류 충실성, 정책효과성, 정책인지도, 정책 효율성 등의 진단에서는 중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실효성 진단결과 -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은 대상자 포괄성에서만 중간보다 낮은 진단을 받았을 뿐 대상자 부합성, 자원투입 충분성, 정책환류 충실성, 정책 효과성, 정책 인지도, 정책 효율성 등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진단을 받았음.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실효성 진단결과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은 대상자 부합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대상자 포괄성, 자원투입 충분성, 정책환류 충실성, 정책 효과성, 정책인지도 등에서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였음. - 종합적으로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은 대상자가 제한적인 대신 정책성과달성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와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은 성과달성 단계가 그다지 좋은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 참여 및 활동정책 사업 진단 ○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실효성 진단 - 계획수립과 관련 대상자 부합성은 진단 결과 '상'이었고 대상자 포괄성은 '중하'였음. 대상자 포괄성은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참여관련 정책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집행과정에 대한 진단결과를 살펴보면, 자원투입의 충분성은 '중하', 정책환류 충실성은 '상'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사업예산과 참여자 수, 청년 수혜율만으로 자원투입이 충분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의 참여 대상자가 너무 적고 예산규모도 많지 않아 낮은 인지도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원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음. - 정책성과와 관련하여 정책 효과성과 인지도, 효율성 모두 낮은 진단 결과가 나왔음. - 이러한 결과는 청년 참여 관련 정책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년들과의 만남과 논의가 좋았고 유익했지만,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된 내용의 정부 정책 반영 및 추진 여부를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고 응답하였음. ○ 청년 고용정책참여단 운영 실효성 진단 - 여성가족부의 청년참여 플랫폼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책참여단 운영에

자료원	내용
	대해 실효성을 진단한 결과 정량적 평가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동일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플랫폼과 동일하였고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청년들을 인터뷰한 결과, 참여단 활동으로 청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었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서울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른 지역 출신들이 불편을 겪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청년 복지·생활안정 정책 사업 진단 ○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청년희망키움통장) 실효성 진단 - 복지·생활안정 정책 중 핵심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진단한 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계획수립 단계와 집행과정의 실효성은 낮았지만 성과달성 단계의 실효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하는 빈곤가구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부합성과 포괄성은 높지 않았으나, 대상자를 표적화하고 금전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에 비해 정책효과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적립금을 받으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하고, 적립금 사용처도 취·창업, 결혼, 주택마련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빈곤청년이 자립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 실효성 진단 -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정책은 계획수립 단계의 실효성은 높은 편이었으나, 집행과정과 성과달성 단계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정책은 다수의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부합성과 정책 효율성이 높았으나, 정책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신용점수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규제 개선 정책이어서 청년 당사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성이 높지 않았음. 하지만 기존 금융 관련 지원 정책이 고금리, 비금융권 대출 등 부채부담이 높은 취약 청년에 대한 사후적 성격의 정책에 집중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금융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청년에게 금융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의 금융지원 정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업 실효성 제고 방향 -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향을 대상자 부합성, 대상자 포괄성, 자원투입 충분성, 정책환류 충실성, 정책효과성, 정책인지도, 정책 효율성이라는 7가지로 제시 ○ 청년정책 추진체계 실효성 제고 방향 - 추진체계의 실효성 제고 방향은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당사자 관점의 정책과정, 컨트롤 타워의 역할, 분석, 점검, 평가체계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으로 구분해 제시함. ○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향에 따른 과제(안) - 청년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기존 사업을 개편해 실효성을 제고

자료원	내용
	하는 과제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과제로 나누어 제시함.
박성익, 김종한, 류장수, 조장식 (2020)	- 괜찮은 일자리를 4대 사회보험가입, 100인 이상 사업체 근무,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 소득, 정규직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일자리에 취업한 4년제 대졸자의 인적특성, 대학특성 및 직장특성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높게 나타났음. - 대학에서의 평균평점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높게 나타났음. - 토익성적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 업무내용과 교육수준의 일치정도가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음.
성수현, 민현주 (2020)	- 이직한 근로자가 인식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밝히고자 한 연구임. -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직한 근로자가 인식한 좋은 일자리 개념은 '심리적 환경'-'물질적 환경'과 '직업인'-'조직인' 2개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심리적 환경' 차원에 가장 많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6개 군집을 중요도에 따라 평정한 순서는,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금전적 보상 충족', '경력개발 지원', '인간존중 문화', '처우가 공평한 시스템', '질적 복지와 워라벨' 순으로 나타났음. - 셋째, 각 군집의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 차이를 볼 때, 가장 격차가 큰 것은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알 수 있었음 - 넷째, 선행연구들의 측정지표와 본 연구의 개념 구성요인들은 유사한 맥락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간존중 문화','질적 복지와 워라벨', '경력개발 지원'은 직업적응 관점과 개인의 가치 존중, 진로발달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음
장옥희 (2021)	-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이 무엇인지,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 구직스트레스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임. - 연구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는 기업측면에서는 임금, 급여였고, 환경측면에서는 직업안정성, 개인측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었음. - 직업탐색행동은 취업여부 및 구직성과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었음. - 구직스트레스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에 대한 경험은 취업 및 구직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성익, 권기철, 김종한 (2022)	- 좋은 일자리 지수를 고안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부산의 좋은 일자리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임. -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추정한 결과,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게,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이 가장 높고, 사업관리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좋은 일자리 지수의 상위요인과 하위요인으로는 근로조건(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자료원	내용
	근로시간 적정성, 현금 및 현물 부가급여), 미래비전(해당기업의 성장가능성, 직장의 사회적 평판, 승진 및 자기개발가능성), 만족도(직무만족도, 작업장 만족도, 일생화균형 만족도)를 활용하였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좋은 일자리 지수평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져서 40대가 가장 높은데 연령이 더 많아지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그리고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일자리 지수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한성, 문혜진, 이태헌 (2022)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기반으로 대졸 청년층 임금근로자를 고용의 질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과 주요 개인 및 일자리 특성과 취업 준비 특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라 이직을 분석함 - 고용의 질 유형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불안정 일자리, 좋지 않은 일자리, 도구적 일자리, 일반적 일자리와 이상적 일자리의 총 5개의 유형이 도출되었음. - 도출된 고용의 질 유형과 개인 및 일자리 특성 간의 관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수도권 대학 출신, 기혼일수록 이상적 일자리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고용의 질 유형과 취업 준비 특성 간의 관계에서는 졸업학점이 높을수록,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개수가 많을수록 이상적 일자리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 이직 의도 및 이직 준비 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높은 집단에 속할수록 이직 의도와 이직 준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음. - 예외적으로, 도구적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는 이직 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도구적 일자리에 속한 청년들은 더 낮은 이직 준비 행동을 보였음. - 전반적 고용의 질이 낮은 경우 경제적 보상과 고용안정성이 실질적인 이직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였음.
곽미선, 김지연 (2023)	-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을 논의하는데 활용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좋은 일자리(good work)'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면담에 의한 자료수집과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임. - 대학생들이 인식한 괜찮은/좋은 일자리는 경제적으로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일자리','임금과 워라밸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나타났음. - 사회적으로는'미래에도 성장하는 일자리','사회적 시선이 좋은 일자리'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심리적으로는'주관적 만족감이 높은 일자리','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일자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강경동, 유영명 (2024)	- 좋은 일자리 구성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남녀 집단별로 비교분석한 연구임. - 좋은 일자리를 구성하는 상위단계 4개 기준치인 급여후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사회명성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성과 급여후생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회명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을 확인하였음. - 하위요소별 가중치를 확인한 결과 기본임금, 정년보장, 정규직 채용, 부가급여, 복리후생, 출산친화 순으로 나타났음. - 남녀간 비교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고용안정을 가장 중시한 반면, 남성은 급여후생 요인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 하위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고용안정 요인중 정년보장을 가장 중시한

자료원	내용
	반면, 여성은 정규직 채용을 가장 중시하였음. - 근무환경 요소의 경우 남성은 합리적 소통구조를 여성은 적당한 근로시간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영선 (2024)	-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64%, 공공부문 44%, 중소기업 16%이지만(대한상공회의소, 2023),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종사자 비중은 13.8%이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18,4%에 불과하며(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2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로서 OECD에서 최하위임(OECD, 2021). -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은 큰 차이를 보이며, 2022년의 경우 5-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54%에 불과하며(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23), 기타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도 차이가 큼(고용노동부, 2023) -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에서 대기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서도 사업체 규모가 노동생산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지 파악한 결과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시·도 단위에 큰 사업체 규모가 많을수록 좋은 일자리도 증가하고 인구유출도 적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 사업체 규모는 산업의 기술적 특성, 경영자의 경영능력, 지역의 인구규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외주화 촉진으로 기업규모감소), 자동화 등이 영향을 미침. - 또한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및 규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과도한 지원(역동성 저해 : 대기업으로 성장 유인이 적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아 도태되어야 할 기업이 도태되지 않음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음)이나 지역의 노사관계 문화(대규모 기업일수록 노동조합 결성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핵심적이지 않은 사업을 외주화 하려함)도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사업체 규모가 커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화(Scale-up)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김수은·박세현 (2024)	- 전북지역 좋은 일자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전북지역 좋은 일자리 현황 · 전북지역 일자리 중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을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 수는 2023년 기준 157,182개로 도내 전체 일자리 수 중 16.4%를 차지 · 도내 좋은 일자리는 2013년(93,325개) 대비 63,857개 증가한 가운데, 전주에서 지난 10년간 좋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전북지역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 측면에서의 좋은 일자리 수는 2023년 447,769개로 전체 일자리 중 46.7%를 차지하고 있음 · 임금측면의 좋은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 중 52.0%인 499,312개로 나타남

자료원	내용
	· 2023년 근로시간 측면의 좋은 일자리는 2023년 기준 623,053개로 도내 전체 일자리 중64.9%를 차지 –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방향 · 지역고용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민이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와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종합실태조사’ 실시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기업–구직자간 좋은 일자리 중개, 고용서비스기관 네트워킹,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제정 및 좋은 일자리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 필요 등을 제시함
김수진, 윤지영 (2024)	– 지역적 상황에 맞는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자리 지표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통계정보를 정리하여 각 지표로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일자리 유관 지표들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일자리 관련 통계와 조사내용, 가용 데이터를 탐색하여 지표체계의 초안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지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 노동시장 또는 지역고용정책 전문가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4개 차원, 14개 하위 차원 총 59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음. – 일자리 환경(인구<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수, 총인구수 대비 생산가능인구비중, 고령화비율, 순이동, 총전입인구수, 총전출인구소, 인구순이동률, 지방소멸지수>, 산업<산업별 피보호자 비중, 산업별 사업장 비중, 산업별 종사자 및 사업체 수 비중>, 생산<업종별 생산지수, GRDP>, 경기<총사업장수, 신규·소멸 사업장수>), 일자리량(경제활동상태<경제활동참가율, 비경활 사유에 따른 비경활인구 비중>, 고용<고용율, 취업자수, 피보험자수, 등록외국인 현황, 실업률, 실업자 수, 비자발적 상실자 수, 상실자 수, 취득자 수, 입장자수, 이직자 수>, 구인구직<구인인원, 구직인원, 구인배수, 빈일자리수, 빈일자리율>, 노동수급<노동수요 자급지율, 노동공급 자급비율>) 일자리 질(임금수준<전국상대임금, 월급여액>, 고용안정<상용직 비중, 임시일용직 비중, 비정규직 비중>, 근로여건<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산업재해>), 일자리사업(직업훈련<구직자훈련 실시 훈련생수, 구직자훈련 기관수, 구직자훈련자 취업률, 재직자사업주훈련생수, 재직자–근로자훈련생수>, 고용장려금<유지지원금지급인원, 유지지원금지급건수, 유지지원금지급금액, 촉진지원금지급인원, 촉진지원금지급건수, 촉진지원금 지급금액, 창출지원금 지급인원, 창출지원금 지급건수,, 창출지원금 지급금액>, 실업소득<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 실업급여 지급건수>) – 방대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통계 정보를 목적성에 맞게 지역 일자리 지표로 명시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일자리 사업 기획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김정희, 김혜진,	– 매년 한국경제인협회(前,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4년제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 및 채용 관련 인식 변화, 직장선호 관련 인식, 취업의 어려움 해소

자료원	내용
강성현 (2024)	방안 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됨. - 조사 내용은 취업시장 전망, 직장 선호도, 대졸 신규채용 시 중요 요소, 구직실태, 취업준비계획 등 대학생의 취업체감도와 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 경향성 이었음. - 먼저, 취업 희망 산업군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예정)자가 가장 취업하길 원하는 산업 상위 순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41명, 29.2%)과 예술·스포츠(721명, 22.4%)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취업 전망에 대한 인식으로, 전년 대비 신규 채용환경에 대한 인식은 '잘 모르겠다'가 1,296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보다 신규 채용환경이 좋다고 인식한 학생은 117명(3.6%)으로 가장 적었음. - 2023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신규채용 환경에 대한 응답은 '잘 모르겠다'가 1,286명(39.9%)으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보다 좋다'고 인식한 학생은 125명(3.9%)로 가장 적었음. - 하반기 채용시장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가장 큰 변화로는 '경력직 채용 강화'(20.2%)와 '인공지능(AI) 활용 신규채용 증가'(18.3%)라는 응답이 많았음. - 소속 학부(학과)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의 예상 취업률에 대한 인식은 '50% 이상 60% 미만'일 거라는 응답이 509명(1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 이상 40% 미만'(474명,14.7%) 순으로 나타났음. - 전공과 취업 예상 직무 간의 관련성은 '매우 높다'라고 인식한 학생이 1,028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과 취업 예상 직무 간의 관련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인식한 학생이 123명(3.8%)으로 가장 적었음. - 취업 희망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는 대기업(22.3%)이 가장 많았으나, 실제 취업 예상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실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중소기업(25.9%)이 가장 많았음. - 취업 시 희망하는 연봉 수준으로는 '3,000만원~3,500만원'에 가장 많은 851명(26.4%)이었음. -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12명(21.1%)으로 나타났음.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 중 올해 입사지원을 '1~5회' 지원한 사람은 147명(69.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212명) 중 올해 서류전형에 '1회' 합격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명(31.1%)으로 가장 많았음. - 구직활동을 의례적으로 하고 있거나(283명), 거의 안하거나(228명), 쉬고 있다(67명)고 응답한 학생은 총 578명이었으며, 이들이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48.5%)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대졸 신규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이해도(20.4%), 직무 관련 업무경험(19.3%)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음. -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에 대하여, 4년제 대학생 및 졸업생 응답자 3,224명 중 941명(29.2%)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원	내용
	-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이 있는 학생 941명 중 9급에 응시할 학생은 525명(55.8%), 7급에 응시할 학생은 333명(35.4%), 5급에 응시할 학생은 83명(8.8%)으로 나타났음. -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는 '고용보장 및 급여 안정성(33.4%)'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퇴직 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20.7%로 뒤를 이었음. - 취업 준비를 시작한 학년으로는 '4학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409명(43.7%)으로 가장 많았음. - 예상하는 취업 준비 기간에 대한 응답은 '1년 이상~2년 미만'(938명, 29.1%),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935명(29%)으로 가장 많았음. - 취업준비과정에서 겪었거나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은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채용 기회 감소'(26.3%),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2.6%), '체험형 인턴 등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7.2%) 등으로 나타났음.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또는 국회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견해로 '노동, 산업 분야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 25.9%,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23.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청년 실업 및 취업의 어려움 해소 방안에 관한 대학생들의 자유의견으로 고용 및 취업정책 개선, 대학 등 교육과정 개선, 채용인식변화 및 기업 등 문화 개선, 취업·창업 준비 지원, 사회경제 정책 전반적 개선, 개인역량함양의 필요성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되었음..
이재영, 백평구 (2024)	-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직장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연구임. -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을 도출되었으며, 유형1은 '근로시간 관리 중시형'으로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경제적 보상의 중요성보다는 근로시간의 적절성, 근로시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 등을 중시하는 유형임. - 유형2는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보상 우선형'으로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유형임. - 유형3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가치 강조형'으로 일터에서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는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는 유형임. - 유형4는 '개인적 가치 추구형'으로 좋은 일자리의 심리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래, 성장, 성취감, 능력, 전문성 등의 키워드를 강조하는 유형임. - 이러한 4가지 유형을 유형으로 구분짓기 보다는 각 요인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음.
최지혜, 변장섭 (2024)	- 한국에서 2018년에 수립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8번(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이행 상황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최근 유네스코에서 개발한 「SDGs 2030 문화지표」와 기존 연구에서 다뤄졌던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활용하여 점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점검 결과, 전남의 문화관련 분야는 외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SDG

자료원	내용
	8 이행 과정에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남의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실질 GRDP는 2.2%로써 전국평균(2.5%)보다 낮은 수준이고, 문화관련 산업 종사자 비율은 2.5%로 전국평균(4.1%)보다 낮았으며, 문화관련 산업 사업체수도 전남 전체 산업의 2.8%로 전국평균(4.4%)보다 낮았고, 문화부문에 투자하는 공공재정 비율은 5.3%로 전국평균(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의 문화관련 산업의 시간당 임금은 2022년 기준 약 15,000으로 전국평균(20,000)보다 낮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취업자의 비율은 8.3%로 전국(6.2%)보다 높으며, 문화 관련 산업 분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도 전남(53.6%)이 전국(41.9%)보다 높음. - 다만 전남의 문화 관련 산업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전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77.3%로 전국평균(69.0%)에 비해 8.3%p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화영, 천영민, 정연순 (2024)	-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을 적용하여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각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일 획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 또한 이 경로에서 일의 의미와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한 연구임. - PWT에서 괜찮은 일은 첫째, 신체적이고 대인관계적으로 안전한 근무조건. 둘째, 자유시간과 적절한 휴식의 보장. 셋째, 가족 및 사회적 가치를 보완하는 조직의 가치. 넷째, 적절한 보상. 다섯째, 건강관리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를 의미함. - 연구 결과 첫째, 청년 근로자가 인식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괜찮은 일에 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의 의미, 일 자유의지, 진로 적응성은 두 변수의 영향 관계에 부분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 -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일의 의미와 일 자유의지를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일 자유의지와 진로적응성은 괜찮은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셋째, 청년 근로자의 일의 의미는 괜찮은 일자리 획득에 매개효과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었음.

다. 전북지역 좋은 일자리(김수은과 박세현, 2024)

▌김수은과 박세현(2024)의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직장선택시 주로 고려하는 요건이자 통상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여기는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시간 조건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측정을 위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음

<표 4-6> 좋은 일자리 구성지표(김수은과 박세현, 2024)

구분	측정기준
고용안정성	종사자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
임금수준	전국 임금근로자의 중위임금 150% 이상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6

▌전북지역 좋은 일자리 현황

○ 전북 도내 일자리 중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근로시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좋은 일자리는 2023년 기준 157,182개로 2013년 93,325개보다 63,857개 늘어난 것으로 분석함

- 고용안정성 측면의 좋은 일자리는 447,769개로 2013년에 비해 105,436개 증가하였고, 임금측면 좋은 일자리는 499,312개로 10년 동안 83,080개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측면 일자리는 10년간 87,381개 증가한 623,053개로 분석

<표 4-7> 전북특별자치도 좋은 일자리수 현황 비교

(단위 : 개)

구분		2013년		2023년	
		전북	전국	전북	전국
좋은 일자리 수	전체	93,325	3,996,455	157,182	6,651,473
	고용안정성 측면	342,333	11,935,612	447,769	16,086,092
	임금수준 측면	416,232	10,569,463	499,312	14,263,676
	근로시간 측면	535,672	15,458,678	623,053	19,596,035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6

○ 지역별 좋은 일자리 비중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전체 총 일자리 중 16.4%(전국 14위)만이 좋은 일자리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좋은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37.0%)이며, 울산(32.9%), 서울(29.7%) 순으로 제시함

<그림 4-6>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지역별 좋은 일자리 비중(%)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3)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6

○ 고용안정성 측면만 고려했을 경우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46.7%로 전국 15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고용안정성이 우수한 지역은 세종(72.7%), 울산(66.3%), 경기(63.9%) 순임

<그림 4-7>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고용안정성 측면 좋은 일자리 비중(%)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7

○ 임금 측면만 고려했을 경우,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52.0%로 전국 9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임금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세종으로 59.8%로 나타났으며, 전남(58.5%), 충남(56.2%) 순임

<그림 4-8>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임금 측면 좋은 일자리 비중(%)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7

○ 근로시간 측면만 고려한 전북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64.9%로 전국 14위 수준임

- 근로시간 측면 좋은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75.7%), 경기(74.8%), 서울(74.6%)임

<그림 4-9>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근로시간 측면 좋은 일자리 비중(%)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7

▌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 좋은 일자리 현황

○ 2023년 기준 좋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주 약 8만 개, 군산 2.6만 개, 익산 2.3만 개 등 도심권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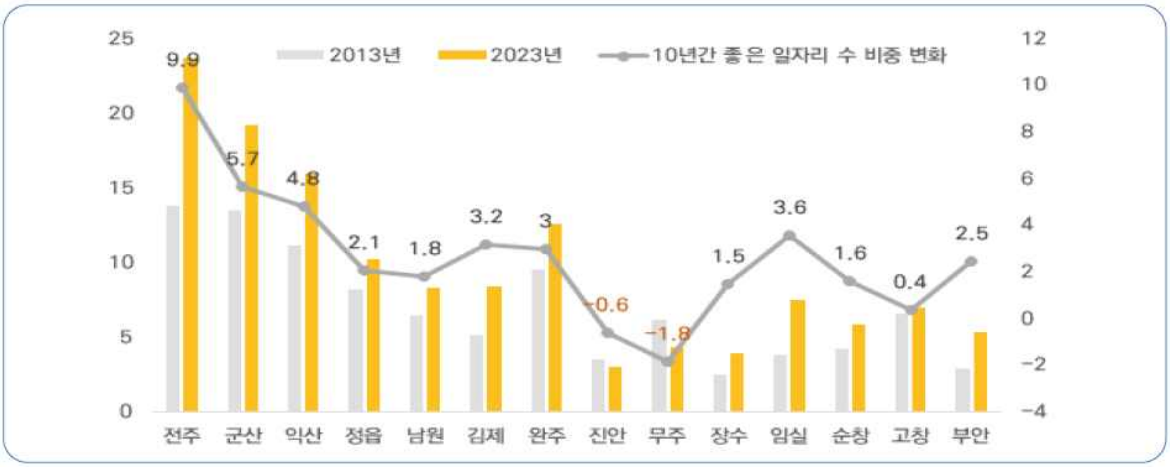
- 2013년 기준으로는 전주가 4만 개, 군산이 1.7만 개, 익산이 1.6만 개로 나타남

○ 2023년 각 지자체별 일자리 수 대비 좋은 일자리 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주(23.7%), 군산(19.2%), 익산(16%), 완주(12.6%) 순으로 분석함

- 주로 도심권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 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4-10> 전북특별자치도 2023년 시군별 일자리수 대비 좋은 일자리 수 비중

(단위 : %, %p)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8

<표 4-8> 전북특별자치도 2013년-2023년 시군별 일자리수

(단위 : 개, %, %p)

구분	2013년			2023년			10년간 좋은 일자리 수 비중 변화
	좋은 일자리 수 (A)	만 18세 이상 일자리 수 (B)	좋은 일자리 수 비중 (A/B)	좋은 일자리 수 (C)	만 18세 이상 일자리 수 (D)	좋은 일자리 수 비중 (C/D)	
전주	40,647	293,609	13.8	79,775	336,434	23.7	9.9
군산	16,956	125,449	13.5	25,519	132,908	19.2	5.7
익산	15,701	139,801	11.2	23,411	146,519	16.0	4.8
정읍	4,636	56,322	8.2	6,157	59,694	10.3	2.1
남원	2,876	43,959	6.5	3,627	43,497	8.3	1.8
김제	2,474	47,436	5.2	3,972	47,377	8.4	3.2
완주	4,064	42,136	9.6	7,208	57,361	12.6	3.0

구분	2013년			2023년			10년간 좋은 일자리 수 비중 변화
	좋은 일자리 수 (A)	만 18세 이상 일자리 수 (B)	좋은 일자리 수 비중 (A/B)	좋은 일자리 수 (C)	만 18세 이상 일자리 수 (D)	좋은 일자리 수 비중 (C/D)	
진안	509	13,951	3.6	446	14,813	3.0	-0.6
무주	893	14,463	6.2	653	14,785	4.4	-1.8
장수	363	14,474	2.5	557	13,995	4.0	1.5
임실	586	14,855	3.9	1,104	14,767	7.5	3.6
순창	644	15,012	4.3	927	15,619	5.9	1.6
고창	2,060	31,241	6.6	2,199	31,530	7.0	0.4
부안	916	31,052	2.9	1,629	30,297	5.4	2.5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8-9.

▮ 임금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 좋은 일자리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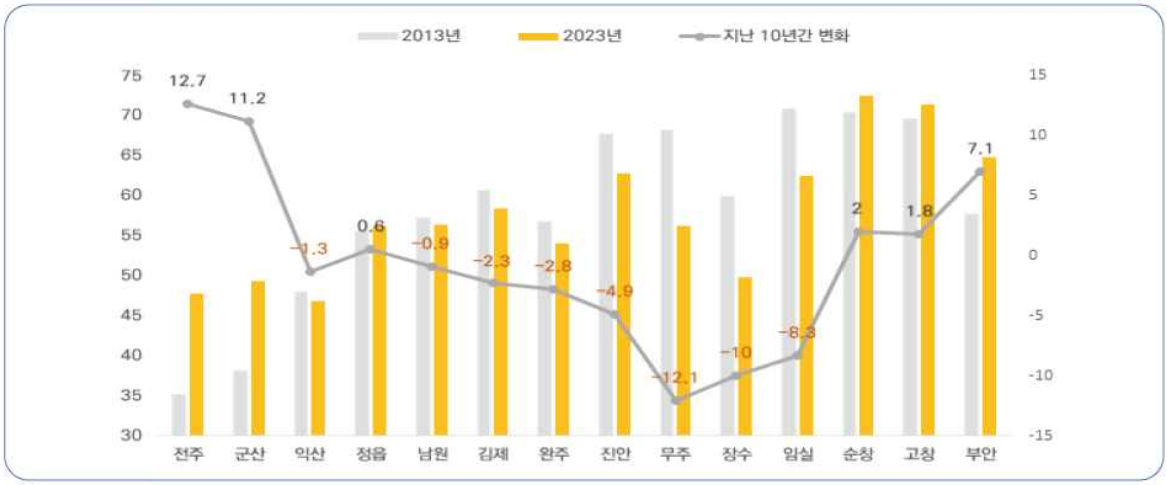
○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3년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주 16.1만 개, 익산 6.9만 개, 군산 6.6만 개 순으로 분석함

- 2013년 기준으로는 전주가 10.3만 개, 익산이 6.7만 개, 군산이 4.8만 개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전주의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증가(5.8만 개)했으며, 군산도 1.8만 개가 증가하여 높은 상승을 보임
  -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는 중위소득 150%이상(2013년 기준 2,599,313원, 2023년 기준 3,116,838원)의 임금을 제공 받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김수은과 박세현의 연구에서는 반올림하여 2013년 기준 260만원, 2023년 기준 312만원 이상을 제공받는 일자리를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음

○ 2023년 전북 도내 시군별 취업자 수 대비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72.5%), 고창(71.5%), 부안(64.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1>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비중

(단위 : %, %p)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11

<표 4-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수

(단위 : 개, %, %p)

구분	2013년			2023년			지난 10년간 변화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B)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C)	임금 기준 좋은 일자리 수 (D)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F)	일자리 수 증감 (D-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B)	지자체 대비 비중 (F-C)
전주	102,951	24.7	35.1	160,908	32.2	47.8	57,957	7.5	12.7
군산	47,869	11.5	38.2	65,627	13.1	49.4	17,758	1.6	11.2
익산	67,269	16.2	48.1	68,642	13.7	46.8	1,373	-2.5	-1.3
정읍	31,300	7.5	55.6	33,534	6.7	56.2	2,234	-0.8	0.6
남원	25,210	6.1	57.3	24,530	4.9	56.4	-680	-1.2	-0.9
김제	28,844	6.9	60.8	27,710	5.5	58.5	-1,134	-1.4	-2.3
완주	23,940	5.8	56.8	30,969	6.2	54.0	7,030	0.4	-2.8
진안	9,455	2.3	67.8	9,324	1.9	62.9	-131	-0.4	-4.9
무주	9,879	2.4	68.3	8,312	1.7	56.2	-1,567	-0.7	-12.1
장수	8,669	2.1	59.9	6,986	1.4	49.9	-1,683	-0.7	-10.0
임실	10,535	2.5	70.9	9,241	1.9	62.6	-1,294	-0.6	-8.3
순창	10,590	2.5	70.5	11,317	2.3	72.5	728	-0.2	2.0
고창	21,787	5.2	69.7	22,545	4.5	71.5	758	-0.7	1.8
부안	17,934	4.3	57.8	19,666	3.9	64.9	1,732	-0.4	7.1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11

▮ 근로시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별 좋은 일자리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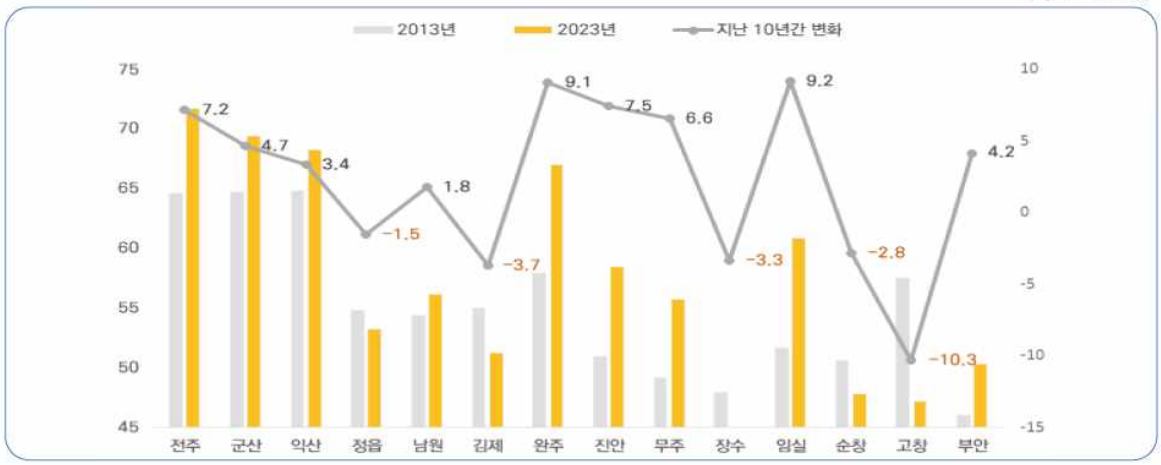
○ 주당 36시간에서 52시간 사이 근로시간을 제공하는 전북의 일자리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3년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주 24만 개, 익산 10만 개, 군산 9.2만 개로 분석함

- 2013년 기준으로는 전주가 19만 개, 익산이 9만 개, 군산이 8만 개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전주의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가 가장 많이 증가(5.2만 개)했으며, 완주가 1.4만 개 증가하여 성장세가 두드러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각 지자체별 취업자 수 대비 좋은 일자리 수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주(71.8%), 군산(69.5%), 익산(68.3%) 순으로 분석함

<그림 4-1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 비중

(단위 : %, %p)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12

<표 4-10>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수

(단위 : 개, %, %p)

구분	2013년			2023년			지난 10년간 변화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 (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B)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C)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 (D)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F)	일자리 수 증감 (D-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B)	지자체 대비 비중 (F-C)
전주	189,573	35.4	64.6	241,654	38.8	71.8	52,080	3.4	7.2
군산	81,256	15.2	64.8	92,434	14.8	69.5	11,178	-0.4	4.7
익산	90,797	17.0	64.9	100,134	16.1	68.3	9,337	-0.9	3.4
정읍	30,882	5.8	54.8	31,844	5.1	53.3	962	-0.7	-1.5
남원	23,919	4.5	54.4	24,451	3.9	56.2	532	-0.6	1.8
김제	26,107	4.9	55.0	24,313	3.9	51.3	-1,795	-1.0	-3.7
완주	24,423	4.6	58.0	38,490	6.2	67.1	14,067	1.6	9.1

구분	2013년			2023년			지난 10년간 변화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 (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B)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C)	근로시간 기준 좋은 일자리 수 (D)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	지자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 (F)	일자리 수 증감 (D-A)	전북 전체 대비 비중 (E-B)	지자체 대비 비중 (F-C)
진안	7,109	1.3	51.0	8,659	1.4	58.5	1,551	0.1	7.5
무주	7,119	1.3	49.2	8,250	1.3	55.8	1,131	-	6.6
장수	6,930	1.3	47.9	6,242	1.0	44.6	-688	-0.3	-3.3
임실	7,681	1.4	51.7	8,991	1.4	60.9	1,311	-	9.2
순창	7,591	1.4	50.6	7,467	1.2	47.8	-125	-0.2	-2.8
고창	17,959	3.4	57.5	14,873	2.4	47.2	-3,085	-1.0	-10.3
부안	14,325	2.7	46.1	15,251	2.4	50.3	926	-0.3	4.2

자료 :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저자 가공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p.12

제2절 단기적 대응방안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층 인구 유출의 주요원인 분석 결과 일자리(직업) 문제로 인한 이탈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지역간 임금차이분석 결과 전 산업대별로 약 58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각각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대응방안으로 (1) 제도적 개선, (2) 재정적 지원방안, (3)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그림 4-13> 청년층 인구유출 단기적 대응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청년관련 제정하여 운영중인 조례는 총 158개이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관련 총 9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임

<표 4-11> 청년관련 조례 및 청년의 범위

(단위 : 개, 세)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조례	12	7	5	5	8	11	9	7	16
청년의 범위	19세~39세	18세~39세	18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18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19세~39세
구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강원 특별 자치도	전북 특별 자치도	제주 특별 자치도	합계
조례	7	11	16	7	11	7	9	10	158
청년의 범위	19세~39세	19세~39세	18세~45세	19세~39세	19세~39세	18세~45세	18세~39세	19세~39세	

■ 전북특별차지도에서 추기적으로 청년광련 조례로 다음의 3가지를 제정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함

○ (가칭) 청년유입 및 정착 지원조례

- 타지역 사례 : 울산, 전남 등

○ (가칭)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타지역 사례 : 서울, 강원, 경북 등

○ (가칭)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타지역 사례 : 서울, 대전, 경기, 전남, 경남 등

<표 4-12> 광역지자체별 청년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특징
전북 특별 자치도 (9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3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대상 : 군복무 청년(18세~39세) - 내용 : 상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상) - 내용 :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주거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종합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8세~45세) - 내용 : 종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일자리 창출 촉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조례(2024.12.6 제정)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청년창업 전반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에 관한 조례(2024.12.27 제정	- 대상 : 청년(18세~39세) - 대상 : 청년특화구역 지원
서울 특별시 (12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졸돌범청년(9세~34세) - 내용 : 종합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중 미취업자(15세~29세) - 내용 : 중소기업 취업 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 예술인(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 장해 재대군인(19세~39세) - 내용 : 상담센터 등 종합지원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39세 이하),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 기준 - 내용 : 창업지원

구분	조례명	특징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및 청년단체 - 내용 : 청년공간 운용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주택 사업지원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5세~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 내용 : 고용촉진과 일자리 질 개선,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및 종합적 지원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미성년이 아닌 39세 이하) - 내용 : 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참여기구 및 활성화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친화도시 지원
부산 광역시 (7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대상 : 군복무 청년 - 내용 : 상해보험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고용 및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 - 내용 : 종합지원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과 청년예술인(18세~39세) - 내용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8세~50세 미만) - 내용 : 종합지원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5세~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구분	조례명	특징
		- 내용 :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미성년이 아닌 39세 이하) - 내용 : 주거지원
대구 광역시 (5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 예술인(19세~39세) - 내용 : 문화예술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창업자(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자) - 내용 : 창업지원
	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탈모치료지원(탈모치료 바우처)
인천 광역시 (5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9세~34세) - 내용 : 종합지원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 예술인(18세~39세) - 내용 : 문화예술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4세,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 최고연령 39세까지) - 내용 : 창업지원
	인천광역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육성 및 지원

구분	조례명	특징
광주 광역시 (8개)	광주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 예술인(19세~39세) - 내용 : 문화예술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광주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9세~24세) / 청년(19세~34세) - 내용 : 종합지원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대상 : 군복무 청년 - 내용 : 상해보험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39세 이하) - 내용 : 창업지원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광주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 고용촉진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프리랜서 (19세~34세) - 내용 : 실태조사 및 지원
대전 광역시 (11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년(18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대전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상) - 내용 : 종합지원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상 : 청년근로자(18세~39세) - 내용 : 기숙사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 청년내일희망카드 조례	- 대상 : 청년(18세~34세) - 내용 :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내일희망카드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8세~39세) - 내용 : 육성 및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새마을연합회

구분	조례명	특징
		- 내용 :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대전광역시 청년제대군인·청년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재대군인과 청년의사상자(18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창업지원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설립 및 운영
울산 광역시 (9개)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구직활동 지원 및 고용촉진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8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울산광역시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새마을연합회 - 내용 :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울산광역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과 생활인구 - 내용 : 청년유입 및 정착지원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장인(숙련기술자)(19세~39세) - 내용 : 우대 및 종합지원(기술장려금)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창업지원
	울산광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친화도시 지원
세종특별시 (7개)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 대상 : 사회적 고립청년(19

구분	조례명	특징
	조례	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8세~44세) - 내용 : 종합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청년 및 고교졸업자 - 내용 : 일자리 창출 지원(청년 인력수급계획, 실태조사, 교육지원), 공기업 청년 채용 및 고교졸업자 우선 채용)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주거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친화도시 조성
경기도 (16개)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34세 이하) - 내용 : 종합지원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대상 : 군복무 청년 - 내용 : 상해보험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상) - 내용 : 종합지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고용우수기업(청년, 15세~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 내용 : 종합계획 및 우수기업 인증, 인증기업 지원
	경기도 청년 국민연금 가입 장려 조례	- 대상 : 청년(19세~34세) - 내용 : 국민연금 가입 장려(교육 및 홍보, 재무설계 컨설팅), 미래설계지원금 지급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관광/여행산업 청년 종사자(19세~39세)

구분	조례명	특징
		- 내용 : 관광/여행산업 창업/창직 등을 위한 관광상품개발/홍보/서비스 교육 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수행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 예술인(19세~39세) - 내용 :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 내용 : 일자리 관련 종합지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장해 제대군인(19세~34세) - 내용 : 종합지원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주거안정 지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창업지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 내용 :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금융기본권 보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대상 : 청년(19세~24세) - 내용 : 청년기본소득(사회보장적 금전, 지역화폐 활용)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종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7)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년(14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

구분	조례명	특징
	관한 조례	상) - 내용 : 종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종합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취업지원, 중소기업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사업자 대표 및 개인사업자(18세~45세) - 내용 : 청년경제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및 청년단체 - 내용 :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 시상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북도 (7개)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13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상)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대상 : 청년(19세~34세) - 내용 :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 가능, 보상금 지급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 대상 : 청년농어업인(40세 미

구분	조례명	특징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남도 (11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남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대상 : 군복무 청년 - 내용 : 상해보험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고용우수기업(청년, 15세~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 내용 :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 지원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복지 종합지원
	충청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1호 기준, 19세~34세) - 내용 :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 내용 : 청년창업 종합지원
	충청남도 청년어선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어선어업인(19세~49세) - 내용 : 종합지원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기준) - 내용 : 일자리 창출 촉진, 고용안정지원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농어업인(18세~45세) - 내용 : 종합지원
전라남도	전라남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년(9세~34

구분	조례명	특징
(16개)		세) - 내용 : 종합지원
	전라남도 관광문화 청년홍보활동가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홍보활동가(20세~39세) - 내용 :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 - 내용 : 종합지원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종합지원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및 신혼부부(모두 49세 이하) - 내용 : 주거지원
	전라남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문화예술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주거안정 지원,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기금의 활용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상 : 창농자 및 예비창농자 - 내용 : 청년창농타운(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내 시설)
	전라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4세) - 내용 : 청년구직지원금(사회보장적 비용), 청년구직활동 지원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대표(18세~45세) - 내용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청년센터 운영 및 지원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및 지원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
	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20세~39세)

구분	조례명	특징
		- 내용 : 청년창업 종합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45세) - 내용 : 청년측화구역 조성 및 지원
	전라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대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북도 (7개)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9세~34세)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39세) - 내용 : 청년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사업
	경상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대표자(19세~39세) - 내용 :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9세~39세) - 내용 :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 내용 : 청년창업 종합지원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3조)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남도 (11개)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소년/청년(13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 대상 : 청소년 및 청년(9세~39세)

구분	조례명	특징
		- 내용 : 고립/운둔 청소년/청년 종합지원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 조례	- 대상 : 자립준비청년(15세 이상)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9세~34세) - 내용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생활안정(주거, 취업, 학자금, 그밖에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한 종합지원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창업지원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주거지원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49세 이하) - 내용 :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10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가족돌범 청년(13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사회적 고립청년(19세~39세) - 내용 : 고립청년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18세~39세) - 내용 :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문화 역

구분	조례명	특징
		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청년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 대상 : 청년농업인(15세~45세) - 내용 : 종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대상 : 청년(19세~39세) - 내용 : 청년의 날에 시상(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기여, 특별공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15세~39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	- 대상 : 청년청년(19세~39세) - 내용 : 창업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 : 청년회 - 내용 : 청년회 활동 및 재정지원
합계	153개	- 대상 : - 내용 :

<표 4-13> (가칭)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의 구성(안)

장	상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정의)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추진체계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정보화 시스템의 구축) 제11조(연구사업 등) 제6조(실태조사) 제8조(주민의견 수집 및 청취)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3장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	제12조(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제14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지방행정 참여) 제18조(청년문화 여건의 조성) 제20조(청년복지 및 여가시설의 설치) 제22조(출산장려) 제24조(청년의 국제교류 확대) 제13조(청년 고용 촉진) 제15조(청년 주거지원)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9조(청년단체의 지원) 제21조(보육 및 교육 지원) 제23조(청년의 도농간 교류 확대) 제25조(청년공동체의 결성 및 운영 지원)
제 4장 재원의 확보	제2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재원의 안정적 조달)
재 5장 보칙	제28조(시범사업) 제30조(행정협의체의 설치 운영) 제29조(포상)
부칙	

2) 청년일자리 관련 전담조직의 구성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청년을 검색하면 50여건의 업무(부서 및 소관업무 기준)가 검색됨**
-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년정책과 소관업무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청년 일자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표 4-14> 청년정책과 이외 부서 청년관련 소관업무 현황

부서	담당업무	비고
여성가족과	자립준비청년지원 협력체계 구축	
농식품인력개발원	창업보육 청년창업농 정착지원 및 사후관리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업무 관리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청년농CEO(딸기, 토마토)전공 담당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업무관리	
	미래인력 양성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농산어촌청년리더,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목탐색, 후계농업인육성, 귀농창업, 농생명 진로소개 등	
	청년창업 아이템 발굴, 친환경농업 입문, 농산물 안전성 강화 등	
도립미술관	아카이브 관련 업무 전반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관련 업무 청년인턴 운영 · 관리 등	
	<전북청년2025>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 및 청년정책자문단 운영	
	자치경찰 청년 정책자문단(메신저-폴) 운영	
농촌사회활력과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문화산업과	문화예술 청년인턴형지원사업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슈	
농생명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 시책	

부서	담당업무	비고
	청년농업인 단체관리 등 네트워크강화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이차보전, 임차지원, 생생동아리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여성청년농업인팀 업무 총괄	
	청년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육성 시책	
농식품산업과	청년식품창업센터	
기업애로해소과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일자리민생경제과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등 총괄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추진(고용부, 산업부	
주택건축과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계층 주거지원,전세사기피해접수창구 운영,공동주택관리 지원	
	주거취약계층(저소득, 신혼청년) 임대보증금 지원	
창업지원과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전북 창업대전 및 청년창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사회복지정책과	신취약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지원사업	
	청년미래센터 운영지원	
	전북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여성가족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자립준비청년 주거, 자립수당 지원	
축산연구소	청년축산인육성 교육과정 운영	
관광산업과	전북 MICE 산업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	

▮ 청년정책은 [기획조정실]-[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와 관련하여 [기업유치지원실]-[일자리민생경제과]-[일자리정책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등 총괄하고 있음

▮ 경기도를 비롯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별도의 청년일자리 담당조직을 팀담위로 운영중임

○ 경기도

- 미래평생교육국 - 청년기회과 - 청년일자리팀(팀장포함 5명)

○ 충청남도

- 청년정책관-청년일자리팀(팀장 포함 3명)

○ 경상남도

- 교육청년국-인력지원과-청년일자리파트(파트장 포함 4명)

<그림 4-14> 광역지자체 청년일자리 조직

경기도

청년기회과	청년일자리팀장	조새봄	031-8008-4332	· 청년일자리팀 업무 총괄
청년기회과	주무관	이**	031-8008-4333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청년기회과	주무관	서**	031-8008-3453	· 청년공간 조성 및 지원
청년기회과	주무관	차**	031-8008-347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기회과	주무관	김**	031-8008-3472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충청남도



청년일자리팀장	041-635-3972	- 청년 일자리 업무 총괄·조정 - 청년사업 분석·평가
주무관	041-635-3984	- 청년인턴 사업(민간기업, 공기업 등 일 경험) -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기업탐방, 취업캠프 등)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등) - 청년일자리 매칭 플랫폼 - 청년친화기업
주무관	041-635-206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 청년고용통계 및 청년고용동향 조사 및 분석 - 팀 일반서무

경상남도

청년일자리파트장	055-211-3562	○청년일자리 관련 시책 개발 ○청년일자리플랫폼 운영 지원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주민참여)
주무관	055-211-3563	○주요업무계획 및 도의회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 ○기업 채용연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지원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에너지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항공우주산업 청년일자리사업
주무관	055-211-356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시군주도 청년일자리사업 총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고졸자-선도기업간 희망일자리사업 - 청년인재-주력산업 청년일자리사업 -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현장실습비 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추진
주무관	055-211-356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 청년 장인프로젝트 -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경남형 공제사업 - 경남 상생공제 지원사업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청년 마케팅 스쿨 지원사업(주민참여) ○담당 내 일반서무

<그림 4-1>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청책 관련 조직



인구청년정책과장 이정우	063-280-3940	인구청년정책과 업무 총괄
인구정책팀장	063-280-3881	인구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063-280-3933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저출산 대응 TF 및 지역연대 등
주무관	063-280-3937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리 및 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인구활력추진단 운영
주무관	063-280-2875	인구정책 도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 추진 등
주무관	063-280-4742	전북투어패스 운영, 전북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비밀문서, 보안, 주간·월중업무, 일반서무(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주무관	063-280-3923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관리 및 컨설팅 지원, 인구정책 콘텐츠 공모 추진
인구위기대응팀장	063-280-3927	인구위기대응팀 업무 총괄
청년정책팀장	063-280-3932	청년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063-280-3212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의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대응
주무관	063-280-3934	전북청년 두배적금 지원사업, 전북 청년허브센터 운영 등
주무관	063-280-3883	일반서무
청년활동지원팀장	063-280-3211	청년활동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063-280-3884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지역활력팀장	063-280-3921	지역활력팀 업무 총괄
주무관	063-280-3926	· 도정혁신 실행계획 및 혁신평가 추진 ·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주무관	063-280-3936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종합평가 추진 · 팀 일반서무

(제안 1) [기획조정실] - [청년정책과]-[청년일자리팀]

(제안 2) [기업유치지원실]-[일자리민생경제과]-[청년일자리팀]

<그림 4-15>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일자리 담당 조직

일자리정책팀장	063-280-2825	◦일자리정책 신규시책 발굴 ◦일자리정책 업무 전반
주무관	063-280-2828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등 총괄 ◦일자리창출 실행과제 추진상황 관리 ◦고용노동부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대응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추진(익산형) ◦새만금 고용특구 추진 ◦일자리·고용 관련 정부정책 현안 대응(의회 등)
주무관	063-280-2826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주무관	063-280-2827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등 총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추진(군산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 청년나래(이음, 이음플러스)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친화친구기업 지원사업
주무관	063-280-2831	◦ 지역 우수기능인력 양성 등 총괄 ◦ 전라북도 명장 선정 지원 ◦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업무 전반 ◦지역 우수기능인력 양성 등 총괄 ◦전라북도 명장 선정 지원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업무 전반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추진(고용부, 산업부) ◦고용통계 분석(월별 고용동향 분석 등)
주무관	063-280-3214	◦신중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등 총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 및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관리 ◦정부합동평가 대응 및 성과지표(BSC) 관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보조) ◦예산서무
주무관	063-280-3215	◦일반서무 및 회계서무 ◦일자리창출 실행과제 추진상황 분기 보고 ◦일자리 공시제 및 새만금 고용특구 업무 보조

▮ 방안

○ 제안 1 : 인구청년정책과 산하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는 방안

○ 제안 2 : 일자리민생경제과 산하 일자리정책팀과 별도로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는 방안

2. 재정적 지원방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을 억제하는 대응방안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지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지역내 청년인구의 유출억제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

1) 청년고용기업 지원방안

가. 청년고용기업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중 자체적인 기숙사를 설립·운영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기숙사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

○ 방식 :

-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중 일부 미임대주택을 지역내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의 공동기숙사로 운영
- 이에 따른 기숙사 비용중의 일부를 전북개발공사가 임대료 감면방식으로 부담
- 지원내용(예시) : 총 임대료의 50% 이내(월 20만원 이내)

<그림 4-16> 공동기숙사 사례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입주기업 근로자 공동기숙사(2015년)



▲ 기숙사 기공식 사진과 기숙사 조감도



▲ K5사업장 신축공사 현장 사진 (2015. 3. 10)

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지역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인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현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운영중임**

-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제도를 운영(설치비 최대 20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음
- 2024년에도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금액이 설치비의 최대 20억원이고 소요비용의 90% 이내, 시설매입비의 경우 소요비용의 40%에 불과함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립지원보다는 매년 상당금액의 운영비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되고 있지 못함

▌**전북지역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복지부,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지원금액 이외에 매년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 (가칭)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조례를 신설하여 지원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선발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필요로 하는 운영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지역청년 고용기업 공시 및 홍보

▌**전북특별자치도내 출신(출생지역, 출신고등학교, 출신대학교 셋중 하나 이상 기준) 청년을 지역내 기업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 주요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칭) 전북청년고용기업으로 지정, 해당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방안

• 예를 들어 지역내 신입사원 채용시 전북지역 출신 100% 고용기업을 전북청년 고용기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 기업 지원 방안 :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각종 행/재정적 지원 추진, 지방세(대부금)감면 및 지방보조금 등에 있어 우선배정 등이 가능할 것임

2) 지역청년 직접 지원방안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업,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독립세대로 분리하고자 하는 전북청년과 전북지역을 출향하고 유턴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함

가. 청년 독립지원 : 이사비용 지원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주민등록을 최초로 분리하는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하는 방안

○ 지원방식 : 1인당 100만원(지역내 이사업체 이용, 이사비용의 최대 50% 이내)

○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나. 청년임대주택(가칭 1만원 아파트)

○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아파트 등)을 추진하는 경우 청년대상 월1만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 지원내용 : 임대료 중 월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면(1년간 지원)

○ 대상 : 생애최초 전북지역내 기업 입사 1년차 지역청년

○ 타지역 사례로 인천시 월 3만원(하루천원주택, 신혼부부 1천가구),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도 다양한 청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15> 인천광역시의 청년임대주택사업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집을 임대하는 천원주택을 2025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 가구 공급할 예정 - 지원 대상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할 계획 - 지원방식 :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전용 85㎡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 - 지원내용 :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

<표 4-16> 전라남도 화순군의 월1만원 아파트



• 주요내용 : – 관내 32평 주거 아파트 등 지원(보증금) ▸ 6년간 거주 지원 / 월 1만원 자부담 – 기타 비용 자부담 • (직업 전문역량 강화) – 관련 직업 전문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관련 기업을 통해 신청(50%지원, 최대1천만원) • 지원방식 : 화순군 1만원아파트 : 부영이 시공한 화순군 소재의 임대 전용 아파트를 4,800만원에 화순군에 임대하면, 화순군은 이를 입주자에게 월 1만원에 임대.

<표 4-17> 전라남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4년)

■ 공급 임대주택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지원 기간 : 2년 /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부영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9.920㎡) 100호
- 청년 50호, 신혼부부 50호 공급
· 입주 호실 지정은 추첨과 동시에 결정
· 모집군별 예비 입주자 5명 추가 확보
- 모집군별 5명(예정) 추첨하여 예비 입주자의 입주 자격은 다음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유효
■ 자격요건
① 18세 이상 ~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②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무주택자이면서, ③ 근로소득(사업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음
■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②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④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⑤ 일용근로 및 초단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⑥ 연소득 600만원(월 50만원) 미만 사업소득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14.(일)
·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해당 기간 내에 접수가 안될 경우 추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신청기간 연장이 불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등의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절차
· 입주 신청(온라인) : 2024. 4. 1.(월) ~ 4. 14.(일)
· 서류심사 : 2024. 4. 15.(월) ~ 4. 29.(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 4. 30.(화) 15:00 (화순군청 홈페이지)
· 입주자 추첨 : 2024. 5. (추첨 일자 재공고)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다.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청년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 지원내용 : 예)100만원(결혼비용의 50% 이내)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 적어도 신랑과 신부중 적어도 1명 이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지역내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방식 :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라. 지역유턴 지원금제도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한 청년인구 또는 출향 경험 청년중 전북특별자치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

○ 지원내용(예시) : 1인당 50만원(주소이전 지원금,1회만 지급)

○ 지원조건 : 주민등록 이전이후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 필수

○ 지원자격 : 전북지역에서 출생하였거나 출생이후 타광역지자체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였으나 전북특별자치도로 주민등록 이전을 한 청년인구(지원신청이전 6개월 이상 타광역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함)

○ 기대효과 : 전북특별자치도를 떠나 타지자체에 정착한 청년인구의 지역내 이전 및 지역으로의 회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인구늘리기 정책효과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행정적 지원방안

1) 청년센터 및 공간 추가 신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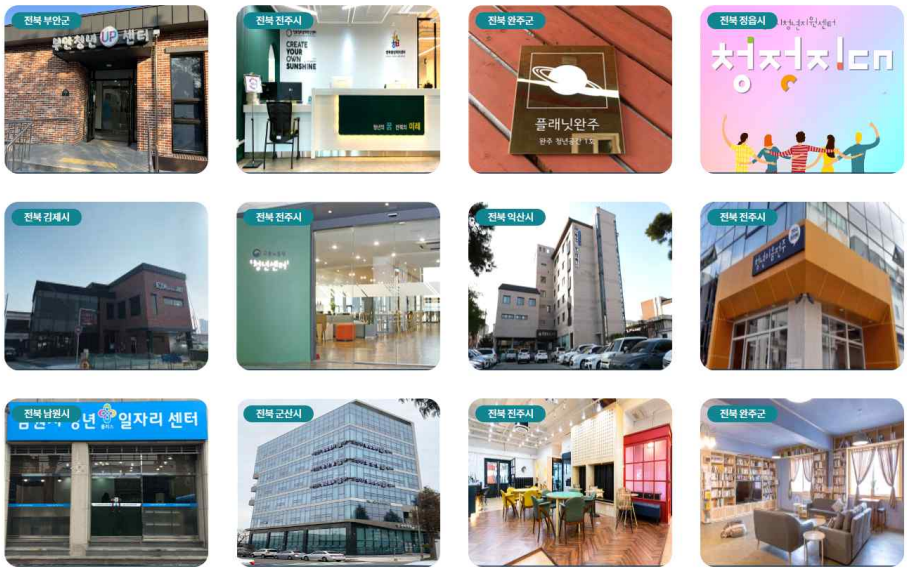
▮ 전국에는 총 215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총 12개소가 운영중임(온통청년 홈페이지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내 총 12개소(전주4,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완주2, 부안)

- 순창군 : 청년문화센터
- 전주시 : 청년이음전주, 전북청년허브센터
- 김제시 : 김제청년공간 E:DA(이다)
- 남원시 : 남원청년마루 청년센터·창업센터
- 부안군 : 부안청년UP센터
- 정읍시 :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
- 익산시 : 익산청년시청
- 군산시 :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 전북특별자치도내 14개 기초지자체중 6개 기초지자체(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에는 청년센터가 아직 설립되고 있지 못함

<그림 4-17>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센터 운영 현황



자료원 : 온통청년(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 https://jb2030.or.kr)에 의하면 총 19개의 청년공간이 조성되어 운영중임**

○ 전주시 : 8곳

-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년센터(8층)
- 전북청년허브센터
- 팔복예술공장
- 청년소통공간 비빌 4호점(르하임 스터디카페 전북대점)
- 청년소통공간 비빌 3호점(스페이스코웍 전북도청점)
- 청년소통공간 비빌 2호점(선뜻)
- 청년소통공간 비빌 1호점(더키플라워)
- 청년이음전주

○ 군산시 : 1곳(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 익산시 : 2곳

- 무슨이리야
- 익산청년시청

○ 남원시 : 1곳(남원청년마루)

○ 김제시 : 1곳(김제청년공간 E:DA(이다))

○ 완주군 : 3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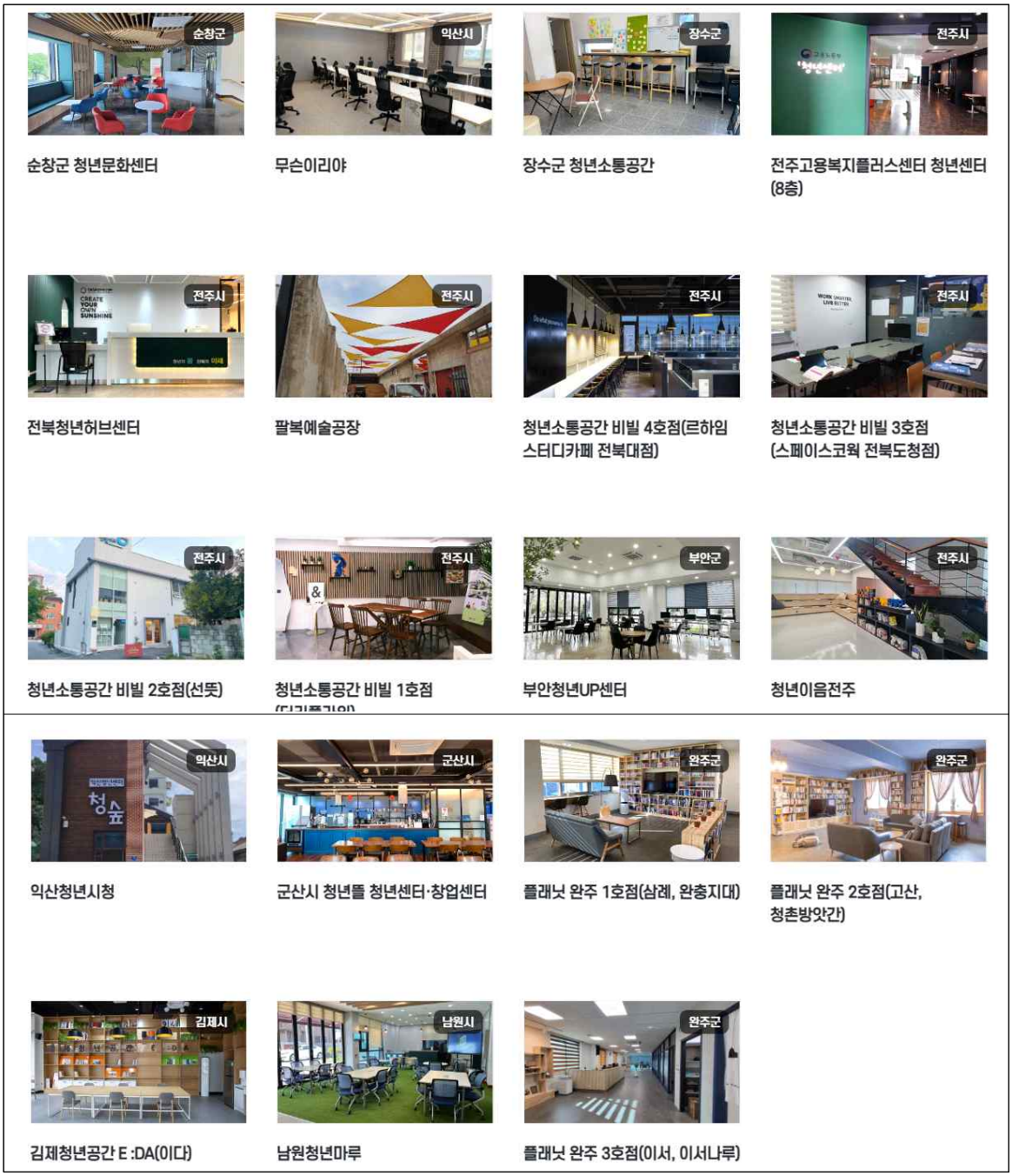
- 플래닛 완주 1호점(삼례, 완충지대)
- 플래닛 완주 2호점(고산, 청촌방앗간)
- 플래닛 완주 3호점(이서, 이서나루)

○ 장수군 : 1곳(장수군 청년소통공간)

○ 순창군 : 1곳(순창군 청년문화센터)

○ 부안군 : 1곳(부안청년UP센터)

<그림 4-18>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공간 운영 현황



자료원 :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 : https://jb2030.or.kr)

2) 지역청년 고용촉진방안

가. 지방공기업의 지역내 청년고용 의무제

▌**전북특별자치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전북지역 출신(출생지역, 출신고등학교, 출신대학교 셋중 하나 이상 기준)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함**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시 해당 항목의 명시화를 통해 지역내 청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타지역 사례로 부안군 문화재단의 경우 직원채용공고에 부안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의 경우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부안군문화재단의 경우 자격기준을 공고일 현재 부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림 4-19> 부안군 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 사례

연번	구 분	자 격 기 준
1	기간제근로자 공통	· 공고일 현재 부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부산교통공사

-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지역제한제도를 두고 있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자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자

○ 부산도시공사

- 지역제한제도 :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전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부산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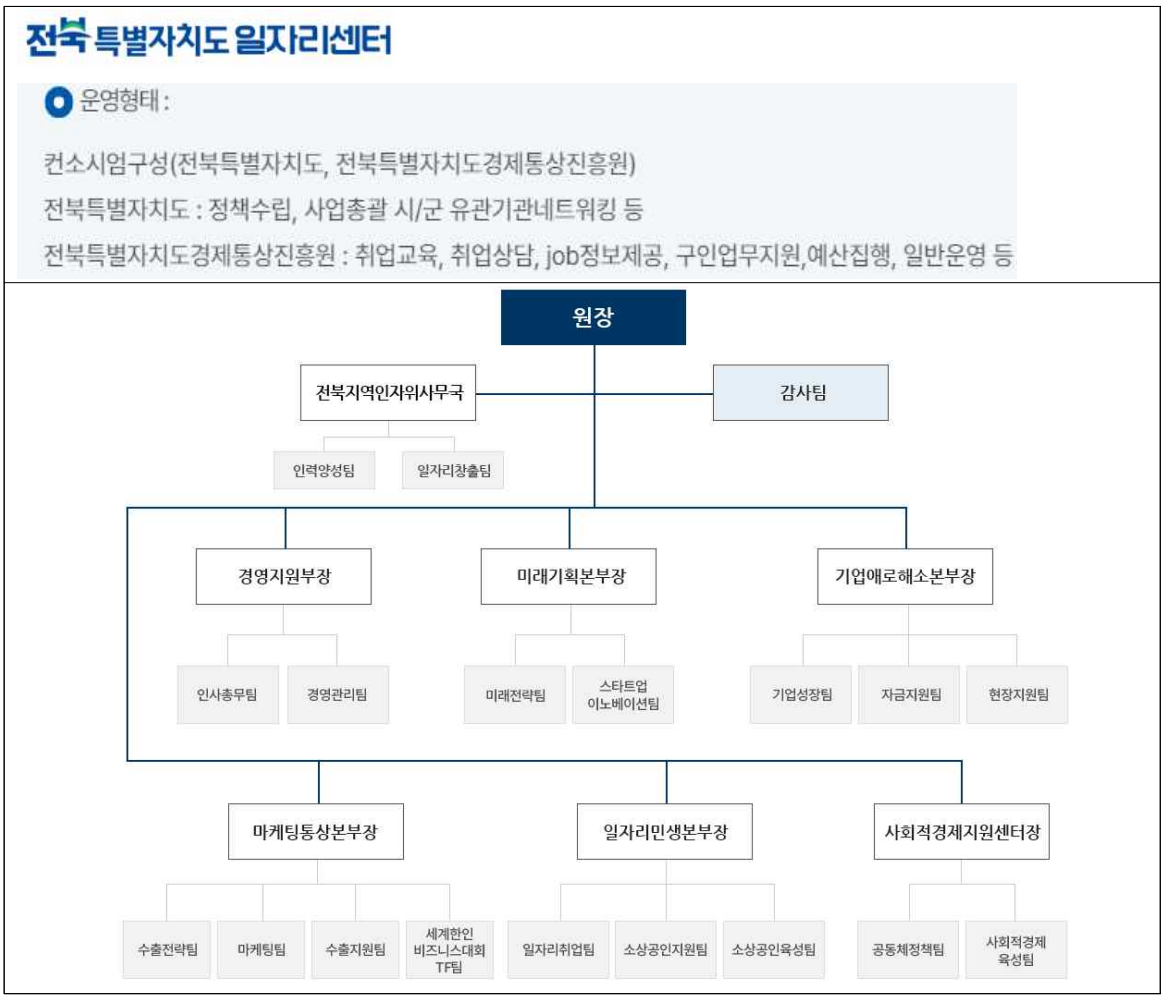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자거나 공고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자

나. 지역청년 좋은 일자리 통계 분석 및 연구 수행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는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4-20>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및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내 청년인구가 희망하는 좋은일자리 관련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일자리 관련 연구를 수행할만한 조직이 없는 실정임**

○ 경기도의 경우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고 고용기회 확대, 좋은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일자리 양적, 질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 특히 일자리 연구센터를 통해, 고용동향 분석, 대상별 일자리 연구, 분야별 일자리 연구,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연구, 일자리 관련 이슈 및 정책현안 대응 등 일자리와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4-21> 경기도 일자리재단



자료원 : 김수은, 박세현 (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314

○ 세종시에서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청년일자리팀과 일자리서비스팀을 통해 청년일자리 관련 지원통계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 일자리지원부를 두고 고용개선과 고용창출 및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일자리지원부 산하 일자리기획팀과 일자리사업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역 일자리 통계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제안내용

- 1안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 (가칭)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재단(취/창업 종합 플랫폼)
- 2안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일자리 연구기능 강화

<그림 4-22> 일자리 통계 및 정책관련 출연기관 조직




경영기획팀
경제육성팀
청년일자리팀
일자리서비스팀
인적자원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기획부
기업지원부
일자리지원부
행정지원팀
기업육성팀
일자리기획팀
전략기획팀
마케팅지원팀
일자리사업팀
경영컨설팅 지원팀
동부출장소

제3절 중장기 대응방향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방향으로 지역일자리 고용의 질 제고와 좋은 일자리 기업 유치라는 두가지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중기적 대응방향 : 지역일자리 고용의 질 제고**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일자리 질 분석 수행

- 다원적 접근 : 보수,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노동강도 등
- 대상별접근 : 청년층, 중/장/노년층, 여성 등
- 산업별 접근 :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예술 등

○ 좋은 일자리의 세분화

○ 일원/다원적 좋은 일자리, 잠재적 좋은 일자리, 잠재적 일자리 등으로의 세분화

○ 고용의 질 제고방안 마련 : 잠재적 좋은 일자리 →일원적 좋은 일자리 →다원적 좋은 일자리 등

○ 지속적인 지역내 좋은 일자리 통계분석

- 일자리통계전담조직 → 대상별 좋은 일자리 통계 모니터링
- [좋은 일자리 통계조사 → 분석 → 정책 반영]의 선순환 구조
- 대상별/산업별 통계의 지속적 모니터링

▌**장기적 대응방향 : 좋은 일자리 기업 유치**

○ 지역내 [출생-교육-일자리 선순환 체계]구축(RISE 연계등)

○ 좋은 일자리를 보유한 기업, 유망산업 도출 → 좋은 일자리 산업군육성 중심으로의 전환

○ 기업유치 대상기업의 접근관점 변화

- 일자리 양 → 일자리 질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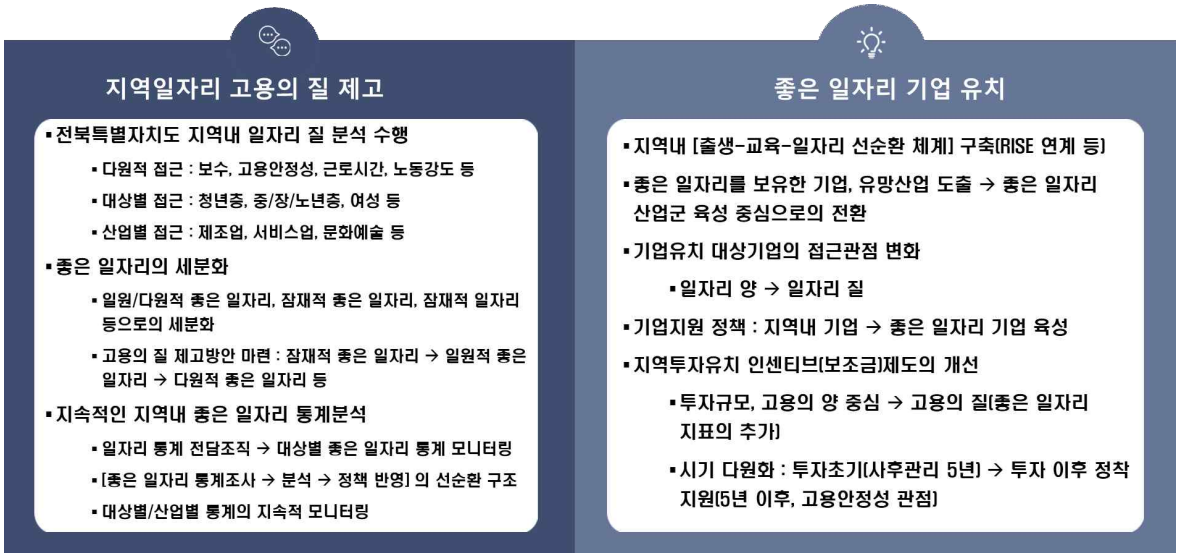
○ 기업지원 정책 : 지역내 기업 → 좋은 일자리 기업 육성

○ 지역투자유치 인센티브(보조금)제도의 개선

- 투자규모, 고용의 양 중심 → 고용의 질(좋은 일자리 지표의 추가)
- 시기 다원화 : 투자초기(사후관리 5년) → 투자 이후 정착 지원(5년 이후, 고용

안정성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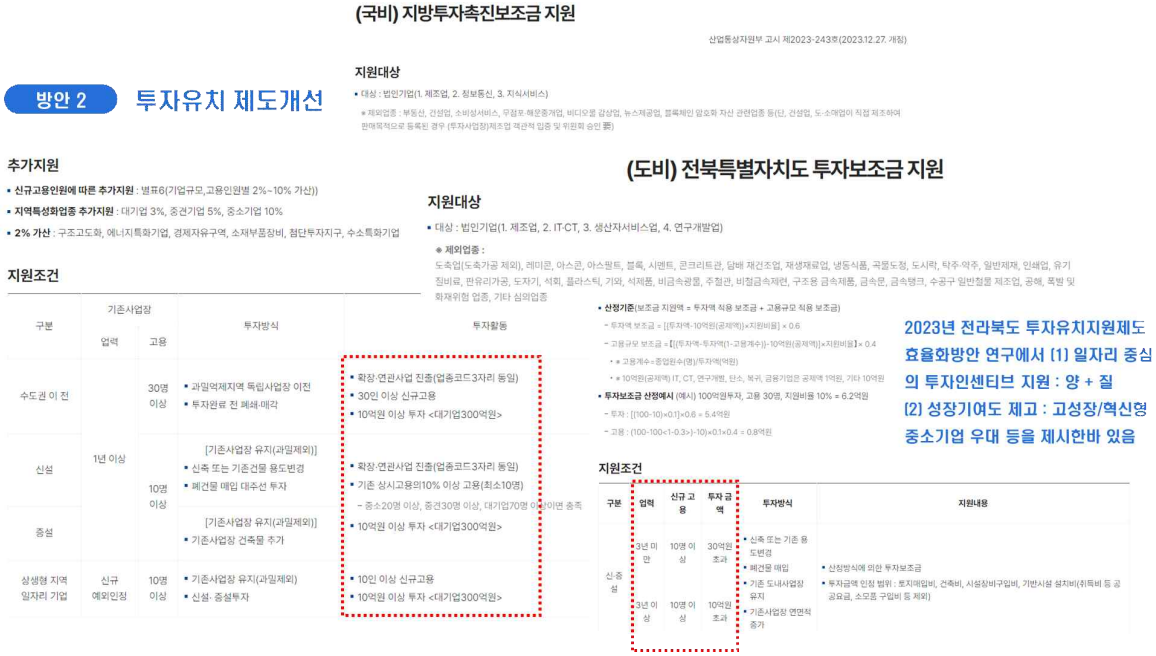
<그림 4-23>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일자리 중장기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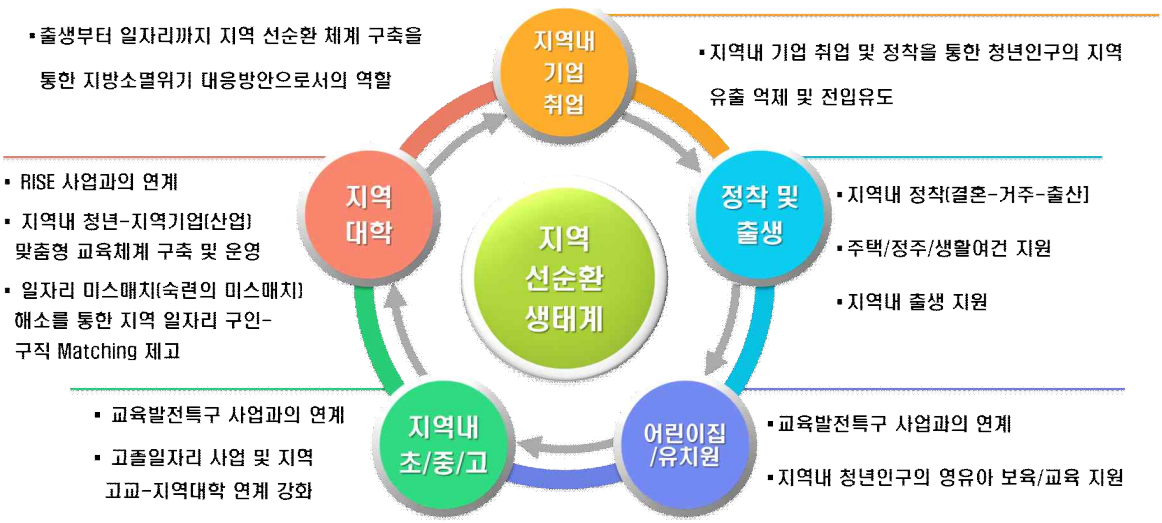
<그림 4-2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일자리 중장기 대응방안(제안1)



<그림 4-2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일자리 중장기 대응방안(제안2)



<그림 4-26>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일자리 중장기 대응방안(제안3)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한계점

제3절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인구 유출 현상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었음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현황(RISE 사업 포함)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청년정책 주요사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자료에 기초하여 청년층 인구비중의 변화, 광역지자체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유출 현황을 분석하고 유출지역과 원인을 분석하였음

○ 연평균 46,401명(2001년~2023년 기준)의 청년인구가 타광역지자체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유출지역으로 1순위 경기도, 2순위 서울, 3순위 충남, 4순위 광주, 5순위 전남, 6순위 대전, 7순위 인천 등의 순임

○ 타 광역지자체로의 전출사유 : 전입신고서 전입사유 기준 직업(일자리)이 가장 큰 원인임

▮ 전툭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유출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1) 대졸자 직업이동조사(2008년~2020년), (2) 청년패널조사(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지자체별 일자리 현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분석을 통해 지역내 청년들의 일자리 구직현황 분석을 통해 출생-출신고-출신대학교와 지역일자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일자리 미스매치를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통계자료(2021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분석을 통해 양적인 관점과 질적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음

○ 양적인 관점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와 타지역 일자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직종별 분석에서는 청년인구가 선호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전북특별자치도지

역보다는 타지역(경기도, 서울, 충남, 대전 등)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선호하는 직종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질적인 차이분석을 위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2024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타광역지자체간 임금차이가 월평균 581,614원(전산업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임금 격차가 지역청년의 유출을 심화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도출함**

○ 특히 청년층 인구가 선호하는 산업분야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라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6개 광역지자체와의 임금비교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을 확인함

○ 월평균 58만원 수준의 임금격차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내 청년인구의 타 지자체로의 유출을 심화화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조사(2011년-2020년 비교), 청년패널 2021년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중 숙련의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역량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국외 및 국내 지자체의 청년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일자리 및 주거/공간분야 성공사례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을 6가지 사업분야 총 12개의 단위사업을 제시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음

- 제도적 개선방안
  - 청년지원조례 추가 제정 : (1) (가칭) 청년유입 및 정착 지원조례, (2) (가칭) 청년 미취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3) (가칭)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청년 일자리 전담조직의 신설 : (가칭) 청년일자리팀
- 재정적 지원방안
  - 청년고용기업 지원 : (1) 청년고용기업 공동기숙사 지원, (2) 공동직장어린이

집 설립 지원, (3) 지역청년 고용기업 공시 및 홍보사업

- 지역청년 지원 : (1) 청년 독립지원(이사비용), (2) 청년인대주택(1만원 아파트), (3)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4) 지역유턴 지원금

- 행정적 지원방안

- 청년 센터.공간 추가 신설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내 청년센터 및 공간 미설립 지역(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등에 청년센터/공간 추가
- 지역청년 고용 촉진방안 : (1) 지방공기업 지역청년 고용의무제, (2) 지역청년 좋은 일자리 통계분석 및 연구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향으로 (1) 지역일자리 고용의 질 제고, (2) 지역내 출생-교육-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 (3) 좋은 일자리 기업유치 등을 제안하였음

○ 지역일자리 고용의 질 제고

-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일자리 질 분석 수행
- 좋은 일자리의 세분화 수행
- 지속적인 지역내 좋은 일자리 통계분석 모니터링 강화

○ 지역내 출생-교육-일자리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좋은 일자리 기업유치

- 좋은 일자리 기업 및 산업의 육성
- 기업유치 대상기업의 접근 관점 변화 : 일자리 질적 관점 반영
- 지역투자유치 인센티브(보조금)제도의 개선 : 고용의 질(일자리 질) 변수 추가 고려

제2절 한계점

▮ **본 연구용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유출지역 및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내 청년층 인구의 타광역지자체 유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다음의 몇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첫째,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2차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설문조사 자료(1차 자료)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통계청 : 국내이동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

○ 고용노동부 :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등

○ 고용정보원 : 대졸자 직업이동조사, 청년패널조사 등

▮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타광역지자체의 유출원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청년인구 유입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가 타광역지자체로의 이동원인 분석 및 이에 따른 지역별 차이 분석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타 광역지자체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타광역지자체로의 이동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초지자체단 청년인구 이동은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광역지자체간 인구이동을 분석하다 보니 광역지자체내 기초지자체간 이동현상 및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였음

○ 전입신고기준으로 광역지자체내에서의 이동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업(일자리) 보다는 주택과 가족 등의 원인이 주된 전입신고사유로 분석되어 청년층 인구이동의 원인이 다름

▮ **넷째, 청년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단기적 대응방안 6가지(세부사업 기준 12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및 좋은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적 방향만을 제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제도적 개선 2개 사업, 재정지원사업(세부사업기준) 7개 사업, 행정적 지원(세부사업기준) 3개 사업 등을 제시하였으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유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

○ 다만 본 연구결과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수립 및 운영과정 등에 일부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3절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용역은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보완이라기 보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장기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의 경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 등의 중장기 방향은 향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장기 대응방향의 경우 향후 청년정책 수립 및 수행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재정적 부담 및 조례 등의 제개정 이후 실행가능한 대안이 정책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수행하게 될 지역청년 설문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인 청년층의 세분화가 필요해 보임**

○ 지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수행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당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응답인원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하여 조사시점까지 출향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였음

○ 가능하다면 향후 청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청년의 Lifi-Cycle 지역별 구분 및 표본할당이 필요할 것임

- 전북 출향경험이 있는 청년과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구분하여 조사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하여 조사시점까지 전북지역을 이탈한 적이 없는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일자리(취업(일자리 및 창업)를 가지고 활동중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생하여 출향 경험이 있는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출생-타 광역지자체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중 한가지 이상 출향)-전북지역 일자리(취업 및 창업 등)를 가지고 활동중인 청년

▮ **본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중장기 대응방향이 청년정책에 적용되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수행

- Life-Cycle별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해야 하며, 다양한 특성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적용대상으로 청년과 청년고용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정책적 연계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및 청년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14개 기초지자체의 정책 등과의 연계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할 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정책, 교육발전특구사업 그리고 RISE 등과의 정책적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및 적용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의 병행이 필요할 것임
- 출생부터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청년 일자리 조직, 일자리 통계 및 좋은 일자리 관련 control tower 등의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청년관련 조례의 제·개정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관점변화가 필요하며 (가칭)청년기금 또는 특별회계 등의 도입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개 광역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전라남도)와 18개 기초지자체에서 청년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중임

<표 5-1> 청년관련 기금 및 조례 현황

구분		기금명	조례
광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기금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기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희망드림기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청년기금	부여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청년기금	서천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기금	천안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청년기금	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장수군 청년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기금	영암군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의성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그림 5-1> 청년인구 유출 문제 대응방안 수행시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main/main.do)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close)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ndex)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aw.go.kr/)

온통청년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lis.go.kr/)

전라남도 화순군 홈페이지(https://www.hwasun.go.kr/index.do?S=S01)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https://jb2030.or.kr)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홈페이지(https://jb2030.or.kr/policy/p1.html)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main.do)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https://survey.keis.or.kr/)

Isabelle Le Mouilour, 「독일의 청년보장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21.12, p.21.

강경동, 유영명 (2024) 좋은 일자리 결정요인에 대한 남녀차이 비교연구: AHP 기법을 활용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제42권 제4호, 101~117.

강은영 (2017), 고용의 질 해외사례 검토 및 지표체계 구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기보고서, pp.115~254.

고영선 (2024)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필요하다, KDI FOCUS, 통권 제 130호

고용노동부(2022. 08.30),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각연도)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각연도)

고정우, 이주림, 구자훈(2023), 대도시 및 중소도시 입지별 혁신도시의 청년인구 유입효과 비교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2), 45~68

곽미선, 김지연 (2023) 대학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좋은 일자리(good work)에 대한 특성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55, No. 1. 79~102.

관계부처합동(2024.03.29),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교육부(2024.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권순성·김소연(2023), 최근 제주지역 청년인구 순유출요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경제브리프, 1~42.

권오성, 유성재, 노상현, 박은정, 김진(2019), 노동 4.0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사) 노동법연구소 해밀.

김기헌, 차세영,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 20-R28

김동신(2021), 지역 청년층 인구이동의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개발연구, 21(2), 177~205.

김민석, 강민규(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36(2), 47~66.

김범식, 김묵한(2014), 서울시 괜찮은 일자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김세창, 이소영, 조대헌(2024), 청년층 인구이동이 인구 재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도학회지, 24(2), 73~88.

김수은, 박세현(2024),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정책 필요하다!, 전북

연구원 Issue briefing, 314.
김수진, 윤지영(2024) 지역 일자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표체계 개발, 직업과 자격 연구, 제13권 제4호, 19~42.
김용현(2012), 대졸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제11권, 제3호, 47~62.
김유현(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제55권, 제2호, 337~367.
김유현(2021), 경남 청년인구 유출확대의 원인과 일자리 문제 분석, 경남연구원
김정희, 김혜진, 강성현(2024), 2023년 4년제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화연, 이대웅(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청년정책과 생활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4권, 제2호, 261~288.
김현우, 강명구(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5): 49~77.
류장수(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23.
문동진(2019),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3(4), 79~118.
민보경(2022), 청년은 어느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2024), 청년의 지역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박민규, 김세나, 박경숙, 박현정, 이재필, 조득환(2021), 제2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구경북연구원
박성익, 김종한, 류장수, 조장식(2020), 대졸자의 괜찮은 일자리 결정요인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36권 제4호, 243~256

박성익,권기철, 김종한(2022), 좋은 일자리 지수의 고안과 부산의 좋은 일자리 현황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제40권 제2호, 101~121.

박순철, 도수관(2023).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2), 309~346.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방하남, 이상호(2006),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 제40집 1호, 93~126.

배성숙, 장석인(2017), 대학생의 조직지원인식과 취업준비활동이 좋은 일자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 제36권 제1호, 59~79.

백원영(2024), 미래 환경변화와 지역인재정책의 방향, KRIVET ISSUE BRIEF, No. 291, 1~4

백필규(2014),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개선정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여름), 41~80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2015), 광주 산업단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 2015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과제

서옥순, 황영순, 장정재(2016),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 및 개선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성수현, 민현주(2020), 이직한 근로자가 인식한 좋은 일자리 개념도 연구, 한국취업진로학회 취업진로연구 Vol.10, No.3, 49~070.

송병준, 오영석(2012), 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 산업연구원

송부용, 김영순, 김기영(201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요인분석 - 경남의 사례를 중심으로 -, 287~312.

송영남(2010), 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4권 제4호, 209~234.

송영남(2011), 좋은 일자리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313~342.

송영남(2012),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특성의 가치추정 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69~88.

송용찬, 김민곤(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151~179.

심재헌,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노승철(2014), 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안준기, 김은영(2024),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지역산업과 고용 : 통계프리즘, 100~112.

유나영, 마강래(2024), 비수도권 광역시 청녕인구의 지역간 이동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6(2), 1~22

이근하(2018.06.23.), 좋은 일자리 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 59% K~공감 [보도자료], (https://gonggam.korea.kr/newsContentView.es?mid=a10201000000&section_id=NCCD_POLICY&content=NC002&news_id=EBC6D40142154203E0540021F662AC5F)

이대웅(2023), 지방의 청년세대 인구구조와 이동에 관한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행정학회, 제35권, 제1호, 29~56.

이민관(2011), 중소도시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한양대학교).

이민관·이주형(2010), 중소도시의 지역특성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2(3), 139~168.

이상헌(2005), Decent work: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노동브리프 3:7, 4~11.

이윤형, 이주영, 김상우, 김혜경(2020), 울산광역시 청년정책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정책과제 2020~10. 울산: 울산연구원.

이재민, 한재찬, 송병호(2014), 인구 이동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이재영, 백평구(2024), 좋은 일자리에 대한 Z세대 직장인의 주관적 인식, 주관성연구, 통권 제66호, 5~27.

이찬영, 문제철(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이찬영, 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제34권 제4호, 143~169.

이철선, 김문길, 임성은(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성,· 문혜진, 이태헌(2022), 대졸 청년층 고용의 질 유형에 따른 이직 관련성 연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조사연구 제23권 제2호, 35~70.

이희연·박정호(2009), 경로분석을 이용한 인구이동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구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 제12권, 제2호, 123~141.

임유진, 정영순(2015), 한국사회정책, 제22집 제1호, 403~433.

임태경(2023a),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 수도권·비수도권 같은 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임태경(2023b), 연령별 청년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4), 1~24.

임태경(2024), 비수도권지역의 청년인구유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권역별·연령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5(1), 45~64.

장명준(2024), 청년인구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이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8(7), 1624~1635.
장옥희(2021),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조건과 직업탐색행동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실천공학교육논문지 제13권 2호, 351~368.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02.29.), <특집> 청년인구 절벽 …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이 답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4)
전희진, 전아람(2024),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방안 :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POLICY BRIEF 2024, 전북연구원, 65
정다은(2023), 독립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Vol. 25, 74~84.
정민수·김의정·이현서·홍성주·이동렬(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3~29호, 1~36.
정형옥(2016), 여성고용의 질,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슈분석 제38호, 1~14.
정세정(2024), 청년이 추구하는 삶과 정책방향, 2024년 제5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방안–, 발표자료
정용준(2024), 강원지역 청년 유출 대응방안, BOK 강원경제 메모, 한국은행 강원본부, 2024~2호, 1~15
정형구(2024),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2024년 제5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방안–, 발표자료
조성철(2020), 산업단지 혁신과 청년일자리 창출: 정주환경을 중심으로. 월간 노동리뷰 183, 9~22.
차건환, 임수하(2023),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 국토지리학회지, 57(2), 111~128.
최옥금(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27~252.

최조순, 박지영, 조해진(2023) 경기도의 청년인구 사회적 이동 실태 및 특성,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5(2), 34~50

최지혜, 변장섭(2024) 전라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8(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점진적 이행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접근, 지역사회연구 제32권 3호, 107~129.

최창곤(2009), 노동시장 Mismatch와 일자리 창출, 2009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76~192.

최창곤, 이선경(2010), 노동시장 Mismatch의 구조와 일자리, 경제연구, 28(3), 73~95

최창곤(2013), 노동시장 미스매치의 현황과 일자리 정책, 한국경제통상학회 31, 91~116

최창곤(2017), 일자리와 고용창출의 차이와 미스매치, 한국경제통상학회 35, 99~113

최태림(2014) 인천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최화영, 천영민, 정연순(2024), 청년 근로자가 지각한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괜찮은 일자리 간계 : 일의 의미, 일 자유의지,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43(1), 1~21.

추현호(2024), 청년이 만드는 지역 : 청년친화도시, 2024년 제5차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청년의 삶과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방안-, 발표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각연도)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연도)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 이동조사(각연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자료(각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조사

한국지방행정발전연구원(2022), 제2차 충청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용역

황광훈(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고용조사브리프 2020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2022), 서울시 청년층의 고용의 질 결정요인 분석: 인구이동, 노동시장 동향, 일자리 지속기간 및 임금을 중심으로, LHI Journal, 13(1), 39~54.

황광훈, 오윤석, 홍석현(2022), 수도권 지역 청년층의 직장 이동과 임금의 변화, GRI 연구논총, 24(1), 123~152.

황준욱(2005a),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노동리뷰, 통권4호, 21~34.

황준욱(2005b), 노동과 고용에 대한 질적인 접근, 국제노동브리프, 3:7, 1~3.

희망제작소(2024), 2024년~2027년 남원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수행기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국립군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국 용

공 동 연 구 원 국립군산대학교 벤처창업학과 교수 김 공 수

발 행 일 2025년 1월 일
인 쇄 일 2025년 1월 일